



The Women's Studies

2021년 2호

| 연구논문 |

- | | |
|--|---------------------|
| 포괄적 성·재생산 건강보장을 위한 보건료체계의 과제:
임신중지를 중심으로 | 김새롬 |
| 기본소득과 돌봄노동: 누구의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안미영 |
| 육아 휴직 이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젠더효과와 고용유지를 중심으로 본 심층면접 분석 | 양현아·황정미·권현지·전윤정·김정혜 |
| 스웨덴 인구 담론 전환이 한국 저출산 정책에 주는 함의:
위르달 부부의 인구정책 구상을 중심으로 | 김영미 |
|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제도변화의 여성고용 효과 | 이선행·김난주·홍지현·심혜빈 |
| 민간부문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돌봄 서비스제공에 대한 질적연구 | 정지은 |
| 1970년대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 의식에 미친 영향 | 박현미 |
|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출산행동의 관계: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의 병렬다중매개효과 | 정아름·이준영 |
| 20~30대 여성의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과 우울, 전위공격성의 관계:
자기침묵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 손지빈·홍정순 |
|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유형과 우울 | 한상윤·남석인 |
| 페미니즘과 남북관계: 북향여성을 중심으로 | 전수미 |
| 북한이탈여성에 관한 질적연구 동향분석: 국내 학술지 중심으로 | 오은경·류진아 |
|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 현황 분석: 일간지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 고지현·양세정 |
| 공무원의 젠더 감수성 변화과정 연구 | 배화정·황은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1. 포괄적 성·재생산 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과제 : 임신중지를 중심으로 / 김새롬	5
2. 기본소득과 돌봄노동: 누구의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안미영	37
3. 육아휴직 이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 : 젠더효과와 고용유지를 중심으로 본 심층면접 분석 / 양현아·황정미·권현지·전윤정·김정혜	69
4. 스웨덴 인구 담론 전환이 한국 저출산 정책에 주는 함의 : 뮌헨 부부의 인구정책 구상을 중심으로 / 김영미	101
5.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제도변화의 여성고용 효과 / 이선행·김난주·홍지현·심혜빈	133
6. 민간부문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돌봄 서비스제공에 대한 질적연구 / 정지은	167
7. 1970년대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 의식에 미친 영향 / 박현미	209

8.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출산행동의 관계 :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의 병렬다중매개효과 / 정아름·이준영	239
9. 20~30대 여성의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과 우울, 전위공격성의 관계 : 자기침묵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 손지빈·홍정순	269
10.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유형과 우울 / 한상윤·남석인	299
11. 페미니즘과 남북관계: 북향여성을 중심으로 / 전수미	325
12. 북한이탈여성에 관한 질적연구 동향분석 : 국내 학술지 중심으로 / 오은경·류진아	351
13. 성인지각수성 관련 불매운동 현황 분석 : 일간지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 고지현·양세정	377
14. 공무원의 젠더 감수성 변화과정 연구 / 배화정·황은정	409

포괄적 성·재생산 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과제: 임신중지를 중심으로*

김새롬**

초 록

모두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에서 임신중지를 비롯한 성·재생산 건강 의제는 지속해서 배제되어 왔다. 이 연구는 지금까지 정부의 정책에서 여성건강이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지 살펴보고 보건의료체계 개념을 소개하며, 이를 토대로 성·재생산 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지난 20여 년 사이 여성건강에 대한 정부정책은 모성건강의 협소한 범위를 벗어나 차츰 그 영역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여성의 건강을 재생산하는 몸으로 환원하고, 개입을 위한 적절한 책무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는 불평등한 의사결정과 자원배분 구조가 지속되고, 성차별적 실천에 대한 직접 개입보다 인식과 규범 변화에 치우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모두에게 안전한 양질의 임신중지를 보장하고, 성·재생산 건강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변화가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의료체계 개념들을 활용해 포괄적 성·재생산 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과제를 모색하였다. 형법상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지 합법화는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의제를 진전하기 위한 중요한 기회이자 계기이다. 여성들이 직접 열어젖힌 정치적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기에 개입하기 위해 학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여성들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정책적 지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주제어: 임신중지, 낙태죄, 여성건강, 성·재생산 건강, 보건의료체계, 건강 정책

* 이 연구는 2020년 11월 20일 한국건강형평성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괄적 성·생식 건강서비스 보장을 위한 건강돌봄체계의 과제”를 발전시킨 내용으로, 2020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NRF-2019 R1A6A3A01095865)임.

** 시민건강연구소 센터와건강연구센터장(saerom@health.re.kr)

I. 서 론: 안전한 임신중지는 어떻게 가능한가?

2019년 헌법재판소는 「형법」269조제1항 자기낙태죄와 270조제1항 의사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판결은 “낙태의 금지가 자기 결정권 뿐만 아니라 인격권 및 인간의 존엄과 가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며 낙태에 대한 처벌이 여성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¹⁾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던 여성의 성·재생산 권리가 사회권으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의미를 가진다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점이다.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합법적이고 안전한 임신중지가 성·재생산 건강(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을 위한 필수적 요소로, 여성의 건강과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설명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 재생산하는 몸을 둘러싼 정치와 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많은 국가가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essential health-care service)로 여기고 이를 보장한다. 의료전문가들의 의견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한 방향으로 모이고 있다. 예컨대 미국 산부인과학회는 임신중지를 필수의료서비스로 규정하며 이에 대한 보편적 접근을 강조한다. 다른 모든 의료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임신을 종결하고자 하는 여성이 자기 자신의 결정에 따라 안전하고 존중받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학회의 공식 입장(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 2017)은 임신중지에 부여된 사회문화적 억압과 낙인이 여성의 건강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의료전문가단체의 태도를 보여준다.

성·재생산 권리(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는 건강의 차원을 넘어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자기결정권, 더 나아가 생애주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생식 과정(reproductive life)에서 안전과 존엄, 건강을 보장받을 권리를 말한다. 이는 오랫동안 여성의 건강을 모자보건으로 환원하던 인구개발정책의 제국주의적·국가주의적 관점을 지양하고, 여성주의적 사회권 접근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제안된 개념이기도 하다(Correa and Petchesky, 2007).²⁾ 성·재생산 건강(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은

1) 헌법재판소 2019. 4. 11, 2017헌바127 전원재판부 결정.

2) 역사적이고 정치적인 산물로 재생산권을 발견하고 국제적 규범이자 보편적 인권으로 재생산권이 정립되어나간 경로, 재생산권의 범주와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하정옥(2013)의 글을, 모성보호를 중심 가치로 두고 있는 현행 헌법과 법률체계에 대한 비판은 김정혜(2020)의 글을 참조.

성·재생산 권리의 내용 중 하나로 성·재생산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의미한다. 이때 구체적으로 건강이 어떤 영역을 포괄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학제와 관점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건의료영역에서 더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국제적 합의는 강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2018년 ‘모두를 위한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위한 진전을 가속하기’라는 주제로 다룬 기획 논문을 출판한 란셋-굿마허 위원회는 ① 젠더기반폭력, ② HIV/AIDS 와 다른 성매개감염, ③ 피임, ④ 모성과 신생아 건강, ⑤ 임신중지, ⑥ 난임, ⑦ 생식기계 암을 성·재생산 건강의 구성요소로 제시하고 모든 국가는 국민에게 필수적인 성·재생산 건강 서비스 접근을 보장하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인구집단의 필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Starrs et al., 2018).

성·재생산 건강 관련 보건의료서비스는 건강 필요가 만족스러운 의료이용으로 이어지기까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 일반적인 건강 문제보다 사회문화적 조건과 관계적인 특성이 강하게 작동하고, 통상 문제의 초점이 되는 의료서비스 접근성(accessibility) 외에도 수용성(acceptability)과 질(quality)이 중요한 문제가 된다. 젠더 규범이 의사-환자 관계 형성이나 의사소통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취약한 조건에 있는 여성일수록 좋은 의료 이용하기까지 극복해야 할 장벽이 더 많다는 것도 특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 보건의료영역에서 임신중지를 비롯한 성·재생산 건강은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지 못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역시 협소한 영역을 다루는 데에 그쳐왔다. 이는 모성 보호에만 초점을 맞춰왔던 여성건강을 다루는 관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의료를 생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치명적인 건강 사건에 대응하는 기술로 여겨온 생의학적 관점의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임신중지에 대한 사회문화적 낙인과 그 결과로 발생하는 의료 필요 미충족은 법률이 바뀐다고 단번에 사라지지 않는다. 의료기관에서 여성의 입장을 존중하는 수용성이 높고 반응성 있는 의료를 제공하는 데에도 많은 자원과 노력이 든다. 사회·경제·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임신중지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이렇게 보건의료가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성·재생산 건강 영역을 인식하고, 여기에 필요한 더 넓은 자원과 역량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는 것은 물론 임신중지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글은 모두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의 노력에서 임신중지를 비롯한 성·재생산 건강 의제가 누락되어 왔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목표는 성·재생산 건강서비스를 보장하며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보건의료체계(health system)로 이행을 위해 필요한 변화와 조건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성·재생산 건강을 어떻게 다루어 왔는지, 이와 관련된 정책을 개괄하고, 보건의료체계 개념틀(conceptual framework)을 소개한 후 이를 준거로 향후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

연구는 제시한 연구 질문을 중심으로 학술문헌과 정책문서를 검토하는 문헌고찰(narrative review)로 성·재생산 건강을 포괄하는 보건의료체계를 구상하고 이를 위한 더 좋은 지식생산을 요청하기 위한 시론적 성격을 가진다. 이 글의 독자로 성·재생산 건강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보건의료체계가 생소한 이들과 보건학과 예방의학 등 영역을 다루지만 성·재생산 건강과 여성건강 정책이 생소한 양 집단을 상정하고 논의를 전개했다. 시민들의 요구를 통해 본격적으로 의제화되고, 최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의 개념으로 포함된 성과 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건의료체계에서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를 염두에 두되 보다 실천적으로는 임신중지 서비스를 사례로 들어 체계 접근의 중요성을 보이려고 했다. 다소 병렬적 서술이 될 위험을 무릅쓰고 여성정책기본계획과 보건의료체계의 구성내용을 전술했다. 이는 주로 여성 인권과 사회 정의 차원에서 여성정책을 다루는 학제와 인구집단의 건강과 복리 측면에서 보건의료정책을 다루는 학제 사이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불가피한 시도이지만, 보다 유기적인 논의를 전개하지 못한 것은 저자의 한계이다. 부족하나마 성·재생산 건강보장과 관련된 정책과 제도를 종합하여 제시함으로써 상호 논의진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II. 여성건강에 관한 기존 정책 흐름

전 세계적으로 여성건강 향상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모자보건(maternal and child health)에 대한 논의로 시작했다. 전후 근대국가에서 인구 증가와 산업예비군 양성은 국가를 부강하게 하기 위한 일차적 수단이었고, 모성건강은 건강한 인구를 재생산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암묵적으로 우생학적 관념과 결합하여 작동하는 인구정책의 틀 안에서 재생산하는 여성의 몸은 기능적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보호받고, 또 통제되었다(Kumar, Birn, & McDonough, 2016).

한국에서도 여성건강은 국제적 지원을 자원 삼아 인구를 통제하는 가족계획 사업을 경유해 공적 의제로 자리잡았다. 가족계획정책은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국민 다수의 일상을 ‘통치’해야 할 ‘인구’의 문제로 정치화하는 과정

이었다(조은주, 2018: 263). 정부는 1960년대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일부로 가족계획사업을 결의하고 전국 시·도 보건과에 이를 전담하는 가족계획계를 설치했다. 전국 보건소와 읍·면 단위까지 가족계획상담소를 설치하고 읍·면마다 훈련을 받은 가족계획 계몽원을 배치했다. 이들은 피임술을 보급하고 월별로 사업통계를 집계하고, 정부는 개인·지역 단위로 목표를 할당해 이들의 실적을 평가했다. 이처럼 가족계획사업의 확대는 한국에서 근대적 보건체계의 골격이 형성되는 과정이기도 했다(인구정책50년사편찬위원회, 2016:37-45).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를 거치며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공중보건체계가 구축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민간의료기관이 성장했고, 1980년대 후반부터는 거의 모든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분만을 하게 되면서 임신과 출산을 비롯한 여성건강은 빠르게 의료화되었다. 이는 보건의료의 다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성·재생산 건강의 내용과 과정이 국가의 통제와 직접 서비스 제공이 아닌 민간 의료전문가들의 통제와 규율 하에 위치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모성건강을 중심으로 하는 여성건강에 대한 관심이 주로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한 경제적 접근성 보장에 대한 것으로, 즉 건강보험제도로 포섭이 이루어지는 동안 국가의 관심을 두는 여성건강 영역은 그리 확장되지 않았다. 문제이자 정책적 개입 대상이 높은 출산율에서 낮은 출산율로 바뀌었을 뿐, 국가 정책에서 여성건강은 일관되게 모성건강을 의미했다. 상대적으로 보다 넓은 의미에서 여성 건강을 정책 대상으로 다루는 정부의 계획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여성가족부의 관할 영역이 유일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여성건강과 관련한 국가의 정책을 살펴보기 위해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본다.³⁾

3) 이는 보건복지부의 주요 계획에는 여성건강과 관련한 별도의 계획이 존재하지 않고 보건복지부의 전략목표에도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을 제외하면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판단되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17년 대선공약으로 "여성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여성의 특수한 건강 문제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비전 IV-6)고 약속하였으며, 이를 위해 「여성(젠더)건강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2019년 보건복지부가 아닌 여성가족부를 주무부처로 수립되었으며, 시민사회의 반복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아 이를 검토할 수 없었다.

1. 여성정책기본계획

〈표 1〉에는 제1차~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여성건강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에서 13번째 정책과제는 “여성의 건강증진 및 성비불균형 해소”이다. 세부과제는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확대, 여성농업인 건강증진, 태아 성감별 낙태로 인한 성비불균형 해소이다. 의료보험이 지역과 직장에 따라 서로 분리되어 운영되면서 격차가 있었던 의료보험통합 이전의 상황을 반영해 놓여준 여성의 보건의료서비스 접근 향상에 대한 내용을 제외하면 모두 임신·출산에 대한 정책임을 알 수 있다. 계획이 시작되던 1998년에는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당관실이 설치되었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은 “요보호 여성”에 대한 국가의 시혜·보호의 관점을 탈피해 여성의 권리 보장 관점으로 전환을 강조하였다. 건강 영역에서도 첫 번째 하부과제는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인프라 구축”으로 이런 기초를 반영한다. 이 시기 보건복지부 여성정책담관은 최초의 “한국 여성건강통계(2003)”를 발간하고 6개 분야 68개 사업으로 구성된 “보건복지 여성정책 중장기계획(2005)”을 발표했다. 그러나 2005년 여성부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가 생기면서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각 부처의 여성정책담당관이 폐지되었다(박선영·김복태·윤지소, 2019: 20). 이는 여성건강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보건복지부의 여성건강통계 발간은 약 10년간 중지되었다가 2014년이 되어서야 재개되었고, 2021년 현재까지 보건복지부는 별도의 여성건강관련계획을 수립하거나 발표하지 않았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은 “여성의 건강 보호”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이 계획에 앞서 수립된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010)의 내용인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⁴⁾과 분만취약지 공공인프라 구축 사업⁵⁾이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도 여성의 건강보호를 위한 정책으로 제시되고,

4) 2008년부터 건강보험가입자 여성에게 전자바우처(고운맘카드로 시작해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됨)를 이용해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가 시작되었음. 2008년 임신 당 20만원의 의료비 지원에서 시작해 차츰 지원 금액이 증액됨. 2020년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정부는 2022년부터 이를 임신 당 10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발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경우 의료급여 임신·출산진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동일한 금액을 지원.

5) 제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이동 산전진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사업 확대와 지방의료원과 놓여준 민간 의료기관에 산부인과 시설·장비비 지원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이와 관련해 현재 중앙 정부는 분만 산부인과 지원 사업(‘11년 신규), 외래 산부인과 지원 사업(‘12년 신규), 순

두 계획이 다루는 정책과 목표의 중첩은 이후에도 지속된다. 제3차 계획은 취약여성보호라는 잔여적 관점을 넘어 총괄목표로 보편적 건강보장과 연결되는 “여성건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하지만 하위과제가 임신·출산과 불임치료 등 모성 보호로 국한되고, 전 생애주기에 걸쳐 존재하는 여성의 특수한 건강필요를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는다(민무숙 외, 2011: 62-66).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2017)은 위와 같은 평가를 반영해 오랫동안 강조되어 왔던 모성건강보장 이외 영역을 구분해 세부과제로 명시했다.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의 하부과제로 청소년과 아동, 여성 근로자와 노년기 여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었고,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에는 개인 수준의 건강증진을 넘어 여성건강과 관련된 연구지원과 실태조사, 사회환경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표 1〉 제1차~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건강 관련 정책과제

국가계획	정책과제	내용(하부과제)
제1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1998-2002)	13. 여성의 건강증진 및 성비불균형 해소	13-1. 임신·출산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 임신·출산 여성의 보건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 산전진찰관련 비용에 대한 의료보험 적용 및 적용범위의 점차적 확대 13-2. 근로여성의 모성보호 확대 • 유급출산휴가급여 등 모성보호비용의 사회적 부담비율을 점차적으로 확대 • 출산휴가기간 상향조정 • 임신 중 여성에게 월1회 유급 태아검진휴일제도 신설 13-3. 여성농업인의 건강증진 • 여성농업인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일차보건의료기관의 농어촌 건강사업 강화 • 농어촌여성을 위한 보건의료전달체계간 연계성 강화 13-4. 남아선호사상에 의한 성비불균형 해소 • 남아선호사상 불식을 위한 홍보전략 개발 • 관련의료단체와 의료인 단체 내에서 태아 성감별에 의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자제운동 전개 • 태아 성감별 및 성선택적 인공임신중절 행위의 방지를 위한 단속 및 처벌
제2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2003-2007)	7-1. 여성건강증진 대책 강화	7-1-1.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인프라 구축 • 여성건강에 관한 주기적 실태조사 • 여성 특화 질병에 대한 체계적 연구지원 강화 • 보건소의 여성건강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강화 •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의 성인지력 향상훈련 강화

회진료 산부인과 지원 사업(‘14년 신규)을 운영 중임. 중앙정부 정책 외에 지방자치단체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모자보건사업이 존재하며(예.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들은 주로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통한 민간위탁사업으로 수행됨.

국가계획	정책과제	내용(하부과제)
		7-1-2. 모성건강 증진대책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대상 성건강 증진을 위한 예방대책 강화 • 인공임신중절수술 예방대책 강화 • 제왕절개술 남용 방지 내실화 • 모성보호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7-1-3 여성근로자 건강보호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및 관리프로그램 도입 • 여성농어민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강화
제3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2008-2012)	2-1. 여성 권익 보호	2-1-1. 여성의 건강 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성건강에 대한 건강투자 강화 - 임신·출산에 대한 모성보건 지원 강화 - 불임치료보조생식술 지원 확대 - 불임치료 등 생명과학기술로부터 여성건강보호방안 강구 • 여성건강정책 강화 - 보건 의료서비스의 성인지성 제고 - 건강문제별 목표인구집단 설정 및 정책강화 - 여군에 대한 민간병원 산부인과 진료비 지원 검토 4-3-1.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을 위한 여성적합형 체육프로그램 활성화 •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식습관 교육 지원 • 여성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자녀양육기 여성을 위한 공공생활체육 시설에서의 돌봄 지원 • 노년기 여성건강 증진 지원 확대 4-3-2. 모성건강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 산후조리원 관리 강화 및 가정 내 산후조리 지원 확대 • 피임 교육 공식화 및 양성평등 성교육 확산 4-3-3. 여성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건강에 유해한 사회환경 개선 • 여성건강 관련 연구 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 여성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 (2013-2017)	4-3. 여성의 건강지원 강화	

자료: 제1차~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2.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2015년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⁶⁾되면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수립 당시 목표로 했던 연한을 채우지 못하고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으로 대체되었다. 제1차와

6) 2015년 「여성발전기본법」을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면서 계획의 명칭이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전면개정 이유는 다음과 같음. 성 주류화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여성 정책 패러다임을 ‘여성 발전’에서 ‘실질적 양성평등 실현’으로 전환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는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국가법령정보센터, 2014)

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은 비교적 여성건강을 모성건강으로 국한하지 않으면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고, 건강정책에서 성평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표 2>.

제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서는 여성건강과 관련된 하부과제가 상대적으로 다각화·구체화되었다. 임신·출산 건강권을 다루는 정책과제로 기존의 “낙태 예방” 대신 여성건강 문제로 피임과 임신중단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었고, 청소년과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이 별도 과제로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었던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 수립”,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에 성별지표 적용 및 모니터링 이행”이 포함되었다.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깎창 생리대’ 사건이나 ‘안전한 임신중지’에 대한 여성들의 요구를 반영해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피임과 임신중단에 대한 실태파악”에 대한 정책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정책 반응성이 다소 향상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2> 제1차~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서 건강 관련 정책과제

국가계획	정책과제	내용(하부과제)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5-2017)	6-1.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	6-1-1. 양성평등한 건강권 보장을 위한 기반 마련 • 성별 건강불평등 관련 연구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 양성평등한 건강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남녀 건강에 유해한 사회환경 개선 (의료광고 심의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모집·채용 성차별 모니터링) 6-1-2. 성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 강화 • 서비스업 등 직무스트레스 고위험 직종 종사자의 건강장해 예방 지원 • 청년기 여성의 건강지원 확대(자궁경부암 검진연령 조정 30세 → 20세) 6-1-3. 모성건강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지원 강화 • 취약지역 및 특수직종 모성보호 강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2018-2022)	5-4. 성인지적 건강증진 기반 강화	5-4-1. 성인지적 보건의료 정책기반 마련 • 여성건강정책 기본계획 수립 • 성인지적 건강관련 연구 지원 및 실태조사 실시 •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에 성별지표 적용 및 모니터링 이행 • 지역 건강정책 추진의 성인지관점 강화 5-4-2. 성인지적 건강증진을 위한 인식 개선 • 외도 중심의 사회인식 및 관행 개선 • 질병에 대한 성별고정관념 개선 5-4-3. 청소년의 건강증진 지원 • 취약계층 청소년 등에 대한 위생용품 지원 • 성인지 관점에 기반한 포괄적 성교육 실시 5-4-4. 안전한 피임과 임신·출산에서의 건강권 보장 • 피임과 임신중단에 대한 실태 파악

국가계획	정책과제	내용(하부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한 피임 실천정보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 안전한 분만 인프라 구축 • 난임여성 지원강화 • 다양한 출산과 차별 없는 보호·지원 강화
	5-4-5. 여성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강화 •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의 권리 보장 및 자녀양육 지원 •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

자료: 제1,2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과 제19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집을 바탕으로 저자가 재구성함

3. 여성건강보장을 위한 정책의 다층적 한계

지금까지 정부 계획을 살펴보았을 때, 지난 20여 년 사이 여성건강에 대한 정책이 점진적으로 구체화 되고 여성의 특수한 건강 필요와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고려하는 성인지적 접근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성건강보장을 위한 정부 정책은 다층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한계는 여성건강이 끊임없이 아이를 낳는 몸에 대한 선별적 지원으로 환원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보건의료 지식생산에서 시작하는 젠더 편향으로, 과학과 사회 모두에서 여성의 몸을 재생산하는 몸으로 생물학적 본질화(biological essentialization of women as reproducers)하는 관점이 일반적인 인식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깊다(Inhorn & Whittle, 2001; Gideon, 2016:5). 건강 영역에서 젠더주류화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한국의 형편을 생각하면 오로지 임신과 출산에만 집중하던 데에서 피임과 월경, 폐경 등 재생산 건강 영역으로의 관점 확장은 바람직해 보인다. 다만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논의가 곧 여성건강을 대체하는 것은 여성의 실질적인 건강 필요와 격차를 비가시화할 위험을 수반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인 공중보건에서 우선순위 결정과 마찬가지로, 여성건강 향상논의는 질병 부담(disease burden)에 따른 접근이 필요하다. 여성건강의 개선은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컨대 한국 여성의 주요 사망원인인 심혈관질환 치료나 당뇨처럼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른 접근이 필요한 만성질환 관리에서 성별과 교차하여 작동하는 젠더 규범, 역할, 관계를 고려하는 접근이 필요하다(Heise et al., 2019; Hay et al., 2019). 여성의 건강을 유방과 자궁, 난소 등 생식기관에 대한 것으로 축소하는 소위 “비키니 의학(bikini medicine)”은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왜곡하여 여성건강에 악영향

을 미친다(Gulati, 2017). 다시 한 번 여성건강 패러다임의 확장과 전환이 필요한 이유다.

둘째, 여성건강에 대한 적절한 책무 구조 미비는 오랫동안 지적되어 온 한계점이다. 상술하였듯 정부는 여성발전기본계획과 양성평등기본계획을 통해 여성건강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차츰 그 영역을 확장, 구체화해 왔다. 그러나 많은 정책과제가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비롯해 기존의 체계와 유의미한 접점을 만들지 못하거나, 남성중심적 의료를 변화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는 부서 간 협력의 어려움도 문제지만 일차적으로 기술적·전문적 특성이 강하고, 정부가 아닌 민간 제공자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보건의료영역에 대해 정부의 계획이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편, 의학과 의료의 젠더편향을 바로잡고 성과 재생산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유의미한 기획은 확인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출산 정책을 수행하고 모성건강을 다루는 데에 머물러 있을 뿐, 여성의 건강에 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 2019년 보건복지부에 양성평등 정책담당관이 신설되었으나 이 부서는 부처 내 성폭력 근절과 기존 사업에 대한 성평등 관점 반영 업무를 주요 업무로 담당한다. 부처 내 젠더주류화와 고유한 정책 영역으로 여성건강을 다루는 것이 서로 엄연히 다른 업무임을 강조한다. 행정과 정책과정에서 젠더주류화와 만성질환의 병태생리와 건강행태에 대한 젠더 접근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은 서로 같지 않다. 생물학적 성차를 넘어 서로 다른 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중층적 정체성을 고려하는 별도의 여성건강부서 설치가 필요하다는 오래된 요구는 이러한 맥락을 반영한다(정진주 외, 2007:230; 김남순 외, 2018:269, 김영택 외, 2020:180).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부서의 부재와 책무 구조 미비는 성평등과 여성건강권 보장 요구에 대한 소극적이고 분절화된 대응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부터 시작되었어야 할 젠더폭력에 대한 모니터링이 제때 시작되지 못하고 향후 과제로 남은 과정도 소극적인 대응의 예라고 할 수 있다.⁷⁾ 젠더폭력이 여지껏 한국에서 공중보건과 여성건강의 문제로 다루어지지 못했던 결과, 대통령 공약과 사회적 요청에도 불구하고 많은 여성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치고 있음이 분명한 젠더 폭력을 건강의 문제로 시의적절하게 모니터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성·재생산 건강 영역에 속하는 많은 부분이 젠더폭력처럼 이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생소하고 주변화되기 쉬운 의제라는 점에서 이에 대

7) 마찬가지로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이었던 국민건강증진기본계획에서 젠더 지표 반영에 대한 약속은 제5차 계획이 발표되는 시점인 2021년 시작되지 못하고 2023년까지 지표 개발을 목표로 제시한 채 미완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한 책무 구조, 더 나아가 정부의 리더십이 특히 중요하다.

셋째, 여성건강 관련 정책과제가 물질적 조건과 제도적 기반에 도달하지 못하고 성차별적 인식과 규범 변화를 목표로 교육·홍보 사업에 치우치는 경향 역시 한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인식과 규범 변화를 목표로 하는 대중 캠페인이나 교육은 성차별적 의료서비스를 변화시키고 불평등한 자원배분을 바꾸는 데에 제약이 명백하다.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성인지적 의료서비스를 확보하고, 성과 재생산 건강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제도적으로 자원배분과 의사결정의 방식을 바꾸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지금까지의 여성건강 건강보험은 한국 보건의료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제도이자 민간중심 의료체계에 개입할 수 있는 주요한 정책 수단이지만, 여성건강과 관련된 기존의 정책들은 이에 대한 개입을 거의 시도하지 못했다. 건강증진 영역에서도 미시적 수준의 연구개발을 넘어 실제 여성건강 사업으로 이어진 경우는 많지 않다. 여성들의 직접행동을 통해 어렵게 자원이 확보되었으나 이것이 여성들의 필요에 따라 배분되지 못하고 정책집행과정에서 전문가들의 판단에 따라 기존의 성별 규범을 강화하는 지식을 생산하는 데에 활용되는 상황도 반복되고 있다.

이는 여성건강 관련 정책이 보건의료 지식생산과 실천에 더 긴밀히 개입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성과 재생산 건강 이슈에 대한 연구 개발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원을 확보하고 의료서비스 질 관리와 규제를 위한 정책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보건의료영역에서 성차별적 구조와 남성중심 규범을 바꿔야 하고, 건강보험급여와 의료보장제도를 젠더 관점에서 분석하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김영옥 외, 2006).

Ⅲ. 성·재생산 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 임신중지를 중심으로

보건의료체계(health system)는 일차적 목적이 건강을 향상, 유지, 회복하는 데에 있는 모든 조직과 사람, 활동으로 구성된다(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2). 보건의료체계를 폭넓게 해석한다면, 직접적으로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체계는 개별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들의 집합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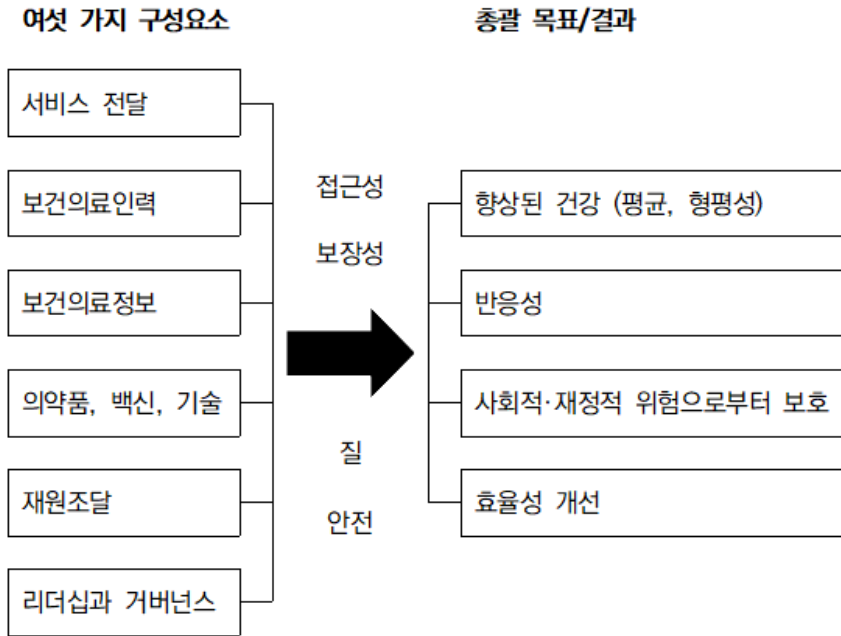
된 자원을 이용해 더 효과적이고 차별 없는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규제나 질관리를 수행하거나, 원치 않는 임신을 줄이기 위해 성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는 조직과 인력 역시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라고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보건의료를 주로 간호사, 의사 등 보건의료인력에 의해 수행되는 업무를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개념화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과거 가족계획시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마을건강원⁸⁾이나 신종 감염병 통제를 위한 방역 활동에서 비의료인 행정 인력의 기여에서 확인할 수 있듯, 국가보건의료체계는 병원으로 대표되는 생의학적 치료 체계를 넘어 더 넓은 제도와 실천을 포괄한다.

보건의료체계의 기능과 구조를 논의하는 데에 장단점을 가지는 여러가지 개념틀(conceptual framework)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근래 널리 활용되는 세계보건기구의 보건의료체계 개념틀을 소개하고, 임신중지를 중심으로 성·재생산 건강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체계의 과제를 논의한다. 이 개념틀은 투입요소를 여섯 가지 영역으로 제시하면서 보건의료체계의 바람직한 속성과 목표를 제시하고,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에 투자가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게끔 구성되어 있다. 구성요소 간 연관성이나 상호관계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들을 병렬적으로 나열하여 다소 관료적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다는 장점을 가진다(Balabnova et al., 2010).

개념틀의 좌측에는 보건의료체계의 구성요소를 크게 ① 서비스 전달(service delivery), ② 보건의료인력(healthcare workforce), ③ 보건의료정보(information), ④ 의약품과 백신, 기술(medical product, vaccines, & technologies), ⑤ 재원조달(financing), ⑥ 리더십과 거버넌스(leadership/governance) 여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며, 이는 목적달성을 위한 투입(input)에 해당한다. 투입은 접근성(access), 보장성(coverage), 질(quality), 안전성(safety)을 경유해 보건의료체계의 네 가지 목표이자 투입의 결과(output)로 나아가며, 이는 ① 향상된 건강과 ② 반응성(responsiveness), ③ 사회적·재정적 위험으로부터 보호(social and financial risk protection), ④ 효율성 개선(improved efficiency)이다[그림 1].

8) 1970~80년대 지역보건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한 가족계획사업에서 정부는 비의료인 주민을 뽑아 약간의 훈련을 거친 후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활동하게 하였으며, 이는 지금도 일차보건의료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소위 'village health worker'에 해당한다. 이들은 비전문가(lay person) 보건요원으로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보건사업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주민의 역량을 개발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수행했다(김창엽, 2011: 126).



자료: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3의 그림을 번역

[그림 1] 세계보건기구 보건의료체계 개념틀

1. 서비스 전달

사람들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되, 체계 수준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제도를 “의료전달체계(healthcare delivery system)”라고 부른다.⁹⁾ 임신중지 관련 서비스를 어떤 기관에서 누가 어떻게 제공하고, 서로 다른 조건(거주지역, 소득수준, 국적 등)과 필요(기저질환, 임신주수, 피임수요 등)를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적절한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등이 임신중지서비스 전달체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2020년 10월 정부가 공개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¹⁰⁾은 임신 14주 이후에

9) 의료를 전달하는 체계라는 개념화는 국가 입장에서 의료자원의 효과적인 분배와 운영을 논의하기 위한 개념화라는 점에서 각자의 고통과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병·의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험과 그리 부합하지 않는 정책용어라는 비판을 받는다. 여기에서는 기존에 사용되는 정책 용어로 이를 활용하지만 의료이용자 입장에서 이는 “의료이용체계” 등의 용어로 대체할 수 있다.

10) 이 글을 최종 작성하고 있는 2021년 6월 중순까지 임신중지와 관련한 법·정책은 결정되지 않았음.

는 종합상담기관을 방문해 ‘상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제시하면 의료기관에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이 외에도 임신중지 시술에 대한 의사의 거부권을 인정하고 환자를 종합상담기관으로 연계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고(보건복지부, 2020a), 이를 일종의 임신중지 서비스 전달 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전달을 위한 기본 전제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과 인력의 존재다. 즉, 임신중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제조건은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피임과 사회서비스 연계 등에 대한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상담기관¹¹⁾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다. 일각에서는 이전까지 비공식적으로 임신중절 시술을 해왔던 의료기관이 있으니 합법화 이후 서비스 제공 주체에 대한 고민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선 산부인과 의사들이 ‘선별적 낙태 거부’를 선언하고,¹²⁾ 지역 간 의료자원 격차가 심각함¹³⁾을 고려하면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보건의료인프라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다.

서로 다른 기관 사이 ‘연계’ 역시 의료전달체계의 핵심요소다. 많은 국가가 가벼운 질환과 예방적 서비스는 일차의료기관을, 중증이거나 복잡한 질환은 종합병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대표적인 것이 “주치의 제도”이다. 주치의를 맡은 일차의료 의사는 지역사회의료팀의 일원으로 주민의 건강증진, 질병예방, 만성질환 관리, 의뢰-회송을 담당하며 적절한 의료이용을 돕는다(이재호, 2018). 피임과 임신중지, 성건강 상담 같이 성·재생산 건강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도 주치의에 준하는 믿을만한 의료제공자의 역할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서비스는 일상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장벽이 낮은 일차의료 또는 건강증진의 영역에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몸에 대한 생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여성의 복합적인 건강 필요와 사회적 조건을 고려해 의료이용과 재생산 계획을 세우고 사회복지서비스 연계 역량을 갖춘 조정자(coordinator)가 있다면 성·재생산 건강서비스 이용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상대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높지만 적절한 의료전달

11) 보건소,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비영리민간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논의되고 있음.

12) 청년의사. (2020.12.29.). 기약없는 낙태법 개정에 ‘선별적 낙태 거부’ 선언한 산부인과계.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6214>

13) 2018년 12월 기준 전국 250개 시군구 중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은 65개임(보건복지부, 2020b:3).

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채 의료이용의 조정이 개인의 책임으로 놓여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가운데 대부분 의료기관이 민간 소유로 전문가의 안내에 따른 효과적인 의료이용과 연계가 어렵고 의료기관 간 경쟁이 이루어진다. 환자와 보호자는 자력으로 예방과 진단, 치료, 돌봄을 위한 서비스를 구매하는데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각자가 가용한 물질적·사회적·시간적 자원에 따라 의료이용경로의 효율성과 효과성의 격차도 큰 편이다.

임신중지 역시 마찬가지다. 산부인과에 아는 사람이 있는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의 임신중지는 경로와 경험에서 차이가 있다. 복잡한 임신중지에서 격차는 더 커진다. 예컨대 선천성 심장병을 가진 여성의 임신에서 태아 기형이 발견된다면 임신의 유지와 종결에 대한 결정을 위해 심장내과와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 다수 전문분과의 의견과 논의가 필요하다. 가정폭력과 우울증을 경험한 청소년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였을 때는 폭력에 대한 수사과 정신보건서비스, 주거 등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의료기관 간, 의료와 사회복지 및 행정 사이 연계와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힘든 현재의 관계에서 복잡한 임신중지 상황에 적절히 대응할만한 자원을 가진 여성은 그리 많지 않다.

2. 보건의료인력

최선의 근거에 따라 여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존재는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직접 시술을 하거나 약을 처방하는 산부인과 전문의에 초점이 맞춰지기 쉽지만, 임신중지를 비롯해 성·재생산 건강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의사와 간호사, 조산사와 약사 등 더 다양한 인력 양성과 교육·수련이 가능하며 역할 조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의과대학과 의학수련기관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의 다양한 상황과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이를 종결하고자 하는 여성의 복합적 필요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간호학과 보건학 등 관련 학제에서도 임신중지는 물론,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관심 수준이 낮다. 미국의 경우 산부인과 전문의 수련 과정 중 약 64%가 임신중지와 관련해 별도의 시간을 배정하고, 31%에서 선택적으로 이를 실시하며, 5%에서는 수련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Steinauer et al., 2018). 한국 산부인과 전공의 수련교과과정¹⁴⁾에

14)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034호]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공의의연차별수련교과과정>

자궁소파술과 임신 중반기 중절술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훈련이 이루어지는지는 파악되고 있지 않다. 대부분 전공의 수련이 이루어지는 상급 종합병원에서는 다양한 임신중지 사례를 접하기 힘들다. 불법이라는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의 현황이나 합병증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간접적인 훈련도 어렵다.

성인지적 의료를 위한 기반 역시 미비하다. 개선을 위해 임신중지가 필수 의료서비스로 보장되고,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을 포함, 질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많은 여성이 임신중지 과정에서 의료진으로부터 모욕감을 느끼고 이후 건강관리와 피임 등에 대해 적절한 설명과 지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한다(한국여성민우회, 2013: 65-68). 환자중심적 임신중절 서비스 제공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임신중지와 관련한 인력활용 방법에 대한 논의도 진전이 필요하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임신중지 등 성·재생산 건강 영역에서 의사 외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에서는 전체 분만의 99.7%가 의료기관에서 전문의에 의해 이루어지고, 조산원 분만은 0.2%에 그치지만(이소영 외, 2018: 169-170) 이것이 절대적인 인력운영방식은 아니다. 조산사에 의한 지역사회 모성건강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네덜란드의 경우 병원에서도 합병증이 없는 임신의 임신과 출산을 조산사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으며, 조산사의 도움을 받아 각자의 집에서 분만을 하는 경우가 약 13% 수준이다(Koninklijke Nederlandse Organisatie van Verloskundigen, 2017:6). 일차의료영역에서 간호인력을 활발하게 활용하는 것도 흔한 일이다. 국제적으로 적절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가 의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안전한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성·재생산 건강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배분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Mainey et al., 2020).

의료에 대한 의사의 독점권이 강한 한국에서 비의사, 비의료인 인력 활용은 임상적 증거뿐 아니라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검토해야 할 문제다. 특히 치료를 넘어 건강과 권리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에서 인력 활용과 역할 배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가 제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과 근래의 정책연구(김남순 외, 2018: 150-151)는 임신중지 전후에 시술 방법과 신체적·심리적 휴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피임교육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상담인력 활용 등을 제안하고 있고, 대체로 이는 의료인의 젠더의식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간편한 방안으로 여겨진다.

3. 건강정보체계

건강정보체계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다. 먼저 의료이용자 측면에서 믿을만한 정보 플랫폼이 한 축이다. 성·재생산 건강은 정확한 정보와 서비스를 찾기 어렵고, 당사자들이 정보를 적극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임신중지를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은 양질의 임신중지를 위해 필수적이다. 많은 국가가 임신중지의 방법은 무엇이 있고 장단점은 무엇인지, 임신중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은 어디에 있고 어떻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지, 비용과 위험은 어떤지, 임신중지와 관련한 상담이나 지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반면 질병관리청 국가건강정보포털은 임신중지 관련한 내용을 다루지 않는다. 정부가 임신의 유지·종결에 대한 종합상담을 담당하게 하겠다고 밝혔던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누리집이 “인공임신중절”을 다루지만¹⁵⁾ 서비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실용적 지식은 없다. 여러 연구와 조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던 임신과 출산을 겪는 여성뿐만 아니라 생애주기에 따라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성·재생산 건강(피임과 유산, 출산 후 건강관리, 폐경기 전후 건강관리, 노년기 성 건강 등)에 대해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과 대중 교육에 대한 요구(김동식 외, 2018:280-281; 김남순 외, 2018:263)를 반영하는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건강정보체계의 두 번째 측면은 서비스 제공자(provider) 측면에서 정보 수집이다. 임신중지를 비롯해 성·생식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모니터링·평가하는 체계를 구축이 필요하다. 간헐적 실태조사로는 임신중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다. 협소한 관점 역시 문제였다. 유배우 부인을 대상으로 임신중절 경험을 묻는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는 성·생식 건강보장이 아닌 정상가족의 구성원으로 여성의 장기적인 가족계획에 대한 조사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대조적으로 미국의 구트마허 연구소(Guttmacher Institute)는 여성의 관점에서 현재 출산 의향(pregnancy preference)과 피임접근성, 임신중지 접근성 등 재생산 건강과 관련된 지표를 모니터링한다. 여성 당사자의 의향과 조건을 묻는 조사는 여성들의 성·재생산 욕구를 파악하고, 경제위기나 신종감염병 유행처럼 사회적 위기가 발생하거나 정치적 여건이 변화하였

15)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임신>인공임신중절 페이지(2021.02.04. 인출)
http://www.childcare.go.kr/cpin/contents/p1_010200000000/p1_010210000000.jsp

을 때 재생산 선택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파악하는 데에 활용된다(Lindberg et al., 2020).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에서는 저출산을 국가적 문제로 설정하면서 임신과 출산을 여성의 건강필요가 아닌 정상가족의 의무로 여김으로써 오히려 출산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수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근거자료로 양질의 임신중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다. 3년에 한 번 실시하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를 여성의 관점에서 재편하여 성과 재생산 건강 조사로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 청소년건강행태조사, 한국의료패널,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기존 보건의료영역의 조사에도 젠더 폭력 경험이나 재생산과 관련한 의료이용 및 건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성·재생산 지표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의약품, 백신, 기술

한국에서 임신중지에 대한 표준화된 임상지침은 최근 내과적 임신중지 합법화에 대비해 개발되어 배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수술적 치료에 대한 지침은 물론 내과적 치료에 대한 지식도 국제 표준에 부합하게 확산되어 있다고 보장하기 힘들다. 전반적으로 신약에 대한 접근성과 요구가 높은 한국에서의 일반적인 경향과 달리 내과적 임신중지를 위한 의약품인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은 국내에서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품목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다. 내과적 임신중지를 위해 미페프리스톤과 함께 사용하는 미소프로스톨(misoprostol) 역시 십이지장궤양 치료를 용법으로 허가되어 있을 뿐, 자궁수축과 자궁경관 숙화(cervical ripening)의 목적으로 품목허가가 확장되지 않은 상태다.

미페프리스톤은 198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된 의약품이다. 내과적 임신중지를 유도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그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근거가 축적되어 2005년 세계보건기구의 필수약품(essential medicine) 목록에 포함되었고, 2019년에는 핵심필수약품(core essential medicine) 리스트에 포함되었다(Gill, Ganatra, Althabe, 2019). 근래 한국에서 내과적 임신중지 약물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가 가시화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두 차례에 걸쳐 미페프리스톤 도입 청원이 올라왔고 두 건 모두 20만 명 이상의 찬성을 얻었다. 그러나 식품안전의약처는 법률개정과 제약사의약품허가신청을 기다리며 약물 도입을 위한 사전검토를 시작하지 않았다. 최근 들어서야 미프지미

소(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복합제제의 상품명)에 대한 검토가 시작된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허가승인계획은 알려지지 않았다.

미페프리스톤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주로 임신 1분기의 임신중지에 대해 허가되어 있고, 국가에 따라 더 넓은 적응증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국내에서 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 시술 중 81.9%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졌음을 고려하면(김해중 외, 2005) 내과적 임신중지 기술은 한국 여성들의 임신중지 경험을 큰 폭으로 바꾸어 놓을 가능성이 있다. 내과적 임신중지 의약품 도입 과정은 의약품 기술 확산이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사회적 억압으로 인해 지연된 독특한 사례다. 북한에서의 증거(Tran et al., 2010)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어 있고, 일각에서 약을 비공식적으로 수입하여 이용하고 있는 형편임에도 이를 수입하겠다고 나서는 제약사가 뒤늦게야 나타났고 산부인과학회가 의약품 도입을 요구하기는커녕 약물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상황은 이와 관련된 미시적 정치경제를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특수한 사례다. 여성의 건강, 그중에서도 성·재생산 건강 영역에서 의학 기술의 진보와 확산이 특별히 지체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개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진지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5. 보건의료 자원조달

보건의료 자원조달은 사람들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의료이용을 포기하거나,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에 대한 것이다. 자원조달의 방식은 다양하다. 미국이 주로 민간보험에 의존하는 드문 상황에 해당한다면 보건의료 자원조달 대부분을 조세에 의존하는 영국, 스웨덴, 쿠바 같은 나라가 있고, 한국은 일본, 대만, 독일, 캐나다 등과 유사하게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77년 시작되어 1989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된 건강보험¹⁶⁾은 모든 의료기관과 국민 대다수의 의료이용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제공한다. 하지만 모든 의료서비스가 건강보험급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한국의 건강보험은 임신과 출산, 심지어 난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지만, 피임은 급여에 포함하지 않는다. 모자보건법(개정 이전)이 허용하는 적법한 사유의 인공임신

16)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이 1998년 『국민의료보험법』으로, 1999년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정되면서 2000년부터 제도 명칭이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으로 명칭이 변경됨.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한 상세한 연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제도·정책 소개 페이지 참조. <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20014000000>

중절은 건강보험급여가 제공된다. 그러나 형법상 낙태죄 폐지 이후 합법의 영역으로 들어오게 될 임신중절을 건강보험급여 범위 내에 포함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건강보험급여 여부는 한국 사회가 어떤 건강 필요를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할 것으로 인정하는지에 대한 합의인 동시에 경제적 접근성을 좌우하는 정치적 결정이다. 건강보험급여의 원칙을 규정하는 『건강보험법』 제41조는 “가임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¹⁷⁾ 일각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임신중지가 요양급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¹⁸⁾ 이는 예방적 치료와 건강증진사업에 건강보험재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최근의 결정에 배치되는 것이다. 법률 해석과 의료제공자의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정치경제를 논외로 하더라도¹⁹⁾ 무엇이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성·재생산 건강보장을 위해 진전이 필요한 영역이다.

피임과 임신중지, 폐경기 증상 관리 등 성·재생산 건강 영역에는 “질병”으로 규정되지 않는 다양한 건강 필요가 포함된다. 트랜스젠더의 성 전환을 위한 호르몬 치료와 수술 등도 마찬가지다. 원치 않는 임신을 피하고, 젠더 정체성과 지정 성별의 불일치를 정정하는 의료서비스는 질병 치료가 아니지만 삶의 질

17)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등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사회적 편익 및 건강보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대상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건강보험요양급여 결정이 단지 의학적 근거에 따른 판단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구와 재정적 지속가능성 등 다차원적 요소를 고려하여 이루어지며, 건강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가격의 의약품 발명·발견과 같이 기술적 진전의 영향을 받는 자원배분에 관한 결정이자 정치임을 시사한다.

18) 한겨레. (2021.01.27.) “임신중지는 개인 취향? ‘괘변’ 펼친 산부인과 의사회”.
<http://www.hani.co.kr/arti/society/women/980562.html>

19) 건강보험급여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의료서비스 비용의 일부를 지급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해당 의료서비스의 비용을 통제·관리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예컨대 건강보험급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미용·성형 서비스의 가격은 개별 의료기관에서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건강보험급여가 이루어지는 분만의 경우 자연분만과 제왕절개술 각각에 대한 수가가 정해져 있고 모든 의료기관이 이를 따라야 한다. 따라서 임신중지가 비급여 서비스로 남게 되는 경우 개별 의료기관이 임신중지 비용을 결정할 수 있고, 이렇게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은 대체로 건강보험급여에서 책정되는 수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모든 의료기관은 제공한 건강보험급여서비스에 대한 의료비 보상을 위해 건강보험공단에 이를 청구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전 국민의 의료이용과 관련된 정보가 축적되며, 정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여기에서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 의료서비스의 질 관리 등 다양한 규제 정책을 시행해 왔다. 의료제공자 입장에서 이와 같은 모니터링과 평가, 차별적 보상은 자율성에 대한 침해로 여겨지기도 한다.

과 건강을 증진하고 성별 불쾌감(gender dysphoria) 등으로 인한 정신 건강 악화를 예방한다. 과거에도 의료전문가들은 임신·출산 관련 의료서비스가 질병에 대한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와 관련한 의료보장을 반대한 바 있다.²⁰⁾ 질병, 부상, 출산만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협소한 논리를 따른다면 성·재생산 영역의 많은 영역은 건강보험 급여범위에 포함될 수 없다. 어떤 몸의 고통을 선택적으로 “질병”으로 규정해 인정하고, 어떤 괴로움을 개인이 부담해야 할 고통으로 남겨두는지에 대한 의학의 독점적 권력이 건강보험제도에서 되풀이되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재생산 건강 관련 의료의 건강보험급여를 위한 경로는 두 가지 전략을 통해 실현될 수 있다. 첫 번째는 성·재생산 영역에서 몸의 불편과 고통을 치료받아야 할 “질병”으로 규정하는 의료화(medicalization) 전략이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몸의 변화는 상당 부분 “퇴행성 질환”으로 규정된다. 노년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몸의 변화가 질병으로 개념화, 인정받게 되면서 생명공학과 의학에서는 노화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발견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몸의 문제의 상당 부분을 병리화하며 이를 사회보장제도 안에서 다룰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그러나 의료화는 몸의 고통과 결부된 사회적 맥락을 소거하고 건강 문제를 개인화하여 의료전문가의 통제 속에 두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점에서(Conrad, 1992) 성·재생산 권리 측면에서 제약이 크다. 물론 의료화 전략은 계층화가 심한 사회에서 중립적·객관적 필요로서 질병을 표방하고, 정치적·경제적 갈등을 우회하여 자원을 획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의료화를 통한 자격 획득은 지배적인 젠더규범과 이성애 정상가정규범과 일치하지 않는 건강 필요를 배제하고 주변화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Vipond, 2015). 생의학적 관점을 고수하지 않고 포용적 의료와 성·재생산 건강 필요를 고민하는 의료전문가 집단이 주류가 아니라는 현실적 조건도 의료화를 통한 건강보장이 한국에서 유효한 전략이 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다.

두 번째 방향은 질병과 부상, 출산이 아닌 다양한 건강 문제가 마땅히 건강보험을 통해 보장받아야 할 몸의 문제임을 주장하고 이를 관철해 내는 것이다. 법률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다투지 않더라도 이미 건강보험은 정치적·정책적 상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넓은 의미에서 출산을 위한 과정이지

20) 예를 들어 2007년 대한 산부인과 의사회는 “건강보험대상 항목으로 등재될 수 있는 질환은 필수의료로 한정해야 한다”면서 “입원환자 식대 및 산전진찰검사는 필수의료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 대상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의약뉴스, 2007.12.10.).

만 명확하게 질병이라고 보기 어려운 난임에 대한 건강보험급여가 대표적이다. 난임 ‘치료’를 위한 보조생식술은 오랫동안 비급여로 남아있다가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사회적 지원의 대상이 되었다. 시작은 일정 소득 계층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었다. 2017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고, 여기에는 기존에 의료비 지원을 하던 난임 시술을 건강보험제도 내로 포괄하는 안이 포함되었다. 이는 강력한 저출산대응 기조에 말미암은 것이기도 하지만 별도의 자원과 집행체계를 필요로 하는 난임 시술에 대한 국고지원을 건강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영역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관료적 동기와도 무관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질병이라고 보기 어렵지만 건강보험급여에 포함되는 의료서비스가 난임뿐만은 아니다. 국민건강보험은 영구피임시술을 받은 사람이 자녀를 낳기 위해 이를 복원하거나²¹⁾, 자궁내장치를 제거하는 시술²²⁾에 대해 선택적으로 급여를 제공해왔다. 건강보험급여에 대한 원칙과 규정에 대한 해석이 정치적·사회적 맥락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출산장려정책(pro-natalist policy)이 급여 결정과정에 개입을 해왔다고 볼 수 있다(Kim, 2019). 국제사회는 국가와 사회가 마땅히 보장해야 하는 필수적인 성·재생산 건강서비스의 항목을 위와 같이 규정한다(표 3). 한국의 건강보험은 대체로 산전·출산·산후 서비스와 불임에 대한 치료, HIV와 생식기계 성매개감염에 대한 치료, 생식기계 암에 대한 예방과 치료를 급여로 포함하지만 그 외 항목들은 아예 의료 영역에서 다루지 않거나 건강보장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6호. 불임 관련 진료 등에 대한 요양급여 항목으로 “영구피임시술(난관정관절제술 또는 결찰술)을 받은 자가 자녀를 낳고자 하여 실시하는 난관정관복원수술”을 급여대상으로 포함.

22) 행정해석 제2186호(2008.10.8.), 자궁내장치 교체 시 제거로 산정방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의 하나로 그동안 비급여로 분류되었던 난관, 정관복원수술 및 자궁내장치 제거를 출산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요양급여대상으로 포함한다.”

〈표 3〉 필수 성·재생산 건강서비스의 항목

- 근거에 기반한 포괄적 성 교육을 포함해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상담
- 성 기능과 만족에 대해 정보, 상담, 치료
- 성폭력과 젠더기반폭력과 강제 예방, 보고, 관리
- 안전하고 효과적인 피임 방법에 대한 선택
- 안전하고 효과적인 산전·출산·산후 서비스
- 안전하고 효과적인 임신중지 서비스와 돌봄
- 불임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 HIV와 그 외 생식기계 성매개감염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 생식기계 암에 대한 예방·관리·치료

자료: Starrs et al., 2018

굵은 글씨 처리된 항목들은 현재 건강보험이 급여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함

성·재생산 건강서비스는 성적 자기결정과 재생산 운명(reproductive life)에 대한 자기통제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건강 보호와 증진을 넘어서는 가치를 지닌다. 인권으로서 재생산 건강을 보장하라는 사회적 요구는 생의학적 관점으로 협소하게 해석되곤 하는 건강보험의 목적²³⁾이 보건의료를 통해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고통을 충분히 포괄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는 요구이기도 하다.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국민건강보험제도 내에 반영하는 것은 이전과 같이 사회적 가치와 세력이 경합하는 정치적 과정일 수밖에 없다. 불평등한 젠더 구조를 구성하는 생물학적 성차와 그로 인한 건강 결과를 다루는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보장은 기존의 건강보장제도 운영의 근본 원리를 다시 검토하게끔 만드는 논쟁적인 요소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배분 원칙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성·재생산 건강의 특성들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것은 한국의 보건의료체계가 보다 성평등한 제도로 나아가도록 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다.

6. 리더십과 거버넌스

보건의료체계의 마지막 구성요소는 리더십과 거버넌스다.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동원하고 효과적으로 감시·규제하거나 책무와 협력의 구조를 형성하는 등의 활동이 여기 포함된다. 이는 행정부, 이른바 건강당국(health authority)의 역할이지만 정부 내에 성·재생산 건강보장을 위해 리더십을 받

23) 『국민건강보험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휘하고 책무를 지는 주체는 명확하지 않다.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에 출산과 아동, 보육, 노인을 다루는 부서가 있지만, 언급하였듯 성·재생산 건강이나 여성건강을 다루는 부서는 지금껏 설치되지 않았다.

여러 해외 국가 보건부처에는 여성건강에 관한 정책, 연구, 사업을 총괄하고 부처·부문 간 업무 연계와 조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미국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Offices)에는 여성건강국(Office on Women's Health)이, 캐나다 보건국(Health Canada)에는 여성건강국(Women's Health Bureau)이 있다. 이들 부서는 보건 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단계에서 성 주류화와 여성의 특수한 건강 필요를 고려하기 위한 조정과 지원을 담당한다.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건강증진을 위해 “여성건강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산하기관과²⁴⁾ 지방정부의 여성건강업무를 총괄·관리한다.

한국에서도 보건복지부 내 여성건강부서 설치 필요성이 논의된 지 오래되었다(정진주 외, 2007:230; 김영택 외, 2013: iv; 임도희 외, 2014). 성인지의 학과 젠더주류화 관점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재생산 건강을 다루고, 심혈관질환이나 암처럼 주요사망원인 질환에 대한 성인지 정책을 총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반복되고 있다. 달라진 조건이 있다면 최근 한국 사회에서 낙태죄 폐지 운동을 비롯해 여성건강과 보건의료의 젠더편향에 대한 문제의식이 커져가고 있다는 것이다. 여성계와 학계, 언론, NGO 등 여성건강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시민사회는 이미 성·재생산 건강을 위한 시민적 리더십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권력의 영향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의료전문가 권력과, 보건의료 의사결정에 대한 기술관료의 독점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의료서비스 현장에 미치는 힘을 제약해 왔다. 성·재생산 건강과 같이 소외된 이슈를 당사자들의 입장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참여가 보장되는 공적 거버넌스가 앞으로도 중요하다. 한국 보건의료체계의 맥락과 성·재생산 권리를 이해하는 활동가, 연구자, 시민들의 참여와 권력강화(empowerment)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적실한 참여를 안내하여 보건의료서비스의 실재를 바꾸는 과정에서 정부의 지지와 민주적 거버넌스는 필수 조건이다.

24) 예. 미국 질병관리예방센터와 보건의료자원서비스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보건원 각 각에 여성건강부서가 존재.

IV. 맺으며: 여성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보건의료체제로

한국에서 여성건강은 출산 예정이거나 임신 중인 여성의 건강으로 축소·환원되어 왔다. 1998년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시작으로 여성건강권 보장을 위한 계획이 차츰 확대·구체화하였지만 이는 대체로 이성애 정상 가족의 생식 과정을 보조·지원하는 출산장려제도의 맥락을 벗어나지 못했다.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는 성평등한 의료접근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의료이용과정의 성차별이나 젠더와 교차하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는 개입하지는 못한다. 청소년과 노년기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서비스 이용이나 성 소수자의 의료 이용처럼 문화적 장벽이 높은 영역에 대한 고려도 부족했다. 차별적이고 반응성이 낮은 의료를 바꾸기 위한 정부 개입은 충분하지 않고, 시장에서의 개선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여성건강 영역 안에서도 성·재생산 건강은 출산장려정책을 제외하면 오히려 여성 개인이 감당하고 책임져야 할 영역이었다.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인 피임 기술이 있고, 건강보험 급여나 적극적인 홍보·교육을 통한 피임 접근성 개선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외면해왔다.²⁵⁾ 준비되지 않은 시기에 피임과 임신중지 지원 등 생애주기에 따른 재생산 선택을 지지하는 정책은 성·재생산 권리 보장이자 스스로 성취하고자 하는 삶을 기획할 자유를 보호하는 정책이다. 국가적 과제인 인구 재생산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성의 건강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출산장려 관점에서 피임과 임신중지를 외면하는 것도 과학적 근거를 무시하는 일이다. 임신중지가 합법화된 나라에서 출산률 저하는 대체로 저소득·저연령 여성에서 효과가 크고, 합계출산율 감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장기적으로 여성교육성취와 삶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onzález et al., 2018).

형법상 낙태죄 폐지와 임신중지 합법화는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의제를 진전의 중요한 기회이자 계기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여성들의 절실한 요구가 법률개정을 이끌어 냈을 뿐만 아니라 공적 통제 수준이 낮고 전문가와 관료가 주요의사결정을 독점해왔던 보건의료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하

25) 2020년 12월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최초로 “건강하고 안전한 피임과 임신의 유지·종결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가 언급되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제시되지 않음(보건복지부, 2020c: 90).

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회적 필요를 공론장의 의제로 더 잘 정립하고, 정책 대안을 만들어 내기 위해 보건의료와 여성연구 사이의 생산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한국 보건의료영역은 성·재생산 건강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젠더주류화를 공식 의제로 다루어 본 적이 없다. 여성운동과 연구에서는 보건의료를 체제 수준에서 다루고 규범이나 문화를 넘어 의료생산의 정치경제를 고민할 기회가 많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여성건강에 대한 기존 정책과 맥락을 정리하고, 성·생식 건강보장을 위한 과제를 보건의료체계 관점에서 조망하고자 하였다. 저자는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가 사람중심적이지 못한 기존의 보건의료체계를 변화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 여성의 건강과 권리에 대한 연구는 규범적·상징적 영역을 넘어 보건의료체계라는 실재에 개입하는 전략을 마련하는 지적 기반이 되어야 한다. 여성들이 직접 열어젖힌 정치적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기에 개입하기 위해 학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여성들의 경험에서 출발하는 정책 지식을 당사자들과 함께 만들어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국가법령정보센터(2015). “양성평등기본법”. <https://www.law.go.kr/LSW//lsInfoP.do?lsiSeq=154260&ancYd=20140528&ancNo=12698> 2021.02.03. 인출.
- 김남순·전진아·김동식·김명희·김성이·김유미·정최경희·지선미·송은솔·이나경 (2018). 건강증진정책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여성건강정책기본계획 기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동식·송효진·동제연·이인선(2018). 여성의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옥·김이선·황정미·황정임·마경희(2006).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추진성과와 과제. 한국여성개발원 주최 제34차 여성정책포럼 자료집: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 김영택·김동식·김인순·정진주(2013). 한국의 여성건강증진 정책 추진전략을 위한 외국 사례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영택·배호중·천재영·박진표·김새롬·문다슬(2020). 성인지적 재생산건강증진 모델 개발 기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보건복지부.
- 김정혜. (2020). “헌법상 모성보호의 한계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법학논총. 27. 265-313.
- 김창엽(2011). 일차보건의료와 보건진료원 제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 김해중·안형식·김순덕·박문일·박춘선·임지은·홍성희·이제숙·김경란·이수경·이선영·김호임·김경훈(2005).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고려대학교/보건복지부
- 민무숙·양인숙·윤덕경·황정임·마경희·김양희·최윤정(201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및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성가족부.
- 박선영·김복태·윤지소. (2020). 성평등정책 추진계획 실질화를 위한 젠더거버넌스 강화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보건복지부(2017). “보도자료-건강보험 적용 난임치료 시술 기준마련”.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42170에서 2021.01.29. 인출.
- 보건복지부(2020a). “보건복지부공고 제2020-708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

- =60963&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에서 2021.01.29. 인출.
- 보건복지부(2020b). “2020년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 안내”.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907>에서 2021.01.29. 인출.
- 보건복지부(2020c).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전체)”. <https://www.betterfuture.go.kr/front/notificationSpace/pressReleaseDetail.do?articleId=117>에서 2021.02.04. 인출.
- 이소영·김은정·박종서·변수정·오미애·이상림·이지혜(2018).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재호(2018). 주치의제도 바로알기: 주치의제도의 의미.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http://sub.kafm.or.kr/question/index.kin?gubun=3>에서 2021.01.29. 인출.
- 인구정책50년사편찬위원회(2016). 한국 인구정책 50년: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도희·이지혜·김혜원·박수현·이혜아·민정원·박보현·김영주·정최경희·박혜숙(2014). “여성건강연구 관련 법, 관리체계 및 연구현황에 대한 국가 비교”.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제18권 제1호. 13-23.
- 의약뉴스(2017.12.10.) “가입자 현금 직접 지급, ‘말도 안돼’ 반박”. <http://www.newsmpp.com/news/articleView.html?idxno=38767> 에서 2021.05.31. 인출.
- 정진주·김영택·전희진·천희란·최성수(2007). 외국의 여성건강증진 기반고찰 및 한국의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은주(2018). 가족과 통치. 창비: 파주시.
- 하정옥(2013). “재생산권 개념의 역사화·정치화를 위한 시론”. 보건과 사회과학. 제34호. 183-210.
- 한국여성민우회(2013). 있잖아... 나 낙태했어. 서울:도서출판 다른.
- American College of Obstetricians and Gynecologists(2017). Abortion Policy. Statement of Policy. <https://www.acog.org/advocacy/facts-are-important/abortion-is-healthcare>에서 2020.01.18. 인출.
- Conrad, P.(1992). Medicalization and social control. *Annual review of Sociology*, 18(1), 209-232.
- Gideon, J.(2016). Gender and health: an introduction. In Gideon, J.(Ed.). *Handbook on gender and health*(pp.3-22), Edward Elgar Publishing.

- Gill, R., Ganatra, B., & Althabe, F.(2019). WHO essential medicines for reproductive health. *BMJ Global Health* 2019;4:e002150
- González, L., Jiménez-Martín, S., Nollenberger, N., & Vall-Castello, J. (2018). The effect of abortion legalization on fertility, marriage and long-term outcomes for women (No. 1035).
- Gulati, M.(2017). Improving the cardiovascular health of women in the nation: moving beyond the bikini boundaries. *Circulation*, 135(6), 495-498.
- Hay, K., McDougal, L., Percival, V., Henry, S., Klugman, J., Wurie, H., Raven, J., Shabalala, F., Fielding-Miller, R., Dey, a., Dehingia, N., Morgan, R., Atmavilas, Y., Saggurti, N., Yore, J., Blockhina, E., Huque, R., Barasa, E., Bhan, N., Kharel, C., Silverman, J. G., Raj, A., Darmstadt, G. L., Green, M. E., Hawkes, S., Heise, L., Henry, S., Heymann, J., Klugman, J., Levine, R., Raj, A., & Gupta, G. R.(2019). Disrupting gender norms in health systems: making the case for change. *The Lancet*, 393(10190), 2535-2549.
- Heise, L., Greene, M. E., Opper, N., Stavropoulou, M., Harper, C., Nascimento, M., & Zewdie, D.(2019). Gender inequality and restrictive gender norms: framing the challenges to health. *The Lancet*, 393(10189), 2440-2454.
- Inhorn, M. C., & Whittle, K. L.(2001). Feminism meets the “new” epidemiologies: toward an appraisal of antifeminist biases in epidemiological research on women’s health. *Social Science & Medicine*, 53(5), 553-567.
- Kim, S. (2019). Reproductive technologies as population control: how pronatalist policies harm reproductive health in South Korea.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matters*, 27(2), 6-12.
- Kumar, R., Birn, A. E., & McDonough, P.(2016). Agenda-setting in women’s health: critical analysis of a quarter-century of paradigm shifts in international and global health. In Gideon, J.(Ed.). *Handbook on gender and health*(pp.25-44), Edward Elgar Publishing.
- Koninklijke Nederlandse Organisatie van Verloskundigen(2017). Midwifery in the Netherlands. de Royal Dutch association of Midwives

<https://www.knov.nl/samenwerken/tekstpagina/489-2/midwifery-in-the-netherlands/hoofdstuk/463/midwifery-in-the-netherlands>에서 2020.01.29. 인출

- Lindberg, L. D., VandeVusse, A., Mueller, J., & Kirstein, M.(2020. June 24). Early impacts of the COVID-19 pandemic: Findings from the 2020 Guttmacher Survey of Reproductive Health Experiences. Guttmacher Institute <https://www.guttmacher.org/report/early-impacts-covid-19-pandemic-findings-2020-guttmacher-survey-reproductive-health>에서 2021.01.29. 인출
- Mainey, L., O'Mullan, C., Reid-Searl, K., Taylor, A., & Baird, K. (2020). The role of nurses and midwives in the provision of abortion care: A scoping review. *Journal of clinical nursing*, 29(9-10), 1513-1526.
- Starrs, A. M., Ezeh, A. C., Barker, G., Basu, A., Bertrand, J. Blum R., Coll-Seck, A. M., Grover, A., Laski, L., Roa, M., Sathar, Z. A., Say, L., Serour, G. I., Singh, S., Stenberg, K., Temmerman, M., Biddlecom, A., Popinchalk, A., Summers, C., & Ashford, L. S.(2018). Accelerate progress—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for all: report of the Guttmacher–Lancet Commission. *The Lancet*, 391(10140), 2642-2692.
- Steinauer, J. E., Turk, J. K., Pomerantz, T., Simonson, K., Learman, L. A., & Landy, U.(2018). Abortion training in US obstetrics and gynecology residency programs. *Americ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219(1), 86-e1.
- Vipond, E. (2015). Resisting transnormativity: Challenging the medicalization and regulation of trans bodies. *Theory in Action*, 8(2), 21.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07). Everybody's business - strengthening health systems to improve health outcomes. <https://apps.who.int/iris/handle/10665/43918>에서 2020.01.30. 인출
- World Health Organization. (2012). Safe abortion: technical and policy guidance for health systems.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2702350>에서 2021.01.30. 인출

Abstract

Integrating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into Health System -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and its task in South Korea*

Saerom Kim**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including abortion services, had long been excluded from the government's effort to ensure "health for all" in South Korea. This study is a narrative review that analyzes previous women's health policy, introduces the health system conceptual framework, and presents the health system's forthcoming tasks to ensur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In the last two decades, women's health policy had escaped from the narrow scope of maternal health, but still, it reduces women's health into the reproductive body, and the adequate accountability structure for women's health is still absent. The policy focuses on awareness-raising and changing social norms rather than material condition of women's health, such as health care service production or challenging the unequal distribution of resources. A health system approach is essential to assure safe abortion and improve access to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for everyone. We explored the health system's future task, utilizing WHO's six building block framework for health system strengthening. Decriminalization of abortion and legalization of abortion is a significant opportunity to advance th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genda. Scholars should not dissipate the political window from the women's movement, producing policy alternatives that start from women's own experience, which requires constructive inter-disciplinary collaboration between public health and women's studies.

Keywords : abortion, women's health,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health system, health policy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Basic Science Research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fun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NRF-2019R1A6A3A01095865)

** Director, Gender and Health Research Center, People's Health Institute, Korea

기본소득과 돌봄노동: 누구의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안미영*

초 록

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기혼여성과 남성의 돌봄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생활시간 조사 2014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20-64세 여성 3,483명과 남성 3,323명을 대상으로 토빗회귀분석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여성과 남성의 돌봄노동은 근로시간, 경제적 의존성의 제곱항, 성역할 인식과 관련 있었다. 근로시간은 부정 영향관계를 보이는 반면 경제적 의존성 제곱항과 성역할 인식은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월 30만원 기본소득의 경우 여성의 돌봄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변화가 없었으나 50만원의 경우 경제적 의존성 제곱항의 유의미성이 사라져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여성은 일탈적 성역할을 상쇄하기 위해 돌봄노동에 시간을 더 할애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일하는 여성에서만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기본소득 지급과 관계없이 경제적 독립성이 강한 남성이 돌봄노동에 시간을 더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은 여성으로 하여금 경제적 협상력에 따라 돌봄노동에 시간을 할애하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남성이 더 많은 시간을 돌봄에 할애하는 것과 관련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동시에 기본소득은 여성 집단을 계층화할 가능성도 지니고 있음을 보여준다.

주제어: 기본소득, 젠더, 돌봄노동

*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myan@kookmin.ac.kr)

I. 서론

한국 복지국가의 역할에 대한 논쟁과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000년대 초반 성은미(2002)를 포함한 학자들의 기본소득에 대한 주장을 시작으로 2009년 한국기본소득네트워크의 설립과 함께 활발하게 논의되어온 기본소득은(박이은실, 2014a: 9) 한국복지국가 재구조화의 중요한 아젠다로 부상했다. 기본소득은 모든 시민들에게 노동에 대한 요구나 자산조사 없이 개인단위로 정치공동체(Political community)가 제공하는 소득이며(Van Parijs, 2004: 8) 보편성, 무조건성, 정기성이라는 제도적 특징을 지닌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민간정책연구기관인 LAB2050에서 제시한 최저생계비 중 가장 낮은 월 30만원을 지급할 경우 기존복지지출과 기본소득을 포함한 전체 지출은 316조원으로 GDP의 16.4%를 차지한다(김필현, 2020). 재원 마련 문제를 중심으로 한 기본소득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격론에 가깝다. 실현가능성과 더불어 한국복지국가의 분배원리로서의 바람직성에 대한 논쟁 역시 학계와 정치계를 중심으로 가속화 되고 있다.

기본소득의 바람직성에 대한 논쟁에는 젠더, 여성 관점에서 논의도 등장하고 있는데 고무적인 현상이다. 판 빠레이스(Van Parijs, 1992)는 “Competing Justifications of Basic Income”을 1992년에 출판하는데 1990년대 초반 대부분의 유럽 복지국가 학자들은 1990년에 출간된 에스핑 앤더슨(Esping Andersen, 1990)의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으로 증폭된 비교복지국가론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다. 당시 페미니즘 학자들,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을 주창한 Lewis(1992)를 포함하여, Sainsbury(1996), O'Connor(1993) 등은 그 복지국가 논쟁 한 복판에 있었으나 그들의 젠더평등을 위한 복지국가에 대한 통찰력 있는 논의에는 기본소득이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 낸시 프레이저(Nancy Fraser)는 1994년 Wollstoncraft(1792)가 제시한 젠더평등에 관한 딜레마 관점의 한계를 논리적으로 설파하는 글을 출판한다(Fraser, 1994). 해당 논문의 주석에서(1994: 615) 기본소득을 명시적으로 언급하는데 맥락은 이러하다. 탈산업화 시대 여성과 아동의 복지를 위해서 복지 급여 자격이 어떻게 부여되고 있는지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보육서비스가 시민권으로서 존재하는지, 정부가 돌봄노동을 필요에 기반하여 지원하는지 또는 유급노동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원하는지, 그리고 시민권에 기반한 보편적 기본소득제도가 있는지 등이 중요하다고 제시한다. 프레이저가 젠더평등의 이상적 모형으로 제시한 보편적 돌봄자 모델(Universal care-

giver model)(Fraser, 1994)은 최근까지 유럽 여성주의 학자들의 복지국가 논의에서 핵심 개념으로 등장하지만 (Ciccia and Bleijenbergh, 2014) 기본소득은 관련 논의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러한 서구 여성주의 학자들의 복지국가와 젠더평등에 대한 논의와 달리 한국 학자들은 기본소득과 젠더평등의 문제를 활발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다 (김미정, 2010; 김혜연, 2014; 박이은실, 2013; 2014a; 2014b; 안숙영, 2020; 윤연숙, 2012; 윤자영, 2016; 2017; 2018; 장지연, 2011). 특히 프레이저의 보편적 돌봄자 모델을 바탕으로 젠더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본소득의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이주희, 2012; 이지연·김수연, 2020; 김교성·이나영, 2018; 이지은·김교성, 2021).

지난 반세기동안 일-복지(Work-welfare) 연계에 충실해 온 한국 복지국가 문턱 주변부 어딘가에서 서성여왔던 여성들에게 기본소득은 젠더평등을 위한 변혁적 영향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정책대안으로 보여진다. 젠더평등과 기본소득 논의에서 돌봄노동이 중요한 주제로 언급되고 있지만 기본소득이 돌봄노동에 미치는 영향, 젠더평등에 가지는 함의에 대한 의견은 학자마다 상이하고 특히 경험적 근거 없이 확장되어왔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 기혼 여성과 남성의 돌봄노동에 미치는 기본소득의 영향에 대한 첫 경험적 연구로서 젠더정의 실현을 위해 기본소득이 가지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 확장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 젠더정의

국내 연구진은 낸시 프레이저의 주장과 연계해서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는데 기본소득이 젠더평등에 가지는 가능성과 한계를 보다 더 적실하게 이해하기 위해 프레이저의 젠더정의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보편적 돌봄자 모델을 인용하면서 남녀 사이(젠더간) 평등만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데 프레이저의 젠더정의는 젠더 간 뿐만 아니라 젠더 내 평등을 강조하고 있음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프레이저는 보편적 돌봄자 모델을 제시하면서 여성과 남성의 유급 및 무급 노동에 대한 동등한 참여와 복지국가 역할을 강조한다. 젠더정의에 대한 그녀의 생각을 설파하는데(Fraser, 1996), 젠더정의는 반드시 현재의 성별 노동

분업 및 성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혁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는 만큼이나 현재의 성별 노동 분업과 성역할에 대한 인식을 지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프레이저의 젠더정의는 “모든” 여성의 사회적 평등을 위해 여성들 내에 존재하는 “다름”에 대한 문화적 인식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이를 위한 (복지)국가의 역할을 강조한다. 쉽게 말해 한 사회의 모든 여성이 사회적 평등을 누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 울스틴크래프트가 제시한 딜레마적 관점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젠더평등을 위해, 여성의 사회권 증진을 위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유급노동자로 규정하고 관련 제도를 구축해도 “모든” 여성이 사회적 평등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처럼 여성의 사회경제적 역할을 돌봄을 전담하는 무급노동자 역할로 규정하고 정책 및 제도를 형성 발전시키는 것 역시 “모든” 여성을 유익하게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 여성이 남성과 비슷하게 유급노동자로서 사회경제적 역할을 수행하지만 후자의 경우 전통적 성역할을 강화하게 된다. 동등함 (Sameness) 관점 이든 다름(Differences) 관점 이든 모든 여성의 이익이 추구되지 않는다 것을 강조한다. 결과적으로 프레이저의 젠더정의는 남성과 여성의 젠더간 문제와 함께 주로 여성을 중심으로 한 젠더 내 차이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프레이저는 젠더정의를 저해하는 1)자원에 대한 접근의 다름(Differences in access to resources)과 2)문화적 가치의 계층화 (Hierachisation of cultural values)의 문제를 지적한다(Fraser, 1996; Anarte, 2020: 19-21 재인용).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은 통제력 및 협상력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정의 문화(Culture of recognition)는 여성을 예측적 상태에서 해방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여성 예측적 문화는 여성의 노동, 존재에 대해 낮은 가치를 부여하고 남성의 노동과 존재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며 이는 사회적 대표성과 소통에서 가부장적 사회모델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희롱, 성폭력, 여성의 사물화(Objectification), 여성의 발언에 대한 가치절하 및 권력에서 제외 등으로 나타난다. 정부 역시 사회정책을 통해 보다 더 가치 있는 노동이 무엇인지를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남성과 여성 간의 우열, 그리고 여성 내에서 우열을 규범화 한다.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과 인정의 문화의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다루지 않는 어떠한 정치 또는 정책적 시도도 그 사회의 여성이 경험하는 불이익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지 못할 것이고 따라서 젠더정의를 실현할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한다.

기본소득은 모든 종류의 사회경제적 활동 또는 노동에 가치를 부여하여 인정한다는 점과 현금 지급을 통해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프레이저의 젠더정의에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기여할지 상당히 중요한 함

의를 지니고 있는 제도라 할 수 있다.

2. 기본소득과 무급노동에 대한 기존 논의

기본소득이 무급노동에 대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는 상반된다. 긍정적 견해를 견지하는 학자들은 기본소득은 여성의 경제적 협상력을 강화하여 무급노동을 덜 하게 할 것이라 주장한다(Standing, 1992). 또는 기본소득이 여성이 주로 하는 가사 및 돌봄 노동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사회경제적으로 의미 있는 노동이라는 인식이 형성될 것이며(Elgarte, 2008), 결과적으로 남성의 무급노동 참여가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Zelleke, 2011). Molyneux(2009)는 여성에게 직접 제공되는 조건부 현금 지급이 엄마로서 여성의 역할 또는 돌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 혹자는 해당 연구를 인용하면서 기본소득이 가지는 무조건성이 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다. 반면 O'Reilly(2008)는 기본소득이 어떤 형태의 젠더평등에 기여할 것인지 불분명하며 기본소득만으로 젠더관계의 효과적인 변화가 나타날지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견지한다. Robeyns(2001)과 Gheaus(2008) 역시 부정적인 입장인데 구체적으로 여성의 유급노동에 대한 의지를 낮추어 무급노동자의 역할을 고착시키며 결과적으로 남성에게 예측된 상태가 지속 및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학자들의 의견 역시 상반되는데 윤자영 외(2010)는 저소득계층 여성들은 고소득계층 여성과 동일화되기 위해 전업주부로서의 역할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전통적 성별 노동 분업이 강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장지연(2011)은 전통적 성역할 인식이 강한 우리나라의 경우 기본소득 지급에 따른 가구소득의 증가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는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가용시간, 경제적 자원력 그리고 성역할 인식의 변화가 달라질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하고 결과적으로 여성의 무급노동이 의미 있게 변화할 가능성이 낮을 것임을 함의한다. 윤자영(2016)은 모든 종류의 활동에 가치를 부여하는 기본소득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기본소득이 돌봄노동을 보편화할 가능성이 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반면 김미정(2010)은 기본소득이 개인의 유급노동시간을 줄일 것이며 노동시간이 줄어든 남성은 무급 노동에 시간을 더 할애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뮬레이션 모형을 구축하여 기본소득의 노동 공급효과를 분석한 이승주(2017)의 연구에서는 기본소득에 따른 근로유인의

감소는 전반적으로 크지 않지만 중위소득 이상의 미취업자가 시간제나 전일제 근로를 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고, 중위소득 이하의 경우 기본소득에 따라 고용지위가 달라지지 않았다. 이승주(2020)는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여 기본소득이 한부모 여성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노동유인 감소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기개발을 통해 보다 더 안정적인 유급노동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다. 이승주의 연구는 기본소득으로 인해 여성의 무급노동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본소득과 성별 노동분업에 대한 기존 학자들의 논의는 주요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무급노동에 미치는 기본소득의 영향에 대해 언급된 내용은 거의 대부분 학자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주장이라는 점이다. 기본소득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부족한데 구체적으로 무급노동에 대한 미시차원의 이론을 활용하여 기본소득 지급이 여성과 남성의 무급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

3. 기본소득과 돌봄노동

돌봄노동의 젠더간 그리고 젠더내 차이와 기본소득의 관계에 주목하는 본 연구는 기존 이론과 연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 두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미시차원이론 중 경제적 자원력을 포함하는 이론을 활용하여 기본소득의 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둘째, 기본소득에 대한 분석은 남성과 여성뿐만 아니라 여성 내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미시차원의 이론은 구체적으로 가용시간(Time availability), 경제적 자율성(Economic autonomy), 경제적 의존성(Economic dependency), 성역할 인식(Gender-role ideologies) 그리고 성역할 구조화론(Gender role construction)을 포함한다. 경제적 효율성에 기반을 둔 이론은 가용시간, 경제적 자율성과 경제적 의존성을 강조한다. 가용시간론에 따르면 가사노동시간이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진다(Bergen, 1991). 소득을 기반으로 한 자원론은 경제적 의존성 또는 자율성을 강조하는데 누구나 가사노동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자원 협상력을 기반으로 가사노동을 줄인다고 설명한다(Blood and Wolfe, 1960; Lundberg and Pollak, 1993: 1996). 하지만 Gupta(2006: 2007)는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편이나 배우자의 경제적 자원에 대한 여성의 상대적 위치에 의해 달라지지 않고 경제적 자원의 절대적 가치에 의해 달라

진다고 주장한다. 즉 경제적 의존성이 아닌 경제적 자율성을 강조한다.

반면 성역할 인식을 주요 인자로 보는 입장은 전통적 성역할을 지닌 커플은 보다 전통적으로 노동분업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Coverman, 1985). 반면 젠더구조화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가사노동은 반드시 경제적 의존성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Brines(1994)는 개인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혹은 일반적으로 인식된 성역할에 상징적으로 부합하기 위해 가사노동을 한다는 젠더전시론(Gender display)을 지지하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한다. Kan(2008)은 영국 사례를 통해 배우자보다 월등히 소득이 높은 여성이라도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을 지니고 있는 경우 자신의 가치부여에 따라 가사노동에 시간을 할애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경제적 의존성의 영향은 개인의 성역할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 Brines(1994)는 젠더전시적 행태를 검증하기 위해 Sørensen and McLanahan(1987)의 경제적 의존성(Economic Dependency, ED) 계산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본인의 (소득/임금-배우자 또는 파트너 소득/임금)/(본인의 소득/임금+배우자 또는 파트너 소득/임금)으로 측정된다. 경제적 의존성의 비선형적 영향관계로 젠더전시적 행태를 판단하는데 이를 위해 경제적 의존성과 제곱항을 회귀모형에 투입한다. 반면 Kan은 경제적 의존성과 제곱항을 투입하고 경제적 의존성과 성역할 인식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구축된 이론들은 이후 돌봄노동에 적용되기 시작한다. 결론적으로 돌봄노동은 가사노동과 다르다는 점이 강조된다. 가사노동과 달리 돌봄노동은 모든 사람이 회피하고자 하지 않으며(Gauthier and DeGusti, 2012) 오히려 투자적(Investment) 성격이 강한 노동이다(Craig and Mullan, 2011). 따라서 주로 가사노동을 기반으로 구축된 가용시간이나 경제적 자원의 영향 그리고 성역할 인식의 영향이 돌봄노동에서 나타나지 않거나 반대방향의 영향을 보인다. 예를 들어 Craig(2007)는 엄마들의 자녀돌봄 시간은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을 발견한다. 오히려 엄마들은 그들의 여가시간이나 수면시간 등 개인을 위한 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시간을 할애한다. 또한 고학력 엄마들은 그들의 경제적 자원력을 통해 자녀 돌봄을 덜 하지 않고 오히려 더 하려고 노력한다. 더 나아가 Gupta가 주장하듯 임금이 높은 여성이 반드시 적은 시간을 돌봄노동에 할애하지 않는다 (Hallberg and Klevmarken, 2003)

미시차원 이론을 활용한 가사노동에 대한 국내 연구진의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소영·진미정, 2016; 김수정·김은지, 2007; 배호중, 2015; 안미영, 2017; 안미영·최지은, 2020a; 2020b; 오지혜, 2016; Kim, 2013). 최

근 몇몇 연구들이 미시차원 이론을 돌봄노동에 적용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An(2018)은 생활시간조사 2014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상대적 소득이 남성과 여성 모두의 돌봄노동 분담률에 주요한 영향 미침을 보고하고 있다. 안미영·최지은(2020a)은 2014년 생활시간조사를 사용하여 20-54세 학령기이하 자녀가 한명 이상 있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돌봄노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아버지의 진보적 성역할 인식은 돌봄노동 시간과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다. 경제적 협상력은 10세 이상 자녀를 둔 아버지의 돌봄노동 시간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돌봄노동에 대한 기존 연구의 주요 한계는 첫째 돌봄노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인을 포괄적으로 통제하지 않은 점도 한계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심신미약으로 일을 하지 않는 경우는 분석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고 여성이나 남성의 돌봄노동에 미치는 배우자의 인구사회경제학적 변인들이 포괄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둘째 기존 미시차원의 이론을 적실하고 포괄적으로 조작화하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예를 들어 젠더전시를 검증하기 위해 경제적 의존성과 제공향 그리고 경제적 의존성과 성역할인식의 상호작용항을 동시에 포함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강조한다. 첫째 기본소득을 통해 여성의 노동공급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용시간이 변할 것이며, 임금 획득을 통해 경제적 자원력이 달라질 것이며, 성역할 인식에 대한 노출 이론이 제시하듯(Bolzendahl and Myers, 2004) 직장생활을 통해 성역할 인식이 더 진보적으로 변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련의 변화는 여성의 돌봄노동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남성의 돌봄노동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이론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영향은 기본소득이 실제 집행 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야 포착될 수 있다. 물론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여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지만 수많은 가정들이 전제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고 기본소득의 영향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현재까지 무급노동에 대한 연구들이 거의 대부분 경제적 자원력과 젠더전시론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본소득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분석은 관련 논의를 획기적이며 적실하게 확장 할 수 있다. 이는 기본소득은 개인에게 지급되는 현금이기 때문에 개인의 절대적 및 상대적 자원력을 즉각적이며 직접적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젠더전시론은 경제적 협상력에 따라 가사노동이 달라지지 않는 점을 주목한다. 따라서 기본소득 지급은 여성이나 남성의 무급노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젠더전시 행태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둘째 절대 및 상대적 자원력 그리고 젠더전시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여

성 집단만 분석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내 다양한 집단의 차이에 주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경제적 의존성, 즉 경제적 협상력의 이론적 타당성을 부정하고 절대적 소득을 바탕으로 한 경제적 자율성을 주장한 Gupta(2007)는 여성 집단만 분석하였다. 이는 경제적 의존성이론을 지지한 Brines(1994)나 Greenstein(2000)가 남성과 여성 모두 분석한 것과 대조적이다. 또한 상당수의 국내 연구들이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허수연·김한성, 2019; 조성은·문숙재, 1998; 이창순, 2014; 주익현, 2020; 장인수, 2020) 비맞벌이 부부와 동시에 비교하지 않는 결과 젠더화된 노동분업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적실하게 증진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절대적 자원, 상대적 자원 그리고 젠더전시이론을 바탕으로 한국 기혼 여성과 남성의 돌봄노동에 기본소득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며 여성 집단 전체, 남성 집단 전체 그리고 여성을 근로 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소득으로 달라지는 여성과 남성의 절대적 소득, 즉 경제적 자율성은 돌봄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기본소득으로 달라지는 여성과 남성의 상대적 소득, 즉 경제적 의존성은 돌봄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기본소득은 여성과 남성의 돌봄노동을 통한 젠더전시적 행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넷째 기본소득은 “모든” 여성의 돌봄노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가?

III. 분석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통계청이 제공하는 생활시간조사자료를 이용한다. 생활시간조사는 1999년 첫 조사 이후 5년마다 10세 이상 한국인의 시간 사용실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가장 최근 조사는 2019년에 실시되었으나 이전 조사와 달리 개인 소득인 0인 사례가 구분되지 않는 한계로 본 연구는 2014년도 자료를 이용하기로 한다. 첫째 경제적 자율성과 의존성에 대한 기존 이론을 충분히 반영하여 조작화 하기 위해 개인 소득 0이 구분되어 수집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남편과 아내 모두 소득이 0인 경우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경제적 의존성은 없음(값 0)이 된다. 기본소득이 제공되면 부부가 모두 동일한 금액의 소득이 있지만 경제적 의존성은 여전히 없음(0)이다. 즉 기본소득 제공으로 개인의

절대적 소득은 증가하고 상대적 소득력은 변화가 없음을 의미하여 부부 모두 소득이 0인 경우와 다르다. 2014년 조사는 층화 2단계 집락추출법을 사용하여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 중 800개를 추출하고 조사구 마다 15가구를 표본 가구로 선정한다. 최종적으로 11,986가구의 26,988명이 조사에 참여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가구마다 수집한 시간 사용 요일이 다른데 표본가구의 약 40%는 평일 이틀, 약 40%는 평일 하루와 주말 하루, 나머지 약 20%는 주말의 시간사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

본 연구는 20세 이상 64세 이하 배우자가 있는 남성과 여성 두 집단을 분석 대상으로 정한다. 남성과 여성의 만나이 기준으로 20세 이상 64세 이하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 집단의 사이즈가 다르다. 가구주이거나 배우자 이면서 같이 살고 있는 사례만 분석대상에 포함하였으며 임신중이거나 은퇴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결혼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석에 포함된 사례는 여성 3,483명, 남성 3,323명이다.

2. 측정도구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돌봄노동은 가족에 대한 돌봄 중 만 10세 미만과 만 10세 이상의 자녀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여성가족패널이나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한국노동패널과 달리 생활시간조사는 주 행동과 돌봄행동으로 구분하여 수집하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음악을 켜 놓고 아이 식사를 먹이는 경우 응답자는 무엇이 주행동이고 동시행동인지 결정하여 응답할 수 있다. 따라서 생활시간조사는 다른 조사에 비해 더 포괄적이며 밀도 있는 돌봄노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와 마찬가지로(안미영·최지은, 2020a) 돌봄노동을 밀도 있게 반영하기 위해 동시행동을 종속변수에 포함하였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돌보기, 아이 가르치기, 책읽어주기 및 놀아주기, 간호하기 그리고 기타 돌보기에 대한 시간 사용 정보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여성의 경우 11.9%가 10분 이상 동시행동으로 돌봄에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의 경우 5.2%가 돌봄 관련 행동을 동시행동으로 보고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생활시간 조사는 모든 응답자의 주중 및 주말 사용시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주중과 주말의 돌봄 노동시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돌봄노동 평균치에 대한 독립변수의 영향을 추정할 때 이를

어떻게 적용할지에 관한 문제는 중요한 이슈이다. 기존 연구는 주로 세 가지 정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첫째 주중과 주말로 구분하여 분석하거나 (김진욱·권진, 2017), 주중과 주말 시간을 구분하지 않고 분석하되 주중 vs 주말 변인으로 통제하기도 한다 (안미영, 2017; 은기수, 2019; 손문금, 2005). 세 번째 방법은 일주일 기준 하루 평균 돌봄노동시간을 산출하여 분석하는 것이다(Yoon 2010; 안미영·최지은, 2020a: 2020b). 본 연구는 세 번째 방법을 활용하여 여성과 남성의 하루 평균 돌봄노동 시간을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주말 시간 사용은 주중과 의미 있게 다르기 때문에 주중 2일을 기준으로 하여 응답 요일을 통제하기로 한다.

2) 독립변수

본 연구는 주로 가사노동을 중심으로 구축된 미시차원의 이론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조작화 하였다. 먼저 가용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주행동과 동시행동으로 보고된 일 관련 활동에 할애한 시간 정보를 가지고 근로시간을 측정하기로 한다. 일 관련 행동에는 주업, 부업, 농림어업 무급가족 일, 농림어업 외 무급가족일, 자가소비를 위한 농림어업, 일 중 휴식, 일 관련 연구 그리고 기타 일 관련 행동을 포함하고 구직활동에 할애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기로 한다.

경제적 자율성과 의존성은 생활시간조사가 제공하는 개인 소득 정보를 활용하여 측정하기로 한다. 생활시간조사는 개인 소득 정보를 구간으로 수집하고 있어 그 한계로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 여성과 남성의 가사 및 돌봄 노동에 관한 이해 구축에 생활시간조사가 빈번하게 활용되었다는 점은 연구목적을 달성하는데 생활시간조사의 소득자료 수집 방법이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것은 구간으로 수집된 소득자료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이다. 생활시간조사는 월평균 소득 “없음” (1로 코딩)부터 50만원 단위로 증가하여 “500만 원 이상”까지 12개의 범주로 수집되었다. 본 연구는 경제적 자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각 범주에 0부터 11의 값을 부여 하였다.

경제적 의존은 앞서 언급한 Sørensen and McLanahan(1987)의 경제적 의존성(Economic dependency) 계산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경제적 의존성은 -1에서 1의 값을 갖게 되는데 0이면 부부간 경제적 의존성이 없음을 의미하고, 여성의 경제적 의존성 값이 0보다 크면 여성의 소득이 남성보다 높고, 0보다 적으면 남성이 소득이 높은 경우를 의미한다. 반면 남성의 경제적

의존성 값이 0보다 크면 남성의 소득이 여성보다 높고 0보다 적으면 그 반대의 경우를 의미한다. 기본소득은 무소득 부부의 소득에 대한 접근을 증진한다. 따라서 여성과 남성의 소득이 0인 가구도 분석에 포함하기로 한다. 성역할 인식은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에 동의 정도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측정하기로 한다. 응답범주는 1)적극 찬성 2)찬성 3)반대 4)적극 반대로 값이 클수록 진보적인 인식으로 간주한다. 젠더전시적 행태를 확인하기 위해 Brines(1994)와 같이 경제적 의존성과 제공향을 투입하였다. 또한 Kan(2008)의 주장을 반영하여, 성역할 인식에 따라 경제적 의존성의 영향이 달라지는지 확인하기 위해 경제적 의존성과 성역할 인식의 상호작용항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3) 통제변수

여성과 남성의 만 나이를 투입하고 연령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제공향을 투입하였다. 교육수준은 교육정도와 수학여부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안 받았음 (0), 초등학교(1), 중학교(2), 고등학교(3) 4년제 미만 대학교(4), 4년제 이상 대학교(5), 대학원 석사과정(6), 대학원 박사과정(7)으로 초등학교 이상 졸업한 경우만 해당 교육수준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기로 한다. 여성과 남성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를 분석에 투입하였는데 응답범주는 1)매우 좋음, 2)좋은 편, 3)보통, 4)나쁜 편, 5)매우 나쁨 이다.

가구 수준 변인으로 가구의 인구학적 특성, 가구소득, 거주지와 주택소유를 포함하였다. 인구학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첫째 10세 미만 가구원수를 투입하였다. 10세 미만의 경우 신체적 돌보기, 아이 가르치기, 책읽어주기 및 놀아주기, 간호하기 그리고 기타 돌보기 등의 돌봄 노동이 집중되는 연령대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취학자녀 여부와 돌봄이 필요한 성인 가구원의 여부는 돌봄 노동 시간에 주요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투입하였다. 기본소득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가구별 가구원수 변인을 생성하였다. 가구별 가구원수 정보는 중요한데 모든 개인에게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이 제공된다면 월 가구소득은 전체가구원수*기본소득 30만원 만큼 상승하기 때문이다. 생활시간조사에 응답한 가구원은 모두 10세 이상이다. 가구별 총 가구원수는 10세 미만 가구원에 대한 정보와 결합하여 생성하였다. 생성한 총 가구원수에서 10세 미만 가구원수를 제외한 10세 이상 가구원수 변인을 포함하였다. 마지막 가구수준 변인으로 월 평균 가구소득을 분석에 투입하였다. 생활시간조사는 100만원 미만(1로 코딩됨)을 시작으로 100만원 구간으로 700만원 이상 (8로 코딩됨)까지 구분하여 지난 1년간 월평균 총 가구 소득을 수집한다. 마지막으로 거주지역은 서울, 인

천, 경기 (1)과 기타 지역(0)으로 구분하고 주택소유 여부를 분석에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응답 요일을 주중 2일 (0), 주중 1일 주말 1일 (1), 주말 2일 (2)로 구분하여 분석에 투입하였다.

〈표 1〉은 본 연구의 분석모형에 투입되는 종속, 독립 및 통제 변수의 요약 통계치를 나타낸 것이다. 관측된 하루 평균 돌봄노동 시간은 여성의 경우 83.17분 남성은 23.41분으로 거의 4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각각 150분, 330분 정도이고 여성의 한 달 평균 소득은 2.03으로 2(50만원~100만원 미만)정도 수준인 반면 남성의 소득은 6.48로 6(250만원~300만원 미만)과 7(300만원~350만원 미만) 수준으로 남성과 여성의 심각한 소득 차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결과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의존성은 -0.58로 상당히 경제적으로 의존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성역할 인식은 2.95로 남성의 2.54보다 더 진보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본소득을 다음과 같이 적용하였다. 먼저 분석에 사용된 기본소득은 월 30만원과 월 50만원이다. 월 30만원은 2020년 조정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기본소득법안이 제시하는 금액으로 해당 안은 2022년부터 최소 월 30만원, 2029년 최소 월 50만원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월 30만원은 기본소득 효과에 대한 최근 연구에 반영되었고(이지은·김교성, 2021), 앞서 언급했듯이 LAB2050에서 제시한 최저생계비 중 가장 낮은 금액이기도 하며,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 30만원과 연계해서 기본소득 규모로 자주 논의되는 금액이기도 하다. 월 50만원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에 포함된 금액이기도 하고 박수범 외(2018: 108)이 사용한 모든 국민 중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정확히 501,632원)를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생활시간조사의 개인 월소득은 50만원 증가에 따라 1씩 증가한다. 따라서 월 30만원은 0.6 증가, 50만원은 1증가를 의미한다. 가구소득의 경우 전체가구원수*기본소득(30만원 또는 50만원)으로 월 소득이 증가한다. 생활시간조사의 가구소득은 100만원 증가에 따라 1씩 증가하는 것을 반영하여 기본소득 30만원과 50만원 지급 시 가구소득을 계산하였다. 〈표 1〉에 따르면 기본소득은 월 30만원 지급은 여성의 소득을 2.03에서 2.63으로, 월 50만원 기본소득은 3.03 (3: 100만원~150만원 미만)으로 증가시킨다. 월 30만원 기본소득은 남성의 소득을 6.48에서 7.08로, 50만원 기본소득은 7.48로 증가시킨다. 즉 기본소득은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 자율성을 증진한다. 또한 기본소득은 여성의 경제적 의존성을 증진시키는(이나영·김교성, 2018) 동시에 남성의 경제적 독립성을 줄인다. 기본소득 30만원은 여성의 경제적 의존성을 -0.58에서

-0.48로, 50만원 기본소득은 -0.44로 감소시켜 이론적으로 여성의 경제적 협상력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남성의 경제적 의존성 값이 줄어, 즉 경제적 독립성 정도가 감소하는데 30만원과 50만원 기본소득은 남성의 경제적 독립성 정도를 각각 0.48, 0.44로 감소시킨다. 정리하면 기본소득은 여성과 남성 모두의 경제적 자율성을 증진하는 젠더중립적 효과와 함께 부부 중 경제적으로 의존적 위치에 있는 사람 (주로 아내)의 경제적 협상력을 증진하고 경제적으로 더 독립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 (주로 남편)의 경제적 협상력을 감소시키는 젠더화된 효과를 동시에 지니고 있다.

통제 변인 중 주요 변인들의 통계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3.51로 고등학교 (3)과 4년제 미만 대학교 (4)의 중간 정도이며 남성의 경우 3.82로 동일한 수준이나 여성보다 좀 더 교육수준이 높다고 하겠다.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을 보면 여성과 남성 각각 2.72와 2.62로 좋은 편(2)와 보통(3) 사이로 나타났다. 여성의 34.6%와 남성의 36%가 미취학 가구원이 있었고 여성과 남성의 1% 정도가 돌봄이 필요한 성인 가구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30.9%, 남성의 31.4%가 서울/인천/경기에 거주하고 여성의 64.7%, 남성의 63.5%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은 여성은 4.5, 남성은 4.58로 4(300~400만원미만)와 5(400~500만원 미만) 사이로 나타났다. 기본소득 30만원은 여성과 남성의 가구소득을 각각 5.42와 5.51로 증가시키고 기본소득 50만원은 6.04, 6.14로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여성 (N= 3,483)		남성 (N=3,323)	
		평균/% (표준편차)	범위	평균/% (표준편차)	범위
종속 변수 독립 변수	하루 평균 돌봄 노동 시간 (분)	83.71(126.32)	0-725	23.41(47.59)	0-400
	근로시간 (분)	149.06(205.47)	0-920	328.76(229.67)	0-1090
	월평균 소득				
	기본소득 제공 전	2.03(2.4)	0-11	6.48(2.64)	0-11
	월 30만원 기본소득	2.63(2.4)	0.6-11.6	7.08(2.64)	0.6-11.6
	월 50만원 기본소득	3.03(2.4)	1-12	7.48(2.64)	1-12
	경제적 의존성				
	기본소득 제공 전	-0.58(0.46)	-1~1	0.57(0.46)	-1~1
	월 30만원 기본소득	-0.48(0.38)	-0.9~0.9	0.48(0.38)	-0.9~0.9
	월 50만원 기본소득	-0.44(0.35)	-0.85~0.85	0.44(0.35)	-0.85~0.85

		여성 (N= 3,483)		남성 (N=3,323)	
		평균/% (표준편차)	범위	평균/% (표준편차)	범위
통제 변수	경제적 의존성2				
	기본소득 제공 전	0.53(0.44)	0-1	0.53(0.45)	0-1
	월 30만원 기본소득	0.38(0.32)	0-0.81	0.38(0.32)	0-0.81
	월 50만원 기본소득	0.31(0.25)	0-0.72	0.32(0.27)	0-0.72
	성역할 인식	2.95(0.82)	1-4	2.54(0.81)	1-4
	연령	43.11(10.4)	20-64	44.95(10.13)	21-64
	교육수준	3.51(1.27)	0-7	3.82(1.26)	0-7
	건강상태	2.72(0.76)	1-5	2.62(0.76)	1-5
	배우자 연령	45.98(11.00)	17-80	42.27(9.86)	20-66
	배우자 교육수준	3.75(1.3)	0-7	3.59(1.21)	0-7
	배우자 근로시간	325.86(229.84)	0-1090	147.86(205.55)	0-920
	배우자 월평균 소득	6.34(2.69)	0-11	2.06(2.42)	0-11
	배우자 성역할 인식	2.54(0.81)	1-4	2.96(0.82)	1-4
	배우자 건강상태	2.63(0.76)	1-5	2.72(0.76)	1-5
	10세 미만 가구원수	0.66(0.88)	0-4	0.69(0.88)	0-4
	10세 이상 가구원수	2.42(0.83)	2-6	2.43(0.84)	2-6
	가구소득				
	기본소득 제공 이전	4.5(1.81)	1-8	4.58(1.77)	1-8
	기본소득 월 30만원	5.42(1.89)	1.6-9.8	5.51(1.85)	1.6-9.8
	기본소득 월 50만원	6.04(1.97)	2-11	6.14(1.92)	2-11
	미취학 가구원 여부 (%)	34.6		36	
	돌봄이 필요한 성인 가구원 여부(%)	1.0		1.0	
	거주지역 (서울, 인천, 경기) (%)	30.9		31.4	
	주택 소유 여부 (%)	64.7		63.5	
	응답요일 (%)				
	평일 2일	40.5		40.4	
	평일 1일 주말 1일	39.3		39.1	
	주말 2일	20.2		20.5	

3. 분석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STATA 14를 사용하여 최소자승법(OLS)이 아닌 토빗(Tobit)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토빗분석은 중도절단회귀모형(Censored regression

model)으로도 불리는데 종속변수에 오른쪽이나 왼쪽에 중도절단(Censoring)이 있을 경우 사용된다. 본 연구의 경우 남성의 하루 평균 돌봄노동시간이 0인 사례는 전체의 71.3%, 여성의 경우 57.3%를 차지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왼쪽 중도절단 0을 설정하여 토빗 분석을 실시한다. 토빗분석 결과에 대한 해석은 선형회귀분석과 비슷하지만 종속변수가 아닌 잠재변수(Uncensored latent variable)에 대한 것임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오차항의 이분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건 표준오차(Robust standard error)를 보고한다.

기본소득이 제공되지 않은 상태를 모델 1로 구축하고 월 30만원의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경우를 모델 2, 월 50만원의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경우를 모델 3으로 구축하기로 한다. 먼저 전체 기혼여성과 기혼 남성 전체를 대상으로 토빗분석을 실시한다. 이후 여성을 근로여부 기준으로 집단별 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IV. 분석 결과

〈표 2〉는 전체 기혼 여성과 기혼 남성의 돌봄노동 시간에 대한 토빗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독립변수 중 여성의 근로시간 1분 증가는 여성의 예측된 돌봄노동 시간 0.2분 감소와 관련되어 있는데 이는 가용시간론을 지지하는 결과라 볼 수 있다. 경제적 자율성(절대적 소득)은 여성의 돌봄노동 시간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의존성 역시 관계가 없는 반면 경제적 의존성 제곱항이 양의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매우 의존적이거나 또는 매우 독립적인 여성이 덜 의존적이거나 독립적인 여성에 비해 돌봄노동에 시간을 더 또는 덜 할애 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성역할 인식도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성역할 인식 값 1 증가는 예측된 돌봄노동 시간 5.78분 상승과 관련이 있다. 이는 가사노동에 대한 성역할인식론의 설명과 달리 진보적인 성역할 인식을 지닌 여성이 더 많은 시간을 돌봄노동에 할애함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20-64세 한국 기혼여성의 돌봄노동 시간에 미치는 경제적 협상력의 영향은 성역할 인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통제변인 중 먼저 연령은 양의 관계, 연령제곱항은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교육수준 역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교육수준 값 1증가는 예측된 돌봄노동 시간 10.74분 상승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와 호주나 미국과 비슷하게 한국 기혼여성은 학력이 높을수록 자녀 돌봄

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을 시사한다. 여성 스스로 인식하는 건강상태 값 1증가는 예측된 돌봄노동 시간 6.22분 상승과 관련되어 있다. 남편의 교육수준과 근로시간 값 1증가는 각각 예측된 돌봄노동 시간 3.74분, 0.06분 상승과 관련 있다. 예측된 여성의 돌봄노동 시간은 미취학 가구원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157.92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미만 가구원 수 1명은 돌봄노동시간 57.76분 상승과 관련 있고 10세 이상 가구원 수 1명은 27.93분 증가와 관련 있다. 주중 1일 주말 1일 시간사용을 보고한 여성의 돌봄노동 시간은 주중 2일 응답한 여성 보다 11.46분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주말 2일 보고한 여성은 주중 2일 보고한 여성보다 43.04분 적었다.

기본소득의 효과를 분석한 모델 2와 모델 3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본소득 월 30만원을 고려한 모델 2에서 나타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모델 1과 다르지 않다. 반면 기본소득 월 50만원을 고려한 모델 3에서는 모델 1에서 나타난 영향변수 중 경제적 의존성 제곱항의 유의성이 사라진다. 이 결과는 기본소득 월 50만원은 여성으로 하여금 젠더전시적 행태를 더 이상 하지 않게 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음을 함의하나 구체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추후 그림으로 도식화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20-64세 기혼남성의 돌봄노동 시간에 대한 토빗분석 결과 중 모델 1을 보면 독립변수 중 근로시간과 경제적 의존성 제곱항 그리고 성역할 인식이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어 기혼여성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근로시간 1분 증가는 예측된 돌봄노동 시간 0.07분 감소와 관련 있고, 성역할 인식이 1만큼 진보적인 것은 돌봄노동 시간 3.21분 상승과 관련 있었다. 경제적 의존성 항은 관계 없으나 제곱항의 양의 유의미한 관계는 경제적으로 매우 높거나 또는 낮은 협상력을 지닌 남성이 다른 남성들에 비해 더 많은 시간을 돌봄노동에 할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성과 마찬가지로 남성의 경제적 협상력의 영향은 남성 스스로의 성역할 인식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변인 중 연령의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는데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연령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남성의 돌봄노동 시간은 교육수준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의 연령 1세 증가는 남성의 예측된 돌봄노동 1.25분 감소와, 아내의 교육수준 1증가는 남성의 돌봄노동 5.73분 증가와, 아내의 건강상태 1 증가(안 좋음 방향)는 남성의 돌봄노동 시간 5.12분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수준의 변인 중 미취학 가구원이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비해 92.17분 예측된 돌봄노동 시간이 많았고 10세 미만 가구원 수 1명 증가 역시 돌봄노동 시간 23.71분 증가와 연관이 있다. 여성과 달리

주중 1일 주말 1일 시간사용을 보고한 남성은 주중 2일 시간사용을 응답한 남성보다 예측된 돌봄노동 시간이 18.24분 더 많았고, 주말 2일 응답한 남성은 주중 2일 응답한 남성보다 23.9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소득의 영향을 분석한 모델 2와 3의 결과를 보면 여성의 경우와 달리 모델 1에 나타난 유의미한 영향관계를 보인 변인들에 변화가 포착되지 않는다. 중요한 점은 모델 1에서 나타난 경제적 의존성 제곱항의 영향관계가 기본소득 투입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앞서 기술 통계치에서 언급했듯이 기본소득은 여성과 남성의 소득 상승을 통한 경제적 자율성을 모두 증진하지만 경제적 의존성의 값의 변화는 여성에게는 더 독립성 확보의 의미이고 남성에게는 독립성 약화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경제적 자율성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의존성 값의 하락은 남성들로 하여금 경제적 협상력을 바탕으로 돌봄노동에 시간을 덜 할애하지 않게 하는 것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2〉 전체 기혼 여성과 남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토빗회귀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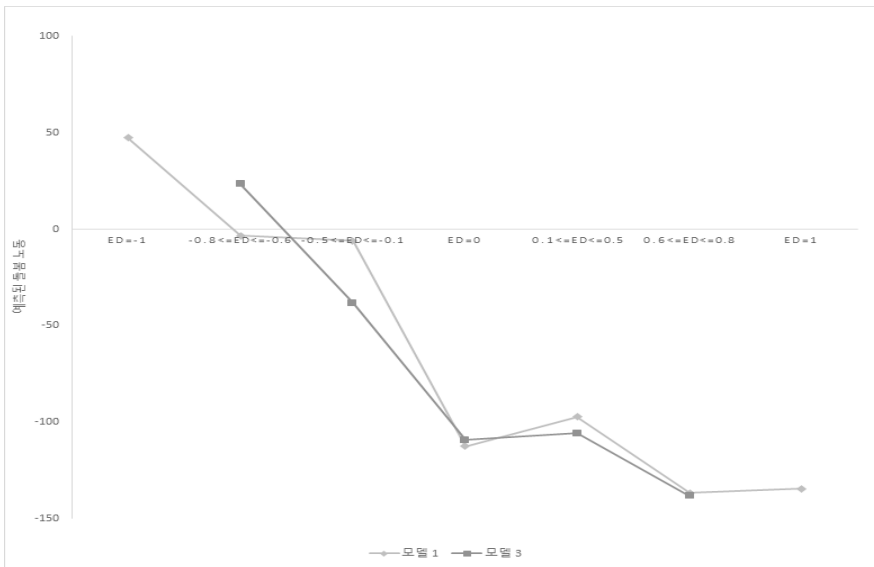
	여성			남성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연령	10.425*** (2.157)	10.354*** (2.155)	10.341*** (2.153)	7.460*** (1.417)	7.407*** (1.419)	7.396*** (1.419)
연령 ²	-0.175*** (0.026)	-0.174*** (0.026)	-0.174*** (0.026)	-0.092*** (0.016)	-0.092*** (0.017)	-0.091*** (0.017)
교육수준	10.737*** (2.086)	10.750*** (2.086)	10.768*** (2.086)	1.097 (1.358)	1.122 (1.356)	1.139 (1.356)
근로시간	-0.203*** (0.012)	-0.204*** (0.012)	-0.204*** (0.012)	-0.069*** (0.006)	-0.069*** (0.006)	-0.069*** (0.006)
소득	-0.528 (1.804)	-0.304 (2.056)	-0.276 (2.219)	-0.996 (1.327)	-1.160 (1.445)	-1.217 (1.530)
경제적 의존성	3.141 (13.681)	-0.105 (18.408)	-2.543 (21.7)	-10.188 (8.564)	-13.343 (11.824)	-15.106 (14.139)
경제적 의존성 ²	21.915* (9.443)	28.339* (13.448)	31.469 (16.128)	20.448** (6.058)	28.823** (8.541)	34.068** (10.203)
성역할 인식	5.779* (2.318)	5.797* (2.329)	5.831* (2.328)	3.211* (1.391)	3.194* (1.390)	3.181* (1.388)
성역할 인식*경제적 의존성	-6.083 (5.099)	-5.930 (6.020)	-5.826 (6.602)	0.284 (3.003)	0.703 (3.533)	1.062 (3.878)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6.223** (2.284)	6.240** (2.284)	6.244** (2.284)	-3.421* (1.667)	-3.424* (1.667)	-3.422* (1.667)
배우자 연령	-0.807 (0.535)	-0.794 (0.535)	-0.79 (0.535)	-1.246** (0.387)	-1.250** (0.388)	-1.250** (0.388)
배우자 교육수준	3.744* (1.821)	3.791* (1.821)	3.818* (1.821)	5.728** (1.421)	5.739** (1.420)	5.75*** (1.42)

	여성			남성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1	모델 2	모델 3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배우자 근로시간	0.061*** (0.009)	0.061*** (0.009)	0.061*** (0.009)	0.011 (0.008)	0.011 (0.008)	0.010 (0.008)
배우자 소득	0.908 (1.841)	0.324 (2.015)	0.069 (2.139)	1.363 (1.281)	1.328 (1.444)	1.268 (1.550)
배우자 성역할 인식	-3.494 (2.113)	-3.492 (2.111)	-3.498 (2.111)	-0.640 (1.559)	-0.634 (1.559)	-0.638 (1.560)
배우자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0.642 (2.255)	-0.630 (2.256)	-0.62 (2.256)	5.119** (1.699)	5.104** (1.699)	5.095** (1.699)
미취학 가구원 여부	157.923*** (5.489)	158.051*** (5.495)	158.143*** (5.498)	92.166*** (4.113)	92.278*** (4.119)	92.351*** (4.122)
10세 미만 가구원수	57.756*** (2.829)	59.555*** (2.975)	60.77*** (3.19)	23.710*** (2.067)	24.219*** (2.204)	24.612*** (2.379)
돌봄 필요 성인 가구원수	19.313 (19.477)	19.365 (19.414)	19.39 (19.381)	3.673 (19.225)	4.051 (19.131)	4.269 (19.094)
10세 이상 가구원수	27.927*** (2.352)	29.753*** (2.677)	30.977*** (3.006)	2.954 (1.986)	3.502 (2.244)	3.911 (2.488)
서울/인천/경기	6.407 (3.490)	6.388 (3.489)	6.371 (3.489)	-1.084 (2.512)	-1.104 (2.513)	-1.123 (2.514)
주택소유	-0.214 (3.480)	-0.312 (3.481)	-0.327 (3.482)	-0.033 (2.412)	-0.131 (2.417)	-0.149 (2.419)
가구소득	-5.923* (2.721)	-6.000* (2.744)	-6.033* (2.754)	-1.301 (1.984)	-1.582 (2.010)	-1.712 (2.023)
주중 2일						
주중 1일 주말 1일	-11.465** (3.806)	-11.557** (3.808)	-11.593** (3.809)	18.240*** (2.653)	18.192*** (2.654)	18.178*** (2.653)
주말 2일	-43.035*** (5.384)	-43.205*** (5.383)	-43.292*** (5.384)	23.898*** (3.755)	23.787*** (3.756)	23.744*** (3.756)
Intercept	-280.315** (44.396)	-277.042** (44.265)	-275.47*** (44.212)	-212.835 (29.501)	-208.998 (29.537)	-207.289 (29.562)
Log pseudolikelihood	-21575.919	-21576.978	-21577.582	-14429.466	-14429.74	-14429.964
Number of obs	6966	6966	6966	6646	6646	6646
Uncensored	3394	3394	3394	2366	2366	2366
Left-censored	3572	3572	3572	4280	4280	4280
Pseudo R^2	0.156***	0.156***	0.156***	0.134***	0.134***	0.134***

*p<0.05, **p<0.01, ***p<0.001

여성과 남성의 경제적의존성 제곱항의 영향을 자세히 파악하기 위해 토빗모형이 예측하는 돌봄노동에 대한 결과를 도식화 하였다. [그림 1]은 여성의 모델 1과 모델 3의 결과를 도식화하고 있다. 기본소득 월 50만원 지급으로 남편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즉 경제적의존성(ED)이 -1 이거나 완전히 독립적인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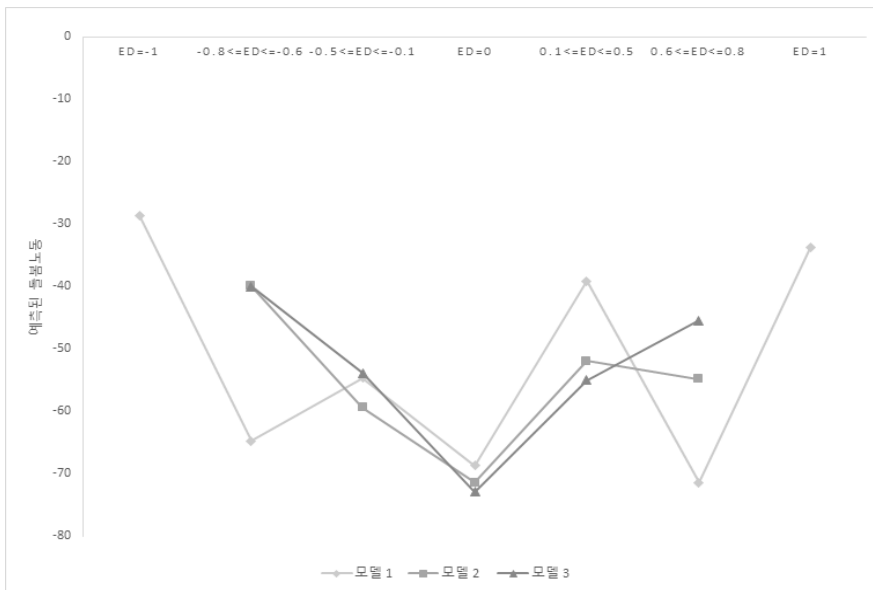
인 사례가 사라지고 ED가 -0.85에서 0.85의 값의 범위를 보이고 있다. 더 중요한 변화는 모델 1에서 경제적 의존도가 -0.5이상 -0.1이하의 경우(전체 여성의 30.1%), 더 의존적인 여성, 즉 경제적 의존도가 -0.8이상 -0.6이하 여성보다(전체 여성의 9.8%) 적은 시간을 가사노동에 할애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젠더전시적 행태가 돌봄노동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모델 3은 두 그룹 간의 돌봄노동이 경제적 의존성과 정의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월 50만원이 지급되는 모델 3에서 경제적 의존성이 -0.5이상 -0.1이하인 여성은 전체에서 32.5%를 차지하는데 해당 여성이 바람직한 돌봄자 역할을 상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젠더전시를 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지할 것은 남편의 소득보다 높아 경제적으로 매우 독립적인 여성, 즉 경제적 의존성이 0.1이상 0.5이하인(모델 1에서 전체 여성의 6.6%, 모델 3에서 전체 여성의 6.2%)인 여성은 경제적 의존성이 0, 즉 남편의 소득과 동일한 여성에 비해 돌봄노동에 시간을 덜 할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경제적 의존성 (Economic Dependency, ED)에 따른 여성의 예측된 돌봄노동

[그림 2]는 남성의 경제적 의존성에 따른 돌봄노동에 대한 모델 1, 2, 3의 토빗 분석 결과에 대한 도식이다. 여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소득 월 50만원으로 남성의 경제적 의존성 값은 최대 0.85, 최소 -0.85로 변화하며 기본

소득 30만원으로 -0.9에서 0.9 범위로 변화한다. 모델 1 결과를 보면 남성의 돌봄노동이 경제적 의존성과 선형관계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경제적 의존성이 -1인 남성(전체 1%)과 1인 남성의(전체 44%) 돌봄노동이 거의 차이가 없다. 즉 경제적 협상력이 높은 남성이 반드시 적은 시간을 돌봄노동에 할애하지 않는다. 모델 2, 3은 남성의 소득이 아내보다 높은 경우(경제적 의존성이 0보다 큰) 의존성이 0인(부부소득 동일) 경우에 비해 돌봄노동에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2] 경제적 의존성 (Economic Dependency, ED)에 따른 남성의 예측된 돌봄노동

〈표 2〉의 결과만 놓고 보면 확실히 기본소득은 여성과 남성의 돌봄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젠더화된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모든 여성에게 유익을 주는 제도인지 불분명하다. 이에 여성 집단을 근로여부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토빗회귀분석을 실시하기로 한다. 〈표 3〉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근로여성과 비근로여성의 돌봄노동 시간에 대한 토빗회귀분석

	근로 여성		비근로여성	
	모델 1	모델 3	모델 1	모델 3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연령	8.543*** (2.191)	8.557*** (2.192)	11.256*** (3.036)	11.173*** (3.032)
연령 ²	-0.138*** (0.025)	-0.138*** (0.025)	-0.185*** (0.037)	-0.184*** (0.037)
교육수준	3.217 (2.102)	3.219 (2.098)	14.630*** (3.004)	14.572*** (3.003)
근로시간	-0.103*** (0.011)	-0.103*** (0.011)	-	-
소득	-0.339 (1.760)	-0.521 (2.187)	1.813 (3.230)	1.188 (3.930)
경제적 의존성	-6.131 (13.399)	-11.726 (22.922)	9.899 (25.247)	22.849 (36.078)
경제적 의존성 ²	17.657* (8.899)	19.332 (16.204)	5.650 (17.047)	15.658 (25.359)
성역할 인식	3.710 (2.456)	3.603 (2.472)	4.937 (3.228)	6.540 (5.894)
경제적 의존성*성역할 인식	-1.096 (6.108)	-1.515 (7.565)	-1.290 (9.247)	4.115 (11.953)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3.106 (2.373)	3.069 (2.377)	10.285** (3.130)	10.304** (3.128)
남편 연령	-0.687 (0.504)	-0.661 (0.503)	-0.636 (0.778)	-0.636 (0.779)
남편 교육수준	3.227 (1.719)	3.294 (1.721)	4.116 (2.647)	4.032 (2.651)
남편 근로시간	0.043*** (0.009)	0.042*** (0.009)	0.058*** (0.012)	0.059*** (0.012)
남편 월 평균 소득	0.763 (1.963)	0.402 (2.319)	-1.226 (2.652)	-0.844 (3.107)
남편 성역할 인식	-3.336 (2.259)	-3.371 (2.258)	-2.817 (2.982)	-2.840 (2.984)
남편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2.745 (2.340)	-2.724 (2.344)	1.818 (3.040)	1.828 (3.043)
미취학 가구원 여부	71.609*** (4.993)	71.705*** (5.009)	212.622*** (8.333)	212.808*** (8.339)
10세 미만 가구원수	65.019*** (3.126)	67.817*** (3.531)	44.905*** (4.003)	45.959*** (4.492)
돌봄 필요 성인 가구원수	15.186 (11.169)	16.272 (10.995)	-2.154 (36.793)	-3.067 (36.574)

	근로 여성		비근로여성	
	모델 1	모델 3	모델 1	모델 3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Coef. (Robust S.E)
10세 이상 가구원수	22.558*** (2.374)	25.240*** (2.978)	21.518*** (3.607)	22.624*** (4.531)
서울/인천/경기	-0.255 (3.458)	-0.480 (3.452)	8.329 (4.980)	8.384 (4.980)
주택 소유	0.775 (3.574)	0.637 (3.574)	2.532 (4.877)	2.471 (4.874)
월 평균 가구소득	-5.750* (2.622)	-5.739* (2.652)	-1.850* (4.070)	-2.232 (4.110)
주중 2일				
주중 1일 주말 1일	-3.125 (3.753)	-3.228 (3.762)	-13.608* (5.473)	-13.616* (5.472)
주말 2일	-17.786** (6.795)	-17.892** (6.818)	-65.741*** (7.266)	-65.833*** (7.263)
Intercept	-191.894*** (43.892)	-189.2648** (43.769)	-320.565*** (64.454)	-320.699*** (65.857)
Log pseudolikelihood	-7524.488	-7526.539	-13680.812	-13680.561
Number of obs	3482	3482	3484	3484
Uncensored	1248	1,248	2,146	2,146
Left-censored	2234	2,234	1,338	1,338
Pseudo R^2	0.18***	0.18***	0.13***	0.13***

*p<0.05, **p<0.01, ***p<0.001

〈표 3〉은 기본소득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인 모델 1과 기본소득 50만원이 지급된 모델 3의 결과를 여성의 근로여부에 따른 집단별로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모델 3에서 경제적 의존성 제공항의 영향 관계는 근로를 하는 여성에서만 사라진다. 반면 모델 1, 즉 기본소득이 반영되지 않는 상태에서 근로를 하지 않는 여성의 돌봄노동 시간은 가용시간, 경제적 자율성, 경제적 의존성, 성역할 인식 그 어느 것과도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돌봄노동은 미취학 가구원 여부, 10세 미만 가구원수, 10세 이상 가구원수, 건강상태에 대한 인식 및 교육수준과 중요한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일하지 않는 기혼 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해 기본소득은 의미 있는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기본소득이 여성과 남성의 돌봄노동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생활시간조사 2014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20-64세 기혼 여성과 남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한국 여성의 돌봄노동은 가용시간론이 제시하듯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지며 성역할 구조화론 즉 젠더전시론이 제시하듯이 경제적 의존성과 돌봄노동 시간은 비선형적 영향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한국 여성이 돌봄노동을 통해 사회적으로 일반화된 돌봄자로서의 역할에 상징적으로 부합하기 위해 나타나는 현상임을 시사한다. 그러나 가사노동에 대한 성역할 인식론의 설명과 달리 성역할이 진보적일수록 더 많은 시간을 돌봄노동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여성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흥미로운 결과는 남성 역시 여성과 마찬가지로 돌봄노동을 통해 젠더전시적 행태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여성과 마찬가지로 진보적인 성역할을 지니고 있는 경우 돌봄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기본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20-64세 한국 기혼 여성과 남성의 돌봄노동은 동일한 요인의 동일한 방향으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여성과 남성 모두 돌봄노동을 통해 젠더전시적 행태를 하고 있다는 점은 돌봄의 중요성에 대한 가치부여가 사회적으로 팽배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결과는 기본소득의 효과인데, 구체적으로 기본소득 월 50만원 지급으로 여성의 돌봄노동에 미치는 경제적 의존성 제곱항의 유의미성이 사라진 반면 남성의 경우는 경제적 의존성 제곱항의 유의미성은 기본소득 지급과 관련 없이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여성의 돌봄노동에 대한 젠더전시적 행태는 기본소득 적용시 사라지는 반면 근로를 하지 않는 여성의 돌봄노동은 기본소득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논의가 학자들의 통찰력을 바탕으로 한 “추정”으로 발전하였다면 본 연구는 돌봄노동의 젠더평등에 기본소득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대한 경험적 근거를 보여준다. 첫째 정부에 의한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이며 동일한 현금급여 지급은 한국사회 여성, 특히 (아직까지도) 일탈적 역할이라고 인식되는 근로를 하는 여성으로 하여금 전통적인 성역할 또는 한국사회에서 가치가 부여된 돌봄자 역할에 부합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돌봄노동을 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남성은 기본소득으로 경제적 자율성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돌봄노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셋째 젠더

중립적인 성격을 지닌 기본소득은 중요한 계층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계층화적 성격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남성과 여성의 돌봄노동 차이에는 긍정적일 수 있으나 특정(근로하는) 여성 집단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젠더정의 실현을 위한 기본소득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돌봄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본소득이 가사노동에 미치는 효과 역시 중요한 연구 과제라 판단된다. 또한 여성의 노동공급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기본소득이 전체 기혼여성이나 전체 여성(미혼 등 포함) 특히 근로를 하지 않는 여성에게 노동시장참여를 통해 경제적 자원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는지에 관한 경험적 연구가 중요하다. 젠더정의에 기여하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위해 더 많은 경험적 연구가 요청된다.

참고문헌

- 김교성·이나영(2018). “젠더협곡을 넘어 젠더정의로”. 한국사회복지학. 제70권 제3호. 7-33.
- 김혜연(2014). “기본소득 제안이 여성의 경제적 상태에 미치는 효과 분석”. 사회 복지정책. 제41권 제1호. 33-63.
- 김미정(2010). “개인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과 여성”. 민주노총정책연구소 편. 1 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을 뒤집어라. 서울: 매일노동뉴스.
- 김소영·진미정(2016). “부부의 가사노동시간 변화: 2004년-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4권 제3호. 65-84.
- 김수정·김은지(2007). “한국 맞벌이 가구에서 가사노동과 경제적 의존의 관계: 교환 혹은 젠더보상?”. 한국사회학. 제41권 제4호. 147-174.
- 김진욱·권진(2017). “한국 기혼남성의 무급노동 시간에 대한 연구: 생활시간조사 1999년~2014년 데이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55권. 181-215.
- 김필현(2020). 기본소득제도 쟁점과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2020-6. TIP. vol 17.
- 박이은실(2013). “성체제와 기본소득”. 마르크스주의연구. 제10권 제2호. 43-65.
- _____(2014a). “페미니스트 기본소득 논의의 지평확장을 위하여 고용, 노동중심 논의에서성적 주체성 실현 문제를 포함한 논의로”. 페미니즘연구. 제14권 제1호. 3-34.
- _____(2014b). “기본소득, 성해방으로 가는 기본 열쇠”. 여성이론. 제31권. 28-76.
- 박수범·조선주·김해람·윤연숙·신동연(2018). 기본소득에 대한 성인지적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보고서 1.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배호중(2015). “맞벌이 가구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홀벌이 가구 남편과 비교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31권 제4호. 151-181.
- 성은미(2002). “새로운 사회적 권리로서 기본소득(basic income): 불안정노동과 사회복지”. 사회복지와 노동. 제5권. 41-61.
- 손문금(2005). “맞벌이 부부의 무급노동분담에 대한 실증적 연구-생활시간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제5권. 239-287.
- 조성은·문숙재 (1998). “기혼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 유형에 관한 사례 연구: 맞벌이 부부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128권. 35-47.

- 주익현 (2020). “유급노동 시간대 비동기화가 맞벌이 부부의 가사분업에 미치는 효과”.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제24권 제3호. 19-33.
- 장인수 (2020). “한국 성별 가사노동시간 배분 양상 변화에 대한 실증분석: 2007, 2016년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보건사회연구*. 제40권 제2호. 446-476.
- 안미영(2017). “고령화와 젠더불평등: 무급노동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93권 제2호. 7-24.
- 안미영·최지은(2020a). “한국 아버지의 자녀 돌봄 시간: 자녀 연령대에 따른 경제적 의존성과 성역할 인식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지*. 제25권 제2호. 83-103.
- _____(2020b). “젠더 전사인가? 한국의 미취학 자녀를 둔 기혼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량과 분담”. *여성경제연구*. 제16권 제4호. 19-42.
- 안숙영(2020). “젠더의 렌즈로 본 기본소득: 가능성과 한계”. *한국여성학*. 제36권 제2호. 441-74.
- 오지혜(2016). “한국 여성의 가사노동에 관한 상대소득 및 절대소득 효과-교환이론과 젠더보상이론을 넘어서”. *가족과 문화*. 제28권 제1호. 233-270.
- 윤자영(2016). “돌봄노동과 기본소득 모형”. *여성학논집*. 제33권. 3-29.
- _____(2017). 돌봄노동의 분배정의를 위한 기본소득[전자자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_____(2018). “돌봄불이익과 기본소득”.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2호. 31-55.
- 윤자영·이숙진·최성애(2010). “기본소득과 성평등”. *사회권과 돌봄·나눔의 공동*. 제주인권회의 발표문. 제주, 한화리조트. 2010. 8. 25-27.
- 윤연숙(2012). “성평등 전략으로써 기본소득의 함의에 관한 연구”. *여성학논집*. 제29권 제1호. 185-214.
- 이승주(2017).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한 기본소득 도입의 효과분석 : 소득 재분배와 노동 공급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2020). “기본소득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한부모 여성을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제29권 제4호. 199-232.
- 이주희(2012).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을 위한 고용과 복지의 재구조화: 월스톤크래프트 딜레마의 극복을 위한 대안”. *한국여성학*. 제28권 제3호. 35-62.
- 이지은·김수연(2020). 기본소득과 젠더정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쟁점토론 4. 기본소득과 젠더 발제문 수정본 (2020.09.15.)
- 이지은·김교성(2021). “기본소득과 재량시간: 성별비교를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제37권 제1호. 119-150.

- 은기수 (2019). “한국 중학생의 성별 학습시간과 부모의 교육수준 2014년 생활시간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국연구학* 제42권 제1호.33-58.
- 이창순 (2014).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40권 제2호. 29-54.
- 장지연(2011). “돌봄노동의 사회화 유형과 여성노동권”. *페미니즘연구*. 제11권 제2호. 1-47
- 허수연·김한성 (2019). “맞벌이 부부의 가사노동 시간과 분담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64호. 5-29.
- An, M. Y.(2018). Gender Division of Childcare and the Social Investment Approach to Welfare State in South Korea.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9, 129-138.
- Anarte, L. F.(2020). From Wollstonecraft’s Dilemma to Nancy Fraser’s theory of Gender Justice: A Proposal for the Analysis of Gender Equality Policies. *UNIO - EU Law Journal*, 6(1), 12-30.
- Bergen, E.(1991). The Economic Context of Labor Location: Implications for Gender Stratitfic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12, 140-157.
- Blood, R. O. and Wolfe, D. M.(1960). *Husbands and Wives: The Dynamics of Married Living*. Glencoe, IL: Free Press of Glencoe.
- Bolzendahl, C. I. and Myers, D. J. (2004). Feminist Attitudes and Support for Gender Equality: Opinion Change in Women and Men, 1974-1998. *Social Forces*, 83: 759-789.
- Brines, J.(1994). Economic Dependency,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at Ho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0(3), 652-688.
- Ciccia, R. and Bleijenbergh, I.(2014). After the Male Breadwinner Model? Childcare Services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European Countries. *Social Politics*, 21(1), 50-79.
- Coverman, S.(1985). Explaining Husbands’ Participation in Domestic Labor. *Sociological Quarterly*. 26, 81-97.
- Craig, L.(2007). How Employed Mothers in Australia Find Time for both Market Work and Childcare.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 28, 69-87.

- Craig, L. and Mullan, K.(2011). How Mothers and Fathers Share Childcare: A Cross-national Time-use Comparis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6(6), 834-61.
- Elgarte, J.(2008). Basic Income and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ur. *Basic Income Studies*, 3(3), 1-8.
- Esping Andersen, G. (1990)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 Fraser, N.(1994). After the Family Wage: Gender Equity and the Welfare State. *Political Theory*, 22(4), 591-618.
- Fraser, N.(1996). Redistribución y reconocimiento: Hacia una visión integrada de justicia del género. *Revista Internacional de Filosofía Política*, No. 8 (1996), 18-40.
- Gauthier, A H. and DeGusti, B.(2012). The Time Allocation to Children by Parents in Europe. *International Sociology*, 27(6), 827-845.
- Gheaus, A.(2008). Basic Income, Gender Justice and the Costs of Gender-symmetrical Lifestyles. *Basic Income Studies*, 3(3), 1-8.
- Greenstein, T. N. (2000). Economic Dependence, Gender, and the Division of Labor in the Home: A Replication and Exten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2): 322-335.
- Gupta, S.(2006). Her Money, Her Time: Women's Earnings and their Housework Hours. *Social Science Research*. 35, 975-999.
- _____(2007). Autonomy, Dependence, or Display? The Relationship Between Married Women's Earnings and Hous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9, 399-417.
- Hallberg, D. and Klevmarken, A.(2003). Time for Children: A Study of Parents' Time Allocatio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6(2), 205-226.
- Kan, M. Y.(2008). Does Gender Trump Money? Housework Hours of Husbands and Wives in Britain. *Work, Employment and Society*, 22(1), 45-66.
- Kim, Y-M.(2013). Dependence on Family Ties and Household Division on labour in Korea, Japan and Taiwan.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9(2), 7-35.
- Lewis, J.(1992). Gender and Development of Welfare Regime. *European*

- Journal of Social Policy*, 2(3), 159-173.
- Lundberg, S. and Pollak, R. A.(1993). Separate Sphere Bargaining and the Marriage Marke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1(6), 988-1010.
- _____(1996). Bargaining and Distribution in Marriag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10(4), 139-158.
- Molyneux, M. (2009). *Conditional Cash Transfers: A Pathway to Women's Empowerment?* Pathways Brief. Pathways Brief of Women's Empowerment Number 5.
- O'Reilly, J. (2008). Can a Basic Income Lead to a More Gender Equal Society? *Basic Income Studies*, 3(3), 1-7.
- O'Connor, J. S.(1993). Gender, Class and Citizenship in the Comparative Analysis of Welfare State Regime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Issues.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44(3), 501-518.
- Robeyns, I.(2001). Will a Basic Income do Justice to Women? *Analyse*, 23(1), 88-105.
- Sainsbury, D.(1996). *Gender, Equality, and Welfare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ørensen, A. and McLanahan, S.(1987). Married Women's Economic Dependency 1940-1980.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3, 659-687.
- Standing, G. (1992). The Need for a New Social Consensus. In Van Parijs, P. (ed.). *Arguing for Basic Income: Ethical Foundations for a Radical Reform*. London: Verso.
- Van Parijs, P. (1992). Competing Justifications of Basic Income. In Van Parijs, P(ed.) *Arguing for Basic Income: Ethical Foundations for a Radical Reform*. New York: Verso.
- _____(2004). Basic Income: A Simple and Powerful Idea for the Twenty-first Century. *Politics & Society*, 32(1), 7-39.
- Wollstonecraft, M.(1792). *A Vindication of the Rights of Woman: with Strictures on Political and Moral Subject*. Printed at Boston by Peter Edes for Thomas and Andrews.
- Yoon, J. Y.(2010). Gender Norms, Housework, and Class: A Study of

Korean Time Use Survey.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16(3), 112-138.

Zelleke, A.(2011). Feminist Political Theory and the Argument for an Unconditional Basic Income. *Policy & Politics*, 39(1), 27-42.

Abstract

Basic Income and Care Work : Whose Time Changes and How?

Mi Young An*

This article examines the effects of basic income on care work time spent by married men and women in Korea. We conducted tobit regression analysis on a sample of 3,483 women and 3,323 men drawn from Time Use Survey conducted in 2014. Results show that both men and women's care work is associated with working hours(-), economic dependency squared term(+) and gender-role ideology(+). We found no effects of monthly basic income of 300,000won for women's care work. But with basic income of 500,000won, nonlinear effects of the economic dependency disappears. But such positive change is found among working women only. Men continues to do gender display with 300,000 and 500,000won of basic income. We contend that basic income may benefit working women by enabling them not to do gender display. It would make men do more care work going against their economic power. Thus basic income may have positive effects for between-gender differences. However at the same time it may stratify by making significant within-gender differences among women.

Keywords : Basic income, Gender, Care work

* Professor,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Kookmin University

육아휴직 이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 : 젠더효과와 고용유지를 중심으로 본 심층면접 분석*

양현아**·황정미***·권현지****·전윤정*****·김정혜*****

초 록

한국의 육아휴직은 1987년 도입 이후 제도적 확장을 지속해 왔으나, 제도와 현실의 괴리가 여전히 존재하며 특히 육아휴직의 젠더편향성도 지속되고 있다. 이 연구는 실제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한 열두 명의 여성·남성 사례에 나타난 성별 차이를 질적으로 분석하고, 육아휴직의 젠더효과 및 고용유지를 맥락적으로 고찰하였다. 먼저 휴직 결정과정 및 사용기간을 살펴보면, 여성들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장기간 휴직하는 반면 직장의 조건상 휴직이 가능했던 남성들은 아내가 휴직할 수 없는 '공백 기간을 메우는' 식으로 휴직을 선택하였다. 휴직 기간의 차이는 복직 후 업무 적응이나 승진 전망 등에서 여성에게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둘째, 휴직자 낙인과 조직문화의 젠더 효과를 살펴보면, 대규모 공공조직은 휴직자 낙인이 약한 반면 경쟁적 민간조직이나 전문직 여성들은 육아휴직에 대한 강한 낙인효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셋째, 남성들은 육아휴직 기간에 자녀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긍정적 부성애를 경험한다. 이에 비해 여성들은 휴직 기간 동안 양육의 보람과 과도한 부담이 교차하는 양가적인 경험을 하며, 복직 이후에도 여전히 자녀 돌봄·교육과 직장 일과 병행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다. 성평등한 일-가정 양립은 단지 육아휴직 기회를 늘리는 것에만 있지 않으며, 모든 근로자 특히 남성들이 자녀와 인구의 재생산 활동(reproductive activities)에 참여하는 것이 권리이자 의무라는 원칙을 국가와 기업이 수용해야 한다.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만으로 일하는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해소하려 하기보다는, 노동시간 단축, 돌봄 관련 휴가제도 확대, 돌봄 친화적 기업 문화의 확대 등 다층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주제어 : 육아휴직, 일-가정 양립, 고용 유지, 젠더 효과, 휴직자 낙인, 일하는 부모

* 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7년도 제3회 학봉상 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작성한 연구보고서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이다.

** 제1저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hyang@snu.ac.kr)

*** 교신저자: 서울대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 (sarlac@snu.ac.kr)

**** 공동저자: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hkwon248@snu.ac.kr)

***** 공동저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yjeon@assembly.go.kr)

***** 공동저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wiccee@gmail.com)

I. 서론 : ‘육아휴직 과정’과 일하는 부모의 경험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는 1987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과 더불어 도입되었으며 2001년 육아휴직 수당 도입 및 순차적 인상, 남성의 휴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아빠의 달’ 인센티브 도입 등 제도적 확장을 지속해 왔다.¹⁾ 임금노동자의 자녀 양육 지원, 고용에서의 성평등 제고, 저출산 대응 등을 위해 육아휴직을 확대할 필요성이 기존 연구에서 거듭 강조되었다(장지연, 2004; 박기남, 2007; 홍승아, 2010; 송다영·장수정·김은지, 2010). 도입 당시 여성노동자에 한정되었던 육아휴직은 남녀 모두에게 신청 가능한 ‘젠더중립적’ 제도의 형태로 진화하였고, 제도 설계의 범위(휴직 기간, 남성의 휴직 기간, 자녀 연령 등) 면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며 가장 관대하다(김진욱·권진, 2015: 271; 장지연, 2014: 37).²⁾

그런데, 육아휴직에 대한 기존의 논의와 관심은 휴직 사용의 확대, 특히 육아휴직 ‘진입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육아휴직 접근성은 여전히 많은 일하는 부모들(working parents)에게 중요한 문제이다. 직장 규모에 따라, 공공부문 혹은 정규직 여부에 따라 접근성에 격차가 크고 넓은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야를 조금 더 넓혀 본다면, ‘진입’ 단계의 제도적 문턱을 완화하는 것만으로 해소되지 않는 다양한 문제들, 예를 들면 휴직 기간 동안의 생계 유지, 복직 가능성과 고용 유지, 휴직자에 대한 부정적 낙인 등 도처에 어려움이 있다.

이 연구는 육아휴직의 접근성 뿐 아니라 ‘육아휴직 이후’에 벌어지는 일하는 부모들의 경험을 포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더 많은 부모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매우 참신하고 엄청난 사회적 변화로 보이는 측면이 있지만, 그 이면에서는 주로 가정 내 전통적 성별 분업에 대한 전제, 더 나아가 조직 내 여성의 역할이나 경력에 대한 차별적 기대가 전제되어 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의 젠더 효과(gender

1) 육아휴직 확대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면, 2005년에는 만 3세 영유아에 대해 1년 휴직을 허용하던 것에서 2010년 ‘만 6세 이하의 초등 취학 전 자녀’로, 2014년에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로 확대되었다. 육아휴직 급여도 계속 인상되었으며, 특히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8년 7월 1일 이후에는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 간 200만원을 상한으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도록 개정되었다(‘아빠의 달’).

2) 한국의 남성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제도는 국제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개인 수급권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기간은 국제적으로도 가장 긴 편에 속한다.

effects)는 포괄적인 육아휴직의 전 과정에서 심층적·맥락적·과정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육아휴직을 제도적 법적 측면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실제로 휴직을 이용한 경험이 있는 여성과 남성, 일하는 부모의 다양한 경험들을 질적으로 수집하고 그 젠더 효과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육아휴직 결정-육아휴직 기간-육아휴직 이후(직장 복귀)로 이어지는 일련의 경험들을 상호 긴밀하게 연결된 ‘육아휴직 과정’으로 포착하며, 이러한 과정 안에서 특히 기존 연구들이 많이 다루지 않았던 ‘육아휴직 이후’의 경험을 중점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육아휴직 이후’란 휴직을 다 사용하고 난 이후로만 국한하지 않으며, 휴직결정 이후부터 이어지는 과정들을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논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도적 확장의 이면에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던 측면, 즉 휴직 결정을 둘러싼 직장 내 역동성(김진옥·권진, 2015: 279), 휴직 사용자의 ‘동기’, 휴직 결정, 휴직 이후의 복직과 적응 과정을 둘러싼 행위자들의 보이는 선택과 보이지 않는 조정/협상의 측면들, 휴직 준비부터 휴직 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역동성을 질적 연구를 통해 조명한다.

둘째, 여성뿐 아니라 남성을 아우르는 질적 자료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육아휴직 경험에서 맥락화된 젠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육아휴직의 젠더 차이는 주로 고용보험 통계상의 휴직자 비율, 기간, 급여 등의 양적 차이로 설명되는데, 양적인 자료가 드러내지 못하는 젠더 효과의 다양한 맥락들은 간과되어 왔다. 또한 여성과 남성의 휴직 경험을 별도로 각각 분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접근은 젠더 차이나 젠더 효과를 포괄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셋째, 본 연구는 젠더효과와 고용유지라는 측면에서 육아휴직 경험자들을 심층면접함으로써 우선 육아휴직의 현실을 포착하는 ‘언어’를 발굴하고자 한다. 이에 근거해서 앞으로 육아휴직 및 일-가정 양립, 일하는 부모의 돌봄 결핍 해소, 그리고 일하는 여성들의 고용 유지와 성평등한 역할 분담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방법

1. 선행연구 검토

한국에서 육아휴직제도의 효과에 대한 논의는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주로 양적 분석을 중심으로 패널 데이터와 고용보험 통계, 일·가정양립실태조사 통계 등을 사용하여 육아휴직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사업장 규모, 직위나 직급, 임금, 집과 직장간의 거리 등을 분석하였다(김정호, 2012; 도남희·이정원·김문정, 2012). 또한 회사의 규모, 고용형태, 임금 등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김진옥, 2008; 이수영·이근주, 2011), 육아휴직사용과 고용유지와의 관계(김정호, 2012; 이수영, 2009)등을 분석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내에서 통계자료를 이용한 연구들은 육아휴직 사용 이후 직장 유지가 어려워지는 문제를 주목하고 있다. 윤자영·홍민기(2014)는 육아휴직 이후 직장복귀를 소득별로 계산하여 고소득집단의 육아휴직 복귀율이 저소득 집단보다 높음을 밝혀냈다. 고용보험 통계를 이용한 분석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의 고용유지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박종서·김문길·임지영, 2016; 정한나·윤정혜·최숙희, 2016).

이와 같이 개인을 단위로 육아휴직제도가 여성고용 혹은 직장 유지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를 도출한 분석 결과는 자칫 모든 문제를 제도문제로 환원할 가능성이 있다. 여전히 블랙박스로 남아 있는 것은 ‘육아휴직제도가 실제 활용되는 조직의 상황에 대한 것’이다. 조직의 규범과 문화, 정책에 따라 휴직 결정과 육아휴직 후 재정착 등에 상당한 차이가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측면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희소하다. 최근 호텔업계 여성 직원과 회사의 육아휴직제도(이호길·김광용, 2019)에 대한 태도를 다룬 한 서베이 기반 연구를 보면, 육아휴직제도에 대한 회사의 태도가 부정적이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아(유효 응답자의 76.2%), 육아휴직 대상자라 해도 고용유지를 원하는 경우 제도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암시한다.

육아휴직을 질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기존 연구들은 특정 집단 또는 특정 주제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다. 간호사와 같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휴직 경험을 분석하거나(정효주·정향인, 2016), 연구자가 설정한 특정 주제, 가령 일하는 어머니로서의 고충(양소남·신창식, 2011), 역할갈등과 시간갈등(김선미·안희란, 2016)을 중심으로 면접 내용을 재구성하고 결론을 이끌어낸다. 최근에는 남성의 육아휴직이 늘어나면서 여성과는 다른 남성의 경험

을 질적으로 분석하는 연구들이 많은데,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육아기회에 통한 긍정적 경험, 새로운 역할 수행 등을 강조하고 있다(강혜경, 2013; 나성은, 2014; 고가연, 2015). 김진욱·권진(2015), 최새은·정은희·최슬기(2019)의 연구도 아버지의 육아 참여, 자녀와의 친밀한 관계형성, 아내의 역할과 고충을 이해하게 되는 경험 등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질적 연구들은 여성 또는 남성의 휴직을 개인적 경험, 심리적 갈등에 초점을 두고 개인의 인식과 감정을 기술하는데 치우쳐 있다. 실제 육아휴직 후 직장과 가정에서 어떤 객관적 현실에 부딪히게 되는지, 직장으로서의 복귀과정, 복귀 이후의 일-가족 양립, 고용유지의 어려움과 현실적 조건에 대한 젠더관점의 분석은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2. 연구 방법

육아휴직은 정책 설계 및 제도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실제 일하는 부모들의 경험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 또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일하는 부모들이 휴직 사용을 결정하는 과정, 출산 및 육아를 둘러싼 역할 분담과 가족관계, 복직 후 다시 직장 적응하는 과정에서의 고충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조사 및 분석방식은 근거이론에 바탕을 둔 주제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는데, 육아휴직이라는 단일한 사건을 중심으로 면접을 실시하여 개인의 경험과 인식 속에서 주제를 도출해내는 방식이다(Strauss & Corbin, 1998; 김진욱·권진, 2015; 김선미·안희란, 2016).

면접참여자(연구대상자)는 성인으로서 면접 당시 육아휴직 중이거나 최근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들 및 남성들이다. 참여자 모집 방법은 연구진의 사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육아휴직 경험자를 일차 발굴하고, 이들 참여자들의 지인 네트워크 내 육아휴직 경험자를 모집하는 눈덩이 표집방법(snow-balling)을 활용하였다.³⁾ 심층면접은 2018년 4월부터 8월까지 서울, 경기, 대전, 춘천 등에 거주하는 면접참여자(연구대상자)들의 직장 또는 집 근처의 세미나룸, 카페 등에서 진행하였다.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기반으로 반(半)구조화된 조사표를 작성하여 면접을 진행하였으며, 면접시간은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접 내용은 참

3) 육아휴직 경험자 중 면접참여자(연구대상자)를 찾는 과정에서 공공부문, 대기업, 전문직, 사무관리직 등 고용안정성이 높은 중산층 부모들이 주로 표집되었다. 면접참여자(연구대상자)가 중산층과 일부 직종에 치우친 것은 이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한편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음하였다.⁴⁾

〈표 1〉 면접참여자 특성

번호	성별	연령	직업	자녀 수	배우자	휴직기간*	비고
1	여	37	대기업과장	1	개인사업	15개월	
2	여	40	대기업 비서	2	회사원	첫째 4개월 둘째 1년	
3	여	34	계약직 연구원	1	자영업	1년	
4	여	37	변호사	2	변호사	첫째 9개월 둘째 7개월	
5	여	38	공사 기술직	2	공기업	5년	
6	여	44	공사 관리직	2	변호사	6년	복귀 후 퇴사
7	여	38	연구원	2	연구원	2년	면접당시 휴직 중
8	여	41	약사	2	노조상근	4년	면접 당시 휴직 중
9	남	48	공사 기술직	3	공무원	1년	
10	남	41	연구원	2	연구원	1년	
11	남	39	공사 기술직	3	자영업	1개월	
12	남	41	교사	3	교사	6개월	

* 여성의 경우 휴직기간은 산전후 휴가(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모두 합친 기간임.

면접내용에 대한 분석방법을 간단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면접참여자의 동의하에 녹음한 파일을 전사하고, 전사한 텍스트들을 크게 육아휴직에 이르는 과정과 동기, 육아휴직 기간 중의 경험과 가족관계, 직장 복귀 과정과 이후의 경험 등 각 개인의 육아휴직 과정을 중심으로 분류하고 코딩했다. 또 개방코딩에 대한 축코딩을 통해 공히 발견되는 주요 주제어를 발굴하였다. 연구진은 여러 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해 개방코딩 및 축코딩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개념과 발견점들을 분류하고 주제화하고 그 답론을 분석하였다. 이하에서는 그 중에서 ‘전형적(typical)’ 의견 및 주목할 만한 서사를 중심으로 재현하고자 한다.

4) 심층면접조사를 위해 연구목적, 연구방법, 조사대상 및 인원, 구체적인 면접계획, 설문지 등을 서울대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IRB No.1802/003-006)을 받았다.

Ⅲ. 여성의 육아휴직 경험

1. 휴직 동기 및 결정 과정

1) 휴직은 피할 수 없는 선택, 그러나 취업 환경에 따라 다른 경험

대다수의 여성 참여자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동기에 대해 “어쩔 수 없어서”라고 대답했다. 영아보육시설의 서비스만으로는 직장 복귀가 불가능한 현실에서, 가족이나 전담 돌봄 인력의 도움과 같은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면 육아휴직은 일하는 부모에게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육아휴직) 안 쓰면 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라서... (연구자: 절박성?) 그렇죠. 네네. 안 그러면 그만둬야 하니까.”(면접참여자 3, 계약직 연구원)⁵⁾

육아휴직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성 면접 참여자 8인의 경험은 취업 환경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공공부문 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전후 휴가 후에 바로 휴직에 들어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별도로 상사의 허락을 받는 절차도 없다고 한다.

“저희는 좀 회사가 워낙 인원이 많은 조직이고 전국 조직이다 보니까 돌아요, 복직할 때 그 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그 ... 이제 휴직을 딱 하게 되면 저희는 인사관리처, 지역 본부에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인사관리처 소속으로 딱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복직을 하든 휴직을 연장하든 ... 누구의 부장이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이... 좀 자유롭게 휴직을 썼어요.” (면접참여자 6, 공사 관리직)

“저희는 약간 좀 특별한 경우.. 공사(公社)잖아요. 육아휴직을 다 쓰는 분위기고. ‘왜 육아휴직 안 써?’ 이런 거니까. ... 왜냐면 그 동안 경력인정이 되고. ... 제 주변은 음.. 육아휴직을 거의 다 쓰고요, ...” (면접참여자 5, 공사 기술직)

그런데 공공부문 종사자라 하더라도 비정규직 지위에 있는 여성들의 처지는 매우 다르다. 드러내 놓고 안 된다고 하지는 않지만, 휴직을 타진하는 과정에서 유형·무형의 반대, 조직에 부담을 준다는 압박 등을 받게 된다. 계약직 연구원으로 일하는 면접참여자 3은 임신 기간부터 법에 규정된 대로 휴직이나

5) 이하 볼드 강조는 모두 연구자에 의한 것이다.

단축근무를 할 수 있을지 여부를 하나하나씩 문의하면서 불안하고 긴장된 상황을 겪었다.

“그때 연구원 내부에서 근로 형태에 따른 근로인사규정 개정하면서 …구성원들의 의견을 받는 자리를 이제 마련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지금 여기서 공개적으로 물어봐야 되나, 왜냐면 사람들 많을 때 물어봐야 나중에 따로 있을 때 다른 소리를 안 할 것 같다. 왜냐면 거기 연구원에 노무를 봐주는 노무사도 같이 자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노무사 입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그건 가능하다는 말을.. 그러면 신청할 때 훨씬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다고 팀장님에게 얘기를 했는데, 팀장님이 본인이 얘기하겠다고 (해주셨죠).”(면접참여자 3, 계약직 연구원)

2) 휴직의 “타이밍”과 기간 조정하기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기업에서 일하는 휴직 사용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인력이 부족한 조직일수록 대체인력 문제는 긴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휴직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좋은 ‘타이밍’이나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면접참여자 1은 부서를 옮기는 시기에 맞추어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이다. 사례 2는 고민 끝에 휴직 기간을 6개월⁶⁾로 줄였는데, 나중에 돌아올 자리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때 문이다.

“아마.. 보통은 대체인력을 잘 채용하지 않고요,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들이 나눠서 하는 경우가 많고. 정말 특별한 경우만 그런데.. 저는 이제 부서를 옮기는 거였으니까, 대체인력을 채용을 하고 나왔죠, 제가 그 부서에서 빠지면서..”(면접참여자 1, 대기업 과장)

“사실은 12개월 쓰고 싶었지만 용기가 안 났고, 만약 그렇게 하면 돌아올 자리가 없을 거라는 불안감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6개월을 내게 된 이유는... 어 1년이 되기 전, 한 살이 되기 전까지는 엄마가 키워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제가 당연히 휴가를 내서 키워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6개월 동안 제가 어떻게든 해보자, 사람을 구하는가 해서, 그... 도우미를 구하고 나서 복귀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그 때 했습니다.”(면

6) 면접참여자 2는 첫째 자녀 출산 후 휴가 기간을 짧게 사용하였는데,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면 산전후 휴가 2개월, 육아휴직 4개월을 합하여 전체적으로 6개월의 휴가 기간을 신청하였다. 이번 면접조사에서는 휴직기간 문제의 복합적 의미가 두드러졌다. 면접참여자 2의 사례에서 보듯이, 출산 후 건강 회복 및 자녀와의 초기 관계형성에 필요한 시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휴직기간이 장기화될 경우 여성들은 복직 및 직장 적응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접참여자 2, 비서직)

3) 제도와 현실의 괴리, 조직 내 갈등과 낙인

민간 조직에서 ‘최초의 육아휴직 사용자’가 된다는 것은 상사와 동료 사이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낙인과 압박감을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부담은 변호사, 약사와 같이 업무 강도가 높고 경쟁이 치열한 전문직에서 오히려 더 크게 작용한다는 점이 면접 사례에서 나타난다.⁷⁾

“제가 첫째 낳고 육아휴직을 쓴 게 저희 법인에서 제가 ... 첫번째 케이스였어서. ... 처음 쓴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심지어 재밌었던 게, 저희가 팀 형태로 운영되는데 심지어 운영 팀장 변호사(가) ‘왜’ 육아휴직 사용하려 하는지 메일을 자기한테 보내달라고, 근거자료 남기려 한다고. 그 말이 약간 당황스러운 게, 육아휴직 하려고 하는거지, ‘왜’가 어딴어? ... 첫 사례가 트이기 시작하면 후속 사례가 나온다는 게 걱정이잖아요. 이러다가 여자 변호사가 다들 육아휴직 쓴다고 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면접참여자 4, 변호사)”

대형병원에 근무하는 약사인 면접참여자 8은 임신 이후 육아휴직에 이르는 과정에서 상급자 및 동료들과 지속적으로 갈등을 경험한 사례이다. 임신을 하면 법적으로 연장근무나 야근을 못하게 되어있지만, 인력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으니 관례대로 연장근무를 해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거부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털어놓았다.

“저는 이 동의서 쓸 수 없고 연장근로도 하고 싶지 않다, 내 의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동의도 안 한다 얘기를 했는데 그게 파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근무표에 넣더라고요. 저는 연장근무 동의 하지도 않았고 미리 가서 말씀도 드렸고... 근무표에 짜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근무표에 넣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만약에 4명이 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한 명이 빠지면 이거 일의 부하가 굉장히 크거든요. ...제가 참여하지 않은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 약간 집단 단두대, 제가 없는 자리에서. 집단 단두대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뭐 그러니까 ‘000 약사가 이렇게 했는데 너희는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해서 개인에 대한 원가 평가를 하게 한단다가 그런 불편한 이야기들이 계속.... 그러다보니까 암튼 그 기간이 약간 지옥이

7) 전문직 여성의 육아휴직 경험은 기존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인데, 이번 연구에서는 변호사, 약사 등 전문직 여성들이 휴직 사용이나 복직 이후의 경력 유지에서 상당한 낙인과 부담을 감내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전문직 여성들의 휴직 경험과 특징, 정책적 함의 등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다시 살펴본다.

었어요.” (면접참여자 8, 약사)

병원의 요구에 순응했던 다른 약사들과 달리 면접참여자 8은 연장근무에서 빼달라고 요구하였고, 이로 인해 조직 내에서 “파란”을 일으킨 사람, “자기 욕심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낙인을 받게 되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임신한 근로자의 연장근무 관행은 사라졌으며, 이후 면접참여자 8은 육아휴직에 들어갔고 면접 당시 둘째 자녀 뒤편까지 이어서 휴직을 사용 중이었다. 최초의 육아휴직 사용자로서 4년간의 휴직 이후에 꼭 복직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었다.

2. 휴직 기간의 경험과 돌봄 분담

1) 돌봄 조력자는 필수, ‘너무 바쁜 아빠’의 부재

휴직 중 대다수 여성들은 일차적인 양육담당자로 아기를 돌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자녀와 직접 상호작용 하는 시간은 너무 행복하지만 또한 너무 힘든 경험이며, 우울함과 두려움을 느꼈다는 면접참여자도 많았다.

“저는 첫째 때는 모든 게, 제가 첫째 애 낳고 애 낳은 지도 처음이고 결혼한지도 처음이고. 결혼하자마자 3개월 만에 애가 생겨서 모든 게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애까지 생기고 일해야 하고 정신없는 상황에 뭐도 모르게 지내고. 복귀하니 너무 차라리 안심 이 될 정도로 육아에 대해 두려움만 있었던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면접참여자 2, 비서직)

또한 엄마가 휴직을 하더라도 돌봄 도와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친정어머니로 대표되는 가족들의 도움은 고단한 일상에 숨통을 틔여주는 데 꼭 필요하다. 반면 대다수의 아빠들은 “너무 바빠서” 아이를 돌볼 시간을 내기 어려운 것으로 설명되고 있었다.⁸⁾ 여성은 바쁘더라도 육아를 위해 시간을 조정

8) 면접참여자 중 남편이 양육에 비교적 많이 참여한 경우는 사례 7, 사례 8 이었고, 그 밖의 사례에서는 육아휴직 기간 중 아버지의 경제적 역할이 강조되면서 ‘아버지의 부재’가 당연시되거나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돌봄 부담을 어느 정도 완화해주는 조력자는 친정 어머니(사례 1, 2)가 가장 많았고, 친정부모와 동거하는 사례(사례 3). 둘째 아이 출산 이후 돌봄 부담이 더 커지자 은퇴하신 아버지의 도움을 받은 경우(사례 7)도 있었다.

하고자 하지만, 남성은 ‘바쁘기 때문에’ 육아에 참여하기 어려우며, 아내가 휴직하면 주 생계부양자가 되는 남편의 경제활동이 더 중요해지게 된다.

“엄마가 되게 많이 해주셨던 거 같아요, 그때도. 사실 지금 생각해도 친정엄마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아.. 되게 더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연구자- 배우자의 역할은?) 남편은 ... 출퇴근을 좀 길게 하거든요. 마음은.. 뭐.. 쉬는 날 같은 경우는 사실 되게 많이 동참해주는 편인데.. 그제 정해진 생활이란 게 좀 어려워져.” (면접참여자 3, 계약직 연구원)

“친정 어머니가 중간 중간 오셔서 봐주시고. 혼자 어떻게 할 수가.. 혼자 있는 날은 거의 뭐 화장실도 못가고 씻지도 못하고 그 상태로... (연구자-배우자는?) 도와줄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니었어요. ... 일단 퇴근시간이 새벽 한두시 넘어가니까 본인도 아 이 보고 싶은데 볼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면접참여자 4, 변호사)

2) 낮은 육아휴직 급여: “통장 쇼크”

여성 면접참여자들은 모두 맞벌이이고 고학력 중산층이었지만,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휴직 기간의 어려움으로 재정문제를 꼽았다. 육아휴직 급여는 제도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인상되었는데, 면접참여자들이 휴직을 사용한 시기에 따라 휴직수당의 수준도 상이하였다. 그렇지만 대다수 면접참여자들은 줄어든 급여로 ‘통장 쇼크’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며, 아이 키우는 비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경제적 어려움이 커졌고 빚만 늘었다는 사례도 있다.

“육아휴직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재정이죠. 진짜 그걸 빼 놓을 수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350에서 400사이를 받는 임금노동자였는데, 육아휴직 급여가 70만원이에요. 5분의 1이잖아요. 고용보험의 취지는 40%까지 유지하는 건데 최대금액이 150인가 그렇게 되어있고 그런 제도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상한이 70인 거예요.” (면접참여자 8, 약사)

“육아휴직 급여 75만원이 전부니까. 원래도 제가 고소득은 아니었는데.(웃음) 남편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해요... 근데 그래도 저희는 적금을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면접참여자 7, 연구원)

3. 휴직 이후, 경력전망의 하향조정

1) 복귀 전후의 스트레스, “근무 평정은 최하위”

면접참여자들은 휴직 기간이 점차 끝나가고 복귀를 준비하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한다. 아이들 역시 엄마의 생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느낀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일제 근무를 위해서 따로 돌봄 시간표를 짜야 하며, 엄마가 없는 생활에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다.

“육아휴직 기간보다도 끝나갈 기간이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종료될 무렵에 저 대신 아이를 봐줄 사람을 찾아야 하고. … 한달 전부터 유축을 해서 젖병 먹이는 연습시켰는데 아이가 그때부터 젖병 갖다 대면 울고 저는 저대로 괴롭고. 복귀가 가능한 건가? … 처음 육아휴직 3개월 종료하고 복귀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한달 동안 아이가 젖병에 적응을 못해서 매일매일 아이가 울었던 그 시기가 힘들었어요.” (사례 4, 변호사)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면서 새로운 일을 맡아야 하는 경우, 휴직 기간 동안 업무상의 변화가 있다면 적응은 더욱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특히 기술직의 경우에는 업무 환경 자체가 크게 바뀌기 때문에 다시 신입사원이 된 것 같은 부담감을 갖는다. 휴직 기간 동안 쉬었기 때문에 호봉이 깎이거나 동료에 비해 급여가 뒤처지며, 복귀 후 받은 근무평정 성적표는 최하위였다는 사례도 있다.

“저는 딱 복직을 했는데, 일단 그.. 철도 시스템에 대해서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이걸 철길이고 이걸 전차선이고 뭐, 기억이 나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나고 길도 다 바뀌고 차도 다 바뀌고. 이게 완전히 저는 신입사원인거예요.” (면접참여자 5, 공사 기술직)

“저는 평정에 심각한 불이익을 받았어요, 실제로. 복귀하고 첫 번째 평정이 거의 최하 수준이었는데. 평정의 내용이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말로 된 코멘트는, 업무 처리 빠르고 정확하고 암튼 좋은 말만 잔뜩 써주셨는데, 등급은 C인거예요. 굉장히 웃긴 거죠. … 다른 변호사들이 어쨌든 하루종일 회사에 매여서 일하는데, 상대평가라서 … 저한테 폭탄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 그 평정이 다음 해의 보수 수준과 또 연결이 되거든요. 저의 이력 중에 C를 받았던 시기가 존재하니까 계속 계속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면접참여자 4, 변호사)

2) 직장문화와 불편한 시선, 경력 전망의 하향조정

직장 복귀 후 동료관계에서도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한다. 자녀가 어린 여성들은 퇴근 후 모임이나 동료들과의 술자리 등에 참석하는 것을 포기한다. 틈만 나면 집에 가는 여성에 대해 동료들은 “옛날과 달라졌다”고 말하며, 이런 경험을 통해 인간관계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혹시 왕따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도 느낀다고 한다.

“변화가 엄청 많죠. 왜냐면 지금은 업무 말고는 거의 육아에, 업무영역 말고는 거의 육아에 100% 쏟아 붓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이런 게 전혀 안돼요. … 저 엄마는 어쨌든 인간관계에 투자를 안 하잖아, 왜냐면 모임도 안 나가, 술자리도 못 나가. … 동호회 같은 것도 저는 다 잘랐어요. 어차피 못 나가니까.”(면접참여자 5, 공사 기술직)

휴직을 사용한 여성들은 복직 후 업무 공백을 메우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전과는 달라진 조직 내부의 불편한 시선, 낮은 근무평정이라는 현실에 직면한다. 일하는 어머니들은 직업 경력에서 매우 중요한 30대에 근무평정, 승진 기회 등을 포기하고, 출장과 야근이 없는 업무로 이동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한다. 한마디로 자신의 경력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출근은 괜찮은데 퇴근을 일찍 해야 하는 게 조금 눈치가 좀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큰 결단을 해야 돼요, 일찍 가야되니까. … 일이 있을 때는 밤을 새더라도, ‘애를 픽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곧 ‘나는 일을 열심히 안 하겠습니다’와 같은 선언이 돼요. …저는 그걸 감수를 한다고 해야 되나? 포기를 했어요. 내가 이 직장 내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인생 전체의 성공을 하겠다, …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속 시원한 마음도 있는데 나중에 평가 받을 때 좀 씁쓸해요.”(면접참여자 1, 대기업 과장)

“아, 내가 쉬었고 애를 키웠으니까 이런 부분은 감수해야 된다. 신랑도 약간 그런 부분은 감수해라, 우리가 그나마 애 잘 키우지 않았냐, 서로 다독다독하면서 약간 좀 감수하는.. 포기하기도 하고. 돈이나 경력은 포기하게끔 되더라고요.”(면접참여자 5, 공사 기술직)

다른 한편, 휴직으로 인한 공백을 만회하려고 복직 후 열심히 일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도리어 “아이를 버렸나”는 식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자녀가 있는 여성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은 일 잘하는 직장인의 이념형과 잘 부합하지

않으며, 이러한 문화적 모순으로 인해 여성들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다는 당혹감, 진퇴양난의 심경을 느끼게 된다.

“결혼하고 애가 있다면 상사도 일을 중요한 걸 안 말기려고 하는 성향도 좀 있고,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고 지레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더 웃긴 건 그걸 뛰어넘으려고 어떤 사람들은 야근도 하고 하면, ‘저 여자는 왜 애를 버리냐.’ 이게 되게 이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웃음) 안 가면 안 간다고 뭐라 하고 가면 간다고 뭐라 그러고…. 그래서 그냥 저는 일찍 가는 걸 선택했는데, 어차피 욕먹을 거 일찍 가자. 그리고 그냥 할 때 열심히 하자. 그래서 제가 찾은 솔루션은 그거예요, 평가에 연연하지 말자.”(면접참여자 1, 대기업 과장)

“항상 내면에 ‘애 둘 낳고 저 나이에 아직까지’ 그런 (시선을 의식하는 - 연구자) …. 뭐 내놓고 그런 경우는 솔직히 없었는데. 예를 들면 무슨 회식을 한다 이러면, ‘회식은 당연히 못가지? 애 둘이니까 못가지?’ 뭐 이런 식이라든가. 아우 그렇게 ‘애 둘 달렸는데 그 멀리까지 어떻게 다녀? 어~ 대단하네.’ 말은 대단하다인데, 그 대단이 대단이 아닌거죠. 약간 그렇게 제가 느끼고 있어요.” (사례 2, 비서직)

3) ‘성공적’ 복귀, 그러나 육아휴직 만으로는 불가능한 ‘일-가정 양립’

연구 참여자들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자신의 업무로 복귀할 수 있었으며, 그 자체만으로도 한국의 현실에서 ‘성공한’ 여성 취업자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겉으로는 성공적인 복귀를 했지만,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해야 하는 여성들의 고충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심층면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육아휴직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지만 짧게는 1년, 길게는 (다자녀일 경우) 4년이나 6년까지 휴직을 사용한 이후에도 자녀는 아직 어리며, 여전히 어른들의 돌봄을 필요로 한다.

“(친정 어머니가) 지금은 거의 전담으로 봐주시거든요. 아침에 애 유치원 보내고 좀 쉬셨다가 저녁에 애 받아서 저 올 때까지. 애는 5시 반에 와요, 종일반이라서. … 제가 집에 8시 이전에 가거든요. 그때부터 저랑 놓고 저녁에 자고. 저희 엄마 집이 대전이세요. (엄마가 우리 집으로) 월요일 날 오후에 출근해서 금요일 날 집에 가요. … 그래서 이제 KTX로 출퇴근하고 있어요. 그런데 KTX에서 저희 엄마 같은 분이 되게 많으니까 봐요. 부산에서 오시는 할머니들이랑 모임이 있어요. 그 KTX에서 맨날 만났대요. 같은 시간에 맨날 같이 타니까 다 알더라고요.”(면접참여자 1, 대기업 과장)

“문제는 실질적으로 애가 아파서 휴가를 써야 된단지 이렇게 육아를 하다보면 늘상 나타나는 일에 대해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는 … 애 아파서 이제 휴가를 내야 될

때 갑자기 휴가를 내게 되잖아요. ... 그때도 반차씩 오후 휴가를 내거나 일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아줌마가 계시지만 그래도 엄마가 같이 가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애들이 갑자기 아플 때 이럴 때가 문제가 되긴 했죠, 어릴 때고 쌍둥이다 보니까 자주 아프고 번갈아가면서 아프고 이러다 보니까, 그럴 때가 조금 그랬죠. 젊은 사람들은 서로서로 이해를 하는데 나이 든 부장님들 이상의 분들은 좀 유난스럽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 (면접참여자 6, 공사 관리직)

집중적 모성, 특히 어머니의 교육적 역할을 강조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복직 후에도 여전히 힘든 ‘사투’를 벌이고 있다. 면접에 참여한 여성들은 육아휴직제도가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육아휴직을 다른 사람에게 권장하거나 자신이 다시 사용한다는 것을 상상하기 싫어한다. 육아휴직이 힘들 때 도움은 되었지만, 여성에게 편중된 돌봄 부담을 충분히 덜어주거나 더 나아가 자녀를 더 낳을 만한 동기부여가 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다.

“육아휴직때만 사실 애를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육아라는 건 앞으로 죽 이어져야만 하는 일이고.. 이제 시작한 건데 육아휴직만으로는 상당히 불충분하고... 그래서 뭔가 육아휴직 만으로는 애를 더 낳거나 이럴 거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면접참여자 3, 계약직 연구원)

“(연구자: 육아휴직 다시 사용할 생각이 있는지요?) 어우, 다음 생애나 가능할 거 같은데요.. (웃음) 절대 안 할 거예요. (연구자: 주변사람에게 권할 생각은 있는지요?) 육아휴직이요? 전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면접참여자 5, 공사 기술직)

IV. 남성의 육아휴직 경험

1. 휴직 동기와 결정과정

1) 휴직 동기: 배우자와의 역할 분담, 돌봄 공백 메우기

남성 육아휴직 면접자들의 사례를 보면 모두 아내가 자신의 휴직기간을 최대한 소진하고 나서 더 이상 육아의 도움을 주변으로부터 얻기 힘들 때 사용하였다. 이번 심층면접 남성 참여자 중 3사례는 세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의 아

빠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 구체적 동기는 다자녀 때문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이나 다른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돌봄의 공백상황에서 남성들이 하는 선택인 경우가 많았다.

“첫해 처음 첫째 태어났을 때 와이프가 쓰다가 1년 쓰고 또 중간에 둘째 태어났을 때 그때 뭔가 상황이 안 맞아서 이 사람이 연속되게 그걸 쓸 수 없어서 제가 잠깐 6개월 쓰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집사람이 6개월 쓰고. 셋째 태어나서 다시 또 일 년 쓰고, 지금 한 4년째 된 거 같아요. 와이프 입장에서는 4년이고, 저는 6개월 썼어요.” (면접참여자 12, 교사).

(연구자: 막내가 태어나서 육아휴직 사용하셨나요?) “한 달 썼습니다. 돈이 안돼서.. (웃음) 셋째 낳았을 때.. 첫째, 둘째가 아직 어리잖아요.... 어.. 와이프가 산후조리원을 가야 되잖아요, 산후조리원. 거기 들어가게 되면 아이들을 볼 데가 없어가지고... 제가 부모님이 계시면 또 어떻게 해보겠는데 부모님도 안계시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배우자)출산휴가는 3일에서 5일인데 ... (그것 만으로는) 턱이 없어서. 그래서 겸사 겸사 했죠. (연구자: 육아휴직 1개월?) 네.” (면접참여자 11, 공사 기술직)”

주로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남성들이 배우자가 회사에 복직을 해야 하는 상황, 또는 주변에 더 이상 아이를 돌보아줄 사람이 없는 공백 기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다. 여성배우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4~5년 정도로 상당히 길었던 반면, 남성의 휴직 기간은 1개월~1년 정도로 짧은 것이 대조적이다. 반면 공공기관이 아니라 민간 연구소에 다니고 있는 면접참여자의 경우, 회사의 업무가 과중하고 퇴근시간이 자유롭지 않고 힘들어서 휴직을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회사가 별로 좋지 않으니까. 퇴근도 자유롭지가 않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회사가 별로 막 새벽에 당시 회장이 있을 때는 정말 택시타고 들어간 적도 있고. 잠깐 있다 나오고. (연구자: 일이 힘들었군요?) 그때 당시 많이 (힘든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면접참여자 10, 연구원).

2) 휴직 결정과정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차이

남성이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은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편견이었다. 남성이 육아휴직을 신청하겠다고 상사나 회장에 이야기했을 때 “남자가 육아휴직을 써?” 라는 반응이 부딪혔다고 토로하였다.

“회사가 상당히 좀 보수적인 회사라서요. 좀.. 뭐 일단 쓰는 것부터가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 팀장은 그런 거(육아휴직) 가는 거 자체가 이제 안 좋은 거죠. 육아휴직을 한다는... 뭐.. 얼핏 지나가는 소리로 어? 남자도 육아휴직 할 수 있어? 하는 소리도 얼핏 듣기도 하고. 에...그런.. 반응이 별로 좋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면접참여자 10, 연구원)

면접참여자 10의 경험에서 보듯이 회사의 분위기나 상사들은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최근 증가하고는 있으나 공공부문이나 민간 대기업 등 특정한 영역 밖에서는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특히 민간 부문에서 남성들은 퇴직이나 이직을 생각하는 과정에서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

이와 달리 조직규모가 큰 공공기관이나 학교 등에서는 육아휴직이 제도적으로 확립되어 있고, 인력 대체에 대한 조직적인 부담도 크지 않은 상황이었다.

(연구자: 육아휴직 신청 과정에 어려움은 없었나요?) “저희는(어려움이) 없었어요. (연구자: 전혀?) 네. (연구자:육아휴직 사용한다 했을 때, 직장이나 가족 등 주변의 인식은?) 글썄요, 오래 쓰는 거는 좀 뭐라 하겠쥬.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쓴다고 애기를 하고 미리, 아이 때문에 할 수 없이 써야한다고 얘기하고 다 수긍하는.. 직장 동료들은 뭐, 상관이 없고요.”(면접참여자 11, 공사 기술직)

(연구자: 남성 육아휴직에 대해 꺼리는 회사도 많은데?)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보내주기 때문에 그리고 저 대신 정규발령이 있고 이 자리에 만약에 그 사람 때문에 들어갈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복직 시에 다른 학교로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학교 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이 학교 아니면 다른 학교 가면 되니까 상관이 없었어요.”(면접참여자 12, 교사)

2. 휴직과 돌봄 경험

1) 긍정적 부성애 : 양육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휴직은 좋은 경험

남성들은 육아휴직동안의 개인적인 경험에 대해서는 긍정적 체험을 했다는 경우가 많았다. 아이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함께 지내는 시간은 재미있고 편안한 경험으로 기억한다. 또한 면접참여자들은 육아휴직의 경험을 살려서 육아휴직 이후에도 가사나 육아와 같은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아이들과 놀아주는 일도 어렵지 않게 되었다고 말한다.

“저는 (휴직 중에) 딱히 어려웠던 점은 없고 좋았어요. 애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잘 노는 것도 좋고 그리고 애들도 아빠 출근 안 한다고 좋아하고. 딱히 어려운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육아휴직 결심도 자연스럽게?) 예..”(면접참여자 12, 교사)

“저희는 근무가 불규칙적인데, 육아휴직 하다보니까 규칙적으로 되잖아요, 생활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수영 배우러 다녔어요. 그게 좋았어요. 그래 가지고 애들도 ...수영 등록하고 큰 애 수영 시키고, 둘째 애는 등록이 안돼서 처음에는 축구교실 시켜가지고. 구민센터에서 거기서 기다렸다가 막내하고 어린이집 데려오고, 그 다음에 큰애 데리러 오고 나중에 둘째 수영 등록하고.... 그런 게 재미있었어요.” (면접참여자 13, 공사 기술직)

면접참여자 10과 12는 휴직기간 동안 돌봄과 집안일을 전업으로 도맡아서 한 사례이다. 그런데, 아이돌봄, 식사준비, 청소 등의 가사와 양육 노동에서 본인이 모든 일을 수행하지만 실제 지배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내이다. 일부 남성휴직자들은 육아스트레스, 아내와 육아관이나 살림 기준의 차이로 인한 다툼과 불만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남성들은 휴직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긍정적으로 기억하고 있다.

“시간이 보통 9시 반 10시에 보내라고 하는데 애가 못 일어나니까 자유롭게 조금 많이 재우기도 하고 그.. 가급적이면 보내려고 하는데 와이프는 왜 다른 엄마들은 그렇게 애를 안 보낼 수 있으면 안 보내는데 왜 너는 보낼려고 하느냐 어린이집을. 그거 가지고도 뭐라고 막 하더라구요.”(면접참여자 10, 연구원).

“그리고 육아휴직하기 전에 집사람이 요리학원을 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 요리학원을 다녔어요. 한 달을. 재료 손질 하는 거를 하게 되니까 뭔가 애들 해줄 수 있게..”(연구자: 밥 챙겨줄 수 있는?) “그런 게 됐어요. 그 전엔 저는 요리를 한 번도 못해보니까 전혀 몰랐는데 한 달 요리학원 다니면서 요리라는 게 어떤 건지 알게 돼서 볶음밥이나 뭐 이런 거 그냥 해줄 수 있고..”(면접참여자 12, 교사).

2) 소득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

남성 참여자들은 대부분 휴직기간에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휴직기간 중 가장 어려운 점에 대해 경제적 이유로 줄어든 소득을 꼽았다. 최근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휴직 수당 인상 및 남성육아휴직자에게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급여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맞벌이인 경우에도 기존의 가계소득이 대폭 줄어드

는 상황에서 다른 배우자의 소득에 더불어 임시적인 소득활동을 하거나, 대출을 하는 방식으로 대처하는 경우도 있었다.

“휴직 중에는 일단은 돈이 제일.. 비용이 이제. 그.. 월급이 안 나오니까. 좀 당연히 어려움이 켈 컸던 거 같아요. (연구자: 육아휴직 수당이 있지요?) 그거는 첫 달, 둘째 달, 셋째 달, 150, 150, 150(만원) 다음달부터 75만원씩 12개월까지 나오고... 6개월 뒤에 300이 나오거든요. 아시잖아요? 일시금으로. 그래서 이제 어쨌든 와이프가 회사 다니면서 그 비용을 합쳐가지고 가게를 꾸려 나가는 식으로 일 년 동안 지내왔죠.”(면접참여자 10, 연구원)

“아마 넉넉하진 않았을 거 같아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애가..막내가 ‘트니트니’라고 다니는데 거기를 끊어야 되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와 둘째는 거기 이제 시설에 발레 같은 거 있는데 안 보낼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면접참여자 12, 교사)

“근데 이제 그 때는 애들이 아직 어려가지고 학원 같은 거 많이 안 보낼 때여서 생활이 됐죠. 지금은 힘들 거 같아요. 애들 학원..(웃음) 그 제가 뭐 한 300-400 받는다면 그거 85만원으로 줄어든거죠. 그걸로 그냥 맞춰 살았어요. 저축 같은 건 안했겠죠..”(면접참여자 9, 공사 기술직)

이처럼 경제적인 문제는 여전히 육아휴직의 사용을 제약하는 중요한 요인이 다. 더구나 성별적으로 편향된 육아휴직제도 사용에서 남성배우자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급여의 현실화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복직 이후의 경험

1) 복직 후 적응과정 :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혹은 석 달 만에

휴직 후 직장 복귀, 업무 적응에서 어려움을 겪은 경험은 면접참여자의 휴직 기간, 휴직 과정에서의 갈등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1개월 휴직을 사용한 면접참여자 9는 ‘하루 만에’ 적응했다고 말한다. 1년 동안 휴직한 면접참여자들은 1달 혹은 3달 정도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한다.

적응에 걸린 시간? 하루. 일 년 동안 좀 운전을 안 해가지고. 업무가 원래 운전이니까. 하루 이제 대무교육 받고 그 다음에 대전 한번 내려갈 때 낯설었는데 한번 내려가니까 다 기억이 나서. 업무가 단순해요.(웃음) .. 업무에 대해서 금방.. 그 어려움은 없었어

요.(면접참여자 9, 공사 기술직)

휴직할 때도 이제 나름대로 절차상으로는 다 매끄럽게 한다고 했는데. 이제 유쾌하게 휴직을 한 게 아니었으니까. 복직할 때도 이제 편안한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고. 무거운 마음으로 복직을 해서 한 달 간 힘들게 1월 달에 좀 지냈죠. (면접참여자 10, 연구원)

그때.. 교과 6학년 체육교과를 했는데 제가 체육교과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그 수업자체에 대한 부담이 있었어요. 담임이었으면 그냥 국어랑 수학, 사회 이런 것들은 하면 되는데...3개월 정도 힘들었던 거 같아요.... (면접참여자 12, 교사)

복직 후에 직장 동료의 시선이나 대인관계, 조직문화 등에서 큰 부담을 느끼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 민간기관에서 최초 육아휴직 사용자인 면접참여자 10은 다소의 불편한 시선을 느끼기도 했지만, 그다지 큰 어려움은 아니며 잘 적응하고 있다고 말한다. 여성들이 복직 후 조직생활에서 ‘진퇴양난’, ‘어쩔 수 없음’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과 달리, 남성 참여자들은 “부당한 대우가 있다면 감내하지 않을 것”이라는 식으로 조직 내 문제에 스스로 대응하고 해결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복직 후 대인관계 영향? (생각) 딱히.. 없는 거 같은데요. 뭐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뭔가 터치하거나 그런 것도 없었고 동료들하고 복직하자마자 잘 알게 돼서 교과실에서 지내게 되니까 별로 그렇게 문제가 있거나 그러지도 않고. (면접참여자 12, 교사)

솔직히 크게 어려운 점은 뭐, 솔직히 심한 데는 자리도 빼고 한다고 하던데. 그런 건 없고요. 그런 게 있었다면 솔직히 성격상 가만히 있을 저도 아니고, 그건 부당하니까 그런 대우받고 어떻게 일하겠어요?... (3개월쯤 지난 지금) 저는 적응을 했죠. 당당하게 그냥 지내고 있습니다. (면접참여자 10, 연구원)

2) 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휴직으로 인한 불이익 여부는 휴직 기간과 연관성이 크다.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은 근속 기간으로 인정이 되며, 상여금이나 성과급은 받지 못하지만 호봉이나 경력 산정에서 눈에 띄는 불이익이 없다. 특히 공공기관 종사자의 경우 불이익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 다만 맞벌이인 경우 2년 이상 장기간 육아휴직으로 인해 아내가 경력에서 피해를 보았다고 말한다.

“복무 기간으로 일 년은 쳐줄 거예요. 2년은.. 3년까지 휴직이 되잖아요? 2년은 아마 안 쳐줄 거예요. 저는 그 일 년만 해서 경력기간 다 쳐줘서 그거에 대한 불이익은 없었

던 거 같아요. 호봉도 다 올라가고 그렇죠....근데 집사람이 휴직하면서 근속기간 인정해주는 것보다 더 오래해가지고 ... 뭐 그런 거 손해를 봤죠, 집사람이. 공무원도 똑같은 거예요. 일 년만 근속기간 인정해주고.” (면접참여자 9, 공사 기술직)

민간기관에서 일하는 경우에는 근무평정에서 불이익을 본 사례가 있다. 면접참여자 10은 평가대상 기간 중 육아휴직 기간이 겹친다는 이유만으로 근무평정 최하위를 받은 것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있다.

“이번에 근무실적을 적어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저는 9,10,11,12.. 4개월 분에 대해서 써낸거고.... (육아휴직 때문에) 그 빠진 기간은 근무평정 안하고 공정하게 4개월 분에 대해서 뭔가 해야하는데, 그냥 뭐 최하위 아니었을까 싫어요.” (면접참여자 10, 연구원)

3) 양육참여에 대한 자부심: “육아휴직을 추천합니다”

남성들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아이들과의 스킨십, 친밀성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뿌듯함을 느낀다. 육아휴직을 긍정적인 경험으로 기억하며, 앞으로 육아휴직을 더 많이 사용하고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애들하고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애들을 키운다는 게 뭔지를 좀 알게 되는 거 같아요. 그런 거는 휴직해서 집중적으로 키워보지 않으면 경험하기 힘들니까. 그리고 또 휴직하고 보면 또 애들 키운다 해도 자기 시간이 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자기가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면접참여자 12, 교사)

면접참여자 10은 휴직을 결정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고, 여전히 보수적인 회사 분위기에 대해 불만도 느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선구자’로써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둘째를 낳거나 기회가 생기면 다시 육아휴직을 시도할 것이며 다른 직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육아휴직을 권한다고 말한다.

“제가 그냥 선구적인 역할을 한 거고.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사회운동한 사람도 아니지만.... 사람이다 보니 나중에는 다 그런 상황이 되면 선례가 있으니까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다른 남성 직원에게 말 씀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라고. 그냥, 적극적으로 이용하라고.” (면접참여자 10, 연구원)

V. 육아휴직 경험의 성별 차이와 젠더 효과

1. 제도 활용의 경험 : 결정과정·기간·급여의 성별 차이와 젠더 효과

이 연구에서는 육아휴직 과정에서 나타나는 젠더 효과를 심층면접 자료를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면접참여자들이 휴직 사용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보다 공공기관 여부, 직장 규모에 따른 차이가 더 두드러진다. 그런데 이번 면접조사에서는 여성 중에서도 민간 부문 종사자나 비정규직, 특히 경쟁이 심하고 성과를 중시하는 전문직의 경우 여전히 휴직 사용이 어렵고, 휴직에 이르기까지 공식적 비공식적 조정과 타협, 타이밍 조절 등 유형무형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

반면 휴직 기간에서 성별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난다. 면접참여자 중 남성들은 최장 1년 동안 휴직한 반면, 여성들은 자녀 수에 따라 6년까지 휴직한 사례도 있었다. 면접 참여자 중 다자녀를 둔 맞벌이 부부들은 양쪽 모두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여성이 주로 긴 기간 여러 번 휴직을 하는 반면 남성들은 아내가 휴직할 수 없는 ‘공백 기간을 메우는’ 식으로 휴직을 선택하고 있었다.

여성들의 면접 내용에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육아휴직이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만능의 해결책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길게는 4년, 5년까지 휴직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자녀는 어리고, 일하는 엄마들은 돌봄 제공자를 구하고 업무 시간과 돌봄 시간을 조정하느라 언제나 쫓기는 마음으로 생활한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돌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과도한 기대보다는 오히려 정책의 본래적 목적을 충실하게 실현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시될 필요가 있다.

2. 복귀 이후 : 공식적·비공식적 조직문화와 낙인의 젠더 효과

육아휴직의 제도적 확장에도 불구하고 전체 취업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부모들의 비율은 한정되어 있다. 그만큼 현실적으로 직장 생활에서 휴직자에게 주어지는 불이익이나 ‘낙인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낙인 효과는 앞으로 육아휴직을 제도적으로 활성화하는데 심각한 걸림돌이 될 것이므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심층면접 분석에서 휴직자에 대한 낙인을 강화 또는 완화시키는 요인들이 드러났다. 첫째, 성별에 관계없이 대규모 공공기관 종사자는 특별히 상사의 허락을 받을 필요 없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지만, 휴직자로 인한 업무 공백이 동료 직원들에게 전가되는 구조에서 휴직자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낙인은 강화될 수밖에 없다. 면접에 참여한 여성들 일부는 휴직을 앞두고 동료들에게 전가될 업무 부담에 많은 우려를 나타냈으며, 대체인력 채용은 휴직사용을 원활하게 해주는 중요 변수가 되고 있다. 다른 한편, 대체인력은 기간제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으며 일부 직종에서는 대체인력이 채용되면 오히려 복직에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 육아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배치와 전환에 대해 다양한 논쟁 지점들이 형성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경쟁적이고 성과를 강조하는 조직문화 안에서 육아휴직자에 대한 낙인은 강화된다. 면접 사례 중에서도 전문직(변호사, 약사 등) 종사자들은 휴직 신청부터 복귀 이후까지 부정적 평판과 낙인 효과로 어려움을 겪었다. 전문직은 급여와 직업 안정성이 높아 여성들이 선호하는 직종이지만, 가정보다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당연시하는 남성중심의 고정관념이 지배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복직 이후에도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는 상급자들의 부정적 낙인을 받게 되며, 부서 배치나 승진 등에서 여성들의 경력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찰계와 법조계 관리자에 대해 부모휴가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공공성이 강한 경찰 조직과 달리 경쟁이 치열한 법조계에서 휴가 사용은 조직의 공적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사적 결정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휴가 결정은 그 일자리가 교체될 수 있다는 점을 스스로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것이다(Nordberg, 2018).

셋째, 직장 내 비공식적 조직 문화와 평판, 대인관계 등에서 휴직 사용 후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 더 큰 부담과 압박을 느끼고 있다. 남성들은 휴직 후 복직과 적응에 대해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으며 문제가 있더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적극적 태도를 보였다. 반면 여성들은 대인관계가 위축되고 조직 내 비공식적 인간관계에서 배제된다고 느낀다. 열심히 일해도 인정받기 어렵고 오히려 ‘아이를 버렸다’는 비아냥과 수근거림의 대상이 되면서 ‘진퇴양난’의 무력감을 호소하고 있다.

3. 육아휴직과 젠더 규범: ‘젠더화된 부모상(gendered parenthood)’과 여성의 경력전망

육아휴직 결정과 휴직 기간의 돌봄 경험, 휴직 후 복귀와 적응에 이르는 면접참여자들의 경험을 살펴보면 육아휴직 과정 전체에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젠더 규범이 전반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육아휴직 제도의 외형은 ‘젠더중립적’ 설계로 되어 있으나, 실제 휴직자들의 선택과 실천 속에서 젠더 규범이 크게 작용하는 현실은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번 면접조사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젠더 차이는 여성이 주된 돌봄자로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길게 휴직을 사용하는 반면, 남성들은 여성에 비해 짧은 기간 동안 휴직을 사용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선택은 휴직 시점에서의 임금 차이를 고려해 가계 소득을 극대화하려는 선택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이번 면접 결과에서는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전문직 등 ‘질 좋은 일자리’에 진입한 여성들이 휴직 이후 경력전망을 “하향조정”하는 경험들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면접에 참여한 여성들 중 다수는 복직 이후 경력을 이어가고 있으나 실제로 경력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있으며, 동료들과의 경쟁이나 승진 시도를 ‘포기’하고 ‘가늘고 길게’ 살아야 한다고 말한다. 휴직이 장기화될수록 조직 적응의 부담은 커지며, 공식적 업무 적응 뿐 아니라 비공식적 대인관계의 위축도 여성들의 경력 전망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번 면접참여자 중 휴직 후 퇴직한 사례는 두 자녀에 대한 휴직을 연속하여 장기간 직장을 떠났던 경우였다.

홍승아(2018, 151)는 남성의 육아휴직과 기업의 조직문화의 연관성을 분석하면서 ‘직장 내 젠더화된 부모상(gendered parenthood)’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면접에 참여한 여성들은 대부분 공공부문이나 대기업, 전문직에 종사하면서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성공적으로 복귀’한 사례들이지만, 직장 내의 젠더 규범과 고정관념, ‘젠더화된 부모상’에 기반한 관행들을 개인의 노력이나 성취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육아휴직은 ‘친여성적’ 정책으로 보이지만, 여성의 경제활동보다 어머니 역할을 우선적으로 보상한다는 점에서는 보수적인 정책이 될 수도 있다(김엘림, 2004)는 지적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보인다.

VI. 결론

이 연구는 육아휴직 경험자 12 사례의 면접조사를 바탕으로 이들이 휴직 전, 휴직기, 휴직 후를 관통하는 전 과정에서 겪어 낸 일상적 경험과 돌봄, 모성, 친밀성, 가족관계, 직장의 미시 관계와 제도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서사들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면접참여자들이 교사, 공공부문 종사자, 대기업 직원, 전문직 등 중산층 중심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 육아휴직자들의 경험을 대표한다고 보기는 어려울지라도 한국의 육아휴직 경험의 일단을 보여준다고 평가한다. 앞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정책 대상자가 아니라 주체로서의 육아휴직 근로자들의 경험과 언어를 발굴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면서, 결론에서는 이상의 분석에 입각해서 발견한 논점들에서 도출되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육아휴직 진입에서 직장 복귀까지의 전 과정에서 젠더효과가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한국의 육아휴직제도는 부모의 돌봄 정책으로서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이라는 목적과 함께 성평등을 독려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볼 때, 휴직 신청자에서 뿐 아니라 휴직 기간에서 뚜렷한 성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장기간의 육아휴직은 여성 육아휴직자들의 직장 복귀 가능성을 낮추기도 하고 복귀한다고 할지라도 근무평정이나 적응 등에서 어려움을 남기게 된다. 뿐만 아니라 성별분업체계 속에서 여성에게 기대되는 자녀양육 역할이 휴직 이후에도 강하게 영향을 미침에 따라 직장복귀 이후에도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의 노력은 남성보다 강도 높게 나타난다. 유자녀 여성은 직장에서 성과가 잘 나오지 않는 여성이라는 평판과 함께 ‘아이를 버린 여자’라는 평판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다른 한편 친정어머니나 도우미의 스케줄과 자신의 직장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비해, 남성들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이유로 육아휴직의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비교적 단기간 동안 육아휴직을 하고 그 경험은 긍정적으로 남는 경향이 있다. 남성들은 직장 경력을 중심에 두고 아내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보충적이고 일시적인 양육 참여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다. 직장 복귀 후에도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것과 같은 일-가정 양립의 압박이나 직장의 평판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좀더 ‘유유하게’ 직장 일에 임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렇게 하여, 남성 면접참여자들은 육아휴직이 매우 좋은 제도이며 다른 사람에게도 “추천한다”라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매우 시사적이다. 또한, 아내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남편들의 경우 아르바이트 등으로 더욱 분주하게 생계에 매진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육아휴직은 법적으로는 젠더중립적이라고 할지라도 경험적 현실에서는 강하게 젠더화되어 있다. 육아휴직 제도가 기존의 육아에 관한 성별분업체계를 약화하고 와해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위험도 있다. 이상의 발견은 육아휴직의 법적 젠더중립성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젠더 특화된 조치들을 더 적극적으로 강구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한다. 그동안 남성의 육아참여를 위한 제도가 확대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남성의 육아휴직을 더 많이 격려하고 지원하는 정책들이 펼쳐져야 한다. 남성의 육아 및 돌봄 참여에 관해서 국가가 사업장에 지원을 해 주는 등 ‘적극적 조치’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육아휴직의 신청에서 사용, 복귀에 이르기까지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제도 시행 및 경험에서 매우 편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공공부문이나 학교에 근무하는 경우 휴직에 대한 부담이 적어 보이는 반면, 개인 사업장 특히 변호사, 약사 등 전문직 중심 사업장의 경우 육아휴직을 수용하기 어려운 업무특성이나 직장문화를 가지고 있음이 나타났다. 조직의 문화가 개인의 성과와 경쟁을 강조하고, 남성중심적 조직문화가 건재하며, 조직의 크기가 크지 않을 때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부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남성 육아휴직 경험자 중에서 변호사, 의사 등을 찾을 수는 없었다. 이 점에서 직업 특성상 장기적인 교육 투자를 받은 여성 전문가들의 육아 및 돌봄 필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며⁹⁾, 해당 조직 리더들의 인식 개선도 중요하다. 여성 근로자들의 경우에는 휴직 후 복귀한 직원을 위한 업무 재적응과 교육, 가족관계와 육아 등에 대한 상담과 지원, 자조집단(self-help group) 등 지원체계를 제도화하는 노력도 중요하다. 이번 연구에서는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들이 개인적으로 고립되어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특히 여성 근로자들이 장기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모니터링과 상담 등의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또한, 휴직 후 복귀자들에 대한 적응기 평가시계(時計) 정지 등으로 별도의 평가제도 구축에 대한 정책가이드 마련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노력이 단지 배려를 넘어서서 국가와 사업장에게도 더 큰 이익을 가져다준다는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사는 육아휴직 ‘이후’의 경력지속에도 있다. 그동안 제도 개선이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쪽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면접참여자 중 이러한 제도적 혜택을 활용하여 장기간의 휴직을 쓰는 쪽은 주로 여성이었다. 휴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직 후 업무 적응의 어려움, 승진 전망 등에서의 불

9)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 ‘명예고용평등감독관’ 제도 내지 법 제35조 제1항의 ‘국가의 경비보조’ 등과 같은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고, 정부는 산업장에서의 이런 노력을 지원하고 독려해야 할 것이다.

리함은 가증될 수밖에 없으며, 육아 휴직 이후의 부정적 경험은 여성 면접참여자들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주로 직장에 복귀한 휴직 경험자들과 현재 육아휴직 중인 소수의 여성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주로 여성들의 육아휴직의 장기화로 인해서, 그리고 복수의 자녀 출산 등으로 ‘자연스럽게’ 경력을 지속하지 못하는 개연성에 대한 추측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육아휴직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노동자의 경력 단절을 막고 안정적인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면, 특히 여성 근로자들을 고려해서 휴직 이후의 고용유지 효과에 좀 더 초점을 맞춘 제도 개선 및 운용이 필요하다.

더불어 육아휴직 이후 단축 근로시간을 포함한 유연근무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점진적인 복귀’를 통해 일과 가족 상황의 변화에 대한 개개인의 적응력을 제고하는데 정책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나 시차 출퇴근제, 압축근무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제도가 실행되고 있으나 2021년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재택 근무시간제 등을 가족의 필요에 따라 적절히 혼합해서 설계하고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 단, 육아휴직을 포함해 유연노동방식의 적용 대상이 여성에게 국한될 경우, 본 연구가 보여주듯이 유연성 패널티(flexibility penalty)가 여성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다양한 결합방식이 미치는 실질적 효과, 그리고 젠더효과에 대한 연구와 실험이 더욱 필요하다. 관련해서, 여유인력이나 대체인력을 활용할 여력이 없는 민간기업, 특히 중소기업 노동자의 경우 자신의 휴직이 동료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상황을 견뎌내기가 쉽지 않다. 사내의 대체인력 및 여유인력 활용 방안을 실질화할 수 있는 방안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이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육아휴직은 이제 필수적인 사회정책이지만, 일하는 부모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생활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과 함께 훨씬 많은 다층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최근 육아휴직 기간의 확대, 육아휴직의 의무화, 남성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단기간 의무화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으나 돌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이 육아휴직으로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 전 시민의 ‘재생산권리(reproductive rights)’ 보장이란 원칙이 필요하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러한 원칙 아래 노동시간 단축, 공적 돌봄의 확대, 돌봄 관련 휴가제도 확대, 가족친화적 기업 문화 정착, 돌봄의 성별 분업을 완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센티브 등 다층적인 정책이 상호 결합되어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인구 재생산 정책 패키지를 마련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결론을 맺고자 한다.

참고문헌

- 강혜경(2013). “남성육아휴직자의 양육 경험과 성별관계의 변화”. 여성학논집. 제 30권 2호. 133-167.
- 고가연(2015). 육아휴직을 받은 아버지의 양육경험.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선미·안희란(2016).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여성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제18권 1호. 63-94.
- 김엘립(2004). “1980년대 이후 여성입법운동의 전개와 성과”. 여성이론. 제10호. 11-33.
- 김정호(2012). “육아휴직 지원과 여성의 노동공급”. 한국개발연구. 제34권 1호. 169-197.
- 김진욱(2008). “여성근로자의 육아휴직과 근로지속성에 관한 실증연구”. 사회복지정책. 제33호. 239-260.
- 김진욱·권진(2015). “아버지들의 육아휴직 경험연구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정책. 제22호 3권. 265-302.
- 나성은(2014). “남성의 양육참여와 평등한 부모 역할의 의미 구성: 육아휴직제도 이용 경험을 중심으로”. 페미니즘 연구. 제14권 2호. 71-112.
- 도남희·이정원·김문정(2012). 기업의 자녀양육 지원 실태와 정책 과제.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 박기남(2007). “전문직 여성의 노동경험과 돌봄의 젠더화”. 페미니즘 연구. 제7권 2호. 83-124.
- 박종서·김문길·임지영(2016). 일-가정양립 지원 정책 평가와 정책과제- 모성보호 제도와 출산의 관계를 중심으로.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송다영·장수정·김은지(2010). “일가족양립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직장 내 지원과 가족지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제37권 3호. 27-52.
- 양소남·신창식(2011). “어린 자녀를 둔 일하는 어머니의 일가족양립 고충”. 보건사회연구. 제31권 3호. 70-103.
- 양현아·황정미·권현지·전윤정·김정혜, “육아휴직 이후 무슨 일이 있었을까 -고용 유지와 젠더효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제3회 학봉상 연구지원 미간행 보고서(http://law.snu.ac.kr/data/hb_awards_3__research__infants.pdf.에서 2021.4.27. 인출).
- 윤자영·홍민기(2014). “육아휴직제도의 여성 고용 효과: 정액제에서 정률제 급여

- 제도로의 변화를 중심으로”. 노동정책연구. 제14권 4호. 31-57.
- 이수영(2009). “한국 육아휴직제의 고용연장 효과 분석”.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0권 1호. 229-255.
- 이수영·이근주(2011). “한국 민간기업 근로여성의 육아휴직 활용패턴 영향요인 연구 : 고용보험 DB분석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논총(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제25호. 61-91.
- 이호길·김광용(2019). “호텔여직원의 경력단절과 육아휴직과의 관계”. 호텔경영학 연구. 제28권 4호. 193-202.
- 장지연(2004). “모성휴가제도의 변화과정과 여성노동권 -2001년 ‘모성보호 3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66호(2004년 1호). 5-40.
- _____(2014). “남성 육아휴직 활용실태와 정책방향”. 월간 한국노총. 제 500호. 36-37.
- 정한나·윤정혜·최숙희(2016). 한국 여성의 고용과 경력단절에 관한 연구- 고용보험 DB를 활용하여.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기본연구 2016-13).
- 정효주·정향인(2016). “육아휴직 후 직장에 복귀한 간호사의 적응과정”. 간호행정학회지. 제22권 1호. 33-45.
- 최새은 정은희 최슬기(2019).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남성의 가정 및 직장에서의 경험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39권 4호. 280-319.
- 홍승아(2010).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스웨덴, 영국, 한국을 중심으로”. 젠더리뷰. 제16호. 66-71.
- _____(2018). “남성의 육아휴직과 기업의 조직문화”. 젠더와 문화. 제11권 1호. 145-183.
- Nordberg, T.(2018). Managers’ Views on Employees’ Parental Leave: Problems and Solutions Within Different Institutional Logics. *Acta Sociologica*, ____, pp. 1-15 (First Published Online: May 2, 2018, <https://doi.org/10.1177/0001699318759781>).
- Strauss, A. L. & Corbin, J. M.(1998). *Basic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Abstract

What Has Happened after the Parental Leave?: Analysis of Interview Research Focusing on Gender Effects and Continuing Employment after the Leave

Hyunah Yang*·Jungmee Hwang**·Hyunji Kwon***.

Yoonjeong Jeon****·Jeonghye Kim*****

Parental leave for child care in Korea introduced in 1987 has kept elaborated in ways that both women and men can apply for it, and its duration and scope have been expanded. As a result, the Korean policy for parental leave appears to be substantially generous and gender-equal. However, how and by whom it has been utilized remain explained: the gap between policy and reality; and the gender disparity in utilizing the leaves persistent. This study pursues in-depth interviews of twelve interviewees who took parental leave and examined their leave experiences, focusing on the gender effects and continuing employment after the leave

Firstly, as for the accessibility to leave and its duration, this study finds that women(mothers) tended to be more extended leave than men(fathers). Moreover, men's having the leave tended to be "subsidiary to" the mothers leave when the mothers could no more applications for the leave. Secondly, as for the 'stigmatization' of the returnee from the leave workers, it is not very discernible at the large workplace in the public sector. In contrast, the returnee seems to be more stigmatized at the private company and the professional workplace such as hospitals and law firms. Thirdly, many male interviewees see their leave experiences rather positively as it was a chance to form and experience the intimate paternal

* First Author: Professor, School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Guest Researcher, Institute for Gender Research,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Sociology, Seoul National University.

**** Co-author: Legislative Researcher,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 Co-author: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relationship with the child(ren). Whereas women tended to have “ambivalence” about the leave since it was positive for their child(ren) and themselves, they still feel the overburdened maternal responsibility.

This research finds that the “effects” of parental leave are very much “gendered” in the context of the workplace, family, and society at large, whereas the policy itself looks gender-neutral. Therefore, policy design needs to go in the direction of accepting such gendered phenomena. It also suggests that parental leave should not be the final and only solution for the work-family balance in gender-equal ways. The state and companies must set the principles that entire workers are the citizens who ought to enjoy the rights and duties of reproductive activities.

Keywords : Parental leave for child care, work-family balance, continuing employment after they leave, gender effects, stigmatization of returnee from the leave, working parents

스웨덴 인구 담론 전환이 한국 저출산 정책에 주는 함의: 뮌헨 부부의 인구정책 구상을 중심으로*

김영미**

초 록

이 연구는 1930년대 인구 위기 상황에서 뮌헨 부부의 새로운 인구정책 구상을 정책화함으로써 인구 담론 전환을 이룬 스웨덴의 경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저출산 정책의 담론 전환을 시도 중인 한국 사회에 비교사회정책 관점에서의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했다. 뮌헨 부부는 인구문제를 아동, 가족의 삶의 문제, 가족 구성과 일·가족 양립의 문제로 규정했다. 인구문제 해법으로, 그들은 아동 가족 및 청년의 삶의 질과 안정성 보장, 성 평등 고용 및 양육지원,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총체적 사회경제정책 개혁, 교육개혁을 제안했다. 한국 정부는 4차 저출산 기본계획에서 인구 담론 전환을 선언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첫째, 저출산 대책에 처음 포함된 성·재생산권 보장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성평등한 노동권 보장정책은 인구문제 해법과 별개가 아니며, 핵심정책이 되어야 한다. 셋째, 아동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책 지원대상의 보편적 확대와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 지원을 적절하게 결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개인 단위 사회정책 지원, 법적 혼인 관계를 넘어서 가족 지원이 필요하다.

주제어 : 스웨덴 인구 담론, 담론 전환, 뮌헨 부부, 인구정책, 저출산정책, 성평등

* 이 연구는 2020년도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저출산 대응정책 패러다임 전환 연구(II) : 저출산 대응 담론의 재구성」의 제5장 중, 저자가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수정한 것임을 밝힙니다.

** 동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교수(dezember26@gdsu.dongseo.ac.kr)

I. 문제제기

이 연구는 1930년대 심각한 인구 위기 상황에서 인구 담론 전환을 이뤄낸 스웨덴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20년 가까이 초저출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저출산 대책의 담론 전환을 시도 중인 한국 사회에 비교사회 정책 관점에서의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오늘날 스웨덴은 1.70-2.0명의 안정적 합계 출산율과 86.1%에 육박하는 높은 유자녀 여성고용률¹⁾을 보이면서, 평생 고용과 부모 됨이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 국가로 평가받는다. 스웨덴 일·가족 양립정책의 방향성과 내용, 긍정적 성과는 많은 국가에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할 때, 준거 및 참고사례로 삼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과 달리, 1920-30년대 스웨덴은 유럽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였다. 당시 유럽은 인구 위기, 종족 절멸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거센 감정적 호소 속에서 여성 통제적 출산장려 담론이 만연했다(Carlson, 1990). 이런 상황에서 스웨덴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는 확연히 다른 길을 선택했다. 당시 인구 담론 전환, 사회정책 개혁을 주도한 것은 뮈르달 부부(Alva and Gunnar Myrdal)였다. 성평등 가족정책을 중심에 둔 오늘날 스웨덴 복지국가 시스템 구축은, 1930년대 인구 위기 속에서 마련된 새로운 인구정책 구상에서 시작됐다고 할 수 있다.

그간 한국에서 저출산 대책 마련과 관련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수단’으로서의 스웨덴 가족정책, 성평등 정책은 빈번하게 검토되었다. 하지만 정책의 기저에 깔린 가치 지향과 원칙, 전략을 포함한 담론은 그다지 관심받지 못했고 충분히 검토되지 못했다.

국내에서 1930-40년대 스웨덴 인구문제와 뮈르달 부부의 정책구상에 주목한 연구는 신정완(2017:2018)의 연구 정도이고, 일본 학자 미야모토 타로의 저서 번역본(2003) 정도이다. 신정완(2017)은 뮈르달 부부의 정책구상에 깔린 경제이론과 철학적 가치에 주목했다. 신정완(2018)은 인구문제와 관련해 발족한 국가연구위원회들의 정책 활동을 통사적으로 서술하고 주요 논쟁을 평가했다. 그 외에 홍기빈(2011), 신광영(2016)은 스웨덴 복지국가, 사회민주주의 사상, 최성은(2016), 장선화(2019)는 스웨덴 일·가정 양립정책에 대한 역사적 고찰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당시 스웨덴 인구문제와 뮈르달 부부의 제안

1) 15세 미만 자녀를 둔 스웨덴 여성의 고용률은 2019년 기준, 86.1%이다 (출처 : OECD Family Database. LMF 1.2 Maternal Employment 중, Maternal employment rates by number of children, 2021년 1월 8일 인출).

을 다루었다.

이 연구는 스웨덴 인구정책의 담론 전환에 주목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담론의 전환이 이루어졌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 연구의 구체적인 질문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뮈르달 부부는 1930년대 스웨덴의 인구문제를 어떻게 개념화하고 규정하였는가?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했고, 원인 진단의 근거는 무엇이었나? 기존의 인구 담론과 어떻게 차별적이었나? 둘째, 뮈르달 부부는 인구문제의 해법인 인구정책의 틀(framework)을 어떻게 구조화하였는가? 어떤 원칙과 가치를 중심에 두고 구성하였으며, 담론의 전환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셋째, 뮈르달 부부의 정책구상은 기존의 담론과 어떻게 공명하며 대체, 조정 혹은 연기되었는가?

연구 질문들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정책을 일종의 담론(policy as discourse)으로 보고, 문제가 정의되고 재현되는 담론 구조에 주목한 바치(Bacchi, 2000)의 접근을 반영하였다. ‘정책’이라는 최종 결과물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첫 출발은 문제 상황에 대한 정의, 문제를 규정하고 공식화하는 것이다. 객관적 수치로 드러나는 사실(fact), 표면적 현상에 주목하면 사회문제는 일견 가치 중립적인 듯 보인다. 하지만 특정 현상이 ‘사회문제’로 만들어지는 과정, 정치적 논쟁에서 문제의 의미가 형성되는 과정(meaning making)에 주목하면, 결코 중립적이지 않음을 확인하게 된다(Bacchi, 2000).

인구문제 역시 인구수, 인구구조 등 드러나는 현상에만 주목하면 가치 중립적인 문제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다른 어떤 사회정책들보다 정치적·이념적 행보 속에 위치해 왔다. 과거부터 인구수는 국가 등 공동체의 힘과 영향력, 노동력을 통한 국부(國富)수준을 보여주는 것으로 중요한 정치적 관심사였다. ‘인구=국력’이라는 논리, 국가경쟁력 강화 목적의 총인구, 출생아수에 대한 관심이 출산장려로 이어진 사례는 프랑스, 1920년대 이탈리아 파시스트 정부, 1930년대 독일 나치, 최근 러시아 푸틴 정부 등 다수 국가에서 발견된다.

또 다양하고 복합적인 사회 구조적 원인이 얹혀 있는 인구문제의 속성상 정치적 이념, 가치에 따라 문제 규정과 해법이 달라 사회갈등의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출생 감소라는 객관적 상황을 두고 국가 위기, 안보 위기 혹은 가족 위기 등으로 문제화하는 것, 어떤 문제는 드러내고 어떤 문제는 감추는 것, 어떤 제안은 채택하고 어떤 제안은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인구 현상이 문제화되고 정책화되는 과정이 지극히 정치적인 과정임을 보여준다.

이 연구가 특히 뮈르달 부부의 인구정책 구상을 분석하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인구 현상을 둘러싼 매우 논쟁적이고 민감한 딜레마들을 다루는 방식이다. 출산 증가를 옹호하는 출산장려(pronatalism)는 피임, 낙태 옹호와 양

립할 수 있는가? 여성의 몸, 재생산(reproduction)에 국가가 개입하는 출산 장려는 여성의 인권, 페미니즘과 양립할 수 있는가? 아동 수(quantity)를 늘리려는 정책 방향은 아동 삶의 질(quality) 제고와 양립할 수 있는가? 이 문제들은 현재 한국 사회의 저출산 문제 논의과정에서도 충분히 해소되지 못한 딜레마들이다. 뮈르달 부부는 인구정책 구상 속에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 딜레마들을 해결하고자 했다. ‘출산장려’, ‘인구문제, 인구정책’이라는 보수적 색채의 논쟁적 수사가 어떻게 새로운 방식으로 재규정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 검토와 역사적 고찰이다. 1930년대 전후 스웨덴의 인구 상황, 정치적 지형, 정책 변화 등 역사적 사실을 담은 문헌(Carlson, 1990; Källemark, 1980; Stanfors, 2014 등), 뮈르달 부부의 인구정책 구상이 담긴 문헌들과 그에 대한 소개 및 비평 연구들을 분석자료로 활용했다. 「인구문제에서의 위기」(Myrdal & Myrdal, 1934)는 스웨덴어 버전으로만 접근 가능해, 그 내용을 영어로 소개한 군나르 뮈르달의 논문들(Myrdal G., 1938:1940:1987), 가족 및 젠더 이슈에 특히 주목한 알바 뮈르달이 1941년 발간한 저서 「국가와 가족(Nation and Family)」²⁾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1930년대 스웨덴의 인구 및 사회·경제적 상황과 기존의 인구 담론 지형을 살펴보고, 뮈르달 부부는 당시 상황을 어떻게 문제화했는지 검토한다. 3장에서는 뮈르달 부부가 인구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정책구상의 핵심 원칙과 전략을 검토함으로써, 인구정책을 어떻게 개념화했는지, 인구정책을 통해 어떤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고자 했는지, 앞서 제시한 여러 딜레마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분석한다. 4장에서는 뮈르달 부부의 정책구상이 실제 공론화, 정책화되는 지형을 분석하고, 5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한국의 저출산 담론 구성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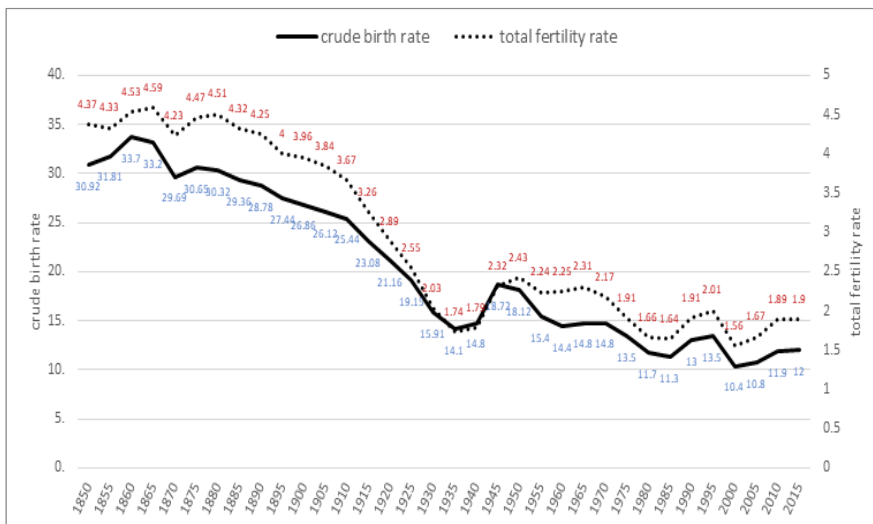
II. 인구 담론 전환의 배경과 인구문제 규정

1. 1930년대 스웨덴의 출산율 감소 및 사회·경제적 상황

1930년대 스웨덴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인구문제였다. 사실 출산율 하

2) 초판은 1941년에 발간되었는데, 1968년 발간한 paperback 판을 검토했다.

락은 19세기 후반부터 산업화가 진행됨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관찰된 현상이었으나, 스웨덴 출산율 저하는 특히 현저했다(Carlson, 1990:2-4; Källemak, 1980:38-9). 출산율이 저하되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부터였다. 1899-1901년 조출생률(crude birth rate)이 26.8이었는데, 1901-05년 26.1, 1916-20년 21.2, 1926-30년 15.9로 계속 감소했고(Myrdal, 1939: 725), 1933년에는 13.8을 기록했다(Myrdal, 1940:45). 1850년부터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추이를 제시한 [그림 1]에도 1930년대 중반 출산율 급감은 명확히 드러난다. 1930년대 초반 무렵, 스웨덴은 유럽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가진 국가가 되었다.³⁾



주: 조출생률(crude birth rate)은 15-49세 여성 1,000명당 연간 출생아 수임. 특정 1년간의 총 출생아 수를 당해연도 해당 연령 여성 수로 나눈 수치를 1,000분율로 측정함.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은 15-49세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나타내며 연령별 출산율의 총합으로 측정함. (출처 : 통계청 통계표준용어 및 지표 설명)

자료: UN DESA ; Gapminder가 제공한 Total fertility rate/Crude birth rate in Sweden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원출처는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19임. (2021년 1월 28일 추출)

[그림 1] 스웨덴의 합계출산율, 조출생률 추이 (1850-2015년)

스웨덴에서는 비교적 늦게 산업화가 시작됐지만, 1870년대 이후에는 급속하게 진행됐다. 1870년 스웨덴은 농업인구가 전체의 70%를 넘었는데, 1910

3) 1931-35년 다른 나라의 조출산율 값은 다음과 같았다. 벨기에 16.8, 덴마크 17.7, 독일 16.6, 웨일스 15.0, 핀란드 19.5, 프랑스 16.5, 이탈리아 23.3, 네덜란드 21.1, 노르웨이 15.2, 스위스 16.4(Fujita, 2009 : 88).

년에는 50% 이하로 떨어졌고, 1930년대 후반에는 1/3에 미치지 않게 되었다. 도시화도 급속하게 진행됐는데, 1900년 21.5 %에 불과했던 도시 인구는 1934년 34%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1840년부터 1930년까지 스웨덴 전체 인구의 약 1/4이 미국 등 북아메리카로 이주했다(Carlson, 1990). 1930년대 들어 대공황의 여파가 스웨덴까지 이르고, 1931년에는 실업률이 25%를 넘어섰다. 1932년에는 경제위기에 거의 속수무책인 상황이 되었다(Fujita, 2009:76).

Källemark(1980: 40-50)는 1930년대 스웨덴의 출산율과 결혼율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첫째, 출생률이 급격히 하락하고 인구 재생산율이 100%대를 밑도는 심각한 상황이었다. 둘째, 지역 간 출산율이 분명한 차이를 보였는데, 북부에서는 이전과 동일하게 높은 출생률이 유지되고 있었지만, 남부는 낮은 출산율을 보였다. 셋째, 농촌에 비해 도시 지역의 출생률 하락세가 뚜렷했다. 넷째, 소득이나 사회적 지위 등 사회경제적 변수와 출산율 간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은 대체로 출산율을 유지한 데 반해, 중간층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다섯째, 결혼의 일반화, 조기화 경향이 나타났다. 혼인율의 완만한 상승은 20세기 들어 나타난 새로운 현상이었지만, 동시에 출산을 회피하는 사람도 증가했다. 당시 스웨덴 출산율 저하는 주로 기혼 부부의 급속한 출산 감소에 기인했다. 15-45세 기혼여성 천 명 기준 출생아 수가 1900년 274명에서 1933년 114명으로 감소했는데, 스톡홀름을 중심으로 한 도시에서 현저했다.

2. 1930년대 스웨덴의 출산율 감소 및 사회·경제적 상황

당시 출산율 감소는 스웨덴만의 문제는 아니었으며, 1918년 이후 서유럽에서는 출산장려 운동이 가시화되었다. 그 기저에는 유럽 백인의 출산율 감소, 유색 인구증가에 대한 염려, 두려움 등 민족주의적 감성, 동기가 자리 잡고 있었다(Carlson, 1990:xiii). 스웨덴에도 신멜터스주의, 우생학 등 유럽 사회에서 유행한 인구 담론들이 등장했다. 1930년대 인구 위기가 스웨덴 사회 전체의 관심을 끌 만한 국가적 쟁점이 되면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크게 정치적 이념을 기준으로 두 부류의 담론 지형이 형성됐다.

한 축에서, 우익당(höger)을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자들이 출산율 하락 상황을 국가, 민족 존립 위기로 문제화하며 정치적으로 쟁점화했다(미야모토, 2003:94). 특히, 극우 집단은 인종위생학(race-hygiene)을 근거로 스웨덴인

의 우수한 유전적 자질 보호를 위해, 자민족에 제한된 출산장려를 피력했다(Carlson, 1990:18-20).⁴⁾ 이들은 인구문제를 개인의 윤리, 도덕, 가치의 문제로 환원했다. 도시화, 산업화의 부작용으로 성적 윤리, 가족 윤리가 흔들리면서 성적 문란, 출산 기피 현상이 나타났고, 이것이 스웨덴 민족의 혈통과 존립 자체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비혼, 피임을 죄악이라고 여겼고, 기혼여성의 역할을 가족, 육아에 한정하면서 고용에 반대했다.

따라서 인구 위기 해법은 피임 규제, 출산장려를 위한 징벌적 정책 도입 등 개인의 재생산 행위를 규제하는 것이었다. 우익당 집권 시기인 1910년과 1911년에 제정된 피임방지법(preventivlag)이 대표적이다. 이 법에 따라, 신문이나 라디오를 통해 피임기구를 광고, 제공하는 것이 금지됐다(Kälvemark, 1980:50-51).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 시작되자, 1934년 보수당은 공공부문에서 기혼여성의 고용을 금지하자는 법안을 9개나 발의했다(홍기빈, 2011:218).

다른 한 축에 있던 진보 진영은 인구문제의 과도한 정치 쟁점화를 강하게 경계하며, 모호하고 수세적인 입장을 취했다(홍기빈, 2011:210). 이러한 입장은 단지 정치적 고려 때문이 아니었다. 당시 사민당, 노동운동에 강력한 사상적 영향을 미쳤던 신멜더스주의(Neo-Malthusianism)에 기인한 것이었다. 신멜더스주의는 다산(多産)이 빈곤과 실업의 핵심 원인이기 때문에, 만혼과 피임 등을 통해 출산율을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겼다. 이들에게 출산율 저하는 생활 수준의 상승이나 고급문화의 지표로도 여겨졌다. 마르크스의 과잉노동론과도 연결돼, 인구증대는 노동력 가치를 억제하고 생활 수준 상승을 억제하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는 사고가 노동운동 전반에 만연했다(미야모토, 2003:94).

신멜더스주의자들은 1910년, 1911년에 제정된 피임방지법의 폐지, 임신 중지의 부분적 합법화 등을 주장했다(Myrdal, & Myrdal, 1934: 26-49; Carlson, 1990: 11-15). 이는 이후 스웨덴에서 피임, 임신 중지 등 재생산권을 둘러싸고 비교적 사회적 합의가 수월했던 배경으로도 작용한다. 1934년

4) 우생학(eugenics)이 극우, 보수당의 전유물은 아니었다. 1900년대 초부터 유럽대륙 및 영국, 미국 등에서 신생 과학으로 존중받았고, 스웨덴에서도 좌우 진영을 막론하고 널리 수용되었다. 뫼르달 부부는 민족, 사회계층 간 유전적 자질의 차이를 주장하는 우생학, 그 대표 사례인 독일 나치즘은 사이비 과학이라고 비판하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지적장애인,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우생학적 근거를 들어 불임 유도과 강제를 옹호했다(Myrdal, Alva & Gunnar, 1934: 67-70; 신정완, 2017 재인용). 이 사실은 1997년 언론인 자렘바(Zaremba)의 보도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고(메리 힐슨, 2010: 115), 이들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중요한 근거로 작용한다.

보수당의 발의로 공공부문 여성고용 금지 법안이 발의되었을 때, 사민당과 자유당은 여성운동과 단결해 이에 반대하는 대중 집회를 열고 저지 노력을 했다(홍기빈, 2011:218).

3. 뮈르달 부부의 인구 담론 전환 시도 - 인구문제 규정과 원인 진단

1900년대 초반 사회경제적 위기와 출생률 감소에 대해, 정치이념으로 양분되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대응하는 상황에서, 뮈르달 부부의 저서 「인구문제에서의 위기」가 출판됐다. 뮈르달 부부는 보수와 진보 양측의 인구문제 인식을 모두 비판했다.

보수 진영에 대해서는, 인구문제를 성 모럴로 환원시키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출산장려를 위해 규제적, 통제적 수단을 동원해 여성을 가사노동에 묶어두려 하고 개인의 생활양식을 강제로 과거로 되돌리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며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Myrdal & Myrdal, 1934: 164-172). 진보 진영에 대해서는, 인구감소의 장기적 영향을 도외시켰다고 비판했다. 인구증가가 노동력 가치 저하와 삶의 질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이유로 인구감소를 환영하는 사고, 급진전 중인 기술발전에 대한 고려 없이 자연 인구와 고용을 직접 연결하는 사고는 근시안적이라고 지적했다. 군나르 뮈르달은 출산율 저하가 초래할 장기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우려했다. 단기적으로는 바람직한 경제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그것을 압도하는 수준의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망했다(Myrdal G., 1940; Fujita, 2009: 81-83 재인용).

보수 진영은 출산율 감소 상황을 사회문제로 인식했지만, 문제 규정이 민족주의, 인종주의, 성차별주의에 기반하여 문제를 규정했다. 진보 진영은 신멜테스주의에 기반하여 출산율 감소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 정치이념에 기반한 양극단의 문제 인식 오류를 비판하며, 뮈르달 부부는 문제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문제를 규정하고자 했다. 그들은 스웨덴 국민의 고용, 가구소득과 지출, 주거, 영양 섭취, 결혼과 이혼, 출산 등에 대한 객관적 통계자료를 제시하면서 생활여건과 삶의 질 전반의 실태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인구문제의 진정한 원인은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사회 자체의 복합적인 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의 변화, 의식의 변화에 있음을 규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주택문제, 청년 실업 문제, 출산과 육아 비용 문제 등이 출산 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음을 발견했다(Myrdal & Myrdal,

1934; Myrdal A., 1968).

첫째, 열악한 주거 환경을 지적했다. 군나르 뮈르달은 도시의 노동자 계급이 사는 과밀, 불량 주택이 그 가족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다. 당시 스웨덴은 급속한 도시화가 이루어졌지만, 도시 지역의 주택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그 결과 도시 거주자들의 주거 환경은 매우 열악했다. 1930년대 초, 스톡홀름에서는 35.5%가 단칸방에 살았고, 25.7%가 방 2개가 있는 집에 살았다. 목욕탕, 샤워 시설도 없는 주택은 전체의 85%에 달했다. 스톡홀름 다음으로 큰 도시인 예테보리(Göteborg)의 경우, 1인당 거주면적이 5평에 불과했다. 뮈르달 부부는 과밀하고 열악한 주거상황이 가족을 늘리는 데 큰 장애가 된다고 지적했다(Myrdal & Myrdal, 1934: 125-151; 미야모토, 2003: 95 재인용). 이후 주택위원회를 통해 심층 조사한 결과, 아이가 많은 가족은 다른 가족보다 주거 환경이 더 열악하고, 이는 성인보다 아동에게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Myrdal, 1938: 212).

둘째, 실업 문제의 악영향 특히, 청년실업의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실업은 25세 이하의 노동자에게 집중되었고, 이것이 출산 의향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했다. 주거 환경도 열악하고, 실업으로 미래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젊은 부부가 출산을 기피하는 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행동이라고 보았다. 출산·육아 비용을 감당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도 함께 지적했다(미야모토, 2003: 95-6).

셋째, 가족 내에서 아동은 추가적인 노동력이 아니라, 추가적인 비용(cost)이자 부담(burden)이 된 현실을 지적했다. 무자녀 가구와의 소득·지출 비교를 통해, 유자녀 가구가 경제적으로 희생하고 있고 자발적 빈곤 선택을 요구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양육비용은 증가하는데, 소득은 정체되어 출생 아동 수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Myrdal A., 1968: 126). 뮈르달 부부는 아동 가족의 어려움, 아동 양육비용의 문제를 ‘계급’ 이슈가 아니라, 연령, 소득수준, 결혼지위 등과 관계없이 모든 시민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넷째, 뮈르달 부부는 객관적인 경제 여건뿐 아니라, 여성들의 변화된 인생관이라는 ‘주관적인’ 요인도 출산 감소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과거에는 경제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출산을 많이 했으나, 이제 여성도 고용을 통해 생활 수준 향상을 기대하게 되었다. 여성의 전통적 역할, 덕목으로 여겨졌던 출산과 육아가 이제는 새로운 인생관을 실현하는 데 장애로 여겨지고 있었다. 그에 따라 자발적 출산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출산을 저하가 고소득층, 저소득층보다 중산층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주관적 의식변화의 영향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당시 스웨덴 국민의 결혼연령은 상당히 높았는데, 알바 뮈르달은 충분한 경

제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전까지 결혼을 연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1935년 기준 스웨덴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28.82세, 여성이 27.12세였다. 비혼 비율도 매우 높았는데, 1930년 센서스 자료에 따르면, 15세 이상 스웨덴 인구 전체의 44%가 독신이었고 이 중 약 9%만이 이혼, 사별로 인한 독신이였다(Myrdal, A. 1968: 35).

뮈르달 부부는 스웨덴 출산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결혼한 부부의 출산 기피임을 밝혔는데, 그 원인을 아이를 갖게 되면 여성이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구조에서 찾았다. 일반적으로 1900년대 초반 스웨덴의 여성 노동시장 참가율은 그다지 높지 않았고, 여성고용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라고 평가된다. 여성고용률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일·가족 양립의 어려움으로 인구문제를 규정하는 것은 의아할 수 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 인식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을 보면, 당시 전체 여성의 고용률은 30% 수준에 머문다.

〈표 1〉 스웨덴 15세 이상 여성 고용률 추이, 1920-60년

(단위 : %)

연도	모든 여성 (all women)	미혼 여성 (single)	기혼 여성 (married)	결혼한 적 있는 여성 (previously married)
1920	26.9	52.4	3.8	24.6
1930	30.7	56.8	8.0	27.3
1940	29.3	58.2	9.3	26.4
1945	28.0	60.0	10.1	26.8
1950	29.5	61.7	14.1	29.1
1960	32.0	53.8	23.3	28.3

주: 풀타임 비농장 직종(non-farm occupations) 임금 노동(gainful employment) 종사비율.

자료: Silenstam (1970:105). Stanfors(2014: 518)에서 재인용.

하지만 결혼 상태에 따라 구분해 보면, 미혼과 기혼의 고용률 차이는 확연하게 나타난다. 미혼여성의 고용률은 50%를 넘고, 결혼과 함께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역사적 관점에서 여성 고용률을 분석한 Stanfors(2014)는 간과된 상당수의 파트타임 노동자, 농장 관련 일 종사자,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수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특히, 농촌 지역 여성 고용률이 과소 평가됐는데, 1920년 스웨덴 농촌의 여성 고용률이 19%였던 데 반해, 도시의 여성 고용률은 43%였다(Stanfors, 2014: 518, 533).

〈표 2〉는 남편 소득수준에 따른 부인의 임금노동 참여 비율을 보여준다.

〈표 1〉에서는 1930-40년대 기혼여성 고용률이 10% 미만이었으나, 〈표 2〉를 보면 남편의 소득수준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성역할 규범이 강력한 상황에서도, 경제적 이유로 맞벌이를 해야 하는 가족의 수가 상당했음을 보여 준다.

〈표 2〉 남편 소득수준에 따른 부인의 임금 노동 참여 비율

(단위 : %)

	남편 소득(crs.)					
	2,000 미만	2,000-2,999	3,000-3,999	4,000-5,999	6,000-9,999	10,000 이상
부인 임금 노동 비율	32.8	33.3	28.6	21.7	17.6	14.6

자료: 1935-36년 센서스 자료. Myrdal A., 1968: 408

〈표 3〉은 기혼여성의 고용 지위에 따라 무자녀 비율과 평균 자녀 수가 얼마나 차이를 보이는지 제시한다. 고용되지 않은 여성과 비교해, 고용된 여성의 무자녀 비율은 2배로 증가했다. 평균 자녀 수도 약 1명의 차이를 보였다.

〈표 3〉 기혼여성 고용 지위별 무자녀 비율과 평균 자녀 수

(단위 : %)

기혼여성의 고용지위	무자녀 가족 비율	평균 자녀 수 (유자녀 가구만 포함)
전체 혼인 기간 동안 완전고용(fully employed)	39.4	2.06
전체 혼인 기간의 절반 동안, 완전고용	30.7	2.10
전체 혼인 기간 동안 부분적 고용(partly employed)	26.7	2.75
혼인 생활 중 일부 기간 고용(some employment)	22.5	2.68
혼인 생활 동안 전혀 고용되지 않음	18.3	2.92

자료: 1935-36년 센서스 자료. Myrdal A., 1968: 407

같은 현상을 보면서, 보수주의자들은 변화된 생활양식과 가치관이 가족 가치와 국가의 존립을 위협하는 문제로 규정했고, 기혼여성의 고용을 금지하려는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뮈르달 부부는 가족 보호, 출산 장려라는 명목하에 여성의 고용을 금지하는 조치는 가족을 보호할 수도 없고, 출산을 증가시킬 수도 없다고 보았다. 제대로 보호 조치도 하지 않은 채 산업 변화의 광풍 속에 여성 노동자들을 내버려 둠으로써, 이들을 강요된 독신(forced celibacy), 강요된 무자녀(sterility) 상태로 내몰고 있다고 보았다. 이것은 사회가 현 상황을 스스로 조정할 능력이 없음을 보여주는 신호였다. 만일 사회가 결혼, 출산

과 같은 가족 형성을 장려하고자 한다면, 남성과 여성에게 가족을 구성할 자유를 부여하고, 일하는 여성에게 결혼하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Myrdal A., 1968: 121).

요컨대 뮈르달 부부는 인구문제를 아동, 가족의 삶의 문제, 가족 구성과 일·가족 양립의 문제로 규정했고, 해법으로 아동 가족 지원을 중심에 둔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을 제안했다. ‘출산장려’에 부착되어 있던 보수성을 ‘사회경제적 개혁’이라는 진보성과 연결함으로써, 보수와 진보로 양분된 인구 담론 지형을 전환했다고 할 수 있다.

Ⅲ. 뮈르달 부부의 인구정책 구상 - 담론 전환의 방향성

이제 뮈르달 부부가 인구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정책구상의 틀(framework)이 어떻게 구조화되었는지 살펴본다. 인구정책을 어떻게 개념화했는지, 어떤 원칙과 가치를 중심에 두고 구성하였는지, 앞서 언급한 여러 딜레마를 어떻게 다루었는지 검토한다.

1. 인구정책 규정(framing population policy)

1) 민주적 인구정책은 개인, 가족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

1930년대 당시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은 출산장려를 위한 피임, 낙태 등에 대한 직접적 통제, 기혼여성 고용 규제, 대가족에 유리한 복지 및 조세제도 도입, 이민 규제 위주였다. 표면적 현상에 천착하고 보수적 이념을 고수한 해법이었다. 뮈르달 부부는 새로운 인구정책을 제안하면서 기존의 국가주의, 인종주의와의 분리를 선언했다. 그들의 인구정책 구상에서 중요한 전제는 민주주의 준수였고, 개인과 가족의 권리와 행복이었다.

뮈르달 부부의 저서에는 ‘민주주의 규범’, ‘민주적 인구 프로그램’ 등의 용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군나르 뮈르달은 스웨덴의 인구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독재국가⁵⁾의 접근과 달라야 하며, “독재국가에서의 인구정책의 목표는 자손 번식을 촉진하는 것(stimulate breeding of children)이나, 우리는 오직 평범한 사람들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욕구 실현을 가

5) 우생학에 기반해 출산장려를 주창했던 독일, 이탈리아 파시즘 체제를 지칭한다.

로막는 방해물을 제거하고자 한다(Myrdal G., 1938: 208)”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알바 뮈르달은 국가의 적정인구수 유지를 위해 특정한 출산 수준이 필요하지 않으며, 중요한 것은 가족 관점에서 이상(ideal)으로 생각하고 원하는 자녀의 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되, 다만 그 선택이 사회경제적 제약으로 인한 것이라면, 사회정책 개혁을 통해 개인, 부모가 원하는 것과 사회가 원하는 것 간의 균형을 이뤄갈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그가 ‘민주적 인구정책(democratic population program)’이라고 지칭하면서 새롭게 제시한 아이디어는, 인구정책의 목표가 사실(facts)과 가치(value) 양자로부터 추론한 결과로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인구정책의 목표는 고정적이지 않고, 이념에 의해 선택적으로 규정되지 않아야 한다. 여러 목표가 충돌하는 딜레마 상황이 발생할 경우(예컨대 출산율 증가 vs 피임 옹호), 민주적 인구정책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주목해 풀어가야 함을 의미한다(Myrdal A., 1968:103-4). 객관적 생활조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survey), 통계분석, 주관적 가치의 변화 탐색 등을 통해 인구문제의 원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 그에 따라 정책 목표와 방향을 수립한 뮈르달 부부의 시도는 기존의 이념에 치우친 주장들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이었다.

당시 보수적 출산장려주의자들이 저출산 문제를 개인의 이기심,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의식을 상실한 윤리적 타락으로 규정하며 비난할 때, 뮈르달 부부는 “출산을 국가에 대한 의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서는 안 되며, 자녀는 오직 자신의 행복을 위해 가져야 한다”고 했다(Myrdal G., 1938: 204). 인구정책은 개인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규범을 훼손하지 않고 개인과 가족의 태도,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를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분명히 했다. 오늘날까지도 출산문제를 국력, 경제 등 거시적 차원으로 논의하는 상황에서, 1930년대에 인구문제, 출산문제를 개인, 가족의 복지, 행복의 이슈로 제시한 것은 획기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출산은 국가가 강요할 수 없고, 자녀를 몇 명 가질 것인지는 개인의 자유 선택으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은 ‘자발적 부모 됨(voluntary parenthood)’ 원칙에 반영됐다. 알바 뮈르달은 1941년 저서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개인의 선택을 “국가도, 교회도, 고용주도, 부모도 간섭해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인권(human right)”이라고 했다. 출산을 의무, 애국과 연결해 권고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며, 출산과 관련해 국가가 개입하고자 한다면 그 이유를 분명히 제시해야 하고 그때도 (인권의 범위를 넘어선) 권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 세계적으로 오랫동안 국가 주도의 통제적 담론 속에 존재해 왔던 임신, 출산의 문제가 개인의 인권 문제로 전환된 기점은, 1994년 카이로에서 개최된 국제인구개발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였다. 이때 “인구정책의 목표는 인구수 조절, 국가발전에서 개인의 욕구와 권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정책의 중심에는 재생산권⁶⁾을 포함한 인권, 삶의 질 향상, 성평등, 여성 권한 강화가 놓여야 한다”는 선언이 이루어졌다(UN, 1994; UNPF 2014; 김영미, 2018 재인용). 물론 카이로 회의 이전부터 인구정책의 목표, 담론 전환을 시도하기 위한 노력이 존재했지만, 그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스웨덴의 뮈르달 부부는 국가주의에서 개인의 욕구, 권리 관점에서의 인구 담론 전환을 선포했다.

2) 인구정책은 모든 사회정책을 아동·가족친화적으로 재편성하는 것

뮈르달 부부는 인구문제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을 별개의 정책 영역으로 보지 않았다. 전체 사회가 지향(해야)하는 목표, 가치와 별개로 검토될 수 없고, 전체 사회정책과 ‘유기적인 전체’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인구 문제는 특별한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정책의 방향을 전환하고 강화하는 것(intensification and redirection of social policy)이라고 규정했다(Myrdal, 1968: 113).

출산율 감소 현상 이면에 놓인 사회경제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철저히 조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인구정책이 전체 사회정책과 유기적인 전체로 통합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의 보수적 출산장려주의자들과 분명한 차별성을 보이는 지점이요, 동시에 인구문제에는 무관심했으나 복지국가 강화를 원했던 사민당의 수용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었던 지점이었다.

전체 사회정책을 재편성하는 방향은 ‘아동·가족 친화적’ 전환과 지원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Myrdal G., 1940: 207; Myrdal A., 1968: 113). 아동을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던 상황에서, 뮈르달 부부는 아동을 국가의 최고 경제적 자산이라고 보았다.⁷⁾ 아동 양육이 가족 소관, 여성 책임이

6) 카이로 행동강령은 자유롭고 책임감 있게 자녀의 수, 간격 및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수단을 가질 권리, 최고 수준의 성 건강(sexual health)과 재생산 건강(reproductive health)을 확보할 권리로 재생산권리 개념을 정의했다.

7) 아동을 국가의 미래 자산, 노동력으로 보고 사회투자를 강조하는 관점은, 2000년대 이후 리스터(Lister, 2003) 등에 의해 현재 시민으로서의 아동으로 보지 않고 도구화한다는 비

라는 생각이 만연했던 현실에서, 아동에게 안정적 삶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국가와 사회에 있고, 아동을 위한 지출은 ‘사회 투자(social investment)’라고 피력했다. 알바 뮈르달은 1968년, 「국가와 가족(Nation and Family)」 새로운 판의 서문에서, 출산장려 접근(pronatalist approach)과는 구별된 ‘적극적 가족정책(positive family policy)’이라는 틀 속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았다(Myrdal A., 1968: xviii).

인구감소 문제는 사회 전체 구조를 개선하고 관리한다는 차원, 즉 예방적 사회정책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고, 아동과 가족에 대한 투자가 대표적인 예방적 사회정책이라고 여겼다. 당시 다수의 빈곤한 가족들이 구빈법, 자선기관의 사후적 구제에 의지했던 상황에서(Kälvemark, 1980: 50) 아동, 가족에 대한 예방적 정책 아이디어는 새로운 전환적 관점이었다. 그것은 ‘사회적 공정’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할 뿐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Myrdal & Myrdal, 1934: 197; Myrdal G., 1938). 군나르 뮈르달이 사용한 ‘생산적 사회정책(productive social policy)’, ‘예방적 사회정책(preventive social policy)’ 개념은 스웨덴 복지국가의 원형적 토대가 되었다.

이때 아동 지원정책은 빈곤층에 한정된 선별적 방식이 아니라, 소득과 상관 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방식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원은 가족 규모를 고려해 더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하는데, 수평적 재분배를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알바 뮈르달은 이 부분을 “민주적 인구 프로그램에 내포된 경제혁명(economic revolution)”이라고 표현했다(Myrdal, 1968 : 126).

요컨대 뮈르달 부부는 인구정책이 모든 사회정책을 아울러야 하고, 아동 가족 친화적으로 재조정되고 전환되어야 한다고 했다. 보편적인 예방적 사회투자정책으로서의 인구정책은 경제정책으로서도 작동 가능했다. 그들은 아동 가족 친화적 방향 전환을 위한 방안으로 아동을 위한 소비·지출의 사회화와 돌봄의 사회화를 제안했다.

첫째, 아동의 욕구를 사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출산 및 양육, 교육, 주거, 음식, 의복, 의료서비스 등 아동 양육과 관련된 제반 비용을 사회화하는 방안들을 포함했다. 이를 위한 개혁 방향은 개별 아동 가족의 양육 비용을 줄여주는 동시에, 아동들 사이에 존재하는 격차를 줄임으로써 계급 평등화를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함을 강조했다(Myrdal A., 1968: 126). 이와 함께 아동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주장했다. 의료서비스

판을 받았다. 하지만 아동 권리 개념조차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던 1930-40년대 상황에서 아동의 삶의 질, 복지에 대한 공적 지원과 투자를 주장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를 개선하고, 엄마와 아동의 생활조건, 위생, 영양 상태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둘째, 보편적 공공 보육·교육 시스템을 주장했다. 보편적 공공 보육·교육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젊은 부부의 양육 부담을 덜고 여가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알바 뮈르달은 결혼하고 자녀가 생기면서 여가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 자녀를 낳지 않고 적게 낳는 원인 중 하나라고 보았다. 따라서 보육 기관의 운영시간을 저녁, 밤, 주말, 휴가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부모가 밤에 나간 사이, 개인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방문해 아이를 돌보는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Myrdal A., 1968: 122-5). 셋째, 시민의 삶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도 제안했다. 여기에서 핵심은 실업, 고용불안이었다. 따라서 실직자 가족 지원, 고용 지원과 같은 고용정책도 인구정책이 포괄했으며, 생산적 사회정책으로 기능하게 했다.

2. 인구정책 구상의 핵심 원칙

정책의 방향과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은, 정책에 내포된 원칙과 가치이다. 뮈르달 부부는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구상하면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원칙이라고 지칭하거나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정책구상 전반에 깔린 3가지 주요한 원칙들을 확인했다. 주요 원칙은 자발적 부모 됨, 아동 삶의 질에 대한 사회투자, 성평등이다.

1) 자발적 부모 됨(voluntary parenthood) 원칙

출산 증가를 주장하는 뮈르달 부부의 인구정책 구상의 중심에는 출산과 부모 됨이 개인의 선택, 자유로 인정돼야 한다는 ‘자발적 부모 됨’의 원칙이 놓여 있다. 이 원칙은 구체적으로 피임, 출산 제한과 낙태 옹호로 구현된다. 그들은 부모가 원치 않는 자녀를 억지로 출산하도록 함으로써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를 거부했다(Myrdal & Myrdal, 1934; Carlson, 1990: 87).

먼저, 뮈르달 부부는 피임을 적극적으로 옹호했는데, 피임을 대중화해서 원하지 않는 아이의 출생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했다. 군나르 뮈르달은 실제로 다수 기혼자가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임을 규제해 출산율을 높이려고 하는 방식은 적절하지도, 효과적이지도 않다고 보았다(Myrdal G., 1938: 211-212). 알바 뮈르달은 1910년 제정된 피임방지법(피임약 판매, 광고 금지)으로 인해 사람들이 더 위험하고 효과적이지 않은 피임 기법에 의존하

고 있고, 상당수가 낙태를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Myrdal A., 1968: 197).

자신은 피임을 하면서, 타인의 피임 권리를 규제하는 것은 위선적이며, 시민의 동등한 권리를 부인하고 계급 특권을 보존하려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따라서 모든 시민에게 피임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피임 실천을 위한 상담과 기술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 사회의 의무라고 보았다(Ibid, 109-10).

출산장려와 피임 옹호는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본다면 상충하는 목표다. 하지만 뮈르달 부부는 피임법을 안전하고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대중화해 원하지 않는 자녀 출생은 줄이되, 시민들이 원하는 시점에 더 아이를 가질 기회를 제공함으로써(Myrdal A., 1940: 218), 두 가지 상충하는 목표를 함께 달성하고자 했다. 피임에 관한 정보 확산을 막는 모든 법률과 규제를 폐지하되, 모든 아동, 청소년에게 피임에 대해 구체적인 지식을 제공하고 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성에 관한 관습, 관념을 사회적으로 재조정하는 경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Myrdal A., 1968: 115). 이와 같은 내용은 1994년 카이로 국제인구개발회의의 행동강령에 담긴 ‘성·재생산에 관한 건강과 권리’와 연결된다.

1936년, 스웨덴 인구위원회는 『섹슈얼리티 문제에 관한 보고서(Reports on the Sexual Question)』에서, 피임이 정상적인 자녀 수를 원하고, 출산 간격이 중요한 결혼생활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옹호하는 입장을 발표했다. 출산 제고 목적을 위해 피임을 방해, 금지하는 것을 비판했고, 1910년 제정된 피임방지법의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합리적인 피임 정보 제공을 위해 학교, 성인 교육기관에서 포괄적 성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Myrdal G., 1938: 212).

적극적으로 옹호한 피임과 달리, 낙태에 대해서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으로 옹호했다. 그들은 낙태를 인간 비극(human tragedy)이자 가족생활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사회 실패(society's failure)로 규정했다. 법적이고 안전한 낙태를 지지한다고 하면서 의학적, 유전적, 윤리적(강간, 근친상간) 이유의 낙태는 옹호했지만, 사회경제적 이유에서의 낙태는 조심스럽게 반대했다. 대신, 보편적인 성교육 실시, 피임약제 보급, 낙태 상황까지 이르게 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급진적인 개혁을 주장했다(Myrdal & Myrdal, 1934; Carlson, 1990: 87).

낙태 문제는 늘 치열한 논쟁의 중심에 놓여 있었고, 출산장려와 낙태 옹호간의 상충성은 풀리지 않는 난제였다. 1921년 의학적 사유로 인한 낙태를 합법화하는 법률이 개정되기 전까지, 스웨덴에서 낙태는 불법이었고 징역형, 강

제노역형의 중범죄로 처벌받았다(Hatje, 1974; Källemark, 1980: 51). 1934년, 낙태 허용 사유 확대를 원하는 사민당, 공산당 출신 국회의원들의 요구로 낙태위원회(Abortkommitté)가 발족했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의학적 이유 외에 윤리적, 우생학적(유전적 질환), 사회적 이유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우익당은 허용 범위 확대에 반대했고, 좌파 성향 여성운동 단체들은 낙태 처벌 반대와 사회적 이유까지 허용하는 방안에 찬성했다. 알바 뢰르달은 낙태 여성에 대한 처벌 금지는 찬성했으나, 사회적 이유 포함에는 반대했다⁸⁾. 1938년 법률이 개정됐고, 사회적 이유 대신 ‘사회의학적 이유’⁹⁾가 포함됐다(신정완, 2018: 115-116).

정리하면, 뢰르달 부부는 인구정책의 핵심 원칙으로 자발적 부모 됨 원칙을 제시해, 부모의 재생산권리가 출산장려보다 우선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피임 문제에서는 이 원칙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나, 낙태 문제에서는 소극적이었다(Hatje, 1974: 32ff; Källemark, 1980: 57). 스칸디나비아 전역에서 피임, 성교육 캠페인을 이끈 Elisa Ottesen-Jensen은 “인구위원회가 피임 문제에서 지지했던 자발적 부모 됨의 아름다운 원칙을 낙태 문제에서 스스로 다리를 걷어차다”고 비판했다(Herman, 1992: 94). 이와 같은 여성주의 단체들의 비판을 상쇄할 수는 없지만, 뢰르달 부부는 사회경제적 이유의 낙태를 허용하기 전에 여성(특히, 임신한 여성)의 사회경제적 삶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여겼다.

그들은 성교육, 피임교육과 같은 예방적 교육 접근과 별도로, 임신과 출산이 삶의 위협이 되어 낙태라는 불가피한 상황이 이르지 않도록 경제적·의료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편적인 산전·산후, 산부인과 진료서비스 제공,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산모에게 출산급여(maternity bonus) 지급, 저소득 산모에게 출산 부조금(maternity aid) 추가 지급, 빈곤 여성 대상 출산 대출(maternity loan) 제공 등의 방안이 여기에 해당한다(Myrdal, A., 1968; Herman, 1992).

하지만 Ann-Katrin Hatje는 “1938년 낙태법은 비혼모들의 어려운 상황을 간과했고, 법의 목표가 수용할 수 있는 낙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비혼

8) 허용 시 낙태 급증으로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한 우려, 빈곤 여성 낙태 증가라는 계급 불평등 이슈 제기, 진보적 사회정책 개혁을 통해 낙태의 사회경제적 필요를 제거한다는 인구위원회의 취지 훼손 등이 고려되었다(Hatje, 1974; 신정완, 2018: 115 재인용).

9) 산모 건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이미 자녀가 많아 추가 출산 시 아이들을 잘 양육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경우가 이 사유에 해당한다.

모를 ‘존중받는다(respected)’ 사회구성원으로 만드는 데 있었다”고 자조적으로 평가했다(Hatje, 1974: 39, 4, 191, 196; Herman, 1992: 58 재인용). 비혼 모 지원정책안은 제시했지만, 낙태 불법화로 어려움을 겪는 비혼모들의 삶을 개선하기에는, 그 실행은 더디거나 미미함을 고집었다.

2) 아동 삶의 질(quality)에 대한 사회투자 원칙

뮈르달 부부는 출산 감소에 대응하는 인구정책이 대체로 출생아 수 증가라는 ‘양적 목표’에 관심을 집중한 데 반해, ‘질적 목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인구의 ‘질(quality)’에 관심을 보인 것은 주로 인종주의자, 우생학 신봉자들이었다. 하지만 뮈르달 부부는 인종적, 우생학적 관점의 인구 질 논의를 비판했고, 이들과 분명히 선을 그었다. 군나르 뮈르달은 인구 구성이 매우 동질적인 스웨덴 사회에서 인구의 질(quality)에 대한 관심은 인종적 차이가 아니라, 영양, 건강, 주거, 교육, 훈련의 결핍 혹은 열악함과 같은 삶의 질, 인적자원의 질과 관련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Myrdal G., 1938: 208).

따라서 인구문제에 대한 대응에서, 모든 시민(특히, 아동, 청년)에게 양질의 생활(성장)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았다. 평균적인 삶의 질 향상, 모든 시민에게 영양, 건강, 주거, 교육 등의 영역에서 평균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인구정책의 목표로 설정되어야 한다고 했다. 알바 뮈르달은 모든 아동에게 평균적인 생활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재원과 재분배를 위한 혁신적 정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출산을 제고를 바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질 우선의 원칙’을 분명히 했다(Myrdal A., 1968: 107-8).

그렇다면, 아동 수(quantity)를 늘리려는 정책 목표와 아동 삶의 질(quality)을 높이려는 목표는 상충하는가? 뮈르달 부부는 두 가지 목표는 배타적으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군나르 뮈르달은 스웨덴에서는 아이가 있는 가족의 생활 수준이 특히 열악하다는 사실에 주목했고, 그로 인해 젊은 세대가 출산을 회피한다고 보았다. 아동,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높이고 생활 수준을 높이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 교육, 훈련 등 아동, 청년의 인적자원 향상에 투자하면, 여기에 관심을 가진 부모는 자녀를 더 낳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질적 목표는 양적 목표 실현으로도 연결되고, 실제 두 목표가 충돌하지 않고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Myrdal, 1938: 208).

질적 목표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은 양적 목표 실현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아동의 복지와 삶의 질 수준을 높이고, 가족의 양육 부담을 완화해 가족의

생활 수준을 높이기 때문에, 인구정책을 질적 목표에 맞추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라는 주장도 했다. 설사 아동 가족 지원이 출산 증가로 직결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아동의 생활 수준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스웨덴은 아동복지 수준이 매우 미흡해, 아동 가족 지원은 사회투자자의 기능도 수행한다고 보았다(Ibid.).

만약 아동 양육의 비용 부담을 개별 가족에게 전적으로 둔다면, 모든 아동의 질적 향상도, 아동 수의 증대도 요원할 것이라고 보았다. 아동 양육으로 인해 가족이 빈곤해지고 생활 수준이 하락하게 되서는 안 되며, 아동으로 인한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아동이 없는 가족을 포함해 전체 사회가 함께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아동 비용의 사회화, 아동 욕구의 사회화(socializing children's needs)를 통해 수평적 소득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3) 성평등(gender equality) 원칙

뮈르달 부부의 전반적인 정책구상의 기저에는 성평등, 여성 권리 향상, 여성 해방에 대한 지향이 분명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다. 먼저, ‘자발적 부모 됨’의 원칙의 최대 수혜자는 여성이었다. 결혼, 출산, 다산에 대한 강요, 간섭을 받는 주된 대상은 여성이었기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이 누구의 강압, 강제도 아닌 개인의 선택이어야 한다는 선언은, 여성의 인권과 자유 보장을 선포한 것이었다.

무엇보다 뮈르달의 성평등 정책의 핵심은 ‘기혼여성의 동등한 고용권리 보장’에 있다. 알바 뮈르달은 ‘여성(특히, 결혼한 여성)이 생계를 유지할 권리’를 보장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Myrdal A., 1968: 120). 그가 제안한 인구정책 목표와 내용을 보면, 일하는 엄마를 보호하는 것, 여성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그는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출산장려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여성의 고용을 금지하거나 보호하는 것은 가족 보호에도, 출산장려에도 전혀 효과가 없다고 비판하면서, 여성의 노동권 보장, 양육의 사회화(나아가 아동의 제반 욕구, 비용을 사회화)를 주장했다.

이후 사민당 재무부 장관 비그포르스(Wigforss)가 인구문제 관련 여성의 권리를 논의하는 기혼여성 고용위원회(Committee on the Married Women's Paid Employment)를 구성했다.¹⁰⁾ 이 위원회에서는 기혼여성이 공적·사적

10) 자유당 의원이자 페미니스트였던 헤셀그렌(Kerstein Hesselgren)을 의장으로, 사민당 대표로 알바 뮈르달을 서기로, 노동조합 여성 활동가, 여성주의에 반대하는 남성의원 2명까지 총 5명 위원 중, 3명이 여성인 당시로서는 매우 보기 드물었던 조합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홍기빈, 2011: 218-9).

기업에서 일할 권리를 제한하고 금지하는 모든 법안 거부, 약혼·결혼·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여성 해고 금지, 결혼·임신한 여성의 퇴사를 유도하는 보상 금지, 여성 공직 진출의 동등한 기회를 부여한 1923년 Eligibility Act의 강력한 실행, 종교기관·사법부·군대 등의 여성 배제 재검토, 여학생에게 농업 및 숙련 무역 특화 직업 및 전문 교육 실시, 파트타임 노동 가능성 증진, 기혼여성이 자신의 이름을 유지할 권리 검토, 일하는 엄마와 가내 노동자 자녀를 위한 커뮤니티 돌봄 등을 제안했다. 이 중 첫 번째, 두 번째 제안은 1939년 입법화됐고, 나머지 제안들은 전후에 입법화됐다(SOU, 1938:339-349; Herman, 2010: 96).

그렇다면 출산장려와 여성의 인권, 페미니즘은 과연 함께 추구될 수 있는가? 뫼르달 부부는 스웨덴의 출산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을 계기로, 인구문제를 ‘아동 가족의 삶의 질 문제’, ‘여성의 일-가족 양립 문제’로 엮어 그간 이념적 저항으로 수용되지 못했던 사회경제정책 개혁을 시도했다. 이를 통해 그간 페미니스트, 여성단체들이 요구해 왔지만 수용되지 못했던 복지·의료 정책, 성평등 고용정책들이 정치적 공론장에 등장했고 단계적으로 정책화됐다. 출산장려, 가족 보호라는 외피는 보수주의자들의 가치에 부합했고, 그 외피가 가진 시대착오적 이념은 권리를 실현하고 삶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대체되어 실질적 변화를 끌어냈다.

알바 뫼르달의 성평등 관점은 양육, 가사에서의 남성, 아버지의 역할을 강조한 것에서도 확인된다.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아동의 성장과 행복을 증진하고 여성에게 자유를 부여한다고 보았다. 1938년 라디오 방송에서 자녀에 대한 아버지의 무관심, 무책임을 “잊혀진 아버지(The Forgotten Father)”라고 지칭하면서 비판했다. 1941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남학생에게는 요리, 여학생에게는 수선 기술을 교육할 것을 제안했으며, 아버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6시간 노동일(sic-hour workday)’을 주장했다(Herman, 2010: 88).

알바 뫼르달은 성평등한 노동권 보장, 자녀 양육(비용과 돌봄)의 사회화, 피임 권리 보장, (제한적이지만) 합법적이고 안전한 낙태 선택권 보장, 남성의 양육 책임 강화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 성역할 변화를 위한 교육 시행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성평등 사회정책을 인구정책 구상 속에 담았고, 적극적으로 제안했으며 정책화하고자 했다. 혹자는 알바 뫼르달을 출산장려주의자로, 혹자는 페미니스트로 상반된 평가를 한다. 하지만 1930-40년대 그가 스웨덴 사회에 던진 정책구상과 아이디어들이 오늘날 성평등한 스웨덴을 구축하는 주춧돌, 맵아로 작용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IV. 인구정책 구상의 실현 - 제안된 정책, 채택된 정책

이제 뮈르달 부부의 정책구상이 실제 공론화, 정책화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인구문제에서의 위기」가 출간된 다음 해인 1935년, 스웨덴 의회에서는 인구 문제가 크게 다뤄졌고, 인구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Myrdal A., 1938: 202). 사민당 정부의 사회부 장관인 뮐러(Gustav Möller)는 1935년 5월, 인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뮈르달 부부의 인구정책 구상안들은 인구위원회(1935-38년), 인구연구위원회(1941-1946년)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보수당과 사민당 양측의 인구 담론을 비판하면서 둘을 연결하고자 한 뮈르달 부부의 새로운 시도는, 인구위원회 활동을 매개로 양 진영의 ‘배척’이 아닌 ‘절충’이라는 길로 나갔다. 한편으로 보수당은 기본적으로 가족을 사회의 기초로 보았기 때문에, 뮈르달 부부가 제안한 가족지원정책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갖고 전향적인 입장을 취했다. 결국 인구문제를 개인의 도덕 문제로 간주했던 보수당이 모성부조 등 복지정책을 주창하기에 이르렀다.

다른 한편으로 당초 인구문제에 무관심했던 사민당은, 신멜더스주의를 고수하는 대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36년 사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 사회부 장관이었던 구스타프 뮐러(Gustav Möller, 1884-1970)가 뮈르달 부부의 전략을 옹호했다. 이러한 입장 전환은, 뮈르달 부부의 인구전략 핵심인 보편적·예방적 사회정책 구상이 사민당이 추구하는 복지국가 전략 실현의 발판이 될 것을 간파했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가족을 지원하고 인구소멸 위기로부터 민족을 구제한다는 이미지가 보수층을 유인하면서, 국민(대중)정당으로서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치적 판단 역시 작용했다(미야모토, 2003:102-3). 결과적으로 사민당은 뮈르달 부부의 인구정책 전략을 수용하고 1936년 가족정책을 핵심 선거 이슈로 제시해 45.9% 득표로 선거에서 승리했다. 선거 다음 해인 1937년은 다수 국민의 정치적 지지에 따른 선거 승리를 발판으로 많은 개혁 입법을 단행했다. ‘엄마와 아기들을 위한 회기(Riksdag of Mothers and Children)’라고 불릴 정도로 많은 개혁정책안이 의회에서 발의되었다(Myrdal, 1968: 166).

인구위원회의 논의, 입법화를 거쳐 여러 정책이 제안, 실행되었다¹¹⁾. 먼저, 산전·후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무료 진료제도(1935년 제안)와 출산수당

11) 미야모토(2003), 최성은(2016), 신정완(2018), Carlson(1990), Fujita(2009)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했다.

(maternity bonus)과 출산 부조(maternity aid)(1936년 제안) 정책이 1937년 처음으로 통과됐다. 그리고 공적 사회보험에 가입한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 휴가급여가 지급됐다. 출산수당은 보편수당, 출산부조는 빈곤층 산모 대상 공공부조의 성격을 갖는다. 위원회가 제안한 출산수당은 모든 산모에게 지급(75 크로나)하는 안이었는데, 자산조사를 거쳐 상위 소득 약 10%(연 소득 3천 크로나 이상)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정부안이 최종 통과됐다.¹²⁾ 자산조사를 거친 했으나, 이는 스웨덴 최초의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인구위원회를 통해 처음 통과된 법은 ‘출산’ 위험에 대한 소득보장이었고, 보편수당과 선별수당의 결합 방식을 택했다.

1938년에는 피임방지법이 폐지되어 피임용구 취급이 의약품 수준으로 자유화됐고, 허용 범위를 확대(사회적 사유 제외)한 낙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1939년에는 종업원 3인 이상 기업이 결혼, 임신, 출산을 사유로 여성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감봉하는 것을 금지하고, 12주간 육아 휴가를 제공하는 법안이 통과, 시행됐다. 이렇게 1935년 발족한 인구위원회는 출산에 대한 의료적·경제적 지원, 피임과 낙태 권리 확대, 기혼여성 노동권 보장 등 뭉크달 부부가 적극적으로 제안했던 정책안들을 채택했다. 이는 가족, (출산, 임신, 피임, 낙태 등) 재생산이 ‘사적’ 이슈에서 ‘공적’ 이슈가 되었고, ‘규제,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지원’의 대상으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939년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논의가 중단됐으나, 1941년 2차 인구연구위원회가 발족해 인구문제와 정책 채택 논의를 이어갔다. 1940년대는 완전 보편 아동수당이 1947년 법이 통과돼 1948년부터 시행된 것을 제외하고는, 적극적 정책 채택과 시행이 이뤄지지 못했다. 1930-40년대 채택된 정책들의 경우, 산모·신생아 대상 무료진료를 제외하면, 주로 산모, 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중심임을 알 수 있다. 또 여성의 일, 재생산에 관한 선택 자유를 제한해 온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들이었다.

한편, 알바 뭉크달이 피임과 낙태 합법화와 함께 강조했던 성교육, 피임교육 등은 제안한 당시에는 채택되지 못했고, 1956년부터 공교육의 일부로 시행되었다. 낙태법은 1974년, 12주 이내 태아에 대한 산모의 낙태 선택권을 인정했다. 어린이집, 유치원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한 돌봄 사회화의 경우, 인구위원회가 1934년과 1943년에 제안했으나 신설 보육 기관에 대한 미미한 금

12) 상위 10%를 제외한 것은 비용 문제보다는 고소득자 지원에 대한 노동자, 서민의 불만, 보편적 복지정책이 전무했던 당시 상황에서 복지 대상자로 취급받는 것에 대한 보수주의자의 불만을 고려한 것이었다(Myrdal A., 1968:324). 임신부 출산수당은 1955년에 모든 임신부로 확대됐다.

액만 지원하는 안이 통과되는 것에 그쳤다.

알바 뮈르달이 제안한 6시간 노동일(six-hour workday)은 1980년대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노동시간 단축권으로, 일하는 배우자에 대한 개별과세는 1971년에, 여학생을 위한 직업훈련은 학교개혁법(school reform acts)으로, 성역할 규범에 도전하는 부모교육은 1970년대부터 학교 커리큘럼으로 더디지만 정책화됐다(Herman, 1992: 104). 돌봄 사회화를 위한 정책, 성역할 규범에 도전하는 정책들은 제안된 당시 즉각 정책화되지는 못했고, 40-50년 후에야 시행됐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기층에 뿌리 깊이 배태된 성역할 규범의 전환을 시도하는 정책 실현은 더디고, 담론 전환이 기층의 현실 변화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1930-40년대 뮈르달 부부가 던진 성평등 사회정책의 맹아들이 이후 논쟁을 거쳐 실현되었고, 당장 현실에서 수용되지 못해도 변화를 위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기하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준다.

V. 스웨덴 인구 담론 전환이 한국 저출산정책에 주는 함의

1930년대 최악의 저출산 상황에서 제안된 뮈르달 부부의 새로운 인구정책 구상과 이를 수용한 스웨덴의 경험은, 현시점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 해법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가?

2000년대 중반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이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법을 마련해 왔지만, 현재 우리가 마주한 것은 합계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현실이다. 한국은 백 년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인구 ‘과잉’과 인구 ‘절멸’이 절체절명의 과업이 된 유례 없는 국가가 되었다. 스웨덴과 한국 간의 긴 시간 간극, 사회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국가가 처한 상황의 본질 즉, 출산 감소를 초래한 객관적 원인(사회경제적 상황)과 주관적 원인(가치관)은 상당히 유사하다. 급격한 산업구조,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경제적 불안정성과 심리적 불안 증가, 가족을 구성하고 일과 가족을 양립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등은 별반 차이가 없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있었지만, 두 국가의 해법은 확연하게 달랐다. 차이의 핵심은 정책프로그램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나가는 해법의 방향과 가치, 그 기저에 놓인 담론이었다. 뮈르달 부부의 인구문제 해법은 단지 인구수 조절에 한정

된 특별한 정책 도입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아동 가족 및 청년의 삶의 질과 안정성 보장, 성 평등 고용 및 양육지원, 성·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총체적 사회경제정책 개혁, 교육개혁이었다. 이는 개인의 상황, 주관적 가치와 같은 미시적 차원에 주목하면서도, 향후 산업구조, 가족구조, 젠더관계 변화, 사회·경제의 지속가능성 등 거시적 차원을 전망했기 때문에 가능한 해법이었다.

반면, 2000년대 중반 한국에서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한국 정부가 택한 방식은 국가 주도의 인구통제 방식이었다. 1960-70년대 가족계획사업의 출산억제 방식과 방향만 다를 뿐이었다¹³⁾. 그 기저에는 경제 발전, 국가경쟁력 강화와 같은 국가주의 담론이 놓여 있었다. 1차부터 3차까지 수립된 저출산 기본계획과 대책들에는 시대적 변화와 정책 당사자인 청년의 인식 변화는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결혼, 출산을 개인의 선택으로 인정하고 지원하기보다, 인구관리 및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결과적으로 청년들의 불신과 반발을 초래했고, 정책 효과도 떨어뜨렸다.

저출산 대책이 수립된 지 15년이 지난 2021년에서야, 4차 기본계획에서 인구통제 관점을 폐기하고 개인의 선택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인권 관점을 반영했다.¹⁴⁾ 십여 년간의 대책이 효과가 없었던 이유가, 정책 자체보다 정책의 기저에 깔린 관점, 담론에 있을 수 있다는 비판과 반성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스웨덴의 인구 담론 전환은 변화된 현실(고용 및 주거의 불안정성, 낮은 삶의 질, 높은 양육 부담)과 변화된 젊은 세대의 가치관(일을 통한 경제적 독립, 성평등한 고용과 돌봄, 결혼과 출산에 대한 선택 자유 추구)에 맞춰 국가의 역할을 변화시키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방향에 부합하고 지속 가능함을 제시했다. 개인, 가족의 관점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선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반영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뮌르달 부부는 방향 전환만 제시하지 않고, 핵심 원칙과 이를 실현할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시했다. 향후 한국의 저출산 대책 추진 시 고려해야 할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결혼, 출산, 양육 등의 문제에서 개인의 선택, 자유(자발적 부모 됨)를 보장한다는 것은 단지 ‘불간섭’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다. 낳아서 키울 권리, 낳지 않을 권리, 결혼·출산을 해도 계속 일할 권리를 적극적으로 존중하고 지

13) 1961년 설립되어 정부 가족계획사업 추진에 앞장섰던 대한가족계획협회가 2006년 인구보건복지협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협회 사업을 출산억제에서 출산장려로 전환했다. 이후 저출산·고령사회 극복 대국민 홍보사업, 임신중절예방 사업, 결혼친화 미혼남녀 만남 사업 등을 추진했다(출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홈페이지 협회소개 연혁. <http://www.wppfk.or.kr/sub/company/history.asp>, 2021년 5월 27일 검색)

14) 2019년 3차 기본계획 수정판에서 저출산 대책의 목표 전환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목표 변경을 넘어선 구체적인 원칙과 정책수단을 제시하지 못했다.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간 저출산 대책은 출산장려를 위해 피임 억제, 낙태 금지, 난임 지원에 초점을 맞춰 왔다¹⁵⁾. 4차 기본계획에서 처음으로 안전한 피임과 임신 종결까지 포함한 생애 전반에 걸친 성·재생산권의 포괄적 보장정책이 포함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20).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움직임 역시 거세다. ‘출생아 수’에만 한정해서 본다면, 출산장려와 피임과 낙태 옹호는 상충한다. 하지만 피임 보편화와 임신 종결 지원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임신 종결을 예방함으로써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해 선택권을 보장하며, 원하는 시점에 아이를 가질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출생아 수를 늘릴 수도 있음을 뒤편달 부부의 인구정책 구상은 보여주었다. 이를 근거로 성·재생산권 보장정책은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모든 시민에게 피임에 대한 접근권 보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와 교육 제공, 안전한 피임과 임신 종결을 지원하는 의료서비스, 상담, 경제적 지원 등 포괄적인 지원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뒤편달 부부의 제안은 인구문제 접근에서 성평등이 핵심 가치임을 제시했다. 여성을 독립적이고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일할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하고, 양육을 사회화하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회경제정책 개혁을 인구문제 대책으로 구조화했다. 인구문제와 성평등이 별개가 아니고, 인구문제 기저에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을 둘러싼 불평등한 젠더관계 문제가 놓여 있음을 정확히 인식했고 해법을 제안했다. 여성고용을 지원하면 출산율이 하락할 것을 우려하는 근시안적인 보수적 사고를 넘어, 인구정책 속에 성평등 원칙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했다.

그간 한국의 저출산 대책에도 여성 경력단절 예방, 경력단절 여성 지원 등이 정책들이 포함되었으나, 성평등 고용정책과 저출산정책은 별개라고 간주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4차 기본계획에서는 ‘성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목표로 설정됐고, 성평등 고용전략 추진이 포함됐다. 2020년대 한국에서 ‘일과 경력 중심의 삶’은 원하는 가치일 뿐 아니라, 현실적 필요조건이 되었다. 평등한 노동권 보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일과 경력이 위협받지 않고 친밀한 관계, 아이 낳고 키우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저출산 대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고 아동 가족에 대한 현금수당을 확대하는 것만으로는 한계적이다. 실질적인 돌봄 시간 보장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육아휴직이 소수가 누리는 혜택이 아니라 모두가 누리는

15) 2009년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모자보건사업 범주에서 피임 시술을 삭제하고 저출산 대책으로 낙태방지를 포함한 바 있다. 2016년 3차 기본계획에서는 난임 지원사업이 출산을 제고에 효과적이라는 근거로 확대되었다.

권리, 일종의 규범이 되도록 하고, 그간 기업, 공직 등에서 과소대표되어 온 여성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대적인 노동시장 개혁이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뮈르달 부부는 인구문제를 국가 관점이 아닌 가족의 관점으로 접근했고, 아동이 있는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사회정책 강화를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했다. 산전·산후 산부인과 진료서비스, 출산 급여, 아동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양육서비스 등을 빈곤층에 한정하지 않고 보편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저출산 대책에도 아동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대거 도입되었지만, 초창기 지원은 저소득층에 한정되었다. 2013년 무상보육 실시 이후 보편적 서비스의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다수의 서비스는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다. 스웨덴에서 아동가족 지원정책의 핵심 원칙은 ‘보편과 선별의 결합’이었다. 대상은 보편적으로 하되, 지원 수준은 소득계층에 따라 차등해 저소득층이 추가적인 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향후 아동가족 지원정책을 설계할 때, 지원대상의 보편화와 소득계층에 따른 차등화를 적절하게 결합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뮈르달 부부의 인구정책 구상은 가족이 아닌, ‘개인’에 주목했다. 결혼, 출산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부모(가족)도 간섭할 수 없다고 했고, 여성이 홀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족 안에서의 강요된 성역할 분담을 변화시키기 위해, 양육의 사회화와 함께 남성의 돌봄 책임 강화를 위한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했다. 산모에게 지급한 출산급여는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하도록 했고, 일하는 배우자에게 유리한 개별 과세를 주장했다(1971년 정책화). 그에 반해 한국의 저출산 대책은 결혼장려, 가족해체 방지 등의 목적에 맞춰 ‘혼인한 가족’에 한정해 왔다. 가족 정책을 포함한 사회보장정책의 단위를 개인 단위로 변경하는 것, 가족 지원을 법적 혼인 관계에 한정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도, 정상 가족 규범으로 배제되고 소외되어 온 이들을 지원체계 속에 통합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스웨덴은 뮈르달 부부의 제안 이후, 오랜 시간에 걸쳐 보편적 사회보장정책과 가족정책, 성평등 정책 확대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했다. 한국은 이제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저출산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과 담론의 전환을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정책 실행으로, 실질적인 인식 변화로 이어지게 하는 광범위한 사회경제 개혁과 기존 저출산 정책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 김영미(2018).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 - 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 *비판사회정책*. 제59권. 103-152.
- 메리 힐슨(2010). 주은선·김영미(역). *노르딕 모델 : 북유럽 복지국가의 꿈과 현실*. 삼천리.
- 미야모토 타로(2003). *복지국가 전략 : 스웨덴 모델의 정치경제학*. 논형.
- 신경아(2010). “저출산대책의 쟁점과 딜레마-여성 없는 여성정책”. *페미니즘 연구*. 제10권 제1호. 89-122.
- 신정완(2017). “1930년대 스웨덴 인구문제 논쟁에서 제시된 뮈르달 부부의 가족정책 구상의 이론적, 철학적 기초”. *스칸디나비아 연구*. 제 19권. 51-96.
- 신정완(2018). “1930-40년대 인구문제 관련 스웨덴 국가연구위원회들에서의 인구정책 및 가족정책 논의”. *사회보장연구*. 제34권 제2호. 95-124.
- 장선화(2019). “스웨덴 : 일·가정 균형정책의 젠더적 함의”. 김민정 외. *저출산 시대의 가족정책 : 젠더, 가족, 그리고 국가*. 한울 아카데미.
- 최성은(2016). “스웨덴 일-가정 양립 경로의 역사적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스칸디나비아연구*. 제17권. 139-160.
- 홍기빈(2011). *비그포르스, 복지국가와 잠정적 유토피아*. 책세상.
- Bacchi, C. (2000). Policy as discourse: what does it mean? where does it get us?. *Discourse studies in the cultural of education*, 21(1), 45-57.
- Carlson, A. C. (1990). *The Swedish experiment in family politics : the Myrdals and the interwar population crisis*. Transaction Publishers.
- Fujita N. (2009). Gunnar Myrdal's role in solving the population problem in Sweden in the 1930s: The meaning of socialization of consumption. *KEIZAIGAKUSHI KENKYUU*, 51(1), 76-92.
- Hatje, Ann-Katrin. (1974). *Befolkningsfrågan och väl-färden : Debatten om familjepolitik och nativitetsö-kning under 1930 - och 1940 - talen*. Stockholm :Allmänna Förlaget.
- Herman, S. R. (1992). Children, feminism an power : Alva Myrdal and swedish reform, 1929-1956. *Journal of Women's History*, 4(2),

82-112.

Kälvemark, Ann-Sofie. (1980). *More children of better quality ? : aspects on Swedish policy in the 1930's*. Uppsala: Almqvist & Wiksell International.

Myrdal, A. (1939). A program for family security in Sweden. *International Labour Review*, 34(6), 723-763.

_____, A. (1968). *Nation and family : the swedish experiment in democratic family and population policy*(Paperback edition). Massachusets: The M.I.T Press. (초판은 1941년 Harper & Brothers 에서 발간)

Myrdal, G. (1938). Population problems and policies. *The annals of the American Ad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197, 200-215.

_____, G. (1940). *Population : a problem for democracy*. Cambridge. MA: Harvard Univ. Press.

_____, G. (1987). Gunnar Myrdal on population policy in the underdeveloped world.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3(3), 531-540.

Myrdal, G. and Myrdal, A. (1934). *Kris i Befolkningsfrågan*. Stockholm: Bonniers.

Silenstam, P. (1970). *Arbetskraftsutbudets utveckling i Sverige 1870-1965*. Stockholm: Indestriens Utredningsinstitut.

SOU. (1938). *Report concerning Married Women's Paid Employment: Women's Work Committee*. Stockholm: Issac Marcus, Boktryckeri, A. B.

Stanfors, M. (2014). Women in a changing economy: the misleading tale of participation rates in a historical perspective. *The history of the family*, 19(4), 513-536.

United Nations (1994). *Report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Cairo, 5-13 September 1994. U.N. Doc. E/CONF. 171/13/Rev.1. NewYork: United Nations. https://www.un.org/development/desa/pd/sites/www.un.org.development.desa.pd/files/icpd_en.pdf에서 2018. 2. 15. 인출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2014). *Key Actions for Further Imple*

mentation of the 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20th Anniversary Edition. <https://www.unfpa.org/publications/international-conference-population-and-development-programme-action>에서 2018. 2. 15. 인출

Abstract

The Shift of Swedish Population Discours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Low Fertility Policy in Korea: Focused on Alva and Gunnar Myrdal's Population Policy Ideas

Young Mi Kim*

This study analyzed Sweden's experience in achieving a shift in population discourse by policy-making Alva and Gunnar Myrdal's new population policy initiative in the face of the population crisis in the 1930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 tried to present an empirical basis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social policy to Korean society, which is attempting to change the discourse of the low fertility policy, and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Alva and Gunnar Myrdal defined the population problem as a problem of the life of children and their families, and of family composition and work-family balance. As solutions for population crisis, they proposed comprehensive socioeconomic policy reform and education reform to ensure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life for families with children and youth, support for gender equal employment and rearing, and guarantee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The Korean government has declared a shift in population discourse in the 4th Basic Plan for Low Fertility. However, the following points must to be considered in order to lead the discourse shift to a substantial policy change and a change in reality. First, the policy of guaranteeing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 which was first included in the measures for low fertility, should be actively promoted. Second, the policy of guaranteeing gender equal labour policy is not separate from the solution to the population problem and should be a core policy. Third,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for families with children, it is necessary to appropriately combine the universal expansion of policy support targets and differential support accordingly to the income status. Fourth, support for individual social policies and support for families beyond legal marital relations is needed.

Keywords : swedish population discourse, shift of discourse, Alva and Gunnar Myrdal, population policy, low fertility policy, gender equality

* Associate Professor, Dongseo University,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제도변화의 여성고용 효과*

이선행**·김난주***·홍지현****·심혜빈*****

초 록

본 논문은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제도의 업종 및 규모별 여성 고용 기준선이 상향되고, 미이행 사업장 명단이 공개되는 등 조치가 강화된 2015년 이후의 제도변화 효과를 AA 행정 DB를 통해 분석한 것으로 강화된 고용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여성 고용률,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의 순 효과를 분석하였다.

제도의 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분석을 시도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처치 변수 및 시간변수의 교호항이 유의한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을 상향이 실제 여성 고용률이나 여성 관리자 비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 도입에 의한 순수한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명단공개가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여성 관리자 비중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통제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규모나 유형에 따라 비중 증감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1,000인 이상의 사업장이 1,000인 미만 사업장 보다 여성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에 비해 공공기관의 여성 고용과 관리자 비중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 비중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을 가능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차이는 공공과 민간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규모에 따른 제도 효과의 차이는 규모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한다.

주제어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여성 고용, 여성 관리자, 이중차분법

* 본 논문은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여성고용 효과 분석』이라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20)를 일부 발췌하여 수정·보완한 것임을 밝힙니다.

** 제1저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snao76@kwidimail.re.kr)

*** 교신저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string@kwidimail.re.kr)

**** 공동저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ehong@kwidimail.re.kr)

***** 공동저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원(hbsim@kwidimail.re.kr)

I. 서론

여성 고용률 제고와 고용 차별 철폐를 위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적극적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 이하 AA)가 2006년 3월 1일부터 정부산하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상시근로자 1,000인 이상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시행된 이후, 점진적으로 대상 사업장의 확대가 이루어지다가 2014년에 여성 근로자(관리자) 고용미달 기준이 동종업종 평균 60%에서 70%로 상향되고, 같은 해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하는 패널티 제도를 도입(최초 공개 대상 연도는 2016년, 실제 최초 명단 발표는 2017년 3월)하는 등 큰 변화가 있었다.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에서 발간한 2019년 AA남녀근로자현황 분석보고서에 의하면 AA 대상 사업장의 총족·미달 여부를 결정짓는 여성 고용률과 여성 관리자¹⁾ 비율은 AA 제도의 성과를 나타내는 주요 지표로 매년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상의 개선이 실제 AA제도의 효과인지, 혹은 전체 노동시장의 환경변화와 함께 뒤따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마치 제도의 영향으로 비치는 착시현상인지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II장에서 살펴보겠지만 AA의 성과를 다른 연구들을 종합해 보아도 지표의 측면에서 AA의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과 없거나 혹은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실정이다.

제도 초기 AA 제도의 여성 고용 효과를 분석하고, 특히 60% 기준에 대한 여성 고용 효과를 추정한 연구는 있었으나(성재민·최효미, 2015), 변화의 폭이 컸던 2014년 정책변화에 대한 효과를 추정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AA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60% 기준의 정책효과를 분석한 성재민·최효미(2015)에 의하면 양적인 분석 결과, AA가 여성 고용 비중을 늘리는 데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결과를 도출한 바 있다. 제도 적용 대상이 2018년에 300인 이상 지방공기업으로 확대되고 2019년에는 전체 지방공기업까지 확대되는 등 제도의 전면적인 확산 및 심화가 일어나는 현재 국면은 제도의 효과성이 다시 평가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고용미달 기준 70%’, ‘미이행사업장 명단 공개’라는 두 가지 정책변화가 실제 여성 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고, 제도의 성과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AA의 관리자는 직급과는 무관하며, 업무지휘 및 감독권, 인사고과(근평)권, 결재권 3가지를 모두 가지는 자이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II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AA 제도의 성과분석에 초점을 맞춘 국내외 연구들을 중심으로 리뷰한다. III장에서는 ‘고용미달 기준 70%’,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 여부에 따른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증감 정도를 업종별, 규모별, 유형별(공공 및 민간)로 확인한다. IV장에서는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 DID)을 이용하여 ‘고용미달 기준 70%’,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의 정책변화가 여성 고용 및 여성 관리자 증가에 미치는 순 효과를 추정하고, V장에서 주요 결과 요약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으로 논문을 마무리한다.

II. 선행연구 리뷰

1. AA 제도 긍정 효과

국내에 AA가 도입되기 이전, 이미 해외의 연구에서는 AA의 효과성을 입증한 바가 있다. 예를 들어 Holzer와 Neumark(1999: 29-30)의 연구에 의하면 미국 4대 주요 도시에서 3,200명을 대상으로 AA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AA가 흑인과 히스패닉 등의 소수인종 저학력 여성의 고용 증가에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밝혔으며, 이들이 직무성고가 낮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어 어느 정도 AA의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하였다. Carter 외(2003: 51)의 연구에서는 AA 제도로 인한 이사회에서의 여성 비율과 다양한 인종의 증가가 이사회와 Tobin's Q로 측정된 기업의 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밝힌 바가 있다. Erhardt 외(2003: 107)는 미국의 112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이사회에서 여성과 소수인종의 비율이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이사회의 다양성이 기업의 투자자본수익률(Return on Investment; ROI)과 총자산수익률(Return on Asset; ROA)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결국 이사회 다양성과 조직의 성과가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Smith 외(2005: 22)는 고위직 여성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업의 성과가 좋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특히 대학교 학위를 가진 여성 관리자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AA가 2006년 처음 도입된 이후로 그 효과성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전명숙, 김향아(2008a: 49-50)는 AA 대상 기업의 인사담당자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AA의 2년간 평가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

였는데, 인사담당자와 근로자의 약 70%가 여성 근로자 채용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인식하였고, 약 50%가 여성 승진 비율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여 AA의 실시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후속 연구로 전명숙·김향아(2008b: 18-19)는 개별 기업이 제출한 '2008년 남녀근로자 고용현황'을 분석하여 AA 제도 도입 이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의 성과를 분석하였는데, 직급별·직종별 차이가 있었으나 여성 고용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규모가 큰 기업과 민간기업에서 여성 근로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효용(2008: 311)의 연구에서는 사업체패널조사를 활용하여 AA 제도가 여성 고용과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단순히증차이 분석에서는 여성 근로자 비율, 여성 관리자 비율, 총자산순수익률 및 매출액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과 2009년 사이 여성 근로자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은 각각 0.9%, 1.9% 증가하였고 매출액수익률과 자기자본순수익률은 각각 179.8%, 0.6%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중차이 모형에서 AA 제도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정진화 외(2010: 199-200)의 연구에서는 AA가 여성 고용과 기업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먼저 인적자본기업패널(HCCP) 자료를 이용한 결과에서는 AA가 여성 근로자 비율, 여성 관리자 비율, 총자산순수익률, 그리고 매출액 수익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업체패널(WPS)을 분석한 연구 결과에서는 AA 제도의 여성 고용 증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김태홍 외(2010: 86-88)는 설명변수로 기업규모, 산업, AA 여부 등을 포함하여 여성 고용 및 여성 관리자 비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석하였는데, AA 제도가 도입 초기에는 여성 고용률에 유의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지만, 2009년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한편, AA 제도가 여성 관리자 비율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선화(2015: 82-85)는 AA 제도가 시행된 이후 여성 근로자 비율이 2006년 28.7%에서 2014년 35.5%로 6.8%p 증가하였고, 특히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06년 8.3%에서 2014년 16.2%로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규모가 큰 1,000인 이상 기업은 500인 이상 기업에 비해 여성 고용 비율 증가가 다소 빠른 편이었고,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비해 여성 고용이 다소 부진한 편이었으나, AA 제도 시행 이후 여성 고용 비율이 민간기업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고용 달성 기업과 달성하지 못한 기업의 비교에서도 제도 도입으로 인한 여성 고용 효과는 민간기업보다 공공기관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조사를 실시한 강창현·허수연(2016: 23)의 연구에서는 AA가 공공기관의 여성 근로자와 여성 관리자 비율의 증가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밝혔으나, 그 절대적인 비율은 낮다고 지적하였다.

2. AA 제도 부정 효과 혹은 효과 없음

AA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의 연구도 다수 있다. 해외의 사례에서는 Shrader 외(1997: 365)의 연구에서 미국 여성 고용이 기업의 재무지표(순매출수익률(ROS), 총자산순수익률(ROA), 투자수익률(ROI), 자기자본순이익(ROE))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오히려 기업가치에 부정적 영향이 있음을 나타냈다. Adams와 Ferreira(2009: 26-27)는 성별 다양성이 ROA와 토빈의 Q지수로 측정된 기업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부정적으로 나타남을 밝혔다. Marinova 외(2010: 15)는 187개의 덴마크 및 네덜란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사회 여성 비율과 기업가치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기업가치는 자산의 대체 비용 대비 기업의 시장가치 비율로 정의된 토빈의 Q지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 비율과 토빈의 Q지수와는 뚜렷한 정(+)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A를 국내에 도입한 이후의 초기 연구(조준모·권태희, 2008)에서는 AA 도입 이후 여성 근로자 미달 사업장 비중은 큰 변화가 없었으며 오히려 관리자 미달 기업은 초년도보다 4%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장지연 외(2006: 235-240)에서는 여성 비율이 매출액 증가율과 부(-)의 관계를 보였고 영업이익률 증가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성 임원 비율과 여성 비율이 모두 있는 모델의 결과에서는 여성 비율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여성 임원 비율은 부(-)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ung et al(2013: 100)의 연구에서는 AA의 여성 고용 및 여성 관리자 비율 증진의 효과성을 입증하지 못했고, 또한 생산성과 관련한 기업 실적과도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영우(2017: 126)는 AA 적용 사업장의 노동수요탄력성과 성별 노동수요의 대체탄력성이 AA를 적용하지 않은 사업장보다 탄력성이 적게 나타났음을 실증분석을 통해 밝혔으며, 이는 결국 AA 제도의 시행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있어서 지속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생산비용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유추하였다.

인적자본기업패널을 활용한 이근재(2016: 139-140)의 연구결과, 단순이중 차이 분석에서는 500~999인 규모의 기업에 한정하여 AA의 여성 고용 증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설명변수를 통제한 이중차이 분석의 결과에서는 AA의 여성 고용 증진 효과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상으로 살펴본 선행연구와 본 논문이 갖는 차별성은 분석기간이 3년 연속 여성고용을 충족하지 못한 AA 대상 기업 중 명단을 공개한 2016년 이후와 지방공기업까지 AA 대상 사업장이 확대된 2018년 이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내 AA 행정데이터 활용 선행연구의 후속으로 최근 AA 제도 변화를 반영한 분석을 한 것도 선행연구에 대해 본 논문이 갖는 차별성이다. 다만, AA 행정데이터는 사업장의 재무정보가 없기 때문에 AA 대상사업장의 여성고용과 기업의 재무성과 분석은 시도하지 못하였다.

III. 제도변화와 여성 고용률 및 관리자 비율 변화

이 장에서는 노사발전재단의 AA 행정데이터(2015~2019)²⁾를 활용하여 AA 대상 사업장들을 70% 기준 미달과 기준 충족 기업으로 구분하여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중의 증가폭의 차이를 산업별, 규모별(1,000인 이상 및 미만), 유형별(공공 및 민간) 등 다양한 차원으로 분석한다. 이어서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에 따른 여성 고용 및 여성 관리자 증감을 살펴본다. 관측기간인 2015~2019년은 대상 사업장 확대, 기준율 70% 상향,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 등 제도의 큰 변화가 있었던 기간으로, IV장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게 될 제도변화의 순(純) 효과 분석을 위한 기초분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 노사발전재단에서 생산하는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행정데이터는 매년 4월 말 대상 기업들로부터 제출되는 전년도 기준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현황 보고서를 기반으로 작성된다. 2019년에는 지방공기업을 포함하여 2,442개사가 제출하였다(전년대비 296개사 증가). 이 데이터에는 산업분류, 규모(1,000인 미만 여부), 상시근로자 수, 여성 상시근로자 수, 관리자 수, 여성 관리자 수,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 기준 충족 여부, 직급(임원, 관리자, 그 외)별 남녀 근로자 수 등을 파악할 수 있는데, AA 대상기업들로부터 직접 받는 자료이기 때문에 양적인 제도의 효과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자료라 할 수 있겠다. 다만 행정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기업의 양적, 질적 성과들을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는 현재 부재한 상황인데, 2020년부터 남녀 근로자의 임금정보도 함께 받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제도의 질적 성과분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AA행정데이터는 현재 일반에 공개되지는 않고 정책연구 목적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1. 기준율(70%) 충족 여부에 따른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중 증감

AA 대상 사업장들을 70% 기준 미달과 기준 충족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중의 증가폭의 차이를 보고자 각 연도별로 2년 후의 여성 비중 증감을 살펴본다. 이는 AA 제도 운영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보면, 7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이듬해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중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다시 그 결과를 역시 이듬해 이행실적 보고서로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년 후 여성 고용 증진을 위한 노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성재민·최효미, 2015: 23).

실제 이 효과가 나타난다면 70% 기준 미달 사업장의 여성 고용 비중, 관리자 비중 증대 속도가 60% 충족 사업장에 비해 높게 나타날 것이므로 기초통계를 통해 효과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시행계획서 제출 기준이 동종업종 규모별 평균 70% 미만으로 변경된 것은 2015년이므로 2015년과 2년, 4년 후의 비중 증감을 확인한다. 다만 2015년의 데이터는 변경된 기준 적용 전인 2014년의 남녀 고용현황이므로 2015년과 2016년을 비교하는 것은 실제 2014년과 2015년의 현황을 비교하는 것을 뜻한다.

먼저 여성 고용 증감 현황을 살펴본다. <표 1>은 2015년 기준으로 업종별 여성 고용 비중의 증감을 나타낸 것이다.

<표 1> 2015년 기준 업종별 여성 고용 비중 증감

(단위: %p)

업종	2015→2017		2015→2019	
	70% 이상	70% 미만	70% 이상	70% 미만
1. 농업·임업·어업·광업	0.60	0.59	1.39	0.86
2a. 제조업(음·식료품, 담배)	-0.49	0.24	0.10	5.42
2b. 제조업(섬유, 의복, 인쇄 등)	1.49	3.17	0.71	2.20
3. 제조업(목재)	-0.72	0.95	-2.79	-0.4
4a. 화학공업	1.92	0.54	2.49	1.41
4b. 중공업	-0.03	-0.08	0.34	0.14
5. 전자산업	-2.56	0.33	-4.17	0.64
6a.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16	0.89	2.19	2.09
6b.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76	-0.13	3.31	3.44
7. 건설업	1.02	1.11	2.37	2.16

업종	2015→2017		2015→2019	
	70% 이상	70% 미만	70% 이상	70% 미만
8. 도매 및 소매업	1.21	-1.59	2.47	-1.16
9. 숙박 및 음식점업	1.61	2.11	3.86	2.07
10.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1.33	0.81	1.97	1.47
12.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24	0.72	0.12	1.56
13. 금융 및 보험업	0.67	1.48	1.37	1.38
14. 부동산 및 임대업	1.54	0.20	2.66	3.72
15a.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 관련업	1.43	0.36	1.48	1.05
15b. 기술 서비스 관련업	-0.34	0.44	0.76	4.73
15c.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4.58	3.34	-8.53	6.14
15d. 사업지원 서비스업	-1.48	2.03	-2.78	5.41
16. 교육서비스업	0.66	10.49	1.69	8.09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18	9.77	1.91	0.93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0.07	2.28	-1.49	6.33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4.24	-5.15	14.47	-2.84
전체	0.02	0.81	0.38	2.12

자료: 노사발전재단, AA 행정데이터(2015; 2017; 2019)

2015년 기준 미달인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2017년 여성 고용 비중의 증감 현황을 보면, ‘중공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대체로 기준 미달 업종의 경우 여성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였다. 전체 증감을 보면 기준 충족 사업장은 0.02%p, 기준 미달 사업장은 0.81%p로 기준 미달 사업장의 비중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0% 기준을 도입한 2006년 및 2008년 비교의 경우와는 반대의 결과로서 기준 상향의 영향일 수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증가하면서 나타난 부수적 효과일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³⁾.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증가라는 구조적 변화와 제도의 안착이라는 두 효과가 중첩되면서 기존의 여성 고용 비중이 낮은 기준 미달 사업장의 고용 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도 해석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2015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전체 기준 충족 사업장은 0.38%p, 기준 미달 사업장은 2.12%p로 기준 미달 사업장의 여성 고용 증가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관측된다. 업종별로도 기준 미달 사업장 중 여성 고용 비중이 감소했던 중공업이나 하수/폐기물 처리 등 업종은 여성 고용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업종에 따른 제도 개선의 효과가 어느 정도 관측되었다. 표에서는 제시하

3) 2006년과 2008년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60% 이상(기준 충족) 사업장은 0.60%p, 60% 미만(기준 미달) 사업장은 0.32%p를 나타냈다(성재민·최효미, 2015: 25).

지 않았지만 2016년과 2018년을 비교한 결과를 보면 기준 충족 사업장의 여성 고용 비중 증가가 약간 높게 나타났다가 2017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다시 기준 미달 사업장의 비중 증가가 높게 나타나 단순히 기준 미달 여부만을 놓고 제도 변화의 효과성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업종과 더불어 시행계획서 작성 대상의 기준이 되는 1,000인 이상 여부에 따른 여성 고용 비중 증감을 살펴본다. <표 2>는 2015년을 기준으로 2년, 4년 경과 후의 여성 고용 비중 증감을 규모별로 살펴본 것으로 모든 사례에서 일관되게 1,000인 미만의 사업장은 70% 기준에 따라 여성 고용 비중의 증가와 감소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1,0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준 충족 여부에 상관없이 모두 여성 고용 비중이 증가하였다. 규모가 작을수록 제도 변화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규모별 여성 고용 비중 증감

(단위: %p)

연도	기준 충족 여부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2015→2017	70% 이상	-0.32	0.11
	70% 미만	1.20	0.71
2015→2019	70% 이상	-1.19	0.78
	70% 미만	2.94	1.86

자료: 노사발전재단, AA 행정데이터(2015~2019).

마지막으로 공공기관과 민간 등 사업장 유형별로 여성 고용 비중 증감을 살펴보았는데, 모두 기준 미달 사업장의 비중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인 여성 고용 증가의 폭은 공공기관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준 미달 여부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장이 2015년→2017년의 경우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의 여성 고용 비중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AA 제도에 대해서는 민간이 상대적으로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표 3> 유형별 여성 고용 비중 증감

(단위: %p)

연도	기준 충족 여부	공공	민간
2015→2017	70% 이상	1.25	-0.04
	70% 미만	1.37	0.76
2015→2019	70% 이상	3.17	0.20
	70% 미만	4.08	1.89

자료: 노사발전재단, AA 행정데이터(2015~2019).

여성 관리자 증가폭의 차이를 여성 고용 비중과 동일하게 분석한 결과 2015년→2017년은 기준 충족 사업장이 -1.98%p, 기준 미달 사업장은 3.16%p로 나타났고, 4년이 경과한 2019년과의 비교를 보면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은 -0.07%p, 기준 미달인 사업장은 4.47%p로 나타나 기준 충족 여부에 따른 여성 관리자 증가의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는 기준 미달 조건이 60%였던 2006년과 흡사한 결과로 성재민 외(2015)에 의하면 2006년→2008년, 2006→2010년은 기준 충족 사업장이 각각 -1.96%p, -0.22%p이고, 기준 미달 사업장은 각각 1.78%p, 2.76%p였다. 기간이 경과해야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나는 여성 고용 비중 증가와 비교하면 관리직 증가는 매우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성재민·최효미, 2015: 30).

업종별로 보면 2017년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을 제외하면 기준 미달 사업장의 경우 전 업종에서 여성 관리자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여성 관리자 수가 평균적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비중 변화의 폭이 업종에 따라 매우 크게 나타날 수 있지만, 숙박 및 음식점업(14.08%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79%p) 등 전통적인 여성 집중 업종의 경우 관리자 비중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4〉 2015년 기준 업종별 여성 관리자 비중 증감

(단위: %p)

업종	2015→2017		2015→2019	
	70% 이상	70% 미만	70% 이상	70% 미만
1. 농업·임업·어업·광업	0.58	1.80	0.81	1.64
2a. 제조업(음·식료품, 담배)	1.18	2.02	3.59	5.95
2b. 제조업(섬유, 의복, 인쇄 등)	6.83	2.84	8.12	3.19
3. 제조업(목재)	1.97	6.19	2.14	8.70
4a. 화학공업	-0.09	0.57	1.86	1.72
4b. 중공업	0.03	0.96	0.86	1.44
5. 전자산업	-2.44	2.99	-4.95	3.72
6a.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1.18	-0.12	2.40	0.16
6b.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17	0.00	1.05	1.83
7. 건설업	-2.16	0.43	-2.44	0.84
8. 도매 및 소매업	7.25	2.91	10.68	4.62
9. 숙박 및 음식점업	0.78	14.08	3.69	15.77
10. 육상운송 및 수상운송 관련업	0.25	1.32	1.66	2.60
11. 항공운수업	2.84	44.49	4.84	13.25
12.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03	1.76	3.40	2.75
13. 금융 및 보험업	2.61	3.95	5.87	7.33
14. 부동산 및 임대업	0.39	1.41	4.30	2.61
15a. 연구개발 및 전문서비스 관련업	0.16	2.30	2.52	4.88
15b. 기술 서비스 관련업	-3.45	1.26	-3.69	2.13

업종	2015→2017		2015→2019	
	70% 이상	70% 미만	70% 이상	70% 미만
15c. 사업시설 관리 관련업	-46.95	3.90	-48.59	5.36
15d. 사업지원 서비스업	-2.66	5.61	-6.66	9.86
16. 교육서비스업	10.10	5.91	9.80	5.22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0.03	12.79	0.51	13.62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0.13	2.64	0.69	3.82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4.53	0.42	9.88	2.54
전체	-1.98	3.16	-0.07	4.47

자료: 노사발전재단, AA 행정데이터(2015~2019).

표에서는 제시하지 않았지만 2016년→2018년, 2017→2019년의 경우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로의 경향을 보인다. 특히 여성 고용 증가의 경우 2016과 2018년을 비교했을 때는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의 평균 증가 폭이 더 컸으나 관리자의 경우는 기준 충족과 미달 사업장의 증가 폭이 각각 (기준 충족)1.28%p와 (기준 미달)4.11%p로 나타나 제도의 도입과 변화에 대한 효과는 관리자 부문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은 규모별로 기준 충족 여부에 따른 여성 관리자 비중 증감을 살펴보았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준 충족 여부에 상관없이 평균적으로 모두 여성 관리자의 비중이 증가한 반면 1,000인 이상의 경우 기준을 충족한 사업장은 여성 관리자 비중이 감소하였다. 이는 여성 고용 비중 증감과는 상반된 결과인데, 여성 고용률 제고 효과는 1,000인 미만 사업체가, 여성 관리자 비율 제고 효과는 1,000인 이상 사업체가 선명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 해석의 여지는 있지만, 현재 규모별 및 업종에 대한 기준선을 여성 고용률이나 관리자 비율에 같이 적용하는 것보다는 차별을 두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5〉 규모별 여성 관리자 비중 증감

(단위: %p)

연도	기준 충족 여부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2015→2017	70% 이상	0.17	-2.42
	70% 미만	3.34	3.11
2015→2019	70% 이상	1.48	-0.39
	70% 미만	4.85	4.36

자료: 노사발전재단, AA 행정데이터(2015~2019).

마지막으로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여 여성 관리자 비중 증감에 대해 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공공부문은 기준 충족 여부에 관계없이 여성

관리자가 증가하고, 비율 증가의 크기도 비슷하였으나 민간부문의 경우 기준에 미달한 경우 여성 관리자 비중이 더 크게 증가하였다.

〈표 6〉 유형별 여성 관리자 비중 증감

(단위: %p)

연도	기준 충족 여부	공공	민간	지방공기업
2015→2017	70% 이상	0.67	-2.05	
	70% 미만	1.60	3.40	
2015→2019	70% 이상	3.54	0.01	
	70% 미만	3.58	4.62	

자료: 노사발전재단, AA 행정데이터(2015~2019).

2.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개에 따른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중 증감

다음은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개에 따른 여성 고용 및 여성 관리자 증감을 살펴본다. 명단이 공개되는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 고용기준에 미치지 못한 사업장 중에서 정부로부터 고용 개선 이행촉구를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곳으로 전문가 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친다. 미이행 사업장의 명단은 전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표가 되므로 아래의 〈표 7〉에 나타난 미이행 사업장의 빈도는 실제로는 익년도에 발표된 수치이다. 따라서 2016년 명단 공개 여부에 따른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중 증감의 효과는 2018년부터 측정되어야 한다. 미이행 사업장의 비율이 규모에 따라 큰 차이는 없지만 대체로 1,000인 미만 사업장의 비율이 약간 높고, 대부분이 민간사업장이지만 2018년은 공공기관도 5개가 포함되었다.

〈표 7〉 ‘명단공개’ 사업체의 연도별 규모별 분포

(단위: 개)

연도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합계		
	명단 공개	(비율)	전체	명단 공개	(비율)	전체	명단 공개	(비율)	전체
2016	15	1.2%	1,215	12	1.5%	825	27	1.3%	2,040
2017	29	2.5%	1,157	13	1.5%	848	42	2.1%	2,005
2018	35	2.8%	1,261	15	1.7%	885	50	2.3%	2,146

주. 2016년 ‘명단 공개’ 사업체 중 공공은 1개, 2017년은 모두 민간, 2018년은 ‘명단 공개’ 사업체 중 공공은 5개.

자료: 노사발전재단, AA 행정데이터(2016~2018).

먼저 명단공개가 최초로 시행된 2016년도(실제 발표는 2017년도)와 비교하여 2018년 및 2019년의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중 증감을 살펴보았다. 2016년에 비해 2018년에는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의 여성 고용 비중이 1.81%p 증가하였고, 미공개 사업장은 1.56%p 증가하였다. 한편 여성 관리자 비중은 공개 사업장의 경우 0.53%p 증가하였고, 미공개 사업장은 1.74%p 증가하였다. 2016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공개된 사업장의 경우 여성 고용은 2.67%p, 여성 관리자는 0.67%p 증가하였는데, 미공개 사업장은 이와는 반대로 0.98%p, 2.44%p 증가하였다. 또한 2017년과 2019년을 비교하면 여성 고용이나 여성 관리자 비중의 증가 효과가 좀 더 두드러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성 고용은 공개 사업장의 경우 1.73%p, 미공개 사업장은 0.7%p의 증가를 보였고, 여성 관리자 비중은 공개 사업장은 5.03%p, 미공개 사업장은 1.29%p의 증가를 보였다.

〈표 8〉 명단 공개에 따른 여성 고용 및 관리자 증감

(단위: %p)

연도	공개 여부	여성 고용	여성 관리자
2016→2018	미공개	1.56	1.74
	공개	1.81	0.53
2016→2019	미공개	0.98	2.44
	공개	2.67	0.67
2017→2019	미공개	0.70	1.29
	공개	1.73	5.03

자료: 노사발전재단, AA 행정데이터(2016~2019).

다음은 1,000인 이상 및 1,000인 미만의 규모별로 구분하여 명단 공개에 따른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중 증감을 살펴보았다. 여성 고용의 경우 1,000인 미만 사업장들은 공개 또는 비공개 여부에 상관없이 대체로 여성 고용 비중이 감소한 반면 1,000인 이상 사업장들은 여성 고용 비중이 모두 증가하였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여성 관리자의 경우는 2017년과 2019년 사이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의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중 증가폭이 미공개 사업장의 증가폭보다 더 크게 나타났으나 2016년과 2018년 및 2019년 사이에는 공개 여부에 따른 효과의 차이가 1,0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크지 않았고, 1,000인 이상 사업장은 오히려 미공개 사업장의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

〈표 9〉 명단 공개에 따른 여성 고용 및 관리자 증감: 규모별

(단위: %p)

연도	공개 여부	여성 고용		여성 관리자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1,000인 미만	1,000인 이상
2016→2018	미공개	-0.07	1.96	0.52	2.24
	공개	-1.72	2.56	0.95	0.56
2016→2019	미공개	-0.11	1.26	1.81	2.59
	공개	-1.63	3.83	1.71	0.46
2017→2019	미공개	-0.51	0.99	1.43	1.26
	공개	1.63	1.44	5.15	4.89

자료: 노사발전재단, AA 행정데이터(2016~2019).

그러나 명단 공개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서 그 순 효과를 평균적인 비율 변화만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무리이다. 다음의 실증분석을 통해 기타 변수들을 통제함으로써 명단 공개 제도 도입의 순 효과를 분석하기로 한다.

IV.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AA제도의 순효과 분석

1.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 모형

본 장에서는 이중차분(Difference-in-Difference) 모형을 활용하여 제도 변화에 따른 순(純)효과를 추정한다. 이중차분법은 정책이 적용되는 처치집단과 적용되지 않는 통제집단 간의 정책성격을 측정하는 방법론으로, 실험집단과 동질적인 통제집단을 설정하여 전후관계를 비교함으로써 시간에 따라 변하는 관측 불가능한 요인이 제거되어 인과효과 추정값을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수혜자만을 대상으로 정책 수혜 전후를 비교하는 것보다 수혜자(실험집단)와 비수혜자(통제집단)를 나누어서 두 시기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이 시간에 따른 일반적인 변화의 영향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다(김난영, 2019: 151).

이중차분법과 같은 준실험적 방법을 정책효과 분석에 활용해야 하는 필요성을 논증하기 위하여 먼저 여성 고용 및 관리자의 동종 업종 평균의 70% 미만 여부에 따른 여성 고용(관리자) 비중의 효과를 단순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추정은 사업장의 총 근로자 수로 가중하였고, 규모(1,000인 이상 여부), 업종, 유형(공공/민간) 등으로 통제하였다. 각 기간별 여성 고용 비중의 증감, 여성 관리자 비중의 증감을 종속변수로 하고, 시작 연도의 여성 고

용 및 관리자 평균의 70% 미달 여부(시행계획서 작성 대상 여부)를 주요 설명 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는데 모든 연도에 대해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중이 동종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할 경우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중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즉 기간이 길어질수록 여성 고용이나 관리자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표 10〉 시행계획서 대상 사업장의 여성 고용(관리자) 비중 회귀분석: 여성 고용(또는 관리자) 비중 변수 미포함

종속변수	설명변수	회귀계수	p값
'15→'17 여성 고용 비중 증감	'15년 여성 고용 70% 미달 여부	0.0094	〈.0001
'15→'19 여성 고용 비중 증감		0.0202	〈.0001
'15→'17 여성 관리자 비중 증감	'15년 여성 관리자 70% 미달 여부	0.0416	〈.0001
'15→'19 여성 관리자 비중 증감		0.0585	〈.0001

그러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가 늘어나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여성 고용이나 관리자 비중이 낮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중 증가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것을 순수하게 AA 제도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여성 고용 비중 및 여성 관리자 비중을 각각 추가하여 동일한 분석을 한 결과 주요 설명 변수인 여성 고용(관리자) 70% 미달 여부의 계수 추정치의 유의성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표 11〉 시행계획서 대상 기업의 여성 고용(관리자) 비중 회귀분석: 여성 고용(또는 관리자) 비중 변수 포함

종속변수	설명변수	회귀계수	p값
'15→'17 여성 고용 비중 증감	여성 고용 70% 미달 여부	-0.0011	0.6984
	여성 고용 비중	-0.0440	〈.0001
'15→'19 여성 고용 비중 증감	여성 고용 70% 미달 여부	-0.0027	0.4738
	여성 고용 비중	-0.0960	〈.0001
'15→'17 여성 관리자 비중 증감	여성 관리자 70% 미달 여부	-8.5E-06	0.9987
	여성 관리자 비중	-0.1984	〈.0001
'15→'19 여성 관리자 비중 증감	여성 관리자 70% 미달 여부	-0.0006	0.9243
	여성 관리자 비중	-0.2827	〈.0001

이상의 분석을 종합하면 AA 제도가 여성 고용이나 관리자의 비중 증가에 반드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단정하기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순수한 정책 효과를 포착할 수 있는 이중차분법과 같은 방법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본 분석에서는 정책성과변수($ratio_{i,t}$)를 ‘여성 고용 비중’, ‘여성 관리자 비중’으로 하고, 다음과 같이 OLS 추정식을 설정한다.

$$ratio_{i,t} = \beta_0 + \delta_0 Time_t + \beta_1 Treat_i + \delta_1 (Time_t \cdot Treat_i) + X_{i,t} + e_{i,t} \quad (4.1)$$

$Time_t$ 는 정책집행 전후를 나타내는 더미변수로, ‘고용미달 기준 70%’,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가 도입되기 전이면 $Time_t=0$, 그 이후 연도는 1의 값을 갖는다. $Treat_i$ 는 정책적용집단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로, ‘고용미달 기준 70%’에 해당하면 1, 그렇지 않으면 0을 나타내고,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한다. 위의 OLS 추정치에서 순수한 정책효과를 나타내는 이중차분 추정치는 정책시점과 정책적용집단 더미변수의 교차항인 δ_1 이다. $X_{i,t}$ 는 기타 통제변수로서 단순회귀분석에서도 활용한 규모(1,000인 이상 여부), 업종, 유형(공공/민간) 등의 변수이다.

OLS 추정식에서 정책시점과 정책적용집단 더미변수의 교차항인 δ_1 이 왜 순수한 정책효과를 포착하는지에 대해서는 강창희 외(2013)를 참고하여 본고의 연구 문제인 여성 고용 비중 분석에 적용해 설명하기로 한다.

〈표 12〉 사업장의 기준 미달 여부별/시점별 평균 여성 고용 비중(예시)

연도 \ 처치변수	(1) 70% 기준 미달	(2) 70% 기준 충족	(1)-(2)
(Ⅰ) 2015년	$\overline{ratio}_{Treat=1}^{Time=0} = 0.1$	$\overline{ratio}_{Treat=0}^{Time=0} = 0.4$	-0.3
(Ⅱ) 2016년	$\overline{ratio}_{Treat=1}^{Time=1} = 0.3$	$\overline{ratio}_{Treat=0}^{Time=1} = 0.5$	-0.2
(Ⅱ)-(Ⅰ)	0.2	0.1	0.1

〈표 12〉는 70% 기준이 적용되기 전 정보를 담고 있는 2015년과 적용 후 정보를 담고 있는 2016년 각각의 자료에 대해 70% 기준 미달 그룹과 충족 그룹의 평균 여성 고용 비중을 예시로 나타내고 있다. 이 표에 의하면 70% 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인 2015년 자료에도 기준 ‘미달 그룹’과 기준 ‘충족 그룹’ 사이에 체계적인 차이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미달 그룹’의 평균 여성 고용 비중은 10%, ‘충족 그룹’은 평균 40%로 ‘미달 그룹’이 ‘충족 그룹’에 비해

30%p 작다. 그렇다면 70% 기준 적용의 인과효과는 2016년 측정된 ‘미달 그룹’과 ‘충족 그룹’ 간 평균 비중의 차이에서 2015년 측정된 두 그룹 간 평균 비중의 차이를 한 번 더 차감해줌으로써 계산된다. 2016년 측정된 ‘미달 그룹’과 ‘충족 그룹’ 간 비중의 차이는 ‘(i) 70% 기준 적용의 효과’와 ‘(ii) 처치 이전의 비중 차이’가 결합된 차이이고, 2015년 측정된 두 그룹 간 비중의 차이는 ‘처치 이전의 비중 차이’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i)+(ii)]에서 후자[(ii)]를 차감함으로써 ‘처치 이전의 비중 차이’ 부분을 제거할 수 있다. 결국 70%기준 적용에 의한 진정한 여성 고용 비중 증가분은 ‘(-0.2)-(-0.3)’인 평균 10%p이다.

여기서 구한 것과 동일한 이중차분 추정치는 각 그룹에 대해 2016년과 2015년 사이의 평균 비중 변동분을 계산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구할 수 있다. 즉 ‘미달 그룹’의 2015년부터 2016년까지의 평균 비중 변동분 0.2로부터 ‘충족 그룹’의 평균 비중 변동분 0.1을 한 번 더 차분함으로써도 동일한 이중차분 추정치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이중차분추정치} &= \left(\overline{ratio}_{Treat=1}^{Time=1} - \overline{ratio}_{Treat=0}^{Time=1} \right) - \left(\overline{ratio}_{Treat=1}^{Time=0} - \overline{ratio}_{Treat=0}^{Time=0} \right) \\ &= \left(\overline{ratio}_{Treat=1}^{Time=1} - \overline{ratio}_{Treat=1}^{Time=0} \right) - \left(\overline{ratio}_{Treat=0}^{Time=1} - \overline{ratio}_{Treat=0}^{Time=0} \right) \end{aligned} \quad (4.2)$$

서로 다른 시점의 자료를 분리하지 않고 2015년과 2016년의 자료를 하나의 결합자료(pooled data)로 구성하여 정책변화의 인과효과를 추정하는 방법이 바로 식 (4.3)과 같이 OLS식을 추정하는 것이다.

$$y_{i,t} = \beta_0 + \delta_0 Time_t + \beta_1 Treat_i + \delta_1 (Time_t \cdot Treat_i) + X_{i,t} + e_{i,t} \quad (4.3)$$

이제 왜 ‘시간’과 ‘처치’ 변수의 교호항 계수가 이중차분 추정치인지를 설명해야 하는데, 그것은 식 (4.3)에 조건부 기댓값을 취하고 이중차분을 계산하는 식 (4.2)에 적용하면 된다. 식 (4.2)에 조건부 기댓값을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이중차분추정치} &= \left(\overline{ratio}_{Treat=1}^{Time=1} - \overline{ratio}_{Treat=0}^{Time=1} \right) - \left(\overline{ratio}_{Treat=1}^{Time=0} - \overline{ratio}_{Treat=0}^{Time=0} \right) \\ &= [E(ratio \mid Treat=1, Time=1) - E(ratio \mid Treat=0, Time=1)] \\ &\quad - [E(ratio \mid Treat=1, Time=0) - E(ratio \mid Treat=0, Time=0)] \end{aligned} \quad (4.4)$$

식 (4.3)을 식 (4.4)의 각 항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E(\text{ratio} \mid \text{Treat} = 1, \text{Time} = 1) &= E_{11} = \beta_0 + \delta_0 + \beta_1 + \delta_1 \\
 E(\text{ratio} \mid \text{Treat} = 0, \text{Time} = 1) &= E_{01} = \beta_0 + \delta_0 \\
 E(\text{ratio} \mid \text{Treat} = 1, \text{Time} = 0) &= E_{10} = \beta_0 + \beta_1 \\
 E(\text{ratio} \mid \text{Treat} = 0, \text{Time} = 0) &= E_{00} = \beta_0
 \end{aligned} \tag{4.5}$$

결국 이중차분의 계수는 $(E_{11} - E_{01}) - (E_{10} - E_{00}) = \delta_1$ 임을 확인할 수 있다.

2. 분석자료 및 기초통계

본 분석에 활용되는 자료는 AA 제도의 행정자료 중 2015년~2019년 데이터이다. 70% 기준의 도입에 따른 순수한 정책효과를 보는 것이 본 분석의 목적인데, 70% 기준이 적용된 최초의 자료는 2015년 자료이다. 하지만 2015년 자료는 2014년의 여성 근로자 및 관리자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2015년 데이터는 개정된 미달 기준이 적용되기 전인 2014년 정보를 담고 있다.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AA 제도는 근로자 정보를 제출하고 그 이듬해 시행계획서, 다시 그 이듬해 이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정책의 효과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시간 경과의 효과를 보기 위하여 변경된 제도 시행 이전 연도인 2015년 데이터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등 각 연도의 데이터를 붙여서 분석할 것이다. 예를 들어 2015년과 2016년을 붙인 데이터에 대해 분석한 결과는 2015년과 비교하여 순수한 정책의 효과를 포착하게 된다. 즉 2015년이면 $\text{Time}_t = 0$, 2016년이면 $\text{Time}_t = 1$ 이 되는 것이고, 2015년 70% 기준에 미달하면 $\text{Treat}_i = 1$, 그렇지 않으면 $\text{Treat}_i = 0$ 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2015년 자료를 이후 각 연도 자료와 결합하여 각각 분석하되 두 개 연도에 모두 관측된 관측치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다. 또한 성재민·최효미(2015)에서와 같이 70%를 갓 넘긴 사업장들은 본 연구의 관찰 기간 사이에 시행계획서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제집단은 2015년 동종업종 여성 고용(관리자) 비중 평균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한다. 또한 이전 미달 기준인 60% 미만의 사업장들은 이전에도 시행계획서 대상이었을 가능성이 높고, 60% 이상 70% 미만 사업장들은 시행계획서 작성 대상이 아니었다가 70% 기준으로 제도가 변경된 후 시행계획서 작성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제도변화의 순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처치 집단을 60% 이상 70% 미만으로 설정한 추정도 수행한다. 이는 또한 회귀단절

모형의 아이디어대로 70%에 가까운 사업장들은 이미 특성이 유사하여 70% 근방을 보는 것이 내적 타당성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성재민·최효미, 2015: 45). 또한 이 방법은 비교집단과 처리집단 간에 트렌드 차이가 없어야 이중차분법을 적절히 적용할 수 있다는 이중차분법의 속성을 감안한 것이기도 하다.

〈표 13〉 모형별 모집단 및 분석대상 관측치 규모

(단위: 개)

모형	관측기간 (A→B)	기간별 모집단		분석대상 관측치
		A	B	
(모형Ⅰ) 여성 근로자 비중 동종업종 평균 이상 vs 평균의 70% 미만	2015→2016	2,009	2,040	2,932
	2015→2017		2,005	
	2015→2018		2,146	
	2015→2019		2,442	
(모형Ⅱ) 여성 관리자 비중 동종업종 평균 이상 vs 평균의 70% 미만	2015→2016	2,009	2,040	3,402
	2015→2017		2,005	
	2015→2018		2,146	
	2015→2019		2,442	
(모형Ⅲ) 여성 근로자 비중 동종업종 평균 이상 vs 평균의 70% 미만 및 60% 이상	2015→2016	2,009	2,040	1,992
	2015→2017		2,005	
	2015→2018		2,146	
	2015→2019		2,442	
(모형Ⅳ) 여성 관리자 비중 동종업종 평균 이상 vs 평균의 70% 미만 및 60% 이상	2015→2016	2,009	2,040	1,742
	2015→2017		2,005	
	2015→2018		2,146	
	2015→2019		2,442	

〈표 13〉은 각 모형별로 기간별 모집단과 기간별로 결합한 데이터의 관측치 규모를 나타낸 것이다. 여성 근로자 비중이 동종업종의 평균 이상인 그룹과 평균의 70% 미만인 그룹을 비교하는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하면, 2015년 총 관측치 2,009개 중 동종업종 평균 미만 및 평균의 70% 이상인 그룹을 제외한 1,466개사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이 그룹의 2015년과 2016년 관측치를 위아래로 결합하여 하나의 결합 데이터(pooled data)를 형성한 것이 총 2,932개의 관측치인 것이다. 관리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논리로 분석대상 집단을 추출하였는데, 2015년 여성 관리자 비중이 동종업종 평균 미만 및 평균의 70% 이상인 그룹을 제외한 1,701개사를 대상으로 2016년 관측치와 결합 데이터를 형성한 것이 총 3,402개 관측치이다.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중이 동종업종 평균 이상과 평균의 70% 미만 및 60% 이상 그룹을 비교한 모형도 마찬가지로 결합 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다. 아래의 〈표 14〉는 여성 고용(관리자) 비중 증가효과를 분석한 위의 4개의 모형 중 2015년과 2016년 결합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의 기초통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 14〉 기초통계(Ⅰ) - 고용 미달 기준 변화에 따른 여성 비중 증가효과 분석
(2015→2016)

변수	모형Ⅰ				모형Ⅱ				모형Ⅲ				모형Ⅳ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여성근로자 (관리자) 비중	0.370	0.264	0.002	0.998	0.194	0.228	0.000	1.000	0.431	0.259	0.003	0.998	0.262	0.241	0.000	1.000
Time (2015년 '0', 2016년 '1')	0.500	0.500	0.000	1.000	0.500	0.500	0.000	1.000	0.500	0.500	0.000	1.000	0.500	0.500	0.000	1.000
Treat (기준 충족 '0', 기준 미달 '1')	0.401	0.490	0.000	1.000	0.547	0.498	0.000	1.000	0.118	0.323	0.000	1.000	0.116	0.320	0.000	1.000
Time×Treat	0.201	0.400	0.000	1.000	0.274	0.446	0.000	1.000	0.059	0.236	0.000	1.000	0.058	0.234	0.000	1.000
규모 (1,000인 미만 '0', 이상 '1')	0.433	0.496	0.000	1.000	0.424	0.494	0.000	1.000	0.456	0.498	0.000	1.000	0.478	0.500	0.000	1.000
유형 (민간 '0', 공공 '1')	0.153	0.360	0.000	1.000	0.158	0.365	0.000	1.000	0.147	0.354	0.000	1.000	0.137	0.344	0.000	1.000
업종 대미																
농·림·어·광업 (기준)	0.005	0.074	0.000	1.000	0.004	0.066	0.000	1.000	0.006	0.074	0.000	1.000	0.003	0.059	0.000	1.000
제조업	0.050	0.219	0.000	1.000	0.048	0.214	0.000	1.000	0.049	0.216	0.000	1.000	0.050	0.218	0.000	1.000
중화학공업	0.146	0.353	0.000	1.000	0.138	0.345	0.000	1.000	0.134	0.341	0.000	1.000	0.122	0.327	0.000	1.000
전자산업	0.054	0.225	0.000	1.000	0.049	0.215	0.000	1.000	0.040	0.196	0.000	1.000	0.030	0.170	0.000	1.000
전기, 가스,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0.012	0.109	0.000	1.000	0.013	0.114	0.000	1.000	0.013	0.111	0.000	1.000	0.017	0.128	0.000	1.000
건설업	0.051	0.220	0.000	1.000	0.051	0.220	0.000	1.000	0.049	0.215	0.000	1.000	0.046	0.209	0.000	1.000
도소매	0.045	0.208	0.000	1.000	0.048	0.214	0.000	1.000	0.047	0.212	0.000	1.000	0.048	0.213	0.000	1.000
숙박음식점	0.021	0.145	0.000	1.000	0.027	0.161	0.000	1.000	0.029	0.167	0.000	1.000	0.032	0.175	0.000	1.000
운수업	0.050	0.218	0.000	1.000	0.047	0.212	0.000	1.000	0.041	0.198	0.000	1.000	0.044	0.206	0.000	1.000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 서비스	0.045	0.207	0.000	1.000	0.042	0.201	0.000	1.000	0.045	0.208	0.000	1.000	0.045	0.208	0.000	1.000
금융 및 보험부동산 임대업	0.073	0.261	0.000	1.000	0.074	0.261	0.000	1.000	0.090	0.287	0.000	1.000	0.090	0.286	0.000	1.000
전문기술,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 서비스	0.291	0.454	0.000	1.000	0.302	0.459	0.000	1.000	0.286	0.452	0.000	1.000	0.296	0.457	0.000	1.000
교육서비스	0.052	0.222	0.000	1.000	0.055	0.229	0.000	1.000	0.056	0.230	0.000	1.000	0.061	0.239	0.000	1.000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0.076	0.266	0.000	1.000	0.070	0.255	0.000	1.000	0.086	0.281	0.000	1.000	0.088	0.284	0.000	1.000
예술, 여가, 협회 및 단체, 개인서비스 등	0.027	0.163	0.000	1.000	0.031	0.172	0.000	1.000	0.029	0.168	0.000	1.000	0.028	0.165	0.000	1.000
관측치(개)	2,932				3,402				1,992				1,742			

다음으로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에 따른 여성비중 증가 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명단이 공개된 사업장들의 경우 3년 연속 시행계획서를 작성한 사업장 중에서도 여전히 부진한 사업장이 심사를 통해 결정되므로, 다른 사업장들과 여성 고용 또는 관리자 비중의 트렌드가 매우 상이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전

술한 바와 같이 이중차분모형은 트렌드가 유사한 집단에 대해서만 그 효과 측정이 유효한 측면이 있으므로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을 기준으로 과거 3년 연속 시행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장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하되, 단순회귀분석과 마찬가지로 2년 후의 효과를 관찰하기로 한다. 기타 통제변수들은 이전의 분석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다만 명단이 공개된 사업체 중 공공기관은 1개에 불과하므로 통제변수 중 ‘유형’은 제외하였다.

2016년 총 2,040개사 중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 동안 연속으로 시행계획서를 제출한 사업체는 총 811개사로, 2018년과 2019년 데이터를 각각 결합한 데이터의 관측치는 1,622개이다. <표 15>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에 따른 여성비중 증가효과 분석에 활용한 데이터의 기초통계를 나타낸 표이다.

<표 15> 기초통계(II) -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에 따른 여성비중 증가효과 분석

변수	2016~2018				2016~2019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여성근로자 비중	0.292	0.227	0.002	0.992	0.293	0.228	0.002	0.998
여성관리자 비중	0.130	0.179	0.000	1.000	0.134	0.184	0.000	1.000
Time (2015년 '0', 2016년 '1')	0.489	0.500	0.000	1.000	0.500	0.500	0.000	1.000
Treat (명단 미공개 '0', 명단 공개 '1')	0.033	0.179	0.000	1.000	0.033	0.179	0.000	1.000
Time×Treat	0.016	0.126	0.000	1.000	0.017	0.128	0.000	1.000
규모 (1,000인 미만 '0', 이상 '1')	0.497	0.500	0.000	1.000	0.496	0.500	0.000	1.000
업종 더미								
농·림·아·광업(기준)	0.005	0.070	0.000	1.000	0.005	0.070	0.000	1.000
제조업	0.047	0.213	0.000	1.000	0.047	0.211	0.000	1.000
중화학공업	0.154	0.361	0.000	1.000	0.161	0.368	0.000	1.000
전자산업	0.043	0.203	0.000	1.000	0.044	0.206	0.000	1.000
전기, 가스,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0.012	0.108	0.000	1.000	0.012	0.108	0.000	1.000
건설업	0.064	0.245	0.000	1.000	0.064	0.245	0.000	1.000
도소매	0.045	0.207	0.000	1.000	0.044	0.205	0.000	1.000
숙박음식점	0.023	0.149	0.000	1.000	0.023	0.151	0.000	1.000
운수업	0.054	0.225	0.000	1.000	0.054	0.225	0.000	1.000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0.052	0.223	0.000	1.000	0.052	0.223	0.000	1.000
금융 및 보험부동산 임대업	0.093	0.291	0.000	1.000	0.092	0.290	0.000	1.000
전문기술,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 서비스	0.274	0.446	0.000	1.000	0.271	0.445	0.000	1.000
교육서비스	0.048	0.214	0.000	1.000	0.052	0.222	0.000	1.000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0.037	0.189	0.000	1.000	0.041	0.199	0.000	1.000
예술, 여가, 협회 및 단체, 개인서비스 등	0.024	0.153	0.000	1.000	0.023	0.151	0.000	1.000
관측치(개)	1,622							

3. 분석결과

1) 고용 미달 기준 변화에 따른 여성 비중 증가효과

먼저 고용 미달 기준 변화에 따른 여성 고용 및 여성 관리자 비중 증가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처치집단을 동종업종 평균의 70% 미만과 60% 이상 70% 미만의 두 개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모든 경우에서 처치변수 및 시간변수의 교호항이 유의하게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치집단을 60% 이상 70% 미만으로 한정했음에도 일관된 결과가 도출된 것은 미달 기준의 상향이 분명한 정책적 효과를 도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근로자 비중이나 관리자 비중의 경우 약간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규모, 유형에 따라 비중 증감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 시행 계획서 작성 의무의 기준을 현재처럼 업종에 대해서만 일관되게 적용하기보다는 유형과 규모별로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성도 보여준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를 동종업종 평균 70% 미만 및 60% 이상의 사업장을 처치집단으로 사용한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한다(〈표 18〉, 〈표 19〉 참조). 전술한 바와 같이 모든 분석에서 교호항의 계수가 유의하게 정(+)의 값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비중의 경우에는 2015~2018년 기간의 추정치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관리자 비중의 경우에는 2015~2016년 기간의 추정치가 가장 컸지만 2017년 줄었다가 2015~2018년 기간 다시 계수의 절대값이 커져서 이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효과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규모면에서는 1,000인 이상의 사업장이 1,000인 미만 사업장보다 여성 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여성 관리자는 제도 시행 시점과 비교하면 3년 후까지는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2019년부터는 유의성이 떨어져 반드시 규모가 큰 사업장이라고 해서 여성 관리자 증가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유형에 대해서는 민간사업장에 비해 공공기관의 여성 고용과 여성 관리자 비중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이미 여성 비중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는 이유로 제도의 순 효과가 떨어지는 측면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종을 보면 전통적으로 여성이 주로 진출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도소매, 숙박음식점, 교육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등의 업종에서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중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 여성 근로자 비중 동종업종 평균 이상 vs 평균의 70% 미만

독립변수		종속변수: 여성 근로자 비중			
		2015~2016	2015~2017	2015~2018	2015~2019
상수		0.3984***	0.3970***	0.4053***	0.3937***
Time(2015년 '0', 정책실시후 '1')		-0.1599***	-0.1618***	-0.1565***	-0.1527***
Treat(기준 총족 '0', 기준 미달 '1')		-0.3376***	-0.3363***	-0.3362***	-0.3359***
Time×Treat		0.3258***	0.3356***	0.3323***	0.3224***
규모(1,000인 미만 '0', 이상 '1')		0.0199***	0.0232***	0.0209***	0.0209***
유형(민간 '0', 공공 '1')		-0.0658***	-0.0584***	-0.0607***	-0.0492***
업종 (농·림·어· 광업 기준)	제조업	0.1525***	0.1490***	0.1393***	0.1435***
	중화학공업	-0.1008**	-0.1040**	-0.1115***	-0.1002**
	전자산업	0.0338	0.0316	0.0208	0.0296
	전기, 가스,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0.1131**	-0.1152**	-0.1203**	-0.1053**
	건설업	-0.1524***	-0.1552***	-0.1619***	-0.1462***
	도소매	0.2566***	0.2579***	0.2517***	0.2658***
	숙박음식점	0.2386***	0.2629***	0.2623***	0.2733***
	운수업	-0.0870**	-0.0867**	-0.0912**	-0.078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	0.0864**	0.0826**	0.0755*	0.0835**
	금융및보험부동산임대업	0.1596***	0.1575***	0.1499***	0.1617***
	전문기술,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 서비스	0.2056***	0.2014***	0.1937***	0.2014***
	교육서비스	0.2184***	0.2229***	0.2178***	0.2312***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4245***	0.4254***	0.4175***	0.4293***
	예술, 여가, 협회 및 단체, 개인서비스 등	0.2055***	0.2166***	0.2170***	0.2186***
Obs		2,932	2,932	2,932	2,932
R-Square		0.6368	0.6423	0.6374	0.6398

주. *p<0.1, **p<0.05, ***p<0.01.

〈표 17〉 여성 관리자 비중 동종업종 평균 이상 vs 평균의 70% 미만

독립변수		종속변수: 여성 관리자 비중			
		2015~2016	2015~2017	2015~2018	2015~2019
상수		0.2443***	0.2464***	0.2409***	0.2370***
Time(2015년 '0', 정책실시후 '1')		-0.1477***	-0.1406***	-0.1411***	-0.1339***
Treat(기준 충족 '0', 기준 미달 '1')		-0.2626***	-0.2616***	-0.2618***	-0.2621***
Time×Treat		0.2675***	0.2628***	0.2644***	0.2593***
규모(1,000인 미만 '0', 이상 '1')		0.0101*	0.0113**	0.0090	0.0111**
유형(민간 '0', 공공 '1')		-0.0722***	-0.0737***	-0.0701***	-0.0600***
업종 (농·림·어·광업 기준)	제조업	0.0124	0.0148	0.0247	0.0296
	중화학공업	-0.0587	-0.0646	-0.0574	-0.0541
	전자산업	-0.0026	-0.0095	-0.0024	0.0011
	전기, 가스,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0.0692	-0.0729	-0.0653	-0.0711
	건설업	-0.0471	-0.0537	-0.0466	-0.0475
	도소매	0.1792***	0.1736***	0.1813***	0.1908***
	숙박음식점	0.2456***	0.2666***	0.2583***	0.2847***
	운수업	-0.0148	-0.0154	-0.0127	-0.0049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	0.0678	0.0596	0.0634	0.0622
	금융및보험부동산임대업	0.0398	0.0364	0.0466	0.0497
	전문기술,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 서비스	0.1634***	0.1584***	0.1611***	0.1591***
	교육서비스	0.1698***	0.1793***	0.1955***	0.1926***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4040***	0.4061***	0.4167***	0.4186***
	예술, 여가, 협회 및 단체, 개인서비스 등	0.1509***	0.1486***	0.1542***	0.1527***
Obs		3,402	3,402	3,402	3,402
R-Square		0.5243	0.5359	0.5334	0.5200

주. *p<0.1, **p<0.05, ***p<0.01.

〈표 18〉 여성 근로자 비중 동종업종 평균 이상 vs 평균의 70% 미만 및 60% 이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여성 근로자 비중			
		2015~2016	2015~2017	2015~2018	2015~2019
상수		0.4091***	0.4130***	0.4232***	0.4072***
Time(2015년 '0', 정책실시후 '1')		-0.1647***	-0.1663***	-0.1581***	-0.1597***
Treat(기준 총족 '0', 기준 미달 '1')		-0.2950***	-0.2949***	-0.2950***	-0.2949***
Time×Treat		0.3064***	0.3249***	0.2746***	0.2908***
규모(1,000인 미만 '0', 이상 '1')		0.0247***	0.0269***	0.0273***	0.0247***
유형(민간 '0', 공공 '1')		-0.0794***	-0.0745***	-0.0767***	-0.0675***
업종 (농·림·어· 광업 기준)	제조업	0.1510***	0.1435***	0.1293**	0.1473**
	중화학공업	-0.1481***	-0.1555***	-0.1673***	-0.1491***
	전자산업	-0.0007	-0.0124	-0.0230	-0.0056
	전기, 가스,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0.1305**	-0.1322**	-0.1407**	-0.1264**
	건설업	-0.2081***	-0.2123***	-0.2233***	-0.2003***
	도소매	0.2736***	0.2719***	0.2598***	0.2819***
	숙박음식점	0.2159***	0.2281***	0.2197***	0.2407***
	운수업	-0.1113**	-0.1175**	-0.1238**	-0.1074**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	0.0765	0.0725	0.0671	0.0802
	금융및보험부동산임대업	0.1458***	0.1403***	0.1301***	0.1487***
	전문기술,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 서비스	0.2191***	0.2111***	0.1995***	0.2090***
	교육서비스	0.2074***	0.2003***	0.1938***	0.2134***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3966***	0.3959***	0.3866***	0.4049***
	예술, 여가, 협회 및 단체, 개인서비스 등	0.2084***	0.2054***	0.2094***	0.2282***
Obs		1,992	1,992	1,992	1,992
R-Square		0.6103	0.6218	0.6187	0.6166

주. *p<0.1, **p<0.05, ***p<0.01.

〈표 19〉 여성 관리자 비중 동종업종 평균 이상 vs 평균의 70% 미만 및 60% 이상

독립변수		종속변수: 여성 관리자 비중			
		2015~2016	2015~2017	2015~2018	2015~2019
상수		0.2305***	0.2294***	0.2207***	0.2253***
Time(2015년 '0', 정책실시후 '1')		-0.1501***	-0.1407***	-0.1408***	-0.1325***
Treat(기준 충족 '0', 기준 미달 '1')		-0.2290***	-0.2304***	-0.2314***	-0.2305***
Time×Treat		0.2435***	0.2180***	0.2390***	0.2336***
규모(1,000인 미만 '0', 이상 '1')		0.0224***	0.0206**	0.0173**	0.0127
유형(민간 '0', 공공 '1')		-0.0887***	-0.0889***	-0.0865***	-0.0839***
업종 (농·림·어· 광업 기준)	제조업	0.0030	0.0139	0.0295	0.0221
	중화학공업	-0.1005	-0.1039	-0.0957	-0.1011
	전자산업	-0.0300	-0.0349	-0.0257	-0.0292
	전기, 가스,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0.0915	-0.0901	-0.0804	-0.0835
	건설업	-0.0841	-0.0793	-0.0713	-0.0779
	도소매	0.1946***	0.2037***	0.2140***	0.2223***
	숙박음식점	0.2837***	0.2854***	0.2910***	0.3003***
	운수업	-0.0366	-0.0327	-0.0252	-0.0242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	0.0834	0.0777	0.0887	0.0839
	금융및보험부동산임대업	0.0419	0.0411	0.0529	0.0539
	전문기술,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 서비스	0.2062***	0.2078***	0.2153***	0.2096***
	교육서비스	0.1886***	0.1999***	0.2193***	0.2091***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4103***	0.4128***	0.4231***	0.4215***
	예술, 여가, 협회 및 단체, 개인서비스 등	0.1965***	0.1977***	0.2154***	0.2212***
Obs		1,742	1,742	1,742	1,742
R-Square		0.5256	0.5224	0.5276	0.5206

주. *p<0.1, **p<0.05, ***p<0.01.

2)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에 따른 여성비중 증가효과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에 따른 여성비중 증가효과를 분석한 결과 2016년을 기준으로 할 경우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 도입에 의한 순수한 정책 효과는 3년이 경과한 후(명단 공개시점으로부터는 2년) 여성 관리자 비중 증가에 대해서만 유의하게 나타났고, 여성 고용은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명단 공개가 단기적으로는 사업장의 여성 관리자 비중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명단 공개 사례가 많지 않고, 제도가 시행된 후 경과가 오래되지 않아서 장기적인 결과를 추정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표 20〉 미이행사업장 명단 공개에 따른 여성 고용 비중 증가 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여성 고용 비중	
		2016~2018	2016~2019
상수		0.1259**	0.1155**
Time (2016년 '0', 정책실시후 '1')		0.1021***	0.1009***
Treat (명단 미공개 '0', 명단 공개 '1')		0.0128	0.0130
Time×Treat		0.0103	0.0204
규모 (1,000인 미만 '0', 이상 '1')		0.0363***	0.0302***
업종 (농·림·어·광업 기준)	제조업	0.1361**	0.1425**
	중화학공업	-0.0893	-0.0802
	전자산업	0.0362	0.0449
	전기, 가스,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0.0914	-0.0759
	건설업	-0.1114*	-0.0946
	도소매	0.2471***	0.2679***
	숙박음식점	0.2608***	0.2775***
	운수업	-0.0658	-0.0493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0.0752	0.0886
	금융및보험부동산임대업	0.1623*	0.1825***
	전문기술,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 서비스	0.1593*	0.1709***
	교육서비스	0.2099***	0.2285***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	0.4554***	0.4735***
	예술, 여가, 협회 및 단체, 개인서비스 등	0.2156***	0.2359***
Obs		1,622	1,622
R-Square		0.4985	0.5159

주. *p<0.1, **p<0.05, ***p<0.01.

〈표 21〉 미이행사업장 명단 공개에 따른 여성 관리자 비중 증가 효과

독립변수		종속변수: 여성 관리자 비중	
		2016~2018	2016~2019
상수		-0.0286	-0.0203
Time (2016년 '0', 정책실시후 '1')		0.0959***	0.0985***
Treat (명단 미공개 '0', 명단 공개 '1')		-0.0388	-0.0374
Time×Treat		0.0338	0.0679*
규모 (1,000인 미만 '0', 이상 '1')		0.0230***	0.0205***
업종 (농·림·어· 광업 기준)	제조업	0.0680	0.0580
	중화학공업	-0.0029	-0.0139
	전자산업	0.0227	0.0153
	전기, 가스,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0.0182	-0.0284
	건설업	-0.0054	-0.0125
	도소매	0.1341***	0.1396***
	숙박음식점	0.2459***	0.2495***
	운수업	0.0603	0.0589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0.0932*	0.0875*
	금융및보험부동산임대업	0.0587	0.0560
	전문기술, 사업시설 및 사업지원 서비스	0.1549**	0.1448
	교육서비스	0.1760***	0.1617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	0.4233***	0.4222***
	예술, 여가, 협회 및 단체, 개인서비스 등	0.1113**	0.1165**
Obs		1,622	1,622
R-Square		0.4168	0.4247

주. *p<0.1, **p<0.05, ***p<0.01.

V. 결론

본 논문은 AA 제도의 업종 및 규모별 여성 고용 기준선이 상향(60%→70%) 되고, 미이행 사업장 명단이 공개되는 등 조치가 강화된 2015년 이후의 제도 변화 효과를 AA 행정 DB를 통해 분석한 것으로 강화된 고용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여성 고용률, 여성관리자 비율 증가의 순 효과를 분석하였다.

2015년 기준 2017년의 변화를 기준을 충족 여부에 따라 분석한 결과 기준 미달 사업장의 여성 고용 증가 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0% 기준을 도입한 2006년 및 2008년 비교의 경우와는 다른 결과로서 제도의 안착과 여

성 경제활동참가 증가라는 구조적 변화의 효과가 중첩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여성 고용 증가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관측되었으며, 업종별로도 기준 미달 사업장 중 여성 고용 비중이 감소했던 중공업이나 하수/폐기물 처리 등의 업종은 여성 고용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업종에 따른 제도 개선의 효과도 관측된다.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개에 따른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 변화를 살펴본 결과, 최초 명단 공개가 있었던 2016년보다는 2017년 명단 공개의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또한 1,000인 미만 사업장들은 공개 여부에 상관없이 대체로 여성 고용 비중이 감소하였으나 1,000인 이상 사업장은 공개된 사업장의 여성 고용 비중 효과가 뚜렷하게 관측되어 사업장의 이미지 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른바 명성효과(reputation effect)가 대규모 사업장에게 더 큰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이 업종, 규모, 유형별 등으로 본 여성 고용 비중의 변화를 계량모형으로 검증하였다. 먼저 각 년도의 여성 고용 및 여성관리자 70% 기준 미달 여부가 여성 고용과 관리자 비율을 증가시키는지 단순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는데, 모두 유의하게 여성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 고용 비중이나 관리자 비중을 통제해서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부 유의성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분석에서 확인하였던 여성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의 증가를 제도변화의 효과로 바로 간주하는 것은 무리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제도의 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중차분법을 활용한 분석을 시도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처치변수 및 시간변수의 교호항이 유의한 정(+)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기준을 상향이 실제 여성 고용률이나 여성 관리자 비율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개 도입에 의한 순수한 정책효과를 분석하였는데, 명단공개가 단기적으로는 사업장의 여성관리자 비중을 증가시키는 데 있어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통제변수에 대한 분석결과 규모나 유형에 따라 비중 증감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1,000인 이상의 사업장이 1,000인 미만 사업장보다 여성근로자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민간사업장에 비해 공공기관의 여성 고용과 관리자 비중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여성 비중이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을 가능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러한 차이는 공공과 민간에게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규모에 따른 제도 효과의 차이는 규모별로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도 함께 제기한다. 기초분석을 통해 도출한 바와 같이 여성 고용률 제고 효과는 1,000인 미만 사업체가, 여성관리자 비율 제고 효과는 1,000

인 이상 사업체에서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현재 규모별 및 업종에 대한 기준선을 여성 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에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 역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제도 도입 이후 주요한 변화의 효과를 실제 AA행정 DB 자료를 통해 처음으로 실증분석을 시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기준율의 상향이 대상 사업장들의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대상사업장을 확대하기 위한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 현재의 규모 및 업종별 평균의 70%라는 단일한 기준보다는 다양한 차원의 기준 도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대규모 사업장에게는 ‘미이행 사업장 명단공개’의 패널티가 개별 사업장으로 하여금 여성 관리자의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을 제고하도록 유인할 수 있는 수단임을 밝힘으로써 사업장에 대한 다양한 패널티 및 인센티브 제공 역시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도 보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AA 제도가 여성 고용 및 여성 관리자 양적 증가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패널티와 같은 정책적인 제재 때문이 아니라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로써 제도가 자리매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의 고용을 늘리고 기업 내 유리천장을 없애는 등 기업의 성별 다양성 확보가 기업의 성과를 높이고 기업문화를 변화시키는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근거들의 풍부한 수집이 앞으로는 더욱 필요한 과제일 것이다.

참고문헌

- 강창현·허수연(201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이행과정에 대한 연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제9권 제1호. 1-27.
- 강창희·이정민·이석배·김세움(2013). 관광정책 및 관광사업 프로그램 평가방법. 문화체육관광부.
- 고영우(2017).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노동수요에 미친 영향 분석”. 제9회 사업체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117-128.
- 고용노동부·노사발전재단(2019). 2019 AA남녀근로자현황 분석보고서.
- 곽선화(2015).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여성 고용 효과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A 적용 사업장을 중심으로”. 인적자원관리연구. 제22권 제5호. 73-92.
- 김난영(2019).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 DiD)을 활용한 정부 사업 평가: 마이스터고지원사업 효과를 중심으로”. 정책분석평가학회보. 제29권 제3호. 141-167.
- 김난주·홍지현·이선행·심혜빈·신규수(2020). “적극적고용개선조치 제도의 여성 고용 효과 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태홍·강민정·권태희(2010). 적극적고용조치제도의 성과평가와 실효성 제고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부설 고성과작업장혁신센터.
- 노사발전재단(2013-2019). 적극적고용개선조치 행정 DB
- 성재민·최효미(2015). 적극적 고용개선제도 고용영향평가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 성효용(2008).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성과분석:여성고용 및 기업성과를 중심으로. 제6회 사업체패널 학술대회.
- 이근재(2016).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Affirmative Action)의 여성 고용 효과 분석”. 경제연구. 제34권 제2호. 121-143.
- 장지연·조준모·이주희·조용만·신동균·성상현·부가청·김향아(2006). 노동시장 차별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I. 한국노동연구원.
- 전명숙·김향아(2008a).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2년의 평가와 과제”. 노동리뷰. 제45호. 39-50.
- _____ (2008b).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 도입 3년간의 여성 고용현황 비교분석”. 노동리뷰. 제48호. 3-19.
- 정진화·성효용·윤미경·김현숙(2010). AA제도의 경제적 의의와 성과. 노사발전재단.
- 조준모·권태희(2008). 한국 적극적 조치 제도의 성과 결정요인. 한국노동연구원.

- Adams, R. B., Ferreira, D. (2009). Women in the boardroom and their impact on governan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94(2), 291-309.
- Carter, D. A., Simkins, B. J., & Simpson, W. G. (2003). Corporate governance, board diversity, and firm value. *Financial review*, 38(1), 33-53.
- Erhardt, N. L., Werbel, J. D., & Shrader, C. B. (2003). Board of director diversity and firm financial performance. *Corporate governance: An international review*, 11(2), 102-111.
- Holzer, H., Neumark, D. (1999). Are affirmative action hires less qualified? Evidence from employer-employee data on new hires. *Journal of labor economics*, 17(3), 534-569.
- Jung, J. H., Sung, H. Y., & Kim, H. (2013). Affirmative Action in Korea: Its Impact on Women's Employment, Corporate Performance and Economic Growth. *The Journal of Women and Economics*, 10(2), 75-103.
- Marinova, J., Plantenga, J., & Remery, C. (2010). "Gender Diversity and Firm Performance: Evidence from Dutch and Danish Boardrooms," Working Papers 10-03, Utrecht School of Economics.
- Shrader, C. B., Blackburn, V. B., & Iles, P. (1997). Women in management and firm financial performance: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managerial issues*, 355-372.
- Smith, N., Smith, V., & Verner, M. (2005). Do women in top management affect firm performance? A panel study of 2,500 Danish firms. *International Journal of productivity and Performance management*.

Abstract

Changes in Affirmative Action and the Effect on Female Employment

Sunhaeng Lee^{*}·Nanjue Kim^{**}·Jihyun Eunice Hong^{***}·Hyebin Sim^{****}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affirmative action (AA) enforced since 2015, including the heightened female employment standards applied by business category and size and the disclosure of underperforming businesses, by looking into the affirmative action administration database and investigated whether the compliance with the strengthened employment standards helped increase the female employment rate and the percentage of female managers.

The difference in differences technique was deployed to analyze AA's positive effect, and the results indicate that in all cases, the interactions terms of the treatment variable and the time variable had a significant positive value, signifying that the heightened standards had a positive effect on improving the actual female employment rate and the percentage of female managers. In addition, the disclosure of underperforming businesses was analyzed purely for its policy effect, and it was found that in the short-term, the list disclosure was effective in boosting the percentage of female managers.

An analysis of other control variables showed that AA's effect on increasing female employees differed by business category and size. The gap may also suggest the need for applying varying standards to business category(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business size.

Keywords : Affirmative Action, Female employment, Female manager, Difference-in-Difference

^{*} First Author: Professional Researcher,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Co-Author: Associate Research Fellow,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Co-Author: Researcher,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민간부문 사회복지사가 경험하는 돌봄 서비스제공에 대한 질적연구*

정지은**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민간부문 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이 노인 돌봄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다. 급속한 산업의 발전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져왔고,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함에 따라 가정 내 돌봄이 부재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가는 돌봄 부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 돌봄 기관을 설립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돌봄 노동의 가치는 평가 절하되고 있으며, 돌봄 현장에서 근무하는 돌봄 제공자의 노동 역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돌봄의 정의와 돌봄의 특징의 이론적 틀을 기반으로 돌봄 제공자의 근무환경이 돌봄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클레이저와 스트라우스에 의해 개발된 근거 이론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15명을 인터뷰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사들의 근무환경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한정된 정부 보조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기관은 정부 지원금으로 운영되며, 부족한 운영비는 공모사업 참여 등으로 충당되고 있었다. 사업비 모금 업무는 사회복지사의 업무량 상당 부분을 차지하면서 돌봄 제공자의 근무환경을 열악하게 하는 가장 큰 인과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돌봄 업무 외의 과도한 행정업무 및 부수적 업무가 한 기관에서 장기간 근무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으며 사회복지사들은 2~3년을 주기로 근무환경을 바꾸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 사이의 정서적 관계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정보보조금의 확대 필요성과 사회복지 기관의 업무 체계성 정비 및 특정 분야의 전문가 채용 등이 공적 돌봄 영역에서 좋은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 좋은 돌봄, 돌봄 사회, 돌봄관계, 돌봄 서비스, 사회복지사

* 본 연구는 정지은의 2019년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발췌, 정리한 것임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sky_loveluv123@naver.com)

I. 서론

전통적으로 노인 돌봄은 이타적 사랑이나 애정 등을 바탕으로 가족이나 친족이라는 관계를 통해 자연스럽게 제공되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효(孝) 사상을 기반으로 노부모를 부양해 왔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급속한 산업화와 후기 산업사회로의 이행은 가족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여성의 사회참여 증대를 가져왔고, 의학 및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구의 고령화 현상을 발생시키면서 새로운 인구 구조를 형성하였다. 특히 여성의 사회참여와 전통적 가족구조의 붕괴는 가정 내에서 효(孝) 사상을 기반으로 노부모를 돌보던 전통적 가치관과 태도를 변화시켰다. 이러한 변화는 노부모 돌봄을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하는 공적 책임으로 이끌었다¹⁾.

우리나라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²⁾를 실시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안정을 돕고, 이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공적 영역의 돌봄 서비스는 지역의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제공되고 있는데 한국의 사회복지기관은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국가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형식의 민간위탁 방식으로 발전해 오고 있다.

사회복지기관의 민간위탁 구조는 정부의 재정부담완화와 시장의 사적자율성과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강점을 지니지만(박정연, 2016), 돌봄 수혜자의 서비스 질과 돌봄 제공자인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의 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공존한다(양난주, 2009; 권현정, 2017). 폴브레는 돌봄 제공자의 노동 환경의 질이 돌봄 수혜자의 돌봄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서유럽과 미국의 경험은 의료, 교육, 보육, 노인 수발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수준과 근무환경이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중요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

1) 이 같은 사회적 인식은 김유경(2019)의 연구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과 정책과제』에서도 잘 드러난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부양을 누가 담당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가족”이라고 답한 비율이 2002년에는 70.7%로 노부모 부양에 대한 사적 돌봄 의식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지만 2016년에는 30.8%로 급감하였다(보건사회연구원 2019, p.82). 이에 반해 “가족과 정부·사회”가 함께 돌봄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이 2002년 19.5%에서 2016년 45.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김유경, 2019: 83).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 사업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자(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2021).

음을 시사한다. 적정 수준의 임금과 건전한 근무조건 하에서 돌봄 노동자는 단순히 ‘소비자’일수 없는 어린이와 노약자에게 강한 애정과 책임감을 갖게 된다. 이는 결과적으로 이직률을 낮추고, 돌봄 정책을 수립하는데 참여도를 높임으로써 어린이와 노약자의 정서적 유대가 강해져 그들을 돌보는데 가족들과의 협조도 효과적으로 이루어 할 수 있다”(Folbre, 2001:13).

폴브레의 주장에 따른다면 돌봄 서비스의 질은 돌봄 제공자의 적절한 임금 수준 및 노동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 기관이나 복지시설에서 노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의 돌봄 경험을 바탕으로 돌봄 노동환경을 살펴보고, 노인 돌봄이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가의 돌봄 역할 및 방향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돌봄정의와 특징

사적 영역에서 행해지던 돌봄이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어 ‘돌봄 서비스’가 공적으로 제공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돌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돌봄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하여 다수의 서구 학자들이 정의 내리고 있지만 돌봄에 관한 사회·문화적 기준과 가치, 돌봄을 조직하는 방식 등의 차이로 현재까지도 돌봄 정의는 통일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돌봄은 스스로 삶을 지속할 능력이 없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취약한 개인에게 보살핌을 제공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1980년대 후반 서구 학계를 중심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돌봄은 (1) 범위적 측면, (2) 관계적 측면, (3) 윤리적 측면으로 구분한다.

먼저, 범위적 측면에서 돌봄을 정의한 학자는 피셔와 트론토(Fisher and Tronto), 칸시안과 메츠(Cancian and Metz)가 있다. 피셔와 트론토는 넓은 범위의 의미로 “돌봄은 우리 세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활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활동”이라고 폭넓게 정의한다(Tronto, 1993:67). 피셔와 트론토의 광범위한 정의와는 반대로 칸시안과 메츠는 좁은 의미로서 돌봄을 정의하였다. 칸시안에 의해 정의된 좁은 의미에서

의 돌봄은 ‘정성이 깃든 노동(labor of love)’으로 “돌봄은 면대면(face to face)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개인의 안녕(Well-being)과 욕구를 제공하는 활동을 동반한 책임감과 애정의 조합”이다(Tronto, 1993:68)라고 설명하며 메츠는 돌봄을 ‘친밀한 돌봄(intimate caring)’으로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관계적 측면에서 돌봄을 정의한 러딕은 “돌봄은 관계적이다…돌봄 노동은 본질적으로 관계적이다. 돌봄 노동(caring labor)은 돌봄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구성된다”라고 언급하면서 돌봄의 관계성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돌봄을 정의하였다(Ruddick, 1995).

마지막으로 윤리적 측면에서 페타 보덴은 “돌봄은 개인들 간의 관계를 존재론적 필요성을 넘어서는 그 무엇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대하는 윤리적으로 중요한 방식을 표현한다”라고 언급하였으며(Boden, 1997), 헬드는 “돌봄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돌봐주는 것으로 외면할 수 없는 도덕적 각성”(Held, 2005:10)이라고 언급하였다. 그 밖에도 잉스터는 “돌봄이란 사람들이 사회에서 생존, 발달, 기능할 수 있도록 이들이 생물학적으로 긴요한 필요를 충족하고, 기초 역량을 발달·유지하며,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고통과 고충을 피하거나 완화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가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모든 것”이라고 언급한다(Engster, 2007:63). 이처럼 이들은 ‘돌봄이란 취약한 누군가의 생존과 발달을 위해 행해져야 하는 도덕적·윤리적인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돌봄에 대한 정의는 돌봄을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정의가 약간씩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돌봄에 대한 공통된 정의는 취약한 누군가를 보살피는 활동으로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을 돌보고 이들의 필요에 응답함으로써 사회를 존속 및 유지시키는 활동으로 요약할 수 있다.

〈표 1〉 돌봄의 정의

개념정의		학자	내용
범위적 측면	넓은 범위	피셔와 트론토 (Fisher and Tronto)	돌봄은 우리의 세계를 유지 및 지속하고, 개선하는 활동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활동
	좁은 범위	칸시안(Cancian)	돌봄은 면대면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개인의 안녕과 욕구를 제공하는 활동을 동반한 책임감과 애정의 조합
관계적 측면		러딕 (Ruddick)	돌봄 노동은 돌봄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해 구성되는 활동
윤리적 측면		보덴 (Bowden)	돌봄은 개인들 간의 관계를 존재론적 필요성을 넘어서는 그 무엇으로 탈바꿈시키면서, 우리가 서로를 소중하게 대하는 윤리적으로 중요한 방식을 표현하는 활동

개념정의	학자	내용
	헬드(Held)	돌봄의 초점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거나 돌봐주는 것으로 이는 외면할 수 없는 도덕적 각성
	잉스터(Engster)	사람들이 사회에서 생존, 발달, 기능할 수 있도록 필요를 충족하고, 기초역량을 발달·유지하며, 불필요하거나 원하지 않는 고통과 고충을 피하거나 완화하도록 돕기 위해 하는 활동

돌봄의 정의가 학자들마다 차이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돌봄의 특징 역시 학자들마다 견해가 조금씩 다르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돌봄 특징은 다수의 돌봄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특징이다.

먼저, 돌봄은 의존성을 가진다. 돌봄에 대한 의존성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고, 기초역량을 발달시키면서 삶을 지속한다. 즉, 인간은 수 년 혹은 수십 년 동안 타인에게 돌봄을 의존하는 존재로서 타인의 돌봄 없이는 삶을 유지할 수 없다. 인간의 삶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불가피한 의존의 시기는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유형화 시킬 수 있다(Engster, 2007:143). 먼저 모든 인간은 영·유아 및 아동의 시기를 지나면서 부모 혹은 부모와 같은 존재의 보살핌을 통해 기초역량을 발달시키고 생존한다. 또한 인간은 삶 속에서 불가피한 장애, 질병과 상해 및 갑작스러운 사고의 시기를 한 번쯤 경험한다. 이때 우리는 의존적인 상태가 되며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인간은 노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으로 나약하게 되며 필요와 욕구를 타인의 돌봄을 통해 충족시켜야 하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 즉 노년의 시기에 인간은 또다시 누군가의 돌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처럼 모든 인간은 삶의 일정한 구간에 타인에게 의존성을 보임으로써 돌봄을 필요로 하는 시기를 지난다. 다시 말해 모든 연령대에서 인간 모두는 생존을 위해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며, 불가피한 의존적인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이 같은 “인간 의존의 사실”에 기반하여 모든 인간은 타인에게 돌봄 요구를 할 정당한 권리를 지닌다(Engster, 2007:95). 잉스터는 이에 대해 돌봄 수혜자의 ‘돌봄권(right to care)’이라고 설명한다.

“우리 모두는 돌봄이 필요할 때 타인에게 돌봄을 타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돌봄권이 라는 개념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타인에게 돌봄을 요구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고, 심신이 온전한 사람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봐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는 점을 간결하게 나타내는 방법이다”(Engster, 2007:100-101).

이와 같은 돌봄 수혜자의 정당한 권리인 ‘돌봄권’을 바탕으로 누군가는 필연적으로 이들의 취약성을 돌봐주어야 하며, 이들은 다음과 같은 돌봄 의무감을 지닌다.

둘째, 돌봄은 심신이 건강한 사람에게 돌봄 의무감을 부여한다. 잉스터의 ‘돌봄권’ 논의는 ‘지금까지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모든 인간은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 생명을 지속하고 삶을 영위해 왔다는 보편적 사실’을 언급한다. 이를 기반으로 잉스터는 돌봄 의무감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심신이 온전한 인간은 돌봄이 필요한 인간을 마땅히 돌봐야 한다…만약 그렇지 않으면 사회는 존속되지 않으며 우리를 돌봐줄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우리는 타인이 돌봄을 필요로 할 때 타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돌봄 요구가 도덕적으로 타당한 것으로 항시적으로 인정해야하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대단한 위해가 되지 않거나, 우리의 장기적인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시키지 않거나, 타인에 대한 우리의 돌봄 능력을 소진시키지 않는다면 타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Engster, 2007: 93-95).

궁극적으로 타인에 대한 돌봄 의무는 한 인간의 삶의 지속과 역량발달, 더 나아가 사회 존속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듯 돌봄 수혜와 돌봄 제공은 인간의 삶에서 순환된다. 어떠한 사회도 취약한 타인을 돌보는 돌봄 제공자가 없다면 사회는 유지되지 못할 것이다. 결국 살아있는 모든 인간은 의존의 시기를 거쳐 왔고, 앞으로 누군가의 돌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우리를 돌보아 왔던 돌봄 제공자들 역시 누군가의 돌봄을 받은 경험을 지니고 있으며, 이들 또한 언젠가 누군가의 돌봄에 의존해야 하는 시기를 거친다. 이처럼 돌봄은 다른 누군가와 돌봄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인간의 역사 속에 자리함으로써 사회를 유지시키고 발달시킨다.

마지막으로 돌봄은 상호의존적인 특징을 가진다. 어느 인간도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독립적이지 않으며, 모든 인간은 관계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존재이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 모두는 사회를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돌봄을 의존하기도 하며, 돌봄을 수행하기도 한다. 커테이는 이에 대해 “돌봄은 항상 연계되고(linked) 배태된(nested) 사회적 관계망 속에 존재한다”(Kittay, 1999:66-70)고 표현하였으며, 트론토 역시 “모든 인간은 한 번쯤 돌봄의 수혜자이거나 제공자가 된다…사람은 일생을 통해 돌봄의 필요와 능력이 달라지기는 하나 언제나 돌봄의 수혜자이나 제공자이다”(Tronto, 1993:87)고 설명한 바 있다. 이렇듯 돌봄은 한 인간의 생애 전반 걸쳐 나타나는 보편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간 모두는 어느 한순간엔 돌봄 수혜자로서 또 어느 한순간에는 돌봄 제공자로서의 삶을 경험한다.

이러한 상호 의존관계는 권력 불평등을 수반하기도 한다. 커테이에 따르면, 의존관계에서의 권력 불평등은 의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각자의 취약성에 대해 어떤 식으로 반응하나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Kittay, 1999:89). 예를 들어, 돌봄 제공자가 돌봄 수혜자에게 지배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런 경우 돌봄 수혜자는 자신의 돌봄 필요를 충족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돌봄 수혜자가 돌봄 제공자에게 자신들의 필요를 남용함으로써 지배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다. 이는 돌봄 제공자의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으로, 돌봄 제공자의 노동은 다른 사람(돌봄 수혜자)에게 남용될 우려가 있다(Kittay, 1999). 따라서 돌봄 수혜자는 돌봄 제공자가 자신을 돌보는 것에 최선을 다할 것을 믿어야 하며, 돌봄 제공자는 돌봄 수혜자가 지나친 돌봄을 요구하지 않으며, 자신의 노동을 남용함으로써 착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Kittay, 1999:90-91). 이처럼 돌봄의 상호 의존성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이다(Kittay, 1999). 이러한 신뢰 관계가 실패할 때, 돌봄 수혜자 및 돌봄 제공자의 취약성은 위협받는다. 따라서 돌봄은 신뢰와 연대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활동이다.

2. 돌봄 제공자와 돌봄 관계

1) 돌봄 제공자

앞서 살펴보았듯이 모든 인간은 취약한 시기에 타인의 돌봄을 필요로 하며, 삶의 어느 한 부분에서 누구나 의존적인 시간을 보낸다. 반대로 누군가는 타인의 돌봄의 의존성에 응답함으로써 돌봄 제공자가 된다. 그렇다면 ‘돌봄을 제공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며, 돌봄은 누가 제공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 본 장에서는 돌봄 제공의 주체가 누구인지 살펴보고, 사적 영역이 아닌 공적 영역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제공자들의 노동이 현시대에 저평가되고 있는 이유와 공적 영역에서의 돌봄 제공자의 취약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은 특정한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사람에게 애정과 책임을 가지고 그 사람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사람이다(Held, 2005:107). 이런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여성이었다. 오랜 시간 여성들은 사적 영역인 가정 내에서 가족과 친족이라는 관계를 바탕으로 애정과 이타적 사랑 등의 윤리적 차원에서 아이, 노인,

아픈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취약한 이들을 필요를 돌보는 일을 맡아왔다. 그러나 많은 여성들이 시장경제 영역으로 진출함에 따라 가정 내에서 돌봄을 수행하던 주체(여성)가 상실되었다. 가정 내의 돌봄 부재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 돌봄은 점차 ‘가정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에서도 행해지는 활동’으로 자리 잡혀갔고, 특정 영역(아동, 노인, 장애인)에서 돌봄 노동은 전문화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회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은 것은 돌봄 제공자의 주된 성별은 과거와 마찬가지로 여성이라는 사실과 사회적 지위가 여전히 낮고 권력이 없는, 즉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집단이 주로 돌봄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다(Engster, 2007; Kittay, 1999:62). 이러한 원인에 대해 돌봄 윤리학자 헬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전통적으로 여성은 필요한 돌봄 노동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존재로 기대되어왔다. 즉, 성별노동분업은 여성의 돌봄 노동을 무급화하여, 유급노동에 종사하는 남성보다 여성을 열악하게 만듦으로써 여성을 착취한다. 여성에게는 돌보는 사람으로서의 ‘여성성(Feminiy)’이 형성되며, 이는 여성이 성별노동분업을 수용하도록 하는 압박으로도 작용한다. 돌봄 윤리가 돌봄을 극찬하면서도 돌봄의 부담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는지에 관심 갖지 않는다면 여성의 착취 및 수많은 가정, 주간 돌봄센터, 가정간호 등에서 저임금에 시달리며 돌봄 노동을 하는 소수자 집단의 착취에 일조하는 것일 것이다”(Held, 2005:41).

이러한 헬드의 논조를 뒷받침하듯 OECD 주요 국가에서 전문적으로 돌봄 노동을 수행하는 인력을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성의 85% 이상이 돌봄 직종에 종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최희경, 2011:86 재인용). 이러한 결과는 ‘돌봄’이라는 행위가 여전히 ‘여성의 일’이라는 뿌리 깊은 인식을 나타낸다.

‘여성의 일’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돌봄 노동은 그 가치를 저평가 받는다. 돌봄 가치의 저평가는 공적 영역에서 제공되는 돌봄 노동의 가치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돌봄은 전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여성에 의해 사랑과 희생의 발현을 통해 이루어진 가사활동 중 하나였다. 오랜 시간 돌봄 노동이 여성의 일이라는 문화적 인식과 규범은 돌봄 노동이 마땅한 대가를 지불받아야 하는 전문성을 지닌 노동으로 인정하는 것을 어렵게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공적 영역에서의 돌봄 노동은 돌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돌봄 노동은 다른 노동과 달리 육체적 노동 이외에도 감정적 속성을

지닌 비가시적 특징을 지닌 활동이기 때문에(Folbre, 2001:57) 노동의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돌봄 노동은 노동의 질을 측정하거나 그 효과를 계측하기가 어렵다. 이는 결과적으로 돌봄 노동이 다른 노동에 비해 낮은 사회경제적 보상을 제공받는 것에 일조한다. 돌봄 제공자의 임금을 연구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교육과 직장 경험의 변수를 통제한 후에도 돌봄 제공자들의 급여는 다른 직종 사람들의 급여보다 평균 5~6% 적었다(Engster, 2007:213).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돌봄 경제학자 폴브레도 다음과 같은 설명을 통해 돌봄 제공자의 돌봄 노동 가치 평가 절하의 이유와 저임금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여성이 많은 직종일수록 모든 조건이 같을 때 임금도 더 낮아진다. 그런 경향을 여성이 임금이 높은 남성 직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규제와 함께 진전되었고, 여성들은 몇몇 직종에 몰려들었다. 여전히 여성들은 ‘여성 직종’이라고 불리는 분야로 들어가고 있다. 여성이 여성 직종을 선택하는 이유는 그 직종에 여성들이 가치 있게 여기도록 배운, 타인을 돌보는 성격이 어느 정도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사회학자 파울라 잉글랜드는 돌봄을 요구하는 직종은 다른 조건이 다 똑같을 때 여타 직종보다 보수가 적음을 밝혀냈다”(Folbre, 2001:83).

돌봄 윤리학자 잉스터 역시 “돌봄 노동은 인간이 하는 노동집약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값비싸며, 이익 창출이 어렵다는 성격을 지닌다. 이 때문에 돌봄 제공자에 대한 노동 강도를 높이고, 임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사회 곳곳에 돌봄을 제공한다”라고 설명하였으며(Engster, 2007:214), 돌봄 노동의 가치 평가 절하에 대해 헬드 역시 다음과 같은 설명을 하였다.

“우리는 돌봄 노동의 엄청난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돌봄 노동의 교환 혹은 시장가치가 돌봄 가치를 고려하는 적절한 최소 수준 중 하나임을 유념한다면, 다양한 형태의 돌봄 노동이 평가된 가치 그 이상으로 보상되어야 함을 우리는 사회에 요구해야 한다. 우리는 돌봄 노동자에게 관찮은 임금을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보상의 가치가 있다는 점을 당연히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종종 돌봄 노동은 그렇지 못해왔다”(Held, 2005:210).

이처럼 공적 영역에서의 돌봄 노동은 노동의 강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마땅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2) 돌봄 관계

돌봄은 돌봄 수혜자와 돌봄 제공자가 주고받는 것으로 돌봄 관계는 모든 인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맺고 있는 가장 기초적인 관계이다(김희강, 2018). 앞서 살펴보았듯이 돌봄은 인간의 의존성을 근간으로 한다. 이 같은 의존은 ‘불가피한 의존(inevitable dependency, 1차적 의존)’과 ‘파생된 의존(derivative dependency, 2차적의존)’으로 나타나며, 의존성은 1차적 돌봄 관계와 2차적 돌봄 관계를 형성한다.

먼저 1차적 돌봄은 불가피한 의존으로부터 기인하는 것으로 인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제공받아야 하는 돌봄을 의미한다(Kittay, 1999). 이는 앞서 돌봄의 특징에서도 살펴본 것으로 돌봄 의존성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가장 기초적인 돌봄이다. 1차적 돌봄은 돌봄 수혜자와 돌봄 제공자(부모, 친척, 공적 돌봄 제공자-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관계 맺음을 통해 나타나는 데, 이러한 관계를 1차적 돌봄 관계라고 한다(Kittay, 1999; Engster, 2007). 1차적 돌봄 관계에서 돌봄 제공자는 돌봄 수혜자에게 직접적인 돌봄을 제공한다. 1차적 돌봄 관계에서 돌봄의 목적은 돌봄의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데, 돌봄의 대상이 신생아·영유아일 경우 돌봄 수혜자의 좋은 삶과 성장을 주된 목적으로 삼으며, 돌봄의 대상이 노인일 경우에는 돌봄 수혜자의 자족능력과 자존감 회복을 목적으로 한다(Kittay, 1999:87).

1차적 돌봄에서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의 관계는 친밀함과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되며(Kittay, 1999:84), 돌봄 수혜자와 돌봄 제공자 간의 상호관계 및 상호의존성을 기반으로 형성되는 것으로(Fobler, 2001:88), 상호 간의 감정을 공유하고, 친밀성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는 실천이자 활동이다. 커테이는 이 같은 관계를 ‘의존 노동자와 돌봄 대상자 사이의 의존관계’라고 부른다(Kittay, 1999:83). 이같이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는 지속적인 의존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일대일 대면접촉을 통해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며 서로의 삶에 깊숙이 관여한다. 이들은 이러한 지속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 ‘상호 신뢰’를 형성하며, 이러한 상호 신뢰가 실패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으로써 돌봄의 목적이 돌봄 수혜자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Kittay, 1999).

다음으로 2차적 돌봄은 돌봄 제공자의 의존에서 비롯된다. 돌봄 제공자는 타인을 돌보면서 심적·정신적·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해져 간다. 이때 돌봄 제공자는 돌봄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돌봄 수혜자가 된다. 이러한 돌봄 제공자의 의존성은 1차적 의존성에서 보이는 불가피한 의존이 아닌, 사회구조에

의해 발생한 것이다(김희강, 2016:10). 돌봄 제공자의 취약성은 사적·공적 영역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모든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공적 영역에서의 돌봄 제공자의 취약성은 보수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고, 노동환경이 열악하며, 이들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는 것으로 나타난다(김희강, 2018:207). 파인만(Fineman)은 이러한 상태를 ‘파생된 의존’라고 부르며, 커테이(Kittay)는 이를 ‘2차 의존상태’라고 부른다(Fineman, 2004; Kittay, 1999). 즉, 돌봄 제공자가 타인을 돌봄으로써 취약해진 상태가 됨으로써 돌봄 제공자 역시 누군가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Fineman, 2004:35-37; Kittay, 1999:106-109; Engster, 2007:83). 커테이는 ‘돌리아 원칙’을 사용하여 ‘파생된 의존’을 설명한다(Kittay, 1999:107). 돌리아 원칙은 그리스 시대 때 산후 산모를 돌보던 돌라(Doula)에서 온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산후 정신적·육체적으로 취약해진 산모를 돌라가 돌봄으로써 아이가 산모에게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바와 같이 물질적·정신적·육체적으로 취약해진 돌봄 제공자를 제3자가 보살펴야 함을 설명한다. 다시 말해 돌봄 제공자가 돌봄 수혜자에게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1차적 돌봄 관계를 보호하고 유지시키는데 목적이 있다(Kittay, 1999; 김희강, 2018).

잉스터 역시 “타인에게 좋은 돌봄을 제공하는데 필수적인 지원과 자원을 돌봄 제공자에게 조달함으로써 우리는 타인을 돌볼 수 있다(Engster, 2007:73).”고 하면서 돌봄 제공자의 파생된 의존을 제3자가 돌봐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즉 돌봄 제공자는 타인과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충분한 지원(예. 공적 보조)을 제3자(국가)로부터 제공받음으로써 타인에 대한 돌봄 의무를 지치지 않고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한다(Engster, 2007:110). 파생된 의존성(2차 의존 상태)을 제3자(국가)가 돌봐야 하는 논리에 따르면 제3자(국가)가 돌봄 제공자의 또 다른 의존성에 관심을 보일 때, 돌봄 제공자의 취약성은 교정될 수 있다(Kittay, 2016:112). 따라서 2차적 돌봄 관계는 돌봄 제공자(부모, 친척, 공적 돌봄 제공자-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와 제3자(국가)의 관계 맺음을 통해 나타난다(Kittay, 1999:29-28; Fineman, 2004:34-37; 김희강, 2016:10).

이 같은 2차적 돌봄 관계를 통해 돌봄 제공자는 제3자인 국가로부터 사회·경제적 자원을 제공받음으로써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1차적 돌봄 관계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는다(김희강, 2016:10). 다시 말해 돌봄 제공자는 돌봄 수혜자를 돌볼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보다 큰 사회 및 국가는 돌봄 제공자의 노동과 취약성이 착취되지 않도록 하여 돌봄 제공자

가 돌봄 수혜자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1차적 돌봄 관계를 지원하고 보호한다(Kittay, 1999:200). 즉 돌봄에 대한 국가의 의무는 돌봄 노동이 잘 수행될 수 있게 도우며, 돌봄 제공자가 그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Kittay, 1999:254). 국가의 돌봄 의무에 대해서 잉스터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정부는 돌봄 제공자, 가족 그리고 공동체 조직이 그들과 가까운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돌라(doula)처럼 역할을 해야한다…정부는 돌봄 제공을 감시하고,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남겨진 돌봄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돌봄 정부는 개인적, 가족적 그리고 지역적 돌봄을 재정적으로 보조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충분한 돌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사회 전체가 이러한 뒷받침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Engster, 2007:138-1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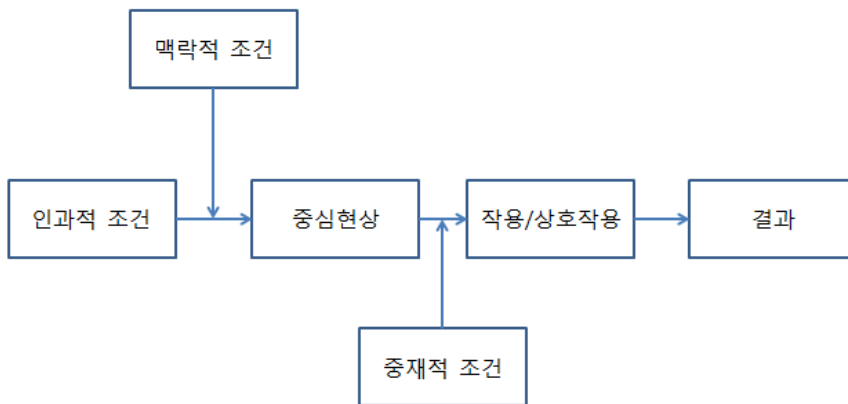
Ⅲ. 연구의 틀과 방법

1. 연구분석틀: 근거이론

본 연구에서는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Glaser & Strauss, 1967)에 의해 개발된 근거이론을 사용함으로써 돌봄 노동자의 근무 환경이 노인 돌봄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을 패러다임 모형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근거이론은 질적연구 방법 중 하나로 연구과정에서 체계적으로 연구 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자가 수집한 자료를 끊임없이 살펴봄으로써 맥락적인 흐름을 파악하여 이론을 개발하거나 현상의 근거를 찾아내는 연구 방법이다(Strauss, 1967:10-11; Cresswell, 2013:83-90).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자는 보통의 질적연구 방법과 마찬가지로 관심이 가는 연구 현상 및 문제를 발견함으로써 연구를 시작한다. 연구자가 연구 현상 및 연구 문제를 발견한 후에는 연구 현상이 나타나는 현장으로 나가 연구에 적합한 대상자를 찾고, 그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을 거친다. 또한 2차 자료인 관련 문헌 등의 자료를 수집하면서 1차 인터뷰 자료와 2차 문헌자료에 대한 분석을 한다. 연구자는 개인에게서 수집한 면담자료를 근거로 하여 상호 연관된 정보와 참여자의 행동, 상호작용 과정 등을 통해 자료수집, 분석 등을 실시한다. 근거이론에서는 이 같은 분석과정을 ‘코딩

(Coding)’이라고 부른다. 근거이론에서의 코딩이란 분석의 뼈대를 만드는 작업으로 인터뷰를 통해 생성한 자료를 분석하고, 그 안에서의 미묘한 뉘앙스와 의미를 감지하는 과정으로 개념화하는 과정으로 이름붙이기(labeling)와 분류(categorizing)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코딩의 종류는 개방코딩(open coding), 축코딩(axial coding), 선택코딩으로 구분된다(Strauss & Corbin, 1997). 코딩이 끝난 후에는 비슷한 개념들끼리 다시 묶어 새로운 범주를 생성하고, 도출된 범주를 서로 연결 짓고 다시 핵심 범주를 정하고 ‘원인-조건-결과’를 도출한다. 이후 범주간의 연계성을 찾아 핵심범주를 도출한다. 이를 다시 “중심현상, 인과적 조건, 맥락적 조건, 중재적 조건, 작용·상호작용, 결과”로 연결시킨 패러다임 모형으로 설계한다. 패러다임 모형은 코딩과정에서 도출된 범주들의 의미와 관계를 연구에서 보고자하는 중심현상과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양한 조건들을 추출하고 그들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trauss & Corbin, 1997).



[그림 1] Strauss와 Corbin의 패러다임 모형

2. 연구대상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가 됨에 따라 노인 돌봄 서비스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민간위탁 형식의 사회복지기관 및 복지시설 설립을 통해 공적 돌봄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최희경, 2011:70). 한국의 사회복지기관 및 복지시설은 보호 및 돌봄이 필요한 취약한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그들이 사회 내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재가센터, 데이케어센터, 요양센터 등’으로 구분되며 이 같은 기관들은 국가의 민간위탁을 통해 지정된 곳으로 정부 보조금과 일반 후원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사회복지기관 및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을 ‘사회복지사’라고 부르며, 사회복지사 대부분은 고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들³⁾로 전문가적 자질과 소양을 지니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민간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공무직 사회복지사’로 구분된다. 공무직 사회복지사와 민간 사회복지사의 차이는 말 그대로 국가에서 고용한 공무직 사회복지사(사회복지전담공무원)와 민간기관에서 고용한 민간 사회복지사의 차이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서 노인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민간 사회복지사를 공적 돌봄 대상으로 여김으로써 이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렇다면 과연 사회복지사를 공적 돌봄 제공자로 볼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은 돌봄 학자들이 제시한 돌봄 제공자 구분을 통해 답할 수 있다. 돌봄 학자들은 돌봄 제공자를 (1)사회복지사 혹은 간호사와 같은 전문인력, (2)요양보호사와 같은 준전문인력, (3)가족 및 자원봉사자 등의 비전문인력으로 구분한다(최희경, 2009:208).

〈표 2〉 돌봄 제공자의 구분

돌봄 행위		돌봄 제공자의 구분
개인적 수준	비공식	1) 비전문 돌봄 제공자: 가족 - 배우자, 자녀, 친족 2) 비전문 돌봄 제공자: 비(非)가족 - 이웃, 친구
	공식	1) 전문적 돌봄 제공자 -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2) 준전문 돌봄 제공자 - 요양보호사

자료 : 최희경(2009:36)

돌봄 학자 잉스터 역시 사회복지사는 집단적 돌봄을 책임지는 역할을 국가로부터 위임받았다고 설명한 바 있다(Engster, 2007:132-133).

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96.8%는 사회복지자격증 및보육교사 자격증 등을 소지하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전문대학 졸업을 마쳤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178).

“정치제도를 통해 타인을 돌보는 것, 즉 집단적 돌봄은 개인적 돌봄관계를 지속시키거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개인적 돌봄을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을 포함한다…집단적 돌봄에서 우리가 돌봄의 실제 임무를 대리인과 사회복지사에게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픈 사람을 의사 혹은 간호사를 고용해 돌보게 하는 것과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아 보인다.”(Engster, 2007:132-133)

이러한 구분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사를 돌봄 제공자로 선정하여 이들의 돌봄 실천 경험을 통해 돌봄 서비스가 돌봄 수혜자에게 어떤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3. 조사방법과 자료수집

본 연구는 근거이론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의 돌봄 경험을 통해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민간영역에서의 사회복지사 근무 환경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이 돌봄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의 사회복지기관 및 소규모 노인 복지 시설(재가센터, 데이케어 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와 면대면 심층 인터뷰를 통해 1차 자료를 수집하였고, 2차 자료로 기존의 선행연구 자료 및 문헌, 정부자료, 언론기사, 면담기록일지, 메모 등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근거이론의 인터뷰 및 자료수집 종료 시점은 자료의 포화점(saturation point)⁴⁾을 찾을 때까지 진행되었고, 본 연구의 인터뷰는 2018년 05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에 개인 심층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내용은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하여 기록하였다. 인터뷰 시간은 평균 1시간 30분 정도로 진행되었고, 첫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적인 질문과 방향만을 설정한 후, 이후의 연구 참여자 인터뷰에서는 반구조화된 상태⁵⁾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4)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터뷰는 더 이상 새롭게 발견되는 특이점이 없을 때까지 진행되었으며 이 지점을 포화점이라고 여겨 더 이상의 인터뷰를 진행하지 않았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의 공통된 경험적 속성이 발견됨에 따라 추가적인 연구 참여자를 인터뷰하지 않았다.

5) 기본적 공통질문은 “사회복지사 근무 년 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근무 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퇴직을 한 적이 있다면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였으며 나머지 사항은 연구 참여자의 답변에 따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특히, 전 직장

인터뷰는 주로 민간 사회복지사로서 겪은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근무 환경 및 처우에 대한 현상 묘사나 견해 및 인식 등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개방형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가 끝난 이후에는 1주일 이내로 녹음 파일과 메모를 중심으로 녹취록을 작성하였으며, 녹취록의 정확성을 위해 녹음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연구 참여자가 말하고자 한 의도를 사실 그대로 기록하였다. 인터뷰 장소와 날짜 및 시간은 연구 참여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직접 결정하도록 하였으며, 면담 장소는 주로 연구 참여자가 편안함을 느끼는 집 근처의 카페에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는 총 15명⁶⁾으로 연구 참여자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이하 재가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9인과 종합사회복지관 4인, 주야간보호서비스(이하 데이케어센터) 1인, 요양병원 사회복지사 1인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참여자 직급은 대부분 일반 사원 직급으로 분류되는 사회복지사 11인으로 이루어졌으며, 나머지는 소장, 과장, 팀장, 주임 각 1인⁷⁾씩 구성되었다. 이들은 짧게는 2년에서 길게는 10여 년의 경력을 유지하고 있었으며, 데이케어 센터의 8년 차 사회복지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는 2-3번의 이직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기본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11명, 남성이 4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기혼이 5명이었고, 미혼이 10명이었다. <표 3>은 연구 참여자와 인터뷰한 기록과 주요 인적 특성을 정리한 프로파일이다.

〈표 3〉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참여	성별	나이	경력	이직횟수	직급	근무기관
A	여	50대 초반	-	-	소장	재가노인지원서비스
B	남	30대 후반	8년	없음	과장	주야간보호서비스
C	남	40대 중반	8년	2회	팀장	재가노인지원서비스
D	여	30대 초반	5년	3회	주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E	여	40대 초반	13년	1회	복지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에서 퇴직을 했던 가장 큰 이유와 퇴직을 하고 싶었으나 하지 못했던 이유를 핵심 질문으로 삼았다.

- 6) 본 연구 참여자 1인을 소개받은 후 눈덩이 표집방법을 통해 총 15명의 연구 참여자를 수집하였다.
- 7) 연구 대상에 소장 및 과장의 관리자급이 포함된 이유는 관리자급과 사회복지사 간의 인식 정도를 파악하기 위함이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관리자의 경우 사회복지사의 급여나 처우 수준이 과거에 비해 나아졌다고 인식하는 반면 사회복지사(팀장 및 주임 포함)는 여전히 처우 및 급여가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공통적인 부분은 보조금 및 재정지원이 미흡하다는 점이었다.

참여	성별	나이	경력	이직횟수	직급	근무기관
F	여	40대 중반	9년	2회	복지사	요양시설
G	남	60대 초반	8년	2회	복지사	복지관
H	여	20대 후반	5년	2회	복지사	복지관
I	남	20대 후반	5년	1회	복지사	복지관
J	여	20대 후반	4년	2회	복지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K	여	30대 후반	4년	2회	복지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L	여	40대 초반	4년 6개월	없음	복지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M	여	20대 후반	2년 6개월	1회	복지사	복지관
N	여	20대 중반	2년 6개월	2회	복지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O	여	20대 후반	2년	1회	복지사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과반수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실제로 여성 사회복지사가 남성보다 많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7년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 사회복지사는 78.5%, 남성 사회복지사는 21.5%로 여성이 남성보다 3.7배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도 알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179).

〈표 4〉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구분		비율
사회복지사 성별	여성	72.5
	남성	27.5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2017)

사회복지사의 성비 불균형은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돌봄이 ‘여성의 직종’이라는 사회적 인식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돌봄 직종에서의 젠더 불균형은 돌봄 제공자의 노동가치의 평가절하 및 낮은 경제적 보상 등의 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이 된다.

IV.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스트라우스와 코빈(1998)의 패러다임 모형에 따라 범주 간의 관계를 구성하여 사회복지사의 돌봄 제공 환경이 돌봄 수혜자에게 어떤 영

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고, 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1. 인과적 조건: 정부지원 부족

1) 보조금 부족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를 통해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실시해오고 있다.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은 사회복지법 제42조 1항⁸⁾을 기반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에 보조금을 지원하고, 감독권 행사와 행정지도를 통해 사회 전반에 사회복지서비스가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은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통해 시설을 운영 및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사회복지사들은 정부 보조금 형식을 통해 지급받는 재정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으로 기관 및 센터가 불안정한 운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돈의 재원이 국가 보조금하고, 후원금인데...(재가센터의 경우)국가 보조금 1년 치를 한꺼번에 지원해줘요. 그래서 그 보조금으로 직원들 급여주고, 운영비 쓰고, 사업비를 쓰죠...국가보조금은 굉장히 한정이 되어있어요. 금액도 한정되어 있고, 쓸 수 있는 것도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복지사업)도 한계가 있어요.”(연구 참여자, C)

“보조금이 인건비로 다 나가는 셈이죠. 서울시 지침에서는 보조금의 80% 이상은 인건비로 주라고 정해놓아서 인건비를 80%로 맞추는 기관도 있겠죠. 근데 저희 기관(재가센터)은 거의 100%가 인건비예요. 그래서 운영비나 이런 것들은 공모사업을 통해 충당하고, 후원금을 많이 따서 법인 적립금을 많이 받아놔요.”(연구 참여자, A)

“재가센터는 1년 예산을 한꺼번에 받아요. 보조금에 인건비와 운영비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비가 모자르면 저희 월급체계가 흔들리기도 해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후원금을 모아야 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죠.”(연구 참여자, N)

8)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운영비 등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밖에도 부족한 정부 지원금은 민간 사회복지사들의 직급과는 다른 급여 체계를 적용받게 함으로써 민간 사회복지사의 급여체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우리 정부는 2011년 3월 민간 사회복지사의 인권과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의 제3조 2항에 따르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법률이 실시됨에 따라 현재 민간 영역의 사회복지사들은 공무원과 같이 호봉제로 급여를 지급받도록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사들의 직급이 높아질수록 이 법은 유명무실하며 호봉보다 낮은 급여를 적용받고 있었다. 2011년부터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법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및 임금의 수준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민간영역은 공무원이랑 같은 호봉테이블로 급여를 받아요. 근데 우리는 연금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복지사들 미래가 불안하고 처우가 열악해요.”(연구 참여자, D)

“두 번째 직장에서는 처우가 너무 힘들었어요. 급여에 비해서 일이 너무 과다했어요. 매일매일 야근하고..야근해도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 관련된 업무도 아니고 그냥 행정업무로 야근을 하는 건데 시간 허비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연구 참여자, J)

“(인건비가 부족해서)직책과 상관없는 급여를 받고 있어요. 주임직책이지만 일반 사회복지사 급여테이블을 받고 있거든요…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비가 모자라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자신의 호봉대로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지 못해요. 다 급여가 삭감돼요.”(연구 참여자, D)

실제로 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보고서에 따르면 보수 수준 및 보조금 지급 방식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 중 35.1%가 ‘보조금 부족으로 인한 인건비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낮은 보수 수준으로 인한 직원의 이직률 증가(17.6%)’,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직원의 사기저하(12.3%)’를 꼽았다(보건사회연구원, 2017). 앞서 2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돌봄 경제학자 폴 브레는 돌봄 직종에서의 낮은 임금은 교육수준과 경력이 높은 사람들이 더 나은 임금을 찾아 다른 직종으로 이직하게 하며, 훈련과 계발에 헌신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과로율과 이직률을 높인다고 지적하였다(Folbre, 2001:83).

2) 인력 부족

이외에도 부족한 정부 보조금은 채용인력 지침사항을 통해 각 기관과 센터의 채용인력을 한정하고 있어 인력 부족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서울시의 사회복지기관 및 센터의 채용인력 지침사항을 살펴보면 통합센터의 경우에는 센터장 포함 최대 5명까지 사회복지사 인력을 채용할 수 있게 하고 있으며, 재가 노인지원서비스의 경우에는 센터장 포함 최대 4명의 직원을 채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복지기관 및 센터는 복지업무 이외의 다양한 부수적 업무⁹⁾를 처리해야 하는 곳으로 현재 정해놓은 인력 수준으로는 사회복지사가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사회복지업무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못한 정부 보조금 책정은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최소 40명에서부터 최대 180명까지 관리해야 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과도한 행정업무 및 기타 부수적 업무를 해야 하는 근무 환경에 놓이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업무를 과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지침사항으로 통합센터의 경우에는 5명까지 직원을 채용할 수가 있어요. 센터장, 중간관리자, 사무원, 사회복지사 이런 식으로요. 재가센터의 경우에는 4명까지 채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인원수(돌봄수혜자, 노인)도 정해져 있어요. 기관 당 적어도 최소 120명의 대상자를 관리해야 해요. 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자는 약 4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인원은 4명이지만, 센터장은 대상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지 않으니깐요.”(연구 참여자, D)

“저는 노인복지관에 있었을 때 180명을 관리했어요. 힘들었던 점은 명절에 대상자들에게 나눠줘야 할 쌀이 200포대가 왔어요. 그럼 200포의 쌀을 각 가정에 배달을 해야 하는 거예요. 쌀 말고도 명절음식도 가져다 드려야 하는데, 대상자가 180분이 다 보니까 180인분의 음식을 만들어서 전달해야 해요. 그런데 다녀오면 또 사진도 찍어서 남겨야 하고, 문서로도 남겨야 되고…”(연구 참여자, I)

이 같은 한정된 정부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사회복지사의 인력 부족은 사회복지사의 과중한 업무를 발생시킴으로써 다음과 같은 중심현상을 나타나게 한다.

9)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은 행정적 업무(행정상 필요한 사무업무)뿐 아니라 부수적 업무, 즉 영상제작(포토샵)·홍보물제작·후원처 발굴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이에 더해 직접 돌봄 서비스 업무까지 해야한다. 이는 최지선(2017)의 연구에서도 사회복지사 1명이 담당하는 돌봄 수혜자(클라이언트)는 50명 내외로 사회복지사 1명이 관리해야 하는 돌봄 수혜자의 수가 2배가 넘는다고 밝히고 있으며, 사회복지사 대부분은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행정업무, 후원업무 등을 함께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직무요구가 가중되고 있음을 설명한다.

2. 중심현상: 돌봄 실천의 어려움

1) 과도한 행정업무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민간영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과도한 행정업무에 시달리고 있음을 호소하였다. 사회복지기관 및 센터는 정부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사회복지기관 및 센터에서 실시하는 모든 사업을 상부(정부 혹은 지자체)에 일일이 보고할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지사들은 모든 업무를 서류상으로 남겨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언급한 주된 행정업무는 ‘프로젝트, 공모사업, 사업평가 준비 및 간담회 준비, 연말정산, 영수증 처리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과도한 행정업무는 자연스럽게 야근으로 이어진다고 언급했다.

“사회복지사는 준공무원이에요. 그래서 주로 재단에 소속되어 있단 말이에요. 시에서 일임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센터에서 무슨 사업을 진행했다고 하면,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혹은 감사기관에 보여주기 위해서 영수증 정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프로포절을 작성해야 되요. 거기에 승인을 얻기가 너무 힘들어서 공을 많이 들여야 해요.”(연구 참여자, F)

“복지관은 행정업무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행정업무라고 하는 것도 기관마다 매뉴얼이 다르고, 서류 양도 다르다 보니까 야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H)

“일이 너무 힘들었어요. 매일 야근하고.. 야근해도 수당이 있던 것도 아니고...그냥 제 시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일도 어르신들 돌보는 일이란 관련된 것도 아니고, 무슨 서류 만들어내야 하고, 계획평가 해야 하고, 아예 그냥 난 여기 앉아서 기계처럼 서류만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어르신들 케어하는 느낌은 전혀 안 들었어요.”(연구 참여자, J)

이와 같은 엄격한 관료적 규칙에 따른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과 보고 업무 절차 등과 같은 행정업무의 과중함은 사회복지 본연의 업무인 노인 돌봄의 비중을 낮추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사회복지사들은 노인을 찾아가고, 노인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회복지사 본연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갈망이 크다고 했다. 사회복지사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 처리의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

다. 행정 처리의 간소화를 통해 사회복지사들은 자신들이 돌보고 있는 노인들을 현재보다 더 자주 방문함으로써 노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돌봄 서비스를 개발하고 돌봄 수혜자인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욕구 및 필요를 채워 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현재 사회복지 시스템 상의 과중한 행정업무는 이들이 노인 돌봄에 전적으로 신경 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 및 기타 부수적 업무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는 이직과 퇴사를 고민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돌봄에서 중요한 것은 돌봄 수혜자의 필요와 욕구를 민감하게 살피고 응답함으로써 돌봄 수혜자의 내재적 역량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스템은 사회복지사들을 과도한 행정업무 및 기타 부수적인 업무에 치중하게 함으로써 노인들의 요구사항 및 필요나 욕구에 응답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이 돌봄의 현장에서 지속된다면 결코 우리 사회는 양질의 돌봄 서비스가 돌봄 수혜자에게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2) 과도한 부수업무

이 밖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한정된 보조금은 사회복지사들이 돌봄 수혜자를 돌보는 일보다 ‘과도한 부수 업무’에 치중하게 하고 있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사회복지사 대다수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한 학생들로 사회복지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습득한 상태로 사회복지 현장으로 들어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사들이 현장에서 마주한 대부분의 실제 업무는 이들이 전공과목으로 배웠던 ‘사회복지학’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업무에 적응하기까지 큰 어려움을 겪는다고 언급했다. 사회복지사들은 대상자(돌봄 수혜자)를 관리하는 기본적인 복지(돌봄) 업무보다 기타 부수적 업무(홍보 및 광고 등)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기관이나 센터에서 특정 업무의 전문가(광고, 홍보 전담직원 및 기타 사무직원)를 고용할 만한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홍보나 포토샵 등과 같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을 사회복지사들이 재교육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위치와 업무에 대해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 배운 거는 노인 특정집단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을 배웠는데 막상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일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요. 행사준비를 한다던가, 만족도 조사 분석을 한다던가.. 소식지를 만들거나, 홍보업무나 디자인 같은 것도 하고 있고...업무 분담이 필요해요. 이전에는 홍보를 담당하는 선생님이 따로 계셨

었는데 지금은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 분들이 안계시니까..저희가 저희업무도 해야 하고 프로그램도 만들어야하고, 포토샵도 할 줄 알아야하고...그러다 보면 저희가 진짜로 해야 하는 기본 업무를 하지 못해서 야근을 반복하게 되는 거죠.”(연구 참여자, M)

“사회복지현장은 사회복지사에게 만능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세요. 현장에서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홍보담당자도 되어야 하고, 예산도 받아와야하고..”(연구 참여자, M)

“저희처럼 소규모 시설은 더 심해요. 밑반찬도 잘 만들어야 하고, 식재료도 잘 구입할 수 있어야 하고, 뭐 살 때 물건을 잘 고르는 것도 있어야 하고, 그것 뿐만이 아니라 팜플렛도 편집할 수 있어야 하고.. 영상편집도 잘 해야 하고, 글도 잘 써야 하고, 사진도 잘 찍어야 하고...그래서 어르신을 잘 찾아보러 가지 못하기도 해요.”(연구 참여자, N)

이처럼 사회복지사들은 실제 복지현장에서 노인들을 면대면으로 접촉할 기회가 적고, 돌봄 복지 현장에서 노인 돌봄 복지 업무보다 기타 부수적인 업무 및 행정업무에 더 치중하는 것에 있어서 일부 복지사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괴리감이 든다고 표현하였다.

“사회복지 필드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어도 내가 수행해야 하는 역할들이 전혀 몰랐던 것들이예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관에서도 홍보랑 후원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들이예요. 후원업무는 그렇다 쳐도 홍보는 내가 홍보 영상도 만들어야 하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업무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다보면 내가 사회복지를 하러 왔나 동영상 편집을 하러 왔나 하는 업무상의 괴리감이 들어요.”(연구 참여자, I)

“사회복지사들은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회의감? 사명감은 온데 간 데 없고 회의감만 계속 돌아오고 있고... 이러니까 이 직업을 평생직장으로 해야겠다는 사회복지사를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연구 참여자, H)

3. 맥락적 조건: 기관업무의 체계성과 센터장의 리더십

1) 기관업무의 체계성

사회복지사들의 ‘과도한 행정업무’와 ‘과도한 부수 업무’의 강도는 기관이 업무상의 체계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따라 정도가 달라진다. 대체적으로 종합 사회복지관은 업무상의 시스템 구조가 체계적인 반면 재가센터나 데이케어센터와 같은 소규모 기관은 사회복지사의 업무 분담이 체계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가센터와 같은 소규모 기관과 종합사회복지관과 같은 대규모 기관을 비교했을 때, 종합사회복지 기관은 사회복지 인력의 수가 소규모 기관보다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업무 분담이 체계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재가센터와 같은 소규모 기관은 사회복지사 수가 소수로 정해져 있어 다양한 업무(자원봉사자 관리, 후원금 관리, 후원처 발굴, 재가복지 등)를 한 명의 복지사가 모두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업무의 체계적 시스템이 업무의 강도와는 비례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종합사회복지 기관의 경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매달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의 체계성은 있으나 업무 강도의 수준은 높은 편에 속하며, 재가센터 및 데이케어 센터와 같은 소규모 기관의 경우 종합사회복지 기관의 일부 업무만을 하기 때문에 조직의 체계성은 없으나 업무 강도는 종합사회복지관 보다 낮은 편에 속한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시설이 조금 커서 스물여덟 명이 근무하고 있고 하는 일은 다 각자 역할이 따로 있어요. 조직도를 보시면 사업별로 자원봉사, 후원, 재가복지,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재가복지를 담당 했어요…근데 센터나 재가요양 시설에서는 이런 기능을 다 해버리니까 어렵죠. 혼자서 회계도 해야 하고.. 확실한 건 이직률이 적은 기관은 세팅구조가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연구 참여자 I)

“(재가센터) 소규모 시설은 한 사람에게 업무가 과중되고 그 사람의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분담할 수가 없어요.”(연구 참여자 N)

“후원 또는 후원품 이런 거가 종합복지관은 조직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재가센터)는 그런 조직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직원 수도 적고, 기관이 작아서 조직체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을 수는 있어요.”(연구 참여자 E)

종합사회복지기관은 자체적으로 독거노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독거노인 담당자가 배치되어 있어 지역의 취약계층 노인을 찾아내는 일에 소규모 센터보다 상대적으로 시간적·인력 소모를 크게 겪지 않아도 된다. 이와는 반대로 소규모 기관인 재가센터의 경우 사회복지사들이 데이터 없이 직접 발로 찾아다니며 취약계층 노인들을 발견(발굴) 해야 하는 고충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규모 센터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는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후원사업, 어르신 케어, 행정업무 및 부수적 업무 등’을 하면서 취약계층 노인 발굴 작업까지 직접 하기에는 체력 및 시간적 여유가 없음을 토로하였다.

“노인종합복지관에는 독거노인 관리자가 따로 있어서 노인 발굴을 하지는 않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독거노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어서 그걸 추리면 돼요.”(연구

참여자 M)

“저희는(재가센터) 대상자를 발굴해야하는데 그 발굴이 쉽지가 않아요. 주민 센터도 아니고 구청도 아니기 때문에 현장을 직접 뛰어야 해요. 그런데 그럴만한 시간적인 여력이 없죠. (재가센터는) 후원도 따내야 되고, 대상자도 발굴해야 되고, 어르신 케어도 해야 되고, 서비스도 드려야 되요.”(연구 참여자 J)

2) 센터장의 리더십

그러나 모든 소규모 기관이 시스템적으로 체계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님을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재가 센터에 근무하는 연구 참여자 D는 체계가 잘 잡힌 소규모 기관의 경우 후원 업무는 CMS 자동이체를 통해 관리한다고 언급했으며, 연구 참여자 J 역시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재가센터는 인원수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에 대한 사업담당자를 각각 배치하고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종합복지관에는 파트가 분담이 되어있고, 연차별로 업무가 순환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재가센터)는 업무가 하나예요. 하나의 업무 안에서 세부적으로 나눠서 해야 해요…기관이 소규모여도 체계가 잘 잡힌 곳은 후원업무도 CMS를 통해서 해서 후원금도 잘 모으고 그래요.”(연구 참여자 D)

“인건비가 저희 센터는 따로 책정이 되어있고 사업 담당자로서 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예요. 다른 재가센터는 이 자리에 대한 티오가 없어서 그냥 사무원이 담당한다든지 아니면 정규직 사회복지사가 도맡아서 하죠.”(연구 참여자 J)

종합하면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사 인원의 수가 소규모 복지센터 보다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업무가 체계적이고 업무의 효율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소규모 복지센터의 경우에도 센터장의 운영방식 및 리더십에 따라 체계적 시스템을 갖춘 곳을 찾아볼 수 있었다. 즉 기관의 업무의 체계성 문제는 기관의 규모와는 관계없이 센터장의 운영방식 및 리더십 등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으며, 기관 업무의 체계성은 사회복지사들이 업무 분담을 통해 행정업무 및 기타 부수적 업무를 여러 사람과 나눠서 하여 업무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다.

4. 작용·상호작용: 돌봄 제공의 포기, 돌봄 제공의 형식화, 체념적 돌봄 제공

1) 돌봄 제공의 포기

사회복지사들은 대부분 행정 업무 및 과도한 부수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소진을 경험하고 있었다. 이들은 소진을 경험할 때 자신의 업무로부터 도피함으로써 업무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사회복지사들은 3-5년에 한 번씩 이직 및 퇴사를 한다고 언급하였다. 사회복지사들은 그들의 업무 현장에서 사회복지 업무 및 돌봄과 관련된 일만을 할 수 없어서 업무상의 소진을 경험하고, 소진이 될 때마다 수시로 이직 및 퇴사를 고민한다고 말했다. 민간영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이와 같은 고민은 보건사회연구원의 2017년 보고서에서도 잘 나타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의 26.6%는 이직 의사를 가지고 있으며, 20~30대에서 특히 이직 의사가 높고, 초급관리자 위치에 있는 사회복지사의 31%가 이직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사회연구원, 2017:553).

“여기서 제가 사회복지업무와 관련된 것만 할 수 없어요. 다른 곳도 본인 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할 거예요. 나는 이 일 하려고 온 게 아닌데, 왜 나한테 자꾸 이 일을 시키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말 그대로 짜증이 나게 되고 나 도저히 이 일 못 하겠어. 다른 데로 갈 거야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연구 참여자, F)

“휴식을 가지려고 퇴사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런 분들은 대체로 열정적이었던 분들이예요. 열심히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소진이 된 거죠.”(연구 참여자, I)

“만능이 되어야 하니까.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고, 내가 배운 거는 클라이언트를 어떻게 대하고 이 때는 이런 서비스를 해야 하고, 이런 말투를 써야하고 이런 거를 주로 배웠는데.. 이것 말고도 다른 행정업무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아예 그냥 다른 거 할래 하고 나가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연구 참여자, N)

“보통 3-5년 사이에 복지사들이 많이 그만둡니다. 더 일찍 그만두는 사람들은 더 일찍 그만두는데 일반적으로 3-5년 사이가 되면 소진이 와요. 그래서 다른 곳에 관심을 기울이거나 퇴직을 생각하죠.”(연구 참여자, E)

이 외에도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 받지 못하거나 자신들의 업무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은 이직 및 퇴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자신들이 하는 업무가 과중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상응하는 노동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며, 낮은 임금과 낮은 처우에 대해서 회의감이 드는 직업이라고 언급했다. 제2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돌봄 노동은 인간이 하는 노동집약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값이 비싸며 이익 창출이 어렵다는 성격을 지닌다. 이러한 이유로 돌봄 제공자는 높은 노동 강도에도 불구하고 임금이 낮은 현실이다.

“사회복지를 계속해야하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나는 누구를 도와주는데 나는 누가 도와주나 싶어요. 나중을 생각하자면 사회복지사로서 나의 노후는 너무나 암담하니까.. 공무원 쪽으로 자꾸 눈을 돌리는 사회복지사들이 늘어나는거고, 이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정을 붙이자니 본인의 미래가 너무 불안정하고, 일을 하다 보니 힘만 들고, 똑같은 시간을 소요해서 누구는 편하게 일하면서 돈을 많이 버는데 누구는 더 많은 시간을 소요해서 에너지 낭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봤을 때도 암담하니까..”(연구 참여자, H)

“사회복지사를 어떻게 보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문가보다는 그냥 도와주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 같아요. 일반 시민들의 인식이 그런 것 같아요. 사회복지사는 도와주고 그런 사람...이런 부분에서 인식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M)

“두 번째 직장에서는 처우가 너무 힘들었어요. 급여에 비해서 일이 너무 과다했어요.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 야근하고..야근해도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 관련된 업무도 아니고 그냥 행정업무로 야근을 하는 건데 시간 허비하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뒀던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J)

이는 2017년 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에서도 응답자 59.8%가 자신의 직무나 업무강도에 비해 임금수준이 적당하지 않다고 대답한 것을 통해서도 잘 드러난다(보건사회연구원, 2017:470).

2) 돌봄 제공의 형식화

소진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이직 및 퇴사를 하지 않는 사회복지사들은 업무에서 오는 소진 및 스트레스를 돌봄 수혜자들에게 돌봄 제공을 형식화하고 있었다. 즉, 돌봄 제공자에게 형식적인 돌봄만을 제공하고 돌봄 수혜자가 실제적으로 필요로 하는 요구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는 못한다고 언급했다. 이는 심신이 피로한 상태인 사회복지사가 복지 현장에서 오랫동안 생존하기 위한 자기방어적인 태도로 보였다.

“(몸이 힘들면) 예전보다 관심이 덜 가는 것 같아요. 상담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래도 어르신들 이야기 들으려고 그랬는데 (몸이 힘들면) 그게 점점 어려워져요.”(연구 참여자, J)

“우선 내 몸이 피곤하다보니깐 케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보면 손을 놓고 싶을 때가 많아요.”(연구 참여자, F)

이러한 돌봄 제공의 형식화는 돌봄 수혜자의 정서적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행정절차의 간편화를 위해 경제적인 지원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이 분들 이야기가 잘 안 들어와요. 노인분들이 하는 하소연에 저희는 정형화해서 경제적인 것만으로 필요를 채워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방문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서류를 또 작성해야 되니까..그거하기 싫어서 방문을 안 하게 되고 그래요. 사실 어르신들이 바라는 건 사회복지사가 와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더 있어줬으면 하는 건데...”(연구 참여자, N)

돌봄은 상호 간의 감정을 공유하고 친밀성을 요구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 간의 상호 교류가 낮고, 정서적 교감의 정도가 낮으면 상호 신뢰가 어렵게 되고 결국 좋은 돌봄을 형성할 수 없는 구조를 형성한다. 돌봄 수혜자에 대한 무관심한 태도는 돌봄을 지속하게는 하지만 돌봄 제공 과정에서 돌봄 수혜자와 깊은 돌봄 관계 맺음 보다는 형식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3) 체념적 돌봄 제공

사회복지사들은 자신들이 처한 업무 현실에 대해 순응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만성화된 체념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과중한 행정업무와 과도한 부수적인 업무가 사회복지사의 소진을 발생시키지만 업무 현실에 순응하고 적응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해 이들은 대학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사회에서 다른 직업을 찾기에는 너무 늦었으며, 사회복지사 외에는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없다고 답했다. 고등 교육기관에서 사회복지 전문 과정을 이수한 사회복지사는 과도한 행정 업무와 부수적 업무에 치중하는 근무 환경은 큰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었고 이 같은 부담감은 업무 현실에 대한 체념적인 태도로 나타나고 있었다.

“사회복지사가 되면 그냥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현실을 알기 전에 이미 진로를 그렇게 선택해버렸으니..저는 가야하긴 할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H)

“전공을 이미 사회복지로 해버렸잖아요. 뭐 주위 선배들이 ‘탈사복(사회복지사에서 탈출)’했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분들은 주로 그냥 일반 회사에 들어가거나 하시는데, 그럴 거라면 그냥 전공을 살리는 게 낫겠다 싶더라구요. 특별한 대안이 없는 이상 그냥 사회복지사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M)

“사명감이 없으면 못할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되지?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영업사원도 아니고 왜 후원처 발굴을 하러 뛰어다녀야 되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다가도 (후원처 발굴) 시도를 계속하는 제 모습을 보게 돼요.”(연구 참여자 D)

5. 중재적 조건: 기관의 처우 및 업무의 강도

1) 기관의 처우

작용·상호작용 현상에서 나타나는 ‘돌봄 제공의 포기’ 현상은 기관의 성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맥락적 조건에서 살펴보았듯이 대규모 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과 소규모 기관인 재가센터 및 데이케어 센터는 사회복지사 인원수 및 업무 분담의 체계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도 이들 기관은 처우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대규모 기관으로 재가센터보다 처우가 좋은 편에 속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소규모 기관보다 재정적 어려움이 덜한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사회복지사들이 호봉에 맞게 급여를 제공받고 있었으나, 재가센터 및 데이케어센터와 같은 소규모 기관의 경우 상당수가 호봉에 맞게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합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들의 야근 수당이 따로 책정이 되어 있었으나, 재가센터나 그 외의 소규모 기관에서는 야근에 대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소규모 복지 기관은 대규모 복지 기관과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비교했을 때, 급여 및 수당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차이는 소규모 기관의 경우 1년에 한 번 정부로부터 1년 치 예산을 지원받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재정 지급의 구조로 인해 소규모 기관의 사회복지사는 급여 체계가 불안정하고, 야근 수당의 미지급 등의 처우 문제를 겪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소규모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은 더 큰 규모의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직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처우가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그거는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정도에서예요. 재가는 아니예요. 서울시에서 급여 테이블 안을 만들어주는데 그건 권고 사항일 뿐이에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은 급여테이블에 맞게 급여를 받는데 저희는 그렇지가 않아요. 1년에 한꺼번에 지급받은 보조금으로 직원들 급여 주고, 운영비 쓰고, 사업비 쓰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들끼리 종합사회복지관은 대기 업이고, 재가는 중소기업이라고 하는데 요양보호사 파견하는 기관은 처우가 더 약해요. 재단이 큰 곳은 직원들 처우개선에도 신경을 쓰고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일도 많고, 야근도 많이 하는데 야근 수당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직원들이 오래 못 버티고 나가요.”(연구 참여자 C)

“(종합사회복지관) 저희 복지관은 야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하는 사람도 있는데, 야근을 하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줘요.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평가 같은 문제 때문에 그게 안 될 수가 없는 시스템인걸로 알고 있어요. 이직을 할 때도 급여체계가 무너지지 않고 승급이나 진급을 해 줄 수 있는 곳을 찾게 돼요.”(연구 참여자 H)

“(재가센터는)종합복지관보다 급여나 수당 쪽에서의 처우는 열악해요. 복지관 같은 경우는 야근을 하거나 주말근무를 하는 경우에 수당을 잘 챙겨주고 그런 게 있는데 재가센터는 예산을 1년 치를 한꺼번에 받아서 하기 때문에 1년 치 운영을 잘못해서 사업비가 모자라면 사회복지사 급여가 흔들리는 구조라서 야근수당 같은 거는 없어요. 저희는 급여체계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후원금을 모금해야하는 상황에 놓여있죠.”(연구 참여자 N)

2) 업무의 강도

이와 반대로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지역의 대규모 복지기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다양한 행사프로그램 등을 매달 진행해야 하며, 이로 인한 과도한 행정업무 및 부수적 업무를 소규모 기관보다 더 많이 하고 있었다. 이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과중한 업무량으로 소진을 경험 있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종합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또한 이직 및 퇴사를 자주 고려한다고 언급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 행사나 전반적인 업무를 다 맡고 있으면 좀 많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그러다가 퇴사하시면 소규모(재가센터)로 가시기도 하더라고요.”(연구 참여자 M)

“(재가센터는) 종합사회복지관보다 큰 카테고리가 작아지잖아요. 그래서 하는 일이 종합사회복지관보다는 다양하지는 않아요. 급여 문제에 있어서도 일한 만큼만 받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급여체계가 조금 불안해도 소규모 기관으로 이직하게 되는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D)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일하다가 재가센터로 이직한 연구 참여자 D는 재가센터의 경우 소규모 기관의 특성상 업무 분담이 잘 안되며, 사회복지사로서의 성장의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직을 또다시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복지기관의 업무 분담의 체계성이 없고, 사회복지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기관의 구조적 특징은 사회복지사들이 이직을 고려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업무 분담이 잘 안 돼서 이렇게 작은 기관(재가센터)의 소규모 기관에서는 더 있고 싶지가 않아요. 그 외에도 피드백을 받고 싶은데 그걸 해 줄 사람이 이런 소규모 기관에는 없어요. 그 외에도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사들을 위한 리프레쉬 자리도 있고 그래요.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들 워크샵이라고 해서 스트레스도 풀게 해 주고 그런 자리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가고 싶으면 자비로 참가해야 돼요.”(연구 참여자 D)

종합해보면 종합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들은 상대적으로 업무가 단편적인 소규모 기관으로 이직을 희망하고 있었으며, 소규모 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급여가 안정적이고, 처우가 좋으며 사회복지사로서 성장할 기회가 많은 종합사회복지기관으로 이직하고 싶어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즉, 대규모 사회복지기관 및 소규모 사회복지기관은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지니고 있었다.

6. 결과: 돌봄 서비스의 질 하락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의 평균 이직 횟수는 2-3회이며 주로 2-3년마다 이직을 한다. 이 같은 주기로 사회복지사가 바뀌게 되었을 때 사회복지사들은 돌봄 수혜자와의 지속적인 관계 맺음에 어려움을 겪는다. 돌봄은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 간의 상호 관계 및 상호의존성을 가지는 것으로(Fobler, 2007:88) 돌봄은 상호 간의 감정을 공유하며 친밀성을 요구하는 활동으로 일

회성으로 끝나는 단기적 활동이 아니다.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의 형성은 서로가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고, 정서적인 교감을 나누며 서로의 삶에 깊숙이 관여하게 함으로써 좋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는 가장 기초적 단계이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의 ‘찾은 이직 및 퇴사’ 혹은 ‘돌봄 수혜자에 대한 돌봄 제공의 포기, 돌봄 제공의 형식화 및 체념적 돌봄 제공’은 좋은 돌봄 형성을 방해한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들이 2-3년마다 이직을 하게 되면 돌봄 지속성은 훼손되고, 이직을 하지 않고 돌봄을 지속한다고 하더라도 돌봄 수혜자에게 낮은 정서적 지원과 무관심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돌봄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

1) 돌봄 관계의 지속성 훼손

사회복지사는 돌봄 수혜자와 요양보호사를 매칭 시켜주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한다. 즉 사회복지사는 돌봄 수혜자와 요양보호사 모두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이들 간의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하고, 상호 간 적절한 매칭을 통해 좋은 돌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중간자의 위치에 있다. 좋은 매칭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와 돌봄 수혜자 사이에서 오랜 시간 관계를 형성해야 하지만 사회복지사의 잦은 이직 및 퇴사는 요양보호사와 돌봄 수혜자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주며, 결국 이들 간의 적합한 매칭을 방해한다.

“사회복지사는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을 연결해주고 관리하는 중간관리자이기도 해요. 양 쪽 사람들과 소통이 잘 되어야 돼요. 요양보호사와 어르신을 매칭해서 돌봄 서비스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봐야하는데 복지사가 자주 이직하고 퇴사해버리면 매칭이 잘 안될 때가 많아요.”(연구 참여자, E)

“담당 복지사가 바뀌면 어르신과 요양보호사 모두 힘들어하세요. 요양보호사의 성향과 어르신 성향을 잘 알고 있는 복지사가 매칭을 잘 시켜주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대상자와는 깊은 관계를 맺고,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과도 관계를 잘 유지해야 하는데 이직이 잦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연구 참여자, M)

돌봄 서비스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 나타나는 ‘친밀감’이다. 사회복지사에게 요구되는 친밀감은 돌봄 수혜자와 요양보호사 모두에게 나타나야 한다. 사회복지사는 이들과 지속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 개인의 특성과 성격을 파악해야 하고, 돌봄 수혜자와 요양보호사 간의 적절한 매칭을 통해 좋은 돌봄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사는 돌봄수혜

자와 요양보호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돌봄 수혜자의 욕구와 필요에 응답함으로써 좋은 돌봄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은 잦은 이직 및 퇴사를 발생시키고, 결과적으로 좋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을 방해한다.

2) 돌봄의 정서적 관계 훼손

이론상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 간의 지속적인 관계 맺음을 통해 나타나는 친밀감과 유대감은 높은 수준의 돌봄으로 이어진다. 즉, 높은 수준의 돌봄은 취약하고 의존적인 사람들의 신체적 욕구 및 경제적 욕구만을 충족시켜주는 것뿐만이 아닌 친근함과 관심, 헌신 등과 같은 정서적 차원의 돌봄을 통해 제공돼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연구에서도 정서적 차원의 돌봄은 비가시적이지만 돌봄을 제공받는 노인의 삶의 질에 중요한 요소라고 밝혀왔다(Arber & Ginn, 1990). 그러나 현실에서 공적 돌봄은 정서적 지원보다 경제적 지원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연구 참여자 중 일부는 돌봄 수혜자 가정을 방문한 후에 작성해야 하는 행정서류로 인해 돌봄 수혜자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꺼려진다고 했으며, 이들은 행정서류의 간편화를 위해 노인에게 정서적 지원보다는 경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고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돌봄 수혜자인 노인은 자신의 정서적 욕구나 필요를 사회복지사로부터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으며, 위급한 순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도움을 받지 못할 위험에 놓일 수 있다. 노인들의 정서적 돌봄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은 사회복지사로부터 경제적인 지원만 받음으로써 양질의 돌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업무량이 많아요. 업무량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야근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피곤이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케어를 해야하는 클라이언트들에게 한 명 한 명에게 손이 못 닿는 경향이 있어요. 우선 내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케어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연구 참여자, F)

“어르신을 많이 만나서 정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행정적인 업무량이 너무 많다보니까 정서적인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기가 어려워요. 공모사업, 모금사업 한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된 서류들이 많다보니까.. 야근은 필수예요. 대상자를 한 번 방문하면 서류를 또 작성해야 되요. 그거 하기 싫어서 방문도 잘 안하게 되요. 내가 너무 힘든 상태면 이 분들의 이야기가 잘 안 들어와요. 결국에는 이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정형화해서 경제적인 지원으로 채워드리려고 해요. 사실 경제적 지원은 주민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저희 같은 재가에서는

정서적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똑같이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어요. 상부에 보고할 서류 때문에…”(연구 참여자, N)

양질의 돌봄은 ‘인간 중심적 돌봄(person centered care)’ 혹은 ‘가족 같은 돌봄’등으로 나타난다고 보는데(최희경 2009:237; Arber & Ginn, 1990), 실제 돌봄 현장에서 돌봄 제공자와 돌봄 수혜자 간의 관계는 불연속적이고, 돌봄 제공자인 사회복지사는 “돌봄 제공의 형식화와 체념적 돌봄 제공”의 방식으로 돌봄 수혜자를 상대함으로써 이들은 상호 의무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의무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것 같아요. 수혜자와 관계를 잘 형성해서 속사정을 알게 되면(수혜자에 대해) 더 깊은 것을 알 수 있을텐데..(그런건) 사회복지사가 오래 근무하고 그래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안되니까…”(연구 참여자 H)

“어르신들도 바뀌는 사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해야 되니까 새로운 사람도 얼마 안가서 그만두겠지 하는 인식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분들은 속마음을 다 내비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사도 의무적으로 다가갈 수 밖에 없더라고요. 관계를 형성해서 어르신들 속사정을 알게 되면 더 깊은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이 좀 아쉽죠. 그만두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주면 어르신들도 자신도 모르게 속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겉으로 보이는 어려움이 아니라 본인이 정서적으로 겪는 어려움을 얘기하셔요. 근데 그게 잘 안되니까 어르신들도 의무적으로 약간 영혼 없이 사회복지사를 대하는 것 같아요.”(연구 참여자, 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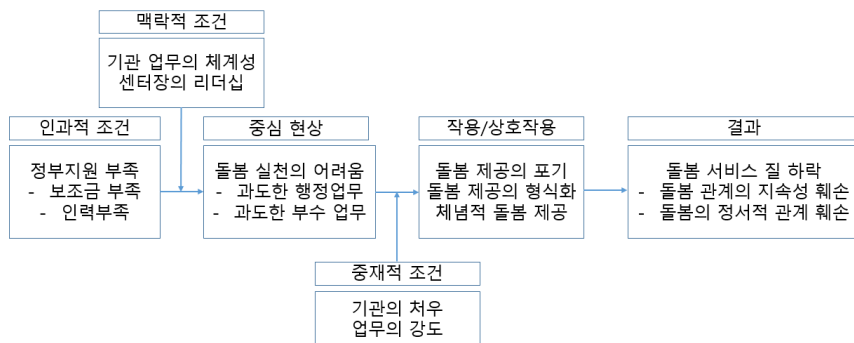
7. 근거이론 패러다임 모형 정리

본 연구는 글레이저와 스트라우스(Glaser & Strauss, 1967)의 근거이론을 사용하여 사회복지사의 돌봄 경험을 통해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민간영역에서의 사회복지사 근무 환경이 어떠한지 살펴보고, 사회복지사의 근무환경이 돌봄 서비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패러다임 모형으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먼저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 및 센터는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음으로써 운영된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으로 시설 운영 및 인건비를 모두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대부분의 기관 및 센터는 최소한의 인원이 다양한 업무(행정 업무 및 돌봄 서비스 업무 등)를 수행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는 한 명의 사회복지사가 과도한 행정업무와 부수적 업무 처리를 하게 하는 구조다.

그러나 기관의 업무가 체계적이거나 센터장의 리더십이 유연할수록 사회복지사의 업무강도는 낮아질 수 있다. 즉 체계적인 시스템을 가진 기관일수록 사회복지사는 행정적 업무나 부수적 업무를 분담하여 업무 부담을 줄이게 되고, 센터장이 근무환경을 유연하게 제공할수록 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의 질이 달라지는 것을 연구참여자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기관의 처우(급여 및 사원복지 등)나 업무 강도(야근 및 부수적 업무의 정도 등)에 따라 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은 달라졌다. 특히 행정적 업무에서 포토샵을 이용한 홍보물 제작 혹은 동영상 제작 등과 같은 전문가적 소양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들은 퇴근 이후에 포토샵 강의나 업무에 필요한 강의 등을 외부기관을 통해 수강하면서 업무 현장의 적응도를 높여야하는 환경에 놓여있었다. 퇴근 이후의 외적 업무는 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의 질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돌봄 서비스 현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무시간에는 직간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퇴근 이후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수업을 수강함으로써 사회복지사들은 만성적인 피로와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이는 결국 돌봄 제공의 포기(퇴사 및 이직) 및 돌봄 제공의 형식화 등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사회복지사와 돌봄 수혜자 간의 돌봄 관계의 지속성이 훼손되고, 돌봄 관계에서 나타나야 하는 정서적 관계가 훼손되어 돌봄 수혜자는 시기적절한 돌봄 필요를 제공받지 못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만약 사회복지사의 근무 환경이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면 돌봄 서비스 환경의 질적 하락은 지속 될 것이다. 돌봄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돌봄 지속성이다. 관계성을 기반으로 하는 돌봄이 지속되지 못한다면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은 형식적이고, 우리 사회의 돌봄 사각지대는 계속해서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돌봄을 제공하는 제공자의 근무 환경의 개선은 향후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 질과 연결 될 것이다.



[그림 2] 패러다임 모형

V. 결론 및 제언

최근 우리 정부는 노인 돌봄 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식함에 따라 노인 돌봄 서비스를 공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는 민간위탁구조로 민간주체가 서비스 공급자가 되어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을 통해 복지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 사회복지기관 및 센터는 정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됨으로써 정부 보조금으로 기관 및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조사한 사회복지시설의 재무 현황에 따르면 기관 및 시설은 정부 보조금으로 사업운영비와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으며 부족한 재정은 후원금을 통해 충당해 오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 보조금은 기관을 운영하고 사회복지사의 인건비까지 충당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다. 사회복지기관 및 센터의 재정적 열악함은 사회복지기관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현상을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의 과중함을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고 있다. 실제 본 논문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 역시 복지 업무의 행정적 업무 및 기타 부수적 업무(영상제작·홍보물제작·후원처발굴 등)의 과중함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특히 본 논문에 참여한 연구 참여자들은 엄격한 관료적 규칙에 따른 불필요한 보고서 작성과 보고 업무와 같은 행정업무의 과중함과 더불어 기타 부수적 업무에 치중되는 업무상의 괴리감에 대해서 일관되게 언급하였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돌봄 제공자들의 관심은 돌봄 수혜자들의 정서적 욕구 충족이 아닌 행정적 효율성과 행정 절차 기준에 집중하게 되는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처럼 엄격한 관료적 규칙과 절차는 돌봄 서비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돌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기관이 관료적이고 엄격한 규칙과 절차에 의해 지배받을수록 돌봄 수혜자의 요구나 필요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양질의 돌봄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사회복지사의 업무상 괴리감은 잦은 이직과 퇴사를 반복하게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돌봄 제공자가 돌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방해한다. 이 외에도 사회복지사들은 과도한 업무량으로 무관심한 태도로 돌봄 수혜자를 돌보거나 현실 순응적 태도를 보이면서 사회복지사로서의 사명감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 이는 앞서 돌봄 이론에서 언급한 돌봄의 미덕과는 상반된 모습으로 이러한 태도가 돌봄 수혜자에게 결코 좋은 돌봄 서비스로 이어진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와 정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적 방안을 설계해야 하는가? 이에 대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부족한 정부 보조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듯이 사회복지기관 및 센터에 지급되는 한정된 정부 보조금으로는 부족한 인력을 채용할 수 없으며 과도한 업무량을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정부 보조금의 조정은 사회복지기관의 인력 충원을 기대할 수 있게 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호봉제 급여를 급수에 맞게 지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호봉에 맞는 급여를 안정성 있게 제공받을 때, 이들은 자신들의 직업에 대해 만족감과 자부심을 느낄 것이며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가로부터 안정적인 경제적 환경을 제공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즉, 사회복지사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돕는 것은 좋은 돌봄 서비스가 사회 전반에 퍼지도록 도울 것이다. 이는 잉스터가 “정부는 구체적인 맥락과 특화된 방식으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일차적인 부모, 가족, 돌봄 제공자 그리고 지역 조직을 지원함으로써 사람들의 돌봄을 증진시키며, 가능한 최선을 다해 돌봄 전달을 개인적이고 지역적인 수준으로 전환해야 한다”(Engster, 2007:138).라고 언급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직업 안정성 확보와 부족한 복지 및 전문 인력의 충원은 돌봄 서비스 질의 향상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둘째, 사회복지기관 및 센터의 업무의 체계성을 정비하고 대규모 기관과 소규모 기관이 동일한 처우를 제공받도록 하는 것이다. 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 업무 분담이 잘 되어 있으나 소규모 기관의 경우 소수의 인원으로 센터가 운영됨에 따라 업무가 혼재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소규모 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이 과도한 업무를 떠안게 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소규모 센터의 체계적 시스템의 정비와 업무 분담은 센터장의 재량과 운영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정부 및 지자체는 소규모 센터의 업무 분담 및 업무상의 시스템 체계성에 대해 센터장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독려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노력으로 사회복지사들의 업무상 소진을 방지하고 오랜 기간 동안 돌봄 수혜자에게 돌봄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가 채용 및 고등교육기관의 커리큘럼 보완이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사들은 자신의 업무 현장에서 돌봄과 관련 없는 업무(포토샵, 홍보물 제작 등)를 함으로써 괴리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들은 고등교육과정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전문인력으로 이들은 학교에

서 ‘포토샵이나 홍보물 제작 등’과 같은 것을 배우지 못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한 교육과정을 업무 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이수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복지사들은 이와 같은 일을 전문가 채용을 통해 전문가가 한다면 더욱 돌봄 서비스에만 몰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홍보 관련 전문인력을 따로 채용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며, 고등교육의 사회복지학 커리큘럼에 “홍보물 제작 및 포토샵”관련 강의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고등교육과정에서의 이 같은 커리큘럼 추가는 사회복지사가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현장과 교육과정에서의 괴리감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사회복지사들이 퇴근 이후의 자신의 삶을 돌볼 수 있도록 하여 업무에서의 소진을 예방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돌봄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의존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돌봄을 통해 사회를 지속 및 발전·유지 시켜왔다. 따라서 우리 사회는 돌봄을 제공하는 돌봄 제공자의 노동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며 돌봄 제공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만약 돌봄 제공자에 대한 국가의 도움이나 시민 사회의 의식 변화가 없다면 우리 사회에서 좋은 돌봄의 구현은 어렵게 될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사회는 돌봄 제공자에게 사회·경제적 지원을 보장하고 돌봄 제공자는 돌봄 수혜자의 돌봄 필요에 즉각적이고, 유동적으로 반응함으로써 지속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

참고문헌

- 권현정(201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9권 제1호. 33-57.
- 김유경(2019). 중·장년층의 이중부양 부담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희강(2016). “돌봄국가: 복지국가의 새로운 지평”. 정부학연구. 제22권 제1호. 5-30.
- _____(2018). “돌봄: 헌법적 가치”.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2호. 3-29.
- 러딕·사라(1995). 모성적 사유. 이해정(역). 철학과현실사(Ruddick, Sara *Maternal Thinking: Toward a Politics of Peace*: Beacon Press).
- 박정연(2016). 복지서비스의 민간 공급에 관한 공법적 규율: 노인요양서비스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양난주(2009). 노인돌보미바우처 집행사례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잉스터·다니엘(2007). 돌봄: 정의의 심장. 김희강(역). 서울:박영사(Engster, Daniel *THE HEART of JUSTICE care Ethics and Political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 최지선(2017) “통합사례관리사의 근로생활의 질, 소진 및 역량 간의 관계”. 한국 사회복지교육. 제40권 29-57.
- 최희경(2009). 노인에 대한 사회적 돌봄과 돌봄 서비스의 질 보장. 집문당.
- _____(2011). “노인시설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에 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 연구. 제29권 113-138.
- 헬드, 버지니아(2005). 돌봄: 돌봄윤리. 김희강·나상원(역). 서울: 박영사(Held, Virginia *The Ethics Of Care: Personal, Political, and Global*: Oxford University Press).
- 커테이·에바페더(1999). 돌봄: 사랑의노동. 김희강·나상원(역). 서울: 박영사 (Kittay, Eva Feder *Love's Labo(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Routledge).
- 폴브레·낸시(2001). 보이지 않는가슴: 돌봄 경제학. 윤자영(역). 서울: 또 하나의 문화(Folbre, Nancy *The Invisible Hearth: Economics and Family Values*: NewPress).
- Arber, S. and Ginn, J.(1990). The Meaning of Informal Care: Gender and the Contribution of Elderly People. *Ageing and Society*. 10, 429-454.

- Bowden, P. (1997). *Caring: Gender Sensitive Ethics*. London: Routledge.
- Cancian, F. M.(2000). *Caring and Gender*. Thousand Oaks, CA: Sage.
- Cresswell, J. W. (2013).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Approches*. Sage Publication.
- Fineman, M. A.(2004). *The Autonomy Myth: A Theory of Dependency*. New York and London: New Press.
- Glaser. B. & Strauss, A.(1967). *The Discovery of Grounded Theory*. Chicago: Aldine.
- Tronto, J.,(1993). *Moral Boundaries: A Political Argument for an Etic of Care*. New York: Routledge.

Abstract

**A qualitative study on the provision
of care services experienced
by social workers in the private sector**

Ji Eun J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working environment of private sector social workers on the quality of care services for the elderly. Rapid industrial development brought women's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as women entered society, there began to be no domestic care. Thus, the state began to establish public care agencies to address the phenomenon of lack of care. However, the value of care work in our society is still being depreciated, and the work of care providers in care is also not recognised. In respons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care providers' working environment on care services based o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care definitions and care characteristics.

The study interviewed 15 social workers working in social welfare institutions based on the grounded theory developed by Glaser and Strauss. Research shows that limited government subsidies have the most impact on the working environment of social workers. Social welfare agencies were operated with government subsidies, and insufficient operating expenses were covered by participation in public offering projects. The project fund-raising work accounted for a large portion of social workers' workload, and was found to be the biggest causal factor that made care providers' working environment poor. In addition, excessive administrative and incidental tasks other than care work were responsible for preventing long-term work at one institution, and social workers changed their working environment every two to three years. This eventually led to undermining the emotional relationship between caregivers and care recipient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aims to show that the need to expand information subsidies, the systematic maintenance of social welfare institutions, and the recruitment of experts in certain fields are essential factors in providing a good care environment in the public care sector.

Keywords : good caring, caring society, caring relationships, caring service, a social worker

* Doctoral student, Korea University

1970년대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 의식에 미친 영향*

박현미**

초 록

본 연구는 1970년대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사업장의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 의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1970년대 심각했던 성별임금 격차는 전혀 해소하지 못한 반면에 모성보호제도는 상대적으로 개선시켜낸 현실을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 본 연구는 1960~70년대 남녀임금차별 문제와 모성보호 문제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의식과 대응이 달랐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한국노총과 여성노동자들이 기존의 성별분업 규범을 전제로 한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두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의 차이를 해명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70년대 성별화된 지도계몽활동의 성격을 띤 노동조합의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노동조합의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의 보수적인 여성 정체성을 강화시켜왔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노동조합의 가족계획 관련 교육이나 홍보사업 등에서의 여성노동자들의 참여가 모성보호 등 여성권리 의식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논문은 1970년대 여성들이 높은 노조조직률에도 불구하고 당시 노조에서 차별임금 문제를 제대로 제기하지 못했던 현실을 이해할 수 있었다. 나아가 노동조합에서 모자보건, 2세 국민출산 및 양육자 등을 명분으로 모성보호 제도를 개선시켜 왔음을 확인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이며 핵심 자료는 한국노총의 사업보고서와 가족계획판 신문, 노동조합과 노동청 등의 가족계획사업 발간 자료 등이다.

주제어 : 노동조합, 사업장 가족계획사업, 성별 임금격차, 모성보호,
여성노동자, 전통적인 성역할규범

*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발전국가시대의 성별화된 노동조합과 제1세대 여성노동자 연구: 1960~70년대 한국노총 활동을 중심으로」, 2019년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본 논문의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한 것이다. 꼼꼼하고 성의있는 논평으로 이 논문의 완성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세 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선임연구위원(mymagpie@naver.com)

I. 서론

1. 연구목적 및 배경

본 논문은 1970년대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사업장의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 의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1970년대 여성노동자들이 심각했던 성별임금 격차는 전혀 해소하지 못한 반면에 모성보호조치들은 상대적으로 진전시켜낸 현실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1970년대는 한국에서 여성의 노조조직률이나 유일한 상급단체였던 한국노총 내 여성비율이 유례없이 높았다¹⁾. 하지만 당시 대다수 여성노동자들이나 여성노동운동은 명백하게 성차별적인 노동조합정책이나 성별 임금격차 문제에 대해 반대 혹은 저항,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1970년대 조합원의 80% 이상이 여성노동자들이었던 ‘민주노조’ 사업장 대부분에서도 성차별적 임금문제가 대두되지 않았다²⁾. 오히려 여성의 노조조직률이 증가하는 상황에서도 성별 임금격차가 악화되기도 했다³⁾. 선행연구들이 노조의 성별 임금격차 완화 효과를 주장하고 남녀 간 임금차별 문제의 해소를 위해 여성의 노조가입방안을 제시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현실은 설명이 필요하다. 왜 여성의 노조조직률이 유례없이 높았고 노조 내 남성 대비 여성비율이 평균 30%⁴⁾ 이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임금격차에 대한 문제제기는 찾아보기 어려운 것일까?

반면 196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노동조합에서 모성보호 문제는 핵심적인 여성노동문제로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제기했고 개선을 시도했

1) 2018년 현재 여성의 노조조직률은 5.9%이다(한국노동연구원, 2020). 반면 1978년 여성의 노조조직률은 21.2%였다(한국노동연구원, 1990:152).

2) 1970년대 대표적 민주노조인 원풍모방 노동조합의 1981년 임금인상 요구액에서 남녀차별이 있고 타결액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높다(박현미, 2019: 191). 유경순(2017:97)에 따르면, 1970년대 민주노조운동은 젠더문제(성별문제)에 대해 크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성차별적이었다.

3) 여성의 노조조직률은 1975년 19.3%로 1973년 13.6%에 비해 5.7%포인트 높아졌지만 남성 대비 여성임금 비율은 1973년 45.5%에서 1975년 42.2%로 3.2%포인트 떨어졌다(박현미, 2020:26).

4) 노동조합도 여성할당제는 30%를 보통 요구한다. 30-35%는 어떤 조직에서 소수집단이 그 조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한 비율로 간주된다(United Nations(1992.12), E/CN.6/1992/7, No.38, 김선옥·김명숙, 1994에서 재인용).

다. 특히 생리휴가 문제는 1960년대 초부터 다수 산별노조의 여성활동이 중점을 둔 사안이었다. 그 결과 한국노총 조직들⁵⁾의 여성 노동조건 향상 활동은 단체협약에서 관련 조항의 확보, 사용률 증가 등으로 모성보호 조치 개선에 기여하였다⁶⁾. 당시 한국노총의 산별조직들과 여성노동자들은 성별 임금격차와 모성보호의 문제에 상이하게 대응했던 것이다. 당시 노동조합의 공식문건을 보면, 1960~70년대 노동조합의 임금차별 관행이나 교섭활동에 대해서 노동조합이나 여성조합원들의 문제의식은 별로 드러나지 않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에서야 임금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의식이 실제로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았고 노동조합의 남녀 임금차별 인상 요구는 공공연하게 1980년대까지도 계속되었다. 노동조합 내의 성별 임금격차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재생산되었다⁷⁾.

본 연구에서는 1960~70년대 여성의 임금차별 문제와 모성보호 문제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의식과 대응이 위와 같이 달랐다는 점에 주목한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한국노총과 여성노동자들이 전통적인 성별 규범을 전제로 노동조건 개선활동을 해왔다는 점에서 두 문제에 대한 대응방식의 차이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노동조합의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을 분석할 것이다. 1970년대 국가시책에의 협조 차원에서 수행된 노동조합의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은 한편으로는 성별화된 지도계몽활동의 성격을 갖고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노동자들의 권리의식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1960년대 이후 성장제일주의 기치 아래 성별화된 산업화 전략을 구사했던 박정희 정권은 국가주도 근대화 프로젝트의 하나로서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했다. 1970년대에는 노동조합이 사업장 가족계획정책 집행 기제의 하나로 동원되었다. 대공장의 미혼 여성노동자를 핵심 대상으로 했던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은 국가시책에 부응하기 위한 노동조합 주도의 성별화된 대표적 지도계몽활동으로서 여성노동자들에게 공사영역을 구분하는 성별분업 의식을 내면화시키고 보수적인 여성 정체성을 강화시켰다.

5) 여기에는 대표적 '민주노조'로 지칭되었던 노조들도 포함된다. 당시 한국노총 산별조직 집행부 등과 갈등 혹은 긴장관계에 있었던 노조들이 일부 있었지만 이들 모두 유일 상급 단체인 한국노총 소속 사업장이었다. 이들 노조가 실제 해당 산별조직에서 다른 노조들과 활동했던 기록은 각 산별노조 사업보고서에서 확인된다.

6) 한국노총의 모성보호 활동은 근로기준법의 여성특별보호조항에 근거해 노동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생리휴가, 산전산후휴가, 육아시간 확보와 관련된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자세한 내용은 박현미(2019:205-232) 참조.

7) 관련 내용은 박현미(2020) 참조.

“국가재건의 토대는 건전한 가정”(보건사회부, 1987:97)임을 내세웠던 당시 국가개발에 기여하는 여성의 육성, 건전가정⁸⁾의 육성은 개발국가의 사회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황정미, 2001:181). 당시 ‘가족계획’이라는 담론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혼하고 출산하여 부모가 될 것을 계획해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감으로써 가정에 묶이지 않으려는 여성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럼으로써 여성을 일차적으로 아내이자 어머니로 간주하는 통념을 더욱 강화하였다(배은경, 2004:214). 그러나 당시 여성들의 이상적인 모습은 자녀를 많이 낳아서 길러내는 전통적인 어머니의 모습은 아니었다. 계획적으로 적당한 수의 아이를 낳아 충분한 교육을 받도록 길러내는 근대적 어머니의 모습, 가정생활의 관리자를 강조했다(신현옥, 2000:58, 95)⁹⁾. 1970년대 가부장적 문화와 가치가 당연시되었던 남성 중심의 노동조합에서 고용은 물론 특히 임금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노동시장 문제는 노동조합 의제로 제기될 수 없었고 공론화시킬 수도 없었다. 1970년대 한국에서 심각했던 성별 임금격차가 개선되지 않고 유지, 재생산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상황을 기반으로 한다.

본 논문은 당시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의 내용과 여성들의 참여를 살펴보면서 여성노동자들이 성별 임금격차와 모성보호 문제에 대한 의식과 대응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단초를 찾아볼 것이다.

이후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연구의 한계와 본 연구의 분석시각을 서술하고 연구방법 및 자료를 소개할 것이다. 둘째, 한국노총 가족계획사업의 추진배경과 과정, 내용 그리고 여성간부의 역할을 알아본다. 셋째, 한국노총의 사업장 가족계획사업 내용과 관련해 여성조합원 교육과 가족계획신문 발행사업을 소개할 것이다. 넷째,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조건에 미친 이중적 결과에 대해 서술하고 마지막으로 본 논문의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본 논문의 의의와 한계 등을 서술할 것이다.

8) 남성가장에 의존하는 피부양자로서의 여성과 아동으로 구성되는 전통적 남성중심적 가족 형태를 의미한다(황정미, 2001:182).

9) 한국노총은 1975년 가족계획사업 참여의 저변을 확대하고 조합원의 참여의욕을 높이기 위해 계몽표어를 공개 모집하였다. 당선작 중에 “자식 많은 자랑 말고 바로 길러 자랑하자”(광산노조 이효진)가 있다(한국노총, 1977:57).

2. 기존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시각

1) 기존연구 검토

1960-70년대 산업화 시기 가족계획사업은 여성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던 대표적인 여성정책으로 많이 연구되어왔다(이명선, 1990; 장필화, 1990:6; 황정미, 2001:7; 신현옥, 2000).

1970년대 가족계획사업 관련 연구는 국가정책이나 인구학적 차원에서 진행되었다. 국가동원에 의한 인구억제 및 경제성장 수단으로서의 가족계획과 그 성공, 인구성장 억제를 위한 각종 통계자료 분석이나 가족계획사업의 실태 및 정책의 집행, 결과, 출산조절과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였다(이명선, 1990:116; 김홍주, 2002:53; 김명숙, 2004:116). 그러나 1970년대 이후 80년대에 한국에 여성학과 진보적인 여성운동이 도입되면서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들은 가족계획사업이 여성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 혹은 반여성적 성격에 주목하였다(이미경, 1989; 이명선, 1990; 김은실, 1991; 배은경, 2004)¹⁰⁾.

가족계획사업이 여성의 삶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한 연구들은 우선 가족계획사업이 여성의 이해가 아니라 국가와 가족의 이해관계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또한 가족계획사업이 국가와 경제발전을 위한 근대화 프로젝트 차원에서 시행됨으로써 나타난 관련 정책의 반여성적인 성격을 비판한다. 예컨대 비자율적인 피임 결정에서 여성들이 육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었으며(이미경, 1989), 여성은 정책대상 집단으로 혹은 일선의 정책전달자로 역할을 했을 뿐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못했다(이명선, 1990:131)는 것이다. 배은경(2004)은 가족계획사업이 출산조절 당사자의 자율성은커녕 신체적 안전조차 고려하지 않은 채 출산억제만을 목표로 시행되었다고 비판한다. 이 때문에 한국사회의 근대적 출산조절이 여성의 삶에 대한 기회와 선택권에 기여한 바는 대단히 제한적이라고 평가한다(배은경, 2004:214). 가족계획사업이 여성에게 미친 부정적 영향들과 관련된 위 논의들 외에 본 논문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가족계획사업과 여성들의 성역할 의식 간의 관계이다. 이와 관련해 이미 여러 연구에서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들의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을 강화해왔음을 지적한다(김은실, 1999; 신현옥, 2000; 배은경, 2004; 김명숙, 2004).

가족계획사업은 성별화된 산업화가 본격화된 1960-70년대에 국가의 핵심

10) 이들 연구는 가족계획사업의 부정적 측면만 논하지 않는다. 이명선(1990), 이미경(1989) 등은 가족계획사업이 여성에게 갖는 이중성을 지적한다.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김은실(1991)은 가족계획사업이 국가가 의도하는 근대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가장 바람직하게 통합된 가족모델을 사회에 정착 시키려는 노력이었다고 평가한다(김은실, 1991:154). 배은경(2004)도 가족계획사업은 여성의 생애를 ‘가족’ 속에 제한하는 전형적인 효과를 가졌다고 지적한다. ‘가족계획’이라는 담론은 누구나 행복하기 위해서는 결혼하고 출산하여 부모가 될 것을 계획해야 한다는 식으로 몰아감으로써 가정에 묶이지 않으려는 여성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럼으로써 여성을 일차적으로 아내이자 어머니로 간주하는 통념을 더욱 강화하였다는 것이다(배은경, 2004:214). 1960-70년대 정부는 성별분업에 기초하여 가족을 단위로 한 발전전략, 즉 가부장적 발전동원체제를 구사하면서 여성을 일차적으로는 가정영역의 내부 존재로 인식하였다(신현옥, 2000). 이런 배경에서 볼 때 가족계획사업은 한편으로는 조국 근대화란 미명 아래 추진된 경제발전을 위한 인구성장 억제/통제정책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기반으로 한 조국 근대화 사업에 적합한 가족 만들기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60-70년대 대표적인 여성정책으로서 시행된 가족계획사업이 여성의 인권회복이나 남녀평등의 목표를 추구하지 못했던 수단형 정책으로서 문제가 많음이 지적되는 배경이다(장필화, 1990:6; 이명선, 1990).

2) 기존 연구 한계와 본 연구의 분석 시각

본 연구는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들의 전통적인 성역할 의식을 강화시킴으로써 “여성의 삶에 대한 기회와 선택권에 기여한 바가 대단히 제한적”(배은경, 2004:214), 혹은 “여성의 인권회복이나 남녀평등의 목표를 추구하지 못했던”(장필화, 1990:6; 이명선, 1990) 문제를 지적했던 연구들과 같은 선상에서 1970년대 노동조합의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에 주목하고 있다. 1961년 근대국가 프로젝트의 하나로 시작된 가족계획사업이 여성에 미친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1970년대 전국단위 상급단체로서 유일했던 한국노총에서 노사정 공동사업으로 약 5년간 추진하였던 가족계획사업에 주목하지 않았다. 유엔인구기금(이하 UNFPA) 지원을 받아 1975년부터 1981년까지 한국노총의 주요 사업으로 진행된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들에게 준 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분석된 바가 없다.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을 다루는 연구는 일부 있다. 이들 연구는 대개 사업의 배경이나 사업내용, 실태, 가족계획에 관한 태도나 의식 조사, 그리고 가족계획사업의 성과나 평가 등을 주로 다룬다. 예컨대 산업근로자의 가족계획에 관

한 태도 조사(맹광호, 이달영, 김순태, 1973), 산업장 가족계획 실태나 사업을 소개하는 연구(맹광호, 1975; 이상헌, 1982; 대한가족계획협회, 1980),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을 진행한 노동조합 간부들의 가족계획에 관한 지식이나 태도를 조사한 연구(이양재, 1972), 산업장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산업보건관리요원의 태도조사(맹광호, 1977) 등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노조에서 전개한 가족계획사업 내용이나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의 주 대상은 기혼일반여성이었지만 노동조합 가족계획사업의 주요 대상은 미혼여성들이었다. 사업대상이 다른 만큼 사업내용에서도 차이가 예상된다. 예컨대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직접적으로는 피임기구 제공, 피임 방법이나 지식 제공, 실천 등에서부터 출산조절 욕구, 모자보건 개선 및 양육부담 완화 등을 내용으로 계몽하면서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가임기의 미혼 여성층은 가족계획을 실천해야 할 대상이자 실천이 가능한 층으로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계획사업은 성교육, 계몽운동의 성격을 가진다. 요컨대 기혼여성들과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목적이나 내용 등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나 그동안 미혼여성을 사업 대상으로 했던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은 주목받지 않았고 관련 연구도 찾아보기 어렵다.

위 문제의식 아래 본 논문은 1970년대 사업장 가족계획사업 집행기관으로서 한국노총이 사업장에서 전개한 가족계획사업을 지도계몽활동 차원에서 분석할 것이다. 이를 통해 노동조합의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의 의식에 미친 양면성을 확인할 것이다. 예컨대 노동조합 가족계획사업이 한편으로는 노동현장에 전통적인 성역할 담론을 확산시키면서 여성노동자의 보수적인 여성정체성을 강화시켰지만 가족계획사업 차원에서 전개한 노동조합의 교육이나 계몽활동에 여성노동자들을 참여시킴으로써 모성보호 등 권리의식을 향상시켰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및 연구자료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이다. 핵심적인 자료는 한국노총 사업보고서와 한국노총 가족계획관 신문이다. 사업보고서는 노동조합에서 매년 발간하는 대표적이고 공식적인 활동보고서이다. 가족계획사업 내용은 1973년부터 1981년까지 '부녀활동' 부분에서 소개되었다. 한국노총 가족계획관 신문은 1978년 12월 30일 창간호를 시작으로 1981년 9월까지 매월 2면씩 한국노총 기관지

의 간지 형태로 발간되었다. 이외 「한국노총 가족계획사업요원 훈련교재」, 「‘한국노총’지 독자여론조사보고서(1978.10.)」, 「‘한국노총’ 가족계획판 독자여론조사 보고서(1979.6.)」등을 참고하였다. 아울러 1960~70년대 한국노총 여성부서에 근무하면서 가족계획사업을 기획하고 현장에서 실제 집행했던 한국노총 여성 간부 3명과 1970년대 화학노조 S제약 지부장을 역임한 여성간부 1명의 면접내용도 활용하였다.

II. 한국노총의 가족계획사업과 여성간부 역할

1. 사업장 가족계획 추진 배경

가족계획사업은 1960~70년대 박정희 체제에서 경제개발과 함께 시작되고 지속된 핵심국가정책의 하나인데 한국노총에서 가족계획사업은 1975년에 본격화되었다. 이에 앞선 1973년 한국노총은 가족계획사업을 한국노총의 정규 사업으로 채택하였다. 당시 한국노총은 과거 임금인상 위주의 운동방향을 재평가하면서 노동복지, 물가안정 그리고 산업안전, 보건 등과 같은 실리를 추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가족계획사업도 채택하였다(한국노총, 1973R¹¹⁾: 157). 이는 한국노총이 인구문제와 노동자의 생활향상과 복지증진 문제를 결부시킨 것이다. 한국노총은 인구증가가 불완전 실업자를 증대시켜 치열한 취업경쟁을 야기하고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교섭력을 약화시키고 노동자의 부양가족수를 증가시켜 가정생활의 압박을 가져오게 된다고 인식하였다¹²⁾. 한국노총은 이에 국제노동기구(ILO)의 재정 후원으로 1973년에 3회에 걸쳐 인구문제와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한국노총, 1973R: 50).

여성간부 D는 한국노총 복지부녀국장으로서 한국노총에 가족계획사업을 도입하였는데(한국노총, 1977: 96) 한국노총이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을 시작하게 된 배경 하나로 빈번했던 산재사고를 들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산재사고

11) 1973R은 한국노총 1973년 사업보고이다. 이하 한국노총 각 년도 사업보고는 연도 뒤에 R로 표기하고 인용한 페이지를 명기하였다.

12) 조합원들도 이같은 인식을 동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1975년 한국노총이 가족계획사업 계몽표어를 공개 모집한 결과 당선작 5개 중에 “없는 살림 한탄 말고 먼저 할 일 가족계획”(철도노조 안성효), “한발 앞선 가족계획 생활안정 앞당긴다”(자동차노조 김경희)는 표어가 포함되었다(한국노총, 1977:57).

가 많이 났는데, 그 원인을 보니 가족관계가 영향을 많이 주었다. 아이들은 많고 한 방에서 같이 자면서 잠도 제대로 못자니까 피곤해서 졸다가 산재사고가 빈번하게 생겼다. 이에 당시 산재사고는 인구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가 되었고 사업장에서도 가족계획을 해야 한다는 캠페인이 필요했다고 당시 분위기를 전하고 있다(여성간부 D 구술, 2018.3.9.)¹³⁾.

1975년 한국노총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국가의 가족계획사업을 주관하는 조직이 되었다. ‘근로가족 복지사업’이란 이름으로 한국노총이 진행한 이 사업은 노사정이 UNFPA 지원을 받아 1975~1977년까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¹⁴⁾. 한국노총이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을 조직적으로 실천하게 된 것은 국가 차원에서 1960년대 출산율이 높았던 농촌을 중심으로 전개된 사업을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1960년대 경제개발을 위한 핵심 정부시책이었던 한국의 가족계획사업은 성공적이라 평가되었다(맹광호, 1972: 14; 맹광호·김순태·이달영, 1973: 3; 장경식, 1972: 114). 그러나 1970년대 후반 출산층 여성의 절대수 증가, 가족계획 실천율 저조, 그리고 남아선호 외에 모자보건사업의 난점 등으로 향후 정부의 인구증가율 목표는 달성되기 어렵다고 지적되었다(이양재, 1972: 57; 장경식, 1972: 116-118). 이에 가족계획사업의 대상 설정이나 추진방식 등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잇달았다(맹광호·김순태·이달영, 1973: 3; 이양재, 1972: 57; 홍승직, 1980: 34). 특히 1960년대는 경제개발과 산업화로 도시화가 진전되었고 사업장 수와 함께 노동자 수도 크게 증가하였다. 사업장 노동자 대부분은 연령적으로 가족계획사업의 주요 대상이었다(노동청, 1977). 사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가족계획사업은 이러한 배경에서 제안되었고 그 추진은 중요하며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식되었다(노동청, 1977; 맹광호·김순태·이달영, 1973: 3). 특히 가족계획실천 대상으로서 사업장은 매우 중요하며 조직화된 집단이고 연령구조상 젊은 층이라는 점에서 가족계획사업의 수행에 강점이 있었다(이양재, 1972; 맹광호, 1972, 맹광호·김순태·이달영, 1973: 3에서 재인용; 박래영, 1972; ILO, 1972; ILO/ECAFE, 1972). 맹광호(1972)는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의 모범 사례로 인도의 시범사업을 소개하면서 노동조

13) 산재사고의 원인이 다양한데 그 원인을 노동자 개인에게 두는 듯한 이러한 언급은 논란이 될 수 있다. 다만 당시 빈번했던 산업재해가 노동조합에서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할 때 언급되었음을 확인한다.

14) 이 사업은 정부와 노사공동으로 추진되며 그 예산은 유엔인구기금(UNFPA)과 정부 보조로 이루어진 총 19만8천불로 그중 한국노총은 8만5천5백불로 각종 사업을 벌이게 된다(한국노총 기관지, 1975.1.20.).

합 역할이 어느 단체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 한국노총의 가족계획사업 추진과정

한국노총의 가족계획사업은 근로가족 복지사업이란 명칭 아래 1975년부터 본격화된다. 이에 앞서 한국노총은 1972년 ILO 후원으로 '인구정책과 가족계획'을 주제로 가족계획 세미나를 개최하였는데, 한국노총과 산별조직에서 추천된 남녀간부 38명이 참가하였다. 당시 한 강좌에서는 자녀의 양육목표를 제안하면서 “신랑-경제, 신부-가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 강좌는 제1차 목표로 “우리의 자신과 자녀를 하나의 인간 즉 남성은 남자로, 여성은 여자로 되는 것”이라 강조하였다(한국노총, 1972: 90).

1975년 1월부터 노동청 주관하에 한국노총은 한국경영자협회와 공동으로 근로가족 복지사업을 시작하였다. 첫 사업으로 한국노총은 교육 전담요원 훈련을 28개월간 진행하였다. 17개 산별노조에서 1700명의 사업요원을 양성하고 그들이 산별노조에서 1인당 최소한 7명 정도의 자발적 참여자를 계몽토록 하는 요원훈련이었다. 전국순회교육으로서 대상은 전달교육과 계몽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원조합 남녀 중견간부들이다(한국노총, 1975R: 244). 교육 내용은 미혼여성을 위한 성교육을 비롯해 훈련 이수자들이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통찰하고 근로자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임금을 향상시키고 대인접촉을 통하여 복지향상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었다. 교육 후 계몽활동 전개를 위하여 “대인접근요령,” “집단지도방법”을 배치했고, 물 플레이, 계몽 포스터 그리기 외에 분임토의 등의 교육방법도 시도하였다(한국노총, 1975R: 244-245; 한국노총, 1977R: 31). 이러한 요원양성 교육은 총 23회에 걸쳐 1,357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산별노조 298명, 시·도협의회 543명, 지구협의회 516명의 간부 등이 참석했다(한국노총, 1977: 42-43).

당시 산별노조들은 가족계획사업 차원에서 진행된 교육에 적극 참여하였다. 1975년에 전매노조의 청주 제조창 지부교육은 수강 희망자가 많아 연 2회의 차출과정을 통해 능력 있고 전달교육을 잘할 수 있는 수강생을 선발하였다. 수강생 대부분이 중년 부녀자로서 인구가 가정경제 및 국가의 경제발전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크게 가졌다. 피임방법도 상세히 답습하였는데, 훈련이수자들은 사업요원으로서 조합원과 이웃사람들에게 가족계획사업을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경기도협의회 교육에서는 경인지역의 남녀 중견간부들이 참여하였는데, 부두노조(28명), 운수노조(9명), 섬유노조(7

명), 금속노조(5명)의 간부들이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사업장에서 각종 교육에 가족계획시간을 할애하여 계몽활동을 하였다(한국노총, 1977: 25). 1976년의 경우 크고 작은 면방, 잠사 등 섬유업종이 많은 천안지역의 지구협의회 교육에는 미혼층 여성들이 절반 이상 참여했다. 분회장급 이상의 남자간부들은 교육 후에도 사업장에 돌아가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여성의 경우는 사내 게시판을 이용하는 등 홍보사업에 관심이 더 컸다(한국노총, 1977: 25). 경상북도협의회 교육에서는 지부장급을 비롯한 영향력 있는 조합간부들이 교육을 이수하고 사업장에 돌아가 각종 교육에 가족계획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교육기간 중 분임토의에서는 자동차, 섬유, 관광 분야 여성조합원들이 당면문제와 해결책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여 근로 여성지도와 가족계획문제를 실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전라북도협의회 교육에서는 전매노조를 비롯한 여성조합원들이 계몽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점촌지구협의회에서는 가족계획사업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가난을 물려주지 말자는 등의 결의를 하였다(한국노총, 1977: 31-42). 이처럼 훈련된 요원은 각기 소속 사업장에 돌아가 일선 조합원을 계몽하고 피임을 권장하며 시술 희망자를 병원으로 인도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한국노총, 1977: 25).

계몽활동은 조합원 대다수가 미혼 근로여성인 섬유노조에서 어느 산별보다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외부강사 초빙, 노동교육 중 가족계획시간의 필수화, 사업장 홍보활동 등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1975~76년까지 섬유조합원 5,841명이 교육을 받았다. 체신노조나 전매노조에서도 많은 조합원들이 계몽활동에 참여하였다. 숫적으로는 적지만 남자조합원도 교육을 받았다¹⁵⁾.

3. 가족계획사업 추진과 여성간부 역할

1975년 한국노총은 부녀부에 특별실을 설치하고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였다. 한국노총이 1975년 가족계획사업을 본격화하면서 시작한 첫 사업은 한국노총 교육전담요원 훈련이었다. 그해 2월에 실시한 이 교육은 17개 산별노조 대표자(부녀부장)들을 대상으로 한 첫 훈련인 동시에 향후 노동조합에서 훈련을 전담할 교관을 양성하는 중요한 교육이었다. 이들에게는 향후 17개 산별노조에서 차출되는 사업장 내 요원 1,700명을 위해 교육을 전담하고 지도, 감독하는 역할이 주어졌다(노동청, 1975: 9).

15) 구체적인 현황은 한국노총, 1977: 126-157 참조.

당시 가족계획사업을 지도, 계몽했던 전담 지도요원들은 1972년에 첫 교육을 받았던 여성간부들로서 소속은 한국노총 본부를 비롯해 전매, 철도, 체신, 금속, 섬유, 출판, 외기, 해원 등 8개 조직이다. 한국노총은 1972년 ILO 후원으로 '인구정책과 가족계획'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이때 남녀간부 38명이 참가하였다. 이들 중 부녀업무와 관련된 간부가 22명(부녀부/차장, 부녀위원)으로 57.9%에 달한다(한국노총, 1972: 28). 이날 수강생들은 노조에 대한 권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수강생들은 결의안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마땅히 인구정책에 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보다 잘 살아보자는 10월 유신이 추진되고 있는 이때에 노동조합도 정부와 민간전문기구와 발맞추어 범국민운동으로 가족계획사업을 벌여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며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힘쓰도록 힘써야겠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가족계획사업은 조합활동의 하나로 채택, 노동자의 장기 복지향상 운동과 직결시킬 필요가 있음을 재강조한다”고 천명했다(한국노총, 1973R: 51-52).

이들 여성간부들은 사업요원 가족계획, 가족계획 상담요령, 대인접근과 계몽방법 외에 각종 교양교육, 집단지도방법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교육과 계몽활동을 했다. 예컨대 체신노조 간부는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시외전화국 조합원교육에 가족계획시간을 할애하여 '인구문제와 경제발전'에 대한 강의를 담당하였다. 또한 각종 교양강좌시간에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성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철도에서는 부녀간부 교육과 안보교육 기간 중에 가족계획시간을 할애하여 계몽영화를 상영하였다.

가족계획 사업요원들의 계몽활동은 동기 조성자 확보와 피임권장이다. 가족계획사업 요원훈련이 일반교육과 다른 점은 훈련 이수 후 반드시 소속 사업장에 돌아가 전달교육과 계몽사업을 전개해야 하고 피임수술 희망자를 병원에 연결시켜 주는 일이다. 가족계획 사업요원 중에는 계몽실적이나 행정능력이 탁월하여 계속해서 사업장의 가족계획 홍보사업을 전개한 사람도 있었고 단체협약 체결 시 가족계획 시술 후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하는 데 앞장 선 사람도 있었다. 요원들이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을 실천할 때 함께 한 공동협력자(동기 조성자) 현황은 <표 1>과 같다. 동기 조성자 확보는 개인 접촉을 통하여 상담 기록부를 작성함으로써 확정된 것이다(한국노총, 1977:104).

〈표 1〉 가족계획 사업요원 훈련현황 및 계몽실적(연도별)

(단위: 명, %, 건)

기간	훈련이수자 (사업요원수)		상담기록 등록자		권장피임건수		동기조성자	
1975.4.~12.	668	49.2	3735	47.1	4105	42.1	6818	45.6
1976.1.~12.	589	43.4	3362	42.4	4302	44.1	6464	43.3
1977.1.~2.	100	7.4	830	10.5	1351	13.8	1660	11.1
전체	1357	100.0	7927	100.0	9758	100.0	14942	100.0

자료: 한국노총(1977:104~110 표13)을 바탕으로 필자가 재구성함.

Ⅲ. 한국노총 사업장 가족계획사업 분석

1. 여성조합원 교육

1975년 한국노총에서 본격화된 사업장 가족계획사업과 관련, 여성조합원의 교육내용은 혼전지도, 순결교육, 그리고 성교육 등이었다. 성교육이 별도로 없었고 말조차도 꺼내기 힘들었던 당시 성교육 등은 여성조합원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았다. ‘미혼 근로여성들을 위한 가족계획과 성교육’에 관한 한일합섬 수원공장 사례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당시 여성조합원들이 얼마나 호기심을 갖고 성교육에 임했는지 당시 대한가족계획협회 경기도지부 전임강사의 글을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글에서는 1978년 1월부터 기숙사 내 교양실에서 매주 토요일 오전 두 시간씩 진행됐던 교양강좌 경험을 소개하고 있다¹⁶⁾(한국노총 가족계획관, 1979.4.30.).

...회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른 어떤 교육보다도 이 토요일 강좌에 사생들이 극성스럽게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결혼을 눈앞에 둔 사생들은 혼전의 성교육이나 순결에 대해 지나칠 만큼 깊은 관심을 가졌고 특히 사랑과 성에 대한 강의는 그들이 확고한 가치관과 바람직한 인생관을 갖게 했고 결혼 때까지는 이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다가 행복한 결혼을 하겠다는 사생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

16) 당시 교육내용은 한국인의 남아선호사상, 미혼모 문제, 건전한 이성교제, 혼전 성교육, 배우자 선택의 지혜, 순결은 지켜야만 하는 것인가, 결혼은 어떻게, 근로여성의 인생론, 행복론, 성과 정신위생, 행복한 가정의 구상, 사랑받는 아내의 길, 영양 등이다(한국노총 가족계획관, 1979.4.30.).

당시 한국노총의 가족계획 관련 교육은 여성간부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실시하였다. S제약 지부장을 역임한 여성간부 C는 가족계획과 성교육이 많았다면서 화학노조의 여성부장이 가족계획 관련 교육을 하러 다녔다고 기억하고 있다(여성간부 C 구술, 2017.4.25.). 여성간부 A는 성교육 강사로 전국에 출장을 다녔고 근무시간에도 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한다. 당시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교육을 시켰다(여성간부 A 구술, 2016. 8.30.). 그러나 여성간부 B는 남자들은 성교육에 오라 하면 “잘 안오고 또 웃고… 창피스럽게 거기 가서 뭐를 하나”는 반응도 있었지만, “남자, 여자를 다 한꺼번에 놓고” 강의한 적도 있었다고 전한다(여성간부 B 구술, 2017.11.13.).

여성간부 D는 여성조합원에게 가족계획사업 교육을 할 때 ‘잘 사는 방법이 뭐냐’고 물으며 먹고 사는 것에 비교해 설명했다. 여성간부 D에 따르면, 여자들은 가족계획사업을 처음에는 잘 이해하지 못했다. 이에 남편의 수입한계 내에서 잘 사는 길에 대해 열 사람보다 다섯 사람이 살면 비용이 준다, 엔겔계수가 준다, 신문 하나는 볼 수 있다, 의복을 어떻게 입을 수 있다는 등 생활과 관련시켜 이야기하였다. 학력 수준이 낮아 먹고 사는 것에 비교해야 빨리 알아들었고 그래서 생계비에 비교해서 가족계획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여성간부 D 구술, 2018.3.9.). 여성간부 D는 당시 남자들은 “자기가 벌어 먹어야 하니까” 가족계획에 훨씬 더 협조를 잘 했다고도 전한다. 당시 광산 사업장을 많이 다녔는데, 산재도 많고 일도 어려워 가족계획의 필요성이 더 있었다고 하면서 광산노동자들이 협조를 잘 해주었다고 기억한다. 가장으로서 처자식을 벌어 먹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이러한 경제적 접근은 남성들에게도 일정하게 효과가 있었다¹⁷⁾.

한국노총에서 1976년 여성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가족계획사업 교육은 1,597명이 참여하였다. 한국노총은 사업장 내 가족계획사업의 집단계몽 효과를 도모하기 위하여 당초 1,700명의 요원양성교육을 일부 변경하여 1,400명만 훈련하고 300명 예산 범위 내에서 1,500명에 대한 교육계획을 세웠다. 실제 교육에 대한 호응도가 좋고 수요가 많아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97명이 교육을 더 받았다. 교육대상은 대단위 사업장의 가임여성 특히 미혼 여성노동자들이었다. 이 교육의 취지는 1) 여성노동자에게 가족계획에 관한 제반 지식을 보급함으로써 2) 미혼 근로여성에게 올바른 가족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3) 혼전지도에 만전을 기하며 4)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비롯한 근로여성의

17) 광산노조는 지역순회교육 중 임원과 대의원을 대상으로 ‘인구문제와 가족계획’ 교육을 포함시켰다. 광산노조에서 1976년 상반기 권장 피임건수는 798건, 1976년 하반기 권장피임건수는 1,826건이다(한국노총, 1977: 126-157).

지위를 향상시키는 데 있었다. 교육은 한국노총 강당에서 1일 4시간씩 3일간 계속 되었는데 여성조합원들의 작업시간이 끝난 후 주야를 불문하고 진행되었다. 다만 섬유노조 방림방적 지부 교육은 사업장에서 이루어졌다. 야간작업을 마친 여성조합원들이 다시 유니폼을 바꿔입고 노총에 와서 교육을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함이었다. 당초 노총은 250명을 교육대상자로 예정했으나 방림방적 지부에서 50명에 대한 예산을 추가부담하면서 300명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여성조합원의 교육용 강의제목은 생식생리, 혼전지도, 인구문제와 식량자원 외에 피임법, 가족계획 홍보사업, 그리고 가족계획 필요성, 영화(노동자의 복지 안내) 등이다(한국노총, 1977: 46-47). 1976년 6월부터 1977년 3월까지 노총 근로가족복지사업의 여성조합원 교육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노총 근로가족복지사업 여성조합원 교육 현황

일시	훈련이수자(여성 조합원)
1976.6.21-23	콘트롤데이타(51명), 새한전자(62명), 민성전자(129명), 국제금속(10명), 정화금속(10명) 등 금속노조 영등포지역지부 산하 262명 참석
1976.9.1-3	섬유노조 방림방적 지부 300명 참석
1976.1.24-26	금속노조 웨어차일드지부, 전자사업장 등 281명 참석
1976.11.29-12.1	서울좌석버스(63명), 관광버스(7명), 서울동부좌석버스(67명), 서울버스(113명) 등 자동차노조 250명 참석
1977.3.16-18	한독산업(14명), 해태제과(15명), 모나미/대동화학/진일고무/한국파일롯트(각 10명씩), 왕자문구, 삼성제약 등 44개 화학노조 사업장에서 194명 참석
1977.3.24-26	원풍산업, 동광모방, 의류지부 등 3개 지부 등 섬유노조 121명, 자동차노조 111명, 시그네틱스지부 등 금속노조 55명, 화학노조 12명 등 306명 참석

자료: 한국노총, 1977:48-52 참조.

여성조합원들이 받았던 교육 중 ‘혼전지도’ 강의는 성교육이란 제목으로 많이 실시되었다. 「한국노총 가족계획사업 요원 훈련교재」에 수록된 ‘혼전지도’ 강의안은 ‘혼전지도의 의미, 결혼 개념, 좋은 배우자, 약혼기간 중의 마음가짐과 성문제’ 외에 ‘혼전성교의 위험성이나 이상적인 결혼연령, 순결의 의미, 가족계획 등’을 담고 있다. 이 혼전지도 교육이 특별히 필요한 곳으로는 정상고등교육을 받지 않은 혼전기 연령층이 많이 일하고 있는 공장이나 사업장 등이 지목되었다(한국노총, 1975: 62).

가족계획사업이 본격화된 1976년에는 보다 많은 사업장에서 홍보사업이 행해졌는데, 체신, 금속, 섬유노조 등에서 계몽활동을 적극 추진했다. 상영된

계몽영화는 16mm 30분용으로 ① 탐스러운 열매를 ② 딸이 더 좋아 ③ 사람, 사람, 사람 ④ 생명의 신비와 현명한 선택 등이다. 외화로는 아시아·아메리카 자유노동기구(AAFLI)에서 대여해온 피임법과 총 천연색 필름으로 피임방법의 실제와 상담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이 영화는 10대 미혼 근로여성에게는 자극적이었지만 호평 속에 상영되었다(한국노총, 1977: 54-55).

한국노총은 30분용 슬라이드 “노동자의 복지안내”를 만들었는데, 인구문제가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피임방법, 홍보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일반 조합원들에게 배부되었던 계몽유인물로는 한국노총이 제작한 팜플렛 “근로가족복지안내,” 대한가족협회가 대량으로 기증한 각종 피임방법 등이 있다. 가족계획 사업은 미혼남녀들을 위한 성교육에 치중하여 홍보책자나 비디오테이프를 통한 시청각교육으로 근로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생활관을 가질 수 있도록 순결교육에도 치중하여 왔다(한국노총 가족계획관, 1978.12.30.). 1976년 이후 사업장 내 홍보사업으로 실시된 계몽영화 상영 및 유인물 배부 현황은 <표 3>과 같다. 금속, 체신, 화학, 섬유, 자동차, 전매, 출판 등 여성 다수 산별노조의 205개 사업장의 23,393명을 대상으로 계몽활동이 진행되었다(한국노총, 1977: 55).

<표 3> 1976년 이후 사업장 내 계몽영화 상영 및 유인물 배부 현황

연도	월간 순회 사업장 수(참석자 숫자)
1976년 3~12월	금속노조 웨어차일드 외 13개(4,600명), 체신노조 동대문 전화국 외 18개(2,306명), 화학노조 풍한발효 외 18개(2,950명), 섬유노조 세진레이온 외 9개(1,530명), 섬유노조 반도상사 외 19개(2,750명), 자동차노조 경기도 지부 외 9개(830명), 금속노조 기아산업 외 13개(1,285명), 전매노조 서강대교육 외 13개(900명), 출판노조 국정교과서 외 9개(815명), 자동차노조 외 13개(927명)
1977년 1~4월	체신노조 외 12개(1,065명), 금속노조 기아산업 외 14개(1,135명), 섬유노조 남영나이론 외 16개(1,110명), 화학노조 한독산업 외 15개(1,190명)
전체	205개 사업장 (23,393명)

자료: 한국노총, 1977: 55-56 참조.

한국노총에서 가족계획 교육용으로 만든 슬라이드나 영화 등은 현장에서 호응이 좋았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저희 지부에서는 올봄에 ‘내일을 위한 설계,’ ‘딸이 더 좋아’라는 가족계획 슬라이드를 돌렸어요. 그후 조합원들의 행동이나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졌어요.”, “성교육에는 유명한 교수 강연보다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슬라이드 상영이 단연 효과가 크리라 생각해요.”(한국노총 가족계획관, 1979. 11. 30.) 등의 반응에서 추론할 수 있다.

금속노조의 교육사례를 보면 당시 배포된 시청각 교재가 어떻게 사용되었는

지 알 수 있다. 금속노조 여성간부는 한국노총에서 배포한 ‘행복의 길,’ ‘딸이 더 좋아,’ ‘지구는 만원이다’ 같은 성교육 필름을 사업장에 다니며 돌려주고 있다고 전한다(한국노총 가족계획판, 1979.11.30.). 금속노조 페어차일드 지부는 식당에서 전 조합원 3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명의 신비,’ ‘현명한 선택’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하였다. 교육을 담당했던 금속노조 부녀부장은 이러한 시청각 교육이 효과적이라 평가하였다. 부녀부장은 ‘생산직에 근무하느라 피곤해하는 조합원에게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시키는 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느꼈다’면서 78년도 하반기의 가족계획사업은 ‘좀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한국노총 복지부녀국에 비치되어 있는 교육용 시청각 기재를 활용하였다’고 보고하였다(한국노총 가족계획판, 1979. 2. 28.).

화학노조에서도 1979년 부녀부장 세미나 프로그램에 미혼여성을 위한 순결교육 과정을 편성하였다. 이때 한국노총 복지부녀국에 비치되어 있는 영화 ‘행복의 길’을 상영하였다. 이날 전국에서 참석한 60명의 부녀부장들은 올바른 윤리관과 도덕관을 갖도록 도움을 주는 시청각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이들은 앞으로 전 조합원들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였다(한국노총 가족계획판, 1979.4.30.).

2. 한국노총 가족계획신문 발행 사업

한국노총은 1975년부터 가족계획사업을 범조직적으로 벌여왔는데, 이 사업이 근로자의 실질적인 생활향상 내지 고용안정을 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란 판단에서였다. 한국노총은 이 인구문제사업이 노동자들이 부양인구를 조절함으로써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노동생산성을 올리며 나아가서 고용을 안정시키고 실질임금을 향상시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이에 가족계획사업을 조합원들에게 알리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면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전개해 나가기 위해 가족계획판을 제작하고 배포하였다. 이 사업은 1978년 7월부터 1981년 9월까지 UNFPA가 후원하고 대한가족계획협회가 보조하였다(한국노총 가족계획판, 1979.4.30.).

가족계획신문 사업은 청소년 노동자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지식과 장래의 삶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신문은 매월 1회씩 한국노총 기관지의 간지 형태로 발행하였다. 매월 30일자로 월 3만 부씩 발간된 가족계획판 신문은 기존에 한국노총 기관지가 배부되는 산별, 지부, 그리고 시도 지역협의회에 1만5천 부를 배부하고 나머지 부수는 청소년 근로자가 많은 산별노조 즉 섬유, 화학, 금속,

자동차에 추가로 배부하였다. 특히 신문은 현장에 근무하는 청소년 근로자들에게 호응을 얻어 이들이 필요로 하는 내용을 다루었다. 이중에서 ‘청소년근로자에게 보내는 글’과 ‘삼매경,’ ‘여성근로자의 권리’의 칼럼란에서는 사회인사들 중에서 노동자에게 관심이 많은 필진을 참여시켜 신문의 교육적인 성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됐다(한국노총, 1980R: 266).

1978년 7월부터 준비해 1981년 9월까지 39개월 동안 발간된 한국노총 가족계획판은 청소년노동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였고 여성노동자들이 많은 산별노조에 더 많이 배포되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가족계획신문의 수요가 많았지만, 신문이 충분히 배포되지는 않았다. “우리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성교육 정보는 가족계획신문이 유일해요. 그런데 신문의 부수가 너무 적어요. 우리 사업장에서는 신문이 오면 게시판에 붙여 모든 조합원이 볼 수 있게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진로주조 여성간부).” “신문을 점심시간이나 휴식시간에 볼 수 있게 많이 보내주었으면 해요(금강전자 여성간부)” 등을 통해 확인된다(한국노총 가족계획판, 1979. 11. 30.). 1979년 가족계획판 여론조사에서도 건의사항으로 ‘보급부수를 늘려서 더 많은 근로자들이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의견이 나왔다(한국노총, 1979: 86).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한국노총 가족계획판 신문은 이를 접한 여성조합원들의 의식이나 가치관 등에 적잖이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언급된 ‘청소년에게 보내는 글’은 학계 등 전문가와 유명 인사들의 기고문이었다. 이중 여성조합원의 성별의식에 영향을 미쳤을 일부 기사들은 성교육 관련, 여성자질과 교양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1) 성교육 관련

1970년대에는 어린 연소 여성노동자들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성에 관한 이야기가 금기시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성에 관한 정보는 접하기 어려웠다. 이에 사업장 성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었다. 당시 한국노총 가족계획판 기사 중에서는 임신 7개월인 16세 여공이 임신 사실을 몰랐던 사례를 소개하며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게 지도하는 일이 어른의 사명임을 말하고 있다(한국노총 가족계획판, 1979.5.30.). 한국노총 여성간부들이 참여한 한 좌담회에서는 “생리가 무엇인지, 월경주기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조합원이 많다. 설사 임신을 했다 해도 어떻게 되는 건지, 어떤 처신을 해야 할지 몰라 찢쩍대는 딱한 경우도 있었다”¹⁸⁾는 사례도 언급됐다. 이에 사업장 성교육의 필요성이

18) 한국노총 가족계획판 1979.11.30.자 4면 기사「좌담회:사업장 성교육 무엇이 문제인가」중 금강전자 노조 여성간부 발언이다. 이 좌담회는 1979년 11월 27일 여성노동자 성

신문에서 주장되었다(한국노총 가족계획관, 1979.6.30.).

한국노총 가족계획관 신문은 현장 노동자들의 성교육에 도움이 되었다. 고정기사로 실렸던 ‘10대 성교육’ 기사는 실제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거나 성교육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한국노총 가족계획관이라는 말에서 알 수 있다(한국노총 가족계획관, 1979.11. 30.). 10대의 성교육 기사는 1979년 「한국노총 가족계획관 독자여론조사보고서」에서도 여성 응답자의 23.0%, 남성 응답자의 21.2%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응답하였다. 이외 여성의 경우는 17.0%가 사랑과 이성교제 기사가 특히 기억에 남는다고 답했다¹⁹⁾. 이런 결과를 토대로 여론 조사보고서는 10대 성교육 난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한국노총, 1979: 98).

그러나 성교육에서는 여성들에게 순결이데올로기를 주입하고 있다. 당시 성교육의 강의를 ‘혼전지도’에서는 순결의 의미나 혼전 성교의 위험성을 담고 있다. 여기서는 순결을 상실할 경우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남녀 공히 배우자 선택 시 순결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순결을 소홀히 했을 때 사생아 등의 사회문제가 우려된다(한국노총, 1975: 65)고 교육하였다. 순결의 의미와 혼전성교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는데 혼전 성관계가 육체적인 임신이나 남자의 변심 등으로 여성에게 특히 부담임을 지적하였다.

남녀가 결혼 이전에 육체관계를 같이하면 남자로서 하여금 결혼에 대한 의욕을 상실케 하고 약혼에 대한 관심조차 없어지게 하여 그 결과 결혼을 주저하고 다른 여성에게 관심을 가지는 일도 적지 않다. 육체적인 임신, 정신적으로는 남자의 변심, 이것이 혼전 성관계의 두 가지 위험인데 이 두 가지 모두 여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것이다(한국노총, 1975: 64).

남성과 여성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이중적인 성 규범이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강의되었다. 이러한 이중적인 성규범 문제는 한국노총 가족계획관의 기고문 “청소년 근로자에게 보내는 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미혼여성이 택할 길”에서는 일시적인 욕정을 억누르지 못해서 여성이 겪어야 할 문제, 특히 미혼모가 될 경우 사회에서 배척을 받는 등 힘들게 살아가야 함을 거론한다. 혼전에 여성은 인내와 이성으로 성욕을 억제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한국노총 가족계획관, 1979.9.30.). “행복을 창조하는 슬기를 갖자”는 글에서도

실태와 효과적인 성교육 방법 등을 찾기 위해 열렸다.

19) 전체 조사대상 2460명(남성 489명, 여성 1971명) 중 응답자는 1509명(남성 333명, 여성 1176명)이다. 본문에 제시된 수치는 무응답을 제외한 것이다. 선택 항목은 18개인데 이중 10대의 성교육, 사랑과 이성교제, 에티켓 선생에 높게 응답했다(한국노총, 1979: 88).

혼전임신 문제가 지적된다. 남성들이 성적으로 자유롭게 행동하면서도 여성에게 순결을 요구하는 모순적인 사고를 대부분 갖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여성들이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당시 한일합섬 수원공장 기숙사 사감의 글(‘사랑의 교육과 여권운동’)은 당시 미혼 여성노동자들의 연애사나 결혼관 일부를 보여준다. 이 글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순결은 꼭 지켜야 한다거나 가족의 가치를 강조하고 이들이 “앞날의 어머니가 되어야 할 소중한 존재들”이라 칭하고 있다. 기고문 “가족계획의 참뜻”에서는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거론하면서 남자가 남자로서의 구실과 역할을 외면하거나 여자가 여자답지 못하다는 것을 시대에 뒤떨어진양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조언하고 있다(한국노총 가족계획판, 1981.3.30.).

2) 여성자질과 교양 관련

당시 연재되었던 ‘청소년에게 보내는 글’에서는 여성들의 자질이나 교양 함양을 강조하고 있다. 가정이 안정되어야 사회가 번영하고 행복한 가정은 모성 건강으로 가능하다는 주장(한국노총 가족계획판, 1979. 4. 30.) 아래 여성들이 무질서하고 방종해서는 안되며 평생교육의 자세로 임하라 조언하고 있다(한국노총 가족계획판, 1978.12.30.).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란 글에서는 결혼 후 자녀양육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아이의 정서적 안정과 인성발달을 이유로 여성들에게 모유를 수유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문제는 모유수유를 하지 않을 경우 아이의 인성발달에 크게 문제가 생긴다는 ‘위협’에 있다. 결국 여성은 결혼 후 자녀양육을 위해 가정에 있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어린 시기 인성발달에 미치는 부모의 영향이 거의 절대적이라 하면서도 여성의 자녀양육만을 언급하고 있다(한국노총 가족계획판 1980.7.30.). 기고문 “뜻있는 곳에 길이 있음”은 마산수출공단을 참관하며 본 여성노동자 이야기이다. 필자는 여성노동자들의 취업동기를 어려운 가정형편, 남자형제의 학비 마련, 부모 치료비나 생활비 보조, 결혼자금 마련 등으로 보면서 어린 나이에 가족들을 위해 희생하고 있음에 자부심을 가지라고 말한다. 진학기회를 놓쳤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혼자서라도 독서를 통해 교양을 쌓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주간지보다는 양서를 읽으라 권하고 있다(한국노총 가족계획판 1980.10.30.).

당시 가족계획신문은 성교육 정보를 제공해준 공식매체였다. 이를 통한 가족계획 계몽사업은 남성과 여성에게 적용되는 이중적 성윤리에 기반해 이루어졌다. 성에 대한 지식 등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대단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공식적으로’ 여성노동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했던 노동조합의 신문발간 사업은 전통적인 성별규범의 내면화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추론할 수 있다.

IV.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 의식에 미친 이중적 결과

가족계획정책 혹은 사업이 여성의 삶에 미치는 상반된 영향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1970년대 노동조합의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이중적이라 분석하고 있다. 앞서 살펴본 바 가족계획사업은 당시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이나 ‘생애노동의식’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반면 가족계획사업은 여성노동자의 권리의식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있었다. 예컨대 1970년대 유교적인 성별분업론에 기반한 노동조합활동은 당시 심각했던 성별 임금격차 문제를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 그러나 “여성의 건강문제는 이 나라를 이어나갈 어머니로서 성장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내포된 중요한 문제”(금속노조, 1978R:390)라는 인식 속에서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문제를 대내외적으로 공론화시켰으며 성과를 이루어냈다(박현미, 2019)는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는 성장제일주의를 주창한 국가주도로 성별화된 산업화가 적극 추진되면서 사회적으로 전통적인 성역할체제가 강고해지던 시기였다. 당시 근대화 프로젝트 차원에서 국가의 부녀계몽운동은 전통적인 성역할 담론에 기반해 전방위적으로 추진되었다. 당시 여성노동자들은 ‘보조노동력,’ ‘임시노동력’으로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등장했다. 여성노동자들은 제2세 출산자, 양육자, 미래의 모성으로도 호명되었다. 1970년대 노동조합의 부녀계몽활동이나 교육 등 일상활동도 전통적인 성역할분업 담론 속에서 이루어졌다. 이에 한국노총이나 산별노조에서는 여성노동자의 모성보호 문제를 전통적인 성별분업관을 토대로 적극적으로 공론화하면서 여성의 노동조건을 개선시켜왔다.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계보조자’라는 전통적인 성역할의식이 사회적으로 팽배했고 노조에서도 이를 바탕으로 지도계몽 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여성노동력은 결혼하면 집으로 돌아갈 임시 혹은 단순보조 노동력으로 간주하면서 여성을 노동자라기보다는 장래의 모성, 주부, 그리고 어머니 등으로 규정짓고 여성활동을 전개했다. 이로써 다수 여성노동자들은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현모양처, 가정 속 존재로서의 주부, 그리고 아내와 어머니, 2세 국

민 출산 및 양육 책임자로서 교육받았고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은 물론 생애노동의식을 갖기 어려웠다²⁰⁾.

이러한 부녀지도계몽 활동의 기조는 당시 한국노총 조직들과 소속 남녀 조합원들의 가부장적인 성별규범 의식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이에 남성 간부들이나 남성 조합원들은 남성의 임금을 더 많게 하는 성차별적인 교섭을 지속해왔다. 섬유노조에서는 “가족 수가 많은 남자의 경우 여자보다는 좀 많은 임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생계비 면에서 보았을 때에도 다소 이해는 간다”(섬유노조, 1975:131)는 입장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여성노동자들은 여성을 공공연하게 차별하는 임금교섭에 대한 문제제기를 오랫동안 드러내지 않았다. 여성노동자들이 ‘특별보호대상’임을 계속 상기시키는 활동 속에서 남성노동자들과의 동등한 임금이나 대우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수십 년간 한국노총과 산별조직에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시켜온 조직적 차원에서의 여성노동자 권익향상 활동은 여성들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남성과 평등한 노동조건을 확보하려는 의식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예컨대 1970년대에 노조가 전개한 성차별적 임금정책이나 전략은 남녀분리 및 차별 임금의 요구와 타결, 각종 수당의 차별, 남성 중심의 임금과 인사관리제도의 개선, 기존 성별 임금격차의 유지 경향 등이었다²¹⁾. 그러나 당시 이들 임금차별 정책이나 기조에 대한 여성노동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나 저항은 한국노총 내부에서는 물론 1970년대 여성노동운동을 주도했던 여성사업장 대다수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반면 한국노총 조직에서 1960년대부터 있었던 모성보호 관련 문제제기와 개선활동은 여성노동자를 위한 대표적인 활동으로 1970년대에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되었고 일정하게 성과를 획득했다²²⁾. 당시 노동조합 여성활동의 중심이 모성보호에 대한 문제제기와 관련활동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활동 그리고 여성노동자의 필요성 등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사문화되었다고는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여성 특별보호조항이 있었고, 노동조합은 이를 근거로 1960년대 초부터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했고 지속적으로 공론화

20) 성별분업담론, 유교적 가부장제 관념이 1970년대 여성노동자의 노동자의식이나 생애노동의식을 저해, 방해했다는 연구들(강남식, 2004:316-317; 김현미, 2000; 장미경, 2004)이 있다. 한국노총이 1977년 제조업 여성노동자를 조사한 결과도 이를 보여준다. 조사대상 여성노동자 18,675명(조합원 17,710명, 비조합원 965명) 중 미혼 여성노동자가 95.1%였다. 결혼 후 계속취업 의사 여부에 82.2%가 그만둘 생각이라 답했다(한국노총, 1978R:281, 282, 288).

21) 관련 내용은 박현미(2019:157-204) 참조.

22) 관련 내용은 박현미(2019:205-232) 참조.

시켜왔다. 한국노총 부녀부가 산별노조와 함께 1965년부터 매년 한 달 내외로 진행한 '부녀 및 연소노동자 보호 강조기간'의 행사들은 산업현장에서 여성 특별보호조항의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하고 전 조직 차원에서 여성의제를 공론화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산별노조에 따라 노동조합 내 여성 구성원이 40% 내외였고 섬유노조의 여성조합원은 80%가 넘었다²³⁾.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모성보호조항을 확보하고 지키게 하려는 지도계몽 활동이 이어져왔고 여성노동자들의 권리의식도 향상시켰다. 또한 여성노동자들의 생리적인 필요성, 저임금 보충 등의 현실적인 이유도 모성보호조치의 개선에 힘이 되었다. 특히 노동조합에서 모성보호를 강조하고 관련조치를 개선하라는 요구는 체위향상, 모자보건, 그리고 2세 국민교육 등을 명분으로 국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정당화될 수 있었다.

그 결과 한국노총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은 여성조합원들의 권리의식을 제고하는 기회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한국노총이 UNFPA에서 지원받아 수행했던 가족계획사업은 여성부서가 담당하였는데 이때 여성부서가 적극 결합하였다. 당시 상황과 관련해 한국노총 여성간부 B는 제목은 성교육이라 써놓고 실제 여성의식이나 여성문제를 교육했다고 전한다. 예산이 없었던 여성부서에서 이 사업을 기회로 여성들을 노동조합의 교육이나 각종 활동에 참여시키면서 여성운동을 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예컨대 여성간부 B는 인구를 조절하기 위해서 사전피임 교육을 해야 된다, 모성을 해치는 일이 있으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등의 교육은 임신과 관련된 여성들의 의식도 향상시켰다²⁴⁾고 평가했다. 성교육이란 말도 없었던 당시, 혼전 성교육, 성폭력 등을 교육한 것은 '획기적인 일'이라 말한 여성간부 B는 가족계획사업 교육이 "성이나 임신이나 하는 문제를 굉장히 터부시하던 시절에 숨통을 틔울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 거는 확실하"다고 전하였다(여성간부 B 구술, 2017. 11.13.).

가족계획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한국노총 가족계획판 발간사업도 한편으로는 여성노동자 의식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관련 교육이 미혼 여성의 순결교육이나 혼전지도 등의 성교육으로 많이 진행되었지만 한국노총 가족계획판에는 성교육 외에 여성노동자 권리를 일깨우는 내용들도 많이 담겨 있었다. 한국노총 가족계획사업이 미혼여성을 중점 대상으로 삼았던 만큼 신문은 여자·연소근로자 법적 보호 조항이나 여성근로자 권리 등을 연재하였고 여성노동자의 법적 권리를 자세히 소개하였다. 생리휴가와 임금, 생리휴가권

23) 관련 내용은 박현미(2019:10)의 <표1-3> 참조.

24) "상당히 의식이 개발된 건 사실이야. 얘기는, 내 배는 내 거니까 내 맘대로.(웃음) 넣을 수 있다." (여성간부 B 구술, 2017. 11.13.).

확보, 그리고 산전산후휴가 확보, 모성보호 확대 등 여성보호 조항 외에도 할증임금,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차별 임금시정을 위한 권리, 고용보장 등의 내용을 시리즈로 게재하였다. 여성노동의 실태와 문제점 등을 알 수 있는 내용들도 함께 실렸다. 이외 노동일기라는 조합원 참여란을 통해서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경험을 알려주거나 어려움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는 노동자들이 있음을 소개하였다. 1970년대 한국노총의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의 정체성에 미친 이러한 상반된 효과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V. 결론

본 논문은 1970년대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사업장의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의 의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노조조직물이나 노동조합 내 여성조합원 비율이 유례없이 높았던 1970년대 심각했던 성별임금 격차는 전혀 해소하지 못한 반면에 모성보호제도들은 상대적으로 진전을 시켜낸 현실을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1975년부터 1981년까지 노동조합에서 시행한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 의식에 미친 영향이 이중적임을 확인하였다. 예컨대 노동조합에서 결혼적령기 여성노동자들을 주된 대상으로 한 가족계획사업들은 여성노동자들에게 전통적인 성별분업관과 유교적인 성별규범을 내면화시키는 한편 그들의 생애노동의식의 형성도 저해시켜왔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당시 여성노동자들이 유례없이 노조에 많이 있었지만 공공연한 성차별적 임금교섭이나 정책, 성별 임금격차를 문제시하며 개선하지 못했던 상황을 이해해 볼 수 있다. 남성=생계부양자, 여성=가계보조자, 장래의 모성, 주부, 그리고 어머니 등으로 규정받았던 여성노동자들, 결혼하면 가정으로 돌아갈 여성노동자들이 남성노동자와의 동등한 임금이나 대우를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당시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여성노동자 권익활동은 여성들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남성과 평등한 노동조건을 확보하려는 의식을 발전시키는 데에는 한계를 가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가족계획사업은 순결이데올로기나 가족, 자녀양육, 건강한 모성 등을 강조함으로써 당시 사회를 지배하였던 전통적인 성역할의식을 강화시켰음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노조에서는 가족계획사업을 위한 교육이나 계몽활동 등 각종 노동조합 활동에 여성노동자들을 참여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들은

노동조합이나 타사업장 노동자들과 소통하고 교류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은 가족계획사업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여성노동자들의 의식 향상에 기여했다. 특히 모성, 자녀양육, 가족 등을 강조하는 가족계획사업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었음에도 사문화되어 있었던 모성보호 조치에 대한 노조의 지속적인 요구와 주장에 힘을 보태주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한 본 논문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즉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1970년대 중반 노동조합의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들의 보수적인 여성정체성을 강화시킴으로써 당시 심각했던 성별 임금격차 문제가 노동조합에서 의제로 대두되거나 완화될 수 없었던 반면에 모성보호조치를 개선시켜 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점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가족계획사업이 남녀노동자에게 준 영향이나 그 사업 내용을 충분히 분석하지 못했다. 또한 전통적인 성별분업관념을 심화시켰던 가족계획사업과 관련해 당시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했다. 이것은 본 연구가 주목한 것은 미혼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이 여성노동자들의 성별화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나 하는 점에 있었기 때문이다. 분석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성교육이나 가족계획신문발간 사업 등에 한정되었다. 향후 가족계획사업이 당시 미혼은 물론 기혼 남녀노동자나 노동 현장에 미친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가족계획사업과 같은 성별화된 노동조합의 각종 활동은 여성노동자 의식은 물론 남성노동자 의식의 성별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족계획사업은 당시 경제개발 및 인구문제와 관련해 국가시책에 부응한다는 목적 아래 한국노총이 정규사업으로 편성했고 한국노총 여성부서를 넘어 전 조직 차원에서 진행한 사업으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었다. 한국노총이 조직적인 의사결정에 따라 가족계획사업을 여성부서와 산별노조 여성간부들을 대거 동원하면서 혹은 참여시키면서 사업을 진행했지만 여성만이 동원 혹은 참여한 사업도, 여성사업도 아니었다. 따라서 당시 기혼여성노동자들은 물론 남성노동자들의 의식이나 태도 등에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추가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심각한 성별 임금격차나 여성노동자의 불안정한 노동권은 과거 가족계획사업을 관통했던 뿌리깊은 성별분업담론과도 연결지점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필자는 본 논문이 노동조합 가족계획사업만이 여성노동자들의 성별규범 내면화나 유교적인 성역할관념 습득에 영향을 주었다거나 여성노동자의 생애노동의식 형성에 부정적이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둔다. 1970년대 노동조합의 사업장 가족계획사업은 당시 노동조합에서 다양하

게 진행된 성별화된 지도계몽활동의 하나였다. 또한 본 논문이 당시 한국노총 여성노동자들을 전통적 성별규범에 입각한 가족계획사업 등 한국노총 활동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수용하고 동조했던 존재로 가정하고 있지 않는 점도 아울러 밝혀둔다.

참고문헌

〈 노동조합 자료 〉

금속노조(1978). 사업보고.

섬유노조(1975). 사업보고.

원풍모방노동조합(1982). 사업보고.

전국연합노조 청계피복지부(1973). 사업보고서.

한국노총 각 년도 사업보고.

한국노총(1972). 인구정책과 가족계획.

_____(1975). 노총 가족계획사업 요원 훈련교재.

_____(1977). 노총근로가족복지사업보고서(1975.1.-1977.4.).

_____(1979). 한국노총 가족계획판 독자여론조사보고서(1979.6.).

한국노총 가족계획판(1978.12.30.). “미혼근로여성 위한 성교육.” 2면.

_____(1979.2.28.). “시청각 교육이 효과적-금속노조 가족계획에 박차”. 3면.

_____(1979.4.30.). “가족생활과 모자보건”. 3면

_____(1979.5.30.). “바로 알아야 할 성”. 3면.

_____(1979.6.30.). “가족계획사업의 활성화”. 3면.

_____(1979.9.30.). “미혼여성이 택할 길”. 3면.

_____(1979.11.30.). “좌담회: 산업장 성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4면.

_____(1978.12.30.). “노총의 가족계획사업”. 2면.

_____(1980.5.30.). “행복을 창조하는 슬기를 갖자”. 3면.

_____(1980.7.30.). “탈정신적 식물인간”. 3면.

_____(1980.10.30.). “뜻있는 곳에 길이 있음을”. 3면

_____(1981.3.30.). “+-가족계획의 참뜻”. 3면.

〈 참고 논문 〉

강남식(2004). “70년대 여성노동자의 정체성 형성과 노동운동”. 산업노동연구. 제 10권 제2호. 315-352.

김명숙(2004). “국가동원체제와 ‘가족계획’의 일상화”. 국가동원체제와 일상생활의 변화: 박정희 시대를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김선옥·김명숙(1994). “할당제의 여성정책적 의미와 도입방안”. 여성연구. 제44호.

김은실(1991). “발전논리와 여성의 출산력”. 새로 쓰는 성이야기. 또 하나의 문화. 제8호.

- ____(1999). “한국 근대화 프로젝트의 문화 논리와 가부장성”. 당대비평. 제8권. 79-100.
- 김현미(2000). “한국의 근대성과 여성의 노동권”. 한국여성학. 제16권 제1호. 37-64.
- 김홍주(2002). “한국 사회의 근대화 기획과 가족정치: 가족계획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25권 제1호. 51-82.
- 노동청(1975). 사업장을 통한 근로가족복지사업 상반기 사업진도보고서.
- ____(1977). 산업장 가족계획사업 최종평가조사 보고서.
- 대한가족계획협회(1980). 산업장 가족계획사업 조사연구.
- 맹광호(1972). “산업장 가족계획: 인도산업장 가족계획전지 세미나를 다녀와서”. 한국의 산업의학. 제11권 제4호. 카톨릭 대학 산업의학 센타 산업의학연구소.
- ____(1975). “산업근로자의 가족계획 실태”. 한국의 산업의학. 제14권 제1호. 26-29.
- ____(1977). “산업장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산업보건 관리요원들의 태도 조사”. 한국의 산업의학. 제16권. 제4호. 133-144.
- 맹광호·이달영·김순태(1973). “산업장근로자의 가족계획에 관한 태도조사”. 한국의 산업의학. 제12권 제4호. 1-16.
- 박래영(1972). “한국의 과잉노동력에 관한 연구”. 흥대논총. 제4권. 197-221.
- 박현미(2019). 발전국가시대의 성별화된 노동조합과 제1세대 여성노동자 연구 -1960~70년대 한국노총 활동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2020). “노동조합과 성별 임금격차: 1960-70년대를 중심으로”. 여성경제연구. 제17집 제1호. 25-57.
- 배은경(2004). 한국사회 출산조절의 역사적 과정과 젠더: 1970년대까지의 경험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보건사회부(1987). 부녀행정 40년사.
- 신현옥(2000). 국가개발정책과 농촌지역 여성조직에 관한 연구: 1960-70년대 마을부녀조직의 역할과 활동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유경순(2017). “젠더관계에서 본 1970년대 민주노조의 유형별 특성”. 기억과 전망. 제36권. 95-151.
- 이명선(1990). “국회 속기록에 나타난 여성정책 시각: 가족계획에 대하여”. 여성학논집. 제7권. 113-136.
- 이미경(1989). 국가의 출산정책-가족계획정책을 중심으로-. 여성학논집. 제6권. 49-78.

- 이상현(1982). “산업장을 통한 가족계획사업”. 부산상공. 제9권 제2호. 부산상공회의소.
- 이양재(1972). 한국 노동조합 간부들의 가족계획에 관한 지식 및 태도조사 보고서. 인구문제논집. 제15권. 57-73.
- 장경식(1972). “우리나라의 가족계획”. 인구정책과 가족계획.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장미경(2004). “근대화와 1960-70년대 여성 노동자-여성노동자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경제와사회. 제61권. 비판사회학회. 106-134.
- 장필화(1990). “여성정책을 위한 기초적 검토: 여성학적 시각에서”. 여성학논집. 제7권. 11-22.
- 한국노동연구원(1990). 1990년도 임금관련 통계자료집.
- _____(2020). 2020 KLI 노동통계.
- 홍승직(1980). “가족계획과 사회개발: 가족계획사업의 단계적 추진”. 한국사회개발연구. 제3권. 1-81.
- 황정미(2001). 개발국가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1960-70년대의 한국 부녀행정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ILO/ECAFE(1972). *Basic Document of ILO/ECAFE Regional Symposium on Labour and Population Policies*(Kuala Lumpur, 24 July - 3 August 1972).
- ILO(1972). *Report of Asian Study tour of Family Planning Services in Industry*(India, 20 November-8 December 1972).
- United Nations(1992.12), E/CN.6/1992/7, No.38.

Abstract

The Effect of the Family Planning Project at Workplaces in the 1970s on the Consciousness of Female Workers

Hyunmi Park*

This study analyzed the influence of the family planning project at the workplace conducted by the labor union in the 1970s on the consciousness of female workers. Through this, we tried to understand the reality that, while the gender wage gap, which was severe in the 1970s, was not resolved at all, the maternity protection system was relatively improved.

In this regard, this study paid attention to the differences in the awareness and response of female workers to the issue of gender pay discrimination and maternity protection in the 1960s and 1970s. Furthermore, this study sought to explain the difference in approaches to the two issues in that the Federation of Korean Trade Unions and female workers have been working to improve labor conditions on the premise of traditional gender norm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family planning project at the workplace of the labor union, which was characterized as a gendered guidance and enlightenment activity in the 1970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labor union's family planning project has strengthened the conservative female identity of female workers.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tion of female workers in the union's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related to family planning served as an opportunity to improve the awareness of women's rights such as maternity protection.

Through this, this thesis was able to understand the reality that women in the 1970s did not properly raise the issue of discriminatory wages in the union at the time despite the high unionization rate.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labor union had improved the maternity protection system under the pretext of maternal and child health, second-generation national fertility and caregivers.

The research method is literature research, and the core data are the business report of the Federation of Trade Unions, the newspaper for family planning, and the publications of family planning projects by the labor union and the Labor Administration.

Keywords : Labor union, workplace family planning project, gender wage gap, maternity protection, female workers, traditional gender role norms

* Senior Research Fellow, FKTU RESEATCH CENTER.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출산행동의 관계: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의 병렬다중매개효과*

정아름**·이준영***

초 록

본 연구는 유자녀 기혼여성이 지각한 청소년기 가정환경요인이 출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 둘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가 매개하는지 검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KLoWF) 1차연도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유자녀 기혼여성 6,210명의 응답자료를 SPSS 25.0과 Process Macro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요인은 출산행동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요인과 출산행동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이 유의미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요인과 출산행동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한 부분 매개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유자녀 기혼여성의 출산행동과 관련하여 학술적·정책적·실천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청소년기 가정환경, 출산행동, 가족가치관, 결혼만족도, 여성가족패널, 병렬다중매개효과

* 본 논문은 정아름(2021)의 박사학위논문을 기초로 수정·보완하여 작성되었으며,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B5A17091454).

** 제1저자: 서울시립대학교 박사(soapdoll8@naver.com)

*** 교신저자: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jylee@uos.ac.kr)

I. 서론

2020년 2월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84명(통계청, 2021)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63명(OECD, 2018)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출산국이 되었다. 뉴욕타임스에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적은 복잡한 해외정세(북한 핵 문제, 미·중 무역 전쟁 등)가 아니라 바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라는 것을 지적하였다(Lamer, 2018).

학계에서는 출산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저출산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6년 이후부터 관련 연구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시행된 정책 초기(2006~2010)에는 주로 출산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인구학적·경제적 문제에 초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여성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등이 지적되는데, 일반적으로 여성의 연령과 학력수준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출산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현옥, 2011; 김한곤, 2015; 송헌재, 2012; 노상미, 2015; 이상림 외, 2019). 경제적 요인으로는 가구소득, 주거형태와 자가소유 여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가계경제 수준이 자녀 양육 부담에 영향을 작용하여 자녀 수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Esterlin, R. 1975; 공선영, 2006; 정혜은·진미정, 2008; 정성호, 2009).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이 진행되었던 시기에는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출산행동을 이해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으며(송헌재, 2012; 정성호, 2012), 2019년 3월에 발표된 수정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이 출산율 제고에서 삶의 질 제고로 큰 전환을 맞았다. 즉, 출산장려가 아닌 저출산을 야기한 사회구조적 원인에 집중하고 이를 해소하여 전체적인 삶의 질 제고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다. 최근에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인 요인과 더불어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출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주목하는 연구(진경선, 2018; 오유석, 2015)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심리적 요인은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가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에 주목한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와 태도, 부부의 입장에서는 결혼만족도와 같은 것이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문정희·김성순, 2019).

청소년기 가정환경은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오해섭·문호영, 2020; 임희진 외, 2008). 청소년

기는 급격한 신체적인 발달과 함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이며, 이렇게 형성된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내적신념으로 자리 잡아 성인기의 다양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박경애 외, 2010; 서인균·이연실, 2019). 특히 이 시기 청소년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환경은 부모이다(김정은, 2010; 김경신, 1998; 한상철, 2004). 부모는 개인에게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주고받는 첫 번째 사회 환경이기 때문이다(박경애 외, 2010; 서인균·이연실, 2019; 이다경, 2015). 선행연구에서도 청소년은 부모 세대의 가치관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성인기 자녀에게까지 나타났다(조성남·최유정, 2002; 오윤자·조소연, 2001).

이런 점을 출산행동에 적용하면, 청소년기에 노출된 가정환경의 특성은 현재의 출산행동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 가정할 수 있다. 국내에서도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성인기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정아름, 2018)가 수행되었다. 부모의 결혼생활 갈등과 적절하지 않은 양육태도로 인해 형성된 ‘원가족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무자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공미혜·이수연, 2012; 이수현, 2012), 자신의 부모와 정서적으로 친밀하지 않은 유년시절을 보냈을 경우 자발적으로 자녀를 갖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양성은, 2004; 이민아, 2013). 염주희 외(2013)는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온 가정환경 요인이 성인이 된 부모의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청소년기 가정환경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상기 연구 외에는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출산행동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상당히 희소하다. 청소년의 출산의식에 대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모나 가족요인을 통제변인으로 사용한 연구(홍표자, 2010)가 있으며, 청소년의 결혼, 출산 등에 대한 인식 조사(이삼식, 2006; 김태현 외, 2006; 정미경 외, 2007; 신효영·방은령, 2008; 차우규, 2015)가 일부 수행되었다.

선행연구에도 출산행동과 관련해서 아동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관한 논의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오신휘·김혜진, 2020)하면서 청소년기에 결혼·가족·자녀(출산)와 관련해서 어떠한 경험을 하였느냐 하는 것이 일생 경험할 결혼 및 가족가치관으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였다(김태현, 2005). 따라서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청소년기 가정환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출산행동의 관계를 매개할 요인으로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여성의 삶에 있어서 결혼과 출산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었기에 이들의 가족가치관이 출산행동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다(강세창, 2019; 이완, 2018; 서정연·김한곤, 2015). 또한 임신과 출산은 여성 혼자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가족 내의 중요한 생애 사건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박상미, 2018). 즉,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는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두 요인은 출산행동에 직·간접적인 매개변수로 활용되었는데, 결혼만족도가 보육서비스와 같은 사회적 지원 보다 출산행동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밝힌 연구(이소은·김미나, 2017; 송민영, 2018)가 있다. 따라서 여성의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가 출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출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출산행동은 대부분 결혼 이후에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고, 이미 출산행동을 이행한 결과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1.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출산행동의 관계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2.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출산행동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은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 연구문제3.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출산행동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는 매개효과가 나타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

여성의 출산행동은 다양한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인구학적 요인은 출산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특성으로 알려져 있다.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요인으로 거론되는 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결혼 시기, 교육 수준, 취업 여부 등이 있다(노병만, 2013; 이삼식 외, 2014; 변두영, 2015).

일반적으로는 연령이 낮을수록 임신 가능성이 높고, 가임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출산행동 또한 상대적으로 더 높다(이상임, 2019; 김사현, 2009; 이삼식·최효진, 2014). 반면, 연령이 높을수록 출산의지가 있더라도 가임기간이 짧아지고 임신 가능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실제 출산행동이 나타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다.

결혼 시기 또한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김승권 외, 2004; 도미향, 2011; 김태현 외, 2006; 한종수, 2010; 장영남, 2013; 임현주, 2013). 초혼연령이 낮을수록 출산행동으로 이행되는 속도가 빠르며, 반대로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그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 법률혼의 상태가 되는 결혼 시기는 출산행동을 발현하는 인구학적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교육수준도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되며, 대부분의 연구에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출산행동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태현 외, 2006; 공선영, 2006; 김사현 2009; 이성용, 2009; 이미란, 2010). 또한 이삼식 외(2014)의 연구에서는 고학력 여성들이 높은 성평등 의식과 개인주의적 성향을 지닐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해 출산행동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반면 최근에는 여성의 교육수준이 출산행동과는 무관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한다(노상미, 2015, 임현주, 2013). 이삼식 외(2016)의 조사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까지는 저학력 기혼 여성들의 출산행동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이후 학력과는 무관하게 사회 전반에 걸쳐 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초산 연령 또한 30대 이후에 집중되면서 학력의 영향력이 다소 완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여성의 학력은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여성의 전반적인 교육수준 향상에 따라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이는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특히 임신과 출산 전반의 과정이 여성의 몸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므로 여성의 진로와 경력 단절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 또한 출산행동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변수가 지적 된다(Beck & Beck-Gernsheim, 1999). 임신하게 되면 취업 여성은 비취업 여성보다 출산 시 더 많은 기회비용을 감수해야 하고, 이러한 간접비용의 증가는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이인순, 2011; 정성호, 2010; 강유선·김찬우, 2018). 즉, 여성의 경제활동은 출산행동과 선택적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종합하면, 여성의 인구학적 요인은 여성의 출산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구학적 요인은 저출산 현상을 분석하고 변화되는 인구 구조의 전망과 같은 해석의 관점을 주지만, 정책으로 삼아 적용하기에는 요인의 특성상 한계가 있을 수 있다.

2. 출산행동과 청소년기 가정환경 간의 관계

출산은 여자가 임신하고 낳는 전체 과정의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 출산 행동은 개인적으로는 ‘구체적인 임신·출산’이며, 사회적으로는 ‘추가적인 재생산’이라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이희연, 2003). 즉,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인생 설계 문제로서의 개인적인 입장과 사회의 존속을 위하여 적절한 인구 재생산을 유도하려는 사회적인 입장을 모두 포함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행동인 동시에 사회적 행동으로서의 의의가 있다(백나영, 2013). 선행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아이를 낳은 행위를 출산행동으로 보았으며, 출산의 실행 여부 혹은 출산 자녀수로 측정하였다(배광일, 2015; 진경선, 2018; 노상미,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산행동을 기혼여성이 아이를 직접 낳은 행위로 정의하고 실제 기혼여성이 응답시점에 낳은 자녀수로 측정하고자 한다.

에릭슨(Erik H. Erikson)의 점성원리(epigenetic principle)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발달하는 결정적인 시기(critical period)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Erikson, 1968). 이 단계를 순조롭게 극복할 경우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체성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고 보았다(Erikson, 1968). 청소년기에 정체성 형성이 잘 이루어지면 성인초기에 친밀감을 잘 발달시키게 되고, 성인 중기에는 정체성의 범위를 확장하여 남녀가 결혼하고 부부가 되어 깊은 친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Erikson, 1968). 이렇게 형성된 깊은 친밀감은 둘의 관계를 넘고 확대되어 자녀를 낳고 자 하는 생식성(generativity)을 발달시키게 된다(Erikson, 1968). 생식성은 기본적으로 다음 세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것에 대한 관심을 의미하며, 생산성(productivity)과 창조성(creativity)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Erikson, 1968).

이처럼 중요한 청소년기의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적절한 역할모델의 유무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lsky J., 1984; Hurlock E.B., 1978). 역할모델은 개인의 가치, 성격, 행동 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동인(動因) 중의 하나이며, 친사회적 행동을 증가시키고(Belsky J, 1984), 사회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Greendorfer, 1977)으로 보고된다. 대부분의 자

녀는 역할모델의 대상으로 부모나 형제와 같은 가까운 가족을 모델로 삼는 경향이 있다(Hurlock E.B., 1978). 익숙한 가족과의 비교를 통해 기초적인 사회를 학습하기 때문에 가정환경은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Hurlock E.B., 1978). 그중에서도 부모는 가장 가까운 타인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가정환경 요인이라 할 수 있다(Bryant & Zimmerman, 2003). 부모는 1차적인 성역할 모형이 되기 때문이다(Bryant & Zimmerman, 2003). 정리하면 청소년기 자녀에게 부모는 영향력 있는 성인역할모델이 되어 자녀의 사회화, 자아개념 및 자아존중감 등을 발달시키는 중요한 가정환경이라 할 수 있다(류현수 외, 2007).

브론펜브레너(Bronfenbrenner)는 청소년의 성장과 관련하여, 무엇보다 이들을 둘러싼 다층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였다(Bronfenbrenner, 1979). 그의 생태학적 이론(ecological theory)에서는 청소년의 유전적 요인, 가정의 역사, 사회경제적 수준, 가정생활의 질, 문화적인 배경과 같은 환경적 요인들이 발달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Bronfenbrenner, 1979).

브론펜브레너(Urie Bronfenbrenner)는 개인의 환경을 미시체계(microsystem), 중간체계(mesosystem),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 등 네 가지 수준으로 구분하였다(Bronfenbrenner, 1979). 생태체계는 유기체와 같이 상호 의존적인 여러 개의 하위체계로 구성되어 있고 이 하위체계들의 작동은 상호 유기적 관련성 속에서 마치 하나의 단위처럼 함께 작동한다(Bronfenbrenner, 1979). 그중에서 미시체계는 인간이 접한 가장 직접적인 환경을 말하며, 유의미한 타자와 직접적이고도 구체적인 상호작용을 경험하는 곳이다(Bronfenbrenner, 1979). 대표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가정환경,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학교 등을 미시체계라고 말할 수 있다. 건강한 미시체계는 상호호혜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미시체계가 긍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영향력을 발휘하면 발달의 성공을 위한 보다 확실한 기회가 조성된다고 할 수 있다(박화윤 외, 2010; 김경중, 2003; 조흥식, 2006; 브론펜브레너, 1991).

상기의 논의를 정리하면, 청소년기는 이후 성인기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발달 시기이며, 이 시기에 청소년의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시체계는 바로 가정환경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 가정환경은 가정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을 총괄하는 것을 말하며 물리적 환경과 심리적 환경을 포함한다. 특히 성인기에 자녀 출산에 대한 의지를 갖거나 행동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기의 의미가 크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가정환경을 연구하는 것은 이후 성인기 행위의 근거 해석에 많은

단서를 제공하며, 출산행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는 무자녀 또는 다자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혼여성의 과거 가정환경 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공미혜·이수연(2012)은 무자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무자녀 결정경험에 대한 심층면접을 진행한 연구를 통해 이들의 무자녀 결정경험에 ‘원가족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에서 조사(2019)한 ‘3040 여성들의 자녀출산과 양육경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 본인이 형제가 많을 경우 자신 또한 다자녀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 외에도 다자녀를 이루게 된 계기에 관한 연구(강혜진, 2009; 이해경, 2011) 결과 자신의 유년시절 가정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모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지각한 청소년, 대학생의 경우 향후 자신의 자녀 출산에 대해 긍정적이고, 부모역할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밝힌 연구가 존재한다(신희진·이경숙, 2006). 반면, 부모와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 더 적은 수의 자녀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도 있다(홍표자, 2010).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기 가정환경은 출산행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3. 출산행동과 결혼만족도, 가족가치관의 관계

출산행동에 있어서 결혼만족도는 매우 연관성이 높은 요인으로 지적되는데, 임신과 출산의 과정이 여성 혼자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가족 내의 중요한 생애 사건이기 때문이다. 특히 배우자의 역할이 결혼만족도에 있어서 중요한데, 박상미(2018)의 연구에서는 출산이 부부단위의 가장 친밀하고 직접적인 생활의 장에서 이뤄지고 남편은 부인과 가정 밀접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남편과의 관계에 따른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행동이 이행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송영주 외, 2011; 김미영, 2006; 신나리, 2013, 이진숙·최원석, 2012; 임양미, 2015). 진경선(2018)은 한국아동패널의 자료를 활용하여 후속 출산 행동에 영향을 주는 모의 심리적 변인을 분석하였는데,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7년 이내 출산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밝혀냈다. 김은경·박신애(2019)의 연구에서도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이혼 위험률이 낮아질수록, 부부관계가 긍정적일수록 출산의지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적극적

인 양육 참여는 여성의 양육 스트레스를 덜어주어 출산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순, 2003; 송영주 외, 2011; 강유진, 2007; 김은경·박신애, 2019). 반면에 아내가 남편에게서 존중받지 못하여 부부갈등이 심화하면 자녀양육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출산의지에 회의적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된다(윤경자, 2010). 백승숙(2020)의 연구에서도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양육참여도가 높을수록 출산행동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결혼만족도가 일방적인 관계에서 오는 만족감이 아니라 상호교환적인 관점에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가족가치관은 '결혼 및 자녀와 성역할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태도'라 할 수 있다. 다양한 주변 환경과 사회적 관념 그리고 문화적 영향에 따라 형성되는 특성으로 인해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주목받아 왔다.

일반적으로 결혼 및 자녀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실제 출산행동에 적극적이며, 자녀수도 많은 것이 밝혀졌다(김상돈·김혜영, 2015; 이정원, 2007; 이미란, 2010; 이현옥, 2011; 강세창, 2019; 이완, 2018). 실제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기혼 여성이 상대적으로 자녀의 필요성에 대해 두 자녀 이하 가구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윤영혜, 2006). 또한, 남성과 여성의 전통적인 성역할가치관을 견지할수록 희망하는 자녀수와 출산 자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출산행동이 강화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사현, 2009; 이진숙·최원석, 2012; 배광일·김경신, 2012). 반면, 대학생이나 청소년의 경우 성평등에 대한 역할인식이 높을수록 기대자녀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홍표자, 2009), 가사 노동과 육아 부담이 평등하여 성 평등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다(이소영, 2007; 신효영, 2009).

4.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결혼만족도, 가족가치관 간의 관계

청소년기 가정환경은 성인기 결혼생활 만족과도 연관성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혼 전 원가족 부모세대의 상호작용이 자녀 세대의 결혼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 원가족에서 습득된 경험요인이 현재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김남진·김영희, 2010; 하상희 2008). 즉 부모가 행복하고 성공적인 결혼생활을 해온 경우 그 자녀도 결혼에서 행복감을 경험하기 쉽고 이혼할 가능성도 적다고 보고된다(Forrest, 1991; Bartle-Haring & Sabatelli, 1998). 선행연구에서는 부모의 결혼만족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홍대식, 2005; 임준호, 2018), 부모

의 부부관계가 좋았다고 회상한 성인기 자녀는 자신의 결혼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김경주·김영혜, 2015). 서인균·이연실(2019)은 부모의 결혼생활이 청소년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지적하면서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과 부모상이 청소년의 결혼이나 출산에 대한 의식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부부관계에 친·인척 관계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부부중심의 서구권보다 클 것이라고 주장한다(김희진, 2004).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의 결혼생활은 자녀의 결혼생활에 모델이 되며 자녀의 성공적인 결혼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청소년기 가정환경은 성인 자녀의 결혼생활 만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청소년기 가정환경은 가족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자녀는 부모의 행동과 생각을 동일시하는 과정을 통해 내면화하기 때문이다(Belsky J., 1984; Hurlock E.B., 1978). 이로써 청소년 자녀는 부모의 가치관을 전수 받게 되고 실제로 가족가치관이 세대 간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밝힌 연구도 존재한다(김경신, 1998; 최소영·장진경, 2016). 부모의 가족주의 가치관을 미혼 성인자녀가 영향을 받는 연구도 존재한다(오윤자·조소연, 2001). 부모가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관을 따를 경우 자녀들의 결혼가치관도 긍정적이었던 연구결과를 밝히기도 했다(은기수, 2001). 권복순·김태자(2010)의 연구에서 20~30대 여성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엄격한 경우 다른 집단에 비해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인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이혼과 별거 경험 여부에 따라 자녀가 있어도 이혼할 수 있다고 응답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김혜환,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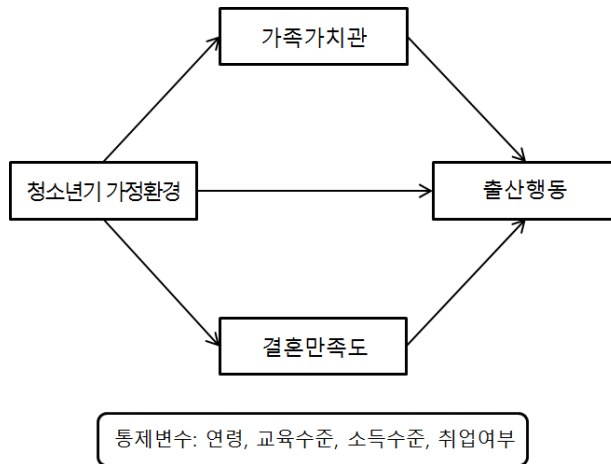
요약하면 청소년기 노출된 가정환경은 성인 자녀의 결혼만족도와 가족가치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형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출산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의 병렬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정한

연구모형은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2. 자료출처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여성가족패널은 여성과 가족의 경제활동, 가족생활, 가치관에 대한 조사를 비롯하여 출산 및 돌봄 등 가족 내 행태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유용한 자료이며 1차연도(2007년)와 2차연도(2008년) 조사는 1년 주기로 진행하였으며, 이후에는 격년마다 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국 일반가구 중 만 19세 이상 만 64세 이하의 여성가구원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추출된 9,068가구에 거주하는 여성 9,99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차연도 여성가족패널조사의 개인용 설문 조사에 답변한 응답자 중 본인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기혼여성 6,210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자료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웹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 자료이며 이용을 원하는 연구자가 자료 사용 목적을 밝히는 신청절차를 거치면 설문지와 원자료를 내려받아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가되어 있다.

3. 변수의 정의 및 측정

1) 출산행동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유자녀 기혼여성의 출산행동은 “응답자가 실제로 출산한 현재 자녀수”로 정의한다. 재혼과 입양을 통해 생겨난 자녀는 제외한다. 그리고 이러한 출산행동을 측정하기 위해서 여성가족패널 자료에서 [임신 및 출산경험과 자녀계획]의 현재 자녀수에 대한 조사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자녀수를 연속변수로 사용하였다.

2) 청소년기 가정환경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청소년기 가정환경이다. 본 연구에서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이란 “기혼여성이 지각하는 청소년기(15세 무렵) 가정의 구조적, 사회경제적, 기능적 요인”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 여성가족패널 [성장과정] 설문 중 응답자의 15세 무렵의 부모와의 동거여부, 집안의 경제적 형편, 부모의 학력, 부모 간의 친밀도, 부모의 양육태도 항목으로 회상에 의한 보고로 구성되어 있다. 성장과정은 1차 조사 당시 모든 패널을 대상으로 조사하였고, 2차 조사부터는 신규 응답자만 대상으로 조사하는 항목이다<표 1>.

〈표 1〉 청소년기 가정환경 문항

변수		문항내용
구조적요인	부모동거	_님은 15세 무렵 부모님과 함께 사셨습니까?
	경제적 형편	_님이 15세 무렵에 집안의 경제적 형편은 어떤 편이셨습니까?
사회경제적요인	부모 교육수준	_님의 아버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_님의 어머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셨습니까?
기능적요인	부모간의 친밀도	_님이 15세 무렵에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이는 어떠셨습니까?
	양육태도	_님이 15세 무렵에 부모님은 귀하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청소년기 가정환경의 관측변수의 방향성에 따라 일반집단과 취약집단으로 집단을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취약계층이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거나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현재의 상황을 유지하기 어려운 계층을 의미한다. 따라서 취약계층 청소년은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취

약한 상황에 처한 가족의 자녀로 볼 수 있다. 구조적으로는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이 해당할 수 있다. 부모의 사회 경제적 수준은 가정경제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부모의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와 같은 가정의 기능적 요인은 청소년의 정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다경, 2015; 박경애 외, 2010; 서인균·이연실, 2019).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소년기 가정환경 수준을 측정하고자 청소년기 가정환경을 일반집단과 취약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취약집단은 부모와 동거하지 않고, 부모의 교육수준이 낮고, 경제적 형편이 어려우며, 부모 간의 관계가 좋지 않고, 양육태도가 엄격한 가정을 의미한다(표 2). 따라서 청소년기 가정환경의 총점이 높을수록 취약한 가정환경의 특성을 나타낸다.

〈표 2〉 청소년기 가정환경의 차이에 따른 집단 구분

구분		일반집단	취약집단
구조적 요인	부모동거	부모님과 함께 동거	부모님 중 한분과 동거 부모님과 비동거
	경제적 형편	아주 잘 사는 편, 대체로 잘 사는 편, 보통	대체로 어려운 편, 아주 어려운 편
사회경제적요인	부모 교육수준	부모의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이상	부모의 무학
	부모 간의 친밀도	아주 좋은 편, 대체로 좋은 편, 보통	별로 좋지 않은 편, 매우 좋지 않은 편
기능적 요인	양육태도	아주 엄격한 편, 대체로 엄격한 편, 보통	별로 엄격하지 않은 편, 전혀 엄격하지 않은 편

3) 가족가치관

본 연구에서 가족가치관은 “결혼 및 자녀와 성역할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태도”로 정의한다. 하위개념은 결혼가치관, 자녀가치관, 성역할가치관으로 구성되며, 여성가족패널 자료에서 [가족관련 가치관]의 4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결혼하고 자녀를 갖는 것에 동의하는 수준과 기존의 남녀 성역할 인식에 대한 동의 정도를 응답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가족가치관이 전통적이고 보수적임을 의미한다. 신뢰도(Cronbach's alpha)는 .647로 나타났다.

4) 결혼만족도

본 연구에서 결혼만족도는 “현재의 배우자와의 결혼생활 중 느끼는 교류적·

정서적·인지적 요인에 대한 만족수준”으로 정의한다. 여성가족패널 자료에서 [결혼과 부부생활]의 7개 문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배우자와 동거하는 경우에만 응답하도록 설계되어있다. 총점이 높을수록 결혼생활에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665로 나타났다.

5) 통제변수

본 연구에서는 앞 절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취업여부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연령은 응답자의 작성시점인 만 나이로 측정되어 연속변수로 활용하였다. 교육수준은 중졸이하(0), 고등학교 졸업(1), 대학교 학력(2)로 구분하여 변환하였다. 취업여부는 취업(1)과 비취업(0)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소득수준은 가구의 가처분 소득을 가구원 수로 균등화한 연소득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뒤 자연로그로 변환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변인의 경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출산행동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의 병렬다중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Hayes(2012)가 제안한 Process Macro ver.3.2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Process Macro는 단순 혹은 다중매개 모델의 직, 간접 효과를 추정하기 위하여 최소자승법(OLS) 혹은 최대우도추정법(MLE)과 Newton Raphson 방법 등을 기반으로 한 경로분석에 사용 가능하다. 또한 이진(binary)변수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다는 장점이 있으며, 부트스트랩(Bootstrap) 방법을 통하여 매개효과 분석이 가능하다(Hayes, Mattes, 2009). 부트스트랩은 원자료가 정규성을 보이지 않아도 부트스트랩 표본들을 이용해 신뢰구간을 통한 가설검정을 하는 장점이 있어서 매개분석의 간접효과 유의성 검정을 할 때 많이 사용된다. 수천 번의 재표본추출 작업을 필요로 하는 부트스트랩 방법의 특성상, 과거에는 컴퓨터 성능이 낮아 실질적으로 이용되는 경우는 적었다. 그러나 최근 컴퓨터 성능의 향상으로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부트스트랩을 이용한 추정작업이 용이해짐에 따라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rocess Macro의 Model 4를 적용하여, 청소년기 가

정환경이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의 개별 경로를 통해 출산행동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셋째, 각 매개효과 간 차이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방법을 사용하였고, 모든 분석에서 유의수준은 $p < .05$ 수준으로 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를 위해 6,21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표 3>.

연령은 30세 미만 366명(5.9%), 30~39세 2,294명(36.9%), 40~49세 1,761명(28.4%), 50~59세 1,308명(21.1%), 60세 이상 481명(7.7%)으로 나타났고, 교육 수준은 중졸 이하 1,776명(28.6%), 고졸 2,615명(42.1%), 대학 이상 1,819명(29.3%)으로 나타났으며, 취업 여부는 비취업 3,716명(59.8%), 취업 2,494명(40.2%)으로 나타났다. 평균 출산 자녀수는 2.2명이었다.

<표 3>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항목	구분		N	%
연령	30세 미만		366	5.9
	30~39세		2,294	36.9
	40~49세		1,761	28.4
	50~59세		1,308	21.1
	60세 이상		481	7.7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776	28.6
	고졸		2,615	42.1
	대학 이상		1,819	29.3
취업 여부	비취업		3,716	59.8
	취업		2,494	40.2
전체			6,210	100.0
변수	최솟값	최댓값	평균	표준편차
출산행동	1.00	9.00	2.20	0.88

2. 주요변수의 상관분석 결과

본 연구의 변인 간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출산행동은 청소년기 가정환경($r=.227$, $p<.001$), 가족가치관($r=.217$,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결혼만족도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158$, $p<.001$).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가족가치관은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r=.147$, $p<.001$),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결혼만족도는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194$, $p<.001$). 또한 측정변수들 간 상관계수의 절대값이 .8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4).

〈표 4〉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청소년기 가정환경	가족가치관	결혼만족도	출산행동
청소년기 가정환경	1			
가족가치관	.147***	1		
결혼만족도	-.194***	.003	1	
출산행동	.227***	.217***	-.158***	1

*** $p<.001$

3.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출산행동에 미치는 관계에서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먼저 1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종속변수인 출산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beta=.046$, $p<.001$), 통제변수에서는 연령($\beta=.364$, $p<.001$)과 직업 있음($\beta=.057$, $p<.001$)은 출산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 수준($\beta=-.131$, $p<.001$)과 소득($\beta=-.026$, $p<.05$)은 출산행동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출산행동에 대한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통제변수의 설명력은 25.3%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매개변수인 가족가치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beta=.035$, $p<.01$), 통제변수에서는 연령은 가족가치관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beta=.265$, $p<.001$), 교육 수준은 가족가치관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beta=-.068$, $p<.001$). 가족가치관에

대한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통제변수의 설명력은 10.8%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매개변수인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beta = -.034$, $p < .01$), 통제변수에서는 연령($\beta = -.165$, $p < .001$)과 직업 있음($\beta = -.042$, $p < .001$)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 수준($\beta = .203$, $p < .001$)과 소득($\beta = .110$, $p < .001$)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통제변수의 설명력은 16.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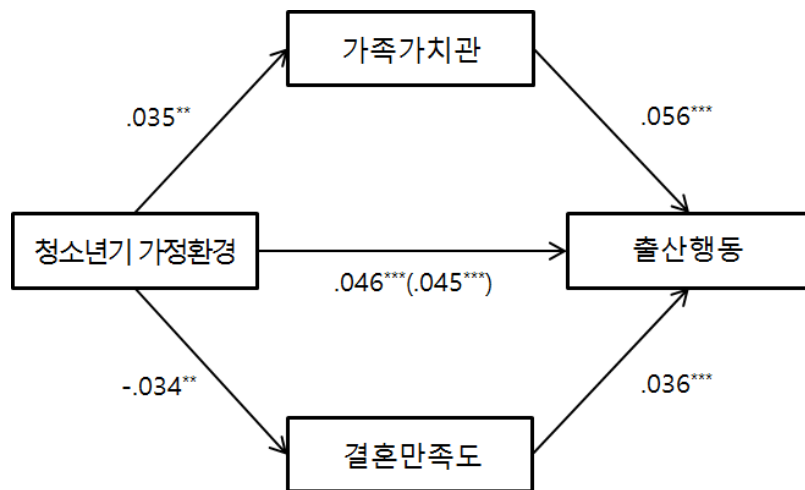
3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청소년기 가정환경($\beta = .045$, $p < .001$)과 매개변수인 가족가치관($\beta = .056$, $p < .001$), 결혼만족도($\beta = .036$, $p < .01$)는 출산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고, 통제변수에서는 연령($\beta = .355$, $p < .001$)과 직업 있음($\beta = .060$, $p < .001$)은 출산행동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 수준($\beta = -.135$, $p < .001$)과 소득($\beta = -.029$, $p < .05$)은 출산행동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출산행동에 대한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가족가치관, 결혼만족도, 통제변수의 설명력은 25.8%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매개변수인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3단계에서 매개변수인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가 출산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므로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를 통한 청소년기 가정환경의 출산행동에 대한 간접효과가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청소년기 가정환경은 출산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를 통해서도 출산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표 5).

〈표 5〉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출산행동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변수		model 1		model 2				model 3	
		DV:출산행동		DV:가족가치관		DV:결혼만족도		DV:출산행동	
		B	β	B	β	B	β	B	β
청소년기 가정환경		0.035	.046	0.067	.035	-0.062	-.034	0.035	.045
가족가치관								0.022	.056
결혼만족도								0.015	.036
통제 변수	연령	0.032	.364	0.060	.265	-0.036	-.165	0.031	.355
	교육 수준	-0.152	-.131	-0.202	-.068	0.571	.203	-0.156	-.135
	소득	-0.022	-.026	-0.034	-.015	0.230	.110	-0.025	-.029
	취업	0.103	.057	-0.073	-.016	-0.185	-.042	0.107	.060
F(R2)		420.737*** (.253)		150.744*** (.108)		248.529*** (.167)		307.333*** (.258)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연구모형의 경로별 매개효과 크기

간접효과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절차에 따라 5,000개의 표본을 생성하여 신뢰구간 95%에서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추가로 검증하였다.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가족가치관을 통하여 출산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0003, 0.0029]이고,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결혼만족도를 통하여 출산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이 [-0.0020, -0.0001]으로 나타났다. 그 사이에 0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매개효과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또한 두 매개효과의 차이가 95% 신뢰구간이 [0.0023, 0.0003]으로 나타나, 그 사이에 0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즉, 두 매개효과의 크기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표 6).

〈표 6〉 부트스트래핑을 통한 매개효과 및 매개효과 간 차이 검증

(n=6,210, bootstrap=5000)

매개변수	B	S.E.	95% CI	
			LLCI	ULCI
M1 가족가치관	0.0015	0.0007	0.0003	0.0029
M2 결혼만족도	-0.0009	0.0005	-0.0020	-0.0001
매개효과 차이(M1-M2)	0.0024	0.0002	0.0023	0.003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둘의 영향 관계에서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유자녀 기혼여성의 출산행동에 대한 이해를 돕고 향후 학술적·정책적·실천적 접근에 있어서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한국여성가족정책연구원「한국여성가족패널」1차연도(2007년)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최종 6,210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가정환경은 출산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주목된 측면은 현재 출산행동으로 이행이 가능한 부부 또는 예비부부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심리적 요인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본 연구는 과거 청소년기 가정환경의 특징이 현재의 성인기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즉,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청소년기에 경험한 가정환경이 결혼, 가족, 자녀에 대한 태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김태현(2005)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연구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무자녀 결정이나 다자녀를 형성하는 데 유년시절의 경험이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공미혜·이수연, 2012; 이수현, 2012; 양성은, 2004; 이민아, 2013; 염주희 외, 2013; 이해경, 2011)를 지지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은 가족가치관 경로를 거쳐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가정환경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을 경우 가족가치관이 높게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출산행동에 영향을 정(+)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가족가치관은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출산행동의 관계에서 가족가치관이 매개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결혼 및 자녀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할수록 실제 출산행동에 적극적이고 자녀 수도 많다는 선행연구(김상돈·김혜영, 2015; 강세창, 2019; 이완, 2018)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셋째,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은 결혼만족도 경로를 거쳐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가정환경의 특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했을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결과적으로 출산행동에 영향을 부(-)적으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결혼만족도는 청소년기 가정

환경과 출산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이는 결혼만족도가 높은 경우 출산행동에 적극적이고 출산이행 확률이 높아진다는 기존의 선행연구(홍대식, 2005)와 맥을 같이한다.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유자녀 기혼여성의 출산행동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우리 사회 청소년기 가정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출산행동, 가족가치관, 결혼만족도와 같은 성인기의 행동과 가치 및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청소년이 생활하는 가정의 가족구조, 사회경제적 지위와 관계없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권리를 누려야 할 것이며, 특히 일시적 또는 지속해서 취약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이 어려움과 위기에 탄력 있게 적응함으로써 성인이 된 후에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과 지역사회복지의 역할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지금까지 출산양육정책이 미혼자에게는 결혼 이행을 지원하고, 기혼자에게는 자녀출산과 양육지원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측면이 있다면 향후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에서 본 연구결과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둘째, 건전한 가족가치관의 형성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가족가치관은 출산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가치관은 사회 전반적인 인식과도 관계가 높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여성의 가족가치관의 실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결혼과 출산이 생애 과정에서 필수적이라고 인식하지 않는 상황에서 결혼이라는 법률제도와 출산이라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형성에 집중하기 보다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도 중요한 점은 인간이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유지하면서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이 얻게 될 성장과 같은 내재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성인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것처럼 결혼과 출산을 앞둔 청년뿐만 아니라 전 세대에 걸쳐 성별과 상관없이 어렸을 때부터 건강한 성평등 가치관을 형성하는 일은 중요하리라 본다. 이러한 고민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최근 발표된 제4차「저출산·고령사회기 기본계획」(2020년 12월 발행)에 나타난다. “다양하고 평등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지역양성평등센터 설치,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 등이 바로 그것이다. 학계에서도 이러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적 대응을 고민하는 연구(정문성 외, 2016)가 교육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가족생활주기 변화를 고려하여 부부의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개입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결혼만족도는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기혼여성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원활한 의사소통과 정서적 지지, 가사와 육아 참여를 받게 되면 이들은 육아에 따른 우울과 스트레스 보다 긍정적인 대처자원으로 인식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가족생활 주기는 단계별로 가족이 수행해야 할 과업이 변화하고, 그에 따라 가족 구성원에게 심리적·물질적 준비를 새롭게 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가족생활 주기에 맞추어 개입 방안을 달리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노력과 지지는 미래세대에게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신뢰를 형성하여 장기적으로는 아이를 낳고 기르는 행복한 양육문화 형성에 단초가 되리라 기대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유자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모든 여성에게 이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미혼(비혼)여성으로 연구대상을 확대하고 더 나아가 남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 검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로써 더 포괄적으로 성별과 생애주기에 적절한 개입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둘째, 본 연구의 독립변수로 활용된 청소년기 가정환경의 경우 패널데이터가 구축된 2007년도의 1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최근에 변화된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다. 또한 성인이 되어 과거를 '회고'하여 응답한 자료로서 실제 경험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와 같이 청소년기 가정환경은 향후 성인기 출산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청소년기 가정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데이터 축적과 함께 추적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셋째, 본 연구결과 청소년기 가정환경이 출산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했으나, 측정 문항의 한계로 청소년기 가정환경의 다양한 측면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분석을 위해 취약한 가정환경을 구분하는 기준에 사용된 '양육태도'와 같은 문항은 '엄격한 정도'를 묻는 문항으로 관점에 따라 취약하다고 보기에 이견(異見)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관련 문항이 구체적으로 보완된다면 면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 사료된다.

넷째, 본 연구에 사용된 종속변수인 출산행동의 '현재 자녀 수'는 생애 과정

동안 축적되고 누적된 결과이다. 따라서 미래 행위를 전망하고 경향성을 이해하는 것에는 ‘추가자녀 계획’을 종속변수로 산입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런데 여성가족패널 1차 조사 당시 응답자(기혼)의 87.2%는 출산계획이 없다고 밝혔으며, 그 이유는 ‘현재 자녀수에 만족해서’가 1순위를 차지하는 자료의 한계로 이를 분석대상에 반영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이런 연구의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유자녀 기혼여성의 출산행동에 미치는 과거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현재의 가족가치관과 결혼만족도 간의 영향력을 확인하였고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세창(2019). 혼인 및 자녀에 대한 가치관이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협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강유선·김찬우(2018). “후속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한국영유아보육학. 제110권. 59-84.
- 강유진(2007). “둘째자녀 출산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자녀가치관 및 가족관계 요인”.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18권 제4호. 639-653.
- 강혜진(2009). 저출산 시대 여성의 다자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요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공미혜·이수연(2012). “무자녀 기혼여성의 무자녀 결정 경험”. 가족과 문화. 제24권 제2호. 39-63.
- 공선영(2006). “경제위기 이후 인구학적 특성 및 사회경제적 특성이 기혼여성의 출산에 미친 영향”. 보건과 사회과학. 제1권. 119-149.
- 권복순·김태자(2010). “20대, 30대 여성들의 가족가치관에 관한 연구”.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523-548.
- 권수정(2008). 기혼 취업여성의 출산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고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승권·조애저·김유경·박세경·이건우(2004).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경신(1998).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가족가치관과 세대간 유사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3권 제2호. 43-65.
- 김경주·김영혜(2015).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자기분화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0권 제3호. 93-112.
- 김경중(2003). 아동발달심리. 학지사.
- 김미영(2006). 생태학적 관점에 따른 기혼여성의 출산행태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남진·김영희(2010). “기혼남녀의 자아분화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및 안정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5권 제1호. 197-225.
- 김사현(2009). “여성노동자의 고용조건과 출산”. 사회복지정책. 제36권 제2호. 113-137.
- 김상돈·김혜영(2015). “가족가치관과 가족 내 역할이 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결혼

- 연령의 매개효과 분석-”. 여성가족패널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285-307.
- 김정은(2010).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가정환경요인에 관한 차이분석.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태현·이삼식·김동희(2006). “인구 및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인구센서스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제29권 제1호. 1-23.
- 김태현(2005). “가치관 변화와 저출산”. 보건복지포럼. 16-24.
- 김은경·박신애(2019). “후속 자녀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특성 및 지역 사회 환경 요인에 관한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9권 제7호. 443-454.
- 김한곤(2015). “미혼율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시적 분석: 1990~2010”. 민족문화논총. 제61권. 147-172.
- 김혜환(2008). 저출산 시대의 가족가치관 경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희진(2004). “한국 부부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학연구. 제5권 제3호. 839-853.
- 노상미(2015). 기혼여성의 출산의도 및 출산행동 결정요인. 중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도미향(2011). “대학생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미래결혼과 출산행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제16권 제4호. 163-178.
- 류현수·이정아·김주아(2007). 가족관계와 복지. 서울:동문사.
- 문정희·김성순(2019). 가치관 분석을 통한 저출산 대응방안.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박경애·김혜원·주영아(2010). 청소년 심리 및 상담. 고양:공동체.
- 박상미(2018). “가족네트워크 하위요인의 대화와 지지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9권 제2호. 221-232.
- 박화윤·임경례·강영식·이연희·조진희(2010). 부모자녀관계론. 서울:동문사.
- 배광일(2015). “모의 심리적 요인 및 지역사회양육 환경이 출산포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67권 제1호. 31-53.
- 배광일·김경신(2012). “가족가치관 및 출산정책이 희망자녀수 출산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제43권 제3호. 239-266.
- 백나영(2013). 출산환경요인과 출산의지와와의 관계연구. 한영신학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백승숙(2020). 아버지의 결혼만족도와 양육참여도가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협성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브론펜브레너, 유리(1991). 브론펜브레너가 본 미국과 소련의 아이들. 문용린·김영철(역). 샘터.

- 서정연·김한곤(2015). “출산자녀수별 기혼여성의 출산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인구학. 제38권 제3호. 1-24.
- 서인균·이연실(2019) “청소년기 가족건강성과 부모됨 인식이 결혼의식에 미치는 영향”. 보건과 복지. 제21권 제4호. 149-168.
- 송민영(2018). “일가정양립정책, 직무만족도가 부부관계를 매개하여 취업모의 후속출산의도와 자녀가치에 미치는 영향”. 육아지원연구. 제13권 제3호. 5-32.
- 송영주·이주옥·김춘경(2011)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후속출산계획 관련 심리 사회적 요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제16권 제3호. 185-206.
- 송헌재(2012). “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한 우리나라 가구의 출산결정요인 분석”. 응용경제. 제14권 제3호. 51-78.
- 신나리(2013). “기혼여성의 취업 여부에 따른 둘째자녀 출산의도”. 한국생활과학회지. 제22권 제3호. 405-420.
- 신효영(2009).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가치관과 출산 장려에 대한 사회적 인식. 한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신효영·방은령(2008). “청소년들의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조사”. 미래청소년학회지. 제5권 제3호. 95-113.
- 신희진·이경숙(2006). 한국 대학생과 어머니의 형제수 및 자녀수에 대한 만족도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변인 연구.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 양성은(2004). “문화기술적 의사결정 모델에 따른 대학생들의 무자녀가족에 관한 인식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2권 제5호. 149-159.
- 염주희·정승은·주영선(2013). “다자녀 가정의 출산배경과 지원정책 욕구 분석에 관한 연구: 혼합방법론을 이용하여”. 保健社會研究. 제33권 제1호. 35-77.
- 오신휘·김혜진(2020). “텍스트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저출산’ 관련 연구동향 분석: 정부의 저출산 정책 추진 과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保健社會研究. 제40권 제3호. 492-533.
- 오유석(2015). “저출산과 개인화: ‘출산파업론’ vs ‘출산선택론’”. 동향과 전망. 제94권. 45-92.
- 오윤자·조소연(2001). “부모의 가족가치관 및 관련변수가 미혼성인자녀의 가족가치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제39권 제12호. 271-284.
- 오해섭·문호영(2020). Z세대 10대 청소년의 가치관 변화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윤경자(2010). “부산광역시 초저출산의 가족학적 요인 및 가족친화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제안”. 한국인구학. 제33권 제2호. 137-163.

- 윤영혜(2006). 세 자녀 이상 가정과 두 자녀 이하 가정의 출산관련 요인 비교.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은기수(2001).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첫 출산간격의 관계”. 한국사회학. 제 35권 제6호. 105-139.
- 이다경(20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 자아탄력성과 우울의 다중매개효과. 전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미란(2010). “기혼 여성이 처한 환경적 요인이 자녀에 대한 가치관과 출산행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5권 제1호. 99-121.
- 이민아(2013). “계획적 무자녀 가족 : 한국사회에서 아이 갖기의 의미와 가족주의의 역설”. 한국사회학. 제47권 제2호. 143-176.
-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보건사회연구. 제26권 제2호. 95-140.
- 이삼식·최효진(2014). 취업여성의 출산행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최효진·계봉오·김경근·김동식·서문희·윤자영·이상협·이윤석·천현숙(2016).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립·이철희·오신휘(2019). 만혼화와 출산이행 구조 변화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소영(2007). 기혼여성의 자녀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 및 출산장려 정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소은·김미나(2017). “보육서비스 만족도, 사회적 지원이 한 자녀 어머니의 후속 출산의도에 미치는 영향: 결혼만족도의 매개효과”. 열린유아교육연구. 제 22권 제3호. 25-43.
- 이수현(2012). “기혼여성의 무자녀 결정 시기와 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학 연구. 제22권 제3호. 43-88.
- 이인순(2011). 한국 기혼여성의 출산기피요인에 관한 연구. 인제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완(2018). 기혼여성의 자녀가치관과 추가출산의향의 관계에 관한 연구: 출산장려정책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가천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정순(2003).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23권 제3호. 5-19.
- 이정원(2007). 유자녀 취업여성의 후속출산의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진숙·최원석(2012). “기혼 직장여성의 출산계획 경로에 관한 연구: 성역할 태

- 도, 일가족양립갈등, 결혼행복감과 출산계획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사회 복지연구회. 제43권 제4호. 5-30.
- 이혜경(2011). “다자녀 가정 어머니의 자녀 양육 경험”. 유아교육학회집. 제15권 제6호. 377-406.
- 이현옥(2011). “한국여성의 출산의지 결정요인”. 정책개발연구. 제11권 제1호. 99-135.
- 이희연(2003). 인구학- 인구의 지리학적 이해-. 도서출판 법무사.
- 임양미(2015).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적용한 비취업모와 취업모의 후속출산계획 예측요인 탐색”.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제27권 제4호. 155-172.
- 임준호(2018). 원가족 부모의 부부관계가 기혼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임현주(2013). “인구, 사회학적 변인, 경제변인, 양육, 출산변인에 따른 후속출산 계획 연구”. 유아교육연구. 제33권 제3호. 35-58.
- 임희진·김지연·이경상·곽수민(2008). 2008 청소년 가치관 국제비교 조사.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 장영남(2013). 출산장려정책이 출산의지에 미치는 영향 연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정문성·박기범·설규주·김경모(2016).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교육적 대응과 사회과교육 모델 개발.
- 정미경, 박효정, 박종효, 김태은(2007). “출산·가족 친화적 가치교육에 대한 교사 인식과 요구.” 교육과정평가연구. 제10권 제1호. 145-171.
- 정성호(2009).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제32권 제2호. 161-183.
- _____(2010). “저출산 요인의 인과모형”. 사회과학연구. 제49권 제1호. 69-91.
- _____(2012).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국인구학. 제35권 제1호. 31-52.
- 정혜은·진미정(2008). “취업여부에 따른 기혼여성의 둘째자녀 출산의도.” 한국인구학. 제31권 제1호. 147-164.
- 조성남·최유정(2002). “가치관과 행위양식의 세대간 차이”. 한국사회학회 심포지움 논문집. 133-166.
- 조흥식(2006). 가족복지학. 학지사.
- 정아름(2021). 유자녀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과 출산행동의 관계: 결혼만족도와 가족가치관의 병렬다중매개효과.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2018). “기혼여성의 청소년기 가정환경요인, 가족가치관이 출산의지에 미

- 치는 영향”. 한국사회과학연구. 제37권 제3호. 147-174.
- 진경선(2018). “저출산의 심리적 요인”. 아산재단 창립42주년 기념 심포지엄 자료집. 147-167.
- 차우규(2015). “청소년의 결혼·출산관 연구”. 인구교육. 제8권. 91-114.
- 최소영·장진경(2016). “성인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가 결혼관에 미치는 영향: 성역할인식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제2권 제54호. 81-195.
- 통계청(2020). 인구주택총조사.
- 하상희(2008).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결혼만족도 및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6권 제2호. 129-141.
- 한상철(2004). 청소년학: 청소년이해와 지도. 서울: 학지사.
- 한중수(2010). “한국의 저출산의 원인”. 평화학연구. 제11권 제3호. 305-327.
- 홍대식(2005). “결혼의 질과 지속의사에 관련된 혼전 변인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9권 제2호. 67-90.
- 홍표자(2010). 청소년 가치관이 기대자녀수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Bartle-Haring, S. & Sabatelli, R.A.(1998). An intergenerational examination of pattern of individual and family adjust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0, 903-911.
- Beck, U. & Beck-Gernsheim, E.(1999). Varieties of Second Modernity: The Cosmopolitan Turn in Social and Political Theory and Research.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409-443.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Bronfenbrenner, U.(1979).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 Bryant, A. L. & Zimmerman, M. A.(2003). Role models and psychosocial outcomes among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8, 36-67.
- Erikson, E. H.(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Y: W. W. Norton & Company Inc.
- Esterlin, R.(1975). A Framework for Fertility Analysis. *Studies in Family Planning*, 6, 54-63.
- Forrest, M.(1991). *Family-of-Origin emotional health experiences as predictors of marital satisfaction*. Unpublished doctoral

- dissertation, University of Arkansas, Dissertation Abstract International-A, 53(8), 2688, 1993.
- Greendorfer, S. L.(1977). Role of socializing agents in female sport involvement. *Research Quarterly*, 48, 304-310.
- Hayes, A. F.(2012). PROCESS: A versatile computational tool for observed variable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modeling.
- _____(2015). The PROCESS macro for SPSS and SAS. <http://www.processmacro.org/>에서 2020.8.15. 인출.
- Hayes, A. F. & Matthes, J.(2009). Computational procedures for probing interactions in OLS and logistic regression: SPSS and SAS implementations. *Behavior research methods*, 41(3), pp.924-936.
- Hurlock, E. B.(1978). *Child development*. McGraw-Hill.
- Lamer, B.(2018). “South Korea’s most Dangerous enemy: Demographics”.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18/02/20/magazine/south-koreas-most-dangerous-enemy-demographics.html>.에서 2020.9.20. 인출.
- OECD(2018). OECD Family Database. <https://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에서 2020.9.20. 인출

Abstract

The Effects of Married Women with Adolescent Family Environment on Childbirth Behavior: Parallel Multiple Mediator model of Marital Satisfaction and Family Values

Ah Reum Jeong*·Jun Young Le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dolescent family environmental factors perceived by married women with children on childbirth, and to verify whether family values and marital satisfaction are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e response data of 6,210 married women with children of children were verified using SPSS 25.0 and Process Macro statistical progra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adolescent family environmental factors of married women with children of childbirth have a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on childbirth behavior. Second, it was foun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environmental factors and childbirth behaviors of married women with children of childbearing parents showed a significant partial mediating effect. Third, it was verified that marriage satisfaction had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family environmental factors and childbirth behaviors of married women with children.

The study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link the birth promotion policies with the youth policies in Korea.

Keywords : Adolescent Family Environment, Childbirth Behavior, Marital Satisfaction, Family Values

* First Author: PhD, University of Seoul, Dept. of Social Welfare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University of Seoul, Dept. of Social Welfare

20~30대 여성의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과 우울, 전위공격성의 관계: 자기침묵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손지빈*·홍정순**

초 록

본 연구는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과 우울 및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침묵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전국의 20~30대 여성 370명을 대상으로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 척도, 우울척도, 전위공격성 척도, 자기침묵 척도, 분노억제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SPSS 22.0, AMOS 18.0을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과 자기침묵, 분노억제, 우울 및 전위공격성간 유의한 상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은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과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분노억제는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넷째,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과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침묵과 분노억제가 순차적으로 이중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와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주제어 :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 분노억제, 자기침묵, 전위공격성, 우울, 혐오

* 제1저자 : 경기대학교 성평등센터 상담원(sinan0306@kyonggi.ac.kr)

** 교신저자: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day012@ajou.ac.kr)

I. 서론

우리는 종종 차이와 차별을 혼동한다. 사회가 문명화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계층이 생겨나기 시작하였으며, 이들 간의 ‘차이’는 ‘다름’으로 인정되기보다 차별의 대상이 되었다. 이민자, 유색인종이나 장애인 등이 차별의 주요 대상이며 여성도 예외는 아니다. 2019년 영국 이코노미스트가 발표한 유리천장지수에서 한국은 OECD 29개 국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여성공무원의 77.4%는 승진에서 ‘성차별’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인사혁신처, 2018), 한국 여성민우회가 2017년에 발표한 ‘성차별 보고서’에서는 참여자 1,257명 중 93%가 ‘한국은 성평등 국가가 아니다’라고 응답하였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일상생활에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심각성을 인식하는 비율로는 20대 여성의 경우 73.5%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반면, 20대 남성의 경우 33.1%로 현저한 차이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30대 젊은 여성들은 ‘비교적’ 공평한 교육과 사회진출의 기회가 보장되는 가정환경 속에서 성장하였다. 1990년대 이후 여성의 대학 진학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크게 증가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는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 향상에 관한 여러 법률의 정비가 이루어지면서 법적, 제도적 양성평등이 실현되는 듯 보인다(송유미·이제상, 20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임금은 남성에 비해 턱없이 낮고 취업한 이후에도 승진이나 교육훈련과 같은 근로조건에서 불리함을 경험해야 하는 등(곽현주·최은영, 2015) 여전히 현실에서는 성차별이 만연해 있다. 사회제도의 개선과 교육수준은 높아지고 있으나 20~30대 여성들에게 성차별이 더욱 높게 인식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성을 차별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으며,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이 기존에 이루어져왔던 명백한 성차별 이외에 당사자가 아니면 심각하게 느낄 수 없는 다른 방식의 미묘한 성차별로도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성차별이란 개인의 성(Sex; 남,녀의 구분) 혹은 젠더(Gender; 개인이 속한 문화 혹은 사회와 관련된 성적 자기 정체성)에 기반한 문제로 인지되거나 실제하는 사건(Barthelemy, 2016)으로, 여성 혹은 남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행동, 정책 등을 의미한다(김재은·김지현, 2016). 여성을 남성에 비해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명백하고 적대적인 성차별이 구시대적 성차별주의라면 좋은 의도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가부장적인 권위를 고집하는 방식을 현대적 성차별주의라고 한다(김예은, 2017). 현대적 성차별을 설명하기 위해 젠더 마

이크로어그레션(Gender Microaggression)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일상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는 언어적, 행동적, 환경적인 성차별로, 명백하고 노골적인 차별뿐만 아니라 일상속에서 일어나는 간접적이고 미묘한 차별을 포함한다. 이는 특별히 의도하지 않고 악의는 없지만 상대는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 차별을 의미하며(Sue, 2010). 온건하고 배려 하는듯한 방식으로 나타나기에 불쾌감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불쾌감을 느끼게 되는지 혼란스러울 수 있다(Sue, 2010). 농담인데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는 식으로 심각하지 않게 다루어지는 온정적 성차별 때문에 당사자는 자기의심, 소외감을 느끼게 되며(Nadal, 2010), 명백한 성차별보다 정신건강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Dumont, Sarlet, & Dardenne, 2010). 지금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성차별 연구는 전통적 성 고정관념과 성역할에 기반한 직접적이고 명백한 성차별을 중심으로(윤병해, 2006; 우양호, 2012)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적대적이고 명백한 성차별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20~30대 여성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이 여전히 높게 인식된다는 것은 일상속에서 일어나는 간접적이고 미묘한 성차별에 주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성차별과 관련 변인 간의 연구를 살펴보면, 여성들은 성차별경험으로 인해 불안, 분노, 우울, 심리적 디스트레스 등을 경험하며(Bosson, Pinel, & Vendello, 2010), 성차별과 여성의 정신건강 사이에 주된 매개요인으로 자존감(Fischer & Holz, 2007), 통제감 (Landry & Mercurio, 2009), 자기침묵(Hurst & Beesley, 2013)과 자기-대상화(McLaughlin, 2017)같은 요인들을 제안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성차별과 정신건강과의 구조적 관계를 밝혀내려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다. 김은하, 김수용, 김도연, 박한솔, 김지수(2017)는 직장내 성차별경험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부분매개효과를 보인다고 하였으며, 김은하, 김보라(2018)는 성차별경험이 침습적 반추를 통해 우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를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우울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또한 김예은, 연규진(2018)은 미묘한 성차별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를 분노가 매개하며, 이러한 매개효과는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의해 조절된다는 매개된 조절효과모형을 검증함으로써 미묘한 성차별경험의 영향을 밝혀냈다. 그러나 연구에 사용된 미묘한 성차별경험 척도는 Capodilupo와 Torino(2012)가 개발하고 Judson(2014)이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한국여성들이 경험하는 성차별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김예은·연규진, 2018). 이에 김은하(2018)는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의 여성들이 일상속에서 어떠한 성차별을 경험하는지를 알아보는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 척도

(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Scale: EGM)'를 개발하고 타당화 었다. 나아가 미묘한 성차별의 영향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축적됨으로써 차별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민감성을 높이고 성차별 예방 노력이 확산되기를 기대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척도를 사용하여, 한국의 20~30대 여성들이 경험하는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이 여성들의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일상속 성차별경험이 내현적으로는 우울에, 외현적으로는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고 그 기제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차별경험의 영향과 그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한편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우울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울은 특히 여성에게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심리적 장애로(National Health of Mental Health, 2016) 단순한 슬픔 또는 울적한 기분 상태에서 지속적인 상실감, 무력감을 포함하여 정서장애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심리상태를 의미한다(Beck, 1989). 지속적인 성차별경험은 우울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한인희, 2005; Klonoff & Landrine, 1995). 성차별경험 후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으로 우울이 보고되고 있다(Swim et al., 2001). Kessler, Berglund, Demler, Jin, Merikangas와 Walters(2005)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에 취약한 이유 중 하나가 여성의 성차별경험일 수 있음을 논의한 바 있으며, Jack(1991)은 특히 우울증이 여성에게 더 많이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하여 자기침묵(self-silencing)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Jack 과 Dill(1992)에 따르면, 일부 여성들은 친밀한 관계경험에 근거하여 자기개념을 형성하는데, 이런 친밀한 관계를 확립하거나 유지하는 과정에서 자기침묵이라는 극단적이고 병적인 인지도식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즉 여성들은 좋은 관계를 형성하고 타인과의 친밀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과 자기-부인의 중요성을 학습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침묵적 인지도식도 함께 습득하게 된다. 특히 이런 자기침묵적 인지도식은 대인관계 속에서 상호작용을 할 때 여성으로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성역할에 관련된 신념을 만들어 내며, 이는 자신의 생각이나 정서는 제한하고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거나 행동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된다(Jack, 1993). 이러한 역기능적 인지도식은 일시적인 관계 유지에는 효과적인 것으로 보이나 결국에는 내적 갈등을 일으키고(Jack & Ali, 2010), 내면의 분노를 누적시키며(Harper & Welsh, 2007) 우울을 높이고 심리적 장애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강석·이지연, 2013; 김명화·홍혜영, 2011; Gross & Jhon, 2003). Jack (1991)은 여성들이 남성중심의 사회속에서 전통적 성역할에 대한 사회의 압력

적 기대들로 인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자기침묵을 학습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즉 여성에게 성 고정관념적 방식으로 행동하기를 요구하는 사회, 혹은 문화적 기대들이 여성 스스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욕구를 먼저 받아들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만듦으로써 자기침묵을 높인다는 것이다. 여성들은 성차별적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직접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스스로 침묵하는 경향이 있으며(Klonoff, 1995), 성차별 경험은 자기 침묵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Hurst & Beesley, 2013). 특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미묘하고 교묘한 형태의 성차별은 전통적 성역할을 유지하는 여성에게는 격려와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나타나고(Fiske & Glick, 1995; Glick et al., 2002) 이로 인해 차별 상황이 자칫 배려 혹은 매너로 느껴지는 경우가 많아 차별에 대항하여 즉각 반응 할 수 없게(Garcia-Retamero & Lopez-Zafra, 2006)한다. 최근 부산대학교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직접적이고 적대적인 성차별이 아닌 온건하고 미묘한 성차별은 남,녀 학생 모두에게 인식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인지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여학생들이 침묵하는 등 소극적 대응을 한다고 하였다(박지영, 2017). 이를 통해 일상속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성차별경험이 자기침묵과 관련이 있으며 나아가 우울에 이를 수 있음을 예상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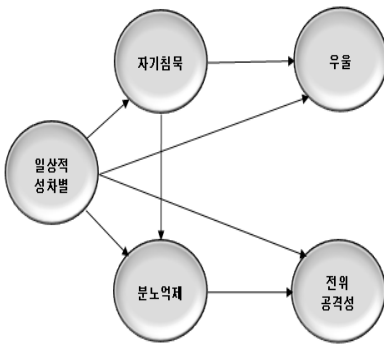
한편 미묘한 성차별경험은 내현화 문제 뿐 아니라 외현화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대표적 외현화 문제로 전위공격성을 선정하였다. 전위 공격성(Displaced Aggression)은 ‘종로에서 뽕 맞고 한강에서 눈 흘기는 식’으로 일차적 분노를 유발한 대상이 아닌 무고한 대상에게 공격성이 향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Dollard et al., 1939; Denson, 2006). 분노 사건을 접하게 되면 공격성과 연합된 사고, 기억, 행동 반응이 차례로 활성화되는데, 이때 분노를 유발시킨 대상이 사라졌거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커져 직접적인 공격이 힘든 상황에서는 공격성을 억제하게 된다. 억제된 공격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유지되는데, 유지된 공격성이 반추를 거쳐 증폭되면서 촉발사건을 야기한 이차 대상을 향해 전위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Miller, 2001). 성차별경험과 전위공격성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살펴본 연구는 현재까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사회적 배제경험(이수진, 2018; 황정윤, 2017), 학대경험(최영·김현수, 2018)과 같은 외적 사건들이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힘의 차이에서 비롯된 좌절 경험으로, 분노와 관련성이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성차별 경험에 대해 즉각적으로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는 여성들은 ‘히스테리를 부린다’거나 ‘예민하다’와 같은 부정적 평가를 받는 경

우가 많고(Meyers, 1997; 손은주·김성진·최인철, 2017) 이러한 사회적 인식들은 여성들이 성차별을 경험했을 때, 가장 많이 느끼는 분노의 감정(Bosson, Pinerl, & Vandello, 2010)을 억압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분노를 유발하는 대상의 상대적 지위에 따라 개인의 분노 표현이 조절되고(Allan, & Gillbert, 2002) 문화적 배경에 따라 표현의 차이가 다를 수 있음(Park et al., 2013)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의 여성들의 분노표현이 적극적이지 않을 수 있음이 예상가능하다. 이렇게 억제된 분노의 감정은 기분을 향상시키고 낮아진 사회적 영향력을 회복시키기 위해 공격성을 표출(Bushman et al., 2005; Leary, Twenge, & Quinliven, 2006)하게 되는데, 상대방이 높은 지위를 가졌거나 신체적으로 우월한 경우에 분노가 억제되고 직접적인 공격성은 제한되면서(Dollard et al., 1939), 관계없는 제3자에게 전위공격성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일상속 성차별경험도 힘의 차이에서 비롯된 좌절경험으로 분노와의 관련(Bosson, pinel, & Cendello, 2010; Lafrance, Woodzicka, 1998; Swim et al., 2001)을 배재할 수 없는 바, 본 연구는 일상속에서 행해지는 미묘한 성차별경험이 공격의 대상에게 즉각 대응하지 못하고 좌절감에 대한 반응을 반복함으로써 억압된 분노의 감정이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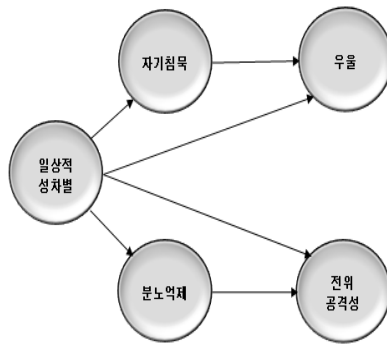
한편, 일상속 성차별경험이 분노억제를 통하여 전위공격성으로 가는 과정에서 자기침묵이 분노억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기침묵은 여성이 사회화되는 과정에서 학습하는 인지도식으로, 여성들은 자신이 당한 부당한 일들을 드러내지 않도록 강요되어 왔다(송성자, 1997). 이러한 역기능적인 인지도식은 다양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회피하면서 억제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김소정(2014)은 자기침묵과 분노억제가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으며, 최한나(2018)는 자기침묵이 관계 속에서 타인의 요구에 자신을 맞추는 인지도식으로 분노억제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Brody(1999) 또한 자기침묵 성향이 높은 경우 분노표현에 대한 두려움 및 분노억제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이에 성차별경험이 자기침묵과 분노억제를 통하여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종합해보면, 본 연구는 일상속 성차별경험과 우울 및 전위공격성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인으로 자기침묵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모형은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및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과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의 매개효과, 그리고 자기침

목과 분노억제의 이중매개효과가 나타난 모형이다. 경쟁모형은 자기침묵이 분노억제로 가는 경로를 삭제한 모형이다. 자기침묵과 분노억제와의 관련성이 몇몇 연구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기에 이들 간의 관련성이 없을 수 있음을 가정하여 경로를 삭제한 모형을 경쟁모형으로 제시하고 둘 간의 비교를 통하여 모형을 확정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둘째,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과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의 매개효과가 있는가? 셋째,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과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침묵과 분노억제의 이중매개효과가 있는가?



[그림 1] 연구모형



[그림 2] 경쟁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 참여자 및 절차

만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참여자 모집을 위해 한국의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과 직장인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하여 설문을 완료한 370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에 소요된 시간은 약 16분 정도였으며, 참여자들에게는 1,500원에 해당하는 기프티콘을 보상으로 제공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연령은 만 20~29세가 225명(60.8%), 만 30~39세가 145명(39.5%)이었다. 대학교 졸업이 153명(41.4%), 대학원졸업 이상이 105명(28.4%)이며 그 뒤로는 전문대학졸업이 63명(17%), 고등학교졸

업 이하가 49명(13.2%)이었다. 미혼(비혼)이 264명(71.3%)으로 가장 많았고, 기혼이 96명(25.9%), 동거와 이혼·사별이 각각 5명(1.4%)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직업은 회사원이 137명(37%)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 95명(25.7%), 취업 준비중 36명(9.7%), 시간제 업무 28명(7.6%), 가정주부 27명(7.3%), 자영업 14명(3.8%)이며, 기타 38명(8.9%)이었다.

2. 측정도구

1)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 경험 척도

여성들의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은하(2018)가 개발 및 타당화한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 척도(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Scale : EGM)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명백한 형태의 성차별부터 간접적이고 미묘한 형태의 성차별을 포괄하는 ‘젠더 마이크로어그레션(gender microaggression)’ 개념을 적용하여 한국 여성들이 일상에서 경험하는 미묘하고 모호한 성차별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이다. 총 두개의 하위요인이 있으며 성차별 부정과 성역할 고정관념 9문항(예: 남자동료, 선배, 상사가 나에게 커피나 차를 준비하라고 당연하게 요구한 적이 있다.), 여성의 미모를 강조하는 5문항(예: 남자로부터 ‘여자는 어릴수록 좋다’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으로 모두 1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1=전혀 경험한 적이 없다, 5= 매우 자주 경험했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일상속에서 성차별 경험을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은하(2018)의 연구에서는 .93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를 나타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나타났다.

2) 우울

Radloff(1997)가 개발한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를 전검구, 최상진, 양병창(2001)이 타당화한 한국판 CES-D를 사용하였다. 20문항의 단일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인들의 우울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널리 활용되고 있다. 최근 일주일 동안 생활속에서 느낀 감정이나 기분과 관련된 것에 대한 내용(예: 사람들이 나에게 차갑게 대하는 것 같았다)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4단계 Likert식 척도(0=극히 드물게 1=가끔 2=자주 3=거의 대부분 5~7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전검구 등(2001)의 연구에서는 .91의 내적합치도를 나타냈으며 본 연

구에서는 .94의 내적합치도를 나타냈다.

3) 전위공격성

Denson, Pedersen과 Miller(2006)가 개발하고 서민재(2009)가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전위공격성 척도 (Korean Version of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K-DAQ)를 사용하였다. 분노반추 10문항(예: 나는 나를 화나게 한 사건에 대해 오랫동안 생각 한다), 보복계획 9문항(예: 누군가 나를 공격하면 머지않아 되갚다 준다), 행동적 전위된 공격성 10문항(예:나는 누군가 나를 화나게 하면,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푼다)으로 3요인,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점 Likert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전위 공격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서민재(2009)의 연구에서는 .95의 내적합치도를 나타냈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확인되었다.

4) 자기침묵

Jack과 Dill(1992)이 개발하고 김미진(2009)이 번안한 자기침묵척도를 사용하였다. 외현화된 자가지각 6문항(예: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내가 책임이 있다고 느낀다), 자기희생을 통한 돌봄 9문항(예: 배려하는 타인의 욕구를 내 욕구보다 먼저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자기침묵 9문항(예: 나는 친한 사람들에게 좀처럼 화내지 않는다), 분리된 자기 7문항(예: 내 애인이 나를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 나의 어떤 모습은 드러낼 수가 없다)으로 4요인, 총 31문항이다. 5점 Likert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자주 그렇다)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침묵 경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Jack(1993)의 연구에서는 .86의 내적합치도를 나타냈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을 나타냈다.

5) 분노억제

Spielberger, Krasner 그리고 Solomon(1988)이 개발한 STAXI(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를 전경구, 한덕웅, 이장호와 Spielberger(1997)가 번안 및 타당화한 한국판 상태특성 분노 표현 척도(State-Trait Anger Expression Inventory Korean Version : STAXI-K)를 사용했다. 총 44문항으로 분노억제, 분노표출, 분노통제, 상태분노, 특성분노의 다섯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맞는 분노억제 8문항(예: 나는 속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한다)만 사용하였다. 4점 Likert척도

(1=전혀 아니다, 4=언제나 그렇다)로 구성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억제의 경향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전검구(1988)에서는 .76의 내적합치도를 나타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의 내적합치도를 나타냈다.

3. 자료분석 및 연구 절차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 22.0과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기술통계, 상관분석, 내적합치도를 산출하였고, 연령과 직업을 나누어 주요변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차이검증을 실시했다. 모형검증은 Anderson과 Gerbing(1988)이 제안한 2단계 접근법을 적용해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순차적으로 검증했으며 특히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χ^2 과 함께 CFI, TLI, RMSEA를 확인하였다. 이때, CFI와 TLI는 .95이상이면 좋은 적합도, RMSEA는 .08이하이면 괜찮은 적합도로 해석한다(홍세희, 2000). 마지막으로,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5,000개의 샘플을 이용하여 Bootstrapping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때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구간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해당 간접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Shrout & Bogler, 2002).

III. 결과

1.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특성과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 변인들 간의 pearson 상관계수와 각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측정 변인들의 왜도는 절대값이 2미만이고, 첨도의 절대값은 7미만으로 정규분포성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Curran, West, & Finch, 1995).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은 분노억제($r=.406$, $p<.01$), 자기침묵($r=.328$, $p<.01$), 전위공격성($r=.317$, $p<.01$) 그리고 우울($r=.269$,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분노억제는 자기침묵($r=.447$, $p<.01$), 전위공격성($r=.551$, $p<.01$) 그리고 우울($r=.375$, $p<.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으

며, 자기침묵은 전위공격성($r=.376$, $p<.01$), 우울($r=.416$, $p<.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전위공격성 또한 우울($r=.416$, $p<.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각 변인들의 기술통계량 및 상관분석($N=370$)

	1	2	3	4	5
1. 성차별경험	1				
2. 분노억제	.406**	1			
3. 자기침묵	.328**	.447**	1		
4. 전위공격성	.317**	.551**	.376**	1	
5. 우울	.269**	.375**	.573**	.416**	1
평균	3.51	2.54	2.98	3.43	2.02
표준편차	.76	.64	.6	1.18	.64
왜도	-.44	-.22	.23	.1	.51
첨도	-.42	-.46	.14	-.79	-.55

* $p<.05$, ** $p<.01$, *** $p<.001$

2. 연령과 성별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검증

1) 각 각 연령대와 변인들 간의 차이검증

각 변인과 연령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20대와 30대 여성들은 미묘한 성차별경험($t=-1.964$, $p<.05$)과, 우울 ($t=-3.046$, $p<.01$)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30대 여성이 20대 여성에 비해 미묘한 성차별을 경험하는 수준이 더 높은 반면 우울은 20대 여성에서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자기침묵, 분노억제, 전위공격성은 두 연령대 간 차이를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2〉 연령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변인	20대 (n=224)	30대 (n=146)	t
미묘한성차별경험	3.45(.81)	3.61(.68)	-1.964*
자기침묵	2.99(.61)	2.96(.59)	.486
분노억제	2.54 (.66)	2.55(.61)	-.100
우울	2.10 (.64)	1.89(.62)	3.046**
전위공격성	3.45(1.14)	3.41(1.25)	.298

*p<.05, **p<.01, ***p<.001

2) 각 직업군과 변인들 간의 차이분석

각 직업군에 따라 주요 변수의 수준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노억제($F=4.882$, $p<0.1$), 우울($F=6.596$, $p<0.1$) 그리고 전위공격성($F=5.019$, $p<0.1$)은 직업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cheffé를 활용하여 사후 검증한 결과 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은 직장인에 비해 더 많은 분노를 억제하며, 이들은 직장인과 주부에 비해 더 높은 우울감을 느낀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전위공격성은 직장인에 비해 학생과 취업준비생들이 더 많이 경험하는 변수로 확인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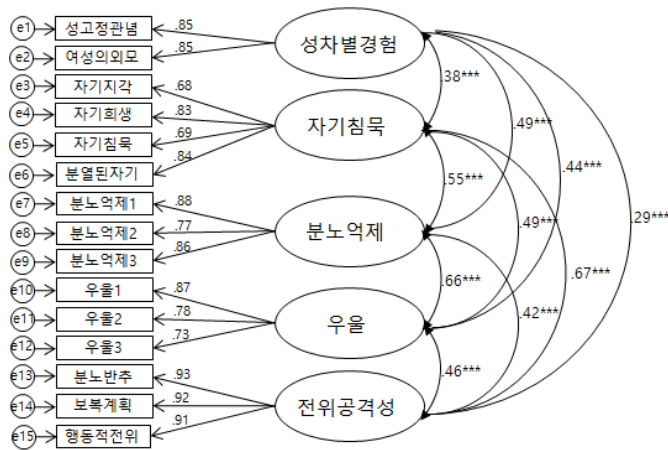
〈표 3〉 연령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변인	학생/취업준비(a) (n=134)	직장인(b) (n=209)	전업주부(c) (n=27)	F	Scheffé
미묘한 성차별 경험	3.51(.82)	3.50(.73)	3.63(.70)	.333	-
자기침묵	3.05(.63)	2.94(.60)	2.91(.47)	1.544	-
분노억제	2.68(.65)	2.46(.63)	2.51(.64)	4.882**	b<a**
우울	2.17(.70)	1.95(.62)	1.83(.49)	6.596**	b<a** c<a*
전위 공격성	3.69(1.12)	3.30(1.20)	3.20(1.15)	5.019**	b<a**

*p<.05, **p<.01, ***p<.001

3. 측정모형의 검증

연구모형을 비롯한 경쟁모형을 검증하기에 앞서 측정변인들이 해당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구인하는지를 측정모형의 검증을 통해 알아보았다. 단일 요인으로 확인된 분노억제와 우울에 대해서는 Rogers와 Schmitt(2004)이 제안한 것과 같이 요인부하량 크기를 기준으로 문항 묶음(item parceling)을 사용하여 각각 3개의 측정 변인을 구성하여 검증하였다. 검증결과, 측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210.294$, TLI=.952, CFI=.963; RMSEA=.066]. 구체적인 검증결과를 [그림 3]에 제시하였는데, 각 잠재변인들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요인부하량은 표준화 계수를 기준으로 살펴 보았을때 .68~.93이며 모두 $p<.001$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표준화 회귀계수가 Cohen(1988)이 제시한 최소 기준인 .30 보다 크며, 따라서 15개의 측정변인으로 5개의 잠재변인을 구인한 측정모형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3]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4. 구조모형의 검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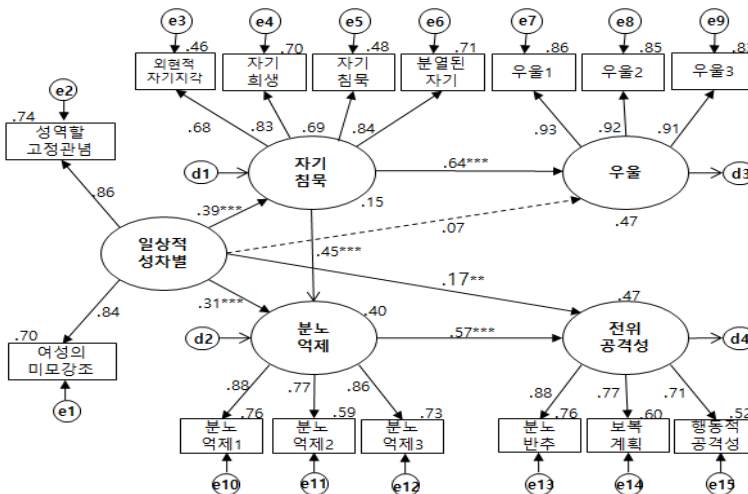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수립된 모형이 연구 자료에 적합한지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연구모형, 경쟁모형 각각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검증결과는 <표 4> 및 [그림 4]와 [그림 5]에 제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연구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chi^2(110) = 327.059$; RMSEA

= .073(90% 신뢰구간: .064 ~ .082); TLI = .926; CFI = .940]. 경쟁모형 또한 수집된 자료에 비교적 적절하게 부합되었다[$\chi^2(111)= 388.203$; RMSEA = .082(90% 신뢰구간: .073 ~ .091); TLI = .907; CFI = .924].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은 서로 내재된 관계에 있기 때문에 χ^2 차이검증을 통해 최종모형을 선정하였다.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χ^2 차이검증을 실시한 결과, 자유도 차이는 1이며, 이에 대한 $\Delta\chi^2$ 값은 61.14로 나타났다. 이는 자유도가 1일때 유의수준 .05에서의 임계치인 3.84보다 크므로, 두 모형의 χ^2 값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연구모형이 경쟁모형보다 경로를 한 개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계치 수준 이상으로 모형의 적합도를 향상시켰다는 것을 말한다. 다른 적합도 지수 또한 연구모형이 경쟁모형보다 좀 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연구모형을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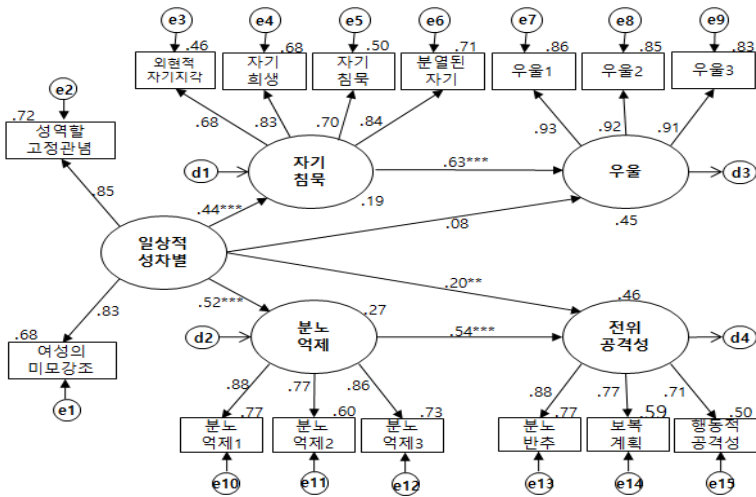
〈표 4〉 연구모형과 경쟁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Delta\chi^2$	p	TLI	CFI	RMSEA (90% CI)
연구모형 (최종모형)	327.059	110		.000	.926	.940	.073 (.064~.082)
경쟁모형	388.203	111	61.14	.000	.907	.924	.082 (.073~.091)

*p<.01, **p<.001



[그림 4] 연구모형(최종모형)



[그림 5] 경쟁모형

최종모형의 경로계수를 <표 5>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이 자기 침묵으로 가는 경로($\beta=.390, p<.001$)와 분노억제로 가는 경로($\beta=.309, p<.001$)에서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이 우울로 가는 경로($\beta=.068, n.s$)에서는 유의미함을 확인 할 수 없었지만, 전위공격성으로 가는 경로($\beta=.175, p<.01$)에서는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자기침묵은 분노억제로 가는 경로($\beta=.448, p<.001$)와 우울로 가는 경로($\beta=.644, p<.001$)에서 정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고, 분노억제는 전위공격성으로 가는 경로($\beta=.572, p<.001$)에서 정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표 5> 최종모형의 경로계수

	B	β	S.E	C.R
성차별경험 → 자기침묵	.270	.390	.045	6.046***
성차별경험 → 분노억제	.341	.309	.064	5.303***
성차별경험 → 우울	.071	.068	.054	1.315
성차별경험 → 전위공격성	.265	.175	.091	2.906**
자기침묵 → 분노억제	.716	.448	.099	7.264***
자기침묵 → 우울	.979	.644	.097	10.092***
분노억제 → 전위공격성	.786	.572	.093	8.470***

***p<.001, **p<.01

마지막으로 자기침묵과 분노억제의 간접(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Bootstrap 기법을 사용하였으며 간접효과의 추정치와 95% 신뢰구간을 산출하였다. 이때 신뢰구간 내에 0이 포함되지 않으면 간접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으로 간주한다. 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의 매개효과(95% Bias-Corrected CI={.102, .199}),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과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분노억제의 매개효과(95% Bias-Corrected CI={.121, .274}),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과 전위공격성의 관계에서 자기침묵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95% Bias-Corrected CI={.045, .119}) 모두 신뢰구간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매개효과가 유의 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표 6> 최종 모형의 간접효과 검증 결과

경로	95% Bias Corrected CI	
	Lower	Upper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 → 자기침묵 → 우울	.102	.199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 → 분노억제 → 전위공격성	.121	.274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 경험 → 자기침묵 → 분노억제 → 전위공격성	.045	.119

IV. 논 의

본 연구는 전국의 20~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EGM)과 우울 및 전위공격성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자기침묵과 분노억제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했다. 주요 결과와 그에 따른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은 자기침묵, 분노억제, 우울, 전위공격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많을수록 높은 자기침묵을 보고했던 Hurst와 Beesley(2013)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자기침묵은 우울과 정적 상관이 있고(Jack, 1991)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우울과 정적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한 Nadal (2010) 그리고 Swim(2001)의 연구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앞서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은 우울과 정적상관(Nadal, 2010)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있었으나 전위공격

성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이 전위공격성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차별 경험의 내현적 문제인 우울 뿐만 아니라 외현적 문제인 전위공격성과도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직업과 연령에 따른 주요 변인들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차이검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 분노억제, 우울, 전위공격성에서 유의한 통계적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어떤 집단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Scheffé를 실시한 결과 학생/취업준비형이 직장인보다 분노억제, 전위공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취업준비형이 직장인에 비해, 그리고 전업주부에 비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셋째, 변인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연구모형은 적절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고,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과 우울의 직접경로를 제외한 모든 경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기침묵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즉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이 직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치기보다 자기침묵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는 차별경험을 통해 자기침묵을 형성하고(Hurst & Beesley, 2013; Watson & Grotewiel, 2016), 조직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을 해도 남성에 비해 더 방어적으로 침묵한다(김가은 외, 2018)는 연구 결과와도 같은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방어적 침묵은 자신을 보호하기보다 결국은 우울이라는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될 가능성을 키우는 매개임을 확인하였으며 어린 시절부터 학습으로 도식화되는 자기침묵이 올바르게 표현되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과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과 전위공격성과의 관계에서 분노억제는 부분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묘한 성차별은 직접적으로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는 분노억제를 통하여 전위공격성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분노가 억제될수록 대인관계 속에서 불안과 우울이 높아지고 억압된 분노감정은 정신증의 원인이 될 수도 있으며(Solomon, 1998), 정서적 외상경험이 분노억제를 통해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이나영(2016)의 연구와도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정서표현에 대한 갈등이 높을수록 분노를 더 많이 억제하고, 전위공격성을 더 많이 나타내는 경향을 나타낸다는 연구(황엘라, 2017)도 있다.

본 연구는 일상 속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전위공격성과의 관계에서 자기 침

목과 분노억제의 순차적 이중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즉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 경험은 자기침묵의 역기능적 인지도식을 자극함으로써 분노억제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전위공격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차별경험 이후 여성들이 침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Hurst & Beesley, 2013), 자기침묵은 많이 사용할수록 분노를 더 많이 느끼고 억압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황지연·연구진, 2018). 다시 말해 자기침묵과 분노억제가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전위공격성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이해할 수 있으며 성차별 경험이 전위공격성으로 표현되는 구체적인 경로를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여 개인의 인지적, 행동적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는데 시사점이 있다.

종합해보면, 성차별은 오랫동안 다루어져 온 사회적 이슈로 관련 제도 및 정책이 만들어지면서 명백한 성차별에서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성차별의 방식이 미묘하고 현대적으로 변모하면서 그 변화를 체감하기가 쉽지 않다. 현대적 성차별은 가해자 뿐 아니라 피해자도 알아차리기가 힘들만큼 교묘하고, 미묘하게 행해지기 때문에 대응방법도, 개입방법도 명료화 하기가 힘든 현실이다. 더욱이 여전히 많은 여성들은 관계유지와 형성을 위해 차별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침묵이라는 사회화 전략을 내세움으로써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숨기고 순응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며 암묵적으로 학습하고 있다(Gilligan, 1983). 따라서 성차별을 경험했을 때 ‘나대지 말아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등의 사회 속 암묵적 기대에 부응하고 이때 어릴 때부터 학습되어 온 자기침묵이라는 역기능적 인지도식을 작동하게 된다. 또한 여성들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서도 긍정적 피드백을 기대하기 힘든 사회 분위기는(손은주·심성진·최인철, 2017)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자기정서와 자기표현을 억압하게 되어 결국 자기희생과 자기부정을 일으켜 우울증 발생에(Remen, chambless & Rodebaugh, 2002)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와 같은 집단주의 사회 속에서는 개인으로서의 자기보다 집단 내에서의 자기가 더 강조되기 때문에 조직 속에서 개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고(Kim, Atkinson & Yang, 1999) 성차별 경험으로 나타나는 분노 또한 억제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에 따르면 우울, 분노, 부당함 등의 감정 경험을 측정하는 울분 지수가 2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데, 이와 같이 성인 초기 여성이 남성보다 더 심한 분노와 울분을 보이는 것은 성별을 기반으로 한 불평등 경험, 즉 성차별 경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고려된다.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인해 분노를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눌러왔던 과거의 여성들과는 달리(이영화, 김경연, 2013),

성차별 문제를 포함하여 자신에게 주어지는 부당함에 대해 분노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현재 20~30대 여성들에 대한 심리적 관점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하겠다. 20~30대 여성이 경험하는 성차별과 분노 반응 및 공격성은 개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해가 필요하나, 아직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사회적인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과도기적 단계에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2015년 UN Women은 성차별 현상에 대한 주의를 주기 위해 ‘성차별 고발 광고’를 제작했고, 영국의 심리학자이자 작가인 Bates(2017)는 ‘Everyday sexism project’를 통해 개인의 일상 속 성차별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여전히 우리 사회 속에서 성차별이 만연함을 알리고자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최근 미국에서 시작된 ‘ME TOO’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한국 여성의 전화’에서도 ‘그 일은 전혀 사소하지 않습니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성차별경험에 대하여 함께 고민할 것을 독려하고 있다. 이런 작은 움직임들은 일상 속 미묘한 성차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성차별은 더 이상 침묵해야 하는 개인적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공유해야 할 문제임을 알리는데 한몫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성차별에 관련한 연구는 성차별적 상황을 기술하거나 개인 내적 문제에 집중한 연구들이 대부분이었으나 본 연구를 통해 미묘한 성차별경험과 전위공격성과의 관계가 자기침묵과 분노억제의 이중매개함을 확인하고, 자기침묵과 분노억제가 전위공격성을 예측하는 기제가 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성차별경험과 전위공격성과의 관계를 통해 행동적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성차별경험이 개인 내적 문제 뿐 아니라 외현화 문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밝혀냈다. 이는 성차별로 인해 여성이 받는 피해에 대해 실증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활발한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분노의 감정은 해소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사라지지 않고 반추를 통해 더욱 더 증폭되고 이는 촉발사건으로 제 3의 대상에게 전위공격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치료적으로는 분노를 유발하는 상황과 요인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이를 유지시키는 인지적인 과정들에 대해 파악하여 분노억압을 차별에 대한 방략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할 수 있겠다. 구체적으로는 분노와 관련된 인지행동 혹은 신체적, 정서적인 요인들을 찾아보고 조절할 수 있는 인지 이완 훈련이나, 감정 표현 기법(박혜성·홍창희, 2008)등의 치료적 개입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한편, 최근 연구를 보면 마음챙김이나 자기자비 프로그램의 경우 자기 비판을 완화

하는데 도움이 되며(최영민, 2011; 강재연·장재홍, 2017), 자기주장 훈련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생각이나 의견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자기주도적인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개입방법(문은주, 2017)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Budge, Rossman, & Howard. (2014)는 차별 경험을 겪었다 하더라도 사회적 지지를 더 많이 경험할수록 불안이 완화되고 양지수(2021)는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자기침묵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 추구 대처의 조절효과가 유의하다는 보고를 한 바 있다. 이로 비추어 볼 때 성차별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함이 시급하다. 사회적 지지라 함은 가족이나 친구로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것으로, 조언이나 정서적지지,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기회를 증가(Shorter-Gooden, 2004)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이는 믿음에 대해 보호받는 느낌을 통해 차별로 부터 자유로운 사회로 한발 다가갈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의 2-30대 여성들을 골고루 표집하고자 하였으나 대부분은 서울 경기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가자들의 70% 이상은 비혼을 포함한 미혼자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한 표본수집으로 다양한 환경과 직업군의 표본수집이 불가능했기에 연구결과에 편파적으로 작용하였음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예상되며 추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활환경속에서 표집 된 집단과, 20-30대 여성만이 아닌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성차별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비교해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이다. 나아가 의미있는 질적연구 혹은 한국인의 정서에 부합하는 문항들이 포함된 척도의 사용에 제한점이 있었음을 고려한 연구진행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과 전위공격성과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유사연구에 대한 추론을 통하여 변인을 선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경험이 자기침묵과 분노억제를 통하여 전위공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변수 간 상관의 선후를 고려할 수 없었던 바 깊이 있는 경로에 대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변인들을 검토와 통제를 통해 이들의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변수들이 개인의 기질적 문제로 작용하지는 않는지를 확인하는 질적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셋째, 본 연구는 미묘한 성차별경험이 우울 및 전위공격성과의 관계에서 관련 기제를 확인한 탐색적 연구로써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각 변인들의 인과를 밝히고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추후 연구에서는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 경험이 반영된 실험 연구를 통해 좀더 구체적인 인과 도출을 기대해 본다.

넷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이용하여 자료가 수집되었기에 사회적 바람직성으로 인한 응답편향 및 편파적 반응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연구자들의 내면적 특성이 드러내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하여 2-30대 여성들이 겪는 일상속 미묘한 성차별 경험 및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해봄으로써 성차별경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석·이지연(2013). “청소년의 실제-이상 자기불일치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의식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중등교육연구*. 제61권 제4호. 811-839.
- 강재연·장재홍(2017). “마음챙김-자기자비 집단프로그램의 효과: 자기비판 성향을 지닌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9권 제2호. 335-356.
- 곽현주·최은영(2015).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정과 노동시장의 성불평등 구조를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88권 제1호. 429-456.
- 김가은·엄유진·권기성·김연수(2018). “직장인의 미투운동 인식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27권 제2호. 33-68.
- 김명화·홍혜영(2011). “자기침묵이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0권 제1호. 69-97.
- 김미진(2009). *여대생의 자기침묵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정서표현에 대한 양가성과 정서인식명확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소정(2014). *대학생의 사회부과적 완벽주의와 분노억압 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은. (2017). 20~30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여성주의 정체성 차원에 의해 조절된 분노의 매개효과.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예은·연규진(2018). “20~30대 여성의 미묘한 성차별 경험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3권 제3호. 499-523.
- 김은하(2018). “일상속 성차별 경험 척도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문화 및 사회문제*. 제24권 제4호. 593-614.
- 김은하·김보라(2018). “성차별경험과 우울간의 관계에서 반추 하위유형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3권 제3호. 335-354.
- 김은하·김수용·김도연·박한솔·김지수(2017). “직장 내 성차별 경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우울에 대한 연구: 척도 개발 및 매개효과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2권 제4호. 643-667.
- 김재은·김지현(2016). “성별에 따른 남성중심집단과 여성중심집단의 양가적 성차별주의와 강간통념의 관계”. *상담학연구*. 제17권 제1호. 187-205.
- 문은주(2017). “주장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청소년 상담연구*. 제25권 제1호. 135-154.

- 박지영 釜大新聞(2017.03.6.). 우리학교 학생이 바라본 대학 내 여성차별.
<http://weekly.pusan.ac.kr/news/articleView.html?idxno=6088>에서
 2017.3.26.인출.
- 박혜성·홍창희(2008). “고등학생들의 분노표현방식에 따른 감정표현기법과 인지
 이완기법의 효과”. 한국사이코드라마,소시오드라마학회. 제11권 제2호.
 53-69.
- 서민재(2009). 전위 공격성(Displaced aggression)과 심리적 안녕감, 자아존중
 감 및 정신건강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은주·김성진·최인철(2017). “성차별에 대응한 여성이 감수해야 하는 것들”. 한
 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333-333.
- 송성자(1997). “집단주의와 개인주의 문화 비교와 한국 가족치료 접근 전략”. 한국
 가족치료학회. 제5권 제1호. 1-26.
- 송유미·이제상(2011). “저출산의 원인에 관한 연구: 산업사회의 변화와 여성의 사
 회진출을 중심으로”. 保健社會研究. 제31권 제1호. 27-61.
- 양지수(2021). 미묘한 성차별경험, 자기침묵이 심리적 디스트레스에 미치는 영
 향: 스트레스 대처전략의 조절된 매개효과. 성신여자 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양호(2012). “공직사회 성차별의 양가적 차원과 요인 검증 : 지방공무원을 중심
 으로”. 地方行政研究. 제27권 제1호. 173-202.
- 윤병해·고재홍(2006). “양가적 성차별 태도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비난 차
 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1권 제1호. 1-19.
- 이나영(2016). 아동기 정서적 외상 경험이 성인기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분노억제
 와 전위공격성의 매개효과.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진(2018). 사회적 배제 경험이 전위된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화·김경연(2013). “아동의 성별에 따른 인정욕구, 불안 및 분노억제와 관계적
 공격성간의 관련성”. 대한가정학회. 제51권 제2호. 219-228.
- 전검구·최상진·양병창(2001). “통합적 한국판 CES-D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
 강. 제6권 제1호. 59-76.
- 전검구·한덕웅·이장호·Spielberger(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분노와 혈
 압”.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2권 제1호. 60-78.
- 최영·김현수(2018). “초기 청소년의 학대경험과 사이버불링 경향성의 관계에서
 전위공격성의 매개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제26권 제3호. 321-341.
- 최영민(2011). 사회비교 성향이 높은 대학생을 위한 자기자비 훈련. 연세대학교

-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한나(2018). 성인의 거부민감성과 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여성민우회(2017). 2017 성차별 보고서 토론회 자료집. http://www.krcpa.or.kr/sub01_5.asp?menuCategory=1에서 2017.11.10. 인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9). 한국 사회의 성평등 현안 의식조사 결과 발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덕웅·전점구·이장호·C. D. Spielberger(1997). “한국판 Staxi 척도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제2권 제1호. 60-78.
- 한인희(2015). “직장성차별과 여성 근로자의 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271-271.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제19권 제1호. 161-177.
- 황엘라(2017). 거부민감성과 전위공격성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정윤(2017). 사회적 배제 경험이 여대생의 전위된 공격성의 표출에 미치는 기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지연·연구진(2018). “내면화된 수치심과 전위 공격성의 관계=역기능적 분노표현양식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제23권 제1호. 147-166.
- Allan, S., & Gilbert, P. (2002). Anger and anger expression in relation to perceptions of social rank, entrapment and depressive symptoms. *Person 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3), 551-565.
- Anderson, J. C., & Gerbing, D. W. (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
- Bates, L., & 안진이. (2017). *일상 속의 성차별*. 파주: 미메시스.
- Beck, A. T. (1989). *Cognitive therapy and the emotional disorders*. London: Penguin.
- Bosson, J. K., Pintel, E. C., & Vandello, J. A. (2010). The emotional impact of ambivalent sexism: Forecasts versus real experiences. *Sex Roles*, 62(7-8), 520-531.
- Brody, L. (1999). *Gender, emotion, and the famil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Budge, S. L., Rossman, H. K., & Howard, K. A. (2014). Cop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ong genderqueer individuals: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Journal of LGBT Issues in Counseling, 8*(1), 95-117.
- Bushman, B. J., Bonacci, A. M., Pedersen, W. C., Vasquez, E. A., & Miller, N. (2005). Chewing on it can chew you up: Effects of rumination on triggered displaced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6), 969-983.
- Capodilupo, C. M., Nadal, K. L., Corman, L., Hamit, S., Lyons, O. B., & Weinberg, A. (2010). The manifestation of gender microaggressions. *Microaggressions and Marginality: Manifestation, Dynamics, and Impact, 193-216*.
- Denson, T. F., Pedersen, W. C., & Miller, N. (2006). The displaced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0*(6), 1032-1051.
- Dollard, J., Miller, N. E., Doob, L. W., Mowrer, O. H., & Sears, R. R. (1939). *Frustration and aggression*. Yale University Press.
- Dumont, M., Sarlet, M., & Dardenne, B. (2010). Be too kind to a woman, She'll feel incompetent: Benevolent sexism shifts self-construal and autobiographical memories toward incompetence. *Sex Roles, 62*(7-8), 545-553.
- Fischer, A. R., & Holz, K. B. (2007).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women's psychological distress: The roles of collective and personal self-esteem.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2), 154-164.
- Fiske, S. T., & Glick, P. (1995). Ambivalence and stereotypes cause sexual harassment: A theory with implications for organizational change. *Journal of Social Issues, 51*(1), 97-115.
- Garcia-Retamero, R., & López-Zafra, E. (2006). Prejudice against women in male-congenial environments: Perceptions of gender role congruity in leadership. *Sex Roles, 55*(1-2), 51-61.
- Gilligan, C. (1993). In a different voic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Glick, P., Sakalli-Ugurlu, N., Ferreira, M. C., & de Souza, M. A. (2002).

- Ambivalent sexism and attitudes toward wife abuse in turkey and brazil.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4), 292-297.
- Gross, J. J., & John, O. P. (2003). Individual differences in two emotion regulation processes: Implications for affect, relationships,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2), 348-362.
- Hurst, R. J., & Beesley, D. (2013). Perceived sexism, self-silencing,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college women. *Sex Roles*, 68(5-6), 311-320.
- Jack, D. C., & Ali, A. (2010). *Silencing the self across cultures: Depression and gender in the social world* Oxford University Press.
- Jack, D. C., & Dill, D. (1992). The silencing the self scale: Schemas of intimacy associated with depression in women.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6(1), 97-106.
- Jack, D. C. (1991). *Silencing the self. Women and depression*.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28-183.
- Jack, D. C. (2001). Understanding women's anger: a description of relational pattern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22(4), 385-400.
- Judson, S. S. (2014). *Sexist Discrimination and Gender Microaggressions: An Exploration of Current Conceptualizations of Women's Experiences of Sexism*.
- Kessler, R. C., Berglund, P., Demler, O., Jin, R., Merikangas, K. R., & Walters, E. E. (2005). Lifetime prevalence and age-of-onset distributions of DSM-IV disorders in the national comorbidity survey replicat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62(6), 593-602.
- Kim, B. S., Atkinson, D. R., & Yang, P. H. (1999). The asian values scale: Development, factor analysis, validation, and reliabilit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3), 342.
- Klonoff, E. A., & Landrine, H. (1995). The schedule of sexist events: A measure of lifetime and recent sexist discrimination in women's lives.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19(4), 439-472.

- LaFrance, M., &Woodzicka, J. A. (1998). No laughing matter: Women's verbal and nonverbal reactions to sexist humor. (pp. 61-80). *San Diego, CA, US*: Academic Press.
- Landry, L. J., &Mercurio, A. E. (2009). Discrimination and Women's mental health: The mediating role of control. *Sex Roles*, 61(3-4), 192-203.
- Leary, M. R., Twenge, J. M., &Quinlivan, E. (2006). Interpersonal rejection as a determinant of anger and aggres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Review*, 10(2), 111-132.
- McLaughlin, K. L. (2017). Sexism Makes Me Sick: *An Examination of Potential Mediators in the Link between Sexism and Women's Mental Health (Doctoral dissertation)*. ProQuest Dissertations Publishing에서 인출. (10259726)
- Miller, D. T. (2001). Disrespect and the experience of injustic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527-554.
- Nadal, K. L. (2010). Gender microaggressions: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In M. A. Paludi (Ed.), *Feminism and women's rights worldwide*(pp.155-175). Santa Barbara, CA: Praeger.
- Park, J., Kitayama, S., Karasawa, M., Curhan, K., Markus, H. R., Kawakami, N., & Ryff, C. D. (2013). Clarifying the links between social support and health: Culture, stress, and neuroticism matter.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8(2), 226-235.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1(3), 385-401.
- Remen, A. L., Chambless, D. L., &Rodebaugh, T. L. (2002). Gender differences in the construct validity of the silencing the self scale. *Psychology of Women Quarterly*, 26(2), 151-159.
- Rogers, W. M., &Schmitt, N. (2004). Parameter recovery and model fit using multidimensional composites: A comparison of four empirical parceling algorithm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9(3), 379-412.
- Shorter-Gooden, K. (2004). Multiple resistance strategies: How African American Women cope with racism and sexism. *Journal of*

- Black Psychology*, 30(3), 406-425.
- Solomon, A. (1998) Anatomy of melancholy. *The New Yorker*, 73(42), 46-61.
- Spielberger, C. D., Reheiser, E. C., & Sydeman, S. J. (1995). Measuring the experience, expression and control of anger.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18(3), 207-232.
- Sue, D. W. (2010). *Microaggressions in everyday life: Race, gender, and sexual orientation* John Wiley & Sons.
- Swim, J. K., Hyers, L. L., Cohen, L. L., & Ferguson, M. J. (2001). Everyday sexism: Evidence for its incidence, nature, and psychological impact from three daily diary studies. *Journal of Social Issues*, 57(1), 31-54.
- Watson, L. B., & Grotewiel, M. (2016). The protective role of commitment to social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women's sexist experiences and self-silencing. *Sex Roles*, 75(3-4), 139-150.
- West, S. G., Finch, J. F., & Curran, P. J.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nonnormal variables: Problems and remedies.

Abstract

The Relationship between 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and Depression and Displaced Aggression Among women in their 20s and 30s: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Silencing and Anger-In

Jivin Son*·Jung-Soon H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silencing and anger-in between perceived gender microaggression and displaced aggression and depression among women in their 20s and 30s. participants were 370 women in 20s to 30s and they completed the online survey which measured 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depression, displaced aggression, self-silencing and anger-in. The data was analyzed with SPSS 22.0 and AMOS 18.0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among 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depression, displaced aggression, self-silencing and anger-in.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self-silencing arising from 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and depression was the complete mediation.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anger-in arising from 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and depression was the partial mediation. Forth, the self-silencing and anger-in showed sequen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and displaced aggression. Finally, the meaning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future research tasks were discussed.

Keywords : Everyday gender microaggression, Depression, Displaced aggression, Self-silencing, Anger-in

* First Author: Gender Equality Center, counselor. Kyonggi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Ajou University.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유형과 우울*

한상윤**·남석인***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유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7차년도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총 502명의 만 65세 이상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잠재계층분석 및 위계적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노년기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다양한 노인 관련 사회적 배제 지표를 반영하여 총 9개의 사회적 배제 지표 패턴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지표에서 다수의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배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한 결과, 저배제형, 소득·직업배제형 및 다중배제형의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셋째, 저배제형을 기준집단으로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다중배제형에 속할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다차원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이로 인한 우울 수준을 낮추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 사회적 배제, 우울, 잠재계층분석

*이 논문은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임.

** 제1저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과정(hsangyoon@yonsei.ac.kr)

*** 교신저자: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교수(namseokin@yonsei.ac.kr)

I. 서론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면 한없이 깊은 슬픔이 찾아온다. 고인이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든 적응해나가야 하는 데서 비롯하는 반응이다”(Samuel, 2017). 배우자와의 사별, 죽음으로 인한 이별은 인생에 있어 가장 큰 고통 중 하나이다. 그렇기에 배우자와의 사별은 우울, 스트레스 등의 심리적 측면뿐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사망의 위험 또한 증가하게 된다(Stroebe & Stroebe, 1983). 특히 여성 노인의 경우, 배우자 사별을 겪을 가능성이 남성 노인에 비하여 훨씬 높는데, 2018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남성의 기대여명은 18.7년인데 반해 65세 여성은 22.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20a). 이와 같은 기대여명의 차이 등으로 여성 독거노인 비율은 갈수록 높아져 2019년 인구총조사에서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구의 약 72.6%가 여성 독거노인 가구인 것으로 확인되었다(통계청, 2020b).

빠른 고령화와 함께 배우자 사별이라는 생애 사건을 겪은 여성 노인의 수는 늘어가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한 실정이다(권봉목·김연주·이정랑, 2018). 최근 연구들에서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별 경험이나 삶의 적응 경험 등에 관심을 가지고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우는 있으나(김미영, 2020; 송지연·정혜숙, 2019; 오혜인·김주현·주경희, 2020), 이들이 사회에서 겪는 다양한 차원의 배제나 어려움 등을 유형화하여 살펴본 논의는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시점 여성 노인이 대부분 사회 활동 보다는 가정 내 가사 및 돌봄 활동을 주로 담당해왔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나 어려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실제 여성 노인들은 배우자 사별 이후 충분한 애도의 과정을 마치기도 전에 경제적, 사회적 자립에 대한 어려움을 느낌과 동시에 빈곤과 차별의 상황을 직면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공미혜, 2020; 원혜진·송신애, 2019; Umberson, Wortman, & Kessler, 1992). 또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사별이나 이혼에 따른 여성 독거노인의 경우, 남성 독거노인에 비하여 은퇴 전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 연금소득이 적은 데다 유족연금의 보장성도 충분치 않아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빈곤 문제는 심각한 실정이다(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8). 이는 남성이 생계를, 여성이 가사와 돌봄을 담당하는 남성생계부양자 모델(male breadwinner model)을 표준모형으로 고용 기반의 공적연금제도를 설계함으로써 여성의 연금수급권과 사회참여를 간과해 온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적 문제가 누적된 결과로, 적극적인 사회적 개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빈곤 취약성뿐만 아니라 배우자 사별 여성은 사회적 관계로부터 소외나 단절될 가능성이 높아 소득, 주거, 근로, 건강 및 사회적 관계 등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와 결핍에 처하기 쉽다(유지영, 2020; Islam, 2020). 특히 이번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위기 상황이 닥치면 이들의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는 더욱 심해지고, 깊은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관계망조차 단절됨에 따라 이들의 상실감 극복 및 사회참여는 더욱 어려워진다(United Nations, 2020).

상실감 극복의 실패와 사회적 배제로 인하여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이 가장 많이 호소하는 문제인 우울은 노년기에 가장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정신적 어려움으로(Sasson & Umberson, 2013), 배우자 사별은 극심한 우울을 유발하는 생애 사건이기도 하다(Silverstein & Bengtson, 1994). 우울은 치매, 파킨슨 등의 신체적 질병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하고 있으며(Byers & Yaffe, 2011; Muliya & Varghese, 2010), 자신을 돌보고 관리하길 포기하는 자기방임이나 사람들과 관계를 맺거나 경제적 활동을 중단하는 등의 사회적 고립을 유발하기도 한다(남석인 외, 2016). 우리나라 노인, 그중에서도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경우 다양한 차원에서의 기회 박탈 및 차별로 인한 사회적 배제 경험은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서진,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우울에 대한 예방 및 개입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어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 관점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빠른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삶의 질 증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인 중에서도 취약계층인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에 대한 관심은 아직 부족하다(김승연·고선규·권정혜, 2007). 현시점 여성 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및 생애 전반에 걸친 젠더 불평등에 의한 맥락을 반영하여 배우자 사별 이후 홀로 된 여성 노인의 지원방안을 세분화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European Commission, 2015). 또한 이들이 사회의 어떤 영역에서 배제되고 있는지, 그리고 다차원적으로 도출된 배제 유형들은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함으로써 본 연구는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에 관한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빠른 고령화 속에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이 안정적인 삶을 영위해나갈 수 있도록 법·제도적, 실천적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처음 프랑스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사회적 배제는 기존 빈곤 차원에서 나아가 기회의 부족 및 차별의 결과로, 사회 각 분야에서의 배제라는 다차원성과 역동성에 초점을 맞춘 개념이다(European Commission, 2004; United Nations, 2010). WHO Social Exclusion Knowledge Network는 「Understanding and Tackling Social Exclusion」 보고서를 통해 사회적 배제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의 네 가지 주요 차원과 개인, 가정, 그룹, 지역 사회, 국가의 다양한 수준에서 상호작용하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기반함을 강조하였다(Popay et al., 2008). 이와 같은 사회적 배제 개념은 국내에서는 1997년 말 IMF 이후, 급속한 사회변동의 여파로 근로 빈곤, 상대적 빈곤 등 새로운 빈곤 계층이 부상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박능후·최민정, 2014). 김안나 외(2008)는 사회적 배제를 사회 구조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박탈과 결핍, 불이익을 통해 사회, 경제, 정치 활동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약당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다차원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배제는 어느 한 영역으로만 접근한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다양한 차원과 수준에서 발생하는 배제의 심각성과 영향력을 인식하고 다룰 필요가 있다(United Nations, 2010).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취약계층 중 하나는 노인이다(김안나 외, 2008). 특히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적 배제 상황은 매우 심각한데, OECD(2018)가 발표한 사회적 지지의 부족(Lack of social support) 지표에서도 그 심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 지지의 부족 지표는 국가별, 연령대별 사회적 고립 및 외로움을 살펴보기 위하여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를 나눌 수 있는 친구 혹은 친척 등 지인의 부재 비율을 측정한 지표로, 우리나라 노인의 34.7%가 고립된 것으로 나타나 OECD 국가 중 사회적 지지 부족이 가장 높았다. 이에 더해 성별, 경제적 수준 등 추가적인 취약성을 가진 노인들의 경우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배제될 위험은 더욱 높아진다(원서진, 2020).

현시점의 여성 노인들은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을 표준모형으로 하는 정책적 기조하에 가사 및 돌봄 역할을 주로 담당해오면서 전 생애에 걸쳐 고용 기반의 공적연금제도에서 배제되어왔다. 이와 같은 노동시장 참여의 젠더 격차, 그리고 빈곤의 여성화(feminization of poverty)를 구조화한 가부장제적 문화로

인한 차별과 불평등은 생애과정 내내 누적되어 노인 중에서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수준은 남성 노인에 비해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명선, 2002; 송효진 외, 2020; 안미영, 2017). 그리고 이 중에서도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경우 여성이라는 점, 그리고 생계부양자인 배우자 사별로 인하여 경제적, 사회적 취약성이 높아졌다는 점 등이 교차되면서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를 겪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김수진·김주현·주경희, 2020; McGarry & Schoeni, 2005).

United Nations(UN)은 전 세계적으로 배우자 사별 여성의 빈곤 및 사회적 비하 등의 상황이 심각함을 인지하고, 인권 보호와 차별철폐를 위하여 매년 6월 23일을 배우자 사별 여성의 날(International Widows Day)로 지정하였다. 또한 유럽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2015)에서는 공적연금을 통한 노인의 빈곤 완화에 있어 성차가 심각함을 지적하고, 여성 노인의 높은 빈곤율과 사회적 배제,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 독거노인의 배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빠른 고령화 속에 우리나라 또한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에 대한 젠더적 관점의 법·제도적, 실천적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사회적 배제 현상을 다차원적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2.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

사회적 배제는 신체 및 정신건강을 예측하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우울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보고해왔다(Hsieh & Leung, 2019; Leary, 1990). Feng, Jones와 Phillips(2019)의 연구 및 김창기와 이진성(2013)의 연구에서는 관계적,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사회적 배제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회적 배제의 유의한 직접 효과를 보고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우울감 완화를 위한 사회적 배제 감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한편 사회적 배제에 취약한 계층으로 분류되는 노인의 경우, 이들의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는 우울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원서진, 2020; 이정화·오영은, 2016; 최미영·이승은·박현식, 2015). 특히 노인 중에서도 배우자를 사별한 경우 경제적, 신체적 및 사회적 측면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우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Boelen, van den Bout, & van den Hout, 2006; Holm, Berland, & Severinsson, 2019). Tong et al.(2011)은 사회적 배제가 우울 증상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 대부분이 소득, 주거, 관계 등 다차원적인 영역에서 사회적 배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이는 우울 수준을 높인다고 보고하였다. 다수의 양적 연구 이외에도 권봉목, 김연주와 이정랑(2018)은 배우자 사별을 한 여성 노인 8명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는데, 연구결과 사별 이후 사회적 관계 및 주관적 건강 영역 등에서 배제가 이루어졌고, 이는 고립감과 우울로 이어졌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을 기반으로 하여 본 연구는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우울에 중요한 예측요인인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를 살펴봄으로써, 우울 수준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포용 방안을 찾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및 대상

본 연구는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 유형을 분류하기 위하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여성가족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and Families, KLoWF)의 2018년 7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여성 정책의 수립과 평가를 위하여 우리나라 여성의 가족 및 사회생활 등 전반적인 삶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전반적인 사회적 배제 양상을 분석하는 데 있어 매우 적합한 자료이다. 7차년도 여성가족패널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여성이 거주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시도별 조사구로 층화한 후, 조사구 내 가구 수 규모의 크기에 따라 확률비례계통추출법(Probability proportional to Size Sampling; PPS)을 적용하여 추출하였다(주재선 외, 2019). 본 연구의 분석에는 만 65세 이상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 총 502명의 자료가 활용되었다.

2. 측정도구

1) 사회적 배제 지표

본 연구에서는 Macleod et al.(2019)이 제안한 노년기 다차원적 사회적 배

제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사회적 배제 지표를 선정하였다. Macleod et al.(2019)은 다수의 사회적 배제를 살펴본 실증 연구들을 종합하여 사회적 배제의 예측요인, 지표 및 결과 요인 등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서비스 접근, 시민 참여, 사회적 관계 및 자원, 경제, 재무 및 물질적 자원, 환경 및 이웃, 건강 및 웰빙 그리고 차별 등 사회적 배제를 측정할 수 있는 영역을 <표 1>과 같이 정의하여 제시하였다.

<표 1> Macleod et al.(2019)의 사회적 배제 영역 정의

영역	정의 및 개별 지표
서비스 접근	공적 및 사적 서비스 접근성 등
시민 참여	문화, 교육, 정치적 참여 등
사회적 관계 및 자원	가족, 친구 및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지지 등
경제, 재무 및 물질적 자원	주관적, 객관적 재무 상황, 소득, 주거 및 자산 등
환경 및 이웃	지리적 자원, 이웃, 시설, 지역사회, 안전 등
건강 및 웰빙	주관적, 객관적인 신체적, 정신적 건강 등
차별	부정적 묘사, 편견, 무시, 목살 등

이에 더하여 우리나라의 사회적 맥락을 반영하기 위해 다수의 국내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사회적 배제 지표를 참고하였다. 김안나(2007)의 지표는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사회적 배제 및 빈곤을 살펴보는 핵심 지표를 기반으로 한국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경제, 실업, 근로, 주거, 교육, 건강,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참여 등 총 8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최재성과 김혜진(2020)은 한국 노인을 대상으로 소득, 소비, 사회적 활동, 사회적 관계, 건강 및 주거 등 총 6차원으로 사회적 배제 지표를 구성하였다. 이외에도 박능후와 최민정(2014), 오승은, 김본과 민주홍(2020) 또한 6개의 지표를 활용하여 사회적 배제를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지표를 반영하여 본 연구는 <표 2>와 같이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를 살펴보기 위한 9개의 지표를 최종 선정하였다.

〈표 2〉 사회적 배제 지표 구성

지표	기준*	내용
소득	1	2018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0	2018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주거	1	자가, 무상 이외 (전세, 보증금 있는/없는 월세, 사글세 등)
	0	자가, 무상 (정부 혹은 교회로부터 제공받은 주택 포함)
주관적 경제 수준	1	보통, 조금 어려운 편, 매우 어려움
	0	매우 여유 있음, 여유가 있는 편
직업	1	직업 없음
	0	직업 있음
주관적 건강 수준	1	보통, 조금 나쁜 편, 매우 나쁨
	0	매우 좋음, 대체로 좋은 편
여가 만족도	1	보통, 조금 부족, 매우 부족
	0	매우 충분, 조금 충분
사회참여	1	지난 1년간 사회 및 여가 활동 미참여
	0	지난 1년간 사회 및 여가 활동 참여
건강검진	1	평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지 않음
	0	평소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음
공적연금	1	공적연금***을 받지 않음
	0	공적연금을 받음

* 기준 1 - 배제 / 기준 0 - 비배제

** 국내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인 동시에 OECD 빈곤층 선정 기준임

*** 국민연금(유족연금 포함) 및 특수직역연금

2) 우울

본 연구에서는 우울을 측정하기 위하여 Radloff(1977)가 개발한 우울증 자가진단 척도인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축약한 축약형 CES-D-10 척도를 사용하였다(주재선 외, 2019). CES-D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자기보고식 우울증 측정 도구로, 본 축약형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e.g.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 등). 이 중 5번과 8번 문항의 경우 역문항으로 처리하였다. 모든 문항은 Likert 4점 척도로 1부터 4의 범위를 원문항 척도와 동일하게 조정하여 0(극히 드물다: 일주일 동안 1일 이하)부터 3(대부분 그랬다: 일주일 동안 5일 이상)으로 구성하고, 총점은 최저 0점부터 최고 3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증이 심각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Cronbach's α 는 .89이다.

3. 분석방법

본 연구 자료는 SPSS 25.0 및 Mplus 7.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균, 표준편차, 왜도 및 첨도를 살펴보고자 기술통계 검증을 통하여 수집된 자료의 정상성을 확인하고, 설문 문항의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잠재계층분석(Latent Class Analysis, LCA)을 실시하여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유형을 분류하였다. 셋째, 분류된 사회적 배제 유형 집단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배제 유형 집단별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잠재계층분석은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활용하여 가장 적절한 잠재계층 유형의 수를 결정하고, 분류율에 따라 잠재계층을 유형별로 분류하는 분석방법이다(Denson & Ing, 2014). 유형 분류를 위한 정보부합도 지수로는 AIC(Akaike Information Criterion), BIC(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 및 SSABIC(Sample Size Adjusted Bayesian Information Criterion)를 활용하였고, 세 가지 지수 모두 값이 작을수록 모형의 적합도가 좋음을 나타낸다. 통계적 모형 비교 유의도 검증으로는 LMR(Lo-Mendell-Rubin adjusted likelihood ratio test) 및 BLRT(Bootstrapped Likelihood Ratio Test)의 p 값 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유의도를 판단하였다. 한편 Entropy 지수는 0부터 1의 범위이며, 값이 클수록 잠재계층의 유형 분류 정확도가 좋은 것으로 간주한다(Clark, 2010). 마지막으로 분류율은 적어도 표본의 1% 미만인 잠재계층 유형이 없는 경우, 유형 분류에 문제가 없음을 의미한다(Nooner et al., 2010).

IV.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연령은 만 65~69세의 노인이 36.1%, 만 70~74세의 노인이 52.6%로, 만 75세 이상 노인 11.4%에 비하여 응답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무학인 경우가 23.9%였으며, 초졸이 47.8%로 대다수가 초졸 이

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종교유무를 살펴보면 무교인 36.1%에 비하여 종교가 있는 경우가 63.9%였고, 독거여부에서는 독거가 64.7%로 동거에 비하여 약 2배가량 높아 대다수의 노인이 독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연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n=502)

구분		빈도	%
연령	만 65~69세	181	36.1
	만 70~74세	264	52.6
	만 75세 이상	57	11.4
교육수준	무학	120	23.9
	초졸	240	47.8
	중졸	84	16.7
	고졸이상	58	11.6
종교유무	없음	181	36.1
	있음	321	63.9
독거여부	독거	325	64.7
	동거	177	35.3

2. 주요 변수 및 지표의 특성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 전체의 우울 평균은 6.74(SD=5.66)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배제를 각 지표별로 살펴본 결과, 〈표 4〉와 같이 사회참여, 직업, 소득 및 공적연금 등 다수의 지표에서 배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주요 변수 및 지표의 특성(n=502)

변수 및 지표		구분	명(%)
우울		평균(표준편차)	6.74(5.66)
사회적 배제	소득	비배제	207(41.2)
		배제	295(58.8)
	주거	비배제	431(85.9)
		배제	71(14.1)
	주관적 경제 수준	비배제	343(68.3)
		배제	159(31.7)
직업	비배제	195(38.8)	

변수 및 지표	구분	명(%)
주관적 건강 수준	배제	307(61.2)
	비배제	332(66.1)
여가 만족도	배제	170(33.9)
	비배제	328(65.3)
사회참여	배제	174(34.7)
	비배제	188(37.5)
건강검진	배제	314(62.5)
	비배제	472(94.0)
공적연금	배제	30(6.0)
	비배제	252(50.2)
	배제	250(49.8)

3.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 분석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유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잠재계층분석(LCA)을 실시하였다. 유형 분류에 적합한 모형을 찾기 위해 정보부합도 지수, 통계적 모형 비교 유의도 검증, 엔트로피 지수 및 분류율 등 다양한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는 동시에 집단 수에 따른 모형을 비교 검증하였다.

방식은 유형 수를 하나씩 추가하여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였고, 4개의 유형에서 BIC 및 SSABIC가 증가하고, LMR, BLRT가 .05 수준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Entropy도 3개의 유형보다 4개의 유형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지수들을 고려한 결과 3개의 유형이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를 살펴보는 데 있어 최적의 분류임을 확인하였다.

잠재계층 유형별 분류율은 유형 1에 40.6%, 유형 2에 29.5%, 유형 3에 29.9%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형 중 1% 미만의 분류율을 가진 경우는 없었으므로, 분류율 또한 유형 분류에 문제가 없음을 나타낸다(Nooner et al., 2010).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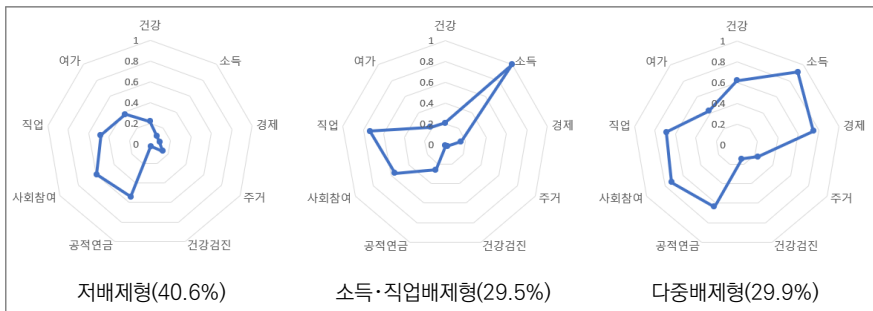
〈표 5〉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 분석 모형의 적합도 검증

구분		1	2	3	4
AIC		5282.882	5173.191	5150.761	5144.337
BIC		5320.849	5253.345	5273.101	5308.862
SSABIC		5292.283	5193.037	5181.052	5185.073
LMR(ρ)		-	.001	.012	.658
BLRT(ρ)		-	<.001	<.001	.068
Entropy		-	.646	.663	.611
잠재계층 분류율(%)	1	-	30.3	29.5	18.5
	2	-	69.7	40.6	25.3
	3	-	-	29.9	26.5
	4	-	-	-	29.7

적합도 검증을 통하여 도출된 3개의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별 지표의 구성 비율을 살펴본 구체적인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유형 1은 전체 지표에서 .6을 넘는 조건부 확률값을 보여주는 것이 없었으며, 다른 유형에 비해서 비교적 고르게 배제에 속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유형 또한 사회참여나 공적연금 지표 등에 있어서 조건부 확률값이 아주 낮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배제형이라고 명명하기보다는 저배제형으로 명명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저배제형에는 연구대상자의 40.6%가 속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유형 2는 소득 및 직업에서 배제될 확률이 .6을 넘고, 타 유형에 비해서도 두 지표에서 높은 배제 확률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기타 지표에서는 배제에 속할 확률값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직업배제형으로 명명하였다. 소득·직업배제형에는 연구대상자의 29.5%가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형 3은 대부분의 지표에서 .6을 넘는 조건부 확률값을 보이며, 타 유형에 비해서도 고르게 높은 배제 확률을 나타냈다. 이에 다차원적으로 배제될 확률이 높아 다중배제형으로 명명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29.9%가 다중배제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유형의 지표별 사회적 배제 특성은 [그림 1]과 같다.

<표 6>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별 구성 비율

지표	유형 1 (저배제형)	유형 2 (소득·직업배제형)	유형 3 (다중배제형)
	40.6%	29.5%	29.9%
소득	0.101	1.000	0.914
주거	0.141	0.029	0.236
주관적 경제 수준	0.097	0.156	0.752
직업	0.482	0.733	0.689
주관적 건강 수준	0.217	0.204	0.618
여가 만족도	0.371	0.215	0.423
사회참여	0.594	0.558	0.726
건강검진	0.025	0.014	0.146
공적연금	0.541	0.260	0.638



[그림 1]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유형

4.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별 특성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별로 특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연령 측면에서는 다중배제형의 평균 연령이 70.85세($SD=3.04$), 소득·직업배제형이 70.99세($SD=2.91$)로 저배제형의 평균 연령인 69.85세($SD=3.14$)에 비하여 유의하게 후기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저배제형에 속한 노인의 최종학력이 소득·직업배제형 및 다중배제형에 속한 노인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교유무는 세 유형이 유의한 차이 없이 모두 무교보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독거여부를 살펴본 결과 저배제형에 비하여 다중배제형 및 소

독·직업배제형에 독거노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7〉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별 특성(n=502)

구분	저배제형 (a)	소득·직업배제형 (b)	다중배제형 (c)	F
	(n = 204)	(n = 148)	(n = 150)	
	명(%)	명(%)	명(%)	
연령				7.463** b, c > a
평균 (표준편차)	69.85(3.14)	70.99(2.91)	70.85(3.04)	
교육수준				11.53*** a > b, c
무학	34(16.7)	33(22.3)	53(35.3)	
초졸	93(45.6)	79(53.4)	68(45.3)	
중졸	41(20.1)	23(15.5)	20(13.3)	
고졸이상	36(17.7)	13(8.8)	9(6.0)	
종교유무				.54
없음	72(35.3)	50(33.8)	59(39.3)	
있음	132(64.7)	98(66.2)	91(60.7)	
독거여부				25.39*** a > c > b
독거	99(48.5)	123(83.1)	103(68.7)	
동거	105(51.5)	25(16.9)	47(31.3)	

주1. *p<.05, **p<.01, ***p<.001.

주2. 유의미한 F값은 Scheffe 방법을 통하여 사후검증하고,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함.

5.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우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및 가족의 동거여부는 통제변수로 투입하였다. 모든 변수의 분산팽창요인(VIF)은 최소 1.003에서 최대 1.363으로 변수 간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Hair et al., 1995).

모형 1은 통제변수만을 독립변수로 선정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모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2.878$, $p<.05$). 그리고 모형 2는 통제변수 및 사회적 배제 유형을 모두 투입하여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

퍼본 모형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F=10.763$, $p<.001$), R^2 의 변화량 또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Delta R^2=.093$, $p<.001$). 이는 사회적 배제 유형이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우울에 있어 유의한 결정요인임을 의미한다.

저배제형을 기준집단으로 하여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저배제형에 비해 다중배제형의 우울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eta=.332$, $p<.001$). 그리고 저배제형과 소득·직업 배제형 간의 우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8〉 사회적 배제 잠재계층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분석($n=502$)

구분	모형1			모형2		
	B	β	S.E	B	β	S.E
상수	8.455	—	.985	6.625	—	.995
연령	.072	.008	.396	-.101	-.012	.381
교육수준	-1.234*	-.093	.601	-.540	-.041	.581
종교유무	-1.010	-.086	.526	-.945	-.080	.502
독거여부	-.733	-.062	.525	-.364	-.031	.526
사회적 배제 유형 (기준: 저배제형)						
소득·직업배제형		—		.708	.057	.612
다중배제형		—		4.096***	.332	.598
F		2.878*			10.763***	
R^2 (adjusted R^2)		.023(.015)			.115(.105)	
R^2 변화량		—			.093***	

* $p<.05$, ** $p<.01$, *** $p<.001$.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배우자 사별이라는 생애 사건을 겪은 여성 노인의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를 살펴봄으로써 이로 인한 우울 수준을 낮추고, 주체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실천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Macleod et al.(2019)이 제안한 노년기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국내 다양한 노인 관련 사회적 배제 지표를 반영한 총 9개의 사회적 배제 지표 패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잠재계층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세 개의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선정된 총 9개의 지표별 배제 및 비배제를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 전체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일부 지표에서 다수의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이 배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참여 62.5%, 직업 61.2%, 소득 58.8% 순으로 배제율이 높았으며, 이 외에도 공적연금 또한 무려 49.8%가 배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잠재계층분석을 통하여 가장 낮은 사회적 배제 유형으로 나타난 저배제형조차도 비배제형으로 명명할 수 없었던 이유이며,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 대부분이 현재 사회적 배제에 놓인 상황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기존 연구들에서 노인, 그중에서도 여성 노인, 그리고 배우자 사별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및 심리적 취약성이 교차된 경우, 사회적 배제에 매우 취약함을 주장한 결과와도 일치한다(공미혜, 2020; 원혜진·송신애, 2019; Umberson, Wortman, & Kessler, 1992).

둘째, 배우자 사별 여성의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패턴을 살펴본 결과, 저배제형, 소득·직업배제형 및 다중배제형 등 세 개의 유형이 도출되었다. 먼저 저배제형은 연구대상자의 40.6%가 속하며, 모든 지표에서 .6을 넘는 조건부 확률값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두 유형에 비하여 소득 지표에서 비배제를 의미하는 아주 낮은 조건부 확률값을 보였다. 그러나 저배제형 또한 사회참여, 공적연금 등의 지표에서는 낮지 않은 조건부 확률값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유형인 소득·직업배제형은 연구대상자의 29.5%가 속하며, 소득 및 직업에서 배제될 확률이 타 유형에 비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소득, 직업 지표를 제외하고는 .6을 넘는 조건부 확률값을 보이는 지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 유형인 다중배제형은 연구대상자의 29.9%가 속하며, 일부 지표를 제외한 다수의 지표에서 .6을 넘는 조건부 확률값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소득, 주관적 경제 수준, 사회참여, 직업, 공적연금 및 주관적 건강 수준 등의 지표에서는 심각한 배제 확률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사회적 배제를 살펴보는 데 있어 경제적 빈곤만을 측정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임을 주장한 기존 연구들의 주장을 지지하며,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을 강조한 연구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김안나 외, 2008; 박능후·최민정, 2014; Macleod et al., 2019).

셋째, 도출된 세 가지 유형별 개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우선 연령 측면에서 저배제형에 비하여 소득·직업배제형과 다중배제형에 유의하게 후기노인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배제에 취약해진다는 기존 연구들의 주장을 뒷받침한다(원서진, 2020; 이정화·오영은, 2016; 최미영·이승은·박현식, 2015). 또한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독거노인의 사회적 배

제의 취약성을 보고해온 바와 같이(김수진·김주현·주경희, 2020; 유지영, 2020), 본 연구에서도 소득·직업배제형, 다중배제형, 저배제형 순으로 독거노인의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도출된 세 가지 유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저배제형을 기준그룹으로 소득·직업배제형과 다중배제형을 살펴본 결과, 다중배제형은 저배제형에 비하여 유의하게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에서 활용된 축약형 CES-D-10 척도의 경우 절단점이 10점인 점을 고려할 때, 다중배제형의 우울 평균 점수는 10.32점($SD=.62$)으로 이는 다중배제형에 속한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이 평균적으로 우울 증상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가 심화될수록, 우울 수준이 높아진다고 주장한 기존의 연구들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김창기·이진성, 2013; Feng, Jones, & Phillips, 2019; Leary, 1990).

이상의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에 따른 우울 수준을 낮추고, 이들의 사회적 포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결과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대다수가 사회참여, 직업, 소득 및 공적연금 등의 지표에서 배제되고 있는 바 이는 현재 여성 노인의 생애 전반에 걸친 누적된 불평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현시점 여성 노인은 대부분 가정 내 가사 및 돌봄 활동을 주로 부담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배제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연금제도를 설계하여 여성의 연금수급권 및 사회참여에 대한 부분을 간과해왔다. 이로 인하여 남성 배우자와의 사별이라는 가구 단위의 생계부양자 변동은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들이 생애과정 동안 노동시장 참여의 젠더 격차 및 빈곤의 여성화를 구조화한 가부장제적 문화로 인해 누적된 차별과 불평등에 급작스럽게 노출되는 상황에 놓이도록 만들었으며,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로 진행되었다. 우리 사회가 남성생계부양자모형을 기반으로 경제의 고속 성장을 이루어오면서 간과해왔던 여성의 사회참여 등 다양한 차원에서의 여성 배제, 그리고 젠더 관점이 결여된 정책들로 인하여 나타난 문제인 만큼 이를 개인의 빈곤 혹은 극복해야 할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아가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우자 사별 이후 여성 노인의 경제적 및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할 때, 지금보다 상속 관계에서 생존배우자가 더욱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상속 재산에 대한 배우자 선취분 제도의 도입, 상속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한도의 증액 등 생존배우자의 상속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송효진 외, 2020; 정다영, 2017). 또한

이와 더불어 주거 및 돌봄에 있어 생존배우자의 주거권 보호 등 제도적 안전망 구축은 이들의 경제적 취약성을 보완함과 더불어 기존 거주지에서의 계속 거주를 통한 심리적 안정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지 등을 지원할 수 있다(박인환, 2018).

둘째, 저배제형 및 소득·직업배제형에 비하여 다중배제형에 속한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은 유의하게 더 높은 우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다중배제형의 배제 영역에 대한 선제적 개입이 요구된다. 특히 사회적 배제 지표 중 소득 및 직업에서만 배제가 나타난 소득·직업배제형과 비교했을 때, 다중배제형이 추가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지표에 대한 확인을 통하여 개입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중배제형이 높은 배제 확률을 보인 지표는 소득과 직업을 제외하면 총 네 가지로, 주관적 경제 수준, 사회참여, 공적연금, 주관적 건강 수준 순이다. 유족연금은 여성만을 위한 연금제도는 아니지만, 현재 여성 노인들이 주로 가사 활동을 담당해왔기 때문에 대다수가 연금 가입자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여성의 기대여명이 더 길다는 점에서 유족연금은 여성 노인들의 중요한 노후 소득원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박진화, 2020). 그러므로 유족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배우자 사별 이후의 경제적 취약성을 보완함으로써 주관적 경제 수준을 높이는 동시에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참여 및 주관적 건강 수준에서의 배제는 적극적인 사회서비스 개입을 통하여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연구에서 배우자 사별 이후 사회적 관계의 감소 등을 보고하고 있는 만큼, 사회서비스를 통하여 사회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함께 건강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실천 관점에서 개발된 건강관리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안에서 소속감과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며, 상호작용을 통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SMiLE(Senior Meaning in Life Enhancement) 노인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보건의료, 과학기술 및 사회복지가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현장에서 혹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삶의 의미를 증진함으로써 상호작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건강관리에 대한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한상윤 외, 2020). 이와 같이 다학제적으로 개발된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지역사회 내에서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 연결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가능하게 만드는 포괄적인 접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 내에서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그리고 혼자 사는 경우 저배제형이나 소득·직업배제형보다 다중배제형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에 주목하여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 중 후기노인, 그리고 독거노인에 대해서는 지원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중배제형이 보

여주고 있는 배제된 지표에 의거하여 우선순위를 정하되, 소득·직업배제형 및 다중배제형에 속한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소득과 직업에 대한 배제를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고령 여성 노인 집단에 있어 직업의 의미는 다른 집단에 비하여 매우 다차원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즉,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에게 있어 직업의 유무는 재정적 어려움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지속일 수 있으며(Meschede et al., 2011), 이에 직업 지표에서의 배제를 사회적 배제만의 결과라고 단언하기 어려우므로 이들의 직업에 대한 배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 보다 심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현시점 여성 노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 및 여성으로서 살아온 생애 전반에 걸친 맥락을 반영하여 배우자 사별 이후 다차원적인 사회적 배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도출된 배제 유형별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현시점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이 직면하고 있는 다차원적 사회적 배제 및 우울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해 횡단연구를 실시하였다. 시간에 따른 배제 양상 및 우울의 변화, 그리고 누적된 배제의 결과를 살펴보는 것 또한 중요하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만 65세 이상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집단 내 차이점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배우자를 사별한 시점에 따른 차이 혹은 전기노인과 후기노인의 차이 등 집단 내 차이에 주목함으로써 보다 면밀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배제 지표 중 직업의 경우, 고령의 여성 노인 집단에 있어 다차원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배제의 결과로 단언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다. 이에 고령 여성 노인을 대상으로 직업의 의미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자기보고식 측정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터뷰 기반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의 측정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보다 확장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한계점에 대한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빠른 고령화 속에 지속적으로 증가할 배우자 사별 여성 노인의 안정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위한 법·제도적, 실천적 차원의 시사점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성호·류건식·김동겸(2018).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서울: 보험연구원.
- 김미영(2020). “반복적인 가족사별을 경험한 여성 노인의 생애사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25권 제2호. 105-122.
- 공미혜(2020.10.06.). “여성 노인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http://www.busan.com>에서 2020.10.30. 인출.
- 권봉목·김연주·이정랑(2018). “배우자 사별을 한 여성 독거노인의 삶의 적응경험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제9권 제4호. 41-51.
- 김수진·김주현·주경희(2020). “사회적 배제 잠재유형이 노후의 경제적 불안에 미치는 영향: 주관적 계층의식의 조절효과”. *한국노년학*. 제40권 제1호. 33-49.
- 김승연·고선규·권정혜(2007). “노인 집단에서 배우자의 사별 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대처행동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6권 제3호. 573-596.
- 김안나(2007). “유럽연합(EU) 사회적 배제 개념의 한국적 적용가능성 연구 -사회적 배제 측정을 위한 지표개발을 중심으로”. *유럽연구*. 제25권 제1호. 351-379.
- 김안나·노대명·김미숙·신호성·홍인옥·김태완·강민희·이소정·원일·윤필경·유정예(2008).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 배제계층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창기·이진성(2013). “농촌지역 결혼이주여성의 사회적 배제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정서조절방략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3권 제2호. 296-307.
- 남석인·이예진·김보미·이은경(2016). “돌봄서비스 이용 독거노인의 우울이 자기방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 경험의 조절효과 검증”. *정신건강과 사회복지*. 제44권 제1호. 161-187.
- 박능후·최민정(2014). “중고령자 사회적 배제의 다차원성과 역동성 분석”.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2호. 325-354.
- 박명선(2002). “여성노인의 일과 빈곤: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36권 제2호. 175-204.
- 박인환(2018). “일본의 상속법 개정동향 - 배우자거주권 및 상속재산분할등을 중

- 심으로-”. 법학연구. 제21권 제3호. 131-173.
- 박진화(2020). “국민연금제도에 내재된 젠더 차이 변화 연구: 제도의 외적 및 내적 개혁을 중심으로”. 인문사회21. 제11권 제1호. 1287-1299.
- 송지연·정혜숙(2019). “노년기에 사별한 여성 재가노인의 주거공간의 의미 재구성”. 노인복지연구. 제74권 제2호. 87-121.
- 송효진·선보영·성경·정가원·박수경(2020). 젠더 관점에서의 고령사회 가족 관련 법·제도 대응 방안 연구: 배우자 관계의 변화와 여성 노인의 경제적 취약성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안미영(2017). “고령화와 젠더 불평등: 노인 부부의 무급 노동을 중심으로”. 여성연구. 제93권 제2호. 7-34.
- 오승은·김본·민주홍(2020).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사용한 독거노인의 사회적 배제 유형화: A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제30권 제2호. 89-111.
- 오혜인·김주현·주경희(2020). “사별 후, 혼자 남겨진 여성노인들의 일상 들여다보기 -활동적 노화(Active Ageing)의 관점에서-”. 한국가족복지학. 제67권 제2호. 161-192.
- 원서진(2020). “노인의 사회적 배제와 우울: 사회참여와 성별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5호. 309-316.
- 원혜진·송신애(2019). “배우자와의 사별이 고령층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 비교를 통한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의 영향 분석”. 보건사회연구. 제39권 제4호. 145-172.
- 유지영(2020). “독거 여성노인의 다차원적 빈곤과 빈곤 결정요인”.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5권 제1호. 203-221.
- 이정화·오영은(2016). “노인단독가구 노인의 사회적 배제, 우울 및 자살생각: 성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제27권 제4호. 831-850.
- 정다영(2017). “배우자 상속의 강화방안”. 가족법연구. 제31권 제3호. 271-318.
- 주재선·김영란·이동선·정성미·송치선·한진영·이진숙·양준영·손창균·장숙량(2019). 2019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최미영·이승은·박현식(2015). “사회적 배제가 노인 우울에 미치는 영향: 취업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제69호. 9-29.
- 최재성·김혜진(2019). “노인의 사회적 배제 결정요인 분석: 다중적 배제의 잠재집단 유형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제63호. 193-224.
- 통계청(2020a). 2020 고령자 통계. 대전: 통계청.
- _____(2020b). 인구총조사. 대전: 통계청.

- 한상윤·김향희·유희천·남석인(2020). “노인의 삼킴장애와 자기방임의 관계에서 우울을 통한 삶의 의미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노년학*. 제40권 제5호. 1003-1020.
- Boelen, P. A., van den Bout, J., & van den Hout, M. A. (2006). Negative cognitions and avoidance in emotional problems after bereavement: A prospective stud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44(11), 1657-1672.
- Byers, A. L., & Yaffe, K. (2011). Depression and risk of developing dementia. *Nature Review Neurology*, 7(6), 323-331.
- Clark, S. L. (2010). *Mixture modeling with behavioral data*.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 Denson, N., & Ing, M. (2014). Latent Class Analysis in Higher Education: An Illustrative Example of Pluralistic Orientation. *Research in Higher Education*, 55(5), 508-526.
- European Commission(2004). *Joint report on social inclusion*. Luxembourg: European Communities.
- _____(2015). Why older women are much more exposed to the risk of poverty than older men. <https://ec.europa.eu/social/main에서> 2020.11.3. 인출.
- Feng, Z., Jones, K., & Phillips, D. R. (2019). Social exclusion, self-rated health and depression among older people in China: Evidence from a national survey of older persons. *Archives of Gerontology and Geriatrics*, 82, 238-244.
- Hair, J. F., Anderson, R. E., Tatham, R. L., & Black, W. C. (1995). *Multivariate Data Analysis: With Readings*, 4th(ed).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 Holm, A. L., Berland, A. K., & Severinsson, E. (2019). Factors that influence the health of older widows and widowers—A systematic review of quantitative research. *Nursing Open*. 6(2), 591-611.
- Hsieh, M., & Leung, P. (2019). Social exclusion experienced by older adults: factors for designing healthcare settings in Taipei, Taiwan. *Social Work in Health Care*, 58(4), 368-381.
- Islam, M. (2020). Socio-economical conditions of aged widow in Bangladesh. *ABC Research Alert*, 8(2), 84-98.

- Leary, M. R. (1990). Responses to social exclusion: Social anxiety, jealousy, loneliness, depression, and low self-esteem.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9(2), 221-229.
- Macleod, C. A., Ross, A., Sacker, A., Netuveli, G., & Windle, G. (2019). Re-thinking social exclusion in later life: a case for a new framework for measurement. *Ageing & Society*, 39(1), 74-111.
- McGarry, K., & Schoeni, R. F. (2005). Widow(er) poverty and out-of-pocket medical expenditures near the end of life. *Journal of Gerontology: Series B*, 60(3), 160-168.
- Meschede, T., Cronin, M., Sullivan, L., & Shapiro, T. (2011). *Rising Economic Insecurity Among Senior Single Women*. Research and Policy Brief, October 2011, Demos.org and Institute on Assets and Social Policy, Brandeis University, Living Longer on Less Series.
- Muliyala, K. P., & Varghese, M. (2010). The complex relationship between depression and dementia. *Annals of Indian Academy of Neurology*, 13(2), 69-73.
- Nooner, K. B., Litrownik, A. J., Thompson, R., Margolis, B., English, D. J., Knight, E. D., Everson, M. D., & Roesch, S. (2010). Youth self-report of physical and sexual abuse: A latent class analysis. *Child Abuse & Neglect*. 34(3), 146-154.
- OECD(2018), Lack of social support (indicator). doi: 10.1787/0cfbe26f-en 에서 2020.10.31. 인출.
- Popay, J., Escorel, S., Hernandez, M., Johnston, H., Mathieson, J., & Rispel, L. on behalf of the WHO Social Exclusion Knowledge Network. (2008). *Understanding and Tackling Social Exclusion: Final Report of the Social Exclusion Knowledge Network of the Commission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Geneva: World Health Organization.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 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s*, 1, 385-401.
- Samuel, J.(2017). *Grief works: Stories of life, death and surviving*. London: Penguin Books.

- Sasson, I., & Umberson, D. J. (2013). Widowhood and depression: New light on gender differences, selection,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9B(1), 135-145.
- Silverstein, M., & Bengston, V. L. (1994). Does intergenerational social support influence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parents? The contingencies of declining health and widowhood. *Social Science & Medicine*, 38(7), 943-957.
- Stroebe, M. S., & Stroebe, W. (1983). Who suffers more? Sex differences in health risks of the widowed. *Psychological Bulletin*, 93(2), 279-301.
- Tong, H. M., Lai, D. W. L., Zeng, Q., & Xu, W. Y. (2011). Effects of Social Exclusion on Depressive Symptoms: Elderly Chinese Living Alone in Shanghai, China.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26(4), 349-364.
- Umberson, D., Wortman, C. B., & Kessler, R. C. (1992). Widowhood and Depression: Explaining Long-Term Gender Differences in Vulnerability.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33(1), 10-24.
- United Nations(2010). *Analysing and measuring social inclusion in a global context*. NY: United Nations.
- _____(2020). International Widows' Day 23 June. <https://www.un.org/en/observances/widows-day/messages>에서 2020.10.30. 인출.

Abstract

A Study on Patterns in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 and Depression among Older Widows

Sangyoon Han*·Seok In Nam**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ultidimensional social exclusion of older widows. Older women in Korea have suffered from marginalization in the labor market caused by gender division of paid and unpaid labor; as a result, they are often not entitled to public pension, which is related to employment histories. Therefore, after the death of a spouse, older widows are likely to face poverty and discrimination due to difficulties regarding economic and social independence. This study used data from the 7th Korean Longitudinal Survey of Women & Families (KLoWF). A total of 502 older widows(aged 65+) were analyz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ree latent classes of social exclusion were selected using the latent class analysis; the low exclusion class, the income and job exclusion class and the multiple exclusion class. Examining depression by class reveal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income and job exclusion class and the low exclusion class, whereas the multiple exclusion class experienced significantly more severe depression. This study showed that there was no non-exclusion class among older widows in Korea. Older adults, who are particularly vulnerable to social exclusion, may become even more vulnerable when they are women and when they have lost a spouse. This study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ameliorating social exclusion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older widows.

Keywords : Older widows, Social exclusion, Depression, Latent class analysis

* First Author: Doctoral Student,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Yonsei University

페미니즘과 남북관계: 북향여성을 중심으로*

전수미**

초 록

북향여성들은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온몸으로 경험한 남북분단의 산 증인이자 아픔이다. 지금까지 북향여성의 이익은 남북분단이라는 이름 아래 남성에 의해 지배당하고 억눌려왔다. 북향여성은 장기간 폭력에 쉽게 노출당해 왔음에도, 남북관계의 현실적 문제들에 부딪쳐 조명받지 못했다. 북한 특유의 남성 중심 가부장적 문화와 남성우월주의가 북향여성들의 의식 기저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향여성이 겪는 문제는 그들의 선택이 아닌 냉전시대의 산물로 원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데에 있다. 냉전체제의 그림자는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국가폭력'이 되어 북향여성을 포함한 모든 북한민들에게 반영되고 그들을 옴아매고 있다.

인간안보를 기초로 한 페미니즘 관점의 시각은 기존의 냉전 체제와 군사주의적 논리를 극복하고 견어낼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이다. 페미니즘 인간안보를 통해 여성의 비안보 문제를 가시화하고 기존의 국가 중심적 시각에서 벗어나 '인간'을 중심으로 안보 개념을 확장할 때, 새로운 남북관계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북향여성, 페미니즘, 인간안보, 국가안보, 국가폭력

* 이 논문은 북향여성을 지원하며 경험한 국가안보적 시각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입니다. 본 줄고(拙稿)에 대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여성연구』의 익명의 심사위원 세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 숭실대학교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초빙교수(변호사, 정치학 박사). (sumijeon@ssu.ac.kr)

I. 서론

“안녕하세요. 저는 1년 넘게 성폭행을 당해온 피해자입니다. 신고까지 많은 고민과 어려움,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동생이 정치범 수용소 가고 성폭행까지 매일매일 너무 힘들었고, 잠깐이라도 죄책감과 고통스러운 감정을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시도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몇 글자로 저의 억울함과 아픈 마음을 설명하기 어렵지만 조금이나마 삶의 의지를 찾고 싶었고, 더 이상 혼자 숨어 울지 않으려고 용기를 내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¹⁾

2019년 12월 국군정보사령부 간부들에게 1년이 넘도록 성폭행을 당한 한 북한여성²⁾이 ‘미투(me, too)’를 했다. 지금까지 북한여성들은 탈북 후 여정에서, 남한에 정착하면서 수많은 유혹과 자본주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 북한여성 중 25.2%가 성폭행 피해를 입었거나 성 관련 문제로 시달리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14). 그러나 그들은 보복 우려나 생계유지를 위해 그동안 자행되어온 성폭력 피해를 함구해 왔다.³⁾

도대체 왜 북한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지독한 억압을 받으면서도 자신들의 몸과 마음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지 못했을까. 북한여성들은 북한과 남한의 체제를 온몸으로 경험한 남북분단의 산 증인이자 아픔이다. 북한여성의 수난사는 그들이 겪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을 인식하는 순간부터 생겨난다. 우리 사회는 남한 여성과 북한 여성의 차이를 최근에서야 인식하게 되었고, 따라서 북한여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 동안 남한의 여성운동은 북한여성 문제에 대해 적극적이지 못하였다. 일부 북한여성을 지원하는 단체는 여성운동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었다고 하며, 북한여성들이 도와달라고 찾아가면 소극적 자세로 임하곤 했다는 진술도 있다(북한여성과의 인터뷰, 2020-2021). 우리는 2019년 한 북한여성의 절규와

1) 2019년 12월 30일 군 정보사령부 탈북여성 성폭행 사건에 대한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 내용 일부를 발췌하였다.

2) ‘탈북자’의 영문명은 “North Korean Defector”인데, 이 호칭은 “북한에서 탈출한 상태”만을 주목하여 명명된 것이다. 이들을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지 못하고 정치적 상태인 ‘탈출 상태’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있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다는 논의가 있다. 이 점을 주목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용어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순화시키고 ‘북한에 고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뜻인 ‘북향민’, 그 중에서도 본 연구의 주제인 ‘북향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3) 저자는 2020년 12월 30일부터 2021년 2월 24일까지 북한여성과 인터뷰를 실시하여 일부 내용을 발췌했다. 이후 관련 내용은 ‘북향여성과의 인터뷰, 2020-2021’로 표시하려 한다.

함께 시작된 미투로 이제야 북향여성의 처절한 경험을 바라보게 되었다. 일부 페미니즘 학자들은 그동안 이 경험을 심도 있게 고찰하지 못하였고, 지금까지 논의된 페미니즘은 남북 체제경쟁과 대립의 역사 전반에서 북한에서 온 여성들까지 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북향여성의 이익은 남성에 의해 남북분단이라는 명분으로 지배당하고 억눌려왔다. 한쪽에서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이유로 북향민 인권이라는 단어가 금기시되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남북 체제경쟁의 수단으로 북향민 인권을 부르짖었다. 결과적으로 남북관계의 진보나 퇴보는 어디까지나 ‘남성들만의’ 일이었다. 남북분단과 체제대립의 역사조차 인류 절반의 목소리에만 치중하는 바람에 다른 쪽의 현실이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없었던 것이다. 남성중심적으로 역사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북향여성들의 현실과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다.

북한과 남한에서 여성으로 살다 보면, 수시로 여자들은 열등한 존재로 남성들의 통제 아래 있어야 한다고 철저하게 믿는 남성들을 만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삶이 편리한 방향으로 개선되었지만, 남북분단 속에 살아가는 북향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향유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그들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삶이 더 악화되기도 하는 모순을 겪는다. 북향여성들은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 간 경계가 허물어질수록 남성브로커와 남한 남성들이 가하는 가학적 통제 속에 수많은 모욕과 인권침해를 받아 왔다(북향여성과의 인터뷰, 2020-2021).

본 연구에서 이론적 질문은 두 가지이다. 첫째, 왜 그동안 페미니즘 논의에서 북향여성이 제외되었던 것일까. 남한의 여성운동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은 문제이다. 두 번째 질문은 페미니즘 이론을 남북관계에 적용하여 본다면 향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발전하여야 하는가. 우리는 페미니즘을 통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이다. 즉 페미니즘을 바탕으로 한 우리들의 역할에 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향여성을 주 논의 대상으로 삼아 기존의 남북관계를 성찰하고 대안적인 남북관계를 제안하고자 한다.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국가안보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인간안보 패러다임을 통해 북향여성의 인권과 남북관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남북관계 연구에서 페미니즘 시각이 필요한 이유

1. 국제정치의 현실주의에 기반한 안보 논의

현실주의는 국제관계 이론의 주류 중 하나로, 국제정치는 언제나 권력을 추구하는 행위자들 사이의 갈등의 장으로 파악하는 시각이다. 이런 시각은 자유주의라는 협력적인 이상과는 대조적인 모습을 보인다. 현실주의는 국가는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고 국제시스템은 무정부상태로 이를 조절할 수 있는 행위자가 없으므로 지속적인 적대상태에 있다고 간주한다(Donnelly, 2008:150). 또한 시스템 내에서 단일하고 합리적인 행위자를 상정하고, 국가는 이기심을 추구하며, 모든 주요 관심사가 생존이므로, 국가는 생존을 위해 군대를 구성하여 안보딜레마에 빠지게 된다고 본다.

전통적으로 안보문제에 대한 논의는 주로 군사적 영역에서 ‘주권’과 ‘국익’에 대한 위협과 대응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안보개념에 대한 논의는 주로 누구(혹은 무엇)를, 어떤 위협으로부터 어떤 수단으로 보호해야 하는가의 문제로 귀결된다(Buzan, 1991:433). 전통적 안보라는 관념은 주로 현실주의와 신현실주의에서 논의되어 왔는데, 현실주의자들과 신현실주의자들은 국가와 그 구성요소인 국민, 영토, 주권을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안보의 주요 영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표적인 현실주의 학자인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는 국제관계를 국가 간의 힘(power)의 확대를 위한 투쟁으로 인식하고, 군사력이 국력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다른 학자인 케네스 왈츠(Kenneth Waltz)는 안보문제를 국가 간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안보는 국가 간 경쟁을 통해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전통주의적 안보의 입장에서는 아직 전쟁의 위협이 상존하고 있으며, 빈곤, AIDS, 환경문제, 국제적인 마약거래 등과 같은 다양한 안보위협 요인이 근본적으로 전쟁의 위협을 없애는 것은 아니므로 안보의 영역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면 오히려 안보 일관성을 잃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무책임한 행위라고 강조하고 있다(Walt, 1991:213). 미어샤이머(John Mearsheimer) 또한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 안보관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연구들은 안보문제를 분석할 수 있는 분석틀이나 구체적인 연구를 통한 대안적인 안보가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으며(Mearsheimer, 1995:82-93), 패트릭 모간(Patrick Morgan)은 안보개념을

“국제적으로 가해지는 물리적 피해로부터의 안전”으로 그 영역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Morgan, 1992:420).

전통적인 안보에 대한 담론은 군사적 대립이 첨예화되었던 냉전시기에 황금기를 맞이하였으며, 남북한도 위와 같은 냉전의 산물로 분단되어 지금까지 분단국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 개념을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안보 환경이나 안보에 대한 위협의 성격, 변화 등의 영향을 받는 유동적인 것으로 본다면, 한반도 문제를 투영하는 안보문제도 탈냉전과 함께 기존의 현실주의적 안보개념에 대한 ‘안보의 새로운 사고(new thinking on security)’가 요구된다. 이미 1980년대부터 리처드 울만(Richard Ullman), 테오도레 모란(Theodore Moran) 등 여러 학자들이 위와 같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 바 있다(Ullman, 1983:129-153, Moran, 1990:74-90).

2. 페미니즘과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 국가안보에서 인간안보로

다양한 국제정치이론이 등장하면서 페미니즘은 국제정치학과 결합하였고,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의 한 영역으로서 페미니즘 안보이론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페미니즘 안보이론은 전통적 국제정치학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면서 이론을 재정비 하면서도, 이론에만 치중하지 않고 경험적인 연구로 나아가고 있지만 비판적·대안적 이론의 성향상 분단현실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측면도 존재한다(황영주, 2013:26).

최근에는 안보 개념의 확장, 젠더와 국제관계, 안보에서의 여성과 여성의 경험 고려 등을 연구의 중심 내용으로 파악하면서, 그 연구에 숨어 있는 젠더의 위계질서를 비판하고, 안보연구를 수행할 때 여성과 여성의 경험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황영주, 2013:37). 이들 연구는 기존 국가 중심의 안보를 재구성하고, 구조적 폭력에 대한 불안정성을 폭로하면서 폭력의 상호 연관성을 밝힘으로 인해 드러나는 여성의 희생에 주목한다. 특히, 전쟁과 성차별주의는 같은 뿌리에서 나온 것임을 밝히고 반전 집회뿐만 아니라 성폭력 문제도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었다. 미국에서는 2010년대에 들어 본격적으로 학계 안의 세부 분야로 자리 잡고 세미나 등을 진행하는 기조가 갖춰지고 있다(박강성주, 2010:213).

기존의 안보연구는 안보에 대한 남성성과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한 군사적 시각을 바탕으로 국가 및 국가안보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군사주의와

폭력이 기존 안보연구의 핵심주제였다면, 페미니스트 안보연구는 안보의 성별 차원에 집중하는 안보연구의 하위분야로서 ‘젠더 렌즈’를 통해 안보의 다양한 형태와 의미를 연구한다(Carol, 2011:581-586). 즉 국제정치의 군사화나 전쟁, 성별, 인종, 경제 및 권력정치 같은 문제가 세계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분석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Feminist security studies(FSS)에서는 전쟁이나 갈등, 조직적 폭력 및 평화와 같은 안보연구 내 확립된 주제를 바탕으로 젠더의 사회적 구성이 제도적이나 구조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며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Ken & Steve, 1995).

여성주의의 관점에서 국가를 보면 젠더위계의 구조적 폭력 즉 여성의 체계적 비안보(불안정)가 드러나지만, 이와 같은 여성의 비안보 문제는 잘 보이지 않거나 여성의 비안보 문제가 아닌 다른 문제로 간주된다. 여성 비안보 문제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은 것은 젠더화된 정체성과 이데올로기가 이러한 구조적 폭력을 재생산하고 탈정치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배적인 국제관계학 담론인 현실주의가 남성의 경험, 남성의 세계관, 남성의 언어를 기초로 구성되어 있다는 문제도 있다(심영희, 2005:57-60).

코펜하겐 학파의 배리 부잔(Barry Buzan)은 기존 선행연구에 대하여 냉전의 결과로 인한 안보연구 속에서 조직적 폭력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고 있다(Buzan, 2016:25-28). 부잔은, 안보는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정의하고 있다(정국본, 2004:136; Buzan, 1995:144 재인용).

더불어 앤 티커너(J. Ann Tickner)는 평화학이 안보를 물리적, 구조적 생태학적 폭력의 제거라는 측면에서 정의하기에 페미니즘 이론과 양립할 수 있음을 주장(Tickner, 1992)하며 구조적 폭력의 해결을 위한 규범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티커너는 국제관계 이론에서 젠더 문제를 검토하여 남성의 관점에서 인식되고 정의된 시스템 속에서 소외되고 식민지화된 문제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 갈등과 경쟁에 과도하게 초점을 맞추고 권력에 기반한 국가 중심의 안보 개념에 집착할 때 생기는 소외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Swerdlow, 1995:161-162). 티커너는 전쟁과 평화에 관하여 여성주의적 접근을 시도하며, 현실주의적 관점과 달리 질서와 정의 사이의 이분법적 사고를 거부한다. 그녀는 전쟁은 보호자와 피보호자 관계를 촉발시키며, 특정한 사람이 남성이라는 젠더를 가진 사람의 보호를 받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한다. 여성주의 시각을 통해 국제관계에서의 이미 확립된 지식 구조에 의문을 제기하여 결과적으로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안전한 세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Tickner, 1993:269-274).

스파이크 피터슨(V. Spike Peterson)은 조직적 불법행위로부터의 보호라

는 관점에서 구조적 폭력, 여성 비안보를 가시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불법 행위자(Racketeer)는 위협을 창조해놓고 그 감소를 위해 돈을 내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보호자가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국가는 보호라는 조직적 불법행위로서 위계와 구조적 폭력으로부터의 보호를 구실로 그 위계와 구조적 폭력을 재생산하고 있다고 본다. 국가의 경우, 보호는 맞바꾸라고 할 수 있는데, 국가는 외부전쟁의 위협을 흉내내거나, 자극하거나 심지어 날조한다는 것이다.

피터슨은 다양한 요인을 들어 보호라는 조직적 불법행위의 체계적 비용과 불안정이 효과적으로 신비화된다고 주장한다. 첫째, 보호는 합리적으로 선택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비합리적으로 의존을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탈 중심화가 피보호자의 집합적 이익을 흐리게 한다. 셋째, 보호체계가 피보호자의 책임성을 흐리게 하면서 비참여적 동태를 재생산한다. 즉 피보호자가 보호자와 동일시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넷째, 협박의 현실을 무시할 수 없다(심영희, 2005:65-66 ; Peterson, 1992).

국내에서는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안보와 그 과제에 대한 논의(황영주, 2007:75-94)와,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와 페미니즘에 대해 분석한 연구(이정옥, 2017:39-55), 한반도 안보에 대해 젠더화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국제정치학 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연구(전재성, 2002:137-175) 및 인간안보와 여성안보 관점에서 동아시아 여성안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연구 등이 있다. 페미니즘과 안보이론이 기존 국제정치이론의 다양화 속에서 국제정치학의 분과학문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주변적 연구로 치부되고 있다. 그 중 페미니즘 국제정치학과 안보연구는 위에서 열거한 대로 극히 드물며, 수준 또한 이론을 소개하고 국제정치학에 주는 함의를 모색하는 데 그치는 한계가 있다.

한반도는 냉전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남북분단 구조 속에서 현실주의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관계의 이해와 역할 도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페미니즘 안보연구가 자리잡지 못하였다. 제국주의적 전쟁을 경험한 국가의 경우 폭력 체험에 의한 정체성 형성과 기억이 폭력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 범위와 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전쟁의 경험에 따른 사회적 기억은 사회 전반의 평등과 관용을 고무시키기보다는 역압을 정당화하는 규율로 자리잡을 수 있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전쟁의 기억이 단순한 기억으로 남지 않으며, 한국 사회 내부에서 형성되는 폭력에 대한 규범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이선미, 2005:103-104).

이러한 관점은 남한이 오랫동안 군국주의와 국가라는 조직적 폭력에서 남성이 오랫동안 수행한 역사적인 역할, 안보에 대한 직접적 이해관계자로서 국가

안보 내 북향여성의 목소리가 억제되거나 외면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북향여성에게 대한 남한 공무원의 성폭행을 통해 드러난 북향여성들의 인권유린 실태는 한반도 문제에 국가안보와 남북의 체제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북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군사적 안보의 헤게모니적 남성성의 한계를 인식하고 젠더의 역할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또한 지금까지 남북관계가 남성 중심, 경제 중심, 기득권 중심이었던 반면 여성이 배제된 채 진행되어 왔기에 북향여성에게 대한 이미지가 더욱 왜곡되어 왔다는 점에서 페미니즘 안보이론을 남북관계에 적용하여 바라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앤 티커너의 여성주의 관점에 입각한 안보론을 바탕으로 북향여성 문제가 남성 중심적 안보 개념과 국가 중심의 국제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외되고 배제되었는지를 조명하고, 인간안보 측면에서 북향여성 보호와 향후 남북관계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북향여성을 주논의 대상으로 삼아 기존의 남북관계를 성찰하고 대안적인 남북관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논의를 통해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국가안보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나아가 인간안보 패러다임을 기초로 북향여성의 인권뿐만 아니라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제시하려 한다.

Ⅲ. 페미니즘으로 보는 남북관계 성찰

1. 복합적인 폭력에 노출된 북향여성

1) 국가안보에 기반한 북향민에 대한 국가폭력

냉전체제를 겪으며 남·북은 이데올로기의 대결로 치달았고, 한반도는 남과 북으로 분단되었다. 한국전쟁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시작된 동서냉전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전쟁 이후에도 한반도는 동서대결의 장으로서 ‘국가안보’라는 이름 아래 지속적인 상호 불신과 대립·갈등 및 경쟁 상태에 있으면서도, 남북공존을 통한 체제유지를 지속하고 있다.

현재 남·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남북한 특수관계론’을 기반으로 하여 북한을 적이나 화해협력의 동반자로 간주하고 있다(대한민국 헌법 제3조, 제4조). 헌법 제3조에 기초한 국가보안법은 북한에 대한 국가안보적 시각과 국가폭력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초헌법적 성격의 법률인 국가보안법의

이데올로기는 반공산주의를 국시로 하여 표현의 자유로 표상되는 집회·결사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헌법 제21조)를 억압하고 물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한반도 이북지역을 불법점령하고 있는 북한을 방문하거나 북한으로 출국하는 행위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기인한 남한의 대북한 국가안보는 남북관계에서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남북교류를 제한하거나 남·북한 대화에 대한 자기검열 장치로 작동한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시각은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국가폭력’이 되어 북향여성을 포함한 모든 북향민들에게 반영되고 그들을 옴아매고 있다. 여기에서 ‘국가폭력’은 ‘북향민들이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할 수도 있다는 가정적 상황을 대비하여 국가가 미리 조직한 폭력의 동원체계’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것은 형벌법규로, 때로는 감시 또는 수의적 행정처분의 형태로 다양하게 발현되고 있다.

2014년 북향민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다. 서울시 공무원인 A가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고, A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증거는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A의 여동생 B의 진술이었다. 그러나 B는 국정원 직원들이 여동생 B에게 폭행 및 전기고문실로 데려가겠다고 협박하여 A가 밀입북을 했다는 허위진술을 강요받았다고 고백하였다. 이 사건은 사건 당사자가 북한 출신이기에 간첩으로 간주되고 기소되었던 사건이며, 결국 국가가 국가안보에 기반하여 북향민을 ‘이중스파이’로 간주하고 감시하며 국가폭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잔은 안보는 위협으로부터 자유에 대한 추구이며, 존재의 조건에 대한 포괄적 관심영역을 포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정치영역에서 국내 통합문제와 냉전이후 남북갈등 등을 안보문제로 제시하고 있다.(부잔, 1991:433,439) 국가안보 관념이 국가의 물리적 사용을 중심으로 추구한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안보 문제를 개인이나 사회의 범위로 확대되었고, 이 맥락에서 국내에 입국한 국정원 단계부터 자행되는 북향민에 대한 국가폭력을 사회적으로 인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신변보호담당관 제도는 2019. 1. 15. 법령에 근거가 명시되었지만, 실제 운영되는 바를 살펴보면 그 성격이 신변의 ‘보호’가 아니라 북향민이 잠재적 범죄자임을 전제로 하는 ‘감시’ 성격의 보안처분과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북한은 남한을 무력으로 해방시키거나 남한에 친북정권을 수립하여 북한 주도 통일을 실현하려는 정책기조 아래 대남정책을 추진하였다. 남한도 이에 대응하여 국가안전보장을 이유로 국가보안법을 제정하거나 북향민을 국정

원과 보안과 경찰이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게 하고 있다. 국가가 국가안보를 이유로 북향민을 '잠재적 체제전복자'로 간주하고 관리·감독한다는 점은, 국가가 북향민 입국 이후단계부터 국정원 조사와 경찰감독이라는 미리 조직된 국가폭력의 시스템을 동원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기존에 국가안보 시각으로 북향민을 바라보고 관리해왔던 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자각하고 문제를 제기하며, 나아가 남북관계를 평등한 관계로 개선하기 위해 포용적이고 포괄적인 안보에 대한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

2) 북한여성에게 투영되는 국가폭력

북향 여성들이 국내에 입국하면 3개월 동안 국정원 북향민보호센터라는 임시보호센터에서 본인의 신분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조사 후 하나원에서 사회 적응교육훈련을 받고 나와 처음 만나는 남한 사람이 바로 군인이거나 신변보호담당관이다. 본인이 북한에서 하던 업무의 성격에 따라 신변보호담당관만 배정되거나, 군인들까지 접촉하게 된다.

남한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평생 국정원 직원을 만날 일도, 국정원이 관찰하는 기관에서 3개월에서 8개월까지 간헐 조사를 받지도 않는다. 무엇보다 경찰이 나의 하루하루를 감시하고 보고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무슨 이유로 북향 여성들은 남한에 입국하자마자 국정원에 간헐 조사를 받고 하나원 교육 후에는 신변보호담당관이 배정되어 보호라는 이름 아래 감시를 당하게 되는 것일까.

이는 일제강점기가 종료되고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되는 역사의 비극이 여성에게 투영되면서 시작되었다. 북한이 해방 후 법제정을 통해 여성이 사회주의 건설에 동원된 것도, 그러면서도 가부장적 체제 아래 아이를 돌보고 남성을 보조하는 지위를 강조한 것도 모두 여성해방이 아닌 또 하나의 혁명을 위한 도구이자 꽃이길 바랐기 때문이다. 남북한은 한반도 내 누가 합법적인 정부가 될 것인지에 대한 인정투쟁이 극한으로 치달았고, 체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다양한 수단과 도구가 필요했다. 남북한의 인정투쟁 속에서 북한 여성은 북한에서는 혁명화의 꽃으로 활용되고, 남한에서는 대북공작이나 북한 관련 정보 획득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북향 여성은 남북한 체제경쟁과 분단의 최대 희생자가 되고 만 것이다. 이는 앤 티커너가 그토록 경계했던 남성중심적 사고에 기반한 체제 경쟁시스템이 국가안보에 집착하면서 발생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북향여성에 대한 폭력은 장기간 존재하였으나 남북관계의 현실문제에 부딪쳐 조명받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부각되고 있다. 국가폭력으로 희생되어 온 이들의 목소리가 누적되어 오다 오늘에서야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다. 2020년 1분기 기준으로 우리나라 입국 북향민 3만 3,658명 중 여성이 2만 4,256명으로 전체의 72.1%를 차지하는데,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자료”에서는 한국에 정착한 북향민 여성들이 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사회적 폭력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음을 밝히고 있다(여성가족부, 2017:11-17). 최근에는 탈북여성 미투 운동이 시작되면서 북향민 신변 보호를 맡고 있던 현직 경찰 간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간부, 북향민 단체 대표 등 최근 탈북여성을 성폭행한 사건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 국가가 북향여성들을 ‘보호’라는 이름으로 관리하고 감시하는 국가폭력 뿐만 아니라 ‘성폭행’이라는 국가폭력까지 용인하거나 묵인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간첩색출과 신변보호를 명목으로 국가는 북향여성을 정보수집 대상으로 간주하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국가공무원이 자행하는 성폭행을 묵인하며 피해여성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연합뉴스, 2021.6.2). 북향여성들은 북한에서 태어나고 자라나 남한과 가치관, 사회문화 등에 익숙하지 않다. 특히 남북한은 분단 70여 년 동안 많은 것이 달라졌는데, 그 중 북향여성들을 어렵게 하는 것은 언어 차이와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겪는 차별과 멸시이다(북향여성과의 인터뷰, 2020-2021).

위와 같은 관계 부처의 태도는 국가기관이 북한의 침략에 방어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국토를 방어한다는 국가안보론을 바탕으로 북향민을 감시하는 입장에 서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안보는 단순히 군사력과 체제경쟁에 의존하는 안보 관련 부처에서 담당하고 이를 기반으로 북향민들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제반영역에서의 정책이 포괄적으로 작용해야만 달성될 수 있는 하나의 사회 구조물에 가깝다.

또한 북한 특유의 남성 중심 가부장적 문화와 남성우월주의가 북향여성들의 의식의 기저에 작동하고 있는 문제까지 있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북한 사회의 행태는 혁명의 그림자처럼 존속하였고, 여성은 남성에게 강간을 당하면 ‘잡아먹혔다’라는 인식하에 그런 수치스럽고 망신스러운 일을 숨겨야 살아갈 수 있었다(북향여성과의 인터뷰, 2020-2021). 무엇보다 북한에서 인권의 본질에 대한 교육이 없어 여성의 인권이 무엇인지, 본인이 어떠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도 없다.⁴⁾ 이러한 점을 배경으로 지금까지 남한은

4) 2011년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의 “북한이탈주민 법의식 사례연구”에 따르면 ‘북한에서 인권이라는 말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대답이 27%, ‘인권은 미국이나

군사주의와 남성중심주의적 사고 및 북한 특유의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문화에 대한 인지를 바탕으로 북향여성들을 대하고 국가폭력을 가해왔으며, 북향여성들이 부당한 요구나 성폭행에 항의하면 “넌 돈을 요구하는 꽃덀이냐. 조국의 배신자와 변절자(북한에 대한)는 조용히 살아라”는 식으로 침묵을 강요해 온 (북향여성과의 인터뷰, 2020-2021) 고질적 문제가 있었다.

3) 북향여성에게 투영되는 남성폭력

남한에 입국한 북향 여성은 고향을 버리고 왔다는 죄책감과 여기서도 정착하지 못하면 끝이라는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정착 생활을 시작하게 된다. 여성의 몸에 대해 부정적인 문화가 형성된 북한을 잘 알고 있는 남한의 군인과 경찰, 동향 남성들은 피해를 당해도 망신스러움에 신고하지 못하는 북향 여성에게 성적 유린을 망설이지 않는다.

북향 여성이 성적 착취나 유린을 당하고 항의하면 가해자들과 남성들은 피해자인 여성의 탓으로 몰고 가 “여자가 행실을 어떻게 했길래”, “몸이 더럽혀진 여자가 어딜 다니느냐”, “왜 치마를 입어서 그런 일을 당하냐”라며 여성의 행실과 부덕함의 소치로 치부한다(북향여성과의 인터뷰, 2020-2021).

일부 북한 남성들은 북한 여성을 가지고 싶으면 우선 몸부터 가지면 된다는 생각으로 동향여성들을 강간하기도 한다. 최근 벌어진 동향 북한여성 성폭행 후 월북사건, 성폭행을 당한 후 탈북단체장에게 피해 사실을 호소하러 갔다가 오히려 다시 성폭력을 당한 북향 여성 사건, 자기 뒤에 남한 국회의원이나 미국 대통령이 있는 힘 센 사람임을 강조하며 북한에서 온 지 얼마 안 된 어린 북한여성들을 강간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하며 성 착취와 성 접대를 시키는 일부 북향 남성들은 북향 여자를 정복의 대상이자 남자보다 열등하고 힘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추단하기에 충분하다.

업무로 북한 여성들을 만나는 군인들이나 신변보호담당관인 경찰들은 보호라는 이름으로 만나거나 집으로 찾아가고 혈혈단신의 몸으로 남한에 온 북향여성들을 겁탈했다. 북한에서 군인이나 형사가 일반 인민들에게 얼마나 힘 있고 무서운 존재인지 아는 일부 북향 여성들은 남한의 군인과 경찰을 북한과 같다고 생각하며 이들에게 복종하고 두려워한다. 북향 여성들은 성폭행을 당해도 자리에서 도망치거나 그냥 당하고 있거나 무조건 빌고 애원할 뿐 저항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일은 드물다. 성폭행이 실제로 처벌받는다고 생각하지

남조선에서 북조선을 비방하기 위해 사용하는 말이다’에 대답이 16.2%임을 알 수 있다. 전체의 43%가 인권에 대해 들어본 적 없거나 잘못 인식하고 있다.

도 않는데다가 힘 있는 사람들을 신고했다가 남자들에게 보복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북향여성에게 남성폭력이라는 형태로 국가폭력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언어의 문제도 발생한다. 피해 북향 여성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남한 용어 중 상당수가 한자어나 외래어로 되어 있어 같은 조선어라도 50% 이상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한다. 북향 여성들은 일반 남한 언어표현에 대한 이해나 표현능력이 남한 사람들보다 현저히 부족하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부정적 여론이 형성되고 사실상 불이익한 처우, 특히 신분 노출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가해자들은 상대방이 자신보다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열등하다는 생각으로 북향 여성을 정복하고 파괴하는 폭력을 자행하며, 이는 북한이라는 존재 자체를 파괴하고 정복하며 남한이 북한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전쟁의 현상이 되기도 한다. 일부 남성들이 가진 북향여성들이 말을 잘 듣고, 적은 비용으로 데리고 살기 좋으며, 남한의 맛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이들에게 성 착취를 하는 행태가 이를 잘 보여준다(북향여성과의 인터뷰, 2020-2021). 티커너가 문제를 제기한 남성의 관점에서, 북향여성은 남성들이 자행하는 폭력에 의해 남한의 체제 우월성을 재확인시켜주는 도구로 희생되고 파괴되며 버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티커너에 따르면 남한의 남성 중심 시스템 속에서 북한과 북한여성을 바라보는 남한 남성들의 시선이 강자이자 내부 식민지를 바라보는 제국주의자로 변모할 수 있으며, 이 또한 남한 남자들이 남한 사람의 지위에서 자행하는 구조적 국가폭력이라 할 수 있다. 북향여성들이 느끼는 수치심은 피해를 입은 북향여성들이 침묵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가시적 폭력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피해 북향여성들은 스스로에게 굴레를 씌우고 자살하거나 침묵 속에 살아간다.

2. 페미니즘과 인간안보

북향 여성 인권 문제는 우리에게만 민족의 문제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인도주의적, 인류보편적 문제이기도 하다. 1948년 12월 10일 채택된 「UN세계인권선언문」은 모든 사람과 장소에 인권과 근본적 자유가 적용된다는 내용을 세계 최초로 확인한 것이라 의미가 있다. 이는 국제법상 강행규정으로 국제인권법 발전에 기여하였는데, 위 선언은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

엄하며, 평등하며,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애의 정신으로 대해야 하며(제1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고, 이 선언에 나와 있는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제2조).

1990년대부터 시작된 남한의 진보적 여성운동은 ‘아시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여러 차례에 걸쳐 토론회를 개최하고 군 위안부 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베이징 등 세계 각지에서 토론의 장을 열었다. 이는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 여성국제법정’에서 남북이 공동기소장을 제출함으로써 큰 결실을 맺었다. 2000년 10월 3일 북조선로동당 창립 55주년 기념식에 13개 정당과 사회단체가 참여하였는데,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유일하게 초청받아 북한을 방문하였고 이는 2001년 남북여성통일토론회, 2002년 ‘6.15. 공동선언 실천과 평화를 위한 남북여성토론회’로 연계된다.⁵⁾

남한과 북한 여성의 만남 속에서도, 남한 내 북향여성이 겪는 인권문제는 여전히 외면받았다. 북향 여성이 겪는 문제는 그들이 선택이 아닌 냉전시대의 산물로서 원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데에 있다. 남북한 교류가 지속되었지만 전체 교류협력 중 여성 교류의 비율은 미미하다. 북한에서 온 여성들은 사회적 혁명가이자 자상한 어머니, 순종적인 며느리, 헌신적인 주부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아 살아왔다. 여성은 조선의 전통문화에 맞게 ‘조선치마저고리’를 입는 게 좋겠다는 김정일 위원장의 교시 후, 모든 여성들이 치마저고리를 착용하게 된 모습에서 우리는 북한 당국이 북한여성들의 사적 공간을 종속시키는 모습을 확인하게 된다. 즉 국가가 여성이라는 대상에 대해 적극 개입함으로써 북한여성의 자율성과 자기결정권이 대단히 약화되었으며, 이는 이들의 남한 정착에도 큰 악영향을 미쳐왔다.

그러하기에, 이제 우리는 남한과 북한 여성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적용되는 페미니즘이 필요하다. 그 대안은 바로 ‘인간안보’에 바탕을 둔 페미니즘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생명과 자유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며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인류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전쟁이나 군사적 위협만이 인간의 생명과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지만, 이 문제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개념화하여 다루게 된 건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다. 인간안보 개념은 여기서 비롯되었다. 인간안보는 ‘인간을 생명과 자유, 안전한 생활에 대하여 위협이나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일체의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United Nations Development

5) 보다 자세한 내용은 김원홍 외(2020) 참조.

Programme, 1994:23). 인간안보는 그 동안 안보의 개념을 ‘국가 중심’으로 논의해 왔던 기존 담론에서 벗어나 국가가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바라보는 개념이다.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UNDP) Report (1994)는 인간안보는 국가가 아닌 인간을 중심으로 하므로 국경을 초월하며, 상호의존성과 사전예방적 특징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 1994:21-23).

지금까지 북향여성들은 남한과 체제경쟁 중이자 전쟁 중인 ‘반국가단체’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한 일을 겪어도 제대로 된 보호를 받지 못하거나 침묵을 강요받으며 살아왔다. 남한사회에서 통용되는 북한과 북향여성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걷어내고, 여성들은 우리 안에 자리잡은 ‘군사주의’에서 벗어나 인간 자체를 중시하는 인간안보 패러다임으로 북향여성들을 바라보아야 한다. 고향이 남과 북 어디인지와 관계없이 인간안보적 관점에서 인간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인류 보편적 가치 속에서 북향여성을 바라볼 때, 기존의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이 북향여성에게 투영되어 행해지는 국가폭력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IV. 페미니즘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방향

1. 북한사람들의 인권에 대한 정치적 공세화 중단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과 2020년 대북전단법 제정 과정에서 여야가 크게 충돌했다. 북한인권 관련 법안은 2004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임명, 2005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제정 배경을 바탕으로 하며, 국내에서도 많은 논의가 있었다. 북한인권법안은 2005년부터 11년간 발의와 폐지를 반복하다가 결국 2016년에 제19대 국회의 발의안 11개를 통합하는 북한인권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가 합의하면서 가까스로 제정되었다. 당사자국인 한국은 2004년 미국의 북한인권법, 2006년 일본의 북한인권법보다도 제정이 상대적으로 늦었는데, 그 배경에는 북한인권이라는 이슈에 좌·우 진영논리가 반영되면서 민주당이 북한과의 관계 - 대화와 소통을 이유로 북한인권을 거론하는 것을 꺼린 반면, 새누리당은 북한을 ‘주적’으로 삼고 있으므로 주적국가의 만행을 적극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국회가 2020년 12월 의결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보수

진영에서 ‘김여정 하명법’으로도 불리는데, 2020년 6월 4일 김여정 북한 제1 부부장의 담화를 시작으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비난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한 후 취한 조치라는 이유 때문이다. 결국 통일부는 2014년 북한의 전단살포 대응 고사총 사격에 따른 우발적 충돌위험과 남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이유로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였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일반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중점을 두는 진영은 인권·노동·복지를 중점으로, 북한 체제에 비판적인 진영은 경제·안보에 중점을 둔다. 남북분단 상황에서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진영 중 일부는 북한을 화해·협력의 동반자로 인식하고 보다 나은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교류 추진을 위해 탈북한 북향민들의 목소리를 상대적으로 불편해하기도 하였다. 북향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면 정작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해야 하는 순간 북한이 거부할 수 있는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 체제에 대해 비판적인 진영은 북한인권과 북향민 인권에 대해 진심인가. 북향여성들이 동향 북향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거나 피해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같은 북한사람끼리의 일이고, 정치적으로 진보진영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기에 북향여성들의 인권유린에 침묵하는 모습을 보인다. 남성 중심적 안보관을 기초로 북한체제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일부 북향남성들만 조명하고, 북향여성은 북향민 사회에서도 격리된 계층이자 새로운 하위계층으로 전락된다.

우리는 티커너의 페미니즘 안보의 시각을 바탕으로 할 때 기존 국가안보 관점에서 북향민들을 바라보고 통제하는 남성중심적 인식과 안보정의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국가중심의 안보와 남성중심적 시각에서 탈피하고 인간의 존엄성 자체를 중시하는 ‘인간안보’를 바탕으로 북향 여성들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남한사회는 그동안 편의에 의해 선택된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만을 반영한 ‘선택적 정의’를 버리고 남북 분단의 현실 속에서 새로운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북향여성의 목소리를 수면 위로 비상시켜야 한다.

북향여성의 인권을 편의와 정파성에 따라 활용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고, 정치적 무계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를 북향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선별적 태도를 보이는 것도 대한민국에서 미투가 여성의 인권이 아닌 정치적 영역임을 보여준다. 페미니즘을 기화로 ‘인권의 정치적 공세화’를 중단하고 남한 내 북한여성 지원을 통해 남북한 전체에 ‘인간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2. 남한 일방의 시각으로 북한과 북향여성에 대한 재단 지양

지금까지는 미비하게나마 남북여성 교류를 통해 남한 내 북향여성들이 서로를 알고 차이를 인식하며 이해하는 기회를 가져왔다. 이제 남한에서 매 명절마다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어하거나 남한의 정착이 너무 힘들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이들을 온전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작업이 필요하다. 북한 특유의 집단문화, 고난의 행군과 대북제재 시기를 거치면서 인간으로서 향유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해결되지 못한 채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온 북향여성들을 남한 일방의 시각으로 재단하고 평가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현재 남한에서는 지역감정이 소멸하고 있고, 다문화에도 조금씩 열린 시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남북분단과 남북한 특수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북한과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정치적 도구나 체제경쟁의 산물로 취급당하고, 통일의 마중물이라는 이름으로 장차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당위론적 역할까지 부여받고 있다. 이런 시각은 북향민들이 남한 사회의 차별과 정착을 위한 투쟁만으로도 버거워하는 점에서 그들의 진의를 감안하지 못한 ‘남한 중심적 사고’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안보를 바탕으로 하는 당사자인 북향여성들과 남한여성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페미니즘에 대한 고민과 연구가 절실하다.

남한에도 다양한 성격과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금까지 ‘북한이탈여성’이라는 이름으로 남한 일반여성과 차이를 두고 지원하는 데 집중했다면, 이제는 남한 여성들 사이에서 북향 여성을 있는 본연의 모습 그대로 이해하여 단지 고향이 다른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함께하여야 한다. 남한여성과 북향여성으로 구분하는 순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차이와 차별이 생기며, 그어져 버린 선으로 인해 북향여성들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며 평생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한편, 북향여성이 지닌 이질적 요소 중 긍정적인 부분을 부각시켜 남한과 북한의 여성들 각자가 지닌 정체성 속에서 남한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 북향여성을 남한 일방의 시각으로 재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솔직함이나 활발함, 사회적 생산참여에 대한 자긍심이나 지역공동체에서의 헌신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를 인정하고 찬사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남북 여성이 서로를 인정하면 ‘남한 사회로의 일방적 동화’라는 이름으로 북향여성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비가시적 폭력을 지양할 수 있고,

나아가 그들의 고향인 ‘북한’도 선입견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한 서로의 왜곡된 이미지를 상쇄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남·북한 여성들의 대등한 만남을 준비할 수 있고, 기존의 남성 중심·경제 중심·기득권 중심의 교류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북교류를 도모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신뢰 프로세스 등 ‘남한 중심적 시각’에서 만들어진 대북정책의 방향에서 벗어나 ‘북한의 입장이 반영된’ 남북관계를 지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3. 민족주의를 넘어서는 페미니즘

페미니즘은 근대 민족주의 담론에서 여성이 배제되거나 남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통합되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특히 ‘상상의 공동체’로서 민족주의가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국가가 ‘숙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성들은 처음으로 ‘국민’이 만들어지는 방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정현백, 2001:9-10).

발리바르(Étienne Balibar)는 민족은 “정치적 제도로서의 국가에 앞서있는(in advance), 국가에 자신의 정치적 동기를 기입하는(inscribe) 인민 공동체의 상상계(the Imaginary)”로 정의하였고, 이 상상계의 내용은 언어와 인종으로 정의되는 의사적 종족성(fictive ethnicity)에 의해 규정된다(Balibar, 1991). 이러한 개념화는 민족-국가 안에 내재되어 있는 민족(nation)과 국가 간 관계, 즉 국가는 민족의 정치적 동기를 구현해야 마땅하다는 믿음, 또는 정치적 단위와 민족적 단위가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치적 원리(Gellner, 2006:1-7)를 파생시킨다.

즉, 민족주의는 민족-국가문화적, 인종적, 종족적 단위로 상상의 공동체로서의 민족과 그것의 정치적 목표를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국가 제도로 구분되고, 근대 이후 민족-국가 형태의 정치공동체 사유 양식이 전 세계적으로 당연한 것, 일종의 헤게모니로 받아들이면서 나타난 다양한 정치운동-범민족주의, 민족해방운동, 분리주의, 민족국가 간 전쟁, 그리고 반정부시위⁶⁾- 역시 민족주의 정치운동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그동안 수차례 진행되어 온 남북정상회담은 민족해방이라는 이름 아래 진행되어 온 역사를 바탕으로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는 언술과 함께 남한 사회 내 민족주의 이념을 고양시켜 왔다. 분단 70여 년 동안 심화된 남북의 이질성

6) “국민의 이름으로 정부를 심판한다.”라는 언술을 생각하면 될 것이다.

을 해소하기 위해 ‘한민족’임을 강조하며 혈통적 민족주의나 문화적 민족주의를 강조해 왔지만, 이 거대담론 앞에서 북한에서 온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외면받아 온 문제가 있다.

북향남성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북향여성들에 대한 성착취와 성폭력을 늘 탈북민 탄압으로 상징화시키면서 피해자 북향여성들의 인권이나 성차별 문제가 논의 핵심에서 배제되었다. 물론 북향여성들에게 현재까지의 페미니즘 논의는 지엽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 남북한의 여성은 남성에게 공동의 억압을 받고 있지만, 억압의 내용은 서로 동일하지 않고 북향여성들은 남한사회에서 정착하는 것만으로도 버겁기 때문에, 그들이 삶의 현장에서 겪는 ‘정착’이라는 전쟁에서 페미니즘은 결길로 나간 싸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민족주의 담론은 분단이라는 비극적 현실을 극복하는 동력이 될 수도 있지만, 북향민의 76%가 여성임에도 이들을 외면하고 도외시하는 방향으로 진행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민족국가에서 북향여성이 배제되는 방식은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 동안 페미니즘 운동에서 북향여성은 보이지 않았으며, 여성가족부나 통일부에서 북향여성의 참여는 거의 전무하다.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한 대북포용정책이 진행된다면 사회·문화적 교류가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 과정에서 다시 북향여성이 소외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 북한동포돕기운동이 활발해졌다고 해도 민간교류는 거의 남성 위주로 이루어졌고, 여성에게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으로 주어졌다. 물론 여기에서도 북향여성들의 참여기회는 없었으며, 민족국가 내에서 일어나는 북향여성의 배제를 재확인하게 된다. 향후 페미니즘 논의나 여성정책에서는 남북한 성평등적 관점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남북교류과정에서도 남북 쌍방 간에 북향여성을 비롯한 소수자 집단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의 참여

한반도는 분단국가이다. 군사주의가 이 분단현실을 유지시키고 강화하는 핵심으로 작동하고 있고, 분단 상황에서 징병 문제와 결합하여 성역할이 강제로 고정되고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페미니즘의 실천이 필요하다(김엘리, 2019:169). 무엇보다 한반도 안보상황은 서구 제국주의 논리 등을 역오리엔탈리즘적 시각에서 수용하여 더욱 강화된 일본의 제국주의 논리와 군사주의 논리, 탈냉전기 패권적 군사·안보 논리에 물들어 있다

는 문제가 있다(전재성, 2002:169). 여성성은 여성의 선천적 본성이 아니라 여자가 태어난 다음, 가부장적 사회의 문화적 기제들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신옥희, 2009:105-112), 이렇게 사회에서 부여한 여성성의 증가로 인한 안보환경 완화가 남성적 논리를 중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필요하다(전재성, 2002:171-172).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경쟁은 일부 남성의 정치적 경험을 일반화한 것이고 상대방의 군사적 능력을 과대평가하여 군비경쟁에 정당성을 부여한다(황영주, 2013:46). 군대가 젠더화된 공간으로 성역할을 구분하고 내 집단에 대한 순수성을 지키려는 배타성을 함께 배우고 재생산된다는 점과, 분단체제 아래에서 징병제를 통해 이런 사고방식이 재생산되고 사회로 다시 확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여성신문, 2020.8.29).

이로 인해 기존 페미니즘 운동에서는 성별의 이분법과 군대가 서로를 유지·강화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일상에서 강요되는 지정 성별을 거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징병제가 ‘정상’과 ‘비정상’ 경계짓기를 통해 끊임없이 1등 시민과 2등 시민 혹은 국민과 비국민을 양산하는 방식으로 이분법적 사회 위계를 견고히 해온 데 문제를 제기하는 선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일다, 2020.6.8). 동독의 통일 이후 많은 동독 여성들이 실업자가 되는 등 배제당한 경험을 보며 평화운동에 여성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대비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 것이다(정현백, 2014:224).

페미니즘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먼저, 전시 성폭력 외에도 여성이 분단이라는 화약고 상태에서 계속 입어 온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 안에서 제대로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설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성이 평화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통일 대한민국 사회 구성원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방향이 제시되어야 한다(헌법 제4조 참조).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 1325호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이므로 국가가 적극적 이행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있다(헌법 제6조 제1항).

또한 남북이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일 뿐만 아니라 식민지배 피해 등 공통된 당사자성을 가진다는 점을 고려한 연대와 국제적 활동, 교류 등을 통해 남북 간 공감대와 공통의 경험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향후 남한의 법령이 북한에 적용될 때의 혼란에 대비하여 법을 바로 적용하는 외에도 다양한 행정지도와 인식구조 개선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냉전과 군사주의적 논리, 남성중심적 시각을 극복하고 견어낸다는 점에서 우리안의 ‘군사주의’를 문제삼고 적극적 주체로 전환함과 동시에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평화운동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인간안보에 기초한 페미니즘의 시각과 반전의식 강화 및 여성의 사회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찾기를 도모하여야 하는 것이다. 페미니즘 인간안보를 통해 기존의 적대적 군사대결 구조를 완화하고, 기존의 남성적·가부장적 문화를 극복하여 북한 사회의 재생과 인식구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 모두의 상생을 기대할 수 있다.

V. 마무리하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한반도는 70년의 분단 동안 한국전쟁을 거친 화약고 상태로 서로 분노하고 원망하며 서로의 체제를 부정하고, 상대 체제에서 온 사람들은 각 진영 논리에 맞춰 이용당해왔다. 북향여성들은 그 진영논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우리는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살아왔다.

여성과 아동은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북향여성은 아직도 정전이 이뤄지지 않은 한반도에서 남한 내 ‘국가안보’를 이유로 국정원, 하나원, 신변보호시스템이라는 국가기구의 조직적 틀 속에서 관리되고 감시받으며 통제당하고 있다. 남한의 ‘안보’관을 기초로 구성된 국정원 조사, 하나원에서의 강제 교육, 신변보호담당관 배정 과정은 국가가 북향여성을 ‘잠재적 안보 위협자’로 간주하고 감시·통제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인간안보를 기초로 한 페미니즘의 시각은 위와 같은 기존의 냉전 체제와 군사주의적 논리를 극복하고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페미니즘 인간안보를 통해 여성의 비안보 문제를 가시화하고 ‘국가 중심’으로 논의해 온 기존 담론에서 벗어나, ‘인간’을 중심으로 안보 개념을 확장하면 새로운 남북관계에 대한 구상도 가능할 것이다.

한반도는 냉전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한 남북분단 상황에 놓여 있다. 안보 담론은 이 상황에서 현실적 관점을 바탕으로 하는 국제관계의 이해와 역할을 도모하는 데 집중하여 여성의 기본적 인권 문제에는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국가안보와 남북의 체제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북향여성에게 가해지는 군사안보와 남성 중심 헤게모니의 한계를 인식하고 페미니즘 인간안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 과정은 기존에 정치적으로만 논의되던 남북관계를 ‘인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여 새로운 발전의 장을 열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엘리(2019). “탈분단시대, 페미니즘 평화교육”. TEPI. 1-7.
- 김원홍 외(2020). “남북여성교류현황 및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강성주(2010). “여성주의 안보연구 시론”. 여성과 평화. 제5호. 201-224.
- 배리 부잔(1995). 세계화 시대의 국가안보. 김태현(역). 서울: 나남출판.
- 성정현·조성희·신은주(2017). 북한이탈여성 폭력피해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 신옥희(2009). “타자(他者)에서 주체(主体)로”. 한국여성철학 제11권. 105-142.
- 심영희(2005). “여성에게 안보란 무엇인가?”. 여성과 평화. 제4호. 51-79.
- 이선미(2005). “근대 국민국가와 여성의 안보”. 여성과 평화. 제4호. 84-109.
- 이정옥(2017).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와 글로벌 페미니즘”. 사회과학논총. 제16권. 39-55.
- 전재성(2002). “한반도 안보에 대한 젠더화된 관점에서의 접근”. 아시아여성연구. 제41호. 137-175.
- 정현백(2001).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비교사적 고찰을 중심으로”. 페미니즘연구. 제1권. 9-52.
- _____(2014). “국가와 여성평화운동 - 김대중노무현정부의 평화정치를 중심으로”. 여성과 역사. 제20호. 214-250.
- 정국본(2004). “안보논단 2 : 지역안보복합체[regional security complex]의 이해 - Barry Buzan의 안보 이론을 중심으로-”. 전략논단. 제1권. 131-150.
- 황영주(2007). “만나기, 뛰어넘기, 새로만들기: 페미니즘 국제정치학에서 안보와 그 과제”. 국제정치논총. 제47권 제1호. 75-94.
- _____(2013). “페미니즘 안보연구의 기원, 주장 그리고 분석”. 세계정치. 제19호. 21-53.
- Swerdlow, A.(1995). Engendering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he Feminist Standpoint. *Journal of Women's History*, 7, 160-163.
- Balibar, E.(1991). The Nation Form: History and Ideology. *Review*, 13, 329-361.
- Buzan, B.(1991). New Patterns of Global Security in the Twenty-first Century. *International Affairs*, 67, 431-451.

- _____(2016). Rethinking Security after the Cold War. *Cooperation and Conflict*, 32, 5-28.
 - Ken, B. & Steve, S.(1995).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oday*. Cambridge: Polity Press.
 - Carol, C.(2011). Feminist Security Studies: Toward a Reflexive Practice. *Politics & Gender*, 7, 581-586.
 - Donnelly, J.(2008). *The Ethics of Realism. The Oxford Handbook of International Relations*. Landon:Oxford University Press.
 - Gellner, E.(2006). *Nations and Nationalism*. Malden. MA ; Oxford : Blackwell.
 - Ken, B. & Steve, S.(1995).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today*. Cambridge: Polity Press.
 - Mearsheimer, J.(1995). A Realist Reply. *International Security*, 20, 82-93.
 - Morgan, P.(1992). Safequarding Security Studies, *Arms Control*, 13, 464-479.
 - Peterson, V. S.(1992). *Gendered States: Feminist (Re)visions of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Boulder: Lynne Rienner.
 - Tickner, J. A.(1992). *Gender in International Relations : Feminist Perspectives on Achieving Global Security*. Columbia: Columbia University Press.
 - _____(1993). Feminist Approaches to Issues of War and Peace. *Studies of Transnational Legal Policy*, 25, 267-283.
 - Ullman, R.(1983). Redefining Security. *International Security*, 8, 129-153.
 -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1994).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Walt, S. M.(1991). The Renaissance of Security Studies. *International Studies Quarterly*, 35, 211-239.
- 여성신문(2020. 8. 29.). “[인터뷰] 김엘리 평화페미니즘연구소 소장 “분단 자체를 들여다 보자””.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625>에서 2021. 2. 25. 인출.
- 연합뉴스(2021. 6 .2.). “검찰, ‘탈북 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관 불기소 처분.” <https://www.yna.co.kr/view/AKR20210527028700004>에서 2021. 6. 3. 인출.

일다(2020. 6. 8.). “여성들의 병역, ‘거부’와 ‘복무’ 사이 - 페미니즘과 군대 그리고 여군의 위치를 고민하다”. <http://www.ildaro.com/8751>에서 2021. 2. 25. 인출.

Abstract

Feminism and Inter-Korean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 Focusing on North Korean Female Defectors.

Su-mi Jeon*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are living witnesses and pain in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who have experienced the regime of North and South Korea with their whole bodies. So far, the interests of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have been dominated and suppressed by men under the name of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Violence against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has existed for a long time, but has not been illuminated in the reality of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This is because North Korea's unique male-centered patriarchal culture and male supremacy are working as the basis for the consciousness of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The problem facing women in the north lies not in their choice, but in their unwanted lives as a product of the Cold War. The remnants of the Cold War system are projected on all North Koreans, including North Korean women defectors, in the form of "national violence" under the pretext of "national security."

Feminist views based on human security are required in terms of overcoming and removing the existing Cold War system and militarist logic. By visualizing women's non-security issues through feminism's human security and expanding the concept of security around "humans," not countries, will be able to promote new inter-Korean relations.

Keywords : North Korean women defector, Feminism, Human security, National security, National violence

* Visiting Professor, Soongsil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oongsil University(attorney at law, Ph.D. in Political Science).

북한이탈여성에 관한 질적연구 동향분석 : 국내 학술지 중심으로

오은경*·류진아**

초 록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 여성에 관한 질적연구의 동향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RISS4U, KISS, DBpia)에서 지금까지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질적연구 34편을 분석하였다. 총 34편에 대해 논문 발행연도, 학문분야 및 학술지명,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들을 분석하여 질적연구 동향을 파악하였고, Hoyt&Bhati(2007)가 주장한 네 가지 차원에 따라 질적연구 수행과정을 분석하였다. 북한이탈여성에 관한 질적연구 동향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05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연구되어지고 있으며 가장 많이 연구된 분야는 사회복지분야로 나타났다. 둘째, 가장 많이 사용된 질적 연구방법은 현상학이었으며 2011년 이후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론의 연구가 게재되었다. 셋째, 사회적응을 주제로 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으며 가족·관계, 정신건강과 심리 순으로 나타났다. 넷째, 질적연구 수행과정을 검토한 결과, 연구자의 초점과 연구결과 제시 및 보고는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감수자를 통한 확인은 대다수의 연구에서 제외되어 전반적인 신뢰도 및 타당도 확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북한이탈여성 관련한 질적연구 주제의 확대와 각 학문 분야에 대한 시사점과 후속연구에 대해 제언하였다.

주제어 : 북한이탈여성, 다문화여성, 질적연구, 동향, 다문화, 탈북

* 제1저자: 건양대학교 학생상담센터 연구전문조교수(eunkyung@konyang.ac.kr)

** 교신저자: 한국교통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부교수(jina1031@ut.ac.kr)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직계가족, 배우자 등의 친인척, 주소나 직장 등을 두었던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이후 다른 제3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이들을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998년 947명을 시작으로 현재 총 33,752명의 북한이탈주민이 입국하였으며, 남성 9,435명, 여성 24,317명으로 전체 북한이탈주민의 72.1%가 여성으로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남북하나재단, 2020). 북한이탈여성의 입국 수가 증가한 이유로는 국경 이동이 수월하고, 중국에서 신분의 불안정, 기 입국한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남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습득 등을 요인으로 보고 있다(강차연, 2003; 이영선 외, 2011; 류진아·오은경, 2021).

2000년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유입이 급증하고 개인에서 가족 단위의 입국 형태가 변화하는 특성들을 보이면서 북한이탈주민들에 관한 연구들이 꾸준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은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로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할 때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측면이 있다(안태윤, 2014, 박소연, 2017, 류진아, 오은경, 2021).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탈북을 결심하게 되는 요인이나 중국에서 제3국을 거쳐 한국에 입국하기까지 심각한 인권유린경험, 탈북과정에서 결혼과 출산, 심리적 외상문제, 남한 입국 후 파생되는 다양한 적응문제 등 남성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다(이영선, 구혜완, 한인영, 2011). 그간 북한이탈여성의 연구는 수적인 측면에서 제한적이었으며(이영선 외, 2010), 이들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맥락적 조건을 충분히 반영한 연구들은 많지 않다(박소연, 2017).

경험은 개인적인 동시에 사회적이며, 끊임없이 재구성되므로 연속적이다(Dewey, 1938). 경험은 개인의 특성에 대한 탐구를 통해 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새로운 개념과 통찰을 제공한다. 북한이탈여성들이 접하는 환경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개인적-사회적 경험의 재구성으로(류진아, 오은경, 2021) 그들의 삶을 담고 있기에 경험 전체를 탐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통해 개인의 심리변화를 나타내는 다양한 기제들을 찾고 현상을 규명하며 흔히 관찰할 수 없는 문화적 다양성과 특수성에 대한 경험을 얻을 수 있다(오은경, 최미, 최한나, 2016).

질적 연구방법은 양적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발달해 온 연구방법으로 (손은정, 2010), 다문화 대상자들을 주제로 한 연구의 경우 질적연구방법에서 혼합연구방법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방법론으로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다(오은경, 최미, 최한나, 2016). 특히, 질적 연구방법은 개인의 경험과 정서, 행동들에 집중하여 심층 분석함으로써 삶의 전체 맥락(개인적, 사회적, 제도적, 환경적 등)을 살펴보는 데 유용하기에 다문화 대상자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양적연구에서 발견하기 어려운 매우 드문 현상에 대한 정보와 통찰을 제공하고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 대한 풍부한 자료를 제공한다. 연구 대상자들의 경험과정과 본질을 생생하게 밝히며 다양한 상황과 노력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드러내준다(박승민 외, 2012, 최혜윤, 2019). 이러한 중요성으로 북한이탈주민의 깊이 있는 탐색을 위한 질적 연구논문들이 다수 진행되었으나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 논문의 수는 크게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영선, 구혜완, 한인영, 2011). 북한이탈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고, 북한이탈여성만의 특수성이 존재함을 볼 때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질적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는 그들의 심층적 이해를 돕고 신체적,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보다 실효성 있는 도움과 방향성을 제공할 수 있다(정영선 2018).

질적연구는 연구자 편견과 배제에 관하여 연구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Hoyt & Bhati, 2007, Morrow, 2005). Hoyt와 Bhati(2007)는 질적 연구 내적 타당도를 검증할 수 있는 분석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질적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 질적 연구의 수행과 원칙을 강조하였다. 질적 연구방법의 중요성과 방법론의 변화 속에 질적 연구가 보다 진정성 있고 차별화된 연구방법이 되기 위해서는 질적 연구의 수행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질적연구의 질(quality)적 측면에서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Hoyt와 Bhati(2007)의 신뢰도와 타당도 기준에 근거하여 질적 연구물을 분석하거나 수행과정 평가에 대한 검토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김봉환 외, 2012, 김은경, 김현주, 2017).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논문 중 질적 연구방법으로 작성된 연구물을 찾아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질적 연구물에 대한 분석을 통해 수행과정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국내 학술지 분석을 통해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것은 학문적 자기성찰 활동과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김계원 외, 2011), 질적 연구의 수행과정 평가와 타당성 검토는 질적연구의 현 위치를 점검하고 앞으로 방향에 대한 학문의 본질적 발전에 기여를 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 연구에

있어 ‘여성’ 대상 논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북한이탈여성 연구의 방향성을 살펴해보는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질적연구의 발행연도별 논문 수, 학문분야의 동향은 어떠한가?

둘째,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질적연구의 연구대상, 연구방법, 연구주제의 동향은 어떠한가?

셋째,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질적연구의 수행과정과 분석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2. 북한이탈여성 관련 선행 연구

1)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이해

북한 정치사회 체제의 중요한 운영기제는 가부장적 가족주의로 남성을 우대하고 여성의 역할을 강조하는 가부장적 유교식 통치이념이 혼합된 특징이 있다(조아람 외, 2013). 북한 여성들의 경우 1990년대 중반 경제난 시기 국가가 담당하던 부양의 의무를 가족에게 전가하였으며(박신순, 2014, 박현선, 2003), 가족의 생계를 위해 북한 여성들은 경제활동에 참여하며 가족 부양의 역할을 전담했다. 북한 사회에서 식량을 구하는 일은 여성의 몫이며,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여성이 장기간 이동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에(박명희, 2005), 취약계층인 북한 여성들은 경제난과 식량난을 해결하고, 폐쇄적인 체제를 벗어나기 위해 북한을 이탈하였다(노정화, 김현주, 2018).

북한이탈여성들은 북한을 탈출하여 남한으로 입국하기 전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0년 이상의 탈북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 과정에서 강제결혼, 강제노동, 인신매매, 감금, 폭행 등 인권유린을 경험한다. 이는 여성이기 때문에 겪게 되는 불이익으로 극한 생존상황에서 인권상실, 성적 문제를 경험, 심리적 외상을 내면 깊숙이 지닌다(최현실, 2011). 이로 인해 죄책감과 피해의식을 비롯한 우울 및 불안장애, 신체화 장애 등의 정신건강 문제를 호소하고(조아람 외, 2013), 북한과 중국 내 두고 온 가족에 대한 미안함이나 고향에 대한 그리움 등 정서적 어려움의 정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장혜경, 김영란, 2000). 이러한 심리·정서적 문제는 한국사회 정착의 장애요소로 작용되어(한인영 외, 2013), 남한에 정착한 이후에도 남성들에 비해 적응상의 문제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박소연, 2017). 또한, 북한이탈여성들 중에는 한부모 가정도

많은 수를 차지하는데 동반 입국한 자녀가 있는 경우 개인의 남한 적응문제와 생계유지, 가사, 자녀 양육 및 돌봄까지 감당해야하는 현실적 문제 어려움과 (홍승아, 2013) 자녀의 학습과 또래관계, 자녀의 적응 문제 등 엄마로서의 바람직한 양육과 역할까지 삼중고를 경험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과정은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및 제 3국에 체류하고 남한으로 입국하는 일반적 과정이지만 남한 입국 전까지는 여성이라는 낮은 지위와 취약성으로 생존을 위한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외상을 경험하고 남한 입국 후에는 또 다른 삶의 과업과 문제들로 인해 남성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고통스러운 삶을 경험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2) 북한이탈여성 관련 선행 연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탈여성들은 탈북과정에서의 심리적 외상, 가족 및 자녀문제, 생계유지 및 경제적 문제 등 남성에 비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이유로 기존의 북한이탈여성 관련된 선행연구도 세분화되어 정책, 의료보건, 여성, 사회복지, 심리 등 분야에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북한 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의 주제들은 크게 인권, 외상, 남한 사회 적응 및 정착 관련 연구로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최현실, 2011).

첫째,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에 대한 연구이다. 북한의 경제난과 북한이탈주민 증가의 배경요인들을 분석하며, 남한으로 오기까지 중국이나 제3국의 탈북 경로에서 겪게 되는 인권문제 대해 논의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이금순 외, 2005). 북한 내 북한이탈주민들의 증가로 중국은 북한과의 협정에 따라 이들을 불법월경자로 체포하여 강제로 북한으로 송환한다(최현실, 2011). 이 과정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며 조국을 배신하였다는 죄명으로 감옥에서 혹독한 고문, 폭력 등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이경, 2019). 이들이 난민으로 보호받지 못한 채 극심한 인권유린의 피해방지를 위한 국제 정치학적 논의와 연구들이 진행되었다(홍규덕, 2002)

둘째, 북한이탈여성의 외상에 대한 연구이다.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북한에 거주할 때 이미 심각한 외상 경험을 하고(이금순 외, 2005), 남한 입국 전 중국에서 수많은 인권유린을 경험하는 것으로 알려져(김태현, 노치영, 2003) 체류기간 동안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강차연, 2006, 김미자, 2008). 이러한 외상 경험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로 이어져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 PTSD 유병률이 높았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을 동반하며(성정현,

2014), 심리적으로 불안, 열등감, 죄책감, 좌절 등 부정적인 경험들을 오랫동안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금순 외, 2005, 이영선 외, 2011, 장혜경, 김영란, 2000). 특히, 북송 경험이 있는 여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심리적 스트레스에 대한 호소가 높았다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최빛내, 김희경, 2011). 다른 한편으로는 외상은 장애이기 보다는 개인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촉매제로 간주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도 미비하지만 진행되었다(김희경, 2012; 이숙영 외, 2016; 최승미, 2008). 복합적이고 극단적인 삶의 경험들이 꼭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며 잠재적인 긍정적 변화도 고려해야하며(이숙영 등, 2016), 지금 성장의 진통을 경험하는 것이며(이양자, 정남운, 2008) 북한이탈여성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자신의 삶을 의미있게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김현경, 2007)이자 긍정적 측면을 지향하고 새로운 임상적 함의를 제공하는 연구들도 진행되었다(최승미, 2008).

셋째, 북한이탈여성의 남한사회 적응과 정착연구이다. 북한이탈여성들은 불안정한 신변의 위협을 해소하고 자유를 찾고자 남한에 오지만, 남한사회 적응 과정에서 기대와는 다르게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류진아, 오은경, 2021, 조용관, 김윤영, 2009). 주로 가족관계 및 대인관계, 자녀교육(장혜경, 김영란, 2001, 김영수, 2000), 남한사회 적응(이기영, 성향숙, 2001, 조영아, 전우택, 2005) 등을 주제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첫 연구로는 문숙재 외(2000)의 중국 내 탈북여성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를 분석한 논문으로 북한의 탈북이 급증하기 시작한 시기에 초점을 맞춰 탈북동기를 살펴보았다. 그 후 남한의 북한이탈여성의 입국자수 증가로 남한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다(김인숙, 2006; 박은숙, 2014; 유시은 외, 2005; 장혜경, 김영란, 2000; 김혜영, 2020). 상이한 문화권에서 생활한 이들이 낯선 남한에 적응을 돕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과제 이기에 그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연구들이 증점이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적응에 사회복지관 시설 이용 만족도와 언어적응과 문화 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요구도, 프로그램 개발 등 연구들이 진행되었다(김경옥, 2002; 김용태, 배철효, 2010; 전주람, 김성미, 2015). 이들의 부적응 문제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 사회적응의 기본인 경제 적응의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윤여상 외 2007, 윤인진, 2009, 이금순 외, 2003), 사회문화 적응에 있어서도 언어의 이질화, 가치관의 차이, 차별과 편견, 남한사회 내에 인적 네트워크가 취약하고 열악한 자본 등으로 부적응 요인에 대한 연구들도 진행되었다(한인영, 홍선희, 2012, 신희정, 2017).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 분석 대상 논문 설정

본 연구는 국내에서 발간된 학술지 중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적연구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연구 문헌을 선정하였다<표 1>.

<표 1> 북한이탈여성 질적연구 논문 선정과정

검색어		자료수집결과
기간	국내 학술지 게재논문 전체	
1차	북한이탈주민 + 질적연구	86편
	탈북여성(북한이탈여성) + 질적연구	25편
	새터민 + 질적연구	25편
2차	연구주제 불일치 문헌	61편
	혼합대상(북한이탈주민 남성, 청소년 등)	41편
최종	계	34편

첫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한국학술정보논문검색서비스(KISS), 누리미디어(DBpia)에서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여성’, ‘북한여성’, ‘탈북여성’, ‘새터민’, ‘북한이탈’, ‘탈북’을 주요 검색어로 검색하였으며 검색기간은 전체연도로 설정하였다. 검색된 학술지 논문목록 중 ‘질적’, ‘질적연구’를 결과 내 검색어로 추가하여 136편의 논문 목록을 검색하였다. 둘째, 검색된 학술지 136편의 제목과 초록, 연구방법, 연구내용을 모두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본 연구의 대상과 목적에 맞는 질적연구 논문만을 선별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연구로 검색이 되어졌으나 북한이탈남성과 여성이 혼합되어 참여한 연구, 북한이탈주민의 청소년·자녀가 포함된 연구, 남북한 주민이 함께 연구대상에 참여한 논문 등은 모두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탈여성 연구의 방향성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으로 ‘북한이탈여성’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물만을 선정하였다.

또한, 주요 검색어로 선정되었지만 연구의 주제와 맞지 않은 논문(예: 정책 및 군사, 법률 등 연구보고서, 남북한 언어, 교육, 노동, 체제 제도 비교논문, 학술대회 발표자료, 종교적 이론에 빚대어 표현한 논문, 중복연구 등)과 질적연구로 검색되어지나(예: 사례연구로 명시되어있지만 실태조사 및 서술형태의

논문, 질적·양적 혼합연구 등) 명확한 연구방법 구분이 어려운 논문들은 배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여성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총 34편의 논문을 분석대상으로 최종 선정하였다<표 2>.

〈표 2〉 국내 북한이탈여성 질적연구 논문 목록

번호	발행 연도	1저자	제목(일부생략)
1	2005	조영아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2	2007	안은미	북한이탈주민 증상표현과 질병형태
3	2010	이덕정	북한이탈 중년여성의 남한정착과정과 평생학습 경험
4	2010	강용원	한국 사회 내 북한이탈주민의 삶
5	2011	최현실	탈북여성들의 트라우마, 한국사회 정착지원 현상학연구
6	2012	박성정	북한이탈여성의 직업교육훈련 경험과 개선과제
7	2013	조아람	북한이탈주민들의 병증발생시기 인식에 대한 질적연구
8	2013	신난희	탈북여성 구술생애 깊이읽기: 두 탈북여성 중심
9	2014	한순옥	남한남성과 결혼한 북한이탈여성의 결혼의미와 경험
10	2014	정현숙	북한이탈여성의 어머니 됨 경험
11	2014	김유정	북한이탈여성의 부모화 경험
12	2015	김성남	북한이탈주민 어머니들의 자녀양육과 교육의 경험
13	2015	김기창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 경험에 관한 연구
14	2015	이기영	중국출생 무국적 자녀와 동반입국한 북한이탈주민 경험
15	2015	신민주	미술치료과정에 나타난 북한이탈여성의 적응 경험연구
16	2015	전주람	북한이탈 중년여성들의 사회복지관 이용경험 연구
17	2015	장정은	북한이탈여성의 청소년자녀 양육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18	2016	이숙영	북한이탈여성의 외상후성장애 관한 질적연구
19	2016	전주람	북한이탈여성들의 심리사회적자원에 관한 질적사례연구
20	2017	박소연	북한 이탈여성의 생애사 재구성
21	2017	이은주	북한이탈여성들의 직업교육 경험과 취업전략 관한연구
22	2017	임세영	탈북여성의 중년기 성장이야기
23	2017	김유정	북한이탈여성의 일과 자녀돌봄 양립 경험에 관한연구
24	2018	심우찬	탈북여성들이 경험하는 도덕적 손상에 관한 탐색적연구
25	2018	노정화	북한이탈주민의 부부관계 변화과정
26	2018	정영선	인신매매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의 삶에 대한 질적연구
27	2018	강동완	중국 거주 탈북여성의 탈북동기 사례 분석
28	2019	최수찬	여성 북한이탈주민의 경제활동에 관한 탐색적 연구
29	2019	김희영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영성형성과정 연구
30	2019	김이경	북송경험탈북여성들의 탈북과정 및 적응에 관한연구
31	2019	유정아	북한이탈여성의 북한 군 생활 경험
32	2020	이수정	북한출신여성의 '다문화'인식 및 경험과 그 함의
33	2020	엄미란	탈북중년여성의 고등교육 학습이 자녀의 성장과정 연구
34	2020	조현미	자녀를 양육하는 북한이탈 기혼여성의 직장생활 체험

2. 평정 절차

1) 평정자

본 연구의 평정은 다문화 교육 연구 경험이 풍부한 교육학 상담전공 교수 1명, 북한학 강의 및 북한이탈주민 현장경험과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교육학 박사 1명, 다문화 동향연구와 질적연구 경험이 있는 상담전공 박사 1명이 감수하였다.

2) 평정 항목

본 연구는 국내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진행된 질적 연구물들의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어떠한 주제와 방법들의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내 학술지 게재된 논문에 대한 평정 및 평가 시 고려해야 할 3단계 과정을 통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동향분석의 절차는 제기된 연구 질문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르다(Weber, 1990).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기초단계, 연구물의 분석 및 분류단계, 질적 연구물의 평정 및 점검의 3단계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1단계는 기초단계로 연구물들의 분석 항목과 세부사항을 정하는 단계이다. 즉, 기존의 선행연구와 동향연구를 검토하여 연구물들의 분석 항목을 정하는 것이다. 분석 항목은 질적연구 동향분석(김은경, 김현주, 2017, 권경인, 양정연, 2013, 김봉환 외, 2012, 손은정, 2010)을 참조하여 논문에 대한 기초사항, 연구대상, 연구방법에 대한 평정 기준을 정하였다. 연구주제를 분류하기 위해 다문화 대상 연구인 이주배경 청소년의 질적 연구 분석연구(김은경, 김현주, 2017), 다문화 상담 일반(Lee, Rosen & Burns, 2013), 북한이탈청소년(윤혜순, 2014), 탈북여성에 대한 동향연구(이순민, 심우찬, 2018)들을 참조하여 북한이탈여성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역적, 귀납적 방법을 통해 6개 영역인 정신건강, 사회적응, 취업 및 진로, 가족 및 대인관계, 건강, 기타로 분류하였다(표 3).

〈표 3〉 분석항목 및 세부사항

분석항목	세부사항
기초사항	발행연도, 학술지 게재분야, 학술지 명
연구대상	연구 대상자 수, 대상자 나이
연구방법	8개영역(현상학, 근거이론, 사례연구, 문화기술지, 내러티브, 생애사, 합의적 질적 방법, 기타)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3개영역(연구의 초점, 연구자의 역할, 결과 제시)
연구주제	6개영역(정신건강, 사회적응, 취업 및 진로, 가족 및 대인관계, 건강, 기타)

2단계는 연구물을 분석 및 분류하는 단계이다. 연구자들은 논문의 초록, 연구방법, 연구내용들을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연구주제와 질적연구에 대한 세부적 내용들을 검토하여 분석 및 분류하였다. 수집된 연구물들을 살펴보고 수정 및 논의가 필요한 연구물의 경우 연구자들의 합의를 거쳐 분류하였으며 위 과정은 순환적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다.

3단계는 질적 연구물을 평정 및 점검하는 단계이다. 질적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을 위한 것으로 Hoyt&Bhati(2007)의 분류기준을 참고하였다. Hoyt&Bhati(2007)는 질적연구 수행의 원칙을 네 가지 차원에서 설명하였는데 이는 (a)연구의 초점 (b)연구 환경 (c)연구자의 역할 (d)연구결과 제시이다 〈표 4〉. 연구의 초점은 연구자가 대상자와 어떻게 접촉을 하였는지와 관련되는 것으로 대상자와의 접촉 방법(전화, 대면, 비대면), 접촉비율, 연구 수행 시 활용된 자료(서면자료, 오디오 및 영상자료, 직접관찰), 접촉 시간 등이 분류에 포함된다. 연구 환경과 연구자의 역할은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곳 편안한 환경인지 여부와 질적 연구도구로서 연구원의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구진행에 대한 반성 및 점검을 하였는지 여부이다. 연구결과 제시는 연구논문에서 대상자의 보고가 어떠한 형태로 제시되었는지에 관한 것으로 최소한 5줄 이상의 인용문 사용과 대상자 식별이 되도록 표기하는 등 위의 네 가지 차원을 통해 질적 연구의 기초가 되는 원칙과 관행이 신뢰성 있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3단계 과정을 통해 북한이탈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질적 연구물들을 세부적으로 면밀히 분석하여 질적연구물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표 4〉 질적연구 수행과정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항목(Hoyt & Bhati, 2007)

영역	평가 항목		
초점 1.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와 직접 접촉했는가?	① 예	② 아니요
초점 2.	연구자들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접촉을 했는가?	①절반미만	②절반이상
초점 3.	연구자 모두가 접근했던 자료는 무엇인가?	①기록자료	②촉어록
역할 1.	주 연구자가 발견한 사실을 감수자가 확인했는가?	① 예	② 아니요
역할 2.	선입관의 최소화나 배제가 바람직함을 명시했는가?	① 예	② 아니요
결과 1.	연구 대상자의 말을 충분히 인용하였는가?(5줄 이상)	① 예	② 아니요
결과 2.	어떤 연구 대상자의 보고인지 제시하였는가?	① 예	② 아니요

Ⅲ. 연구 결과

1. 기초사항 동향분석

1) 발행연도별 논문 수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북한이탈여성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질적 연구는 2005년도 처음으로 게재되었으며 이를 시작으로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며 연구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표 5〉 발행 연도별 논문 수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논문 수	1 (2.9)	-	1 (2.9)	-	-	2 (5.9)	1 (2.9)	1 (2.9)	34 (100)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 (5.9)	3 (8.8)	6 (17.6)	2 (5.9)	4 (11.8)	4 (11.8)	4 (11.8)	3 (8.8)	

2) 학문분야별 논문 수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북한이탈여성 연구의 학문분야별 질적 연구방법론 논문 수를 살펴본 결과, 사회복지 분야가 9편(26.5%)으로 가장 많은 연구를 진행했으며, 기타분야가 4편(14.6%), 교육, 의·약학 분야가 4편(11.8%), 상담 및 치료 분야가 3편(9.6%) 순으로 게재되었다<표 6>. 그 밖에 종교 및 정치의

교 분야에서도 소수의 질적 연구가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학문 분야별 질적 연구방법 논문 게재 수

게재분야	학술지 명	계
교육	성인계속교육연구, 직업교육학회, 평생교육·HRD연구	4(11.8)
사회복지	가족과 가족치료,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사회복지실천과 연구, 사회 복지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 사회복지질적연구, 아동복지학	9(26.5)
상담및치료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여성, 미술치료연구	3(8.8)
의약학	가정의학회지, 군진간호연구, 대한간호학회, 동의신경정신과학회	4(11.8)
여성학	여성연구, 여성학연구(2)	3(8.8)
기독교신학	기독교교육논총, 선교와 신학	2(5.9)
사회과학	사회과학연구, 다문화사회연구	2(5.9)
정치외교	북한연구학회, 통일문제연구	2(5.9)
기타	한국과학여성융합학회, 한국융합학회, 한국콘텐츠학회, 질적연구, 한민족 문화연구	5(14.6)
계		34(100.0)

2. 질적 연구방법별 동향 분석

1) 연구 대상자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질적연구 논문의 연구 대상자 동향을 분석한 결과, 연구 대상자의 연령대는 40대 비율이 126명(38.5%)으로 가장 높은 연령대를 차지하였으며 30대 104명(31.8%), 50대 43명(13.2%) 순으로 나타났다(표 7). 30~40대의 연구 참여율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나타냈으며 북한이탈여성연구의 주된 대상자로 분석되었다. 총 34편의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나이, 연령대는 모두 제시가 되었으나, 탈북유형, 남한 거주기간, 제3국 거주기간, 입국 경로 등의 정보들은 연구자의 연구 주제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는 부분으로 각 논문 마다 대상자들에 대한 정보제시에 차이가 있었다.

〈표 7〉 연구 대상자 정보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계
대상자 수	39 (11.9)	104 (31.8)	126 (38.5)	43 (13.2)	15 (4.6)	328 (100)

2) 발행연도별 질적 연구방법별 논문 수

총 34편의 연구물에서 많이 사용된 질적 연구방법은 현상학이 14편(41.1%)으로 가장 많았으며 포커스그룹인터뷰, 내용분석 등 기타방법이 8편(23.5%), 사례연구, 생애사가 3편(8.8%)의 순으로 나타났다(표8). 발행연도별 질적 연구방법 논문 수 동향을 살펴본 결과, 2005년도 1편(2.9%), 2006~2010년도 3편(8.8%)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으나, 2011~2015년에는 14편(41.3%), 2016-2020년도 16편(47.0%)으로 질적 연구방법 논문이 점차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행연도별 연구방법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1년도 이후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논문이 게재되기 시작하였고 현상학 연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8〉 발행연도별 질적 연구방법 논문 수

	2005년이전	2006-2010	2011-2015	2016-2020	계(명/%)
현상학			8(23.5)	6(17.6)	14(41.1)
근거이론				1(2.9)	1(2.9)
사례연구		1(2.9)	1(2.9)	1(2.9)	3(8.8)
문화기술지			1(2.9)		1(2.9)
내러티브		1(2.9)		1(2.9)	2(5.9)
합의적질적			1(2.9)	1(2.9)	2(5.9)
생애사			1(2.9)	2(5.9)	3(8.8)
기타	1(2.9)	1(2.9)	2(5.9)	4(11.8)	8(23.5)
계	1(2.9)	3(8.8)	14(41.1)	16(47.1)	34(100)

3) 발행연도별 질적연구 주제 동향 분석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발행연도별 질적연구 주제 동향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9). 분석결과, 사회적응을 주제로 한 연구가 전체 34편 중 10편(29.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관계를 주제로 한 연구가 9편(26.5%), 정신건강과 심리에 대한 연구가 5편(14.7%) 순으로 분석되었다. 발행연도별 질적연구 주제 추이를 분석한 결과, 남한사회적응 연구는 2005년 이전부터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 논문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2011-2015년 이후 부터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다양한 주제들이 연구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 이후에는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한 개인의 도덕성과 윤리, 재북 시 군생활 경험, 여성형성과정 등 기타 영역의 연구주제들도 새롭게 수행되었다.

〈표 9〉 발행연도별 질적연구 주제 동향

	2005년 이전	2006-2010	2011-2015	2016-2020	계(명/%)
정신건강 ·심리			3(8.8)	2(5.9)	5(14.7)
사회적응	1(2.9)	2(5.9)	3(8.8)	4(11.8)	10(29.4)
취업·진로			1(2.9)	3(8.8)	4(11.8)
가족·관계			6(17.6)	3(8.8)	9(26.5)
건강		1(2.9)	1(2.9)		2(5.9)
기타				4(11.8)	4(11.8)
계	1(2.9)	3(8.8)	14(41.2)	16(47.1)	34(100)

3. 질적연구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1) 발행연도별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발행연도별 질적 연구방법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표 10). 연구초점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와 어떻게 접촉하였는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참여했는지를 안내하는 것으로 총 34편 중 32편(94.1%)의 연구에서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와 직접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자들은 전체 연구진행 과정 중 절반 이상의 비율로(31편, 91.2%) 연구 대상자들과 직접 대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구자들이 사용한 질적 연구자료 중 축어록 사용이 30편(88.2%)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이 사용된 2011년 이후에는 축어록 외에 기록자료(비디오, 영상, 문헌자료)들을 통한 연구 자료도 폭넓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 역할에 대한 평가는 연구자가 자신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편견을 최소화하고 감수자를 통해 연구가 신뢰롭고 타당하게 진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연구자의 선입관의 최소화나 배제에 대한 바람직함에 대해 16편(47.1%)은 연구물에 명시하였으나, ‘연구자가 발견한 사실을 감수자가 확인하였는가?’에 대한 문항에서는 ‘감수를 하지 않은 연구물’이 18편(52.9%)으로 감수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연구물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연구결과 제시에 대한 평가에서는 연구 대상자의 주관적 경험을 반영하는 내용의 보고가 어떠한 형태로 제시되었는지를 파악한 결과, 연구 대상자의 말들을 충분히 5줄 이상 인용하였으며, 어떤 연구 대상자의 보고인지도 함께 제시되어 기술한 것으로 분석되었다(31편, 91.2%).

〈표 10〉 발행연도별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Hoyt & Bhati, 2007)

	2005년 이전	2006-2010	2011-2015	2016-2020	전체
초점1. 연구자가 연구 대상자와 직접 접촉했는가?					
① 예	1(2.9)	3(8.8)	13(38.2)	15(44.1)	32(94.1)
② 아니요			1(2.9)	1(2.9)	2(5.9)
초점2. 연구자들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접촉을 했는가?					
① 절반미만			1(2.9)	2(5.9)	3(8.8)
② 절반이상	1(2.9)	3(8.8)	13(38.2)	14(41.2)	31(91.2)
초점 3. 연구자 모두가 접근했던 자료는 무엇인가?					
① 기록자료			2(5.9)	2(5.9)	4(11.8)
② 축어록	1(2.9)	3(8.8)	12(35.3)	14(41.2)	30(88.2)
역할1. 주 연구자가 발견한 사실을 감수자가 확인했는가?					
① 예			10(29.4)	6(17.6)	16(47.1)
② 아니요	1(2.9)	3(8.8)	4(11.8)	10(29.4)	18(52.9)
역할 2. 선입관의 최소화나 배제가 바람직함을 명시했는가?					
① 예			11(32.4)	9(26.5)	20(58.8)
② 아니요	1(2.9)	3(8.8)	3(8.8)	7(20.6)	14(41.2)
결과1. 연구 대상자의 말을 충분히 인용하였는가?(5줄 이상)					
① 예	1(2.9)	2(5.9)	13(38.2)	15(44.1)	31(91.2)
② 아니요		1(2.9)	1(2.9)	1(2.9)	3(8.8)
결과 2. 어떤 연구 대상자의 보고인지 제시하였는가?					
① 예	1(2.9)		14(41.2)	16(47.1)	31(91.2)
② 아니요		3(8.8)			3(8.8)

2) 연구방법별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

분석대상 연구물들의 질적 연구방법별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11). 현상학을 활용한 연구물 분석결과, 전체 14편 중 연구자의 초점(14편, 41.2%)과 감수(10편, 29.4%), 연구자의 선입견 배제와 결과 제시에 대한 언급(14편, 41.2%)이 다른 연구방법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반면, 기타 접근을 활용한 연구물 분석에서는 감수 및 연구자의 선입견을 최소화하는 등 바람직함에 대한 명시가 전체 8편 중 ‘예(1편, 2.9%), 아니요(7편, 20.6%)’로 상대적으로 저조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1〉 연구방법별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Hoyt & Bhati, 2007)

질적연구 방법										전체
	현상학	근거 이론	사례 연구	문화 기술지	내러티브	CQR ¹⁾	생애사	기타		
초점1	① 예	14(41.2)	1(2.9)	3(8.8)	1(2.9)	2(5.9)	2(5.9)	7(20.6)	32(94.1)	
	② 아니요						1(2.9)	1(2.9)	2(5.9)	
초점2	①절반미만					1(2.9)	1(2.9)	1(2.9)	3(8.8)	
	②절반이상	14(41.2)	1(2.9)	3(8.8)	1(2.9)	2(5.9)	1(2.9)	2(5.9)	7(20.6)	31(91.2)
초점3	①기록자료			1(2.9)			1(2.9)	2(5.9)	4(11.8)	
	②촉어록	14(41.2)	1(2.9)	3(8.8)		2(5.9)	2(5.9)	2(5.9)	6(17.6)	30(88.2)
역할1	① 예	10(29.4)	1(2.9)	2(5.9)	1(2.9)	1(2.9)		1(2.9)	16(47.1)	
	② 아니요	4(11.8)		1(2.9)	2(5.9)	1(2.9)	3(8.8)	7(20.6)	18(52.9)	
역할2	① 예	14(41.2)	1(2.9)	2(5.9)		1(2.9)	1(2.9)	1(2.9)	20(58.8)	
	② 아니요			1(2.9)	1(2.9)	2(5.9)	1(2.9)	2(5.9)	7(20.6)	14(41.2)
결과1	① 예	14(41.2)	1(2.9)	2(5.9)	1(2.9)	2(5.9)	2(5.9)	3(8.8)	6(17.6)	31(91.2)
	② 아니요			1(2.9)				2(5.9)	3(8.8)	
결과2	① 예	14(41.2)	1(2.9)	2(5.9)	1(2.9)	1(2.9)	2(5.9)	3(8.8)	7(20.6)	31(91.2)
	② 아니요			1(2.9)	1(2.9)			1(2.9)	3(8.8)	

IV. 결론 및 논의

1. 결론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북한이탈주민 연구 중 북한이탈여성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질적 연구물을 찾아 질적연구 동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게재된 총34편의 질적 연구물에 대해 기초사항, 연구물 분석 및 분류, Hoyt& Bhati(2007)의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질적 연구물의 평정 및 신뢰도 및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분야별 논문 수를 살펴본 결과,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한 질적연구는 사회복지 분야에서 가장 많이 연구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북한이탈주민 정착은 남한 사회에서의 생존과 경제적 성취에 초점을 둔 사회복지 측면에서 지원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졌다(양옥경, 윤지혜, 2017). 상이한 제도에서 살아온 북한이탈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는 사회복지

1) 합의적 질적 연구방법(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CQR)

적 접근은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우선과제임을 볼 때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에 있어 심리적 문제에 대한 이슈가 증가하기 시작하며 정신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여성들의 경우 ‘탈북과정’은 인신매매에 대한 노출, 인권유린, 죽음목적, 가족해체 등 외상(trauma)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의 삶의 심각한 변화를 가져오며 외상경험은 남한사회 적응을 방해하는 취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이숙영 외, 2016). 이러한 중요성에도 국내 다문화 상담분야의 주된 연구 대상자는 결혼이주자 여성이 62.6%, 북한이탈주민은 6.1%로 여전히 매우 낮은 비율로 연구되고 있다(오은경, 최미, 최한나, 2016). 본 연구결과에서도 북한이탈여성의 심리 및 정신건강의 상담 및 치료분야 논문 게재는 전체 34편중 3편(8.8%)으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북한이탈여성의 상담 및 치료, 정신건강에 대한 학문적 관심과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발행연도에 따른 질적 연구방법 논문 수를 살펴본 결과, 2005년에는 1편(2.9%), 2006년-2010년 3편(8.8%)에 불과하였으나, 2011년 이후 논문의 발행 수는 두 자리 수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연구는 사회제도와 흐름에 영향을 받는데 2009년 3천명에 가까운 북한이탈주민이 남한에 입국하면서 이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논문발표로 이어진 것과 같은 결과이다(송호준, 박지현, 박현정, 2019). 연도별로 질적 연구방법의 추이를 살펴본 결과, 2011년 이후부터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논문이 게재되기 시작하였는데 현상학 방법이 41.1%로 가장 많은 방법으로 사용되었으며, 포커스그룹인터뷰, 내용분석 등 기타방법이 23.5%, 사례연구, 생애사가 각 8.8% 순으로 나타났다. 질적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목소리를 통해 인간의 주관적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특히, 북한이탈여성은 다문화권의 결혼 이민자 여성과는 구분되는 북한이탈여성만의 독특한 삶의 경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의 활용은 쉽게 관찰할 수 없는 그들의 독특한 문화적 다양성과 특수성을 탐색하기 위한 방법이기에 이를 활용한 연구가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셋째, 발행연도별 질적 연구의 주제를 동향 분석한 결과,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사회적응 연구가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29.4%). 질적연구 논문 수가 증가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부터는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한 도덕성, 윤리, 영성 등 연구주제의 범위가 점차 확장되며 새로운 접근의 연구들도 시도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이탈주민을 적응과 정착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사회적응분야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박광택, 2014), 국내 다문화 대상자들의 연구주제들은 적응과 문화적·사회적 맥락의 주제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김은경, 김현주, 2017) 북미에서는 다문화 대상자들의 증가로 연구주체들도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이다(Smith& Remond, & Rovanak, 2009). 초창기 정착과 적응을 위한 물질적·제도적 지원 마련을 위해 사회 적응 연구도 요구되나 다문화 사회 속에서 북한이탈여성들이 경험하는 삶의 현장을 반영한 다양한 주제의 질적연구 수행이 요구된다.

넷째, 질적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요구되는 절차와 과정들이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검토하고자 Hoyt&Bhati(2007)의 네 가지 분류기준을 참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질적연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분석결과, 대부분의 질적연구 논문들이 질적연구 수행과정과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국내 상담분야의 질적연구 동향을 분석한 김봉환 외(2012)의 연구와 Hoyt&Bhati(2007)가 질적연구 50편을 대상으로 연구수행과정을 검토한 결과와 일치한다. 세부적 내용들을 살펴보면, 연구초점에 대한 평가는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연구 대상자와 직접 접촉(94.1%)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질적 연구자료 중 축어록 활용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심층면담은 인간 고유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나, 면접 자료 외에 현장노트 및 관찰기록 자료 등 다양한 질적 자료의 활용을 시사한다(김봉환 외, 2012). 연구자의 역할 측면을 살펴보면 연구자의 선입관의 최소화나 배제와 감수를 언급하지 않은 연구물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는 질적연구의 과정이 타당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는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질적 연구자로서의 준비와 수련, 질적연구의 수행과정이 보다 더 민감하게 다뤄져야 함을 강조한다.

2. 논의

본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탈여성의 삶의 경험과 과정에 대한 세부적이고 심도 있는 폭넓은 주제의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그동안 진행된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의 주제는 사회적응과 가족관계, 정신건강·심리분야의 연구들로 이들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다소 탐색적인 수준에서 연구라 할 수 있겠다. 북한이탈여성의 삶은 북한이탈 이전과 이후로 크게 나누어지며, 경험은 북한에서의 경험, 북한이탈 이후 제3국을 포함한 경험, 남한 입국 이후 경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3가지 경험의 범주는 환경적, 상황적 맥락이 아주 이질적이어서 하나의 맥락이나 공통적인 맥락으로 이해하고 분류·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

렵다(류진아, 오은경, 2021). 북한이탈여성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정체성 발달의 영향을 준 북한 내에서의 출신성분제도(핵심계층, 동요계층, 적대계층)와 시대적 배경(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탈북과정에서의 경험(탈북기간, 재중경험) 등 하나의 전체적인 인간으로서 내면적 경험들을 충분히 고려해야한다. 질적연구는 개인의 경험과 정서, 행동들을 집중하여 심층 분석함으로써 삶의 전체 맥락을 살펴보는 데 유용한 방법이나, 본 연구의 질적 연구물들은 이들의 삶의 내용과 경험을 충분히 다룰 만큼의 주제가 다양하지 않았다. 북한이탈여성의 삶의 경험은 여전히 의식과 무의식에 남아 그들에게 영향을 주기에 북한 내에서의 계층과, 시대적 배경, 탈북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을 보다 세밀하게 관찰할 수 있는 초점화된 연구가 진행되어야겠다.

둘째, 북한이탈여성 관련한 심리·상담분야의 연구가 확대되어야 하겠다. 북한이탈주민들이 인식하는 병증발생 시기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북한생활에서부터 탈북과정, 남한적응과정 등 전 생애에 걸쳐 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다(조아람 외, 2013). 특히, 북한이탈여성의 경우 탈북을 선택한 이후 제3국에 2년 이상 체류하게 되며 생존을 위협하는 인권유린의 사건과 외상에 노출, 가족 붕괴 및 해체, 자녀와의 단절 및 분리 등을 경험한다. 이러한 심리적 외상들은 남한 정착의 부적응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남한 사회적응에 심리-정서적 문제를 완화시키도록 돕는 것이 남한 적응의 전제조건인 것이다. 북한에서 제 3국으로, 남한에서 겪고 있는 고통과 혼란을 이해하고 지지할 때 삶에 대한 만족과 치료적 효과가 있음을 고려할 때(조아람 외, 2013), 북한이탈여성의 정신적, 심리적 문제를 깊이 공감하고 지지하기 위해 북한이탈여성이 경험하는 삶의 장에서의 심리적 경험들을 종합하여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셋째, 질적 연구자로서 연구에 대한 철학과 연구자로서의 자세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 질적연구는 행위자의 목소리를 통해 현상을 있는 그대로 탐구하며 심층적 이해를 돕는 연구방법이다. 연구자가 연구의 도구이기에 선입견과 편견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특히 강조된다. Hoyt&Bhati(2007)는 양적 연구가 지향하는 실증주의적 검증을 위해 가능하면 객관적으로 질적연구 자료들이 신뢰할만하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신뢰도 및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소수의 논문에서만 질적연구의 수행과정과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추후 질적 연구에서는 신뢰도와 타당성 확보를 위해 질적연구의 수행과정과 절차에 따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의 한계를 바탕으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한민국 헌법상에서 명시한 북한이탈주민 여성만을 대상

으로 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국내외 북한이탈주민 전체를 의미하지 않으며, 국내 거주한 북한이탈주민 여성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학문적 정의에 대한 기준 뿐 아니라 국내-국외 거주하는 북한이탈여성의 특징과 난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틀을 고려한 해외 연구물들도 함께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연구물 평정에 있어 학제 간 교차 접근 및 평정 수행의 한계가 있었다. 국내학술지에 게재된 북한이탈여성 논문을 선정함에 있어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평정기준을 정하였고, 이에 적합하지 않은 논문들은 제외하였다. 평정과정에서 여성학, 사회복지학, 북한학, 교육학 등 학제 간 교차 접근이 수행되어진다면 보다 다양한 기준들을 적용하여 이들에 대한 세부적 동향과 흐름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에서는 북한이탈여성의 개인내적 변인을 고려한 평정기준 뿐 아니라 학제 간 교차 접근을 통해 심도 있는 평정이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 셋째, 질적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평정을 위해 Hoyt&Bhati(2007)의 기준을 참고하였으나 전체 질적 연구방법론에 적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질적 연구방법은 학문적 기원과 연구방법에 대한 초점, 자료수집 및 분석, 결과기술 방법에도 차이가 있으며 학자에 따라 분류하는 방식이 다르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질적 연구 방법론에 따라 질적연구에 대한 수행과정과 평가가 깊이 있게 이루어지도록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에 게재된 북한이탈여성연구물 전체를 대상으로 질적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북한이탈여성 관련 질적연구 주제의 확대, 각 학문 분야의 연구 활성화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질적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차연(2003). 재중 탈북여성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10권 제1호. 61-80.
- 권경인·양정연(2013). 상담학 분야의 질적연구동향분석(2000년~2012년). 상담학연구. 제14권 제6호. 3871-3893.
- 김계원·정종진·권희영·이운주·김춘경(2011). “상담심리학의 최근 연구동향: 상담 및 심리치료학회지 게재논문 분석(2000~2009)”.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제23권 제3호. 521-542.
- 김경옥(2002).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사회복지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자(2008). 북한이탈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평택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학위 논문.
- 김봉환·배주연·오효정·윤영선·제갈원(2012). “상담 분야의 질적연구 동향분석 (2002년~2011년)”.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제24권 제3호. 729-752.
- 김용태·배철효(2010).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지원방안”. 한국경찰학회보. 제12권 제3호. 81-116.
- 김은경·김현주(2017). “이주배경 청소년에 관한 질적 연구 동향: 국내 및 북미 학술지 게재 논문 분석”. 상담학연구. 제18권 제2호. 245-270.
- 김이경(2019). “북송경험탈북여성들의 탈북과정 및 적응에 관한 생애사연구”.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제11권 제1호. 25-67.
- 김인숙(2006).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복지적 지원방안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태현·노치영(2003). “북한이탈여성들의 삶 이야기2: 생존전략을 중심으로 한 중국생활체험”.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제12호. 229-243.
- 김현경(2007). 난민으로서의 새터민의 외상 회복 경험에 대한 현상학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혜영(2020). “북한이탈주민의 전환적 진로선택과정에 관한 근거이론 연구”. 한국산학기술학회. 제21권 제2호. 240-250.
- 김희경(2012).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유형에 따른 복합 PTSD와 PTSD 증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제31권. 1003-1022.
- 남북하나재단(2020). 북한이탈주민 정착실태조사.

- 노정화·김현주(2018). “북한이탈주민의 부부관계 변화과정”. 가족과 가족치료. 제 26권 제2호. 205-228.
- 류진아·오은경(2021).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본 북한이탈여성의 경험”. 질적 탐구. 제7권 제1호. 35-69.
- 문숙재·김지희·이명근(2000). “북한 여성들의 탈북동기와 생활실태-중국 연변지역의 탈북 여성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제5호. 137-152.
- 박광택(2014). “북한이탈주민의 적응에 대한 연구 동향과 과제”. 직업과고용서비스연구. 제9권 제2호. 15-29.
- 박명희(2005). “中國內 脫北女性の 生存實態와 難民地位問題”. 신아세아. 제12권 제2호. 115-144.
- 박소연(2017). “북한 이탈여성의 생애사 재구성:주체사상에서 벗어나 자본주의 사상의 미망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11권 제2호. 5-30.
- 박승민·김광수·방기연·오영희·임은미(2012). 근거이론 접근을 활용한 상담연구 과정. 서울: 학지사.
- 박신순(2014). 탈북여성의 가족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 북한-중국-한국에서의 가족생활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숙(2014). 북한이탈주민의 직장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이직 의도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박현선(2003). 탈북여성문제.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79-87.
- 성정현(2014). “탈북여성들의 남한사회에서의 차별경험과 트라우마 경험의 재현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5호. 120.
- 손은정(2010). “수퍼비전에 대한 질적 연구의 동향과 과제”. 한국놀이치료학회지. 제13권 제3호. 1-21.
- 송호준·박지현·박현정(2019). “북한이탈주민의 스트레스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한국웰니스학회지. 제14권 제2호. 85-95.
- 신희정(2017). “북한이탈여성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제10권 제1호. 161-194.
- 안태윤(2014). “북한여성들이 겪은 한국전쟁-전쟁동원 활동과 체제하의 생존전략”. 여성과 역사. 제20권. 181-216.
- 양옥경·윤지혜(2017).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 연구 동향 분석: 스코핑 고찰 방법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제11권 제2호. 172-196.
- 오은경·최미·최한나(2016). “국내 다문화 상담 연구 동향: 학술지 및 학위 논문 분석(1993-2016.7)”. 상담학연구. 제17권 제5호. 223-242.
- 용영숙·김숙자(2018). “탈북 아동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아동학회지. 제39권

제4호. 23-37.

- 유시은·전우택·조영아·홍창형·엄진섭(2005).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3년간 사회 적응 추적연구”. 통일연구. 제9권 제1호. 73-105.
- 윤여상·김현아·한선영(2007).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제19권. 693-718.
- 윤인진(2009). “한국인의 이주노동자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 한국학술정보.
- 윤혜순(2014). “탈북청소년 연구동향과 과제”.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 11호. 125-149.
- 이금순·김규륜·김영운·안혜영·윤여상(2005).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서울 : 통일연구원.
- 이기영·성향숙(2001). “탈북자 가족 구성원의 가족관계 인식에 관한 조사연구-탈북자 가구주 및 그 배우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회. 제47권. 243-271.
- 이순민·심우찬(2018). “탈북여성 관련 양적 연구동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 제18권 제7호. 170-183.
- 이양자·정남운(2018). “외상 후 성장에 대한 연구 개관: 적응과의 관계 및 치료적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건강. 제13권. 1-23.
- 이영선·구혜환·한인영(2011). “학술논문분석을 통해 본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특수성”. 통일문제연구 2011년 하반기. 제56권. 147-194.
- 임현주·이진아·양숙자(2017).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관련 연구 동향”. 지역사회간호학회. 제28권 제2호. 144-155.
- 정영선(2018). “인신매매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의 삶에 대한 질적연구”. 여성연구. 98(3). 97-135.
- 장혜경·김영란(2000).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주람·김성미(2015). “북한이탈 중년여성들의 사회복지관 이용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제9권 제3호. 59-84.
- 정영선(2018). “인신매매를 경험한 북한이탈여성의 삶에 대한 질적연구”. 여성연구. 98(3). 97-135.
- 조아람·유춘길·박소임·성유용·서주희(2013). “북한이탈주민들의 병증 발생시기 인식에 대한 질적연구”. 동의신경정신과학회. 제24권 제4호. 373-384.
- 조영아(2005). 남한 내 북한 이탈 주민의 자아방어기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조영아·전우택(2005).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

- 으로”. 한국심리학회지:여성. 제10권 제1호. 17-35.
- 조용관·김윤영(2009). 탈북자와 함께하는 통일. 서울:한울.
- 최빛내·김희경(2011). “탈북 여성의 외상 경험과 성격병리가 심리 증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상담 및 심리치료. 제23권 제1호. 206-209.
- 최승미(2008). 외상후성장 관련 변인의 탐색.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최현실(2011). “탈북여성들의 트라우마와 한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여성학연구. 제21권 제1호. 161-204.
- 최혜윤(2019). “질적 메타분석을 통해 살펴본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사의 경험”.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26권 제4호. 289-318.
- 한인영·강향숙·백형의(2013). “북한이탈여성들의 성적 외상 경험”. 사회과학연구. 제29권. 187-207.
- 한인영·홍선희(2012). “북한이탈여성의 한국사회적응에 대한 주관적 인식 유형 연구”. 주관성 연구. 제25권. 75-93.
- 홍규덕(2002). “탈북여성 인권보호의 국제정치학적 의미와 대안모색”. 아시아여성 연구. 제41권. 3-52.
- 홍승아(2013). “가족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여성의 정착과제-자녀양육을 중심으로”. 평화문제연구소. 제25권 제2호. 173-205.
- Dewey, J. (2011). 경험과 교육.(강윤중 역). 서울: 박영사.(원저 1938 출판).
- Hoyt, W. T., & Bhati, K. S. (2007). Principles and practice: An empirical examination of qualitative research in th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2), 201-210.
- Morrow, S. L. (2005). Quality and trustworthiness in qualitative research in counseling psycholog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2(2), 250-260.
- Smith, S. D., Reynolds, C. A., & Rovnak, A. (2009). A critical analysis of the social advocacy movement in counsel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87(4), 483-491.
- Weber, R. P. (1990). *Basic content analysis* (2nd ed.). Thousand Oaks, CA:Sage.

Abstract

Analysis of qualitative research trends on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 Focused on domestic journals

Eunkyung OH*·Jin-A Ryu**

To this end, 34 qualitative studies published in domestic journals were analyzed so far in databases (RISS4U, KISS, DBpia) provided by the 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For a total of 34 papers, qualitative research trends were identified by analyzing thesis publication year, academic field and journal name, research subject, research method, and research topics, and the process of qualitative research according to the four dimensions of Hoyt&Bhati (2007). The results of qualitative research trend analysis on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steadily researched since 2005, and the most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Second, the most widely used research method was phenomenology, and various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ies have been published since 2011. Third, the most research on social adaptation was conducted, followed by family/ relationships, mental health and psychology. Fourth, as a result of reviewing the qualitative research process, the researcher's focus and the reporting and quotations of research results are frequently performed, but it is analyzed that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confirmation through checked by independent auditors and minimization of the researcher's preconceptions are relatively low.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expansion of qualitative research topics related to North Korean refugee women, implications for each academic field, and follow-up research were suggested.

Keywords : Female North Korean defector, multicultural women, North Korean defectors, qualitative research, trends.

* First Author: Research Professor, Konya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Associate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 현황 분석 : 일간지 보도내용을 중심으로

고지현*·양세정**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에 대해 보도한 기사를 분석함으로써, 논의가 미흡한 성인지감수성 관련 문제들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와 언론사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 동안 국내 7개 일간지(〈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에 보도된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 기사 158개를 추출하여 연도별 불매운동 발생 건 수, 불매운동 발생 원인, 성인지감수성 논란 원인 등의 분류를 통해 불매운동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조사대상 기간 동안 발생한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은 총 52건으로, 매해 보도된 사안의 개수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사안별 언론보도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의 논란 원인별(성차별, 성폭력, 성별고정관념)로 분류한 결과, '성별고정관념'으로 인해 발생한 불매운동이 6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성차별', '성폭력'의 순이었다. 하지만 언론보도의 경우 '성폭력' 관련 기사가 논란 당 평균 4건의 기사가 보도되며 다른 항목들보다 높게 나타나, '성폭력' 문제에 기인한 불매운동이 보다 이슈화 되는 경향을 살펴볼 수 있다. 셋째, 불매운동의 방식은 대부분 시민단체의 개입 없이 소비자 '자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온라인에서의 불매운동 실행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를 통해 소비자운동의 방향이 개별적으로 집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불매운동의 실행단계별 양태를 분석한 결과 '불매운동 실행' 단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불매운동 조직' 단계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여 관련 불매운동의 경우 주로 직접적인 조직화를 구축하지 않아도 집단적 불매운동 실행이 가능한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식은 문제되는 콘텐츠의 폐기와 같은 '직접적 조치'를 취한 후속조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7개 일간지에서 공통적으로 다룬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 전후의 매출변화를 살펴본 결과 이들 모두 불매운동 이후 최소 6개월 간 매출 하락세를 보였다.

주제어 : 불매운동, 성인지감수성, 여성소비자 운동, 일간지 보도 비교분석

* 제1저자 : 상명대학교 글로벌생활환경학과 석사 (apexkko@gmail.com)

** 교신저자 :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sjyang@smu.ac.kr)

I. 서론

최근 성차별 및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해짐에 따라, 젊은 여성소비자들을 중심으로 관련 논란이 발생한 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으로 대응하는 흐름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성에 대한 불합리적 묘사가 담기거나 과거에 차별적 발언을 한 자가 광고에 등장하는 경우, 이를 시정하거나 징별하고자 하는 수단으로 불매운동을 사용하는데(김지은·한규훈, 2020), 치킨프랜차이즈 회장의 성추행으로 촉발된 불매운동, 미투운동(#MeToo: 나도 말한다; 성폭력 고발 운동)을 통해 남성 영화인들의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일어나면서 가해자가 출연한 콘텐츠를 대상으로 발생한 불매운동(강푸름, 2018) 등이 사회적 관심을 끈 바 있다.

과거 여성소비자를 중심으로 발생한 불매운동은 노동운동 위주로 발생하였는데,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합리적 대우에 항의하는 목적이었다. 1985년 여성노동자 11명을 부당해고 한 섬유회사 톱보이에 대응하여 여성단체, 노동운동단체, 대학교의 학생회가 연합하여 불매운동을 선포한 바 있으며(안상님, 2000), 1987년에는 아남산업, 동양고무, 뽕뽕 청바지 등을 대상으로 여성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에 항의한 불매운동이 진행되었다(장미경, 2003). 이처럼 여성소비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불매운동은 여성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대우가 주를 이루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회사 내 성폭력 문제를 비롯하여 부적절한 광고 및 모델 섭외 등 마케팅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얹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2018년 미투운동 당시 위계관계에 의한 성폭력사건에 대해 대법원판결문에서 명명한 ‘성인지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란 용어(김성현 외, 2019)로 집결된다. 성인지감수성이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와 불균형을 감지해내는 민감성으로(김성현 외, 2019), 신체, 심리, 사회영역에서 양성 간 차이가 없어야 함을 강조하는 양성평등의식 수준 정도를 의미한다(곽연희·정원철, 2018). 국내에서는 미투운동,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버닝썬 게이트, 소라넷 폐쇄운동 등 성폭력 관련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며 성인지감수성이 낮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건의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텔레그램 탈퇴운동(박지은, 2020), 버닝썬 게이트 관련 아티스트에 대한 보이콧(이혜림, 2019), 미투운동으로 고발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보이콧(강푸름, 2018)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차별 채용으로 인한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불매운동(강희영·최유정, 2019)과 같은 성차별 관련 문

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성인지감수성 관련 이슈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여성학과 소비자학 분야 모두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한데, 이는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이 부재했거나 최근에서야 사회적 관심이 주어졌기 때문임으로 사료되나, 어떤 이유이건 아쉬운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에 대해 보도한 기사들을 분석하고자 하며, 7개 일간지에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보도된 기사들을 연구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 이슈를 파악하고자 한다. 둘째, 연구기간 동안 발생한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들의 성인지감수성 인식 변화추이를 유추하고자 한다. 셋째, 불매운동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의 대상이 된 기업의 매출 변이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들의 성인지감수성 인식 변화추이 및 관련 불매운동의 현황 분석결과를 통해 소비시장의 다양한 여성이슈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출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문헌 고찰

1. 성인지감수성의 정의 및 관련 불매운동

1) 성인지감수성(Gender Sensitivity)의 정의

성인지감수성이란 성별에 따른 차이를 인식하고 성차별적 요소와 불균형을 감지해내는 민감성을 의미한다(김성현 외, 2019). 이 용어는 2018년에 선고된 대법원판결에서 재판부의 판결문을 통해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1항)”라고 적시되며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김성현 외, 2019), 이후 이전까지 사용해왔던 ‘성인지력’, ‘성평등 의식’, ‘젠더감수성’ 등 유사단어들과 혼용되어 왔다.

곽연희·정원철(2018)은 성인지감수성을 성으로 인한 불평등과 성차별 요소를 민감하게 감지해내고 신체, 심리, 사회영역에서 양성 간의 차별이 없어야

함을 강조하는 양성평등의식 수준을 의미한다고 정의하면서, 성차별, 양성평등의식, 성폭력 등 세 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이때 성차별 감수성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남성중심의 성역할과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의미하며, 양성평등의식은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하여 여성과 남성 모두가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믿는 의식 정도를 의미한다(안윤정, 2014). 성폭력 요소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인지 능력을 의미하여 그 배경에 있는 남성우월주의,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 위계의 활용, 성폭력 문제인식 결여 등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는 수준을 의미한다(한국성폭력상담소, 2013). 종합해보면, 성인지감수성은 인권의식, 성차별 및 양성평등의식, 성폭력 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2)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

불매(不買)운동은 문자 그대로 특정 상품을 사지 않는 운동을 의미하며, 제품이나 브랜드, 판매점에 항의나 저항의 뜻을 표시하기 위하여 하는 일로 정의된다(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즉, 소비자 불매운동은 시장에서의 특정 구매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운동 주도 세력들이 개별소비자들의 동참을 촉구하여 특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시도를 의미한다(Friedman, 1985). 이는 특정 제품의 구매를 억제함으로써 대상 기업에 압박을 가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의사표현으로, 최근에는 가격이나 품질 등의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환경, 윤리, 정치 등 다양한 사회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장몽교 외, 2017).

불매운동의 발생 원인으로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들이 제기되는 가운데, 불매운동을 확대한 배척운동을 살펴보면 성차별 혹은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해짐에 따라 젊은 여성소비자들을 중심으로 여성을 성적대상화시키는 광고나 마케팅에 대해 지속적인 거부 의사가 있어왔다(김지은·한규훈, 2020). 우리나라의 경우 성폭력이나 성추행과 관련된 기업 및 유명인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비판의 강도를 높여 왔으며, 소비자 불매운동은 기업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실질적 피해도구의 수단이라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은 주로 성폭력 이슈와 연관되어있으며, 호식이두마리치킨 전 회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촉발된 불매운동(전효경, 2019), 다양한 여성상을 광고에 등장시키며 여성소비자의 지지를 받았던 국내 의류 브랜드 안다르가 이후 회사 대표의 성추행 및 부당해고 논란으로 인해 불매운동의 대

상이 된 사례(김지은·한규훈, 2020)가 있다. 2018년 사회전반적인 영역에서 문제를 드러냈던 미투운동(#MeToo: 나도 말한다; 성폭력 고발 운동)은 남성 영화인들의 성폭력 가해에 대한 고발이 일어나면서 여성소비자를 중심으로 성폭력 가해자가 출연한 콘텐츠 불매운동이 진행되자, 영화 제작사들은 가해자를 하차시키고 재촬영하는 과정을 감수하였다(강푸름, 2018).

국내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은 성범죄 관련 이슈가 강하게 작동하는 반면, 외국의 경우 성차별 및 성 고정관념에 대한 표현 등이 불매운동의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계속되는 성차별 광고에 대응한 청원, 시위 등의 보이콧 행동을 통해 관련 광고규제 규정이 만들어졌는데, 2017년 광고자율규제기구인 광고표준위원회는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광고들을 규제하는 안을 발표하였으며, 시행 중에 있다(정상수, 2018). 이러한 광고들을 살펴보면, 여자는 발레리나, 남자는 수학자가 될 것이라며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조한 분유광고, 전장에 나가는 여성전사의 모습을 몸매 부각 등 성적으로만 강조한 비디오게임 광고 등 여성의 역할에 대한 차별적 시선이 담긴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이렇듯 청소년을 포함한 시청자들에게 왜곡된 성 관념을 심어줄 수 있는 광고의 영향력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여성에 대한 성적대상화, 이상화 된 몸매 강요 등이 광고 규제 대상에 포함되었다(강혜란, 2017).

이러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국내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비시장의 성차별 철폐를 촉구하기 위해 온라인 여성소비자 운동인 ‘여성소비총파업’이 진행되기도 하였다. 2018년 7월 처음으로 시작된 여성소비총파업은 노동과 소비의 주체인 여성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한 소비자 운동으로, 매월 첫 번째 일요일마다 여성의 소비와 지출을 일시적으로 중단하여 유통 및 산업계에 여성소비자의 영향력을 가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유진, 2018). 이는 아이슬란드 여성들이 40% 이상 차이 나는 성별임금격차에 대한 항의로 가사노동과 육아, 직장 일을 거부하여 여성이 멈추면 사회가 마비된다는 점을 각인시키고,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지불제도를 도입시킨 여성총파업운동(1975.10.24.)을 모티브로 한다. 국내 소비자운동인 여성소비총파업 또한 ‘우리가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는 슬로건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매 월 첫 번째 일요일을 기점으로 반복된다는 데에서 지속성을 갖는다. 본 운동의 목표는 성차별 철폐와 핑크텍스 폐지, 임금 불평등 개선 등 장기적인 특성을 띄고 있으며, 윤김지영(건국대, 몸문화연구소 교수)은 이 외에도 여성혐오적인 광고, 기업의 부정채용과 낮은 여성채용률, 여성의 소비를 허영적으로 표현하는 된장녀와 김치녀 용어들이 생겨난 서사 등 여성의 소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프레

임을 가시화하고 비판하는 것이 소비자 운동으로서의 효과라고 분석하였다(원은지, 2018).

3) 소비자 불매운동 관련 연구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에 관한 연구는 여성의 소비에 대한 인식제고 및 여성소비자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논의점을 제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미흡한 이유는 소비자학을 중심으로 한 불매운동 연구들은 대부분 소비자의 참여의도와 참여행위에 미치는 영향요인 규명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로는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한 불매운동 신념 및 태도가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전향란 외, 2014), 소비자 역할인식이 온라인 불매운동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류미현, 2015), 소비자의 목표지향적 행동모델 변수와 윤리적 소비성향이 불매운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 분석(장몽교 외, 2017), 소비자의 온라인 불매운동 태도 및 의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장몽교·이승진, 2018) 등이 있다. 일련의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존 연구들은 설문조사를 통해 소비자의 불매운동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이 주를 이룬다.

최근 일부 연구들은 불매운동에 대한 소비자들의 의견을 서술 형태로 수집하여 일상적 언어를 바탕으로 질적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신성연(2018)의 연구에서는 가상의 불매운동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면접을 통한 비정형적 자료 수집 후, 연결망 분석을 통해 불매운동 참여 동기요인과 억제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는 기존 연구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는 학술적 의의를 가지는 한편, 한정된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송유진(2020)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한 특징 분석을 위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키워드로 검색된 게시글의 댓글을 수집하고, 개방형 설문조사를 통해 10여절 이상의 서술 형태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이에 대해 텍스트마이닝과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관한 키워드 및 소비자 인식 등을 도출하였지만, 불매운동 자체의 현황 분석이 미흡하며 언론과 전문가의 의견이 배제되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한편 불매운동의 양상을 분석한 연구로는, 일간지 비교 분석을 통해 소비자 불매운동의 현황과 전개 양태를 살펴본 이득연(1996)의 연구가 있다. 1992년부터 1996년까지 5년의 기간 동안 발생한 총 53건의 불매운동 사례를 바탕으로 연도별 불매운동의 발생건수, 단체의 개입 수, 불매운동의 목표, 기능 등 세부적인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소비자 불매운동 관련 연구들이 주로 분석해

온 방향 대신 신문기사를 연구 자료로 활용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불매운동의 양상을 분석하였다는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또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사회구조적 문제를 적용하여 소비자의 사회적 책임 실천으로서 관련 불매운동에 대한 태도와 보도기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일간지 보도 분석 연구

언론은 사건 파악이 어려운 개인들이 사회와 이슈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역할을 하며(김태원·정정주, 2016), 특정 사건 및 사안에 대하여 사회적 의제 및 여론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평가된다(정수영·유세경, 2013). 신문윤리강령 제 4조 〈보도와 평론〉에서의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이라는 다짐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서술함으로써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주제에 대해 한 쪽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보도하고자 하는 객관보도규범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으며(이미나, 2011), 이득연(1996) 또한 일간지에 보도된 불매운동은 사회적 주목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자체를 연구대상으로서의 가치로 설명하였다.

20여년이 지난 현재도 일간지는 시의성이 있는 다양한 사안을 한정된 지면에 다룸으로써 해당 시점에서의 사안의 객관적 중요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언론보도에 대한 분석 연구는 연구방법론 상에서 내용분석법의 일종이라 할 수 있으며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되는데, 언론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로서 언론이 제시하는 프레임에 관한 연구와 언론보도를 통해 주요하게 다뤄지는 특정 주제에 관련된 연구가 있다(류춘렬, 2008). 본 연구는 후자의 연구방식을 따라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이라는 특정 주제에 관한 언론보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의 국내 연구들은 주로 언론학 분야에서 일간지를 대상으로 연구되어져 왔다. 총 6종류의 일간지에서 784개의 학교폭력 기사를 분석한 연구(강연곤 외, 2013), 총 4종류의 일간지에서 397개의 트위터 이슈 기사를 분석한 연구(이수범·강연곤, 2013), 총 3종류의 일간지에서 553개의 가슴기 살균제 사건에 관한 기사를 분석한 연구(김현미, 2017) 등 해당 시점에서의 사회적 관심 이슈를 다룬 연구들과 총 6종류의 일간지에서 729개의 환경관련 기사를 분석한 연구(유영한 외, 2006), 총 2종류의 일간지에서 241개의 고위직 여성 경제리더에 대한 보도를 분석한 연구(김희진·이수민, 2012) 등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주제를 대상으로 분석한 연구들이 있다. 홍지아(2015)의 연

구에선 총 4종류의 일간지에서 10년 동안 보도된 성매매 관련 기사를 분석하였으며, 양적분석 결과 대부분 기사의 총량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여 성매매 관련 논쟁 및 이에 대한 관심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음을 해석하였다. 또한 전체 기사를 크게 다섯 가지의 유형으로 분류 및 분석하였으며, 최종적으로 보수언론과 진보언론의 의미구성 방식의 차이에 대해 논하였다. 이는 특정 이슈의 의미구성이 미디어를 통해 재현되는 방식을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를 통해 재현된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의 양상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선행연구의 분석방법을 따라가되 미디어의 재현 방식과 관련된 특성 분석보다는 이슈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목적 및 이용자료

본 연구의 목적은 일간지에 나타난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현황과 의미를 고찰하는데 있다.¹⁾ 이를 위해 7개 일간지를 대상으로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에 대한 기사를 사용하였다. 분석대상 일간지는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로, 매출액 및 일간지 보도 비교분석 선행연구에서 주로 다루지는 일간지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경제신문은 제외하였다. 국내 종합일간지 중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보수적 성향을 대표하며, 〈경향신문〉, 〈한겨레〉는 진보적 성향을, 〈한국일보〉는 중도적 성향을 대표하는 언론사이기 때문에 선정하였다(김현미, 2017; 이수범, 강연곤, 2013; 홍지아, 2015). 또한, 국민일보는 양성평등을 지지하는 입장을 밝힌 만큼 성인

1) 소비자 불매운동의 현황과 전개 양태를 평가하기 위해 불매운동 관련 신문기사를 연구자료로 활용한 이득연(1996)의 연구에 의하면, 모든 불매운동이 보도되는 것이 아닌 만큼 기사 자료만을 통해 불매운동의 현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기사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은 모든 언론사를 고려대상으로 선정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갖기 때문에, 지역마다 발생하는 소규모 불매운동 등의 지방 신문들까지 고려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진행한 기사보도 분석은 7개의 일간지에 게재될 만한 비중을 가진 불매운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하지만 언론보도는 사회적 주목을 의미하는 만큼, 기사로 보도된 불매운동은 충분한 연구 가치를 지닌다고 해석되고 있다.

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 보도에 적극적일 것이라는 가정 하에 선택하였다(이민규·김수정, 2006).

2. 자료수집 및 표집방식

분석대상인 7개 일간지의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빅카인즈(www.bigkinds.or.kr)’를 통해 수집하였다. 빅카인즈는 41개 매체의 1990년 이후 기사들을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정형, 반정형, 비정형 구분 없이 방대한 자료들을 빅데이터화하여 구축하고 있으며, 검색어 설정을 통해 연구분석에 필요한 기사들을 추출할 수 있다(이은별 외, 2017).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의 경우 2018년 이후 기사만 빅카인즈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2017년 이전의 기사에 대해서는 각 언론사의 자체홈페이지 상에서 지면검색을 통해 수집하였다.

연구 분석대상인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에 관한 기사는 빅카인즈에서 제목 및 본문에 연구자가 입력한 검색어를 포함하는 경우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검색어는 크게 두 가지 속성으로 분류되며, 첫 번째 속성은 불매운동에 관한 내용으로 ‘불매’ 혹은 ‘보이콧’ 단어를 필수 포함 검색어로 지정하였다. 두 번째 속성은 본 연구의 핵심 주제인 성인지감수성에 관한 단어로, ‘성인지감수성’, ‘젠더감수성’, ‘성차별’, ‘여성비하’, ‘여성혐오’, ‘성폭력’ 등을 차례로 투입하였다. 자료수집 순서는 첫 번째 속성의 두 단어를 필수 포함 검색어로 지정한 후, 두 번째 속성의 단어들을 차례로 기입하며 진행하였다. 제목과 본문에 위의 검색어를 포함하고 있는 기사 중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 동안 보도된 불매운동 건수는 총 52건이었으며, 최종적으로 추출된 기사는 총 158건이다.

3. 연구방법 및 분석기준

내용분석법은 개인과 사회의 일반적인 의사소통 기록물(신문, 책, 잡지, TV 등)과 비언어적 표현인 회화 등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질적인 내용을 양적자료로 전환하는 방법을 뜻한다(이상호, 2007). 본 연구에서는 수량화 된 자료를 분석하는 양적분석(박영선·강경아, 2020)을 진행하였으며, 기준에 맞춰 자료를 분석한 뒤 이에 대한 기술통계와 교차분석을 진행하였다.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 분석기준은 분석대상인 언론에 보도된 불매운

동을 범주화하여 예비분석준거를 추출하였으며,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분석기준을 보완한 후 최종적으로 공동연구자 간 협의를 거쳐 수정 및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도출하였다. 최종 분석기준은 <표 1>과 같다.

〈표 1〉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 분석기준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 분석기준	세부내용
성인지감수성 논란 원인	성차별, 성폭력, 성별고정관념
불매운동 발생원인의 유형	기업내부논란, 콘텐츠 내용, 모델의 특성, 광고
불매운동의 단체가입 여부	소비자, 단체가입
불매운동 실행단계별 양태	불매 검토시사, 불매결의 및 참여촉구, 불매운동 조직, 불매운동 실행
불매운동 실행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불매운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식	사퇴 및 내부징계, 후속조치, 사과문 게재, 조치 없음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 분석기준은 성인지감수성을 성차별, 성폭력, 양성평등의식으로 분류한 연구(곽연희, 정원철, 2018)를 참고하였다. 성차별은 남성중심의 성역할에 대한 문제의식을, 성폭력은 성폭력 문제인식 결여, 위계 활용, 성희롱 및 성추행 등의 범죄를 포함하며, 양성평등의식은 남성과 여성 모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한다고 믿는 정도로 정의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들 중 여성비하와 연관된 사건들도 포함함으로써 ‘성별고정관념’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불매운동 발생원인 유형은 총 4가지로 분류하였으며, 기업내부논란은 직원, 사장, 이사진 등 직장 내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포함하며, 콘텐츠의 경우 콘텐츠 자체의 문제점을 의미한다. 모델의 특성은 성차별 발언 등의 논란과 연관된 모델을 섭외한 경우를 포함하며, 광고는 영상광고, SNS광고 등의 마케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포함하였다. 불매운동의 단체가입 여부는 운동의 활발성을 참여단체 수로 평가한 이득연(1996)의 연구를 참고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단체가입 사례가 적어 소비자 자체적으로 진행된 불매운동과 단체가입이 존재했던 불매운동으로 분류하였다.²⁾ 불매운동의 실행단계 별 양태 또한 이득연(1996)의 연구를 통해 불매 검토시사, 불매결의 및 참여촉구, 불매운동 조직, 불매운동 실행 순으로 분류하였다. ‘불매 검토시사’는 소비자가 불매운동 전개를 고려할 것이라는 언명만으로 경

2) 연구자료(언론보도 기사)의 한계점으로 인해, 단체가입의 경우 불매운동을 주도한 것인지 혹은 주도되는 과정에서 참여하게 된 것인지 불분명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단체의 가입이 존재하였던 불매운동들을 모두 단체가입이 존재하였다고 해석하였다.

고하는 단계로, 문제 지적을 통해 논란이 일어났지만 불매운동 전에 조치가 취해진 사례들을 의미한다. ‘불매운동 결의 및 참여촉구’는 다른 소비자들에게 불매운동 참여를 촉구하는 단계로 소비자들이 합동하여 사과요구, 민원 제기 등의 활동이 진행되었지만 지속적인 불매운동으로 이어지지 않은 사례를 포함한다. ‘불매운동 조직’은 불매운동 실행을 위해 조직화를 꾀하는 단계로, 불매운동이 실행되지 않았지만 시민단체의 개입 하에 불매운동을 계획 중이라고 밝힌 사례를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불매운동 실행’은 시위 등의 행위를 통해 실천이 이뤄지는 단계로 기사에서 구체적인 실행내용과 결과가 언급된 사례를 포함하였다.

불매운동 실행단계는 총 네 단계 순서대로 진행되는 만큼, 범주가 겹치거나 중복되는 경우 가장 후순위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두 개 이상의 유형에 중복하여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또한 기사 보도만을 통해 분석하는 만큼 불매운동 실행여부는 기사 내용 중 ‘탈퇴 및 해지 인증글’ ‘릴레이 탈퇴운동’ 등 불매운동의 방식이나 ‘공연 및 개봉 취소’,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 공지’ 등의 불매운동 결과가 구체적으로 설명된 경우, 혹은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음이 서술된 경우만을 해당시켰다.

불매운동 실행방식과 불매운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식은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적 없는 분석기준이지만,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의 범주화 과정을 통해 도출되었다. 이에 따라 불매운동의 실행방식은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으로 구분하였으며, 불매운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식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구분하여 사퇴 및 내부징계, 후속조치, 사과문 게재, 조치 없음으로 분류하였다. 사과문 게재는 사건에 대한 기업의 입장발표도 포함되며, 사과문 게재와 후속조치를 모두 실행하는 경우처럼 대응방식에 두 개 이상의 유형이 포함될 시 후순위 대응 방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류하여 한 기업이 두 개 이상의 유형에 중복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4. 연구절차

첫째, 연도별 발생한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과 이에 대한 7개의 일간지 별 기사 빈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총 158건의 기사에 대하여 관련 불매운동이 언론에 처음으로 노출된 연도, 관련된 브랜드 및 콘텐츠의 이름, 불매운동의 구체적인 내용과 원인 및 대상의 상품유형, 불매운동에 관한 단체의 개입 여부, 불매운동의 실행 단계별 양태, 불매운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식을 살

펴보고자 하며, 이를 연도 별 표로 정리하여 국내 성인지갑수성 관련 불매운동의 흐름을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불매운동의 흐름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성인지갑수성 관련 불매운동들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양적내용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셋째, 각 특성별 발생한 불매운동 건수와 7개 일간지를 통해 보도된 기사 개수를 비교한 뒤, 성인지갑수성 관련 불매운동 중 보도 빈도가 높아 이슈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불매운동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SPSS 25를 활용하여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을 진행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넷째, 성인지갑수성 관련 불매운동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불매운동 발생 전 후의 기업 현황 차이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시스템)과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통해 불매운동 전 후의 수익과 가맹점 현황 차이를 분석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영업이익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IV. 연구 결과

1. 일간지 별 성인지갑수성 관련 불매운동 보도 비교분석

2015년부터 2020년까지 7개의 언론사에 게재된 성인지갑수성 관련 불매운동은 총 52건으로, 연평균 8.7건으로 나타났다(<표 2>). 연도 별 불매운동 현황은 2015년에 2건이었던 것이 2016년을 기점으로 급증하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12건을 유지하였다. 2020년의 경우 6건이었는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상황 위축에 따른 영향력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렇듯 언론에 보도된 불매운동을 통해 성인지갑수성 관련 논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2016년 여성을 대상으로 발생한 혐오범죄 이후 사회전반의 성인지갑수성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이슈의 부각과 불매운동이 활성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연도 별 기사 보도 량 또한 불매운동 현황과 동일하게 2016년을 기점으로 급증하며, 2018년에는 하락세를 보이지만 2019년에는 48개로 불매운동 당 평균적으로 4개의 기사가 보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의 경우 성폭력 고발 운동인 미투운동이 진행되었던 시점으로,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 대신 성폭력 가해자를 향한 보이콧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만큼 소비자 불매운동

관련 보도량이 감소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표 2〉 연도 별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 보도 건 수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기사 건 수	10	18	39	29	48	14	158
기사보도된 불매운동 수	2	8	12	12	12	6	52
기사 건 수 / 불매운동 수	5	2.4	3.3	2.4	4	2.3	3.0

총 52건의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에 대한 7개 언론사의 기사 보도 상황에 대하여, 일련의 사례들이 발생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논란이 언론에 보도된 기간, 불매운동 촉발 배경과 특성을 정리하였다(〈표 3〉). 수집된 기사 자료는 총 158개로, 각각 연도, 브랜드 명,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 촉발 배경, 성인지감수성 논란 원인, 불매운동 발생원인, 단체가입 여부, 불매운동의 실행단계, 실행방식, 기업의 대응방식, 보도 기간 순으로 정리하였다.

각 항목 별 수치에 대한 분석은 〈표 4〉부터 자세하게 논의하고자 하며,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이 발생하게 된 논란 및 이슈는 〈표 3〉에 설명되어 있다. 각 연도 별로 발생한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이슈를 살펴보면, 2020년 국내에서 발생한 ‘n번방’ 사건에 대한 텔레그램 측의 미진한 수사협조에 대응하여 소비자들이 동일한 날짜와 시간대를 지정하여 함께 집단탈퇴를 통해 본사에 압박을 가한 불매운동, 2019년 11살 아동모델을 대상으로 성 상품화 광고를 게재하여 논란이 된 베스킨라빈스, 2018년 미투운동(#MeToo: 나도 말한다; 성폭력 고발 운동)을 통해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배우가 출연하여 조기하차 및 대본 수정 등의 방안을 마련하며 조치를 취해야 했던 tvN의 〈크로스〉가 있다. 2017년에는 사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한샘과 호식이두마리치킨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이 촉발되었으며, 2016년에는 페미니즘을 지지하였다는 이유로 성우를 부당 해고한 넥슨을 대상으로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마지막으로, 2015년에는 JTBC의 프로그램에 출연한 개그맨이 여성비하 막말을 쏟아낸 과거로 인해 출연정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가 이어지기도 하였으며, 해당 프로그램의 협찬브랜드에 대한 불매운동까지 발생하였다.

〈표 3〉 일간지 별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 기사 보도 분석

연도	상품/프로그램/서비스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 촉발 배경	논란원인	원인	단체개입	실행 단계	실행 방식	대응방식	보도 기간
2020	매일유업	여성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개그맨 유성문의 마케팅 이벤트 진행	성별 고정관념	모델	x	불매결의 및 참여촉구	온라인	사과문 게재	12.15
	MBC <나 혼자 산다>	여성혐오 및 장애인 비하 등의 논란을 빚은 기안84 출연	성별 고정관념	모델	x	불매결의 및 참여촉구	온라인	조치 없음	09.21
	넷플릭스 <큐티스>	미성년자인 출연자들을 비추는 카메라 앵글이 아동용 성 상품화 하고 있는 영화 상영	성별 고정관념	콘텐츠	x	불매결의 및 참여촉구	온라인	조치 없음	09.24
	SBS TV <편의점 생방송>	드라마 내에서 미성년자 성적 대상화 및 여성혐오 등으로 방송 심의 요구	성별 고정관념	콘텐츠 내용	x	불매결의 및 참여촉구	온라인	조치 없음	06.22 ~ 07.11
	오래온	20대 여성의 직장 내(익산공장) 괴롭힘 및 성추행으로 인한 자살 범죄에 이용된 SNS의 'n번방' 사건에 대한 미진한 수사협조	성폭력	기업내부 논란	전남구례 시민단체	불매운동 조직	온·오프라인	사퇴 및 내부 징계	06.02 ~ 06.03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대한 미진한 수사협조	성폭력	기업내부 논란	x	불매운동 실행	온라인	조치 없음	03.23 ~ 03.29
	이마트	가성전문매장 매니저들의 단체 키토티에서 여성고객 대상 성희롱 및 고액정보 공유	성폭력	기업내부 논란	대구 지역 시민연대	불매운동 조직	오프라인	사퇴 및 내부 징계	09.03 ~ 09.04
	한국 콜마	유흥주점에서 장부 비관 및 여성비하 연행이 담긴 유튜브 영상 시청	성별 고정관념	기업내부 논란	x	불매운동 실행	온라인	사퇴 및 내부 징계	08.11 ~ 08.12
	마리몬드	'미투' 사건 대응 전략' 문건 논란	성차별	기업내부 논란	x	불매 검토시사	온라인	사퇴 및 내부 징계	08.05
	알라딘	페미니즘 마케팅을 하였지만, 낯은 여성 관리자 비중	성차별	기업내부 논란	x	불매운동 실행	온라인	사과문 게재	07.24
2019	베스킨라빈스	11월 아동모델을 대상으로 성 상품화 광고	성별 고정관념	광고	x	불매결의 및 참여촉구	온라인	후속조치	06.30 ~ 07.01
	아반뮤직 페스티벌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에 저문을 받은 가수의 출연	성폭력	모델특성	x	불매운동 실행	온라인	후속조치	05.17 ~ 06.11
	KT	여성비하 방송, 데이트 폭력 논란 등의 이슈와 연관된 크리에이터 '모델' 모델 섭외	성별 고정관념	모델특성	x	불매운동 실행	온라인	후속조치	05.13 ~ 05.17
	유일유	게임 '이르카(12세 이용가)'의 홍보모델로 AV배우 시미켄 섭외	성별 고정관념	모델특성	x	불매결의 및 참여촉구	온라인	조치 없음	05.16 ~ 05.17
	게임즈	장예인 비하 및 여성혐오 논란의 <복합왕> 임신한 10대 청소년을 성애화한 <탄뎀>	성별 고정관념	콘텐츠 내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불매 검토시사	온라인	사과문 게재	05.10 ~ 05.18
	웨이브	아시아 여성 비하 광고	성별 고정관념	광고	x	불매운동 실행	온라인	후속조치	04.04 ~ 04.16
	호른바흐		성별 고정관념						

연도	상품/프로그램/서비스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 촉발 배경	노란원인	원인	단체개입	실행 단계	실행 방식	대응방식	보도 기간
2018	블래티엄 크래프트	수채매주 공장 숙성조에 여성연예인 이름을 붙이고 대성화하여 성희롱	성별 고정관념	기업내부 논란	x	불매운동 실행	온라인	사과문 게재	04.04 ~ 04.09
	아오리 라벨	배달원 사태의 가해자인 가수 송리가 대표였던 프랜차이즈 업체 소속 래퍼 신이의 부적절한 공연 태도 및 페미니스트는 정신병' 발언 논란	성폭력	기업내부 논란	x	불매운동 실행	온·오프라인	사퇴 및 내부 징계	03.11 ~ 03.25
	넷플릭스 <YG 진자>	자제 코텐츠 <YG 진자> 속 성희롱 및 성범죄 회화화	성별 고정관념	모델특성	x	불매결의의 및 참여촉구	온라인	사과문 게재	12.02 ~ 12.03
	SK 텔레콤	요금제 홍보 광고 중 성차별적 문구 사용	성차별	광고	x	불매 결의시사	온라인	후속조치	09.04 ~ 09.07
	카카오	데이트 폭력 논란의 크리에이터 포럼 관련 카카오톡 이모티콘 판매	성별 고정관념	모델특성	x	불매결의의 및 참여촉구	온라인	사과문 게재	08.17
	영화 레옹 재개봉	미성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소아성애적 내용 포함	성별 고정관념	콘텐츠 내용	x	불매운동 실행	온라인	후속조치	07.09 ~ 07.18
	위드컵	생리컵 광고에 여성혐오 용어로 성행한 'X전개'를 연상 시키는 친구 이미지 삽입	성별 고정관념	광고	x	불매운동 실행	온라인	후속조치	06.25
	이디야	성차별 혐의전회 참가 종업원 부당해고	성차별	기업	x	불매운동 실행	온라인	사퇴 및 내부 징계	06.13 ~ 06.14
	기린음료	일본 밀크티 '오후의 홍차' 홍보 일러스트레이션의 여성비하	성별 고정관념	광고	x	불매운동 실행	온라인	후속조치	05.01
	사넬	수석 디자이너 칼 라가펠트의 '미투 운동은 진저리가 난다'는 연행	성차별	모델특성	x	불매결의의 및 참여촉구	온라인	조치 없음	04.17 ~ 04.22
	배스킨라빈스	'미투운동' 피해자의 고발 내용 마케팅에 활용	성별 고정관념	광고	x	불매운동 실행	온라인	사과문 게재	03.09 ~ 03.13
	tvN <크로스>	배우 조재현의 성범죄 가해고발(미투운동)로 인해 조기하차 및 대본 수정 방안 마련	성폭력	모델특성	x	불매결의의 및 참여촉구	온·오프라인	후속조치	02.26
	롯데푸드	여성차별 문제를 담고 있는 소설을 패러디하며 페미니즘 조롱 논란	성별 고정관념	광고	x	불매결의의 및 참여촉구	온라인	후속조치	01.15
	이웃백	직원 채용 합격자에 대한 채용 취소 통보 페미니스트라는 사유로 인한 사상감증	성차별	기업내부 논란	x	불매운동 실행	온라인	사과문 게재	12.19
2017	한샘	새내 성폭력 사건 발생 및 처리과정에서의 2차 가해	성폭력	기업내부 논란	x	불매운동 실행	온라인	사과문 게재	11.04 ~ 11.06
	제주주주	'성매매 은어'를 연상시키는 광고 문구 사용	성별 고정관념	광고	제주여성 인권연대	불매결의의 및 참여촉구	온라인	사과문 게재	11.03 ~ 11.07
	영화 VIP (박훈정)	여성 등장인물을 무기력하고 잔인하게 살해당하는 모습으로만 묘사	성별 고정관념	콘텐츠 내용	x	불매운동 실행	온라인	후속조치	08.25 ~ 09.04

연도	상품/프로그램/서비스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 촉발 배경	노란원인	원인	단체가입	실행 단계	실행 방식	대응방식	보도 기간
2016	이우디	중국 온라인과 극장 등에서 여성을 종교차로 비유하는 광고 상영	성별 고정관념	광고	x	불매결의 및 참여촉구	온라인	후속조치	07.19 ~ 07.20
	호식이 두마리치킨	회장의 직원 강제 추행	성폭력	기업내부 논란	x	불매운동 실행	온라인	사퇴 및 내부 징계	06.15 ~ 06.23
	영화 불한당 (변성환)	감독의 SNS 막달 논란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 발언 포함)	성별 고정관념	모델특성	x	불매운동 실행	온라인	사과문 게재	05.19
	현대자동차 (쏘나타)	'누라이즈 쏘나타' 동영상 광고 중 성차별적 시선이 담긴 광고문구 사용	성차별	광고	x	불매 검토시사	온라인	후속조치	04.13
	스타벅스 코리아	진상 고객을 모두 여성 소비자로 묘사	성별 고정관념	광고	x	불매운동 실행	온라인	사과문 게재	04.07 ~ 04.14
	아모레퍼시픽 (에뛰드하우스)	성차별 발언을 한 방송인 전현무를 모델로 섬의 과거 여성 및 소비자 혐오 발언을 한 개그맨 유세운을 모델로 섬외	성별 고정관념	모델특성	x	불매운동 실행	온라인	후속조치	04.02 ~ 04.14
	넷플릭스 <마블 아이언 피스트>	여성정장과 하이힐은 폐하고 부러운 복장, 바지는 남성을 구속하는 복식으로 묘사	성별 고정관념	모델특성	x	불매 검토시사	온라인	후속조치	04.02 ~ 04.14
	유니클로	과거 여성 및 소비자 혐오 발언을 한 개그맨 유두라는 여성비하 문구 상영	성차별	광고	x	불매 검토시사	온라인	조치 없음	04.02
	미미박스	홍보 광고에 '늑대들이 좋아하는 핑크빛 유두'라는 여성비하 문구 상영	성별 고정관념	광고	x	불매운동 실행	온라인	후속조치	11.11
	문화과자성사	소속된 작가들의 성폭력 논란 발생	성폭력	모델특성	x	불매운동 실행	온라인	후속조치	11.07
	자주 (JAJU)	이는 게 없는 여자, 세상물정 모르는 여자 등 광고를 통해 여성에 대한 성차별적 묘사	성별 고정관념	광고	x	불매 검토시사	온라인	후속조치	09.21
	넥스	성우의 페미니즘 자리에 대한 사상검증 및 부당하고 편매되는 청소년용품(의류, 문구, 잡화 등) 속 성차별 문구 논란(여성외모, 성별고정관념 등)	성차별	기업	x	불매운동 실행	온라인	사과문 게재	07.19 ~ 07.20
	반8	여성 직원이 결혼하는 경우 퇴사 강요 등 60년간 이어져 온 성차별적 조직문화	성차별	콘텐츠 내용	광주지역 시민단체	불매운동 조직	오프라인	조치 없음	07.05
	금복주	자녀(아기)와 아내를 험박한 일화를 방송에서 나눈 아내로서 김복주 모델 섬외	성별 고정관념	기업	대구 경북 여성단체	불매운동 실행	오프라인	사과문 게재	03.28 ~ 08.25
	토니모리	과거 여성혐오를 개그 소재로 사용한 개그맨 유상무 모델 섬외	성별 고정관념	모델특성	x	불매 검토시사	온라인	후속조치	03.24
	MAC	성범죄 미화 표지, 팔리핀 상매매 리포 작성	성별 고정관념	모델특성	x	불매운동 실행	온라인	후속조치	02.24 ~ 03.24
2015	맥심 코리아	과거 여성혐오를 개그 소재로 사용한 개그맨 유상무 모델 섬외	성별 고정관념	콘텐츠 내용	x	불매결의 및 참여촉구	온라인	후속조치	09.03 ~ 09.25
	JTBC <미녀사냥>	여성비하 발언한 개그맨 장동민의 출연	성별 고정관념	모델특성	x	불매운동 실행	온·오프라인	사과문 게재	04.25 ~ 05.28

일간지 별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 기사 보도 수는 <표 4>와 같다. 총 158개의 기사 중, 조선일보(14개)와 동아일보(12개)는 다른 일간지의 보도 수가 각 25개 이상인 것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보도량을 보였다. 이는 불매운동 관련 사건만을 분석한 만큼, 일간지의 성향과 성인지감수성의 높낮음을 동일시하기엔 한계가 있다.

연도별 보도 개수의 경우 보도량 평균이 점차 증가하는데, 이를 통해 성인지감수성 관련 이슈에 대한 사회적 주목도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2018년은 평균 4.1개로 감소하였는데, 미투운동(성폭력 고발 운동)이 발생한 시기인 만큼 대체적으로 성폭력을 저지른 인물(가해자)에 대한 보이콧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던 상황이었고, 따라서 불매운동이라는 소비자운동으로서의 행동과 그에 대한 보도는 다소 약했던 것으로 사료된다.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일상이 마비됨으로써 소비자들의 불매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표 4> 일간지 별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 기사 보도 수

일간지	조선 일보	중앙 일보	동아 일보	한겨레	한국 일보	국민 일보	경향 신문	합계	평균
보도 수	14	26	12	25	27	29	25	158	22.6
2020	2	1	1	2	2	3	3	14	2.0
2019	5	9	5	9	8	7	5	48	6.9
2018	3	4	2	2	6	8	4	29	4.1
2017	2	9	2	7	4	6	9	39	5.6
2016	1	1	0	5	5	3	3	18	2.6
2015	1	2	2	0	2	2	1	10	1.4

2.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 현황

다음은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을 특성별로 분류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각 특성들의 경우, 연도에 따른 뚜렷한 추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1) 불매운동의 특성별 현황

불매운동 별 성인지감수성 논란 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성별 고정관념으로 인해 발생한 불매운동은 총 61.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월례초회에서 여성비하 언행이 담긴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여 논란이

된 한국 콜마, 진상 고객을 모두 여성 소비자로 묘사하여 여성혐오적 표현이라 지적 받은 스타벅스 코리아 등이 있다. 성차별로 인해 발생한 불매운동은 총 21.2%로, 고용노동부를 통해 여성 관리자 비중이 낮다는 문제점이 드러난 알라딘, 여성 직원이 결혼하는 경우 퇴사를 강요하는 등 성차별적 조직문화로 인해 논란이 된 금복주 등이 있다. 성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불매운동은 총 17.3%로, 'n번방' 사건에 대한 미진한 협조를 보여 집단탈퇴 등의 불매운동이 발생한 텔레그램, 사내 성폭력 사건 발생과 이에 대한 처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한샘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사회적으로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성인지감수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매운동의 원인이 되는 여성에 대한 비하 등의 혐오 행위는 꾸준히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각 유형 별 불매운동에 대한 보도량의 경우 성폭력 문제에 대한 기사는 평균 4개를 기록하였는데, 성차별과 성별고정관념 문제보다 성폭력에 해당하는 문제들이 더욱 이슈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표 5〉 불매운동 별 성인지감수성 논란 원인

유형	성차별	성폭력	성별고정관념	계
(A) 건 수 (%)	11 (21.2)	9 (17.3)	32 (61.5)	52 (100.0)
(B) 보도건 수 (%)	26 (16.5)	36 (22.8)	96 (60.8)	158 (100.0)
(B) / (A)	2.4	4.0	3.0	3.0

〈표 6〉은 불매운동의 발생 원인을 총 4가지로 분류한 결과이다. 기업 내부 논란의 경우 성차별적 조직문화로 인해 논란이 된 금복주, 콘텐츠 내용의 경우 장애인과 여성에 대한 비하가 담긴 콘텐츠를 연재하여 문제 지적을 받은 네이버 웹툰이 있다. 모델의 특성으로는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출연진에 대해 관객들의 출연취소 및 환불 요구 등이 발생한 어반뮤직페스티벌, 데이트폭력 논란의 크리에이터를 광고 모델로 섭외하여 비난을 받은 KT가 있으며, 광고의 경우 11살 아동모델을 대상으로 성 상품화 광고를 제작하여 논란이 된 배스킨라빈스가 있다. 이 중 콘텐츠 자체의 문제는 15.4%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광고, 기업의 내부문제로 인해 발생한 불매운동은 각 26.9%를 차지하였다. 모델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한 불매운동은 30.8%로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였다.

불매운동 발생원인별 성인지감수성 논란 원인을 교차 분석한 결과, 각 항목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1$). 성차별과 성폭력 문제의 경우 대부분 기업

내부문제와 연관되는 반면, 광고제작과 모델섭외는 성별고정관념 이슈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성비하 행위에 대한 문제의식이 낮음을 나타내며, 광고제작과 모델섭외 과정에서 더 높은 성인지감수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업의 경우 평등한 내부문화 조성을 위해 성인지감수성 관련 교육이 시행되어야 할 것임을 제언할 수 있다.

〈표 6〉 불매운동 별 발생원인 유형

유형		기업내부 논란	콘텐츠 내용	모델의 특성	광고	계
(A) 건 수 (%)		14 (26.9)	8 (15.4)	16 (30.8)	14 (26.9)	52 (100.0)
(B) 보도건 수 (%)		58 (36.7)	25 (15.8)	39 (24.7)	36 (22.8)	158 (100.0)
(B) / (A)		4.1	3.1	2.4	2.6	3.0
성인지감수성 논란 원인 별 불매운동 수 (보도건 수)	성차별	6 (19)	1 (1)	1 (2)	3 (4)	11 (26)
	성폭력	6 (30)	0 (0)	3 (6)	0 (0)	9 (36)
	성별 고정관념	2 (9)	7 (24)	12 (31)	11 (32)	32 (96)

* $\chi^2 = 21.275$, $p < .01$

2) 불매운동의 실행과 대응

불매운동에 관한 단체개입 여부는 다음의 〈표 7〉과 같다. 총 52건의 불매운동 중 단체의 직접적 개입이 있었던 운동은 총 6건(11.5%)에 불과하며 시민단체와 여성단체의 개입으로 분류된다. 시민단체 개입의 경우 익산공장 직원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오리온에 진상규명을 요청한 전남구례시민단체, 반8의 성차별적 문구가 담긴 상품의 문제를 지적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판매를 제한하는 진정서를 제출한 광주지역시민단체 4곳 등이 있다. 여성단체 개입의 경우 마케팅에 성매매 은어를 사용한 ㈜제주소주에 대해 논평을 통해 개선을 요구한 제주여성인권연대, 기혼 여성 재직자에게 퇴사를 강요하고 전보인사를 시킨 ㈜금복주에 항의하며 불매운동에 나선 대구지역여성단체들이 존재한다. 시민단체 및 여성단체가 개입한 총 6건의 불매운동의 경우 뚜렷한 공통점은 없었다.

이 외의 불매운동 총 46건(88.5%)은 단체의 개입 없이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로 실행되었다. 소비자불매운동의 현황을 살펴본 연구(이득연, 1996)에 의하면 소비자불매운동에 참여하는 단체의 수를 통해 불매운동의 활발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고 하였지만, 2020년까지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불매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단체 개입 대신 개인 소비자들을 중

심으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체 가입 여부에 따른 보도 량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불매운동에 관한 단체가입 여부와 불매운동 실행단계 별 양태를 교차 분석한 결과, 각 항목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001$). 불매운동 조직 단계는 단체가입 여부가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이 외의 모든 단계에서는 단체가입 없이 소비자가 단독적으로 불매운동을 실행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불매운동 실행 단계에선 소비자의 단독 실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통한 불매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단체의 조직화 대신 개인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유추해 볼 수 있다.

〈표 7〉 성인지각수성 관련 불매운동에 관한 단체가입 여부

		소비자	단체가입	계
(A) 건 수 (%)		46 (88.5)	6 (11.5)	52 (100.0)
(B) 보도건 수 (%)		136 (86.1)	22 (13.9)	158 (100.0)
불매운동 실행단계 별 양태 (보도건 수)	불매검토 시사	7 (12)	1 (4)	8 (16)
	불매결의 및 참여촉구	13 (39)	1 (4)	14 (43)
	불매운동 조직	0 (0)	3 (8)	3 (8)
	불매운동 실행	26 (85)	1 (6)	27 (91)

* $\chi^2 = 24.896$, $p<.001$

불매운동의 실행단계별 양태는 소비자불매운동 현황을 분석한 이득연(1996)의 연구에서 구분 한 불매운동 단계를 참고하였다(〈표 8〉).

첫 단계인 불매 검토시사(15.4%)의 경우 여성혐오 논란 연예인을 모델로 섭외하여 광고를 게재하였다 소비자들의 비판이 지속되자 3시간 만에 광고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발표한 넷플릭스가 있다. 다음 단계인 불매운동 결의 및 참여촉구(27.2%)는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SBS TV 〈편의점 셋별이〉의 경우 미성년자를 성적대상화하는 등 콘텐츠의 선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콘텐츠 폐지를 요청하는 글이 시청자 게시판에 100여 개 올라왔으며 방송통신위원회에는 6천여 개의 민원이 접수되며 집단항의를 독려하는 움직임이 발생하였다. 불매운동을 실행하기 전 조직을 구축하는 단계(5.8%)는 총 3건으로 실제 시민단체가 개입한 사건들만 해당되며, 반8의 성차별 제품에 대한 항의로 진정서를 제출한 광주지역 시민단체 등이 있다. 마지막 단계인 불매운동 실행(51.9%)의 경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텔레그램을 대상으로 진행 된 가입 탈퇴 총공격, ‘#보검_OUT’ ‘#케이티_불매’ 등의 해시태그를 통해

펼쳐진 케이티 불매운동이 있다. JTBC <마녀사냥>의 경우 방송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비롯하여 프로그램의 협찬 기업에 대한 2차 불매운동까지 발생하였다.

앞서 언급된 구체적 사건들을 통해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의 경우 불매운동 실행 단계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로 온라인에서 실행된다는 특성 상 공론화에 해당하는 불매 검토시사 단계와 불매결의 및 참여촉구 단계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또한 직접적인 조직화를 구축하지 않아도 해시태그운동 등을 통해 집단적 불매운동 실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매운동 조직 단계의 비율은 앞으로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불매운동의 실행 단계 별 양태와 성인지감수성 논란 원인을 교차 분석한 결과, 각 항목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5$). 성폭력 사건의 경우 대부분 직접적인 불매운동 실행이 이뤄져 소비자들은 성차별과 성별고정관념 이슈 보다 성폭력 사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의 실행 단계별 양태

		불매 검토시사	불매결의 및 참여촉구	불매운동 조직	불매운동 실행	계
(A) 건 수 (%)		8 (15.4)	14 (26.9)	3 (5.8)	27 (51.9)	52 (100.0)
(B) 보도건 수 (%)		16 (10.1)	43 (27.2)	8 (5.1)	91 (57.6)	158 (100.0)
성인지감수성 논란 원인 별 불매운동 수 (보도건 수)	성차별	4 (8)	1 (2)	1 (1)	5 (15)	11 (26)
	성폭력	0 (0)	1 (1)	2 (7)	6 (28)	9 (36)
	성별 고정관념	4 (8)	12 (40)	0 (0)	16 (48)	32 (96)

* $\chi^2 = 14.937$, $p<.05$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의 실행방식을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으로 분류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대부분 온라인에서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며, 온라인을 통한 참여공간은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청와대 국민청원, 고객센터, 시청자 게시판 등이며, 참여 방법으로는 민원접수, 항의글 작성, 해시태그를 활용한 게시글 업로드, 기업 SNS의 게시글에 댓글을 통한 사과 요청, 시민단체를 통한 보도자료 발표 등이 있다. 오프라인을 통한 참여방식은 1인 시위, 불매운동 전단지 및 스티커 배포, 기자회견 진행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 제출 등의 방법을 통해 진행되었다.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 실행 방식과 성인지감수성 논란 원인을 교차 분석한 결과, 각 항목 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001$). 이를 통해 성폭력, 성차별, 성별고정관념 순으로 온라인 불매운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성별고정

관념 관련 논란이 발생한 경우 주로 온라인을 기반으로 문제제기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서 설명하였듯 언론과 소비자는 성차별과 성별고정관념 문제보다 성폭력 사건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한편, 소비자의 성인지감수성 증가와 온라인 불매운동 참여의 편의성을 이유로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이슈인 성별고정관념 관련 논란 또한 온라인을 통한 문제제기가 늘어나고 있음을 유추해볼 수 있다.

〈표 9〉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 실행 방식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 동시진행	계
(A) 건 수 (%)		45 (86.5)	3 (5.8)	4 (7.7)	52 (100.0)
(B) 보도건 수 (%)		134 (84.8)	11 (7.0)	13 (8.2)	158 (100.0)
성인지감수성 논란 원인 별 불매운동 수 (보도건 수)	성차별	9 (19)	2 (7)	0 (0)	11 (26)
	성폭력	5 (23)	1 (4)	3 (9)	9 (36)
	성별 고정관념	31 (92)	0 (0)	1 (4)	32 (96)

* $\chi^2 = 16.057$, $p < .001$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식은 〈표 10〉과 같다. 사퇴 및 내부징계(13.5%)는 대부분 사내 성폭력 사건과 연관되었으며, 내부징계의 경우 이디야는 종업원 부당해고를 인정한 후 가맹점주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내용을 제시하며 재발방지 계획을 발표하였다. 후속조치(40.4%)는 문제되는 광고 수정 및 삭제, 논란 된 인물과의 계약 해지, 문제되는 콘텐츠 폐기 등 직접적 조치를 취한 대응들이 포함되며, 광고 게재 후 문제지적을 받자 당일 오후 광고를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린 현대자동차(쏘나타), 광고 게재 3시간 만에 삭제조치를 취하고 사과문을 발표한 넷플릭스가 있다. 미투운동을 통해 고발된 성폭력 논란 작가들이 소속되어 있는 문학과지성사 또한 출판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책들을 절판처리하고 성폭력 가해 작가들과의 계약을 중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과문 혹은 입장문 게재(28.8%) 사례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례(17.3%)는 대부분 현재 진행 중인 콘텐츠로서, 추후 변화 가능성이 존재하거나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해당되었다. 불매운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식과 성인지감수성 논란 원인을 교차 분석한 결과, 각 항목 간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표 10〉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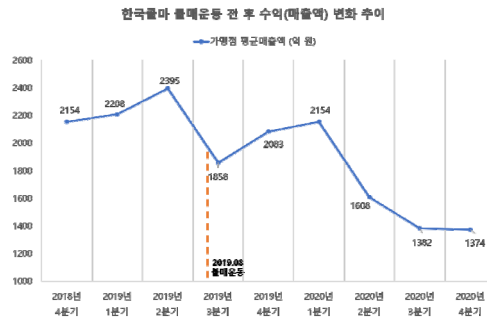
		조치 없음	사과문 및 입장문 게재	후속 조치	사퇴 및 내부징계	계
(A) 건 수 (%)		9 (17.3)	15 (28.8)	21 (40.4)	7 (13.5)	52 (100.0)
(B) 보도건 수 (%)		17 (10.8)	47 (29.7)	61 (38.6)	33 (20.9)	158 (100.0)
(B) / (A)		2.1	3.3	2.9	4.7	3.0
성인지감수성 논란 원인 별 불매운동 수 (보도건 수)	성차별	3 (4)	4 (12)	2 (3)	2 (7)	11 (26)
	성폭력	1 (4)	1 (7)	3 (6)	4 (19)	9 (36)
	성별 고정관념	5 (9)	10 (28)	16 (52)	1 (7)	32 (96)

* $\chi^2 = 14.502$, $p > .05$

3.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 대상 기업의 매출 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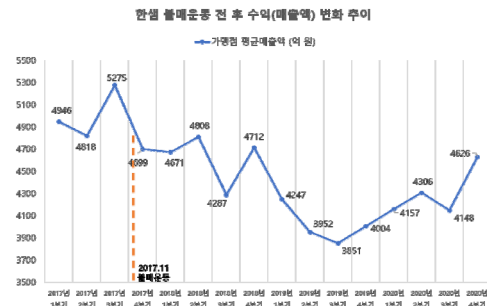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불매운동 전 후의 기업매출 변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대상은 7개 일간지 모두에서 다뤄졌으며 ‘불매운동 실행’ 단계까지 진행된 경우로, 2019년 여성비하 영상이 퍼지며 논란이 된 한국콜마와 2017년 사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한샘, 회장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호식이두마리치킨이다. 상장기업인 한국콜마와 한샘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 시스템; <http://dart.fss.or.kr/>)을 통해 불매운동 전 후의 수익(매출액)자료를 비교하였고, 개인사업자인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을 통해 불매운동 전 후의 가맹점 수와 가맹점 평균 매출액 변화 추이를 분석하였다.

2019년 8월 불매운동이 발생한 한국콜마의 경우 불매운동 발생 전인 2019년 2분기 수익(2,395억 원)과 대비하였을 때, 2019년 3분기 수익은 1,858억 원으로 22.5% 감소하였으며 2019년 4분기와 2020년 1분기에는 2,000억 원을 넘기며 다소 회복되었으나, 불매운동 이전인 2019년 2분기 수입에 비해 10%이상 적었다. 즉, 불매운동 발생 직후인 2019년 3분기 대비 상승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기존 수익까지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약 9개월 만에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후 2020년 2분기부터는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지만, 이는 코로나19 이후인 만큼 불매운동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다(그림 1).



[그림 1] 한국콜마 불매운동 전·후 매출액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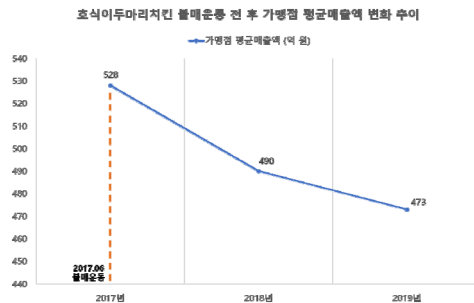
2017년 11월 불매운동이 발생한 한샘의 경우 불매운동 발생 전인 2017년 3분기 수익(5,275억 원)과 대비하였을 때, 2017년 4분기 수익은 4,699억 원으로 11% 감소하였다. 2018년 1분기 또한 4,671억 원으로 계속 감소하였지만, 이후 매출액 추세는 일관성을 보이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직후부터는 상승세를 보이며 기존 매출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돌아오고 있지만, 모든 추이는 불매운동의 장기화 때문이라 단정 짓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한국콜마와 한샘의 사례 모두, 불매운동 직후 6개월 동안은 기업들이 실제 매출액에 타격을 입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



[그림 2] 한샘 불매운동 전·후 매출액 변화 추이

2017년 6월 불매운동이 일어난 호식이두마리치킨의 경우, 불매운동이 일어난 2017년에는 가맹점 수 935개(신규개점 28개; 계약종료 26개; 계약해지 53개; 명의변경 110개)로 시작하였지만 연말에는 총 884개로 감소하였다. 매출액은 2017년 528억 원을 기록하였던 반면, 2018년에는 490억 원, 가맹점 수는 884개(신규개점 19개; 계약종료 26개; 계약해지 51개; 명의변경 96개),

2019년에는 더욱 하락세를 보이며 매출액 473억 원, 가맹점 수 826개(신규 개점 37개; 계약종료 10개; 계약해지 56개; 명의변경 94개)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연말에 기록된 총 가맹점 수는 797개로, 1년 동안 29개의 가맹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



[그림 3] 호식이 두마리 치킨 불매운동 전 후 매출액 변화 추이

이를 통해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이 일어났던 세 기업 모두 불매운동 이후 단기적으로 매출 하락세를 겪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콜마나 한샘의 경우 3분기 만에 기존 매출액을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불매운동 지속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매출 변이가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과 언론보도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매출 변이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특정 시기 이후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였을 때 해당 시기에 발생한 성인지감수성 논란과 연달아 촉발된 불매운동을 원인으로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국내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을 살펴보기 위해 관련 기사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논의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6년 간 총 7개의 일간지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향신문〉, 〈국민일보〉에 보도된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에 대한 기사 158개를 추출하여, 총 52건의 불매운동에

대해 현황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6년 간 발생한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은 총 52건으로, 매해 발생하는 불매운동의 개수는 2016년 이후 각 12건으로 동일한 수를 유지하였지만 언론보도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불매운동 발생량 대비 언론보도 량의 지속적인 증가는 성인지감수성 논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사회적 의식수준이 높아지게 되면 관련 문제발생이 줄어들어 불매운동 또한 감소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둘째, 성인지감수성 논란별 불매운동 발생량을 분석한 결과, 성별고정관념으로 인해 발생한 불매운동은 약 6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즉, 사회적으로 성차별과 성폭력에 대한 문제의식과 성인지감수성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불매운동의 원인인 여성에 대한 비하 등의 혐오 행위는 꾸준히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각 유형별 불매운동 보도량에서 성폭력 문제 관련 기사는 평균 4개를 기록하며 성폭력 관련 문제들이 더욱 이슈화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한편으로 성별고정관념에 대한 문제의식은 여전히 낮다고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겪는 혐오 피해들에 대해 활발한 문제제기와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의 원인은 마케팅 과정에서의 광고 문제, 기업 내부 문제, 콘텐츠 자체의 문제, 논란 있는 모델의 섭외까지 총 4가지로 분류되었으며, 콘텐츠 자체의 문제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불매운동의 원인이 마케팅 과정(광고, 모델)에서 주로 발생한 만큼 기업들의 마케팅 준비과정에는 더 높은 의식수준이 요구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시민단체의 개입 없이 소비자 중심으로 발생한 불매운동 비율은 88.5%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은 주로 온라인 소비자 불매운동 행태를 띠는 것을 알 수 있다. 불매운동의 실행단계별 양태 분석결과 불매운동 결의 및 참여촉구(26.9%)와 불매운동 실행(51.9%) 단계가 높게 나타났으며, 앞으로의 불매운동 흐름은 직접적인 조직화 없이 해시태그운동 등을 통해 집단적 불매운동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매운동 조직단계 비율이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불매운동 실행방식을 온라인, 오프라인, 온·오프라인으로 분류한 결과, 온라인에서의 불매운동 실행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자 운동의 방향이 개별적으로 집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섯째,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식은 사퇴 및 내부징계(13.5%), 후속 조치(40.4%), 사과문 및 입장문 게재(28.8%), 조치 없

음(17.3%)으로 구분되었다. 사퇴 및 내부징계의 경우 대부분 사내 성폭력 혹은 대표 및 이사의 성폭력 사건과 연관되었으며,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문제되는 광고 수정 및 삭제, 논란 된 인물과의 계약 해지, 문제되는 콘텐츠 폐기 등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사과문 혹은 입장문을 게재하며 추후의 변화를 약속한 기업들은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기업은 약 17%로 대부분 현재 진행 중인 콘텐츠로서 추후의 변화 가능성이 존재하거나 외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해당되었다. 이를 통해 불매운동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기업의 대응 방식을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이며, 사과문 게재 이후의 직접적인 문제 해결 등의 행동실천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의 성공여부를 분석하기 위해 7개 일간지에서 공통적으로 다룬 기업의 매출 변이를 파악하였으며, 한국콜마(2019.08), 한샘(2017.11), 호식이두마리치킨(2017.06) 모두 불매운동 직후 분기의 매출액이 평균 10~20%의 하락세를 보였다. 매출감소 이후 하락세는 최소 2분기 동안 지속되었고, 이후 변화는 기업 마다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불매운동의 장기적인 영향력 때문이라 단정 짓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세 기업 모두 불매운동 직후 매출액이 감소하였고 최소 6개월 동안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인 만큼 불매운동의 영향력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매출액 회복 추세를 보이는 기업이 존재하는 만큼, 불매운동 지속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 분석을 위해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주로 언론학 분야에서 다뤄졌던 연구방식을 소비자학과 여성학에서 소개하였다. 둘째, 여성소비자를 중심으로 주취 된 소비자운동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소비시장의 다양한 여성이슈에 대한 사회적 담론의 출발점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국내 소비자 연구에서 다뤄진 적 없는 소비사회 내의 성인지감수성 이슈를 다룬다는 점에서 충분한 학술적 의의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기업 대상의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에 대한 학술자료가 미비한 만큼 소비자가 불쾌감을 느끼는 마케팅 사례 분석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인지감수성 관련 불매운동의 파급력 및 부정적 이미지로 인해 겪는 손실에 대한 연구결과는, 기업의 성인지감수성 교육 필요성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활용된 분석 자료는 7개 일간지에 게재된 총 158개의 기사 자료로, 지방에서 발생 하였거나

문제의 심각성을 내재하나 공론화되지 못한 불매운동이 제외되었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은 소비자 운동을 포함한 불매운동 발생현황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성인지갑수성 관련 불매운동 자체의 현황 및 특성 분석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연구자료 특성 상 언론보도의 특징도 함께 다루고 있다. 또한 언론보도를 연구 자료로 활용한 만큼, 언론을 통해 전달되는 과정에서 불매운동의 특성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불매운동의 성격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한계점을 갖는다. 즉, 이후의 연구에서는 불매운동 특성 분석을 위해 다양한 자료 활용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불매운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실제 실행된 경우를 다룬 것이 아니라 불매운동의 참여의도나 태도 등을 다루어왔다. 불매운동 참여는 개인의 에너지와 시간, 때로는 경제적 손실을 소요하는 일이므로 의도나 태도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시도한 실제 사례의 추출방법을 통해, 향후 불매운동 실행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성인지갑수성 관련 불매운동은 젊은 여성소비자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만큼, SNS를 통해 보이콧 의사를 밝히는 등 표현의 자유가 큰 온라인 기반의 불매운동 성격을 띤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SNS기반의 소비자 불매운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며, 연령대 별 이용률이 높은 SNS를 기반으로 성인지갑수성 관련 불매운동 해시태그 분석 혹은 커뮤니티 중심으로 확산되는 게시글에 대한 텍스트마이닝 분석 등을 실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는 연구 자료의 한계점으로 인해 성인지갑수성 관련 불매운동의 전체적 특성을 대표하고 있진 않지만, 한국사회의 성차별적 구조가 소비시장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발생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소비자의 성인지갑수성이 높아지는 만큼 문제의 경중과 별개로 소비자들의 꾸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으며, 기업의 대응방식이 점차 빨라지고 시정 방안을 제안하는 모습들이 발견되는 만큼 소비자의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소비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시화되지 못하였던 여성소비자들에 대한 논의를 끌어내는 것으로, 소비사회의 다양한 성인지갑수성 관련 문제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렇듯 과거의 문제 현상을 인지하지 못하였던 소비자들의 감수성 상황을 고려하였을 때, 소비사회에 은연중에 깔려있던 인식이 소비자의 구매성향과 구매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후속연구를 진행해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연곤·유홍식·강태현(2013). “학교폭력 이슈에 대한 보도경향 분석”. 언론과학 연구. 제13권 제2호. 5-40
- 강푸름(2018.03.11.). “‘미투’가 영화판 바꾼다. 관객 82% 가해자 영화 보이콧.”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0403>에서 2020.10.25. 인출
- 강혜란(2017.07.20.). “‘남자라서... 여자니까’ 영국서 이런 ‘성차별 광고’ 퇴출된다.”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1773035> 에서 2020.10.25. 인출
- 강희영·최유정(2019). 여성혐오 담론분석을 통해 본 사회적 갈등 대응 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곽연희·정원철(2018). “청소년의 정서적, 성적학대 경험이 성인지감수성에 미치는 영향: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검증”. 학교사회복지. 제 44권. 51-73.
- 김성현·임광현·성현준·성나경·김성희·김광수·이수정(2019). “대학생의 성인지감수성이 위력 성폭력 인식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찰연구. 제18권 제4호. 3-36.
- 김지은·한규훈(2020). “웹버타이징에 대한 탐색적 고찰: 소비자 인식요인 및 광고 효과 분석을 토대로”. 아시아여성연구. 제59권 제1호. 7-41.
- 김태원·정정주(20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시기별 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1호. 199-224.
- 김현미(2017). 가슴기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 분석 연구. 서울대학교 정책학 석사학위 논문.
- 김희진·이수민(2012). “언론에 재현된 여성 경제리더의 모습”. 미디어, 젠더 & 문화. 제23권. 79-110.
- 류미현(2015). “20-30대 소비자의 불매운동관련 특성이 온라인 불매운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역할인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11권 제3호. 115-136.
- 류춘렬(2008). “옥외 광고 보도 경향의 탐색적 분석”. OOH광고학연구. 제5권 제2호. 105-134.
- 박영선·강경아(2020). “남자유아교사 관련 논문의 연구동향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제25권 제5호. 73-94.
- 박지은(2020.03.24.). “‘텔레그램 탈퇴 총공 합시다’... N번방 사건 해결 위한 온

- 라인 운동 전개.”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7436> 에서 2020.10.25. 인출
- 송유진(2020). “텍스트마이닝과 언어네트워크분석을 이용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의 특징과 의의 탐색”. 소비문화연구. 제23권 제1호. 69-91.
- 신성연(2018). “연결망 분석을 이용한 소비자의 보이콧 참여 동기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9권 제2호. 135-180.
- 안상남(2000). “[여정 3] 어둠이 가득한 대지 위에 새벽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984.11~1987)”. 한국여신학자협의회 기타 간행물. 59-76.
- 안윤정(2014). “대학생의 역할지향성과 양성평등의식, 일희망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제21권 제10호. 167-193.
- 원은지(2018.07.31.). “돌아온 ‘첫 일요일’ #여성소비총파업… 중국 “온라인 페미니즘 본보기””. 국민일보.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2565624>에서 2020.10.25. 인출
- 유영한·배영부·김용근(2006). “환경관련 신문사설 비교”. 환경교육. 제19권 제1호. 90-103.
- 이득연(1996). “소비자불매운동: 현황과 평가”. 소비자문제연구. 제18권. 139-159.
- 이미나(2011). “청소년 수용자들의 뉴스 리터러시 교육 효과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43권 제1호. 111-155.
- 이민규·김수정(2006). “호주제 폐지에 대한 뉴스 프레임 비교 연구”. 한국언론정보학보. 132-160.
- 이상호(2007). “행정학 연구에서 사용된 내용분석법의 방법론 분석: 한국행정정보 게재 논문(1991-2005)의 사례”. 행정논총. 제45권 제2호. 1-23.
- 이수범·강연곤(2013). “국내 일간지의 트위터 이슈에 관한 보도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57권 제1호. 28-53.
- 이유진(2018.07.03.). “소비총파업 나선 여성들, 38적금 들고 핑크 택스 거부.” 여성신문.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032> 에서 2020.10.25. 인출
- 이은별·전진오·백지선(2017). “서울의 다문화 공간 연구”.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15권 제2호. 7-43.
- 이혜림(2019.05.20.). ““아이콘도 워너도 안돼”… 버닝썬 논란에 대학가 축제 ‘Y G 가수 보이콧’”. 조선일보.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20/2019052001881.html 에서 2020.10.25. 인출
- 장몽교·이승신(2018). “불매운동 관련 특성 및 소비자시민성이 온라인 불매운동 태도와 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감시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소비자

- 정책교육연구. 제14권 제1호. 1-26.
- 장몽교·이승신·류미현(2017). “확장된 목표지향적 행동모델을 적용한 소비자 불매운동의도에 대한 영향요인 연구”. *대한가정학회*. 제55권 제6호. 675-687.
- 장미경(2003). “여성주의 윤리와 한국 여성노동운동 (1987-1999)”. *아시아여성연구*. 제42권. 341-373.
- 전향란·염동문·제미경(2014). “소비자 불매운동 신념이 불매운동 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5권 제3호. 287-306.
- 전효경(2019). 불매운동 참여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 석사학위 논문*.
- 정상수(2018.12.20.). “영국광고, 불쾌한 성별 고정관념 표현 금지”, *MADTIMES*, <http://www.madtimes.org/news/articleView.html?idxno=540>에서 2021.06.09. 인출
- 정수영·유세경(2013). “중국과 일본의 주요 일간지에 실린 대중문화 한류 관련 뉴스 분석”. *언론정보연구*. 제50권 제1호. 121-156.
- 한국성폭력상담소(2013). *지금 시작하는 젠더감수성*
- 홍지아(2015). “미디어를 통한 성매매의 의미구성”. *한국여성학*. 제31권 제3호. 219-259
- Friedman, M.(1985). Consumer Boycotts in the United States, 1970~1980 : Contemporary Events in Historical Perspective. *The Journal of Consumer Affairs*, 19(1), 96-117.
- 조선일보. 2015.01.01. ~ 2020.12.31.
- 중앙일보. 2015.01.01. ~ 2020.12.31.
- 동아일보. 2015.01.01. ~ 2020.12.31.
- 한겨레. 2015.01.01. ~ 2020.12.31.
- 한국일보. 2015.01.01. ~ 2020.12.31.
- 국민일보. 2015.01.01. ~ 2020.12.31.
- 경향신문. 2015.01.01. ~ 2020.12.31.

Abstract

Status of Boycotts Related to Gender Sensitivity : Through Coverage from Seven Daily Newspapers

JiHyun Ko*·SeJeong Y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ook at the current status of boycott related to gender sensitivity in Korea, and to present the starting point of discourse on gender sensitivity related issues in the consumer market. For this purpose, 158 articles reported in seven domestic dailies(Chosun Daily, JoongAng Daily, DongA Daily, Hankyoreh, Hankook Daily, Kyunghyang Daily, Kukmin Daily) over the past six years from 2015 to 2020 have been selected and analyzed. The data was collected thorough “Big Kinds(news big data analysis system)” and each media’s website.

According to the analysis, 52 boycotts related to gender sensitivity have occurred over the past six years. The number of boycotts occurring every year is not much different, but the number of media reports is gradually increasing. Second, the boycotts were classified by the cause of controversy over gender sensitivity(sexism, sexual violence, and misogyny), and the amount of media coverage was highest in case of sexual violence issues. Third, consumer-oriented boycotts without civic group intervention accounted for a high percentage. Fourth, the stage of running the boycott was the highest and organizing the boycott was the lowest. Fifth, among companies’ response methods, the follow-up that took action directly, such as scrapping problematic content, was the highest. Finally, in the case of the boycott, which was announced in all seven daily newspapers, all of the companies saw their sales decline for at least six months after the boycott.

Keywords : Boycott, Women’s consumption movement, Gender Sensitivity, Media reports

* First Author: Master Degree, Sangmyung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Sangmyung University

공무원의 젠더 감수성 변화과정 연구*

배화정**, 황은정***

초 록

본 연구는 젠더 거버넌스 실행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젠더 감수성 변화과정을 드러내고 어떤 점이 그들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 젠더 거버넌스 실행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변화는 크게 무관심, 타협, 숙고를 거쳐 미완의 재구성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젠더거버넌스 참여 공무원들의 젠더 감수성 변화과정을 당사자의 입장에서 거버넌스 실행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공무원들의 입장과 인식의 변화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성 주류화를 실행하는 주체인 공무원이 정책의 취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실행과정에서 변화를 보여줌으로써 성 주류화 정책이 수립되고 확산되는 과정에서 제도의 한계점과 변화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성 주류화, 젠더거버넌스, 젠더 감수성, 변화과정, 추동 요인

* 본 연구는 배화정의 박사논문에서 발췌하여 재구성하였음

** 제1저자: 서울시 협치지원관(baehwablue@naver.com)

*** 교신저자: 나다 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forgetej@daum.net)

I. 문제 제기

최근 들어 정부의 비효율성으로 인한 사회 문제의 증가와 시민 사회 역량의 비약적 발전 등으로 인해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 제기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이명석, 2017). 동시에 거버넌스의 대표적인 형태로써 정부·시장·시민 사회의 네트워크가 공식화된 새로운 형태의 파트너십이 부각되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민선 6기 정책 과제로 민관 거버넌스를 민선 정책 과제로 삼고(서울연구원, 2016), 여성 정책의 방향 역시 젠더거버넌스의 확산으로 성 주류화 제도 정착과 시민의 정책 참여 확대를 정책 기조로 정하고 있다(조영미, 2014). 그 결과, 여성 정책의 수행과정에서 여성단체가 정책 결정 및 수행과정에 자발적·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김은경, 2008; 이선민, 2014; 조영미, 2014; 최유진 외, 2014). 이는 1990년대 후반부터 여성 정책의 큰 기조인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가 중앙정부의 여성 정책 추진 전략으로 도입된 것과 그 맥을 같이 한다(마정희, 2014).

성 주류화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 정책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모든 정책에 젠더 관점을 도입함으로써 젠더 불평등이 유지, 재생산되는 방식을 인식하고, 주류의 전환을 통해 성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진다. 즉, 행정이나 시민 사회가 협력 속에서 여성 정책을 주류로 만들어가는 방식이 모색된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성 주류화의 실천을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사회구성원 간의 합의와 참여가 요구된다. 이에 한국사회에도 성 주류화가 구체적인 제도로 정착하게 되면서, 다양한 수준에서 젠더 관점이 통합된 민·관 협치의 시도으로써 젠더거버넌스가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젠더를 모든 분야의 정책을 관통하는 이슈로 보고 각 분야의 정책에 성 평등 개입을 요구하기 위해서 성인지통계,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과 같은 구체적인 방법론과 도구의 개발, 그리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이 만들어졌다. 그 결과, 행정 단위에서 성별영향평가는 공무원들의 의지 또는 선호도와 관계 없이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중요한 제도로 강력한 힘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성 주류화를 위한 법과 행정적인 장치가 마련되고, 정책 시행을 위한 도구가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의 핵심 주체인 공무원의 성인지 수준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이기순, 2016). 제도적 측면에서는 성 주류화를 위한 도구가 비교적 완성되어 가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행 주체인 공무원들의 경우 여전히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형식적인 실적 중심의 보고서만을 작성하는 등 실제 실천에서는 미흡(이선민, 2014; 이기순,

2016)하다는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된 것이다.

그리하여 최근에는 성 주류화 제도의 실천적 도구 운영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젠더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성화, 필요성과 관련한 연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안경주, 2013; 이선민, 2014; 황은정 외, 2015; 이선민 2016). 이러한 연구들은 성 주류화 정책을 거버넌스의 차원에서 성공시키기 위해 중요한 요소로 정책담당자의 이해와 협력 그리고 참여를 강조하고 있으며, 결국 성 주류화 정책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성 주류화 정책의 주체이자 책임자인 공무원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이행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성 주류화 정책이 이루고자 하는 성 평등한 사회는 남녀를 차별하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성 주류화/성 평등’은 개념 자체가 추상적이고, 정치적 맥락에 따라 이행과정이 달라지기도 하며, 누가 성 주류화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역할과 책임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마경희, 2007; 이은아, 2019). 따라서 개인과 조직의 성별화된 규범과 실천, 개인의 태도와 가치 등을 전제로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젠더 감수성(gender sensitivity) 수준과 젠더 인식(gender awareness)에 대해 수용하는 정도가 높을 때 성 주류화 정책의 목적 및 효과는 더욱 확실하며, 파급 효과도 클 것이라고 볼 수 있다(정해숙 외, 2010; 신경아, 2004; 안상수 외, 2010).

이러한 맥락에서 성 주류화 정책에 대한 공무원의 젠더 감수성을 연구하는 것은 향후 구체적인 정책 실행 현장에서 나타나는 긴장과 갈등뿐 아니라, 개인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밝히고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불어 젠더거버넌스는 법 제도와 세간의 젠더 인식 간의 간극이 남아 있는 전환의 과정에서의 적극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성 주류화 정책의 실행과정에서 젠더 관점을 반영한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서부터 실질적인 정책 개선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전략적 개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젠더거버넌스 사업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젠더 감수성이 정책 실행과정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사업이 진행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그들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포착하고자 한다. 모든 공공 정책을 이행하는 공무원들은 변화가 필요한 성별화된 행위자이자 동시에 성 주류화 전략 이행의 책임을 갖는 이중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이은아, 2019). 성 주류화라는 이념을 구체적인 정책 흐름 속에서 실천하면서 경험하는 참여자들의 젠더 감수성 변화는 실행 주체인 공무원들이 정책의 취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또한 실행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성 주류화 정책이 수립되고 확산되는 과정을 제공하는 유용한 정보가 될 것이다.

II. 이론적·제도적 논의 배경

1. 성 주류화를 위한 젠더거버넌스

성 주류화는 정책 전략으로 다양한 방식의 평등을 위한 정책들의 상호 보완성을 추구하는 사회 정책의 특수한 쟁점에서부터 수평적이며 일반적인 관심사로 전환시키려는 전략이다(김경희, 200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13). 성 주류화 전략이 사회 정책 안에서 인정받으면서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실천 도구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마경희, 2010; 이재경 외 2012), 성인지 교육 등이 만들어졌으나 실질적인 영향력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이다(마경희, 2010). 성 주류화의 실천이 중요함을 고려할 때, 정책과 실천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실행 주체를 정부라고만 규정하기는 어려우며(황은정 외, 2015; 이선민, 2016), 이에 많은 연구자가 성 주류화 정책 실행 전략 중 하나로 젠더거버넌스를 제안하고 있다(강현아 외 2012; 최유진 외, 2014; 나성은 외, 2018; 임혜경 외, 2018).

따라서 성 주류화 정책이 한 국가에서 자리 잡는 하나의 과정을 민관 협력 의제의 확대로 보았으며,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접근하기에 적합한 영역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1990년대 이후 여성운동이 국가를 협상의 대상으로 법과 제도 개선에 주력(원숙연 외 2006; 주경미, 2008; 원숙연, 2011a)했으며, 거버넌스가 다양한 행위 주체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성 주류화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해왔다.

젠더거버넌스의 개념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젠더 거버넌스는 ‘젠더’와 ‘거버넌스’가 결합한 말로 ‘젠더’란 정책의 실질적 내용(substance)으로, ‘거버넌스’는 일종의 형식적 측면 또는 정책 내용을 담아내는 틀/framework or container)로 설명될 수 있다(원숙연, 2011b). 즉, 성 주류화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젠더거버넌스 개념은 ‘젠더’에 방점을 찍는 경우와 ‘거버넌스’에 방점을 찍는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사회적 관계의 구성체이자 권력 관계의 작동으로 보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거버넌스가 다양한 행위 주체 간 상호작용의 결과로 국가-시장-시민 사회의 정책네트워크로 어떻게 구조화되는가에 관심을 두고 있다(원숙연, 2011b). 이에 젠더거버넌스는 성별과 관련된 차별적 관계를 완화,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정책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행위 주체들의 상호작용 및 관계 구조로 이해되거나(원숙연 외, 2006). 기존의 유엔개발계획(UNDP)은 성 분

석들을 도입해 거버넌스를 재구조화함으로써 정부 중심의 성 평등 정책의 한계를 넘어 제도와 정책에 대한 민간 영역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개념(장영민 외, 2006)으로 정의한다. 이러한 논의들을 정리해보면 젠더거버넌스는 젠더 관점을 기반으로 정책 목적을 수립하고 정책 수립 과정 등에 다양한 참여자들이 상호 협력하는 과정으로, 본질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의 해결을 통해 성 평등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젠더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성 주류화 정책 밖으로 밀려나 있던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책과정에서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과정(Walby, 2009: 118-119)이다. 김경희 외(2004)의 연구를 보면, 마주르(A.Mazur)를 인용하여 정책 형성에서 ‘어떠한’ 정책 도구가 사용되고, 주요 행위자는 ‘누구’이며, 상호작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가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된다고 보고 있다.

젠더거버넌스의 주요 참여자(행위자)는 공무원, 젠더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으로 이들은 정책 실행과정에서 각자의 입장에서의 역할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성 주류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권위적인 구조에 익숙한 공무원들의 입장을 경계해야 한다. 정책과정에서 젠더 관점이 통합된다는 것은 단순히 젠더 관점을 정책에 덧씌우거나 소위 제도화된 정책 도구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정책마다 행위자와 이해 당사자, 행정 조직이 연결되어 복잡하게 작동하는 과정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마경희, 2007).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서울시 젠더거버넌스 역시 성 주류화 정책 도구 중 하나인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책의 성 주류화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행되었다(오나경, 2014: 2015a: 2015b). 지속적인 성별영향평가 시행에도 성 평등에 대한 시민의 체감도는 여전히 낮아 정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 시민참여, 모니터링/이행점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된 것이다(김경희 외, 2012; 나성은 외, 2018). 또한, 서울시 젠더거버넌스는 시정의 거버넌스 추진 방향에 따라 단순히 여성의 참여를 넘어 젠더에 초점을 두고 정책 내에 내재하여 있는 차별적이고 권력적인 관계를 밝히고 이를 개선하려는 목적(김경희 외 2009; 이재경·김경희, 2012; 이은아, 2016)으로 실행되었다.

그 결과 성 주류화 정책으로서의 젠더거버넌스는 기존의 행정 중심적인 거버넌스와는 달리, 성별영향평가에 참여한 공무원들과 민간의 젠더활동가들이 함께 정책 형성과 환류 과정을 기획, 구성함으로써 정책 실행과정에 ‘젠더’ 가치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즉, 성 주류화를 위한 제도인 ‘성별영향평가’ 운영에

‘젠더 감수성을 지닌’ 시민들과 행정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의 성 주류화를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2. 젠더거버넌스를 추동하는 젠더 감수성

젠더 감수성은 단순한 지식 및 기술의 문제가 아닌 젠더 의식에 이르는 과정에서 기초가 되는 정서적 태도이며 가치로 여러 연구자에 의해 설명된바 있다(Miers, 2002; 정해숙 외, 2010; 안상수 외, 2010).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젠더 감수성을 성 주류화와 관련하여 정책이나 프로젝트에서 성별 영향을 파악하거나 젠더를 중요한 변수로서 고려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는 연구(김경희·홍성만, 2002; 신경아, 2004)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젠더 감수성은 ‘특정 정책에 대해서 젠더 분석(gender analysis)을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더 나아가 젠더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은 ‘성인지력’이나 ‘성인지성’으로 번역되어 성 평등한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의 의도나 실행 능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의미화되기도 한다(정해숙 외, 2010; 이갑숙, 2005).

하지만 한국사회에서 젠더 감수성이 성인지성이나 성인지력으로 번역되어 주로 정책과 관련하여 이해되고 있는 것과 달리 국외 연구들은 대체로 젠더 감수성을 정책과 관련된 것에만 한정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젠더 감수성은 “성별 불평등과 젠더 이슈에 대한 감지 능력”(Tisch & Wallace, 1994; Beyer & Bowden, 1997; UNESCO, 2004; NCRFW, 2009)으로 정의된다. 일부 국내 연구에서도 젠더 감수성을 “젠더 의식에 이르기 위한 기초 의식”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들은 젠더 감수성을 정책에 국한해서 설명하거나 정책실천 의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강선미, 2005; 홍미리, 2005; 양민석, 2007).

이처럼 1995년 북경 세계여성회의 행동 강령에 따라 성 주류화의 등장은 전 지구적(global) 차원에서 일어났지만, 성 주류화의 구체적인 방식과 내용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은 지역적(local)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단체 등의 제안으로 정부 주도로 성 주류화를 전면 도입(한국여성단체연합, 2014)하였으나, 성 주류화의 목적과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기도 전에 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도대체 성인지는 무엇이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젠더에 대해 민감한 감수성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어렵고 모호한 과제였다(배화정 외, 2015).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공무원들을 위

해서 젠더 관점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관한 실무와 기술 위주의 교육 및 연구가 여러 해 동안 진행되면서 성인지적 관점은 정책 결정 및 평가 과정에서만 필요한 하나의 정책 도구인 것처럼 인식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 ‘gender sensitivity’는 주로 ‘성인지성’이나 ‘성인지력’으로 번역되어 특정 정책이 몰성적이거나 성차별적이지 않은지를 감지하는 능력이나 성 평등 정책에 대한 실행 의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성인지성이나 성인지적 관점은 성 주류화의 핵심인 성 평등 정의가 생략된 채 기술 관료적 절차로 축소되는 개념(마경희, 2007)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지성’과 ‘젠더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구분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성인지성과 젠더 감수성을 분리하는 것은 이미 그 단어에 연상되는 사회적 의미나 고정관념 때문에 그 내용을 이해시키는 데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를 희미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한국사회에서 기존에 통용되는 성인지성이나 성인지력이라는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거나 재개념화하는 것보다는 ‘젠더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선택하여 일상적인 성차별주의와 젠더 이분법의 문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성인지성과 젠더 감수성 개념을 논의하는 목표와 문제의식은 맞닿아 있다. 목표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는 것은 같은 견해가 있음을 이야기하거나 두 개념을 동질화하려는 것이 아니라 맥락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젠더 감수성 논의는 개인뿐 아니라 조직의 젠더 감수성을 높임으로써 ‘젠더’라고 하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관계를 바꾸어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젠더거버넌스를 경험한 공무원들의 젠더 감수성 변화와 그 추동 요인을 포착하는 것은 성 주류화라는 이념이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가에 대한 성찰과 함께 공무원들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젠더거버넌스에 참여한 공무원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젠더거버넌스 실행과정에서 일어나는 공무원의 젠더 감수성 변화를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즉, 참여하는 공무원 개개인들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경험과 의미를 ‘이야기’로 표현하고자 했다. 개인의 이야기는 인과적인 논리 구조만으로는 측정될 수 없으므로 인과적 이해를 벗어나서 ‘이야기’를 바라볼 필요가 있

다(강현석, 2001). 이러한 이유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라는 인과적 틀로서 설명하려는 양적 연구 패러다임이 아니라, 인과론적 틀을 전제하지 않는 질적 연구가 정책 실행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의 ‘경험’을 포착하기에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김인숙, 2007). 이에 젠더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공무원들이 젠더 감수성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특징과 그 경험의 추동 요소에 대해 알아보 고자 했다.

공무원들은 젠더활동가들과 논의한 정책을 협업을 통해 최대한 제도의 범주를 훼손하지 않는 영역 내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접점은 서로 다른 맥락에서 젠더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만나게 되지만, 정책 실행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의 경험적 맥락이 다르므로 발생하는 문제들 역시 단선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수행 과정에 있는 공무원들의 젠더 감수성 변화와 추동 요소의 변화를 참여자의 시선에서 이해하려고 했다. 즉, 연구자의 인식론적 가정을 전제하지 않고,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해석주의에 따르는 것이 참여자들의 주관적 경험을 드러내는 데 가장 적절하다(김인숙, 2016: 142)고 판단했다.

연구대상자는 서울시에 본격적으로 젠더거버넌스가 도입된 2017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젠더거버넌스와 연관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경험했으며, 이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공무원 총 16명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을 시행하였다.

서울시와 자치구는 성평등위원회 등을 통해 성별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그중에서 젠더거버넌스 사업을 추가로 ‘선정’하게 된다. 이 때 부서에서는 성별로 미치는 영향 등 사업에 있어 성별에 따른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우선 제안하고, 선정결과는 보통 ‘담당 부서’의 ‘공문’을 통해 해당 사업부서에 전달된다.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는 대상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과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가 간담회와 같은 형식을 통해 ‘함께’ 거버넌스 구조 속에서 ‘논의와 합의 과정’을 만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젠더 관점을 가진 시민단체 활동가는 정책 속에서 나타나는 ‘젠더 이슈’와 ‘성별에 대한 고려 지점’ 등을 정책 실행과정에 반영하도록 행정에 제안할 수 있으며, 공무원은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자신의 사업을 젠더 관점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받게 된다. 이를 위해 공무원은 관련 교육을 듣고, 젠더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기도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이나 정책변화를 위한 정책 개선을 발굴하는 역할을 통해 젠더거버넌스에 참여하게 된다.

연구참여자들의 직급은 8급에서 6급 사이로 근무 경력은 2년 차에서 25년 차까지 다양하나 젠더거버넌스 참여경험은 대부분 1~2년 차다. 연구대상자

선정은 의도적 표집 방법의 하나인 ‘네트워크 표집 방법(network sampling)’을 통해 선택했다. 이 방법은 연구자가 초기에 세운 기준에 부합한 핵심 연구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들에게 연구 주제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가진 다른 연구대상자를 소개받는 방법이다(김인숙, 2016).

면접은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절차, 비밀보장 등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받았다.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현장에서 직접 관찰한 관찰 자료와 문서 정보 등을 참고했다.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연구데이터를 만들고, 초안을 동료 현장 연구자 3명과 검토 분석 후 논의했다.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사례	참여자	연령	성별	소속부서
1	참여자1	38세	남	여성정책담당관
2	참여자2	35세	남	여성정책담당관
3	참여자3	28세	여	어르신청소년과
4	참여자4	35세	남	여성정책담당관
5	참여자5	53세	여	여성정책담당관
6	참여자6	48세	여	보육담당관
7	참여자7	48세	여	복지정책과
8	참여자8	52세	남	시민활동지원과
9	참여자9	37세	여	시민소통담당관
10	참여자10	46세	여	가족정책담당관
11	참여자11	46세	여	평생교육담당관
12	참여자12	50세	여	청소년담당관
13	참여자13	29세	여	여성정책담당관
14	참여자14	52세	남	여성정책담당관
15	참여자15	28세	여	보육담당관
16	참여자16	51세	남	여성복지과

IV. 분석결과

1. 젠더 감수성의 변화과정

본 연구는 성 주류화 정책으로서의 젠더거버넌스 실행과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젠더 감수성 변화가 어떻게 드러나고 변화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그들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젠더거버넌스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변화는 크게 4개 과정을 통해 나타나고 있었다. 무관심 단계, 타협 단계, 숙고 단계, 그리고 미완의 재구성 단계가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드러나는 4가지 단계는 일종의 변화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적 특징으로 모든 참여자가 이 네 단계를 직선적이거나 순차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님을 먼저 밝혀둔다. 여기서는 이들 단계별로 나타나는 공무원들의 젠더 감수성 변화를 고찰하고, 이 변화과정에서 변화를 추동한 개인적, 제도적, 조직적, 관계적 측면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1) 무관심 단계

공무원이 젠더거버넌스에 참여하게 되는 과정은 크게 두 가지로, 이는 서울시 젠더거버넌스의 추진 '절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하나는 주로 시나 자치구의 기관 담당자들로 이들은 여성정책 담당 부서에 배치되어 해당 부서의 성별영향평가 및 젠더거버넌스 등 성 주류화 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 경우이다. 따라서 이들은 젠더거버넌스 실행과정에서 성평등위원회 운영과 젠더 활동가 및 다른 부서 공무원들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젠더거버넌스 실행 주체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순환보직'인 공무원의 특성상 희망하는 '부서나 업무를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은 '주어진 업무 배치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다른 하나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본인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보고서를 직접 작성하고 그 과정에서 젠더거버넌스 대상과제로 선정되어 참여하게 된 경우이다.

그러나 어느 쪽이건 젠더거버넌스 업무 담당자로 지정된 공무원들의 공통적인 첫 반응은 바로 '생소함'과 '당황스러움'이다. 젠더거버넌스는 '젠더'에 내재되어 있는 다의적 개념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포괄하고 있으며, '다양한 정책행위자들이 모여서 이해당사자 간 관계를 형성하고 구축한다는 점'에서 하

나로 합의된 정의가 없는 구성적 개념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새로운 조정방식으로 등장한 ‘거버넌스’ 역시 여성정책 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 일자리 정책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정작 행정에서의 거버넌스의 개념이나 방식 역시 ‘다양한 수준에서 상이하게 정의’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젠더거버넌스에 관련된 대다수 참여자는 ‘젠더’와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낯설고’, ‘생소하며’, ‘어렵다’라고 털어놓았다.

이해하기 힘든 용어들이 많고 너무 학술적이에요. 함께 사업 진행 과정을 공유해달라고 하더라도 모양이 낯설고 용어도 낯설어요. (참여자 1)

일단 단어 (용어) 가 어려워요. 외국의 개념을 한국으로 도입하는 과정에서 너무 어려운 용어로 번역이 된 것 같아요. (참여자 7)

다음으로 젠더거버넌스는 개념뿐 아니라 대상사업 선정 방식에서도 참여자들에게 ‘당황스러움’을 안겨준다. 해당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여성정책 부서의 공무원은 제외하고라도 개별 사업부서의 공무원들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이 성평등위원회를 통해서 젠더거버넌스 사업으로 ‘선정되었다’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시의 젠더거버넌스 추진 절차에 따라 본의 아니게 사업 선정결과를 ‘통보’하게 된 기관 담당자들 역시 ‘동료들의 반응에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하필 그게 왜 나인가? 시의 사업이 수천 개인데……. 왜 하필 내가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하지? 하는 생각이 솔직히 들었죠. (참여자 1)

성평등위원회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는 나름 이유가 있을 거구, 만약에 해당 부서에 선정 사유를 알려주면...본인들 부서는 그런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할 테니까, 내 입장도, 기관 담당자들도 당황스럽지요. (참여자 15)

결과적으로 젠더거버넌스에 대한 이러한 ‘첫인상’은 담당자에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인가?’ 하는 ‘심리적인 위축감’과 함께 젠더거버넌스에 대한 ‘무관심’을 야기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보이는 ‘무관심’이 젠더거버넌스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젠더거버넌스의 기저를 이루는 젠더 감수성에 대한 것인가 하는 것이다. Bacci(2009)는 성주류화 정책을 거버넌스 차원에서 성공시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담당자의 ‘젠더에 대한 이해’와 ‘협력’ 그리고 ‘참여’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성 주류화 정책의 중요한 주체이자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이 제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행하느냐’는 젠더 감수성에서 더욱 중요한 지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본 연구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젠더 감수성은 단순히 ‘개인의 의식 수준’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젠더거버넌스 업무를 실행하고자 하는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이를 ‘실천하고자 하는 의지’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젠더 감수성이라는 것은 가시적으로 드러나거나 객관화된 수치로 비교 가능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은 젠더 감수성을 개인의 인지 수준 및 의식과 같은 사적인 영역으로 치부해버리기 쉽지만, ‘감수성(sensitivity)’이라는 용어 자체가 의미하듯 누군가에게 ‘젠더’라는 문제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살면서 ‘한 번도 고민하지 않는 주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참여자들이 보이는 ‘무관심’은 단일하지 않고 ‘다층적’이며, ‘다면적’이다.

먼저 참여자 대부분은 젠더거버넌스 사업 담당자로 지목된 초기 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젠더 관련 전문지식이나 감수성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들 대부분이 젠더거버넌스 업무를 맡기 전까지는 젠더 문제에 관해 ‘몰라서’ 혹은 ‘고민한 적이 없는’, ‘나와는 동떨어진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젠더거버넌스에 대해 ‘모른다’라는 대답은 결국 이 사업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말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공무원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서울시 내에서 젠더거버넌스에 대한 ‘인지도가 낮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도 할 수 있다.

또한, 공무원의 ‘모른다’라는 대답의 기저에는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모른다’라고 하면 ‘나를 혹시 그 업무(사업)에서 제외해주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가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공익을 추구해야 하는 공무원들에게 업무란 의무와도 같은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모른다’라는 말은 결국 ‘몰라서 할 수 없다’라고 읽히며, ‘이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완곡한 거절의 의미인 셈이다. 젠더에 대해 ‘고민한 적이 없다’라는 말은 젠더거버넌스를 젠더와 동일시하는 관점에 가까운 것으로, 젠더는 ‘내가 모르는 것’이고, ‘그동안 몰라도 사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던 것’, 그래서 ‘나와는 동떨어진 것’이 된다.

생각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젠더에 대해) 몰라요. 저 역시도 그렇고요. 솔직히 알고 싶지도 않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요……. (참여자 1)

실제로 젠더거버넌스가 현실에서 운영될 때 젠더를 인식하는 여러 관점이 공존하며,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므로 정책을 기획, 실행, 평가하는 과정에서 상충되는 의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젠더와 성 평등의 문제는 관점에 따라 상반된 입장이 나타날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성 평등 정책 실행과정에서 어떤 주체가 성 평등 개념을 구성해내고 그것을 어떠한 정책 담론으로 구성해나갈 것인지에 따라 결과물이 달라질 수 있다. 일례로 참여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젠더에 대한 고정관념을 일상과 조직, 제도 차원에서 다양하게 경험한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기존에 갖고 있던 ‘자신만의 젠더 렌즈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젠더에 대한 긍정적/부정적 인식이 젠더거버넌스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젠더 감수성은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며 참여자들이 겪어온 ‘삶의 궤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가령 여성 참여자들의 경우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성 차별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다 보니 동일한 정책 이슈를 두고서도 젠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났고, 남성 참여자들은 ‘상대적으로’ 젠더 문제에 대해 ‘무감각’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많았다.

술자리에서 친구들과 간혹 언쟁을 해요. 난 젠더 감수성도 없는데 제가 항상 여성의 입장이 되어서 젠더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 친구도 합리적인 사람인데 제가 역차별한다고 말해요. 요즘은 이런 역차별, 남혐, 여혐 그런 이야기가 주를 이루어요. (참여자 2)

이러한 감수성의 차이는 젠더와 젠더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젠더거버넌스의 또 다른 실행 주체인 젠더활동가에 대한 선입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들의 말 속에서 여성주의를 전공하고 여성주의자로 현장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과격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거나 말만 앞세우면서 싸우려 하는 까칠한 사람들, ‘여성의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들 등으로 이야기되었다. 참여자들은 여성주의와 여성주의 활동가(페미니스트, 젠더 활동가 등)를 동일시하며, 자신이 겪은 여성주의자에 대한 경험을 그대로 여성주의에 적용하여 일반화하는 오류를 보여준다. 일례로 여성단체와 일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 그 경험을 모든 여성단체 혹은 시민단체에 대입하여 확대해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참여자들은 ‘세간에 알려진’ 여성주의에 대한 편견을 ‘여과 없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여성주의에 우호적이지 않은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젠더는

‘불편함’을 주는 용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따라서 공무원들에게 젠더 활동가들은 ‘갈등을 조장하고’, ‘기계적 평등을 주장하며’, ‘과한 일반화’를 일삼는 사람들로 여겨지기 쉽다. 이것은 결국 여성단체를 주요 파트너로 협업해야 하는 젠더거버넌스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감을 일으키는 것은 물론 ‘실패’를 바탕으로 하는 ‘관계 맺기’가 주요한 거버넌스 사업 방식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젠더 거버넌스 사업으로 선정되면 여성단체 사람들에게 내 사업을 보고하고 성평등한 사업인지 아닌지 보고서를 쓰라고 하는데 내가 왜 이것을 해야 하는지 솔직히 모르겠더라고요. 또 교육에 참여해도 강사가 이야기하는 평등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똑같은 수가 있어요? 난 집에서 역차별 당하고 있는데... (참여자 6)

한편,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참여자들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지 교육을 받으면서 더욱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현재 이루어지는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의 한계’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지만, 참여자들은 그것을 교육내용 혹은 강사의 문제로 보기보다는 젠더와 평등 전반에 대한 ‘인식 문제’라고 본다. 젠더와 성 평등의 문제는 가치판단과 관련된 문제로 누가, 언제,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느냐에 따라 상반된 입장이 나타날 수 있는 ‘경합적 개념’이다. 따라서 젠더 이슈는 근본적으로 이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참여자가 이를 젠더거버넌스 전체의 문제로 ‘동일시’하는 계 반감의 한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참여자는 평소 여성주의를 ‘여성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지만, 반면 본인이 수강한 성인지 강의에서는 ‘모두가 기계적으로 평등한 것’으로 제시되는 내용에 ‘혼란스러움’과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참여자들이 젠더거버넌스 참여 초기, 젠더 관점으로 정책을 바라보고 기획 및 집행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더구나 불특정 다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적 특수성’은 그들에게 여성주의를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것으로 바라보게 하기보다는, 특정성을 대변하는 이익 단체들이 주장하는 ‘하나의 치우친 시각’으로서 여기게 하는 요인이 된다.

너무 강조를 하니깐 지겹다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공무원은 어떠한 특정한 세력이나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골고루(공평하게) 생각을 해야 하니까 이

런 관점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참여자 6)

(젠더를)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젠더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일 수는 있기 때문에 젠더 감수성은 필요하죠. 하지만 모든 것에 최우선하는 가치관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어요. (참여자 5)

따라서 무관심 단계는 참여자들의 젠더 감수성 변화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라 할 수 있으며, 공무원들이 젠더거버넌스에 직면해서 보이는 첫 반응이라 할 수 있는 무관심은 단순히 ‘관심 없음’이 아니라 ‘무반응’, ‘암묵적 거부’, ‘반감’ 등 다차원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타협 단계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젠더거버넌스 대상사업 선정과 통보 과정에서 해당 공무원들은 여러모로 진통을 겪게 된다. 하지만 일단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이상 참여자들에게 젠더거버넌스는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제 ‘더 물러날 수 없는 업무’가 된다. 즉, 젠더거버넌스에 대한 ‘거부감과 반감이 여전히 남아 있다’ 할지라도 ‘조직의 내외부적인 압력과 기대’로 인해 젠더거버넌스 사업에 ‘함께 참여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이다. 기존의 행정 내 정책 사업은 ‘담당자가 알아서 기획하고 추진’하면 되었으나, 거버넌스 방식으로 진행되는 사업은 ‘민과 관이 협력해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위원회 권고’와 더불어 ‘조직 내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은 좋은 싫든’ ‘타협’이라는 수순을 밟게 된다.

이때 참여자들에게서 보이는 타협의 양태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형식적 타협이다. 공무원들은 ‘자신의 업무를 선택할 수 없고’,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실제로 연구참여자 대부분이 이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보였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의식과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자의든 타의든 젠더거버넌스를 자신이 해야 할 의무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도 참여자들에게 젠더거버넌스는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라기보다는 집행해야 할 여러 사업리스트 중 하나인 ‘일(업무)’ 그 자체로 각인되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젠더 거버넌스는 시장의 공약 사업 중 하나로 인식되거나 타 부서 공무원들에게 자신들과 관련이 없는 다른 부서(여성정책부서, 협치부서 등)의 ‘사업’일 뿐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참여자들에게 젠더거버넌스는 “왜 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일이니까 해야 하는 것” 혹은 “내라고 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쓰는 것”이라는 ‘형식적 수용’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젠더거버넌스의 존재 자체가 효과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제도나 방식을 구성하는 내용과 기준이 현실(관행)과의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참가자들에게 ‘실효성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저는 (젠더 거버넌스에 대해)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일이 떨어지면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하면 그 분야의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에요. 제 일이니깐 책임감을 갖고 하는 거예요. (참여자 2)

제가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라고 했던 자료이기 때문에 쓴 거예요. 그게 제 일이니까 쓴 거죠. 그 직무를 하면 그 보고서를 쓰는 게 당연한 건데 그 이유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참여자10)

참여자들에게서 보이는 또 다른 타협의 양태는 ‘절충적 타협’이다. 참여자들은 젠더거버넌스 업무를 ‘형식적으로 수용’하기는 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업무가 그들이 ‘기존에 해오던 업무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새로운 업무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젠더거버넌스를 수행하면서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젠더 관련 전문성’ 뿐만 아니라 수행 주체들 간 ‘의견을 조율’하고, ‘조율된 의견을 통해 구체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이다.

타협은 양자가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하는 것이지만, ‘절충적 타협’은 공무원이 업무를 수락하는 대신 ‘적당한 성과를 전제’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한정적인 참여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른바 ‘적당히 일하기’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성별영향평가나 젠더거버넌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여성정책 부서 공무원들과 달리 일반 사업부서의 담당자들에게 성별영향평가보고서 작성이나 젠더거버넌스는 부가적인 업무의 성격이 강하다. 게다가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을 거치게 되어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업 담당자들이 보고서 작성에 쏟을 수 있는 ‘시간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일부 참여자들은 노력한다면 더 나은 보고서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한정된 시간 안에 자신이 할 수 있는 수준까지만’ 보고서를 작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전략을 두고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 한 참여자는 나름 ‘절충적 접근’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일만 늘어요. 개인의 역량이나 의지만으로 돌파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부서 내 업무만 잘하면 인정받는 것이지 이걸 잘한다고 해서 당장 승진 같은 보상이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적당히 작성하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아예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나름 절충적 접근인 거죠. (참여자 16)

한편, 성별영향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며 공무원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여기는 부분은 ‘성 평등을 위한 조치 사항’으로, 정책 개선 및 환류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부분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공무원의 성인지적 정책실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부분은 사실상 젠더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젠더활동가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무원들로서는 사실상 어떤 것을 택해서 자기주장을 명확히 내세우기가 어렵다. 정해진 분석 평가 항목에 따라서 사업을 점검하고 젠더 관점에서 재구성한다고는 하지만 제삼자가 아닌 본인이 ‘자신의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란 절대 쉽지 않은 작업’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러한 평가에 따라 도출된 개선안을 추진하는 일 역시 보고서를 작성한 ‘담당자의 몫’이라는 점에서 ‘별수 없이 절충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동시에 그 대안은 자신이 속한 ‘부서의 리더나 기관장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어야만 한다. ‘관료제’라는 시스템 안에 속해 있는 공무원의 특성상 사업 담당자의 권한은 업무에 한정되어 있고, 기관의 예산과 자원 역시 한정적이므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의사 결정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분석평가서를) 어디까지 해야 할지 판단하지요. 판단 안 하면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판단은 하되 그 판단의 기준은 윗분들한테 맞을까, 안 맞을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윗분이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내오라’고 하면 온갖 것을 짜내서 대책을 마련하고 윗분들이 좋아할 만한 사업과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거죠. (참여자 11)

또한, 현재의 시스템 안에서 정책 개선안은 곧 이 사업의 성과와 맞물려 이해되기 쉬우므로 참여자들에게 성 평등이라는 ‘공공의 가치’는 물론 업무성과라는 ‘개인적 가치’ 역시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두 가지는 종종 ‘충돌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참여자들은 결과적으로 두 가지 가치를 모두 추구해야 한다. 그리하여 참여자들은 젠더거버넌스 사업을 수행하며 개인적 가치뿐만 아니라 다른 가치들도 포기하지 않는 ‘줄타기’를 하며 성과를 내고자 애쓰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이 맡은 젠더거버넌스 업무가 ‘아직은 변화의 동력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임을 인정’한다. 따라서 타협 단계는 공무원들이 젠더거버넌스를 처음 직면하면서 보였던 ‘무관심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젠더거버넌스를 ‘어쩔 수 없이 자신이 해야 할 업무’로 받아들이면서도 ‘스스로 이 업무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젠더거버넌스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냈을 경우 그것이 개인의 ‘승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와 같은 ‘이기적 기대’와 함께 성 평등에 기여한다는 ‘이타적 기대’를 갖게 된다. 이런 기대들은 참여자들이 보이는 타협의 양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국, 자기 합리화를 통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최적의 행위 방식을 취하는 타협의 동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공무원들의 젠더 감수성 변화를 추동한 핵심요인들은 조직의 내부적인 압력과 기대,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의식과 강한 책임감, 성 평등이라는 공공의 가치 추구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외부의 추진동력으로는 서울시의 성 주류화를 추진하기 위한 도구로서 젠더거버넌스 사업에 대해 갖는 시민들의 관심과 요구 같은 사회적 변화가 핵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숙고 단계

참여자들이 앞서 타협 단계에서 보이는 행동의 변화가 조직의 내외부적인 ‘기대와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경향이 크다면, 숙고 단계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이전 젠더거버넌스 ‘업무를 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 참여자들의 ‘젠더거버넌스 실천(action)’에 대한 마음 먹기’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 자체가 아니라 ‘목적에 이바지하는 것’들을 ‘숙고’라고 정의하며, 의사가 치료할지 말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숙고가 아니라 ‘어떻게’ 치료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바로 숙고이며 목적을 성취하는 방법과 수단들이 숙고의 대상(조대호, 2016)이라고 보고 있다. 즉, 젠더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숙고’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을 ‘고민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젠더거버넌스 업무를 ‘제대로 마주한’ 참여자들은 이것을 ‘왜’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에서 벗어나 드디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다. 이는 매우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은 참여자 대부분이 젠더거버넌스 업무를 ‘원치 않거나’, ‘최대한 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매우 강했기 때문에, 젠더거버넌스라는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거나 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려는 노력은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젠더거버넌스를 해야 한다고 ‘마음먹은’ 참가자들은 그동안 외면해 왔던 ‘제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고, 이를 증명하듯 본격적으로 젠더거버넌스라는 사업 목적에 따라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도구와 전략’을 ‘탐색하

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업무방식에서 벗어나' 자신의 '젠더 감수성을 자각하도록 이끄는 계기'가 된다. 다시 말해 참여자들은 업무를 분석하기 위한 '업무에 대한 지식화 과정'을 통해 서서히 '젠더 문제를 자각'하고, 성 평등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규정해나가는 '젠더의 지식화 과정'을 밟게 된다.

민간과 함께 거버넌스를 하려면 이전에는 없던 단계나 절차를 거쳐야 하니까 공무원 입장에서는 낯설고 어렵죠. 민간에서는 성 인지와 관련해서 조언을 해주고 정책을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지만, 공무원들이 성 인지나 성주류화에 대해 잘 모를 뿐더러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자신도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한데 시간이 나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고요. (참여자 14)

반년 정도 사업에 참여하다 보니 젠더 감수성이 어느 정도 생긴 것 같아요. 저처럼 성 인지나 성 주류화를 처음 접하는 직원들한테는 최대한 많이 관련 정보들을 노출하고 교육을 하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4)

마찬가지로 젠더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다양한 젠더활동가들을 만나게 되고 이들과의 '협업 구조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 과정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다. 젠더거버넌스는 젠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과거와 같이 정부가 중심이 된 '일방적이고 하향적 조정 양식'이 아니라 정부는 시민 사회가 '갈등'과 '협력' 그리고 협상에 기반을 둔 정책을 생산하고 도출하는' 과정에 함께 하는 것이다. 성 주류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젠더 감수성에 기반을 둔 공무원과 젠더활동가, 그리고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이 '참여' 과정에서 민과 관은 서로 심리적 대결, 이른바 '기 싸움'을 벌인다. 누가 주도권을 가질 것인가? 각자의 역할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를 조율하는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민관의 헤게모니 충돌에 대해 숙고'하게 된다. 즉, 참여자들에게 젠더거버넌스는 단지 업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개인의 젠더 감수성에 대해 '끊임없는 점검과 도전이 있어야 하는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이전에는 몰랐지만, 조직 내 환경과 관행에 따른 '업무방식에 대해 숙고'하고 변화된 시각을 갖게 된다.

거버넌스를 한다고 민과 관이 만나기는 해요. 만나면 낯선 분위기죠.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요. 민간에서는 '상위 기관에서 지원을 해주는가?', '운영하는 데 어떤 게 어려움이 있나?' 같은 것들을 물어봐요. 그러면 솔직히 '사업 추진은 민간 전문 기

관들이 하고 저희는 사업 결과 보고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밖에 없다'고 대답해요. 결과적으로 젠더 감수성을 가지고 민간을 점검하는 것엔 한계가 있어요. (참여자 13)

그러나 관련 지식이 생겼다고 해도 그것을 어떻게 실제 업무에 적용하여 성 평등을 구현해낼 것인가는 또 다른 문제이다. 실제로 성별영향평가 초기, 상당수의 공무원이 남 : 여 = 50 : 50과 같은 기계적 평등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성 평등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가장 손쉬운 방법의 하나로 택한 것이 남녀가 처한 사회·경제·문화적 조건들은 고려하지 않은 채, 가시적으로 보이는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맞추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자들은 결코 성 평등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 이러한 과정 또한 목적에 맞추어 사업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을 고민하는 숙고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젠더거버넌스 실행과정에 대한 자료를 충분히 습득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스스로 필요한 자료를 찾아 나서고, 자신의 사업을 젠더거버넌스의 첫 성공 사례로 만들어내야 하는 상황에 당면한다. 따라서 숙고 단계에서 공무원들의 젠더 감수성 변화를 추동한 요소들은 그동안 익숙하게 해왔던 업무방식에 대한 도전, 젠더활동가와의 협업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개인의 젠더 감수성 점검, 성인지 교육을 통한 젠더 지식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4) 미완의 재구성 단계

마지막으로 미완의 재구성 단계는 젠더 감수성을 명확히 인지하게 된 공무원들이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들 가지고 정책 현장에서 기존의 틀을 흔들고, 해체하며, 재구성해나가는 과정이다.

어떤 정책을 수립하면서 젠더 감수성을 반영하고, 젠더적 시각으로 사고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젠더 활동가들로부터 젠더 관점의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받아보면 머리로는 다 이해가 되고 뜻도 좋다는 건 알겠는데, 내 사업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구체성이 와 닿지가 않아요. (참여자 8)

젠더 감수성을 가지고 정책을 해야 한다는 게 이해는 되지만, 사실 각론에서는 약해요. 예를 들면 성별영향분석이 무엇인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고려한 정책이 무엇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깊이 들어간 것은 잘 모르겠어요. 좀 더 다양하고 깊이 있는 사례나 방법들에 대해 알려주었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7)

업무와 일상의 젠더 지식화를 거쳐 관료적 헤게모니에 대한 숙고 과정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이제 젠더 감수성을 명확히 인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소정의 성과로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수단들, 이른바 참여자 나름의 ‘젠더 공구 상자(tool box)’를 갖게 되었다. 인식이 변화한다는 것은 그동안 습관적으로 택해왔던 행동을 바꾸고, 그러한 행동들이 큰 변화의 단초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인식의 변화는 완성형이 아니라 관심과 실천을 통해 기존의 틀을 흔들고, 해체하며, 재구성을 끊임없이 반복해나가는 현재진행형(ing)이다.

그리고 도구가 생겼다고 해도 그것을 익숙하게 다루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이제 갖 짝을 틈은 젠더 감수성을 정책에 적용하는 데 여러 가지 ‘현실적 난관’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렇다면 참여자들에게 젠더 감수성이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현실에서는 정책에 적용하기가 어려운 것일까? 여기서는 참여자들이 젠더 감수성을 정책에 적용하는 데 있어 마주하게 되는 난관들을 짚어보고, 개인적, 조직적 관계 차원에서 젠더 감수성이 미완의 재구성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참여자들은 개인과 조직 차원에서 느끼는 변화를 언급했지만, 이런 변화를 추동한 요인 중 하나는 ‘사회에서 먼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한 참여자는 ‘#미투 운동’을 보며 ‘사회 전체의 젠더 감수성이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한다고 말했다. 물론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남아 있지만’, 여성들이 여러 고발(speak out)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변화할 ‘사회의 모습을 기대하는 것’이다. ‘공무원’ 조직은 ‘시민들의 변화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선 시장,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활동하는 성평등위원회, 사회운동 등의 영향은 관료제의 헤게모니를 약화하는 데 일조한다. 즉 ‘조직의 문화를 재구성’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예전에는 여성들이 피해를 당하면 수치심이나 불이익 등의 이유로 숨겼지만 이제 용기 내서 사회에 고발을 하는 걸 보면서 사회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물론 아직 여성에 대한 사회의 고정관념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긴 하지만요. (참여자 6)

서지현 검사의 일은 현재 우리 사회 남녀의 지배 구조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는 성 폭력이나 성 희롱은 사회적으로 취약 계층에 있는 여성만이 겪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 강자의 위치에 있는 검사 또한 여성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일을 겪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여성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폭력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 거죠. (참여자 12)

여성 검사가 자신의 권리를 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 참여자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어떤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약자들은 '자신이 겪은 차별이나 피해를 말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살아왔다'라면, 검사라는 사회의 강자 그리고 동시에 여자라는 사회의 약자로서 자신의 피해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례를 보며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응시'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공무원들의 젠더 감수성 변화를 추동한 요소들은 젠더 거버넌스 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참여자들이 경험했던 '무관심'과 '갈등', '타협', '분노' 등의 '다양한 감정'들이 응집되어 의식화로 이어진 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젠더 감수성 변화와 더불어 조직에서 나타난 직장에서의 성차별 완화, 공무원들의 세대교체, 탈관료제적 분위기, 최근의 '#미투운동'을 통한 사회 전체의 젠더 감수성 향상, 이러한 사회변화요구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공무원 조직의 특성 등이 이러한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V. 연구 결과의 함의와 한계

1. 변화 과정의 실천적·정책적 함의

젠더거버넌스는 성 주류화 실천 도구로서, 모든 분야의 정책에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것이 목적으로, 이를 위한 정책을 성인지 관점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은 물론 이에 대한 정책 개선을 이루어내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성 주류화 정책은 기획과 수립, 수행, 결과의 모든 단계에서 젠더 관점을 적용하고 평가하는 시스템이 중요한데, 이 시스템을 움직이는 것이 결국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과의 성과보다는 과정의 성과에 더 의미를 두는 정책이라 말할 수 있고, 기존 관료제의 평가 틀로 성과를 만들어내기엔 한계가 있다.

젠더 감수성은 성 주류화의 인식론적 도구이다. 젠더 감수성은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과는 다른 이해와 요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여성과 남성의 삶을 비교하고, 여성의 삶의 경험을 반영하며, 특정한 개념이 특정 성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지, 성역할 고정관념이 개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등을 분석에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참여자인 공무원들의 젠더

감수성에 대한 이해가 짧은 시간에 길러질 수 없는 상황에서 젠더거버넌스 실행과정은 형식적인 측면을 띠게 될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 젠더거버넌스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보고서 작성을 과업의 완성이라 여겨 관료제의 문서화에 강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리하여 성 평등의 왜곡, 젠더 이슈에 대한 인식 부족, 여성을 정책으로 지원해야 할 '수혜 대상자' 로만 분석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것이 이른바 '관료제의 헤게모니'로서, 행정력에 기반을 둔 문서주의, 형식주의에 치중해 제도 본연의 성평등 실현이라는 목표가 퇴색되었다. 관료제의 한계로 인해 현재의 젠더거버넌스는 그 한계와 도전이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이다. 기존의 젠더거버넌스를 유지하면서 관료화 현상을 축소하고 전환적 가능성을 살리기 위해선 젠더 관점에서의 정확한 분석과 운영 및 추진체계, 공무원들의 젠더 감수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공무원들의 젠더 감수성을 확장시키는 추동 요소는 젠더거버넌스 형성 과정에 따라 참여자들의 업무에 대한 역할과 특징, 참여경험 등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젠더 감수성의 인지 및 수용 수준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무원들은 일하는 조직의 문화 및 업무에 대한 내외부적 압박 등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다. 즉, 공무원들의 젠더 감수성은 다양한 경험과 인식, 제도, 환경 등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구성되며, 모든 공무원들이 균질적인 젠더 감수성을 내재화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므로 공무원들의 젠더 감수성을 움직이는 추동 요소로 가장 주요하게 나타난 것은 젠더 교육, 업무 실행 시스템, 조직 문화 등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추동 요소를 잘 활용한다면, 공무원 교육과 행정 시스템을 통해 공무원들의 젠더 감수성을 보다 공고하게 하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젠더거버넌스를 실행하는 과정은 공무원들이 성평등한 공공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젠더 감수성은 공공의 가치를 인식하는 중요한 기반으로서, 젠더거버넌스 과정에서 형성된 민관의 신뢰는 사회적 자본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그동안 중앙차원에서 성 주류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젠더 감수성을 확장하는 지원이나 인프라, 교육 활동 등에서 사회문화적 흐름을 주도해나가지는 못했다. 실행 단위에서의 젠더 감수성을 확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역할, 지침, 방법 등이 부족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이 업무를 실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긴 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민과 연구가 부족했던 것 역시 현실이다.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이 균질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성 주류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젠더 감수성이 생긴 공무원들은 성 주류화의 필요성에 대해 수긍하면서도, 자신의 업무와 연결하여 실천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 정책에 젠더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또 효과를 만들어낼 것인지를 구체화하거나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상상할 수 있는 시스템과 교육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젠더거버넌스 운영에서 중요한 핵심은 운영 주체가 되는 공무원들의 젠더 감수성이다. 그러므로 젠더 감수성 변화를 추동하는 요인들을 어떻게 하면 성 주류화에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성 주류화 정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은 지위와 업무를 막론하고 젠더 감수성을 기반으로 한 젠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젠더 관점으로 정책에 대해 사고하고 행동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자신의 내면에 들어 있는 성별 고정관념에 대해 스스로 비판할 줄 알아야 하며, 한발 더 나아가 젠더 감수성을 기본 인식체계로 삼아 정책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젠더 감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젠더 감수성에 준하여 사람과 사물, 현상 등을 사고하는 것이 젠더 관점인 것이다. 공무원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서 젠더의 관점을 함양하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젠더 관점은 자연발생적이 것이 아니라 교육과 실질적인 훈련을 통해 강화되는 능력이기 때문이다. 그런 교육과 훈련에는 사회문화적 상황, 정보, 지식 등의 객체뿐만 아니라 그것을 인지하고 분석 판단하며 향유 하는 주체가 모두 중요한 추동 요소가 된다. 그래서 공무원 스스로 젠더 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직 및 업무적으로 문화와 시스템 속에 젠더 감수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연구 분석에서도 공무원들의 젠더 교육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추진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은 의무 교육으로 지정되어 있고, 교육을 받았다는 실적을 중앙부처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런 조건에서 해당 교육은 내용에 대한 고민보다는 실적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일부 강의에서는 공무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자극적인 자료 등에 의존하는 경향도 있으며, 형식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관료적 문화에 익숙한 공무원의 젠더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에 대한 비판과 공무원 세대의 특성과 조직 문화 진단 등을 통한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공무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효과적인 교육 방법과 내용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성 주류화 정책의 목표는 모든 정책에 젠더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다양한 분야와 접목한 교육 콘텐츠

츠를 생산해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젠더 교육의 주체나 전문 강사를 포함한 관련 교육 기관의 스펙트럼이 넓어지면서 교육 주체의 다양성과 차이를 조정한 효과적인 교육에 대한 고민은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제도화된 성인지 교육은 정부 주도의 성격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하는 담당 부서의 힘이나 중요성이 미약한 실정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젠더 교육이 마치 제도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불안정하고 주변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다.

젠더 관점은 고정된 개념이나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와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젠더 교육 콘텐츠 또한 지속적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과 현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은 젠더 교육 본래의 성격이기도 하다. 젠더 교육은 우리 사회의 젠더 감수성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사회적 파급력을 측정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이 젠더 감수성을 내면화하려면 다양한 젠더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지식과 활용 역량을 가져야 한다. 활용 역량은 지식을 그대로 나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게 재해석하고 변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 상충 혹은 갈등의 여지가 있는 분야에 대한 파악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해박한 지식과 적용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현실의 다양성과 변화의 속도에 따라 관련 법규, 제도와 예산이 지원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간극을 좁히기 위해 일선 현장의 공무원에게 법과 제도의 적용에 관한 자유재량을 확대하려는 현상은 공무원의 젠더 지식과 활용 역량의 중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2. 연구의 한계 및 제언

본 연구는 젠더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공무원의 젠더 감수성 변화에 관한 기존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탐색적 연구의 일환으로 젠더거버넌스 참여자로 공무원의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당초 성 주류화 정책에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는지 파악하고, 젠더거버넌스 실행과정에서 공무원들의 서로 다른 젠더 인식을 드러내고 그 의미를 살펴보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추었다. 즉, 연구참여자들의 젠더 감수성 수준이 균질하지 않고, 공무원들의 경험이 여러 차원에서 복합적이고 다층적으로 겹쳐짐으로써 벌어지는 개

인의 경험과 의미를 찾아 ‘이야기’로 표현하려 했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한 4가지 단계는 일종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적 특징으로 모든 참여자가 이 네 단계를 직선적이거나 순차적으로 모두 경험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연구를 기초로 후속 연구를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 교육 기관과 담당 부서별로 젠더 감수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젠더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성 주류화 정책을 전 부서에 확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는 않다. 앞으로 다양한 직급과 분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감할 수 있는 교육 방법론과 콘텐츠를 연구하고 확장하면 더욱 풍부하고 다양한 정책적 해결 방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좀 더 구체적으로 현직 공무원들의 젠더 인식과 젠더 감수성 수준을 파악해 이것이 젠더 관련 업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역할이 젠더거버넌스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검증했지만, 성별, 연령, 그리고 역할, 즉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나 조직 내 위치 등에 따라 젠더 감수성이나 역할에 대한 고민과 압박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 젠더와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본다면 이들의 정책 실행과정에 큰 동기 부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젠더 감수성을 높이는 교육 모형 개발과 공무원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젠더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실행 방법과 공무원의 필요성만 언급하는 것으로는 구체적인 실현을 보장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실행 모형과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공무원들의 젠더 감수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선미(2005). 양성평등 감수성 훈련 매뉴얼.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강현석(2001). “교육과정 연구에서 질적 접근의 반성적 조절”. *교육과정연구*. 제 19권 제2호. 19-52.
- 강현아·손문금·박주희·손주리(2012).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추진 거버넌스 구축: 광주지역 도시공간 시설설치·개선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경희(2005). “여성정책 관점의 재구성을 위한 시론적 연구: 여성발전론과 성주류화 개념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1권 제2호. 255-287.
- 김경희(2009). “지역발전정책에서의 성 주류화”. 이재경 역음. *국가와 젠더: 성 주류화의 이론과 실천*. 파주: 한울. 268-313.
- 김경희·김돌순·최유진·장운선·문희영·박기남·장정순(2012). 성 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V):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분석과 환류 활성화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경희·신현옥(2004). “정책과정을 통해 본 젠더와 평등개념의 제도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와 국공립대 여성교수채용목표제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 20권 제3호. 171-206.
- 김경희·홍성만(2002). 공무원 성(性) 인지적(認知的) 정책형성 교육안 개발. 여성부.
- 김은경(2008). “여성정책 거버넌스 유형에 대한 분석: 여성부의 협력사업사례”. *아시아여성연구*. 제47권 제1호, 숙명여대 아시아 여성문제 연구소. 67-101.
- 김인숙(2007). “한국 사회복지 질적연구: 동향과 의미”. *한국사회복지학*. 제59권 제1호. 275-300.
- _____(2016). *사회복지연구에서 질적방법과 분석*. 서울: 집문당.
- 나성은·황은정(2018). 서울지역의 ‘젠더거버넌스 운영’으로 본 주민주도형 거버넌스의 의의와 발전방안.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마경희(2007). “성주류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 *한국여성학*. 제23권 제1호. 39-67.
- _____(2010). “여성정책의 평등 개념을 통해 본 성 주류화”. 이재경(편). *여성정책의 평등 개념을 통해 본 성 주류화*. 74-101.
- _____(2014). “여성주의, 국가, 성평등”. 한국여성연구소 역음. *젠더와 사회*. 서울: 동녘.
- 배화정·황은정·송문이(2015).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의 젠더 거버넌스 실행가능성에 대한 연구”. *청소년시설환경*. 제13권 제3호. 85-95.
- 서울연구원(2016). *협치,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하여*. 서울연구원.

- 아리스토텔레스(2004). 니코마코스 윤리학(해제).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 신경아 (2004). “성 인지적 관점(Gender -sensitive perspective)과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정책리포트. 부산발전연구원 여성정책연구센터.
- 양민석(2007). “성인지적 ‘팀제’운영과 여성주의 리더십의 역할”. 여성학논집. 제24권 제1호. 43-72.
- 안경주(2013). “성별영향평가와 젠더-거버넌스의 구축: 세 지역사례의 분석을 통해 본 쟁점”. 한국여성학. 제29권 제4호. 155-190.
- 안상수·박성정·김금미 (2010). 성평등 실천 국민실태 조사 및 장애요인 연구(II) : 직장 생활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오나경(2014). 2014 젠더 거버넌스 운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오나경(2015a). 2015 젠더 거버넌스 운영.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오나경(2015b). 풀뿌리지역여성 커뮤니티 발굴 및 활성화.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원숙연(2011a). “성-주류화기반으로서 공공정책영역의 현실”. 이재경(편). 국가와 젠더: 성주류화의 이론과 실천. 140-165.
- 원숙연(2011b). “젠더-‘거버넌스’? ‘젠더’-거버넌스?: 여성이 행복한 도시 프로젝트에 대한 비판적 분석”. 여성학논집. 제28권 제2호. 3-36.
- 원숙연·박진경(2006). “젠더-거버넌스의 가능성 탐색: 성매매 방지법 제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여성학. 제22권 제4호. 85-124.
- 이갑숙(2005). 공무원의 양성평등 의식 및 성 인지력향상 방안 연구. 대전: 대전광역시 여성정책위원회.
- 이기순(2016).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행을 통해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성 주류화정책 추진동력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명석(2017). 거버넌스신드롬,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이선민(2014).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 ; ‘기술관료제화’를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_____(2016). “성 주류화 정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젠더 거버넌스 운영방안-성별영향분석평가를 중심으로” -거버넌스와 젠더.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학술대회 자료집. 9-48.
- 이은아(2016). “성 주류화와 성평등 사회구조로의 ‘전환 가능성’-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경험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7권 제4호. 265-288.
- 이은아(2019). “공무원 성인지 교육에 대한 ‘저항’의 의미와 ‘전환’ 가능성 -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여성학연구. 제29권 제2호. 7-40.
- 이재경·김경희(2012). “여성주의 정책 패러다임 모색과 ‘성평등’”. 한국여성학. 제28권 3호. 1-33.

- 임혜경·김민혜(2018). 젠더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과제. 경기도가
 족여성연구원.
- 장영민 외(2006). 여성발전기본법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 : 국회여성가족위
 원회
- 정해숙·문유경·박성정·이명선·김승연(2010).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운
 영에 대한 성별영향평가. 여성가족부.
- 조대호(2016). “숙고의 인지적 조건—아리스토텔레스 도덕 심리학의 숙고 개념
 —”. 서양고전학연구. 제55권 제2호. 87-120.
- 조영미(2014). 민선6기 서울시 여성가족정책 비전과 정책방향.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주경미(2008). “지역여성정책부서 민관학 협력관계의 모색, 한국 여성연구의 제도
 화와 지역사회”.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8년 국내학술대회자료집.
 39-45.
- 최유진·유희정·문희영(2014).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의 시민참여 활성화 방
 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한국여성단체연합(2014). “여성 발전을 위한 제도와 기구”. 젠더관점에서 본 한국
 사회의 변화 심포지엄 베이징+20과 post 2015. 77-98.
- 한국여성정책연구원(2013). 한국 여성정책의 국제적 공유를 위한 기초 자료 구
 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홍미리(2005). 젠더감수성(gender sensibility) 확장을 통한 일상적 폭력에 대한
 인식과 저항 : 피해 여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황은정·배화정·오나경·송문이(2015). “성주류화 정책을 위한 젠더 거버넌스 형성
 가능성-서울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모니터링 과정 분석”. 사회과학연
 구. 제32권 제2호. 183-208.
- Bacci, C.(2009). “Gender Mainstreaming. Affirmative Action and Diversity:
 Politics and Meaning in Gender Equality Politics. 성주류화와 적극
 적 조치, 그리고 다양성: 성평등 정책의 정치와 의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주류화의 이론과 실천 학술대회 자료집.
- Beyer, S. and Bowden, E. M.(1997). Gender differences in self-
 perceptions: Convergent evidence from three measures of
 accuracy and bia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3(2), 157-172.
- Miers, M.(2002). Developing an understanding of gender sensitive care;
 exploring concepts and knowledg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40(1), 69-77.

NCRFW.(2009). Philippine Commission on Women (PCW): Annual Accomplishment Report(January-December 2009), NCRFW.

Tisch, S. J. and Wallace, M. B. (1004). *Dilemmas of development assistance: the what, why, and who of foreign aid*. Westview Press.

UNESCO.(2004). *Gender Sensitivity: A Training Manual*. UNESCO.

Walby, S.(2005). Gender Mainstreaming; Productive Tensions in Theory and Practice. *Social Politics*, 12(3), 321-343.

Abstract

The Process of Change in Gender Sensibility among Public Officials

HwaJung Bae*·Eunjeong Hwang**

The study examined how gender sensibility among public officials who participated in gender governance are displayed and altered, and what factors would affect such changes. The study was established with the belief that, throughout the execution progress of gender governance, instances where gender mainstreaming isn't installed as well as participant's specific experiences would procure the effectiveness of gender mainstreaming. Throughout the substantial flow of gender governance, the study aimed to provide a reference that would assist understanding the shift in public officials' stance and awareness by revealing the evolution in gender sensibility of the gender governance participants in the viewpoint of participants themselves. The study attempts to determine the limitations and possibilities of the regulation by exhibiting the changes with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such as how the public officers, the executors gender governance, would perceive the purpose of such policy.

Keywords : Gender Mainstreaming, Gender Governance, Gender Sensibility, Process of Change, Driving Factor

* First Author: Governance Coordinator, Women's Policy Division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 Corresponding Author: Senior Research Fellow, Nada Policy Institute

2021년 2호
(통권 109호)
여 성 연 구

발 행 인	문 유 경
편 집 인	김 경 희
등 록 일	1983년 11월 23일
등록번호	바-813
발 행 일	2021년 6월 30일
발 행 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25 (불광동 1-363) TEL. 02)3156-7000(代) FAX. 02)3156-7007
인 쇄 처	리드릭 TEL. 02)2269-1919

